

윤석열정부 3년 2022-2025 검찰+보고서 종합판

검사의 시민들이 파면하다 나라





검찰감시

시민과 함께 기록합니다

"명실상부한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국가권력이 발동되는 과정을 엄정히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 1994 참여연대 창립선언문

검사의 나라 3년, 민주주의를 지켜낸 건 시민의 힘이었습니다

윤석열정부 3년, 권력을 감시해야 할 검찰은 되려 공모자를 자처하며,
권력형 비리엔 봐주기 수사를, 전 정권이나 비판세력엔 보복성 수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치검찰의 역사 내내 반복된 행태입니다. 윤석열정권 하에서 검찰 권력은 정치와 행정의
모든 영역으로 뻗어갔고, 법치의 외피를 쓴 권력 남용은 결국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2024년 12.3 내란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정권의 민낯이었습니다.

2025년 4월,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시민의 감시와 연대가 이뤄낸 민주주의의 승리였습니다.
검찰개혁은 여전히 미완이지만,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검찰개혁을 향한 우직한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실한 기록과 기억은 곧 도래할 개혁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올해도 17번째 검찰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검찰보고서는 검찰 수사와 권한 오남용에 대한 참여연대의 고유한 기록물입니다.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의 응원과 지지는 매일의 감시와 기록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검찰보고서는 전국의 검사들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검찰보고서 제작 모금에 동참한
시민들이 남긴 응원의 메시지



swo** · 100원 기부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늘 응원합니다!



sto** · 100원 기부
제대로된 검찰개혁 진심으로 필요합니다
응원합니다 꼭 이루시길



kma** · 100원 기부
응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 좋아요 2025.04.03 ...



hst** · 100원 기부
와 매년 대단합니다! 화이팅!

♡ 좋아요 2025.02.26 ...

무도한 검찰의 행태를 낱알이 기록해주세요.
검찰보고서 제작에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
다.

우리 함께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세상은
올 것이라 믿습니다.

애써주시는 참여연대에 감사를 표합니다
2025.5.13

 idj** · 100원 기부
빠른 시일내에 검찰 개혁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 좋아요 2025.05.01 ...

 rex** · 100원 기부
검찰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자
♡ 좋아요 2025.05.13 ...

 khy** · 100원 기부
검찰개혁없인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 좋아요 2025.05.14 ...

ley** · 100원 기부
법앞에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좋아요 2025.05.14 ...

 mod** · 100원 기부
참여연대가 희망이면서도 그저 감사 할 뿐입니다
♡ 좋아요 2025.05.01 ...

검찰의 독재적인 수사,기소 철저히 밝혀 사
법개혁의 기틀이 될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간절히 사법개혁이 이루어 지기를~

kha** · 100원 기부
사법부의 개혁만이 진정 민주주의를 꽃 필수있을듯~
♡ 좋아요 2025.05.02 ...

이 시대의 소금 같은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2025.5.13

gol** · 100원 기부
무소불위,증거조작,기소권남용...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든 검찰의 만행을 반드시 척결해야 민주주의가 회복된

힘내서 다시 한번더 해봅시다.
검찰이 정의검찰이 될때까지
국민이 믿고 있습니다.

doy** · 100원 기부
검찰개혁이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닐수도 있어요!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 좋아요 2025.05.13 ...

 ali** · 100원 기부
검찰개혁 꼭 이뤄내요!
♡ 2 2025.05.16 ...

항상 응원합니다~
민주사회 건설의 완성은 검찰 개혁에서 시작됩니다
반드시 완수합시다

nar** · 100원 기부
철저한 규명으로 공정한 사법부를 세우는데 지원을 합니다.
♡ 좋아요 2025.05.14 ...

bud** · 100원 기부
매달 1만원 기부하는데 참여연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응원합니다.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실현합시다!!
2025.5.13

***** · 100원 기부
정말 힘든 일을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응원합니다 🔥
♡ 1 2025.05.13 ...

김진마
세상을 바꾸는 힘에 작은 힘을 보탭니다.
♡ 좋아요 2025.03.20 ...

 whi**
검찰개혁, 언론개혁 꼭 이뤄냅시다♡
♡ 1 2025.03.07 ...

rae** · 100원 기부
빠른 내란종식이 되서 올바른세상에서 숨쉬고 싶습니다
♡ 좋아요 2025.05.14 ...

**검사의
시민들이 파면하다
나라**

윤석열정부 3년 2022-2025 검찰*보고서 종합판

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2022. 5. - 2025. 5.

목차

일러두기	5
서문 ‘검사의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8
Part1. 윤석열정부 3년 검찰과 검찰*를 말하다	
1장. 평가	
들어가며	14
Ⅰ. 윤석열정부 검찰 종합평가	17
Ⅱ. 윤석열정부 검찰 수사 종합평가	23
Ⅲ. 윤석열정부 내란 사태 종합평가 - 윤석열정부 내란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31
Ⅳ. 윤석열정부 수사권 조정 평가 - 윤석열정부 3년 수사권 조정·퇴행 종합평가 및 개혁과제	41
Ⅴ. 윤석열정부 법무부 평가 - 법무부의 역할 정상화	46
Ⅵ. 검찰 편중 인사 평가 - 검찰국가의 자폭적 종말 : ‘검찰국가화’와 ‘수사통치’ 실패의 기록	53
Ⅶ. 공수처 인사 평가 - 공수처장 임명 지연 등을 중심으로	59
2장. 인사	
들어가며	66
Ⅰ.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1. 18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68
2. 검찰·법무 인사	73
3. 직제 개편 주요 특징과 현황	78
4. 18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 내역 (2022.5. - 2025.5.)	83
5. 대검 검사급 및 고검 검사급 검찰·법무 인사 내역 (2022.5. - 2025.5.)	88
Ⅱ.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1. 징계처분 받은 검사 현황	146
2. 문제가 된 사건의 징계 처분	155
3. 검사 탄핵(2023~2025)	164
Ⅲ. 검찰청 검사 파견 현황	
1. 대통령실과 법무부·검찰 관계	170
2. 검사의 법무부 파견	178
3.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200
3장. 수사	
들어가며	208
Ⅰ. 12.3 내란 사태 수사	
1. 12.3 내란 및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관련 수사(2024)	211

2. 윤석열의 외환죄 수사(2024)	224
3. 대통령경호처의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및 수사 방해 혐의 수사(2025)	228
4.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수사(2025)	234

II. 윤석열정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및 부패 혐의 수사

5. 10.29 이태원참사 구조실패와 책임규명 수사(2022)	242
6. 대통령실 관저 이전 수사 및 감사원 부실감사 수사(2022)	250
7.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수사(2023)	254
8. 윤석열 대통령 처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수사(2023)	269
9. 방통위의 종편 조건부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관련 감사원의 수사의뢰 사건 수사(2022)	275
10.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유권해석 부당개입 의혹 관련 감사원의 수사의뢰 사건 수사(2022)	279
11.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사건 관련 수사(2023)	283
12.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감사 의결 과정 직권남용 혐의 수사(2023)	290
13. 세관 직원 마약 밀반입 수사외압 의혹 수사(2024)	294

III. 문재인정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및 부패 혐의 수사

14.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2022)	300
15. 문재인정부의 북한 주민 북송 결정 의혹 수사(2022)	306
16. 문재인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2022)	311
17. 문재인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 수사(2023)	319
18. 문재인정부의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수사(2024)	324

IV. 고위공직자·정치인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

19.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 수사(2021)	328
20.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2021)	334
21. 윤석열 대통령 부부 명품백 등 금품수수 사건 수사(2023)	340
22.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의 공천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수사(2023)	348
23. 건진법사의 공천 브로커 및 통일교 - 김건희 간 알선수재 혐의 수사(2024)	366
24. [대장동1]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비리 사건 및 이재명 성남시장 관련 의혹 수사(2021)	370
25. 이재명 성남시장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수사(2021)	389
26.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2022)	396
27. [대장동2]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2022)	402
28.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2022)	408
29.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수사(2022)	424
30.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위증교사 혐의 수사(2023)	427
31. 문재인정부 고위급 인사의 채용 외압 혐의 수사(2022)	431
32.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 수사(2024)	434
33.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 사건 수사(2021)	437
34. 송영길 당대표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2023)	442

35. 감사원 고위 공무원의 뇌물 수수 혐의 기소 관련 공수처와 검찰 간 권한 다툼 있는 사건(2022)	453
36.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수사(2023)	457

V. 정권 비판 세력·야권·시민사회 관련 수사

37.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2022)	464
38. 뉴스타파 등 언론사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2023)	469
39. 화물연대 노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공정위의 수사의뢰 사건 수사(2022)	476
40. 시민노동단체 ‘간첩단 사건’ 수사(2022)	480

VI. 재벌·기업 범죄 및 산업재해 수사

41. SPC 계열사(SPL사업장) 제빵공장 노동자 작업중 사망 사건 수사(2022)	489

VII. 검사·법관·경찰 비위 의혹 수사

42.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2021)	494
43. [대장동3] 김만배 등의 50억 클럽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2021)	501
44. [대장동4]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비리 혐의 봐주기 수사(2021)	515
45. 임정혁 전 대검 차장 등 고위직 검·경 출신 변호사들 수사 무마 금품 수수 수사(2023)	521
46. 이정섭 차장검사 비위 수사(2023)	525
47. 부장판사의 골프채 수수 등 비위 수사(2021)	531
48. 현직 경무관급 경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공수처 첫 인지 수사(2023)	534
49. 연예인 마약 사건 수사 피의사실 유출 등 수사(2023)	538

VIII. 기타 의혹 수사

50.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수사(2022)	544

Part2. 검찰국가 이후, 검찰개혁을 말하다

1장. 개혁을 말하다

들어가며	552
새정부 형사사법체계개혁 과제 - 참여연대 형사사법체계 개혁안	554

2장. 시민이 말하다

Ⅰ. 시민 집담회	564
Ⅱ. 검찰보고서 제목 공모작	576
Ⅲ. 검찰개혁 응원 메시지	579

‘검사의 나라’를 시민들이 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은 검찰개혁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윤석열의 시도는 12·3 비상계엄 이전에도 검찰을 통한 수사통치의 모습으로 계속되어 왔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통치를 대신하고, 인사는 검사가 차지했던 3년이 지나고 지금은 개혁의 시간입니다. 참여연대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의 힘을 담아, 윤석열정부 3년의 검찰감시 기록 **「윤석열정부 3년 2022-2025 검찰*보고서 종합판 - 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를 발간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3년 김대중정부 5년의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시작으로, 검찰권의 오·남용이 극심했던 2008년 이명박정부 때부터 검찰의 행적을 기록한 〈검찰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올해로 17년을 맞이했고, 네 개의 정부를 거치며 검찰의 거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정부 3년 2022-2025 검찰*보고서 종합판」은 2022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검사의 나라’에서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인 검찰의 모습을 낱낱이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검찰*보고서〉라는 제호로는 올해가 세 번째 발간입니다. 미완이나마 진행된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보고서는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까지 감시와 기록의 외연을 확장해 왔습니다. 검찰은 물론 형사사법체계의 개혁이 필요한 지금,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수사기관들에 대한 감시와 기록이 개혁의 밑거름이 되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내란의 종식을 위한 규명 과제가 산적해 있는 지금, 내란 사태 수사에 대한 감시와 기록도 필수적입니다. 내란 특검의 발족으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내란 가담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경찰의 영장을 연거푸 반려했던 검찰의 수사방해 행위는 물론, 검찰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윤석열정부 3년 2022-2025 검찰*보고서 종합판」은 윤석열정부 내란 사태를 시민과 헌법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내란 사태 수사를 기록하고, 내란 종식을 위한 과제를 제안합니다.

「윤석열정부 3년 2022-2025 검찰*보고서 종합판 - 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Part 1. 윤석열정부 3년 검찰과 검찰*를 말하다〉는 윤석열정부 3년의 검찰과 법무부, 경찰과 공수처에 대한 평가와 함께, 헌법과 시민의 관점에서 내란 사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검찰과 법무부의 인사와 검찰·경찰·공수처의 주요 수사를 기록했습니다.

1장에는 종합평가를 담았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 “검찰권 남용 및 정치적 수사”와 “검수원복과 검찰 권력의 무소불위화”가 이어졌고,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는 독립성과 기능 양면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검사의 나라’에서 벌어진 12·3 내란 사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시민이 이뤄낸 “검찰국가의 파국” 이후 남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2장에서는 검찰 인사 현황, 직제 개편, 검사 징계 이력,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현황을 기록했습니다.

- 윤석열정부 3년간 검찰 주요 인사 및 직제 주요 현황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포함한 법무부와 검찰의 18개 주요 핵심 직책의 역할, 인사 내역과 직제 개편 현황을 기록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 법무연수원의 고검검사급 이상 주요 인사 내역을 총망라했습니다.
- 검사 총 30명의 징계 처분 내용과 징계 사유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주도 검사들을 향한 보복성 징계 의혹과 라임 검사·고발사주 검사를 향한 징계 미진이 대조적입니다.
- 검찰 출신 대통령실 근무자, 법무부 재검찰화, 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을 기록했습니다. 민정수석을 비롯해 윤석열의 검찰 인맥들이 대통령실 요직을 차지했고, ‘탈검찰화’를 뒤집고 법무부와 외부기관 모두 파견검사 수가 증가했습니다. ‘검사의 나라’를 공고히 한 대통령실-민정수석-법무부장관-검찰청 간의 유착관계를 짚어 봤습니다.

3장에서는 내란 사태 수사를 비롯해 윤석열정부 3년간 검찰·경찰·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권한 오남용이나 부적절한 처리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 정부 기관이나 정치권의 비위행위를 수사한 사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 총 50건의 개요와 수사·재판 경과 등을 기록했습니다.

〈Part 2. 검찰국가 이후, 검찰개혁을 말하다〉에서는 3년 만에 끝을 맺은 ‘검사의 나라’ 그 이후를 그려봅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안하고, 이에 함께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1장에서는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체계 개혁안을 통해 시민 중심의 검찰개혁 방향을 제시합니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서 민주주의와 시민주권 실현의 과제로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시민사법의 원리에 따른 민주적 재설계 방안을 제안합니다.

2장에서는 시민의 목소리로 지난 3년간의 ‘검사의 나라’를 평가하고, 검찰개혁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기록했습니다. 시민 집담회에서 공유된 윤석열정부 3년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와 검찰개혁을 위한 깊은 고민을 담았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검찰감시 활동에 힘을 모아주신 시민들의 검찰개혁 응원 메시지를 수록하고,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검찰보고서 제목 공모전의 당선작도 공개합니다.

〈검찰*보고서〉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검찰의 공소장, 법무부 인사 발표 보도자료, 정부 관보, 검찰청·법무부·경찰청·공수처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 자료, 사건 관련 판결문, 각 정부기관의 보도자료 등, 시민단체 활동 자료,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취합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특히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 경찰, 공수처의 지휘라인은 그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사기관들이 ‘수사담당자의 사생활’이나 ‘사건의 당사자가 아님’을 이유로 들어 비공개 처분하는 황당한 행태가 올해 더욱 심화했습니다. 검찰*보고서에는 정보 비공개 이유까지 담음으로써, 시민들의 감시를 거부하는 권력의 모습까지도 기록했습니다.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사건들은 모두 참여연대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에 수록하여 수사나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모니터링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참된 주권자이자 최고 권력자는 검찰도, 대통령도 아닌 시민입니다. 시민의 비판과 격려에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은 시민과 함께하는 것만이 검찰개혁이란 어려운 과제를 비로소 성공에 이르게 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따라 참여연대는 매년 검찰보고서 제작비와 발송비 마련을 위해 시민 모금, 포털사이트의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카카오같이가치> 모금함 등 검찰보고서 제작비 모금에 참여해 주신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여연대의 모든 검찰감시 캠페인에 서명, 기부, 직접행동 등으로 응원해 주신 수많은 회원과 시민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민주주의를 되찾은 시민의 힘은 검찰개혁으로 나아갈 시민의 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열어낸 길 위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활동을 변함없이 이어 나가겠습니다.

2025. 7. 1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서문

검찰을 파면한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광장의 시민들은 검찰정치, 수사통치를 일삼던 무도한 정권을 파면하였습니다.

햇수로는 3년이지만 어느 때보다도 안타깝고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덕목이어야 했던 민주적 리더십은 법치라는 허울을 쓴 폭력으로 바뀌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통치권력이 흘러가는 길목에 자리한 마중물로만 여겨졌습니다.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법과 정의의 명령은 대통령 관저 앞에서 멈추어서야 했고, 국가 운영의 토대가 되어야 할 헌법은 그들의 자의와 편의 앞에서 이리저리 찢겨 나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여야 할 검찰은 되려 이런 패악의 역사 한복판에 자리하였습니다. 검찰은 무도한 대통령의 수족이 되기를 넘어 스스로 그 불의한 권력의 한 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확장하고 기소권을 오남용하면서 검찰은 정치권력의 핵심요소로 자리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마치 윤석열 정부의 사병(私兵)이나 된 양, 그의 통치권이 무소불위의 폭력으로 주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검찰 내부 이너씨클의 핵심검사들은 스스로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고 그의 손발이 되기를 자처하였습니다. 대통령과 그 주변의 안위를 위하여 사건을 암장하고, 그 권력이 발호하는 곳곳에서 자신들이 가진 형사사법권력을 오남용하여 대통령의 위세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끔 하였습니다. 심지어 법무부는 물론, 금감원이나 방송통신위원회, 권익위원회 등 여타의 권력형 국가기관이 요직에까지 진출하면서 검찰을 모든 곳에 존재하고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의 동일체를 구축한 것이지요.

검찰개혁은 바로 이 때문에 이 시대 최대의 과제로 제시됩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검찰정치에 휘둘리는 퇴행의 현실에서 벗어나 정부가 국민의 법감정을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으로 국민의 의지에 기반한 법과 정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첫 단추를 검찰개혁에서부터 꿰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당 그 개혁의 중심에는 검찰권의 오남용 사태를 치유하기 위한 수사-기소의 분리문제가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조직의 구조적 한계를 혁파해 내는 작업으로까지 이어져야 할 듯합니다. 이렇게 이너씨클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온 검찰구조 자체를 혁파하며, 검찰 내부의 다른 일반검사들이 이런 권력추구형 검사들을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검찰의 조직문화를 바꾸어내는 작업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현시대의 과제일 것입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 3년간의 검찰 평가와 개혁방안을 담은 열일곱 번째의 <검찰*보고서>는 이런 기록과 그 서사들을 담았습니다. 모습을 날날이 정리한 검찰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이 보고서는 스스로 권력이 되고자 했던 우리 검찰의 일그러진 맨얼굴을 생생하게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 남긴 수많은 사건과 기록들은 검찰의 역사는 물론, 우리의 현대사에서 가장 부정하고 치욕스러웠던 검찰정치, 수사통치 3년의 세월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우리 시민사회가 검찰에게 던지는 “회한과 오욕”의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윤석열 정부에 의해 자행되었던 12·3 비상계엄 및 내란사태의 경과와 진단을 담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검찰로부터 시작되었고, 검찰에 의해 일그러졌던 윤석열 정부의 파행이 극단으로 치달은 사건이 바로 그것이라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힘든 3년의 세월을 마무리하여 대통령을 파면하고 새로운 정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땅의 시민들은 여의도에서, 남태령, 한남동을 거쳐 광화문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광장을 열며 불의와 부정에 저항하였습니다. 정치는 우리의 것이며 권력 또한 우리로부터 나온다는 자명한 진리를 행동으로 실천하였습니다. 미국독립선언의 외침처럼,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정부를 새로이 조직할 권리는 바로 우리의 것임을 명백히 선언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치와 통치의 종국목적이 되는, 자유와 민주와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시대를 열고자 한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그래서 이 시대 최우선의 과제가 됩니다. 검찰정치, 수사통치의 폐악을 우리의 손으로 제거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의해 장악된 주요 정치의제들을 이제 우리 시민의 것으로 되찾아 와야 합니다. 더 이상 검찰정치는 용납될 수 없음을 단호히 선언하여야 하며, 그 폐해의 흔적까지도 온전히 거두어들여야 합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하지만 검찰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로 서야 하며, 그 정치 자체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부릅뜬 눈과 우리들의 큰 목소리로 정치와 검찰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제 그 가열찬 싸움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기에 나열된 이름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모두 여러분의 기억에 새겨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모아 권력의 사병이 되어 버린 검찰을 향해 선언합니다 : 검찰을 파면한다.

2025. 7. 14.

공동대표 한상희

Part 1.
윤석열정부 3년
검찰과 검찰⁺를 말하다

1장. 평가

2장. 인사

3장. 수사

1장. 평가

- I. 윤석열정부 검찰 종합평가
- II. 윤석열정부 검찰 수사 종합평가
- III. 윤석열정부 내란 사태 종합평가
- IV. 윤석열정부 수사권 조정 평가
- V. 윤석열정부 법무부 평가
- VI. 검찰 편중 인사 평가
- VII. 공수처 인사 평가

수사통치로 일관한 윤석열정부는 결국 국헌문란의 친위쿠데타를 일으키는 지경에 이르자
시민의 힘으로 파면했습니다.
윤석열정부 3년, 검찰의 행태의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와 함께 수사통치의 면면을 평가하며,
앞으로의 검찰개혁 과제를 제언합니다.

〈윤석열정부 3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Part 1. 윤석열정부 3년 검찰과 검찰*를 말하다〉 1장 〈평가〉는 윤석열정부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종합평가와 검찰과 공수처 인사, 검찰 주요 수사, 내란 사태, 수사권 조정과 같은 주요 사안을 담았다. 필진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면기, 김혜경, 오병두, 유승익, 이근우, 한상희 실행위원**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함께했다.

‘윤석열정부 검찰 종합평가’에서 **한상희 교수**는 윤석열정부 3년을 “민주정치의 소멸”이자 “검찰정치의 탄생”이라고 평가한다. 검찰이 권력의 중심축이 돼 대통령의 방패이자 정치 플레이어로 뛰어들어 반민주적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 관련 의혹에는 눈감고,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대규모 수사를 집중해 ‘되치기 수사’와 ‘사건 암장’으로 수사통치를 펼쳤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과 협작한 보복성 수사, 언론과 노동사회에 대한 공격, 시민사회의 입을 틀어막는 ‘죽음정치’ 등은 검찰이 수사권을 넘어 통치권을 행사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한상희 교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사권 확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되돌린 검찰 예속화, 검찰 출신의 전방위적 정부·공공기관 장악 등은 검찰이 행정부 전반에 편재돼 정치권력과 유착한 결과라고 강조한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도 비판하며, 검찰개혁의 실패가 검찰국가의 부상을 낳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한 검찰 조직문화, 법무부와 관계 재정립, 간부-평검사의 불균형 구조 개편 등 종합적 개혁 과제 수행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검찰을 파면한 것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법의 투쟁’을 선언하는 출발점이며,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힘이 검찰권력의 종식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 검찰 수사 종합평가’에서 **오병두 교수**는 윤석열정부 3년간 검찰 수사를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수사’로 정리하며, 과잉·과소 수사가 정치적 편향에 따라 기획되고 수행되었다고 평가한다. 문재인정부 인사 및 당시 야권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 수사는 거칠고 신속했던 반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 등 친인척 수사, 12·3 내란 사태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하거나 회피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오병두 교수는 ‘뉴스타파 등 언론사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2023)’를 “윤석열정부의 시행령통치와 검찰의 직접 수사 욕구가 검찰국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준 상징적 사례로 주목했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기조에 비추어 볼 때, 명예훼손죄가 법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한 사건임에도 대통령을 피해자로 상정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데다, 수사 개시 근거조차 법이 아닌 내부 비공개 예규에 따랐음을 비판한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이 보장한 절차적, 법치주의적 통제를 위반해 전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보관한 수사 방식은 반(反)법치적 행태이며 수사 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신뢰도를 저하시켰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윤석열정부 파면을 요구하는 주권자 목소리에 ‘검찰을 파면한다’는 결단이 포함돼 있었을 것이라면서, 검찰개혁으로 나아갈 궁극적 길에는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윤석열정부 내란 사태 종합평가’에서 **유승익 교수**는 12·3 내란이 과거 군사반란과 달리 합법성이란 외양을 가장했으나, 궁극적으로 “헌정질서 자체를 파괴하려는 행위”였다고 규정한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가속화되는 것처럼 보였던 ‘검찰국가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헌법의 역사적 단절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유승익 교수는 12·3 내란 사태에서 주목할 점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려 했다는 사실’이라며,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에서 이 행위의 위헌성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말한다. 특히 헌법기관 강압적 봉쇄 등의 행위는 헌법 자체의 정당성을 오염시키고 헌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기에, 내란종식은 단순한 책임자 처벌로 끝날 수 없으며 헌정질서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의가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집단적 범죄였으나 심판 대상이 대통령 개인에 한정될 수 밖에 없고 전체적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기에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철저한 진상 규명, 포괄적 책임자 처벌과 단죄, 제도 개혁, 권력기관 전면 개혁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으며, 그 시작점이 윤석열정부 3년 간 ‘파괴적 폭정 발생 경로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조사’하는 것이라고 제언한다.

‘윤석열정부 수사권 조정 평가’에서 김면기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회복)’ 기조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 분리 기조를 전면 뒤집는 행태로, 수사권 개혁을 심각하게 후퇴시켰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제한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장한 것은, 입법부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 법률로 정한 것을 침해한 시행령 통치나 다름 없다고 비판한다. 이 같은 조치가 검찰 권한을 다시 비대화시키고, 정치적 수사 가능성을 높이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통제 원리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김면기 교수는 이 여파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공수처의 독립성과 기능 양면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한다. 국수본은 경찰청장 인사권 통제 아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제2대 국수본부장으로 검찰 출신 정순신 임명 논란과 문제제기한 총경 인사 보복 논란 등으로 위상마저 흔들렸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부실 수사와 전문성 부족 회의론에 직면했다며,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로 이런 회의론에 반전을 꾀했으나 ‘내란죄’ 수사권 논란과 윤석열 구속 취소 등이 이어지며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윤석열정부의 검경 수사권 재조정이 검찰에 다시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아울러 향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경찰·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윤석열정부 법무부 평가’에서 이근우 교수는 법령을 중심으로 법무부 역할과 책임을 정리하며,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장관 태도를 비판한다. 헌법상 국무위원으로 대통령을 단순히 보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이며 심지어 법률전문가임에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결정에 반기를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12·3 내란에 일체의 명령을 거부하며 자신의 직을 던진 유일한 공직자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태도는 법무부 책임이 무엇인지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이어 법무부의 ‘비검찰화’를 통한 정상화 필요성을 말하며, 특정 직책에 검사 출신만을 임명하도록 한 직제 규정과 파견 검사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는 점을 비판한다. 법무행정 전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찰 중심 인사 관행을 지양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각 부서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사 순환이 잦은 검사에게는 전문성 축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개방형 직위 도입 등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근우 교수는 법무부가 단순히 검찰을 관장하는 부서가 아닌, 헌정질서를 지키고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 정부는 과거 청산을 넘어 법무부 정체성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검찰 편중 인사 평가’에서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정부 3년은 ‘검찰국가화’와 ‘수사통치’ 시기라고 규정하며, 검찰국가가 어떻게 제도와 권력 구조를 왜곡시켰는지 지적한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실, 법무부, 국정원 등 기존 권력기관을 넘어 공공기관까지 요직을 장악하며 인사권과 행정권이 특정 집단에 집중된 것도 문제로 보았다. 이로 인해 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은 크게 훼손됐고, 검찰의 ‘파견자’로 정보수집 통로이자 일종의 감시자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았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국가 하에서 수사권과 행정권은 시민사회와 야당, 언론을 겨냥한 통치 수단으로 활용된 반면, 정권 내부에 대한 수사는 부실하거나 지연되었던 이중잣대를 고집는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정부가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시도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권력 유지를 시도했으나, 시민의 저항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종말을 맞았다고 평가한다. 또한 종말 이후,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기업,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된 ‘검찰 카르텔’ 구조화에 대한 재편과 전면적 리셋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3년간 검찰국가 시도는 수사와 기소 권한이 민주적 통제 없이 집중될 경우 헌정질서를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로 남았다는 평도 함께한다.

‘공수처 인사 평가’에서 **김혜경 교수**는 윤석열정부 3년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조직적으로 무력화되었다고 말한다. 공수처는 권력형 부패를 수사하는 독립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기능 등이 핵심이지만, 윤석열정부는 공수처장과 검사 임명 등을 지연함으로써 조직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것이다. 2024년 1월 김진욱 제1대 공수처장의 임기 만료 후 122일 동안 공수처장 공백이 지속됐고, 그동안 윤석열정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지명을 미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검사 연임 및 신규 임명도 수개월 간 지연돼 공수처 수사부서가 절반으로 축소 운영되는 등 기능 마비 상황에 직면했다. 김혜경 교수는 채상병 순직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관련 수사는 이로 인해 제때 진행되지 못했고, 이는 고의적 수사 지연이란 의혹이 불거질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한다. 12·3 내란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야 공수처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기관이 정권에 의해 얼마나 쉽게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법이 명시한 수사 대상의 첫 항목인 가목이 대통령임에도, 대통령 스스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에서 공수처 제도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된다는 것이다. 김혜경 교수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악용해 조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한 내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임명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 3년 종합평가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I. 들어가며 : 일그러진 검찰국가

윤석열 정부 3년(혹은 그의 검찰총장 재직 1년을 포함한 4년)을 관통하는 최우선의 단어는 “검찰”이다. 그것은 그의 권력이 형성되고 소통하는, 그리고 그 결과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경로이기 때문이다. 혹은 검찰은 대통령과 그 주위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심기를 경호하는 최전선의 방어벽이기도 하였다. 검찰이 대통령의 사병이 되거나 혹은 그와 권력을 공유하면서 국가경영의 중심을 차지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세간은 윤석열의 3년을 두고 검찰국가라 규정한다. 검찰정치와 수사통치로 점철된, 그래서 비정상적인 법치체제 즉, ‘법에 의한 폭력적, 자의적 지배’의 체제가 그것이다.

II. 윤석열 정부 3년 검찰 수사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사건 압장은 검찰의 힘

수사통치는 검찰과 같은 형사사법기관이 가진 수사권(혹은 공정위나 감사원 등이 가진 조사권이나 감찰권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을 사적인 경로로 동원하여 일정한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를 말한다. 대체로 법권력이 독립되지 아니한 권위주의체제에서 법(률)을 동원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거나 정치적 경쟁자들을 배제/배척하면서 권력으로 소수의 손에 집중시켰던 사례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철저하게 이런 권력의 문법에 충실하였다. 10.29 이태원참사의 구조실패와 책임규명을 위한 수사에서부터 대통령관저이전공사 비리의혹에 이르기까지, 혹은 양평고속도로의 설계나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한 특혜의혹사건 등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조차도 검찰의 성실한 수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소위 명품백 등 금품수수사건 수사나 도이치 모터스 사건의 수사는 그 극단의 사례였다. 법적 진실의 규명을 향한 사회적 요구가 적지 않았음에도 검찰은 실질적인 수사로 나아가지도 않았거나 되려 적극적인 방어벽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검찰권력의 핵심은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감추고 암장함에 있다는 세간의 비아냥이 그대로 드러났다.

2. 공격은 최상의 방어: 되치기 수사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보여주었던 검찰정치의 진면목은 다른 곳에 자리한다. 검찰이 스스로 정치 플레이어가 되어 정치과정에 직접 그리고 적극적으로 뛰어들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5개의 사건과 그 가족 관련 3건,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한 7개 사건 등은 반대편에 자리한 정치인에 대해 대량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수사가 펼쳐진 사례들이다.

특히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가 통계조작의혹사건, 사드관련기밀 유출의혹사건 등은 검찰이 그 이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통치수단으로 등장한 감사원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는 한 개인의 권력자에 사유화되어 버린 수사통치의 극단을 보여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재임할 당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검찰은 마찬가지로 수많은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포괄적인 수사에 나섰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검찰의 이러한 수사 또한 그 정치적 의미를 지워낼 수 없을 터이다.

감사원의 수사의뢰를 빌미로 일부 종편 방송의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하였다는 혐의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을 수사하여 기소한 검찰의 행태는 무엇보다 주목을 요한다. 무엇보다 정치적 독립성이 강조되어야 할 언론영역에 검찰이 개입하여 방통위원장을 교체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는 방통위를 중심으로 한 방송규제의 틀 자체를 파행으로 몰아간 사건이기 때문이다. 정권에 우호적인 공영방송체제를 만드는 과정에 검찰은 스스로 그 주역으로 자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사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수사대상이 된 측의 고통이나 불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야기한다. 정치적 반대편을 공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기 세력의 권력행사가 정당하며 윤리적으로 우월함을 과시할 뿐 아니라,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소통의 기회를 박탈해 버린다. 검찰정치의 전형은 여기에 있다. 스스로 정치의 한 플레이어가 되어 판을 바꾸어내는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내내 불통의 행태를 보이며 야당과 그 어떤 대화도 거부하였던 것은 이런 검찰의 법동원 방식과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다.

3. 입막음의 죽음정치

윤석열 정부 검찰의 폐해는 여기서 더 나아간다. 검찰권력은 시민사회의 입을 막고 눈을 덮는 폭력에까지 미쳤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소위 “날리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MBC라는 한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까지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뉴스타파, 경향신문 등의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죄 수사사건은 검찰권 남용의 극단을 보여준다. 이들 언론사가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사건의 수사과정을 보도하며 대선 후보자 윤석열에 대한 검증작업에 나선 것을 두고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탈로서 수사권을 통해 국민들의 언론을 차단하고 민주사회의 기반을 유린한 검찰의 패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검찰의 직접수사권의 범위를 넘어서 월권적 수사인데다 언론사에 대한 무차별적 압수수색 및 언론인들에 대한 무절제한 통신정보수집, 디지털증거의 불법 보관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남겼다.

안전운임제의 계속 시행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SPC 사업장에서 제빵노동자의 사망사건에 눈감은 조치와 함께 자본권력에 봉사하는 검찰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위법한 업무개시명령이나 공정거래위의 터무니없는 개입을 목도하면서도 검찰은 수사권의 칼날을 휘둘러대었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카르텔”이라는 반노동적 발언에 온몸을 접착시킨 검찰은 국제사회의 기준은커녕 그나마 보장되었던 노동권조차도 부정하는 행태를 보였다. 하지만, 바로 그런 검찰이, 거둬들이는 산재로 인한 수많은 죽음/죽임들 앞에서 그로회장에게는 경영책임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이대며 무혐의처분을 하는 관대함을 베풀기도 하였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어렵게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일거에 휴지조각이 되는 순간이었다. 어쩌면 검찰은 윤석열 정부에서 강요되었던 각자도생의 폭력 내지는 소위 죽음정치(necropolitics)의 한 축에 자신들이 자리함을 고백한 사건일 터이다.

III. 윤석열 정부 3년의 검찰정치

1. ‘법의 지배’를 넘어서 ‘시행령의 지배’

이상과 같은 검찰의 모습들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공공연히 예고되었던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말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등’에 한정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전면에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 등”이라는 법률문구를 빌미로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확장시키는 시행령을 공포하였고, 이내 검찰을 정치의 한 축으로 동원하였다. 앞서 언급한 뉴스타파 등에 대한 수사는 그 대표적 사례가 된다.

사실 이런 조치는 검경의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저항하는 검찰의 의지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오히려 법률이 허용하는 경제범죄와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권만으로는 검찰을 자신들의 통치기반으로 동원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던 것처럼 보인다. 거기에 검찰 자체의 자기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한 방편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병행하였을 듯 하다. 즉, 검찰로서는 이런 시행령통치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치권력과 유착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검찰의 권력을 지속시킬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또, 애초 정치권에 자신만의 권력기반을 확보하지 못하였던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그동안 익숙하게 동원해 왔던

검찰권이야말로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력수단이라고 보았을 듯 하다. 물론 그 결과는 민주정치의 소멸이었으며 검찰정치의 탄생이었다.

2. 법무부의 검찰 예속화

우리 시민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를 다시금 검찰의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조치 또한 같은 맥락에 자리한다. 실제 법무부야말로 최근점 거리에서 검찰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이 주어진 기관이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그동안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는커녕 되려 가장 강력한 검찰수호대였다. 검찰이 주된 구성원으로 배치되어 있는 바람에 법무행정의 전문성, 효율성은 물론 검찰견제의 역할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검찰개혁을 모색하는 시민사회의 압박으로 문재인 정부 때에 어느 정도의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무위로 돌려 버렸다. 예전처럼 법무부의 통제대상이 되어야 할 검찰로 하여금 법무부의 요직을 차지하게 하여 그들이 되려 법무부를 지배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사실 이러한 조치는 검찰개혁뿐 아니라 민주적 법치의 실천이라는 점에서도 적지 않은 퇴행을 야기한다. 가장 주효할 수 있는 외부적 견제장치 하나를 없애버림으로써 그들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증폭시킬 수 있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이 검찰 내부로 스며들며 검찰 또한 정치권력과 유착할 수 있는 공식채널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젖힌 것이기도 하다. 검찰이 지배하는 법무부검찰국이 그러하고, 검찰권을 항시 감시하고 나서야 할 법무부 인권국이 또 그러하다. 혹은 그 결과 12·3 비상계엄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를 예방하고 바로잡아야 할 제1차적 책무를 지는 법무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내란상황이 그대로 방치되어 버렸던 것이다.

3. 언제 어디에나 편재하는 검찰

정부 요직에 검찰출신을 배치한 인사조치는 이런 검찰정치의 연장선상에서 가능하게 된다. 사실 우리가 검찰권력을 비판하지만, 그 권력의 실체는 2,300명 검사 중 그 핵심을 구성하는 일종의 이너써클에서 형성되고 또 행사된다. 소위 특수통이니 공안통이니 하면서 서로 끌어주고 키워주며 다른 검사들의 희생 위에 나름의 특권을 누리는 내부집단이 그것이다. 이런 집단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가장 극렬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검찰권력을 장악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 요직에까지 그 위세를 확장해 나갔다. 금융감독원이나 국민권익위, 방송통신위, 심지어 권력으로부터 가장 초연한 위치에 있어야 할 국가인권위까지도 검찰 이너써클 인사들이 장악하면서 국가행정의 기본틀을 흔들어 놓았다. 그뿐 아니다. 검찰출신의 인사를 대폭 국회의원선거에 출마시켜 입법을 장악하고자 하였으며, 민간부문의 임직원으로 자리잡게 만들었다. 우리 사회 전반을 검찰과 그 네트워크가 장악하고 주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우리들이 이 정부를 두고 검찰국가라 비판하며 가열차게 대항한 것에는 이런 파행의 인사도 큰 몫을 차지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4. 아쉬운 공수처

하지만, 아쉽게도 이와 같은 검찰국가 내지는 수사통치의 비행을 적시에 차단해야 할 책무를 진 공수처는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제 기능을 펼치지 못 하였다. 처음부터 인력이나 자원의 면에서 정치권력이나 검찰권력에 견줄 수 없이 허약한 수준으로 출범하였던 공수처는, 감사원의 국민권익위 표적감사의혹이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혐의 등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의 수사에서도 주춤거리기만 하였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공수처장과 공수처검사의 임명조차도 지연시키거나 방기해 버림으로써 공수처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는 잉여적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공수처는 검찰을 통제하고 권력형 비리를 처결하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구사하는 검찰국가 앞에서 그 운명은 어쩌면 예정된 것일지도 모른다.

IV. 정리

1. 내란: 검찰정치에 유비된 군사정치의 꿈

이런 파행들이 연속되었던 윤석열 정부는 12·3 비상계엄의 형식을 빈 내란행위로 결국 종말을 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동원한 검찰의 정치를 펼쳐 나갔지만, 집권 3년 남짓만에 그런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통치방식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군사정치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 비상계엄은, 헌법의 국가긴급권 요건이나 계엄법 등 법률상의 요건, 심지어 정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적법하게 구비하지 못 한 채 이루어졌고, 급기야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수행”(헌법재판소, 대통령탄핵결정문)으로 황급히 거두어들여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독단적인 (국정)목표설정, 편의적인 법동원, 자의적인 법해석,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명령과 강요, 성찰과 소통의 부재 등 검찰정치의 패악은 군사정치의 형식으로 껍질만 바뀐 채 그대로 재현되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재확인이라도 하듯, 검찰은 또 다시 윤석열 정부의 사병이 되어 비틀거렸다. 비상계엄 해제 2일만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외형으로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듯 했지만, 내란 등 일련의 혐의는 물론 윤석열 체포과정에서의 경호처 등의 법집행거부사태 등에 대한 수사는 주춤거리기만 하였다. 심지어 내란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무리한 법해석으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그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내란 우두머리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극우세력의 반동을 선동할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2. 개혁을 향하여

“이 사태를 극복하였을 때 우리는 그 이전보다 분명 나아져 있어야 합니다.” 지난 날 팬데믹 사태때 유엔사무총장이 한 말이다. 3년 혹은 검찰총장시절까지 포함하면 4년에 걸친 윤석열

검찰국가를 경험한 우리는, 그래서 “빛의 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 우리는, 분명 그 이전보다 나은 세상을 살아야 한다. 검찰개혁은 그래서 당대의 필수 과제가 된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이다.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수사-기소권의 분리문제는 의당 긴급하고도 시급한 개혁의제이다. 하지만 그와 함께 검찰의 조직문화, 검찰과 법무부와의 관계, 실무를 담당하는 평검사와 이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간부검사의 불균형한 분포, 심지어 법조카르텔의 조짐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정비가 따라야 한다.

우리 시민들은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동시에 검찰정치, 수사통치에 나서던 검찰까지도 파면하였다. 법을 빙자한,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라, 법과 정의가 모든 권력을 지배하는 진정한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바로 세워나가기를 원했던 것이다. 독일의 법철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법의 생명은 투쟁에 있다”고 했을 때, 그는 우리 모두가 법의 파수꾼이 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때 비로소 우리 시민들은 검찰이 쥐고 있던 법권력을 다름 아닌 우리의 것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검찰 수사 3년 종합평가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홍익대 법학과 교수

I. 윤석열정부 3년 그리고 검찰수사 3년

윤석열정부 3년간(2022. 5. ~ 2025. 5.)의 평가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가능하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후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지만, 이 단어만으로 윤석열정부 하에서 발생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외에도 ‘검찰국가’, ‘검찰공화국’, ‘검찰 중심의 국정 운영’, ‘권력기관의 사유화’ 등 여러 표현이 사용되며, 이들 각각은 특정 국면과 상황에서의 진실을 반영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검찰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검찰권 남용 및 정치적 수사’로 요약될 수 있다.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50건의 사건 기록¹을 바탕으로 분류해보면, ‘검찰권 남용 및 정치적 수사’는 다시 검찰권의 과잉 행사 사례와 과소 행사 사례로 나눌 수 있다.

검찰권의 과잉 행사 사례로는 <문재인정부 국가기관의 불법 및 부정행위 의혹 수사>, 당시 야권의 <고위공직자·정치인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 <정권 비판/야권 관련 수사>가 포함된다. 반면, 과소 행사 사례로는 윤석열정부와 친인척 관련 수사를 포함하는 <윤석열정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해당된다.

윤석열정부의 몰락은 검찰의 몰락과 ‘수사-기소 분리’의 완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² 윤석열정부 하의 검찰이 이전 정부보다 더욱 긴밀하게 정권과 결합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기존 정권과의 밀월관계와는 다른 유형의 밀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밀착관계로 인해 개별 검찰수사에서 기존 정권의 검찰수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 개혁의 초점이

¹ 여기의 사건 명칭은 검찰*보고서를 따랐다. 자세한 사건 내용은 검찰*보고서와 참여연대의 <그사건그검사>를 참조.

² 예컨대, 성한용, “‘근조’ 검찰…윤석열이 정권 삼킨 순간, 자폭은 시작됐다”, 한겨레, 2025-06-15,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02812.html>, 최종검색: 2025. 6. 10.

무엇인지, 그리고 개혁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정부의 출범 이후 ‘수사-기소 분리’를 강화하는 입법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개혁 방향으로 부각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문재인정부의 수사권 조정 이후, 윤석열정부 동안 검찰이 어떠한 방식으로 활동하였는지를 수사 사례를 통해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한 검찰개혁 입법을 위한 중요한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주목할 사건: <뉴스타파 등 언론사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2023)>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뉴스타파 등 언론사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2023)>(이하 “<뉴스타파 수사>”라 한다)가 있다. 이 사건은 윤석열정부의 시행령통치와 검찰의 직접 수사 욕구가 친(親)-검찰정부, 즉 ‘검찰국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상징적이고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더불어, 야당에 대한 정치적 공격과 언론 재갈물리기 등 다양한 정치적 목적이 검찰 수사와 결합되어 전개되었다. 법리적 측면에서 이 사건의 문제점은 입법적으로 천명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고 수사에 대한 법치주의적 통제를 무시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진행 경과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검찰수사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요약하고자 한다.³ 사건의 발단은 2022. 3. 6.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음성파일’에 있다. 해당 보도 내용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2011)을 담당[했던]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윤석열 검사가, 김만배 머니투데이 법조기자과 박영수 변호사(전 서울고검장)의 청탁[에 따라]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이다. 곧 이어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를 “선거공작”으로 규정하며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야권과의 관련성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서울경찰청)에 김만배-신학림과 함께 뉴스타파, JTBC, MBC 기자 등을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확대했다.” 즉, “2023년 10월 26일 서울중앙지검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다른 언론사들과 전·현직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이 사건의 문제점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기조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두 가지이다.⁴ 첫째, “언론사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윤석열 대통령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 혐의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대상 범죄인 “명예훼손죄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대통령의 의지로 진행되는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중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한 바 없지만 당사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³ 자세한 사건내용은 이 검찰*보고서의 <뉴스타파 등 언론사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2023)> 부분 참고.

⁴ 검찰*보고서에서는 “2024년 8월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피고인들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바탕으로 3,176명에 해당하는 통신이용자정보를 무차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는 점을 포함하여 3가지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 점 또한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모으기 위해서 위의 2가지 점은 다루기로 한다.

절차적 문제는 없고, 신학림·김만배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이므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문제점은 여기에서 등장한다. 당시 검사의 수사 개시 제한을 규정한 「검찰청법」⁵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위임을 받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⁶(이하 “「수사개시 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었다. 이에 검찰은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법이 아닌 검찰 비공개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이에 대해 “법을 우회하여 비공개 예규를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⁷

둘째,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디지털 파일까지 보관한” 점도 문제였다. “검찰은 디지털 증거 보관은 시인하면서도, 형사소송법과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 등을 근거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⁸(이하 “「디지털 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수사 당시 효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의 하나이지만,⁹ 더 큰 문제는 이 예규가 상위 법령인 「형사소송법」과 그 취지에 따라 2021년 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¹⁰(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의 취지를 벗어난다는 점이다. 즉, “특히 형사소송법은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 또는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에서도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예규는 물론 이에 기반한 검찰의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사건이 윤석열 정부 하의 3년 동안의 검찰수사 중 주요 사건의 하나로 꼽는 이유는 이렇다. 2020년 제·개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인 「검찰청법」, 이에 따른 「수사개시 규정」, 그리고 「형사소송법」과 이에 따라 제정된 「수사준칙」은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과 수사에 대한 적법절차 및 법치주의적 통제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 내부 지침에 불과한 검찰예규에 의해 이러한 원칙들이 전면적으로 부정되거나 무시된 수사 사례로, 다른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검찰수사의 기본적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⁵ 법률 제18861호, 2022. 5. 9. 개정, 2022. 9. 10. 시행.

⁶ 대통령령 제32902호, 2022. 9. 10. 시행.

⁷ “이후 참여연대는 관련 예규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여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참여연대가 승소했다.” 그러나 아직도 검찰은 이 비공개 예규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⁸ 대검찰청예규 제1151호, 2021. 1. 1. 개정, 시행.

⁹ “대검이 근거로 제시한 예규는 2024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이미 발령된 예규에 ‘2025년 5월 1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의 부칙을 추가했다. 별도의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대검찰청은 “부칙에 오기가 있어 정정하여 올림”이라는 문구와 함께 뒤늦게 수정한 예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¹⁰ 대통령령 제31089호, 2020. 10. 7. 제정, 2021. 1. 1. 시행.

III. 윤석열정부의 검찰 수사 및 대검예규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수사개시 규정」 및 비공개 예규

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 경과

2020. 2. 4. 「검찰청법」¹¹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수사개시 제한 문구가 신설되었다.¹²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수사개시가 허용되는 범죄는 이른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그리고 이들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되었다.

2022. 5. 9.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청법」¹³ 제4조가 개정되었다. 이 개정에 따라 중대범죄의 범위는 기존의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축소되었으며, 나목의 범죄에는 기존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더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가 추가되었다.

나.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수사개시 규정」 및 비공개 예규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예외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가목의 ‘중요 범죄’, 나목의 ‘수사 공무원의 범죄’, 다목의 ‘직접관련성 있는 범죄’ 등이 명시되어 있다.

우선, 2020년 개정된 「검찰청법」은 가목의 ‘중요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0. 10. 7. 「수사개시 규정」이 제정되었다. 당시 「수사개시 규정」 제2조 각호에서는 ‘6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군을 직접 명시하고 있었다.

¹¹ 법률 제16908호, 2020. 2. 4. 개정, 2021. 1. 1. 시행.

¹² 이하의 내용은 오병두, “검사의 수사개시 제한 문구 위반의 법적 처리—「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제23권 제1호, 2025. 2, 한국경찰법학회, 40-44면을 정리한 것임.

¹³ 법률 제18861호, 2022. 5. 9. 개정, 2022. 9. 10. 시행.

2022년 「검찰청법」 개정 이후, 윤석열정부는 2022. 9. 8. 「수사개시 규정」¹⁴ 제2조¹⁵를 수정하여 ‘2대범죄’에 해당하는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별표]에 재위임하는 형태로 변경하였으며(제1호, 제2호)¹⁶, 「검찰청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기타 범죄 유형인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 등을 수사개시 대상 범죄로 추가하였다(제3호).¹⁷

특히,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가목의 중요 범죄와 나목의 수사 공무원 범죄,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등과 ‘직접관련성 있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목의 ‘직접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청법」에 명시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예외의 구체적인 범위가 문제였다. 2020년의 「수사개시 규정」 제3조¹⁸에서는 ‘직접관련성’ 있는 범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나치게 넓은 ‘직접관련성’ 범위에 대해 명시적인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정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22년 개정 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비공개외의 대검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⁹

¹⁴ 대통령령 제32902호, 2022. 9. 10. 시행.

¹⁵ 「수사개시 규정」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표 1에 규정된 죄

가.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

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

다.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범죄

2. 경제범죄: 생산·분배·소비·고용·금융·부동산·유통·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가. 무고·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허위감정통역·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죄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

¹⁶ 이 [별표]는 그후 2차례 개정되었다(대통령령 제34392호, 2024. 4. 9. 개정·시행; 대통령령 제34704호, 2024. 7. 16. 최종개정, 2024. 10. 19. 시행).

¹⁷ 제3호의 범죄유형은 중요범죄로서 「검찰청법」의 위임 여부가 불분명하고, 여기에서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 열거한 범죄는 아래 다목의 ‘직접관련성’ 있는 범죄와 중첩되어 별도의 범주를 설정할 필요도 크지 않은 것이다.

¹⁸ (2022년 개정 전) 「수사개시 규정」 제3조(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란 같은 호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해당 범죄”라 한다)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형사소송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관련사건. 다만,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1인이 범한 수죄(數罪)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중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와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를 포함한다.

가. 해당 범죄와 동종범죄

나.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2.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범죄

3. 「형법」 제19조에 따른 독립행위로서 경합하는 범죄

4. 해당 범죄에 대한 무고죄

¹⁹ “김만배·윤석열 검증보도 엮은 검찰…직접 관련성 확대 ‘대검 예규’ 만들었다”, 경향신문[온라인판], 2023. 11. 6,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1061700001>>, 최종검색: 2025. 6. 20.

2. 「형사소송법」·「수사준칙」에 반하는 「디지털 관리규정」

가. 제정 「수사준칙」과 2021년의 「디지털 관리규정」의 내용²⁰

2020. 10. 7. 「수사개시 규정」 제정과 동시에, 문재인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의 상호 협력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195조를 구체화하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이 제정되었다.

「수사준칙」 제42조 제2항 제1문은 디지털증거로 선별되기 이전의 전자정보(‘전부 이미지 파일’) 모두를 삭제대상으로 하는 ‘무관정보 삭제 의무화’를 명시하였다.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2018. 6. 21.)²¹의 내용과 관련이 있으며, 해당 합의문에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 및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였다.

본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전자증거의 압수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는 ‘관련성’²²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제106조 제1항, 제215조, 제219조), 따라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유관정보)만이 압수의 대상이 되고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전자정보’(무관정보)는 압수할 수 없다.²³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실무에서는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수집한 ‘선별 이미지 파일’만이 아니라, 원본과의 동일성과 무결성(“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²⁴을 입증하기 위해 ‘전부 이미지 파일’을 별도로 생성하여 보관하고 있다. 이 ‘전부 이미지 파일’에는 핸드폰, 노트북에 저장된 모든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검찰은 이를 ‘디넷’이라고 불리는 대검찰청의 디지털 수사망 서버에 보관하며, 사건 종료 후에도 장기간 보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판례에서 문제가 된 사안의 경우, 이 ‘디넷’으로부터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탐색·출력하는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²⁵

²⁰ 이하의 내용은 오병두, “검찰의 무관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디-넷(D-NET)의 운영 규정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25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9, 261-283면을 정리한 것이다.

²¹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검·경 수사권 조정”, 2018. 6. 2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8893>>, 최종검색: 2025. 6. 20.

²² 대법원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① 객관적 관련성과 ② 인적 관련성(주관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①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족하지는 않지만,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넘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②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은 보통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²³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무관정보 이용 청탁금지법 수사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무관정보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²⁴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왕재산 사건’).

²⁵ 예컨대,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무관정보 이용 청탁금지법 수사 사건’).

2021. 1. 1. 「수사준칙」의 발효에 따라, 전면 개정된 「디지털 관리규정」²⁶은 ‘무관정보 삭제 의무화’와 관련된 여러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동시에 기존 수사관행을 반영하여 이를 상대적인 의미로 축소 해석함으로써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남겨 두었다. 즉, 지나치게 넓게 관련성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유관정보’라는 명목 하에 많은 전자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으며(제22조 제1항), ‘디지털 증거의 폐기’를 정한 제54조에서는 폐기 사유와 함께 예외 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었다.

나. <뉴스타파 수사>와 2024년의 「디지털 관리규정」²⁷

이 대검예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검찰은 2024. 10. 1. 이 예규를 개정하였다.²⁸ 그러나 개정된 대검예규는 기존의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였다. 유관정보인 ‘선별 이미지 파일’을 장기 보관에 대한 근거 규정은 축소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무관정보가 포함된 ‘전부 이미지 파일’의 장기 보관은 여전히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개정된 대검예규에 대해서도 개정 전과 동일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²⁹

현재에도 ‘디넷’에는 상당량의 무관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2024. 4. 24. 기준으로, ‘디넷’에 보관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의 누적 건수는 총 13,793건에 이르며, 이 중 10년 이상 보관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의 수는 120건에 달한다고 한다.³⁰ 이러한 상황은 컴퓨터나 노트북의 경우에도 유사하여, 2024. 10. 16. 기준의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디넷’이 구축된 2012. 4.부터 2024. 9.까지 검찰이 ‘디넷’에 업로드한 증거 이미지는 총 68,447건이며, 이 중 20,966건(30.63%)은 현재도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0년 이상 보관된 전자정보는 약 470건으로, 이는 휴대전화 증거 이미지 103건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 한다.³¹

IV. 맺음말: <뉴스타파 수사>의 검찰개혁에 대한 시사점

<뉴스타파 수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반(反)-법치적 검찰 실무와 이를 뒷받침하는 대검예규의 존재는 수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쳐두더라도, 수사 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실체적 진실’이라고 믿는, 원하는 수사 결과가 도출되기만 하면 절차적 정당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수사

²⁶ 대검찰청예규 제1151호, 2021. 1. 1. 시행.

²⁷ 이하의 내용은 오병두, “전자정보 압수·수색절차상 무관정보의 배제 방안”, 홍익법학, 제26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2, 343-345면을 정리한 것이다.

²⁸ 대검찰청예규 제1449호. 디넷 보관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겠다는 것도 이 개정 대검예규의 주요 개정 내용 중 하나이다. “[단독] 대검, 압수 전자정보 관리 강화...“통째 정보’ 접근 금지 명문화””, 한겨레, 2024. 9. 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7678.html>, 최종검색: 2025. 6. 20.

²⁹ 예컨대, “검찰, PC 자료 2만건도 ‘디넷’에 보관...10년 넘는 자료도”, 경향신문, 2024. 10. 16, <<https://www.khan.co.kr/article/202410161550001>>, 최종검색: 2025. 6. 20.

³⁰ “윤석열 정부 검찰, 모바일 증거 수집 대폭 증가”, 경향신문, 2024. 5. 1,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5011024011>>, 최종검색: 2025. 6. 20.

³¹ “검찰, PC 자료 2만건도 ‘디넷’에 보관...10년 넘는 자료도”, 경향신문, 2024. 10. 16, <<https://www.khan.co.kr/article/202410161550001>>, 최종검색: 2025. 6. 20.

행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절차를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는 점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윤석열정부 3년간의 검찰수사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혹은 배워야 하는가? <뉴스타파 수사>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검찰개혁이 단순히 법률의 제·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이후 제도의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12·3 비상계엄 이후 헌정질서 회복 과정에서 윤석열정부의 파면을 요구하는 주권자의 목소리에는 ‘검찰을 파면한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검찰국가’의 종행을 이루었던 대통령과 검찰 간의 밀착관계는 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될 수 없는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윤석열정부의 몰락을 초래한 요인 중 하나인 극단적인 수준의 ‘검찰권 남용 및 정치적 수사’가 이재명정부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보인다.

검찰개혁에 관한 입법 및 실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2020년과 2022년에도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이 통과된 바 있다. 또한 문재인정부도 검찰개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부의 3년간 검찰수사 과정에서는 과거에 비해 개선되지 않거나 심지어 악화된 부분도 존재한다. 현재 ‘수사-기소 분리’를 천명한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법안들이 이 과정을 통해 정련되고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와 해당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을 추동하고 감시하며 비판하는 역할과 책임은 주권자인 시민에게 남아 있다. 궁극적으로,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결단만이 검찰수사의 탈선을 방지하고 법치의 올바른 궤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열쇠가 될 것이다.

윤석열정부 내란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유승익 사법감시센터 소장 / 명지대 법학과 객원교수

I. 들어가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헌정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새겼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해프닝이나 개인적 일탈을 넘어, 헌법적 관점에서 깊이 있는 분석과 진단을 요구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이 사태에 대한 헌법적 판단의 잠정적 종착점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더 큰 문제들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 글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사태를 헌법과 시민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특히 검찰국가화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미친 영향을 짚어보고, 내란 종식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12·3 내란의 헌법적 성격과 의미

1. 내란의 헌법적 정의와 12·3 사태의 특징

내란은 단순한 형사 범죄를 넘어 헌정질서 자체를 파괴하려는 행위이다.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러한 내란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주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는 "위헌·위법하게 국가긴급권을 남용하여 국회와 지방의회를 배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태"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내란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려 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하며,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헌정질서의 근본적 파괴를 시도한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러한 행위의 위헌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다.

2.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쿠데타와의 차이점

윤석열 정부의 내란은 과거 군사정권의 쿠데타나 군사 반란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합법성의 외양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과 군 일부에 의해 뒷받침된 '검찰정권'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군사쿠데타와는 다른 형태의 권력 장악 시도였다.

이러한 특징은 시민들의 저항 양상에서도 나타났다. 과거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이 주로 거리에서의 물리적 대항과 비합법 투쟁으로 나타났다면, 이번에는 헌정 시스템을 통한 저항이 중심을 이루었다.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결의, 탄핵소추 의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헌정 시스템 자체가 내란에 맞서는 방어 기제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3. 헌정질서 파괴의 본질과 영향

12·3 내란이 헌정질서에 미친 영향은 단순히 일회적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성을 갖는다. 이 사태는 "헌법의 정당성"의 기초를 흔들었다는 점에서 파괴적이었다. 군인과 공직자들이 따라야 할 명령과 따라서는 안 될 명령의 구분이 모호해졌고, 헌법적 상식이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졌다.

특히 헌정질서 수호를 담당해야 할 고위 공직자들이 도리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데 가담했다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제1호 발령,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봉쇄 시도 등은 모두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이 헌정질서 내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실행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 자체의 정당성을 오염시키고, 헌정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 단순한 책임자 처벌로 끝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훼손된 헌정질서의 정당성을 회복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III.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의 의의와 한계

1. 파면 결정의 헌법적 의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헌법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이 결정은 한국 헌정사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도 헌법 파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현실을 일깨우면서, 헌정 시스템을 통한 헌법 수호의 가능성을 확인해 주었다. 윤석열의 내란행위는 5.16 군사쿠데타, 72년 10월 유신, 12.12 군사반란의 재현이었다. 과거 군사반란과 친위쿠데타에서 헌법은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윤석열 탄핵은 헌정 시스템의 자기방어 능력을 보여주었다.

둘째, 이 결정은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제시했다. 비상계엄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은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 수단이지, 헌정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향후 유사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데 기준과 선례가 될 것이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내란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형사재판에서의 내란죄 적용에도 중요한 기준을 제공했다. 이는 단순히 대통령직 파면에 그치지 않고, 관련자들의 형사처벌과 연계되어 내란 청산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 파면 결정의 한계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만으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탄핵심판의 성격상 윤석열 개인의 책임에 국한되었다. 내란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집단적 범죄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은 대통령 개인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파면 결정이 내란의 전체적 진상을 규명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므로, 내란이 어떻게 기획되었고, 누가 주도했으며, 어떤 조직적 배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종합적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특별조사기구나 내란특검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3. 검찰국가화와 파면 결정의 관계

윤석열 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검찰정권'으로서의 성격이다. 검찰 출신 대통령과 일단의 정치세력이 검찰 권력을 배경으로 한 통치를 성립시키고 일정 기간동안 존속했다는 점에서, 이번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은 최소한 87년 헌법하에서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권력에 대한 역사적 평가이기도 하다.

윤석열은 검찰 중심의 기형적 형사사법체제와 허약한 정당 구조의 상징이다.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은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체제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음을 지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검찰권력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정치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통해 가속되는 것처럼 보였던 검찰국가화의 역사적 단절을 의미한다.

IV. 내란 청산 과정의 문제점과 과제

1. 내란 청산의 타율성과 의존성 문제

12·3 내란 이후 청산 과정을 살펴보면, 시민들의 적극적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수사·기소·재판을 담당하는 사법 관료들의 판단과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노출되었다. 이는 내란 청산의 타율성과 의존성 문제를 보여준다.

특히 윤석열의 구속 취소와 석방 과정에서 드러난 법원과 검찰의 결정들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 이러한 상황은 내란 청산이 사법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또한 내란 동조 세력들이 법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며 헌정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국민의힘 대부분 의원들의 탄핵 반대와 극우 세력의 조직적 대응은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내란 청산 과정에서 정치적 대립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2.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시도와 그 문제점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도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윤석열 파면 결정에 대한 명시적 도전으로 평가된다. 이는 여러 면에서 심각한 헌법적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현재의 헌법적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였다. 탄핵당한 정권의 임시적이고 과도적인 정부에 불과한 한덕수 내각이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바꾸려 했던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선례와도 상반된다.

둘째, 이러한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자체를 무력화하려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의 파면 결정에 따라 이미 헌법적으로 부인되었음에도, 그 연장선에 있는 한덕수 대행 체제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려 했던 것은 파면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행위다.

셋째, 경제부총리 탄핵안 계류나 경찰청장 탄핵 심판 진행 등을 이유로 든 것은 핑계와 변명에 불과하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7인 체제가 구성되어 재판 지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7인 체제로도 충분히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 시도는 또 다른 국헌문란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차후 헌재법 개정, 권한대행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재검토 등 법적 대응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3. 검찰 의존적 청산의 문제점

현재 내란 청산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검찰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적폐 청산'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반복할 위험이 있다. 검찰권을 활용한 적폐 청산이 오히려 검찰 정치의 배양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검찰권, 경찰권 등 수사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처벌 일변도의 청산은 권력 비대칭을 일으키며, 헌정질서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일부 사법 엘리트, 관료, 특정 기관 중심의 청산은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권력 집중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검찰권을 경유하지 않는 내란 청산의 제도적 경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진상 규명, 형사적·행정적·정치적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강구, 제도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독립적 플랫폼이 필요하다.

V. 내란의 역사적 맥락과 구조적 원인

1. 한국 헌정사에서 내란의 연속성

12·3 내란을 단발적 사건으로 보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이번 내란은 한국 헌정사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일제강점기의 계엄령 통치로 소급되며,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반공법-보안법-계엄법의 초헌법적 통치 체제의 연장선에 있다.

일제의 군국주의 파시즘에 침윤된 통치 법제가 한국 헌정에서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채 지속되었고, 그 오랜 역사적 과오의 누적이 분출한 결과가 12·3 내란이다. 이는 단순히 윤석열 개인의 일탈이나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모순의 표출이다.

특히 한국 헌정에서 계엄권은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 방어 수단이 아니라, 정통성 없는 정권을 옹위하고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공격 수단으로 활용됐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12·3 내란의 배경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2. 검찰국가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윤석열 정부의 내란은 검찰국가화된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검찰 권력이 정치적 결정 과정의 핵심을 포위하거나 침투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민주적 결정 과정이 왜곡되었다. 이는 민주주의의 탈민주화(de-democratization)와 반정치화를 통해 과두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검찰 권력은 일종의 지식/권력으로서, 사법적 결정에 대한 허구적 신뢰를 대중 심리에 유포하면서 정치적 주체들의 "발언 자격"을 등급화한다. 이러한 전략이 반복 실행되면서 다차원적 정치 과정의 거버넌스는 고급의 법 언어를 구사하는 상위 그룹과 하급의 정치 언어가 유통되는 하위 그룹으로 재편된다.

이러한 검찰 이데올로기로 윤색된 정치는 배제의 정치이며, 정치적 주체들의 발언권을 등급화하고 그 정치적 자격을 박탈한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은 이러한 검찰국가화의 극단적 표출이라 할 수 있다.

3. 사회적 양극화와 정치적 갈등의 심화

12·3 내란의 배경에는 사회적 양극화와 정치적 갈등의 심화도 있다.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 세대 간 갈등, 이념적 대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회 통합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극단적 정치 세력들이 득세하고, 법과 제도의 흠결과 결함이 악용되었다.

특히 극우화된 교회 세력과 내란 동조 세력들이 헌정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법 제도의 빈틈을 집요하고 교묘하게 파고들며, 민주적 절차를 역이용하여 반민주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역설적 상황으로, 민주적 절차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위험성을 보여준다.

VI. 12·3 내란 수사와 그 문제점

1. 수사 관할권 다툼과 혼선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직후,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주요 수사기관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였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가 자신들의 소관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검찰과의 합동 수사를 거절하기도 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 등 직접 수사 대상 범죄의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할권 다툼은 내란 사태 발생 직후부터 혼선을 야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 법원 내부에서 논란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다만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였다. 또한 “세 수사 기관에서 동시에 수사권 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니 재판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데,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무겁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수사 주체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경우, 어렵게 확보한 증거들이 법정에서 위법수집증거가 판단되어 배제될 위험이 있다.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직후 수사기관들의 혼선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부추겼다.

명확하지 않은 수사 관할권 문제는 내란죄 수사와 같은 위급하고 복잡한 사건에서 수사기관들이 협력하거나 공조하지 못하는 구조적 약점을 드러냈다.

2. 내란 세력의 수사거부

윤석열은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며 수사를 거부하였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군사기밀 보호를 명분으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에서 열린 비밀 회동 참석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나며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저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였다. 내란을 저지른 최고 권력층이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수사 절차를 무력화함으로써, 국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정의 기본원칙을 위협하였다.

3. 수사 미진 문제

수사기관들의 내란 수사가 충분히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대표적인 예가 외환죄 관련 수사다. 12.3 내란의 배경으로 북한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이 사태 초기부터 제기되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일주일 전부터 북한 오물 풍선에 대해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혐의, 불법 계엄의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방첩사령관의 수첩에 ‘NLL 북한 도발 유도’, ‘오물 풍선’ 등의 메모가 발견된 점도 이러한 의혹을 가중시켰다. 또한 북한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를 통한 무력 도발 유도 문제도 최근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외환죄(특히 외환의 죄 중에서 ‘일반이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12.3. 내란 사태에서 밝혀져야 할 가장 중대한 범죄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윤석열, 김용현 등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외환죄 수사를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중대한 국가 안보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석열과 내란세력은 자신들이 규정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불법적 비상계엄과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했으며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들은 가장 시급하게 수사했어야 할 의혹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Ⅶ. 내란 종식을 위한 과제

1. 철저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철저한 진상 규명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재의 수사와 재판은 극히 제한된 범위에 머물러 있으며,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려는 경향도 엿보인다. 독립성과 역량을 갖춘 특별조사기구를 설치하여 내란 발생의 원인, 전개 과정, 은폐된 사실관계까지 모두 드러내야 한다.

진상 규명의 대상과 방법은 총체적이고 전면적이어야 한다. 내란이 어떻게 기획되었고, 누가 주도했으며, 누가 따랐는지,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특히 정치권, 검찰, 국정원 등의 내란 동조 여부, 군의 조직적 가담 실태, 극우 세력과의 연계 관계 등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내란특검은 가까스로 출범하였다. 이와 별도로 독립적인 특별조사기구도 설치되어야 한다. 밀행성과 폐쇄성이 강한 수사 기관과 특검에 진상 규명을 전적으로 위탁할 경우, 사건 암장과 축소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란의 전체상을 규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포괄적 책임자 처벌과 단죄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현재까지는 형사 절차에 한정하여 극히 일부에 대한 기소에 그치고 있으며, 처벌의 범위와 수위도 예측하기 어렵다. 내란행위에 가담한 모든 자들의 책임을 묻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특히 명령 체계 상단에 있던 자들, 내란 실행을 기획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시한 이들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최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단순 실행에 가담한 하급자들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일부 개인의 과오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내란은 집단범죄이며, 이에 상응하여 역할 분담에 따른 집합적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형사 처벌에만 지나치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징계 책임, 정치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문책해야 한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 과제가 오직 형사

법정의 유죄 판결만으로 만족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법의 앵글로 재현되는 내란은 실체적 의미의 내란이 아니다.

3.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

내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특히 국가긴급권, 계엄선포권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 헌정사에서 계엄권은 헌정질서 파괴의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헌법 개정 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제한하고,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 계엄법 개정을 통해 계엄 선포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비상 입법 기구 등의 창설을 제한하는 등 계엄권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유사한 월권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 통제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재조정하고, 특별히 위임 입법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도 강화되어야 한다.

4. 권력 기관의 전면적 개혁

우선, 내란에 가담한 군의 개혁이 요구된다.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군정보기구의 해편과 기능 재편 및 민주적 통제장치의 강화는 불가피하다. 또한 부당한 명령에 대한 군인의 불복종 권리 보장, 위법한 명령을 내린 상관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군 내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경찰, 검찰, 국정원, 경호처 등 내란에 부역한 권력기관들도 전면 개혁해야 한다. 특별히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이 완수되어야 하며, 사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국가수사청(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거버넌스의 완비, 국정원 권한의 축소 재조정, 공수처의 권한 및 기능 강화, 경호처 개혁 등이 과제로 제시된다.

그밖에 내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12·3 내란 기록의 보존 및 공개, 위법 부당한 지시에 대한 공무원의 거부권 및 공익신고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VIII. 나가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에 단일 해법은 없다. 종식 선언, 상징적 조치, 정권 교체, 개헌 등만으로 달성되는 과제도 아니다. 민주공화정에서 “공화정”은 폭정을 차단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체제와 제도의 이름이다. 이번 내란은 공사의 경계를 무시하며 국정운영을 사유화하고, 행정권과

입법권의 경계를 허물었던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 압축적으로 폭발한 사태였다. 한국 헌정에서 내란이 종식되고 민주공화정이 새롭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 3년의 짧았지만 파괴적이었던 폭정의 발생 경로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조사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윤석열정부 3년 수사권 조정·퇴행 종합평가 및 개혁과제

김면기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I. 서론

국가기관 간의 수사권 조정은 극히 예민한 문제다. 가장 강력한 공권력 중 하나인 ‘수사(搜查)’라는 권한을 직접적으로 배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수사권 문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교차했다. 전직 검사로서 수사절차를 잘 이해하는 만큼,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21세기 이후의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완수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반면, 전직 검사 출신으로서 친정인 검찰청에 힘을 실어주고, 그간의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많았다.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집요하게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시도하였고, 임기 내내 ‘검찰 공화국’ 이슈들이 언론 지면을 뜨겁게 달구었다. 파장은 컸다. 신생 조직인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의 위용에 눌려 상당히 위축되었고, 조직과 업무가 안착하는 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여전히 국가수사본부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처한 현실과 평가는 민망한 수준이다.

본고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분석하고, 경찰·공수처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II. 윤석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재조정: 개혁의 퇴행

1.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의 성과와 한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헌법상 국민 주권주의 원칙과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검찰 권력의 분산을 목표로 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 아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였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비록 과도기적 혼란이나 일부 부작용이 있었으나, 이는 개혁 과정에서 불가피한 진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2.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 시도와 그 과정

윤석열 정부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규정하며, 수사 역량 약화 및 국민 피해를 명분으로 내세워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회복)'을 추진하였다. 이는 검찰 출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 했다는 점이다.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은 기존의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사의 수사범위를 더욱 축소한 바 있다. 기존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좁힌 것이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범위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자체의 범위도 거의 무한정으로 확장하였고, 검찰청법의 '등'이라는 조문을 활용하여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도 검사의 수사범위에 포함시켰다.³²

이는 입법부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 법률로 정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통치'라는 강력한 비판을 야기했다.³³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시도라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³²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표 1에 규정된 죄
가.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
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
다.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범죄
2. 경제범죄: 생산·분배·소비·고용·금융·부동산·유통·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가. 무고·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허위감정통역·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죄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

³³ 2024. 7. 15. 로리더, 참여연대 오병두 “검찰개혁, 시행령 통치로 역전하지 않도록해야”,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95>

3. 검수원복의 결과: 검찰 권력의 무소불위화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재조정은 심각한 '퇴보'로 평가되었고,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그간의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독점함으로써 발생했던 권한 남용의 폐해를 막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다시 검찰에 직접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복원함으로써 검찰 권력의 무소불위화를 재현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였다. 이는 특정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검찰 권력의 비대화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정권의 의지에 따라 특정 사건을 선택적으로 수사하거나, 반대 세력에 대한 '표적 수사'를 남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도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 내내 검찰의 정치적 수사는 사법 정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³⁴

시행령으로 법률의 취지를 뒤엎으려는 시도는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 원칙의 훼손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선례가 될 수 있다.

III.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혼란

국가수사본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탄생한 신생 조직이었다. 조직이 안착하고 업무 관행이 정립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수사권 회복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고,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1. 국가수사본부의 허울뿐인 독립성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다.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지휘할 수는 없지만, 국가수사본부의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권은 여전히 경찰청장의 권한에 속한다. 구체적 인사권 없이 국가수사본부장이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³⁵ 출범당시의 위상과 달리 '종이호랑이'로 평가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³⁴ 윤석열 정부 내내 검찰이 정권의 의지에 따라 반대 세력에게는 '표적 수사'의 칼날을, 권력층에게는 '봐주기 수사'의 방패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강도높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중적 잣대와 선택적 법 집행은 사법 정의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적 불신을 낳았고, 결국 오늘날의 검찰청 폐지에 이르는 논의의 장을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³⁵ 2020. 7. 28. 노컷뉴스, '수사 총책' 떠오른 국가수사본부장, 실은 종이호랑이?, <https://www.nocutnews.co.kr/news/5385269>

이러한 국가수사본부의 위상을 더욱 떨어뜨리는 일이 윤석열 정부 초기 발생했다.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전직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된 것이다.³⁶ 검찰과 경찰의 껄끄러운 관계를 생각하면, 경찰 수사의 상징과도 같은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전직 검사가 임명되는 것은 상당한 논란을 초래하는 일이었다.³⁷ 다행인지 불행인지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임명이 취소되면서 사태는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초기 이와 같은 논란은 국가수사본부의 위상과 독립성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

국가수사본부의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도 역시 많은 논란을 낳았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제로, 많은 총경들이 총경회의를 개최하며 문제점을 성토했던 바 있는데, 여기에 참석, 또는 지지했던 총경들에 대해 노골적인 보복성 인사가 단행되었다. 수사부서 근무 총경 상당수도 수사 업무와 관련 없는 한직으로 발령났다. 예를 들어, 강력범죄수사대장 등 주요 수사 보직에 있던 총경들이 홍보담당관, 경찰인재개발원 등 비수사 부서나 지방의 소규모 경찰서장으로 전보되는 식이었다. 이는 수사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력을 무시한 처사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저해하는 처사였다. 이는 국가수사본부 조직 내 사기 저하를 불러왔다.

2. 공수처 개혁: 존립의 위기인가, 혁신의 기회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의 상징이었다. 검찰의 독점적 수사·기소권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 진행은 더디고 잦은 무혐의 종결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³⁸ 핵심 피의자 기소 실패와 무죄 판결이 반복되면서 공수처의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은 공수처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제대로 파헤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존폐의 기로에 놓였던 공수처에게 드라마틱한 기회가 찾아왔다. 2024. 12. 3 계엄사태 이후 공수처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고, 대통령에 대하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 발부받은 것이다. 결국 1월 19일 공수처는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구속하였다. 놀라운 성과였다. 그러나 이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이어지면서 공수처의 수사는 어정쩡하게 마무리되었다. 공수처의 수사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향후 공수처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³⁶ 2023. 2. 24. 한겨레, 경찰 지휘부도 ‘검사 출신’이…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임명,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1070.html

³⁷ 2023. 2. 27. 한국일보, ‘경찰국’ ‘총경 학살’ ‘정순신’… ‘경찰 장악’ 논란에 분노와 허탈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2617350002036>

³⁸ 2025. 3. 11. 세계일보, [오늘의시선] 공수처를 어찌할 것인가,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311515676>

IV. 결론: 앞으로의 전망

윤석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간의 일관된 형사사법제도 개혁 기초에 역행하고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다시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견제와 균형도 실종되었다. 국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할리 만무했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혁은 특정 기관의 기득권을 옹호하거나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는 명제이다. 그러나 실현은 그토록 어렵다.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완성하고,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들의 독립성·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의 역할 정상화

이근우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가천대 법학과 교수

I. 법무부장관이라는 자리

이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법형식적으로 법무부장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정부조직법 제11조, 제18조)을 받아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장이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2조)으로서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제26조(행정각부), 제12조(국무회의))이다. 통상적으로도 의원내각제의 장관들보다는 대통령제의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나 보좌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도 제87조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또한 헌법 제89조에 따르면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를 명시하고 있다. 각 국무위원들이 아무런 책임 없이 단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에 불과하다면, 헌법 제89조는 무의미한 요식행위를 정한 셈이 된다. 심의, 의결도 필요 없고 대통령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굳이 회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 동시에 이는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위반이기도 하다. 헌법 제82조를 굳이 둔 취지를 생각해 보라.³⁹

그래서 2024.12.3.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전후 특히 국무회의⁴⁰ 과정에서 전직 법무부장관이 보인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법무부장관이라는 자리가 단지 대통령의 명을

³⁹ 향후 계엄법 개정시에 계엄선포절차에 대해 개정할 때에는 이 점을 고려하여 세부절차까지도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⁴⁰ 2024.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 문제와 관련하여 과연 제대로 된 국무회의의 심의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일부 국무위원만 연락을 받고 이루어진 심의의 모임을 과연 국무회의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국무회의의 규정」[시행 2023.6.5.] [대통령령 제33382호]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 되고 이를 밝힐 수 있는 자료로서 규정 제11조(국무회의록)에 따른 국무회의록 작성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다.

수행할 뿐인 보좌역에 불과한 것인지, 그 직을 수행하는 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게 된다. 우리보다 더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미국의 법무부장관도 자신의 소신에 따라 판단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에는 사임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 사례가 다수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사례는 워터게이트 스캔들 당시 특별검사를 해임하라는 지시를 거부하며 당시 법무부장관, 차관 모두 사임한 사례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는 국무회의 참석자 중 국방부장관을 제외하면 누구도 자신이 비상계엄선포에 찬성한 바 없다고 하고, 소극적으로라도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정도 변명은 내란방조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의 허용되는 자기방어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 누구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것을 반성하면서 사임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도 참 개탄스러운 일이다.

특히 법무부장관은 법률전문가로서 누구보다도 헌법 및 계엄법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자임에도 명시적 반대를 강하게 하지 않았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했다면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더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⁴¹ 다른 비법률가 국무위원들과는 그 위헌성의 인식가능성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즉시 사임하기는커녕 심야에 법무부 간부들을 소집하여 긴급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회의에서조차 명시적으로 계엄에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은 오래도록 법무부의 오점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체의 명령을 거부하며 자신의 직을 던진 유일한 공직자로서 류혁 前법무부 검찰관의 이름은 오래 기록될 필요가 있다.

II. 법무부의 비검찰화를 통한 정상화

작년의 경우 법령을 중심으로 ‘법무부 직제 업무 분석’을 했었다. 올해 글은 작년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작년 글에서 우리 행정부가 사실은 국무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행정각부와 대통령비서실을 중심으로 하는 또 하나의 정부로 이중구조를 가진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었다. 물론 이는 우리 헌법 변천사에서도 나타나 있듯,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사이의 절충 형태로서 가지는 속성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잘못 작동하는 경우에는 행정각부 중심으로 규정된 정부조직법의 체계와 다른 라인으로 의사결정, 지시가 내려 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현행 「대통령비서실 직제」[시행 2024.9.10.] [대통령령 제34889호, 2024.9.10., 일부개정] 또한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 인사위원회, 검찰반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조직은 규정하지 않고, “제9조(하부조직)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정권 교체 후 前정권과 달리 운영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직제 자체가 너무 불투명하다는 점과 파견공무원(특히 검사의 직접 파견 및 우회 파견 시비) 관련 사항에 관해서는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⁴¹ 한겨레신문 정혜민, 배지현 기자 “박성재 법무장관, 위헌적 계엄 왜 안 막았나”...책임 방기 비판 봇물, 수정 2024-12-04 20:33; 비록 헌법재판소가 2025.4.10. 박성재 법무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간부들을 긴급 소집했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런 사실만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사건으로는 국회측 소추가 비상계엄의 선포 자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에서 기인할 뿐, 선포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 유효성을 전제로 이를 유지하려 한 행위, 즉 동조 내지 방조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면, 달리 판단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또한 軍에서 문민통제가 필요하듯,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무부도 이제는 검사 출신이 장관과 실, 국장을 독점하는 시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었는데, 각 부서가 관장하는 기능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물론 이미 과거와 같이 교정국장, 보호국장 자리에도 검사를 임명하던 관행은 많이 극복되었지만, 여전히 인사권자가 원한다면, ‘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많다. 물론 업무 특성상 검찰사무와 긴밀히 연결된 경우라면 수긍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 타당성 여부는 아래 단락을 보면서 각자가 판단하셨으면 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5.6.10.] [대통령령 제35592호, 2025.6.10., 일부개정] | 하 ‘직제’로 약칭함)에 의할 때, 제4조의2(대변인), 제4조의3(감찰관), 4조의5(장관정책보좌관)(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기획조정실장), 제9조(법무실장 및 정책관 중 1인), 제10조(검찰국장)(검사로만 보하도록 규정됨), 제11조(범죄예방정책국장), 제11조의2(인권국장), 제11조의3(국제법무국장), 제12조(교정본부장), 제13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제16조(법무연수원장)(검사로만 보하도록 규정됨), 제19조(법무연수원기획부장)(검사로만 보하도록 규정됨), 제21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제34조의4(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이 검사를 보임할 수 있는 부서장급 자리이다.(별도 표시 없는 경우 고위공무원단과 선택적으로 규정됨) 또한 ‘직제’ 시행규칙에는 제1조의3(감찰담당관),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산하의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서기관·총경과 선택적으로 규정됨), 제5조(법무실의 법무심의관 및 송무심의관, 법무과장, 상사법무과장, 국가소송과장·행정소송과장·통일법무과장 및 법조인력과장), 제6조(검찰국의 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 및 공공형사과장은 검사만 보임, 국제형사과장 및 형사법제과장은 선택적으로 규정), 제7조(범죄예방정책국의 범죄예방기획과장, 치료처우과장, 보호정책과장), 제7조의2(인권국의 인권정책과장, 인권구조과장, 인권조사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제7조의3(국제법무국의 국제법무정책과장, 국제법무지원과장, 국제투자분쟁과장), 제11조(법무연수원 기획과장은 검사만 규정), 제13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법무교육과장)이 있다.

작년의 글에서도 썼지만, 검사들이 다른 공직자에 비해서 개인적 자질 면에서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우수한 자질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 법제에서나 일반시민의 인식에서도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검찰청법[시행 2022.9.10.] [법률 제18861호, 2022.5.9., 일부개정] 제4조(검사의 직무)에도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혹은 과태료 징수절차에서처럼 좁은 의미의 형사절차가 아닌 경우에도 검사의 역할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법무실의 사무분장 내용만 보아도 정부의 법제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다.(직제 제9조) 그러나 그가 아무리 개인적 자질이 뛰어나더라도 1~2년의 인사주기에 따라 보직이 순환되는 검사가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고, 겨우 익숙해질만한 하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자리는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던가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를 배치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과거에 정부 내에 법률전문가가 극히 드물던 시절에야 필요했는지

모르는 제도를 지금에도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직제’에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한 감찰관이나 인권국장의 경우 검사 혹은 검사 출신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물론 몇몇 자리에 비(非)검사 출신이 임명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장관을 포함하여 그동안 대검찰청의 상급기구로서의 법무부만을 관심사에 두었지, 널리 법무부 업무영역 자체의 전문성의 필요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는 법률가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크게 달랐던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최근의 기사에서 보듯,⁴² 널리 법무행정의 일부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수십년째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영역은 너무도 많고, 심지어 형사소송법 영역에서도 검찰의 필요나 검찰 권한을 축소하려는 정치권의 관심사가 아닌 부분-예를 들면 수사의 방법상 한계로서 私人的 활용이나, 비밀녹음, 형의 집행을 위한 수색, 피해회복을 위한 압수 등에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도 여전히 무관심의 영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도 한동안은 과거 청산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안정기가 오면 검찰개혁의 관점을 넘어서 법무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⁴² 한국일보, 손현성 기자, 2025.06.10., “30년 마약 전문가 “부처별 제 일만 챙기니 중독자 치료·재활 정책 구멍””, 윤웅장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초빙교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출신 보호행정 전문가, “보호관찰 등 종료될 때 단절... 재범 위험 커져”, “이수 명령 등 프로그램에 지역사회 연계 필요”; 한국일보 전유진 기자, 2025.06.06. 13:00, 수용자에게 얻어맞는 교도관 10년 새 4배 증가... 70%가 ‘건강 이상’, 도주·화재·폭행... 교정 사고 2배 늘어, “교정 시설 늘려 교도관 처우 개선해야”. ; 전유진 기자, 2025.06.06., “과밀 수용, 폭행, 약점 잡으려 악성 민원... 여름이 더 두려운 교도관들”, 전국 교도소 6년 연속 수용률 100%↑, 교도관 폭행, 재소자 다툼 등 사고 빈번, “시설 개선, 예우 강화로 사기 높여야”. ; 여성신문 김세원 기자, 2024.10.21.,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느는데... 보호관찰 인력은 ‘제자리 걸음’”, 보호관찰소 직원 1명이 17.6명 관리. 이 기사들에 등장하는 문제는 적어도 십수년 이상 지속된 문제이고 충분히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여전히 쟁점화되지 못한 문제이다.

[참고자료]

1.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개정 2024. 9. 10.>

총계	443
정무직 계	12
대통령비서실장(장관급)	1
정책실장(장관급)	1
보좌관(장관급)	1
보좌관 또는 수석비서관(차관급)	9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계	43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79
3급 또는 4급 상당 이하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352

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사항(2024년 5월 이후)

[시행 2025. 6. 10.] [대통령령 제35592호, 2025. 6.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 밑에 설치한 인사정보관리단장을 폐지하면서 정원 20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2025. 6. 1.] [대통령령 제35508호, 2025. 5.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보호·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794호, 2025. 3. 18.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인 외국인보호위원회와 그 사무국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7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 3·4급 1명, 4·5급 2명, 5급 11명, 6급 5명, 7급 7명)을 증원하며, 외국인보호위원회에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법무부의 정원 1명(6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외국인보호위원회로 이체하려는 것임.

[시행 2025. 2. 25.] [대통령령 제35294호, 2025. 2. 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에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사할린동포의 국적 판정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자동 출입국 심사 대상 확대 및 자동 출입국 심사대 확충에 따라 출입국 심사 운영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1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청주국제공항의 출입국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법무행정 분야 국가 송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법무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등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14호, 2024. 12.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행정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기획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담당관과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지방교정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2명(6급 11명, 7급 14명, 8급 16명, 9급 21명), 출입국사범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5명(6급 4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7명(6급 4명, 7급 5명, 8급 12명, 9급 16명), 난민심사를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6명(5급 1명, 6급 5명, 7급 10명) 및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2명(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2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인 법무연수원의 정원 1명(7급 1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교도소 및 구치소의 정원 54명(5급 1명, 6급 8명, 7급 9명, 8급 16명, 9급 20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의 정원 3명(8급 2명, 9급 1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정원 15명(6급 2명, 7급 1명, 8급 5명, 9급 7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정원 11명(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9급 2명) 및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정원 18명(6급 4명, 7급 5명, 8급 5명, 9급 4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2024. 6. 25.] [대통령령 제34593호, 2024. 6. 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인권국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경위 1명, 경사 1명)을 증원하되, 그중 5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 검찰청 소속 공무원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경찰청 소속 공무원 2명(경위 1명, 경사 1명)으로 각각 충원하려는 것임.

검찰국가의 자폭적 종말 : ‘검찰국가화’와 ‘수사통치’ 실패의 기록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I. 들어가며 : 검찰국가 스스로 종말을 앞당기다

2025년 4월 4일 검사 출신 대통령 윤석열이 주권자 시민들의 힘으로 파면되었다. 12·3 내란을 일으켜 헌법질서를 훼손하여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신한 것을 헌법재판소가 최종 확인한 것이다. 3년여 이어진 ‘검찰국가’가 자폭적 과정을 통해 종말을 맞이했다. 피의자 윤석열은 공수처와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고, 재판도 받고 있다. 그 혐의는 형법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로 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 혐의이다. 지난 6월 5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 따라 추가 수사와 기소도 예정되어 있다. 윤석열정권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검찰국가화를 진행했고 어떻게 종말을 맞았나 되돌아보고자 한다.

II. 검찰국가화 현상

검찰총장(검사)출신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지 1년이 되지않아 대통령에 선출되고 임기를 시작하였다. 그의 공직경력도 검사뿐이었고,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검찰 출신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 인사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었다. 그는 심복으로 불리던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에 기용하고 대통령실과 인사라인, 장관과 권력기관 요직에 검사와 검찰수사관 출신 인사로 채우며 ‘검찰국가화’를 본격화했다.

‘검찰국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헌정 질서 안에서 선거로 선출되었지만 견제하기 어려운 대통령에 부여된 인사권과 행정권을 확장해 인사와 행정을 전횡하고, 검찰을 중심으로

수사(압수수색)와 다양한 행정부 권한(감사권, 조사권 등)을 정권의 주체들이 사유화하여 주요한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정부로 규정할 수 있다. 검찰국가화 현상은 ‘수사통치’와 ‘검사와 검찰 출신 인사들의 정부요직 장악’을 특징으로 한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권을 ‘검사의 나라’와 ‘검찰국가’로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위협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한 바 있다.

1. 검찰출신의 대통령실과 인사라인, 법무부 장악

윤석열 정권은 출범 초부터 대통령실과 인사검증과 추천라인을 검사와 검찰출신으로 채웠다. 2022년부터 직무가 정지된 2024년까지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의 인사 추천(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_2023년 1월 이원모의 총선 출마로 변호사 출신 최지현으로 교체), 1차 검증(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_2022년 6월 7일 설치, 한동훈 법무부장관_2023년 2월 이후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휘, 이동균 검사 인사정보1담당관)과 2차 검증(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인사추천검증라인 전체를 전현직 검사와 검찰 출신들이 차지했다. 특히 윤석열은 22대 총선 패배 후 스스로 폐지했던 민정수석비서관을 부활시키고 대검 차장검사 출신 김주현을 기용했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활은 한동훈과의 갈등 이후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이자 공약을 뒤집는 것으로 비판받았다. 법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시기 추진된 ‘탈검찰화’ 시대가 끝나고, 법무부장관을 필두로 주요 보직을 검사들이 다시 차지하고 장악하였다.

2. 행정부 요직 장악, 공공기관 무차별 낙하산

더욱 큰 문제는 ‘검찰 편중 인사’가 대통령실과 법무부, 국정원 등의 기존 권력기관을 넘어 검사의 업무와 큰 관련이 없는 장관직, 합의제 행정기관(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 금융감독원장(이복현)이나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등 해당 분야의 정책 전문성이나 경험이 꼭 필요한 분야까지도 확장된 것이었다.

그 중의 압권은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의 선배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한 것이다. 방송통신에 대한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인사, 심지어 방송통신 관련 수사 경험도 없는 인사를 언론장악을 이어가기 위해 임명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홍일은 2024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되자 자진 사퇴하였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정지를 피하고 새로운 방송위원장을 임명해 ‘MBC 사영화’ 등을 진행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에 사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방통위 부위원장에는 검사 출신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되어 정권말까지 자리를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들과 검찰수사관을 법무부는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교육부 등 정부 각 부처에 대거 파견하고 있고, 그 숫자가 전 정권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것도 큰 문제였다. 방송통신위원회나 환경부, 교육부와 같은 정부부처에 왜 검사가

파견되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이러한 파견자들은 검찰의 정보수집 통로이자 일종의 ‘감시자’의 역할이 부여된 것은 아닐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감사 등의 자리를 대거 차지하였다. 전혀 전문성이나 경력이 없음에도 자리를 차지한 사례들이 많았다. 가장 황당한 사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사례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검찰 5급수사관 출신 이상중씨가 원장에 2024년 1월 취임하였고, 2025년 5월 SKT 유심 해킹 사건이 일어나 국회에 출석한 그는 유심(USIM_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가입자인증모듈)의 약자를 묻는 국회의원에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전문성 논란이 일었다. 그는 검찰5급수사관 이외 별다른 경력이 없음에도 사이버보안을 책임지는 기관의 기관장에 임명되었다. 기본 자격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낙하산 인사의 부실 대응이 초유의 해킹 사건의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의 임기는 2027년 1월까지이다.

3. 국회와 기업으로 간 검사들

정치인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검증되지 않은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국회 진출을 꿈꾸고 실제로 들어간 상황은 검찰국가화 현상의 연장선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를 준비했던 검사들은 최소 55명이었고, 35명이 출마했고, 18명이 당선되었다. 18명의 검사 출신 국회의원 중 초선이 9명, 재선 이상도 9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 검사 출신 후보 8명이 모두 당선되었고, 국민의힘은 21명을 공천해 9명이, 조국혁신당은 검사 출신 2명 중 1명이 당선됐다. 특기할 점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출신 초선 인사가 5명으로 국민의힘의 3명보다 많다는 점이다. 검사 출신을 적극 공천하는 것은 정치권 전반의 현상이었다.

검사와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검찰국가화 현상은 공직사회에서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참여연대가 2024년 1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자료와 기업의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2022~2023년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퇴직해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한 검사가 최소 69명으로 확인되었다. 검사장급 24명을 비롯한 검사 69명이 민간기업 88곳에 취업했다. 특히 퇴직 검사장급 24명 중 13명은 2개 이상의 민간기업에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취업했다. 검찰의 영향력이 커지자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검찰 출신을 영입한 것이다. 한편 얼마 전 사표가 수리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 검찰과 법무부 출신 퇴직공직자들이 민간기업이나 로펌에서 일하다가 다시 공직으로 되돌아오는 ‘회전문 인사’ 사례도 늘었다. ‘검찰국가’와 ‘검찰카르텔’이 공직사회를 넘어 민간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검찰국가화는 극적으로 종말을 맞았다.

III. 수사 통치의 예정된 실패

윤석열정권 검찰국가화의 특징 중 하나는 수사 통치였다. ‘수사통치’는 수사(압수수색)와 다양한 행정부 권한(감사권, 조사권 등)을 정권의 주체들이 사유화하여 주요한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정권의 검찰은 정치적 반대세력에게는 철퇴를,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롯한 집권세력에는 솜방망이를 들었다.

수사통치의 일환으로 제일 먼저 검찰의 목표가 된 이들은 문재인정부 고위공직자들이다.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박지원,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현직임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을 비롯한 전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과 수사를 받았다. 제1야당 대표 이재명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도 배임과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압수 수색과 수사를 받았고 당사까지 압수수색을 당했다.

민주노총 소속인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이 다음 목표였다. 국정원법 위반,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압수 수색과 수사를 받았습니다. 시민단체도 검찰의 조준을 피해가지 못했다.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압수수색을 받았고, 공청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였다. 뉴스타파를 비롯하여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압수수색과 수사를 벌였고 결국 기소하였다. 윤석열 풍자 영상을 올린 개인도 수사 대상이 되었다.

반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등을 모두 불기소처분하며 검찰은 굵은 잣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수사통치는 신통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검찰이 기소한 상당수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학의를 출국금지한 전정부 인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지만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되었다. 수사통치의 실패는 예정된 일이었다.

대선 경쟁상대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사례도 극명하다.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수사와 기소가 집중되었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다시 지난 5월 1일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되었지만 항소심 기일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이재명 후보는 2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부분의 재판은 기일이 추정(추후지정)되었다. 윤석열 정권의 수사통치는 실패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은 마지막까지 이러한 행태를 멈추지 않았다. 2025년 4월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다. 사실상 윤석열 정권 검찰의 마지막 목표였던 전직 대통령을 기어이 법정에 세운 것이다.

IV. 검찰국가의 파국

1. 수사통치 말고, 더 센 계엄을 준비하다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야권에 패배하자 자신의 정치적, 정책적 무능과 실패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또한 검찰과 감사원 등 일상적 권력기관을 동원한 통치에 한계를 절감한 윤석열은 군을 새로운 통치수단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을 과거 국방부청사로 이전했다. 국방부는 대통령실 바로 앞에 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군 사령관들의 공관이 밀집되어 있다. 윤석열은 ‘국회를 비롯 우리 사회를 장악한 반국가세력’의 처단을 국정목표로 삼아 비상계엄과 영구집권 준비했다. 군 인사들의 충성 맹세를 받으며 오랜 모의와 준비를 거쳐 윤석열은 12월 3일 ‘불법계엄’과 내란을 감행하였다. 하지만 여의도에 모인 시민들의 저항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한 적극적 반대 여론⁴³,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소극적 임무수행과 저항, 국회의 발 빠른 계엄해제 의결로 내란은 1차 실패한다. 윤석열은 계엄해제를 미루며 ‘제2의 계엄’을 시도하지만 이 역시 무산되었다.

2. 주권자들의 힘으로 탄핵, 체포, 구속, 그리고 파면

분노한 시민들은 광장으로 쏟아져나와 윤석열의 탄핵과 직무정지를 요구한다. 12월 14일 윤석열은 여의도에 모인 200만 시민과 압도적인 여론을 받들며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된다. 이후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과 국수본, 공수처가 앞다퉈 내란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검찰과 공수처의 혐의로 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나서 체포에 나선다. 윤석열은 경호처를 앞세워 체포에 저항했지만 며칠 후 시민들의 체포 요구를 통해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3월 9일 구속영장 청구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지귀연 재판부의 결정에 의해 구속이 취소되었다. 즉시항고로 이를 다뤘어야 할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석방한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다시 광장에 모여 매일같이 헌법재판소에 만장일치 파면 선고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비상계엄 과정의 헌법파괴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신한 책임을 물어 8:0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주도세력이었던 검찰의 행태는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검찰의 윤석열 일당의 내란혐의 수사와 기소과정은 이상하고 또 이상하다. 검찰은 특수본을 구성해 내란혐의를 수사했지만 갑자기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넘긴다. 공수처의 우여곡절을 거친 체포 이후에도 검찰은 구속기소를 주저하거나 윤석열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그 공소장에는 내란의 목적을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았다. 또한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사건임에도 검찰이 기소한 공직자는 20여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인 윤석열을

⁴³ 참여연대는 내란 당일 위헌적 비상계엄에 반대, 규탄하고,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https://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981902>

즉시항고를 포기해 풀어주기까지 했다. 결국 검찰 역시 윤석열과 운명공동체임을 직감하고 그 수사나 기소 범위를 최소화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3. 검사들의 엑소더스

윤석열이 파면되고 검찰국가는 파국을 맞았다. 가장 먼저 시류 변화에 올라탄 것은 기업들이다. 윤석열 정권 시기 검찰 출신들을 대거 영입하던 기업들은 윤석열이 탄핵되고 파면이 가시화되자 검찰 출신들의 사외이사 등의 영입을 사실상 중단했다. 대선이 다가오고 정권교체가 임박하자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비판받은 검사들의 공직 엑소더스가 시작된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불기소하고 문재인을 수사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사표를 냈고, 대선 당일인 6월 3일 사표가 수리된다. 검사 출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도 국정원 기조실장 김남우 등 정권교체가 거의 확실해지자 사표를 내고 공직에서 탈출했다. 이들의 사표를 수리해준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고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다. 권력을 마음껏 누리다고 정권 교체가 스리슬쩍 사표를 내고 사실상 도망친 것이다. 주어진 권한은 맘껏 휘두르되 책임져야 할 때는 공직을 버리는 이러한 비겁한 행태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V. 검찰은 ‘리셋’이 필요하다

검찰은 개청 이래 조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검찰에 핍박받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지난 3년 검찰국가를 거치면서 검찰과 검찰카르텔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더욱 분명해졌다. 국회에서는 여당이 검찰을 조직적으로 분리시키고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대거 발의하고 있다. 새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검찰개혁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검사들과 검찰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저항할 것이 분명하다. 최근 새 정부 민정수석에 특수부 검사 출신 인사가 기용되며 검찰개혁이 제대로 될지 우려가 확산되다가 검사 시절 부동산 명의신탁이 확인되면서 일주일여만에 낙마하였다.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지금의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줄이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 스스로 불러온 재앙은 이제 시작이다. 지금의 검찰은 조금 고쳐 다시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전면적인 ‘리셋’이 필요하다.

공수처장 임명 지연 등을 중심으로

김혜경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검찰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수사하기 위하여,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독자청청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공수처 설치 주장의 연원은 1996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의 보완과 부패수사 전담 독립기관으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 기구의 신설이 거론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25년 만인 2021년 1월 21일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출범과 동시에 제1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임명되어 2024년 1월 20일까지 3년의 임기를 만료하였다. 참고로 공수처장은 차관급으로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이다.

이에 제2대 공수처장의 선정작업은 2023년 11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시작되었다. 공수처장 후보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변협회장, 여당 2명 및 야당 2명의 추천위원들이 추천을 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위원회가 최종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추천된 8명의 후보 중 이미 지명된 오동운 후보 이외에, 2023년 12월 제3차 회의에서 진행된 비공개 투표에서 가장 많은 찬성표인 4표를 얻은 후보는 여당에서 추천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이로 인하여 윤석열 정부와 가까운 인사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김태규 후보는 이미 판사 재직시절부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시절에는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가 검사를 수사 주체로 명시하였으므로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이며, 수사에 대한 최종판단권은 법률전문가인 검사만이 가지는 것이고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수사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접근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개혁을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판사 사직 후 윤석열 지지모임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주최한 토론회 토론자로 활동하기도 하여서 정치적 중립성을 폄훼한다는 많은 의혹들에 휩싸여있었다.

나아가 당시 공수처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서, 차기 공수처장의 인선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매우 중요하였다. 이로 인하여 격론을 거듭하다가 결국 제1대 공수처장 임기만료 이후 40여 일이 지난, 2024년 2월 29일에 오동운 변호사와 이명순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발족한지 석 달 만이었다. 마지막인 제8차 회의에서도 이명순 변호사, 임복규 금융정보분석원 위원,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을 두고 세 차례의 표결을 걸쳐 김태규 부위원장은 가장 낮은 득표수를 얻어서 탈락하였고, 최종 이명순 변호사가 낙점된 것이다.

그런데 후보 선정 이후에도 두 달이 되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장을 지명하지 않다가, 2024년 4월 26일에야 비로소 오동운 변호사를 후보로 지명하였다. 제1대 공수처장 임기 만료 후 석 달이 훌쩍 지난 시점이다. 오동운 후보는 5월 17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5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하여 공수처장에 임명되었다. 제1대 공수처장 퇴임 이후 122일만이다. 이는 122일 동안의 공수처장 공백과 공수처의 기능마비를 의미한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처장 후보 지명 지연에 대하여 인사검증 절차에 있다고만 할 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김진욱 제1대 공수처장을 지명한 사실과 대조를 이룬다.

이미 제1대 공수처장이 1월 임기를 마치고 처장이 부재한 이후에 윤석열 정부 관련 주요 사건의 수사 속도는 느려진 상태였다. ‘감사원 표적감사 사건’은 2023년 말 핵심 피의자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이후 관련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채상병 사건’도 고발 5개월이 지난 2024년 1월에 첫 압수수색을 하였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다른 관련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공수처장을 비롯한 지휘부 공백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였다. 이에 더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 4. 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루어지기 전까지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사건의 수사를 지체시키기 위하여 공수처장 지명을 미루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후에도 2024. 8. 13.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임기 만료를 앞둔 차정현 수사기획관, 이대환 수사4부장, 송영선 및 최문정 수사3부 검사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임명을 제청하였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두 달 넘게 연임안을 승인하지 않고 2024. 10. 28. 임기만료 이틀 전인 마지막 근무일에야 비로소 연임안을 재가하였다. 이들 중 2명의 부장검사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 온 수사담당자였다.

앞서 제기된 의혹들은 2025. 5. 7.에 이르러서야 공수처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속도를 내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인해 확인되었다.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에 대하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죄혐의로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하였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채상병사건의 수사에 착수한 2023년 8월 이후 22개월만의 첫 대통령실 압수수색인 것이다.

이러한 공수처 검사임명 지연 사정은 탄핵 이후에도 마찬가지여서, 2025. 4. 14. 공수처 인사위원이 직접 공수처 신규 검사 7명에 대한 임명을 미루고 있는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혐의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공수처는 검사 정원 25명 중에서 11명이 공석이었고, 공수처는 결원으로 인하여 4개 부서가 아닌 2개로 축소된 수서부서 운영이

불가피하였다. 공수처 부서가 4개가 아닌 2개로 반토막이 난 것이다. 이후 2025년 5월에 이르러서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규 검사 7명을 임명재가했다. 3명은 지난 해 9월에, 4명은 올해 1월에 임명제청된 이후 각각 8개월, 4개월만의 일이다.

공수처법은 제정 당시 제정이유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 수사대상자인 고위공직자의 첫 항목인 가목은 대통령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그 권한대행자들은 고위공직자인 자신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공수처의 기능을 훼손하고 지연시킬 목적으로 공수처장 및 그 구성원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해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이 진행된 2025. 5. 이후에서야 비로소 공수처가 윤석열 정부 관련 사건과 관련자들을 수사할 수 있었다는 점은 공수처의 기능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법 앞에 신성한 영역은 없다. 신성한 자 역시 없다. 법은 모든 국민에 평등하다는 것을 국가는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친다.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는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을 평등권의 예시로 든다. 이처럼 “애들도 아는 얘기”를 대통령이 무시하니 애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 싶다.

윤석열정부 3년 공수처 인사 약식평가를 간단히 다음과 같이 평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가장 민주적 정당성을 득한 기관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통령에 의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의 부여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타기관에 의하여 선출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형식적” 임명권만을 가진다면, 대통령은 권한자가 아닌 의무자일 뿐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고의적 또는 악의적인 임명의 지연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의 형식적인 임명 행위가 부재하더라도 임명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배움의 계기였다.

[참고자료]

1. 제2대 공수처장 임명 경과

2023-11-08	제2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발족 및 1차 회의 오동운 변호사 후보 선정 위원: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추천(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변호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야당추천(이상감 공감파트너스 변호사, 정한중 한국외대 법전문 교수-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변호사로 교체) 피추천인 8인: 김태규 부위원장, 서민석 변호사, 한상규 아주대 법전문 교수,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이혁 변호사, 이천세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태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최창석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2023-11-30	2차 회의 후보 선정 결렬
2023-12-06	3차 회의에서 8명의 후보 중 김태규 후보 4표로 가장 많은 득표
2023-12-20	4차 회의 후보 선정 결렬
2023-12-28	5차 회의 후보 선정 결렬
2024-01-10	6차 회의 후보 선정 결렬
2024-01-20	제1대 공수처장 임기 만료
2024-02-06	7차 회의 후보 선정 결렬
2024-02-29	8차 회의 이명순 변호사 후보 선정 완료
2024-04-26	윤석열 전 대통령, 오동운 지명
2024-05-17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024-05-21	윤석열 전 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

2. 공수처 검사 신규 임명 경과

2024-06-18	검사 임용 공고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2024-09	임명제청(1차)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
2024-10	부장검사 2명 퇴직 (박석일, 송창진 부장검사)
2024-10-23	검사 임용 공고 (부장검사 3명, 평검사 4명)
2024-11-01	검사 임용 변경 공고 (부장검사 3명, 평검사 5명)
2024-1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송창진 부장검사 면직 재가

2025-01	임명제청(2차)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2025-05-19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재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26일자로 임명)
	정원 25명 중 21명 충원(처·차장, 부장검사 4명, 검사 15명)

2장. 인사

- I. 검찰 인사 · 직제 주요 현황
- II.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 III. 검찰청 검사 파견 현황

윤석열정부 3년간(2022. 5. ~ 2025. 5.)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 포함한 법무부와 검찰의 18개 주요 핵심 직책의 역할과 인사 내역, 직제 개편 현황을 기록했습니다.
대검찰청, 전국 6개 고등검찰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 검찰 인사 내역을 하나하나 조사해 수록했습니다.

〈윤석열정부 3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Part 1. 윤석열정부 3년 검찰과 검찰*를 말하다〉 2장 〈인사〉는 검찰 인사·징계·파견을 기록하고 평가를 담았다.

윤석열정부 3년간 검찰(법무부 포함) 조직의 간부 직책 가운데, 검찰 활동의 방향을 좌우하거나 주요 사건을 담당한 18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를 포함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지휘부, 고검검사급(중간간부급) 검사 인사를 수록했다. 검찰보고서는 2008년부터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고등검사장급 이상 및 검사장급 고위직 검찰 인사를 기록한 동시에 법무부, 대검, 재경, 인천, 수원지검과 그 산하 지청의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내역도 기록해왔다.

문재인정부부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기록을 대폭 확대해 전국 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의 고검검사급 명단을 수록하는 등 기록과 감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참고로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는 2020년부터 평검사까지 확대해 모든 인사를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기 진행된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임명된 비검사 일반직 공무원도 기록했고, 검사와 비검사 여부를 표기해 윤석열정부의 재검찰화 기조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조직 개편과 인사는 정권의 검찰 정책 및 수사 방향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검사 인사 기록은 검찰 제도의 변화와 수사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다. 윤석열정부의 인사 내용을 살펴보면, 전 정권의 ‘검찰 직접수사 축소’ 기조를 사실상 폐기하고, 탈검찰화된 보직에 다시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을 임명하며 ‘재검찰화’를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검찰 징계 현황도 기록했다. 2023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총 30명의 검사에게 37건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수위는 △해임 5명, △정직 14명, △감봉 4명, △견책 7명이다. 이와 함께 수사통치와 정치검찰의 권한 남용이 극심해지자 국회는 3년동안 14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중 6건이 가결되어 현재의 탄핵심판을 받았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 명단 및 소추 사유도 정리했다.

또한 법무부의 재검찰화, 외부 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 확대 등은 검찰 권력 강화를 보여주는 징후로, 그 실태를 기록해왔다. 2022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에 비서관급 이상으로 중용된 검찰청 및 검사 출신은 총 12명이다. 2025년 5월 기준 법무부와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각각 58명, 50명으로 총 108명이 검찰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고서에 등장한 모든 검사들은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에서 공직 근무 이력, 담당한 사건 목록 등을 확인해볼 수 있다. 참여연대가 주목하는 검찰권 오남용 사건 수사 지휘라인 기록과 함께, 검찰 인사 현황 자료는 해당 검사에게 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

I. 검찰 인사 · 직제 주요 현황

18개 핵심 직책 포함 검찰·법무 인사 내역 총망라

윤석열정부 3년간(2022. 5. ~ 2025. 5.)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 포함한 법무부와 검찰의 18개 주요 핵심 직책의 역할과 인사 내역, 직제 개편 현황을 기록했습니다. 대검찰청, 전국 6개 고등검찰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 검찰 인사 내역도 수록했습니다.

1. 18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검찰(법무부 포함) 조직의 간부 직책 중에서 검찰(법무) 활동의 방향을 좌우하거나 또는 중요사건을 담당하는 주요 직책으로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총장, 대검 차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대검 기획조정부장, 대검 반부패부장, 대검 형사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공공수사기획관, 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 등 18개를 꼽을 수 있다.

2013년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⁴⁴가 폐지됨에 따라 검찰보고서 수록 핵심 직책에서 중수부장과 수사기획관, 중수1·2과장을 제외한 바 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중수부가 반부패부로 바뀌었고, 2018년 7월 강력부와 통합돼 반부패·강력부로 재출범했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23년 5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분리해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했다.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500만 원 이상의 마약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지 않으려는 의도이다.

검찰의 정보력 확대를 위한 조직 강화도 함께 이뤄졌다. 2022년 3월,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 축소를 위해 수사정보담당관이 폐지되고 정보관리담당관이 신설되었는데, 당시 수사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유지시킨다는 비판이 일었다. 2023년 5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정보관리담당관을 폐지한 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확대 신설했다. 게다가 과거 동향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다는 비판을 받아 폐지됐던 공공수사정책관도 ‘공공수사기획관’으로 부활시켰다. 결국 검찰의 권한 집중과 오남용에 대한 대안없이 직접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하는 직제 개편이 이뤄졌다.

법무부장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정부조직법 제32조). 국가대상 소송의 경우 법률상 대표자가 된다.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포함해 검찰 사무와 행정 일반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어 사건 수사 관련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는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 모두 검사 출신으로 임명되어 정권의 뜻대로 수사가 좌우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문재인정부는 임기 5년간 법무부장관을 모두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하고 법무부 탈(脫) 검찰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와 박성재 전 검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연달아 임명하면서 법무부 재검찰화를 추진했다.

⁴⁴ 과거 검찰총장의 직할부대인 대검중수부가 검찰총장(또는 배후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를 함으로써 정치적인 목적에 검찰 수사권이 남용, 악용되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중수부 폐지가 강력히 요구되었음. 2013년 박근혜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수부 폐지를 단행했지만 여전히 대검에 반부패부를 남겼고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를 신설한 바 있음.

법무부 차관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장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 문재인정부는 탈검찰화 기조 하에 2020년 12월, 60년 만에 비검사 출신을 차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차관에 다시 검사 출신이자 당시 ‘카풀’로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을 맺은 이노공 변호사가 임명됐다. 후임으로는 현직 검사이자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형사1부장으로 함께 근무한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차관으로 임명됐다. 법무부 재검찰화 뿐 아니라 사적 인연으로 인사를 한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변화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집행,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민원 관련 제도개선,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조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운영·관리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차관을 보좌한다(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5조). 검사 독점 보직이었으나 문재인정부 들어 직제 개정으로 비(非) 검사도 임명 가능해졌다(2017. 8. 1. 개정). 하지만 지금까지 검사가 임명되어 왔다.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행정(인사, 조직 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검찰청 조직 및 정원관리, 검찰 예산 편성 및 배정, 형사사건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과 검찰사무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 유지 등에 관한 지휘·감독, 사면·감형·복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10조). 전국 검찰 조직의 예산과 인사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주요 직책 중 하나이다. 문재인정부 탈검찰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검찰국장의 검사 독점 조항은 개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검사 임명이 지속되고 있다.

검찰총장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는 과정을 통해 임명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검찰청법 제12조, 제34조의2).

대검 차장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유고 시 직무를 대리한다(검찰청법 제13조). 2022년 5월 대검 차장으로 임명된 이원석 검사가 2022년 9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후 1년 가까이 공석인 바 있다.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범죄정보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며, 산하에 범죄정보1담당관 및 범죄정보2담당관을 둔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지청 포함)이 수집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첩된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 그 밖에 범죄와 관련된 중요 정보와 자료의 분석·검증·평가·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한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5, 2023. 5. 23. 개정).

대검 기획조정부장

산하에 정책기획과와 정보통신과를 둔다. 주요업무계획,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법령질의 및 개정건의에 관한 사항, 검찰행정통계에 관한 사항, 각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검찰업무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찰총장 후보자가 새로 지명되면 통상적으로 기획조정부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는다. 그만큼 검찰총장의 참모와 같은 역할을 하며, 검찰개혁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검찰개혁 입법 관련 의견을 국회에 개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대검 반부패부장

산하에 반부패1·2·3과를 관할하며, 반부패기획관 1명을 둔다. 공무원, 공공단체의 직원,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증권·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 대규모 경제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한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 2023. 5. 23. 개정). 2018년 7월, 반부패범죄와 강력범죄의 수사 및 지휘를 단일화하기 위해 기존의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합하여 대검찰청에 ‘반부패·강력부’가 신설되었으나, 2023년 5월 마약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여 신설했다.

대검 형사부장

산하에 형사1·2·3·4과를 둔다. 형사부 강화 기조에 따라 형사3과 및 형사4과가 신설됐다(2020. 9. 개정). 경제·교통사건 및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 소년·여성·성폭력·가정폭력·환경·보건사건 등에 대한 검찰사무를 지휘 및 감독한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7조).

대검 공공수사부장

구 공안부장이다(2019. 8. 개정). 산하에 공안수사지원과, 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를 두고 공공수사기획관 1명을 둔다. 공공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공공수사사건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공공수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선거사건, 정당·정치자금 등 관련 사건, 노동 관련 사건, 집단행동 관련 사건 등에 관한 검찰사무를 지휘·감독한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 2023. 5. 23. 개정).

대검 공공수사기획관

공공수사업무의 기획, 공공수사사건의 수사지도, 공공수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공공수사부장을 보좌한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6항, 2023. 5. 23. 신설). 과거 정재계 인사, 시민단체 등의 동향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관리하면서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폐지(2020년 9월) 공공수사정책관이 부활됐다. 공공수사기획관 신설은 검찰의 일상적 사회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검 공판송무부장

산하에 공판1과·공판2과 및 집행과를 둔다. 종전 공판송무과와 집행과를 두다가 직제 개정에 따라 증설됐다(2020. 9. 개정).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의 접수, 공판 및 형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과 관련한 사항 등을 관할한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특수수사를 수행한다.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정치권 관련 부패수사, 재벌 관련 수사 등을 대부분 수행하기에 검찰총장 다음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강력하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거친 인물은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다. 2005년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방검찰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고등검사장급으로 격상되었다가, 2017년 문재인정부가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면서 검사장급으로 되돌렸다.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1차장

인권보호부·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형사제6부 및 공판제1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2022.07.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 검사장급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차관급으로 승격되어 검사장급으로 보임되다가, 2017년 각각 검사장급과 차장급 보직으로 환원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차장

형사제7부 · 형사제8부 · 형사제9부 · 조세범죄조사부 ·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 ·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 · 공판제2부 · 공판제3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2022.12. 개정,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3차장

공공수사제1부 · 공공수사제2부 · 공공수사제3부 · 중요범죄조사부 · 국제범죄수사부 ·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및 공판제4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2022.07. 개정,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4차장

반부패수사제1부, 반부패수사제2부, 반부패수사제3부, 강력범죄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 및 공판제5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2022.07. 개정,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2. 검찰·법무 인사

윤석열정부 검찰·법무 인사 기조를 확인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2025년 5월 현재까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탈검찰화된 법무부 고위직 포함) 및 고검검사급 검찰·법무 인사를 수록했다.

본 보고서는 검찰·법무 인사를 각 검찰청별 직책별로 수록하였다.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 및 검사로 구분되었지만,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2009년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및 검사로 구분하던 관행이 여전히 인사 보도자료 등에 여전히 남아있다.

문재인정부 당시 법무부 보직 일부에 대해 탈검찰화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상 복수직제로 규정되어 검사 임명이 가능하다. 또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대검검사급 보직 규정”)」상에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로 포함되어 있다. 이에 현재 법무부 일부 보직에 임명되어 있는 비검사 출신 인사들도 계속 기록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탈검찰화된 보직에 다시 검사 또는 검사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재검찰화’를 추진했다.

법무부 차관은 대검검사급 보직 규정이나 법무부 직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조직법 제2조 제6항에 따라 검사로 보할 수 있고, 법무부도 고등검사장급 인사로 발표하고 있어 함께 수록한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지휘부 검사

검찰청법 제28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기준 조항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위 지휘부 검사라고 간주할 수 있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2017. 8. 1. 개정)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고검검사급 검사

검찰보고서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고등검사장급 이상 및 검사장급 고위직 검찰 인사를 수록하면서 동시에 법무부, 대검, 재경, 인천, 수원지검과 그 산하 지청의 고검검사급, 소위 중간간부급의 인사 내역도 기록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부터 인사 기록을 대폭 확대해 전국 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의 고검검사급 명단을 법무부의 공식 보도자료 기준으로 수록한다.⁴⁵

⁴⁵ 정기 인사 기간 외에 검사 사직, 휴직, 파견으로 인한 공석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 법무부 공식 보도자료 공고 없이 소규모 인사가 단행되기도 함. 정확한 보직 현황은 각 검찰청 홈페이지의 검사실 배치표를 통해 확인 가능함.

<검사 직급 관련 법령 및 규정>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8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기준)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0조(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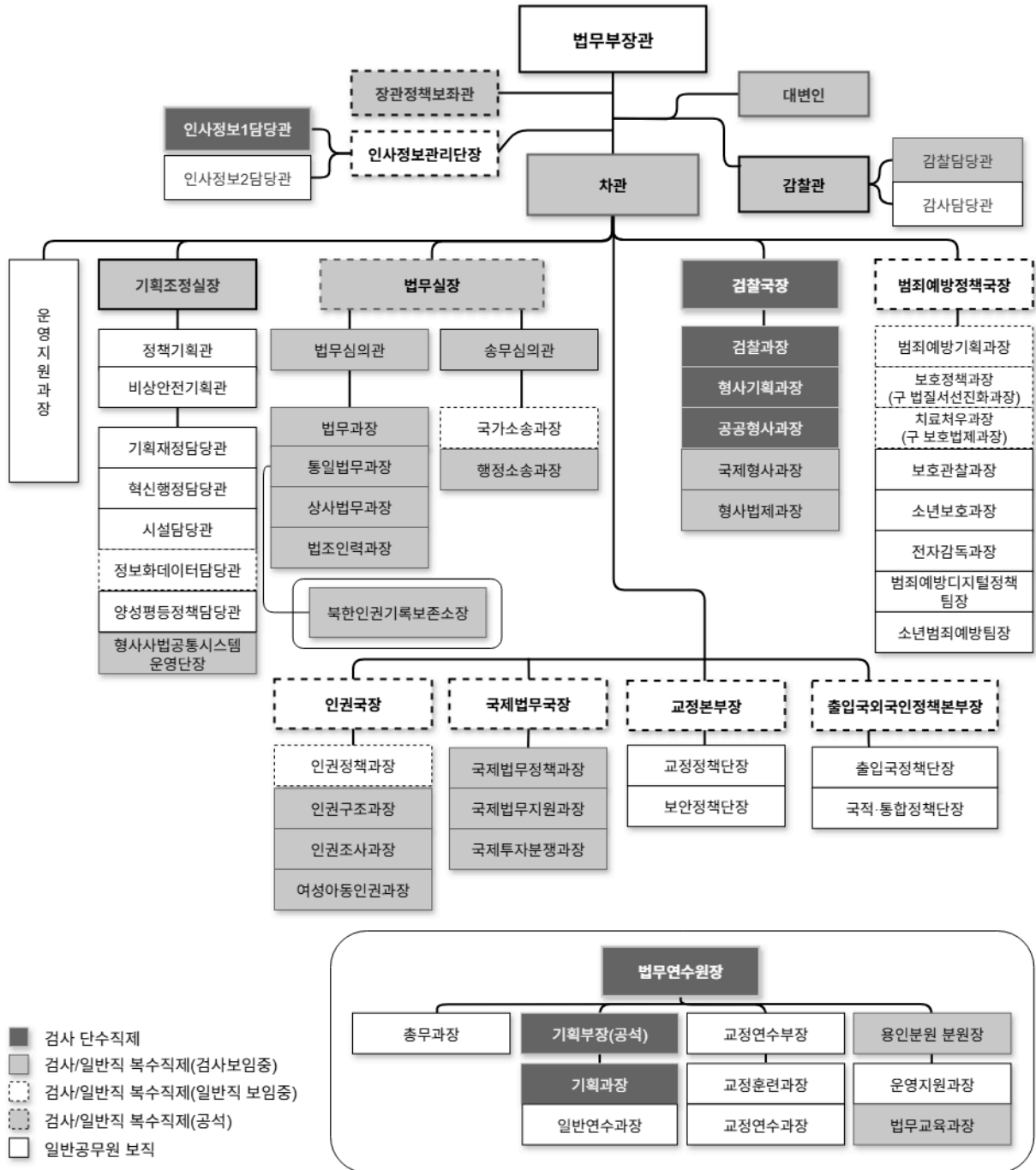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보직범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7. 8. 1.]

1. 검찰총장
2. 고등검찰청 검사장
3. 대검찰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5. 대검찰청 검사
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7. 지방검찰청 검사장
8. 사법연수원 부원장
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10.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1. 삭제(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 <2015. 2. 11.>
12. 삭제(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2017. 8. 1.>
13.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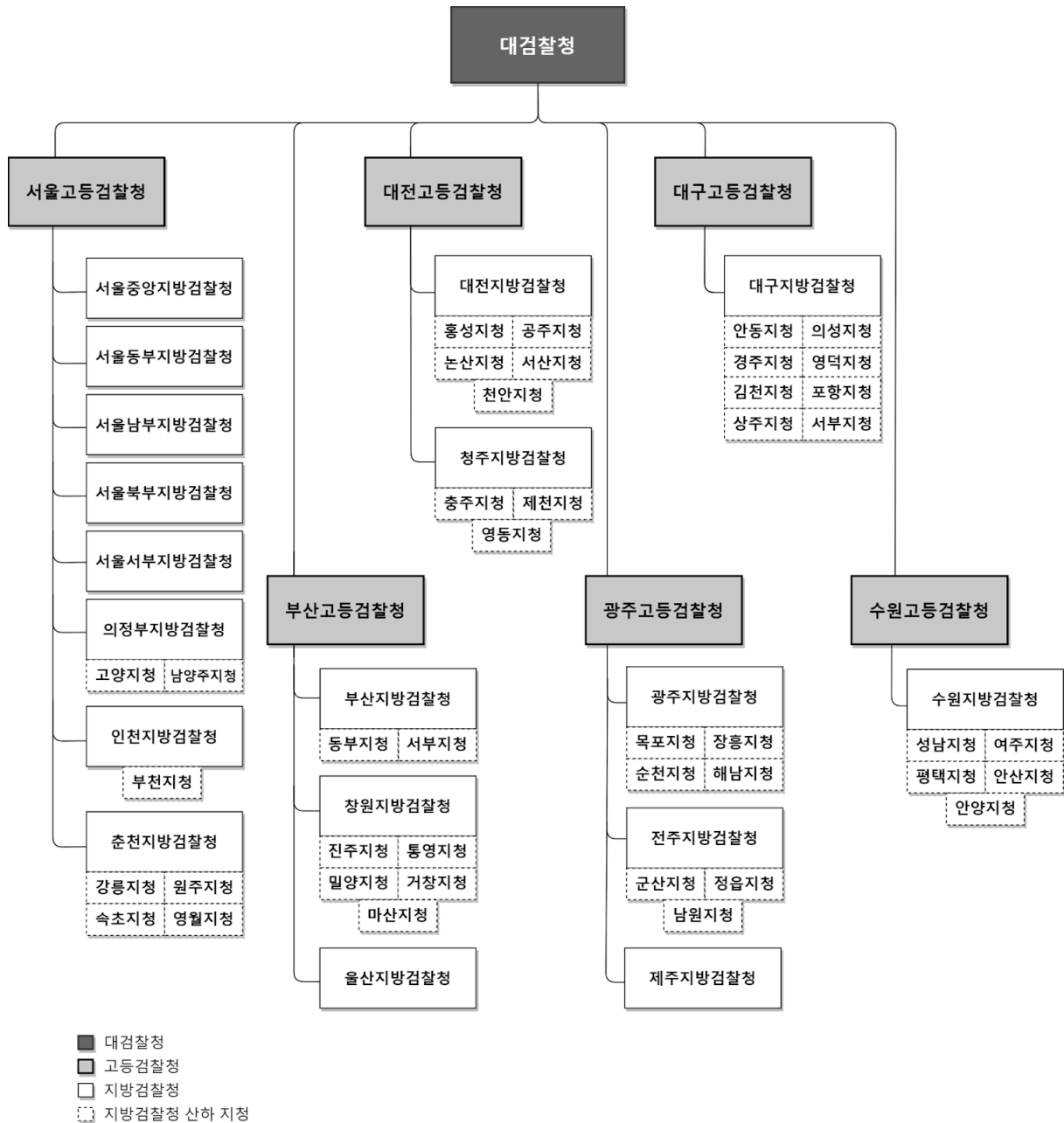
<법무부 조직도>

2025년 5월 현재 법무부 중간간부급 이상 조직도 현황으로, 검사 임명 가능 보직과 실제 임용현황을 반영해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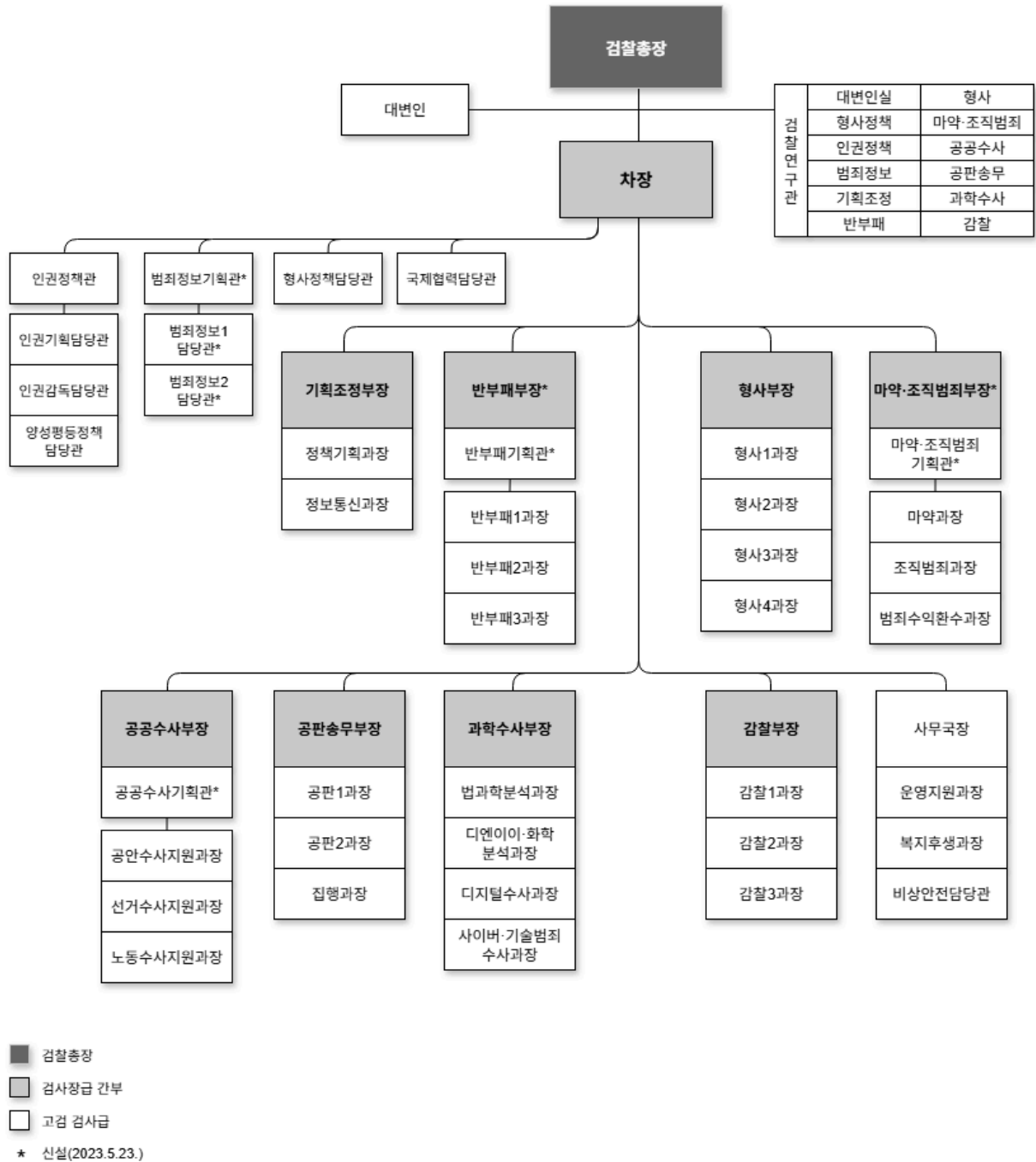
<전국 검찰청 조직도>

2025년 5월 현재 전국 검찰청 구성 현황이다.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6개의 고등검찰청과 18개의 지방검찰청 그리고 42개의 지청 등 총 67개의 검찰청이 있으며, 대검찰청은 모든 검사들을 총괄 지휘 감독한다. 수사는 주로 각 지역 지방검찰청과 지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고등검찰청은 산하 지검 및 지청의 항고사건을 담당한다.



<대검찰청 조직도>

2025년 5월 현재 대검찰청의 중간간부 이상 조직도 현황이다.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전국 모든 검찰을 지휘 총괄한다.



3. 직제 개편 주요 특징과 현황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문재인정부의 검찰 특수부 축소 등 직접 수사 범위의 축소 기초를 사실상 폐기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대검의 직접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의 축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무력화시키고, 대검의 정보수집 기능 축소라는 전 정부 기초를 전면 뒤엎었다.

대검찰청 직제 개편 내용과 특징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은 직접수사 축소 기초에 따라 특수수사를 총괄하던 대검 반부패부를 강력부와 통합해 반부패·강력부로 개편했고, 검찰총장 직속 직접수사 조직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가동을 중단했다(2018.7.). 인지수사에 활용되는 정보수집 기능을 하는 범죄정보기획관은 수사정보정책관 및 산하 2담당관 체제로 개편(2018.2.5.)했다가 다시 수사정보담당관 단독 체제로 축소했다(2020.9.3.). 이후 고발사주 사건과 재판부 판사 사찰 사건 등이 논란이 되자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정보관리담당관을 설치했다(2022.3.8.) 반부패·강력부 산하에 수사지휘·지원과, 범죄수익환수와 및 마약·조직범죄과를 두도록 통합개편됐다(2020.9.3.). 또한 문재인정부는 대검 지휘부의 기능 중 인권정책관(2020.9.3. 개칭 이전), 형사정책담당관(2020.9.3. 신설), 국제협력담당관(2020.3.31. 신설)을 차장 산하로 배속하는 등 검찰총장 권한 일부도 분산했다. 고위급 검사의 비위 감시를 전담하는 감찰3과 신설(2020.3.31. 구 비직제 기구이던 대검 특별감찰단을 개편해 정식 직제화) 등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했다.

반면, 윤석열정부는 2023년 4월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 2023년 5월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분리하여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했다. 문재인정부가 마약범죄 수사의 컨트롤 타워인 대검 강력부를 폐지하고 반부패·강력부로 통합해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실제 문재인정부는 반부패부와 강력부 통합으로 부패와 강력범죄 수사 지휘를 단일화해 산하에 마약·조직범죄과를 두어 마약범죄 수사를 이어간 바 있다.⁴⁶ 그럼에도 문재인정부가 ‘마약수사 손발을 잘랐다’며 당시 한동훈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조직을 확대했다.

⁴⁶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마약범죄 직접수사 범위가 500만 원 이상 밀수로 제한되며 검찰의 마약범죄 인지수사가 축소된 것은 사실이나, 관세청에 500만 원 이하 마약범죄 직접수사 권한을 부여해 수사 공백은 방지되었고 오히려 2021년 마약류 전체 압수량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윤석열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설치 후 2023년 마약류별 단속 현황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마약수사 합동수사본부로 출범하기 위해 본부장 내정 등 인력구성을 완료하고 2024년 12월 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게 공지되었으나,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3월, 국회는 의료용 마약류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마약류 단속 사무 공무원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대검의 정보수집 기능을 문재인정부 이전 수준으로 확대 강화했다. 대검에서 범죄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의 명칭은 거듭 변경되었다(범죄정보기획관 → 2018. 2. 개정, 수사정보정책관 → 2020. 9. 개정, 수사정보담당관 → 2022. 3. 개정, 정보관리담당관 → 2023. 5. 개정 범죄정보기획관). 대검찰청에는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고 정보기관도 아님에도, 총장 직속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조직을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00년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사주’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고발장 작성의 진원지로 지목된 바 있고, 이외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시기 ‘재판부 판사 사찰 문건’, ‘윤석열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등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며 특히 논란이 가중됐었다.

이에 문재인정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수사정보담당관 폐지한다며, 2022년 3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를 대신해 세워진 정보관리담당관은 여전히 검사가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 및 일선 청이 수집하는 수사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사정보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정보관리담당관이 수집한 정보를 검증하도록 했으나, 위원회를 검찰총장 직속으로 두도록 했고 위원회에 외부 인사도 참여할 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2023년 5월 윤석열정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범죄정보 수집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확대 개편한다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했다. 정보관리담당관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관할 업무를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에서 ‘정보와 자료의 분석·검증·평가 및 관리’로 확대 개편했다. 뿐만 아니라 중요 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반부패기획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및 공공수사기획관을 신설했다. 즉 ‘수사정보와 자료’를 ‘정보와 자료’로 범위를 더 확대했고, 정보를 수집·관리를 넘어 ‘정보’ 분석·검증·평가로까지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정보수집 담당관까지 확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22년 대검의 정보수집 기능 견제를 위해 도입된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절차 및 적정성 등을 검증·평가하기 위한 회의의 운영 지원 업무는 삭제됐다.

법무부가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 권력의 과도한 확대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방검찰청 직제 개편 내용과 특징

문재인정부 당시 법무부는 2019.08. 지방검찰청 직제를 개편해公安부를 공공수사부로 명칭을 바꾸고, 2019.10. 기존 일선 지검의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곳만 남기고 모두 형사부로 전환하고 명칭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개칭했다(7개청 10개를 3개청 6개 반부패수사부로 축소). 이후 2020.01.과 2020.09. 추가 직제 개정으로 특별수사 및 인지수사 축소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형사부, 공판부로 인사 중심을 이동시켰다. 이에 따라 인지수사부서 및 강력범죄나 마약·경제범죄 등 특정 범죄 전담 부서들이 추가로 형사부나 공판부, 전담형사부로 전환되었다.

문재인정부에서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법 시행 이후 2021.7. 검찰은 직접수사보다 경찰수사의 영장심사나 송치사건 보완수사, 수사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남아있는 직접수사부서인 반부패부, 강력부, 외사부, 공공수사부 등은 추가로 통폐합하거나 형사부로 전환하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협력부나 수사협력단 등을 설치했다. 또한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해 수사과정의 기본권 침해 시정조치나 경찰 보완수사 요구 등을 담당케 하고, ‘인권보호관’을 전국에 확대배치했다.

반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전 정부의 검찰 직접 수사 축소 기조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검찰 직접 수사 확대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장관 취임 다음 날, 금융·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문재인정부의 직접 수사 축소 기조에 따라 폐지했었다. 이후 수사 전문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2021년 9월 박범계 당시 법무부장관이 직접 수사가 아닌 사법통제 중심 협업 모델로 설계한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그러나 한동훈 전 장관의 합수단 부활 지시로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 범위는 확대됐고, 이어 법무부는 직제 개편을 통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화했다(2023.5.23.).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가 확대했던 형사부를 축소해 전담수사부로 전환하고(2022.7.4.), 통합됐던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부를 다시 분할하는(2022.12.29.) 등 검찰 직접 수사 축소 기조를 사실상 전면 폐지했다.

<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 직제 개편 주요 내역>

	문재인정부	▶	윤석열정부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 수사정보정책관(2018.02.) → 수사정보담당관(2020.09.) → 정보관리담당관 (2022.03.)		범죄정보기획관 (2023.05.)
	범죄정보1담당관·2담당관 → 수사정보1담당관·2담당관 (2018.02.) → 2020.09. 폐지		범죄정보1담당관·2담당관 (2023.05. 신설)
	공안부 → 공공수사부(2019.08.)		-
	공공수사정책관 → 2020.09. 폐지		공공수사기획관 (2023.05. 신설)
	반부패부 / 강력부 → 반부패·강력부 (2018.07. 통합 신설)		반부패부 / 마약·조직범죄부 (2023.05. 분리 신설)
	인권부(2018.07.신설) → 인권정책관 (2020.09.)		-
	▪ 인권기획과 → 인권기획담당관(2020.09.) ▪ 양성평등정책담당관(2020.09.신설) ▪ 인권감독과 사무는 인권감독담당관으로 이관(2020.09.)		인권기획담당관 사무에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항목 추가 (2023.05.)
	사이버수사과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2023.12. 확대 개편)
고등검찰청	▪ 수원고검 신규 개청(2019.03.) ▪ 전국 6대 고검 인권보호관 신설 (2021.07.)		-

<각급 지방검찰청 및 산하지청 직제 개편 주요 내역>

	문재인정부	▶	윤석열정부
각급 지방검찰청 및 산하 지청	형사부 및 특수 수사 관련		
	특별수사부 → 반부패부(2019.10.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외의 특수부는 형사부 등으로 개편 폐지)		-
	반부패부 → 일부 형사부 및 공판부로 전환(2020.01. 서울중앙지검 2개만 남기고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		강력범죄형사부, 조세범죄형사부 등 전담형사부 ▶ 강력범죄수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등 전담수사부로 개칭 (2022.07.)
	강력부, 외사부 등 전담수사부 → 강력범죄형사부, 외사범죄형사부 등 전담형사부(2020.09. / 2021.07.) 또는 인권보호부로 전환(2021.0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신설 및 서울중앙·부산·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 강력부 통합(2021.07.)		▶ 서울중앙·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수사부로 분할 개편 (2022.07. / 2022.12.)
	공공(공안) 수사 관련		
	공안부 → 공공수사부(2019.08.) → 일부 형사부 전환(2020.01. / 2020.09.) 및 외사부 통합 (2021.07.)		일부 형사부 ▶ 공공수사부 전환 (2022.07. / 2023.05.)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관련		
	증권범죄합동수사단(2020.01. 폐지) →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설치 (2021.07.)		▶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설치 (2022.05.) ▶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신설로 정식 직제화 (2023. 05.)
	기타		
	문재인정부 2017.8. 전국 일선청 인권감독관 신설(수사과정의 인권감독, 내부구성원 비리 감찰 등) → 2021.7. 인권감독관을 인권보호관으로 개편하고 전국 8대 지검에 인권보호부 신설 2022.3. 의정부지검 산하에 남양주지청 신설 윤석열정부 2022.7.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마지막 순위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하는 제한 삭제, 각급 검찰청의 장이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한 삭제 2022.12.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2개 부로 확대 2025.2.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합동수사부 설치		

4. 18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 내역 (2022.5.-2025.5.)⁴⁷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법무·검찰 주요 18개 직책에 있었던 인사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현재 소속과 직책은 2025년 5월 기준으로 수록했다.

1) 법무부장관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22.05.	한동훈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학	27	-	-
2023.12.	공석 ⁴⁸	-	-	-	-	-
2024.02.	박성재 ⁴⁹	대구고	고려대 법학	17	법무부	장관

2) 법무부 차관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22.05.	이노공 ⁵⁰	서울 영락고	연세대 법학	26	-	변호사
2024.01.	심우정 ⁵¹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학	26	대검찰청	검찰총장
2024.09.	김석우	대구 덕원고	서울대 법학	27	법무부	차관

3)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22.05.	권순정	단대부고	서울대 법대	29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2024.01.	공석 ⁵²	-	-	-	-	-
2024.05.	변필건	여의도고	서울대 경영	30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⁴⁷ 법무부가 발표한 2023.09.04. “2023년 검찰 고위 간부 인사”, 2022.06.22. “2022년 하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 2022.05.18.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 2024.01.22. “검찰 고위 간부 인사”, 2024.05.13. “검찰 고위 간부 인사”, 2024.05.29. “2024년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2024.09.19.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반영함.

⁴⁸ 직무대행 : 이노공 차관(2023.12.30.~2024.1.18.), 심우정 차관(2024.1.19.~2024.2.20.)

⁴⁹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 2024.12.12. 법무부장관(박성재)탄핵소추안 가결 후부터 2025.4.10.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전까지

⁵⁰ 검사 출신 변호사로, 고기영 차관 이후 약 2년 만에 임명된 검사 출신 법무부차관임.

⁵¹ 대검 차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다시 검찰총장으로 임명됨.

⁵² 직무대리 : 권순정 검찰국장(2024.1.24.~2024.5.15.)

4)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22.05.	신자용	순천고	한양대 법학	28	법무연수원	원장
2024.01.	권순정	단대부고	서울대 법대	29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2024.05.	송강	-	-	29	법무부	검찰국장

5) 검찰총장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22.05.	공석	-	-	-	-	-
2022.09.	이원석	서울 중동고	서울대 정치학	27	-	.. ⁵³
2024.09.	심우정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학	26	대검찰청	검찰총장

6) 대검찰청 차장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22.05.	이원석	서울 중동고	서울대 정치학	27	-	-
2022.09.	공석	-	-	-	-	-
2023.09.	심우정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학	26	대검찰청	검찰총장
2024.01.	신자용	순천고	한양대 법학	28	법무연수원	원장
2024.09.	이진동	서울 경동고	연세대 생화학	28	대검찰청	차장

7)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⁵⁴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22.07.	최재훈	서울 구정고	서울대 법학	34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반부패수사 2부장
2023.09.	박영진	-	고려대 법학	31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⁵³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⁵⁴ 2018.02. 구 범죄정보기획관에서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개칭하였으며, 이후 2020.09. 다시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 개편하고 기존 수사정보정책관 산하에 있던 수사정보1담당관, 수사정보2담당관은 폐지하였음. 이후 2022.03. 다시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사실상 그대로 온존한 정보관리담당관을 신설함. 이후 2023.05.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칭하고 범죄정보1담당관과 범죄정보2담당관을 산하에 신설하여 확대 개편함.

2024.05.	하동우	-	-	33	대검찰청	범죄정보 기획관

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22.06.	송강	서울 휘문고	고려대 법학	29	법무부	검찰국장
2023.09.	성상현	서울 영동고	서울대 공법학	30	대전지방법검찰청	검사장
2024.05.	전무곤	대구 경북고	고려대 법학	31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9) 대검찰청 반부패부장⁵⁵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22.06.	신봉수	전주 영생고	건국대 법학	29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2023.09.	양석조	제주 오현고	한양대 법학	29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검사장
2024.09.	구승모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학	31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10) 대검찰청 형사부장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22.06.	황병주	익산 남성고	서울대 법학	29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2023.09.	박세현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학	29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24.05.	이진수	서울 영동고	서울대 사법학	29	대검찰청	형사부장

11)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구公安부장)⁵⁶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22.05.	김유철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학	29	수원지방법검찰청	검사장
2023.09.	박기동	대구 영남고	고려대 법학	30	대구지방법검찰청	검사장
2024.05.	김태은	서울 경기고	서울대 사법학	31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⁵⁵ 2018.07. 반부패부와 강령부 통합하여 반부패·강령부 신설 → 2023.05. 반부패부와 강령부로 분리 신설

⁵⁶ 2019.07. 개칭

12)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⁵⁷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23.05.	김태은	서울 경기고	서울대 사법학	31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2023.09.	이희동	서울 중동고	서울대 경영학	3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차장
2024.05.	김중현	-	-	33	대검찰청	공공수사 기획관

13)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22.06.	김선화	서울 성신여고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23.09.	정유미	-	서울대 교육학	30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2024.05.	정희도	-	연세대 법학	31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22.05.	송경호	서울 중동고	서울대 법학	29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2024.05.	이창수	서울 대원고	성균관대 법학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22.07.	성상현	서울 영동고	서울대 공법학	30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2023.09.	김창진	대구 경북고	경북대 법학	31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2024.06.	박승환	-	-	3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

⁵⁷ 2019.07. 개칭, 2020.09. 폐지 후 2023.05. 신설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22.05.	박영진	-	고려대 법학	31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23.09.	박현철	통영고	고려대 법학	31	서울고등검찰청	차장
2024.06.	공봉숙	-	서울대 지구과학교육학	3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22.05.	박기동	대구 영남고	고려대 법학	30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2023.09.	김태은	서울 경기고	서울대 사법학	31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2024.06.	이성식	-	-	3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차장⁵⁸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22.05	고형근	부산 동아고	부산대 행정학	31	수원고등검찰청	차장
2024.06.	조상원	-	-	3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차장

⁵⁸ 2018.02. 신설

5. 대검 검사급 및 고검 검사급 검찰·법무 인사 내역(2022.5.-2025.5.)⁵⁹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법무부와 전국 검찰청에 고검검사급 검사 명단을 법무부의 공식 보도자료 기준으로 수록했다. 해당 기간 내에 인사 변동이 없는 경우 직전 보직자를 수록했다. 고등검사장급 이상 직책에는 기호‘◎’를, 검사장급 직책에는 기호‘○’을 붙여 표시했다.

법무부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법무부 차관◎	2022.05.	이노공	서울 영락고	연세대 법학	26	
	2024.01.	심우정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학	26	
	2024.09.	김석우	대구 덕원고	서울대 법학	27	
대변인	2022.05.	신동원	-	-	33	
	2024.06.	노선균	-	-	35	
감찰관○	2020.07.	류혁	서울 선정고	서울대 전자공학	26	⁶⁰
	2024.06.	민경호	-	-	33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2022.05.	김도완	대구 오성고	서울대 정치학	31	
	2023.09.	김형석	-	-	32	
	2024.06.	하준호	-	-	37	
	2024.06.	김동윤	-	-	38	
인사정보관리단 단장 ⁶¹	2022.06.	박행열	-	-	-	신설 非검사
인사정보관리단 인사정보1담당관	2022.06.	이동균	대구 계성고	서울대 사법학	33	신설
	2023.09.	윤원기	-	-	34	
	2024.06.	최수봉	-	-	36	
장관정책보좌관	2022.05.	차규근 ⁶²	-	-	34	非검사 직위해제
	2022.05.	김명철 ⁶³	-	-	-	非검사
기획조정실 실장○	2022.05.	권순정	서울 단대부고	서울대 법대	29	
	2024.01.	공석 ⁶⁴				
	2024.05.	변필건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경영학	30	

⁵⁹ 법무부가 2024년 5월 두 차례 인사를 발표하였으나, 해당 표에는 2024년 4월까지의 인사 내역을 기재함. 이후 인사 내역은 [그사건그검사 DB](#) 참고

⁶⁰ 류혁 감찰관은 통영지청장을 역임하고 2019년 사직한 전직 검사 출신임.

⁶¹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했고 인사정보관리단이 맡았던 인사검증 기능을 민정수석실로 원상 복구했다. 폐지 직전인 2025년 5월 26일, 인사관리단 최수봉 인사정보1담당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로,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최수은, 김태겸 검사는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검사로 6월 2일부터 배치하는 발령을 받음.

⁶²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2022년 5월 23일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 후 직위해제됐다.

⁶³ 2023년 사직 이후 공석

⁶⁴ 2024.01. 권순정 전 실장의 검찰국장 임명 이후 공석(권순정 검찰국장 직무대리)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단장	2022.07.	원지애	-	성균관대 무역학	32	
	2023.09.	정수진	대전 동방여고	고려대 법학	33	
	2024.06.	김현아	-	-	33	
법무실장○	2021.08.	이상갑	강원 서석고	서울대 정치학	29	非검사 ⁶⁵
	2023.02.	김석우	대구 덕원고	서울대 사법학	27	
	2023.09.	구상엽	서울 휘문고	서울대 사법학	30	
	2025.02.	공석 ⁶⁶				
법무실 법무심의관	2020.11.	정재민	-	-	32	非검사
	2023.02.	구승모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학	31	
	2024.06.	유태석	서울 대원외고	서울대 법학	32	
법무실 송무심의관	2020.12.	김의래	-	-	31	非검사
	2022.08.	공석 ⁶⁷				
	2023.02.	정재민	-	-	32	非검사
	2024.01.	공석 ⁶⁸				
법무실 법무과장	2024.06.	신대경	경북대부속고	연세대 법학	32	
	2022.07.	최재아	-	-	34	
	2023.09.	박양호	-	-	35	
법무실 국제법무과장	2024.06.	이시전	-	-	36	
	2020.12.	박정현	-	-	37	非검사
	2023.02.	김태형	-	-	35	2023.08. 폐지
법무실 국제분쟁대응과장 ⁷⁰	2023.04.	공석 ⁷¹	-	-	35	非검사 2023.08. 폐지
법무부 국가소송과장 ⁷²	2020.08.	김기수	-	-	39	신설 非검사
	2023.03.	공석 ⁷³				
	2023.06.	임성택	-	-	39	非검사
법무실 행정소송과장	2020.12.	송창현	-	서울대 법학	33	신설 非검사
	2023.02.	김은미	-	-	36	
	2024.06.	서효원	-	-	35	
법무실 통일법무과장	2022.07.	김태현	-	서울대 영문학	35	
	2023.09.	홍승표	-	-	35	
	2024.06.	장영일	청도 이서고	한양대 법학	36	
법무실 법조인력과장	2022.07.	이준호	-	-	34	
	2023.09.	주혜진	-	-	35	

⁶⁵ 2022.08. 이상갑 법무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2023.02.06.까지 공석

⁶⁶ 2025.02. 구상엽 전 법무실장 사직 이후 공석(유태석 법무부 법무심의관 대행)

⁶⁷ 2022.08. 김의래 전 송무심의관 사직 이후 2023.02.06.까지 공석

⁶⁸ 2024.01. 정재민 전 송무심의관 사직 이후 공석

⁶⁹ 국제법무국(신설) 산하 국제법무정책과와 국제법무지원과로 확대 개편되면서 부서 폐지(2023.08.)

⁷⁰ 국제법무국(신설) 산하 국제투자분쟁로 직제 개편되면서 부서 폐지(2023.08.)

⁷¹ 2023.04. 한창완 전 국제분쟁대응과장의 사임 이후 공석(김태형 국제법무과장 직무대리)

⁷² 법무부가 검찰에게 위임한 국가소송권한을 환수하면서 송무심의관을 신설하고, 국가송무과는 국가소송과로 개칭해 신설된 행정소송과와 함께 송무심의관 산하로 개편함(2020.08.)

⁷³ 2023.03. 김기수 국가소송과장의 사임 이후 2023.06.26.까지 공석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법무실 상사법무과장	2024.06.	이상훈	-	-	36	
	2020.10.	임철현	-	-	32	非검사
	2023.02.	김봉진	-	-	36	
검찰국 국장○	2022.05.	신자용	순천고	한양대 법학	28	
	2024.01.	권순정	서울 단대부고	서울대 법대	29	
	2024.05.	송강	서울 휘문고	고려대 법학	29	
검찰국 검찰과장	2022.05.	김창진	대구 경북고	경북대 법학	31	
	2023.09.	이동균	대구 계성고	서울대 사법학	33	
	2024.06.	임세진	-	-	34	
검찰국 형사기획과장	2022.07.	용성진	서울 석관고	서울대 경영	33	
	2023.09.	임세진	-	-	34	
	2024.06.	김태형	-	-	35	
검찰국 공공형사과장 (구 공안기획과장)	2022.07.	박규형	서울 대원외고	고려대 법학	33	
	2023.09.	조민우	-	-	34	
	2024.06.	이병주	-	-	35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2022.07.	이지형	-	-	33	
	2023.09.	김태형	-	-	35	
	2024.06.	김형원	-	-	36	
검찰국 형사법제과장	2022.07.	윤원기	-	-	34	
	2023.09.	한상형	-	-	36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2021.08.	윤웅장	-	-	-	非검사
	2024.08.	이영면	안동 중앙고	건국대 행정학	행시42	非검사
	2022.01.	이법호	-	-	-	非검사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장	2024.03.	송중일	-	-	-	非검사
	2022.01.	오상섭	-	-	-	非검사
	2023.01.	박종균	-	-	-	非검사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구 법질서선진화과장)	2025.03.	김지수	-	-	-	非검사
	2022.01.	양현규	-	-	-	非검사
	2023.07.	권은아	-	-	-	非검사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장 (구 보호법제과장)	2025.01.	조연호	-	-	-	非검사
	2022.01.	위은진	-	-	31	非검사
	2023.02.	공석 ⁷⁴				
인권국 국장○	2023.10.	승재현	-	-	-	非검사
	2022.01.	정소연	-	중앙대 법대	39	非검사
	2022.09.	공석 ⁷⁵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2023.04.	박진열	-	서울대 법학과	38	非검사
	2025.02.	노일석	-	-	-	非검사
	2018.09.	김종현	-	-	38	非검사
인권국 인권구조과장						

⁷⁴ 2023.02. 위은진 인권국장 사직 이후 2023.10.05.까지 공석

⁷⁵ 2022.09. 정소연 인권정책과장 사직 이후 2023.04.23.까지 공석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인권국 인권조사과장	2022.07.	공석 ⁷⁶				
	2022.11.	이유선	-	-	34	
	2023.09.	강정영	-	-	35	
	2024.06.	정가진	서울 동덕여고	이화여대 법학	36	
	2022.07.	이유선	-	-	34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	2022.11.	손찬오	-	서울대 법대	33	
	2023.09.	이진용	-	-	35	
	2024.06.	이호석	-	-	36	
	2020.12.	김연정	-	-	변시3	非검사
	2022.08.	공석 ⁷⁷				
국제법무국장○	2023.09.	정가진	서울 동덕여고	이화여대 법학	36	
	2024.06.	김수민	-	-	37	
	2024.02.	정홍식	-	-	-	신설 非검사
	2023.08.	김태형	-	-	35	신설
	2023.09.	조아라	-	연세대 법학	34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정책과장	2024.06.	최태은	-	-	35	
	2023.09.	신동환	-	-	36	신설
	2023.11.	김지연	-	-	36	신설
	2021.07.	이재유	서울 관악고	서울대 법학	행시41	非검사
	2024.08.	배상엽	대구 오성고	성균관대 한국철학	행시43	非검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2020.07.	심경보	-	-	-	非검사
	2023.08.	(겸) 김태현	-	서울대 영문학	35	⁷⁸
	2023.09.	(겸) 홍승표	-	-	35	
	2024.06.	(겸) 장영일	청도 이서고	한양대 법학	36	
	2022.07.	김승호	서울 영동고	서울대 공법학	33	안산지청 겸직
정책기획단장 ⁷⁹	2023.09.	박승환	-	-	32	광주지검 겸직
	2024.06.	윤원기	-	-	34	광주지검 겸직

⁷⁶ 2022.07. 김종현 인권구조과장 사직 이후 2022.11.14.까지 공석

⁷⁷ 2022.08. 김연정 여성아동인권과장 사직 이후 2023.09.25.까지 공석

⁷⁸ 2023.08. 법무실 통일법무과장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을 겸직하도록 함(참고 : [법무부 보도자료](#)).

⁷⁹ 직제에 근거하지 않은 임시조직으로 통상 겸직 파견 형식으로 임명됨.

대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검찰총장◎	2022.05.	공석 ⁸⁰				
	2022.09.	이원석	서울 중동고	서울대 정치학	27	
	2024.09.	심우정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학	26	2025.7.사임
	2022.05.	이원석	서울 중동고	서울대 정치학	27	총장 대행
	2022.09.	공석 ⁸¹				
차장◎	2023.09.	심우정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학	26	
	2024.01.	신자용	순천고	한양대 법학	28	
	2024.09.	이진동	서울 경동고	연세대 생화학	28	
	2022.07.	박현철	통영고	고려대 법학	31	
	2023.09.	박혁수	순천고	서울대 전기공학	32	
대변인	2024.06.	이응철	-	-	33	
	2022.07.	박혁수	광주 석산고	고려대 법학	29	
	2023.09.	윤경원	-	-	31	
인권정책관	2024.06.	문현철	-	-	32	
	2022.07.	곽영환	서울 경희고	단국대 법학	33	
	2023.09.	어인성	-	-	35	
인권감독담당관	2024.06.	안창주	-	-	35	
	2022.07.	정수진	대전 동방여고	고려대 법학	33	
	2023.09.	권성희	-	경북대 법학	34	
인권기획담당관	2024.06.	권내건	-	-	35	
	2022.07.	김종현	-	-	33	
	2023.09.	장준호	-	-	35	
형사정책담당관	2024.06.	박규형	서울 대원외고	고려대 법학	33	
	2022.07.	박명희	-	-	34	
	2023.09.	손상희	-	-	35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구 양성평등담당관)	2024.06.	이유현	-	-	36	
	2022.07.	최재훈	서울 구정고	서울대 법학	34	명칭변경
	2023.05.	(겸) 박성민	서인천고	서울대 사법학	31	명칭변경 ⁸²
범죄정보기획관 (구 수사정보담당관 → 정보관리담당관)	2023.09.	박영진	-	고려대 법학	31	
	2024.06.	하동우	-	-	33	
	2023.05.	(겸) 김종현	-	-	33	신설 ⁸³
범죄정보1담당관	2023.09.	김태현	-	서울대 영문학	35	
	2024.06.	김정훈	-	-	36	
	2023.05.	최재훈	서울 구정고	서울대 법학	34	신설

⁸⁰ 2022.05.06. 김오수 총장 사직으로 5월부터 8월까지 공석(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⁸¹ 2022.09.16. 이원석 차장검사의 검찰총장 임명 이후 2023.09.07.까지 공석

⁸² 2023.05. 신설 후 공석으로 박성민 대검찰청 형사부 선임연구관이 겸직

⁸³ 2023.05. 신설 후 공석으로 김종현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이 겸직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국제협력담당관 (구 국제협력단장)	2023.09.	소정수	-	-	36	
	2024.06.	최재순	-	-	37	
	2022.07.	조주연	대전 동산고	서울대 외교학	33	
	2023.09.	홍용화	-	-	35	
	2024.06.	김진호	-	-	36	
기획조정부 부장○	2022.06.	송강	서울 휘문고	고려대 법학	29	
	2023.09.	성상현	서울 영동고	서울대 공법학	30	
	2024.06.	전무곤	대구 경북고	고려대 법학	31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	2022.07.	김종우	-	-	33	
	2023.09.	김수홍	-	-	35	
	2024.06.	장준호	-	-	35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장	2022.07.	백수진	-	-	33	
	2023.09.	이성범	-	-	34	
반부패·강력부 부장○ 반부패부 부장○	2022.06.	신봉수	전주 영생고	건국대 법학	29	
	2023.05.	신봉수	전주 영생고	건국대 법학	29	신설
	2023.09.	양석조	제주 오현고	한양대 법학	29	
	2024.09.	구승모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학	31	
반부패부 반부패기획관	2023.05.	강성용	순천고	서울대 정치학	31	신설
	2023.09.	엄희준	대구 영신고	서울대 경제학	32	
	2024.06.	용성진	서울 석관고	서울대 경영학	33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지원과장	2022.07.	윤병준	공주대부설고	명지대 법학	32	2023.05. 폐지
반부패부 반부패1과장	2023.05.	윤병준	공주대부설고	명지대 법학	32	신설
	2023.09.	김영철	목포 영흥고	서울대 공법학	33	
	2024.06.	이승형	-	서울대 국제경제	34	
반부패부 반부패2과장	2023.05.	이승형	-	서울대 국제경제	34	신설
	2024.06.	채희만	-	서울대 법학	35	
반부패부 반부패3과장	2023.05.	(검) 윤병준	공주대부설고	명지대 법학	32	신설 ⁸⁴
	2023.09.	김민아	-	부산대 사법학	34	
	2024.06.	소정수	-	-	36	
마약·조직범죄부 부장○	2023.05.	박재익	진주 대아고	한양대 법학	29	신설
	2023.09.	박영빈	부천고	고려대 법학	30	
	2024.05.	노만석	창녕 대성고	성균관대 법학	29	
마약·조직범죄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2023.05.	(검) 강성용	순천고	서울대 정치학	31	신설 ⁸⁵
	2023.09.	안병수	서울 오금고	연세대 경제학	32	
	2024.06.	신준호	대구 계성고	경북대 법학	33	
반부패·강력부 마약·조직범죄과장	2022.07.	김보성	-	-	35	2023.05. 폐지

⁸⁴ 2023.05. 신설 후 공석으로 윤병준 대검찰청 반부패부 반부패1과장이 겸직

⁸⁵ 2023.05. 신설 후 공석으로 강성용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이 겸직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마약·조직범죄부 마약과장	2023.05.	김보성	-	-	35	신설
	2023.09.	박경섭	-	-	35	
	2024.06.	이태순	-	-	36	
마약·조직범죄부 조직범죄과장	2023.05.	(겸) 김보성	-	-	35	신설 ⁸⁶
	2023.09.	이태순	-	-	36	
	2024.06.	최재만	-	-	36	
마약·조직범죄부 범죄수익환수과장 (구 반부패·강력부 범죄수익환수과장)	2022.07.	박건욱	-	-	34	
	2023.09.	국원	-	-	36	
	2024.06.	김정환	-	-	37	
형사부 부장○	2022.06.	황병주	익산 남성고	서울대 법학	29	
	2023.09.	박세현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학	29	
	2024.05.	이진수	서울 영동고	서울대 사법학	29	
형사부 형사1과장	2022.07.	임일수	-	-	33	
	2023.09.	이준호	-	-	34	
	2024.06.	이희찬	-	-	35	
형사부 형사2과장	2022.07.	임선화	-	고려대 법학	34	
	2023.09.	손정숙	-	-	35	
	2024.06.	김주현	-	-	36	
형사부 형사3과장	2022.07.	김도연	서울 구정고	연세대 법학	34	
	2023.09.	김지용	-	-	35	
	2024.06.	윤원일	-	-	36	
형사부 형사4과장	2022.07.	원신혜	대구 신명여고	경북대 법학	35	
	2023.09.	박윤희	-	서울대 천문학	36	
	2024.06.	박지나	-	-	37	
공공수사부(구公安부) 부장○	2022.05.	김유철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학	29	
	2023.09.	박기동	대구 영남고	고려대 법학	30	
	2024.05.	김태은	서울 경기고	서울대 사법학	31	
공공수사부 공공수사기획관 (구公安기획관)	2023.05.	김태은	서울 경기고	서울대 사법학	31	신설
	2023.09.	이희동	서울 중동고	서울대 경영학	32	
	2024.06.	김중현	-	-	33	
공공수사부公安수사지원과장 (구公安1과장)	2022.07.	차범준	춘천고	고려대 법학	33	
	2023.09.	이찬규	서울 대성고	서울대 공법학	34	
	2024.06.	홍승표	-	-	35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 (구公安2과장)	2022.07.	이찬규	서울 대성고	서울대 공법학	34	
	2023.09.	김태훈	-	-	35	
	2024.06.	송봉준	-	-	36	
공공수사부 노동수사지원과장	2022.07.	조민우	-	-	34	
	2023.09.	이병주	-	-	35	

⁸⁶ 2023.05. 신설 이후 공식으로 김보성 마약·조직범죄부 마약과장이 겸직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공판송무부 부장○	2024.06.	이재만	-	-	36	
	2022.06.	김선화	서울 성신여고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30	
	2023.09.	정유미	-	서울대 교육학	30	
	2024.05.	정희도	-	연세대 법학	31	
공판송무부 공판1과장	2022.07.	조아라	-	연세대 법학	34	
	2023.09.	조영희	-	서울대 경제학	35	
	2024.06.	박종선	-	-	36	
공판송무부 공판2과장	2022.07.	김상민	창원 경상고	서울대 법대	35	
	2023.09.	박향철	-	-	36	
	2024.06.	국진	서울 이화외고	연세대 법학	37	
과학수사부 부장○	2022.06.	정진우	서울 단대부고	서울대 사법	29	
	2023.09.	박현준	서울 고려대부고	고려대 법학	30	
	2024.05.	허정	서울 남강고	연세대 경제학	31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장	2022.07.	이춘	-	-	33	
	2023.09.	박진성	-	-	34	
	2024.06.	박건영	-	-	36	
과학수사부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2022.07.	정현	-	고려대 법학	35	
	2023.09.	나하나	-	-	36	
	2024.06.	방지형	-	-	37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장	2022.07.	김익수	-	-	35	
	2023.09.	이상혁	-	-	36	
	2024.06.	호승진	-	-	37	
과학수사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 (구 사이버수사과장)	2022.07.	안동건	-	-	35	
	2023.09.	박경택	-	-	36	명칭변경
	2024.06.	이지연	-	-	37	
감찰부 감찰부장○	2019.10.	한동수	대전 대신고	서울대 법학	16	2022.07. 사퇴
	2022.07.	공석 ⁸⁷				
	2022.11.	이성희	-	고려대 법학	25	검찰 출신 변호사
	2024.11.	공석 ⁸⁸				
감찰부 감찰1과장	2025.05.	김성동	경북 경산고	고려대 법학	31	
	2022.05.	정희도	-	연세대 법학	31	
	2023.09.	유광렬	서울 경성고	서울대 경제학	33	
감찰부 감찰2과장	2024.06.	손상욱	-	-	34	
	2022.07.	장재완	-	-	34	
	2023.09.	이완희	-	-	34	
감찰부 감찰3과장	2024.06.	이유선	-	-	34	
	2022.05.	배문기	부산대사대부고	연세대 법학	32	

⁸⁷ 2022.07. 한동수 감찰부장 사퇴 이후 2022.11.까지 공석

⁸⁸ 2024.11. 이성희 전 감찰부장 임기 만료 후 2025.05.까지 공석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구 특별감찰단)	2023.09.	장재완	-	-	34	
	2024.06.	김윤용	-	-	35	
감찰부 특별감찰팀장	2022.07.	김윤용	-	-	35	대검 검찰연구관
	2023.09.	박수민	-	-	37	대검 검찰연구관
	2024.06.	신기련	-	-	37	대검 검찰연구관
	2025.02.	공석 ⁸⁹				
양형정책관	2022.07.	강선주	-	-	35	대검 검찰연구관
	2023.09.	정현주	-	-	36	대검 검찰연구관
	2024.06.	장유강	-	-	37	대검 검찰연구관
검찰연구관 ⁹⁰	2022.02.	이한울	-	-	38	
	2022.02.	조아라	-	-	38	
	2022.07.	강선주	-	-	35	양형정책관
	2022.07.	김윤용	-	-	35	특별감찰단 팀장
	2022.07.	김명옥	-	-	36	
	2022.07.	김해밝은	-	-	40	
	2022.07.	김한울	-	-	41	
	2022.07.	서소희	-	-	41	
	2022.07.	정종원	-	-	41	
	2022.07.	김희동	-	-	변시1	
	2022.07.	박찬영	-	-	변시1	
	2022.07.	장영준	-	-	변시1	
	2022.07.	문재웅	-	-	42	
	2022.07.	임수민	-	-	42	
	2023.02.	김가람	-	-	37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겸직 (22.7~23.2)
	2023.02.	김상현	-	-	37	인천지검 부부장 겸직 (22.7~23.2)
	2023.02.	김진혁	-	-	37	대전지검 부부장 겸직 (22.7~23.2)
	2023.02.	박지나	-	-	37	광주지검 부부장 겸직 (22.7~23.2)
	2023.02.	송규영	-	-	37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겸직 (22.7~23.2)
	2023.02.	심형석	-	-	37	부산지검 부부장 겸직 (22.7~23.2)
	2023.02.	이태협	-	-	37	제주지검 부부장 겸직 (22.7~23.2)
	2023.02.	최정민	-	-	37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겸직 (22.7~23.2)
	2023.09.	정현주	-	-	36	양형정책관
	2023.09.	박수민	-	-	37	특별감찰팀장

⁸⁹ 2025.02. 신기련 전 특별감찰팀장 영동지청장으로 이동하며 공석

⁹⁰ 검찰연구관은 평검사급도 임명되는 경우가 있으나 여기서는 고검검사급 이상을 수록하며, 겸직으로 비직제기구에 임명된 경우 비고란에 표기함.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2023.09.	김성태	-	-	38	
	2023.09.	신영민	-	-	40	
	2023.09.	이상민	-	-	40	
	2023.09.	진종규	-	-	40	
	2023.09.	오승환	-	-	41	
	2023.09.	윤희정	-	-	41	
	2023.09.	이선화	-	-	41	
	2023.09.	이희준	-	-	41	
	2023.09.	이종민	-	-	변시1	
	2023.09.	이형석	-	-	변시1	
	2023.09.	임상규	-	-	변시1	
	2023.09.	박중화	-	-	42	
	2023.09.	장지영	-	-	42	
	2023.09.	김준호	-	-	38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경직 (23.9~24.2)
	2023.09.	차호동	-	-	38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경직 (23.9~24.2) 현직
	2023.09.	김진용	-	-	38	인천지검 부부장 경직 (23.9~24.2) 현직
	2023.09.	김한민	-	-	38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경직 (23.9~24.2) 현직
	2023.09.	엄영욱	-	-	38	수원지검 부부장 경직 (23.9~24.2) 현직
	2023.09.	이경민	-	-	38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경직 (23.9~24.2) 현직
	2023.09.	차경자	-	-	38	성남지청 부부장 경직 (23.9~24.2) 현직
	2024.02.	김영석	-	-	변시1	현직
	2024.02.	김준호	-	-	38	현직
	2024.02.	김민정	-	-	39	현직
	2024.02.	이선기	-	-	39	현직
	2024.02.	윤신명	-	-	변시1	현직
	2024.02.	김승곤	-	-	42	현직
	2024.02.	임진철	-	-	42	
	2024.02.	이경아	-	-	변시2	현직
	2024.02.	이한별	-	-	변시2	
	2024.02.	김수지	-	-	43	
	2024.06.	신기련	-	-	37	특별감찰팀장 현직
	2024.06.	장유강	-	-	37	양형정책관 현직
	2024.09.	박신영	-	-	40	현직
	2024.09.	김은혜	-	-	41	현직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2024.09.	박한나	-	-	41	현직
	2024.09.	양준석	-	-	41	현직
	2025.02.	이건표	-	-	38	현직
	2025.02.	김성훈	-	-	39	현직
	2025.02.	김경완	-	-	변시1	현직
	2025.02.	이승우	-	-	변시1	현직
	2025.02.	나상돈	-	-	42	현직
	2025.02.	이성화	-	-	42	현직
	2025.02.	이은우	-	-	42	현직
	2025.02.	정혁	-	-	42	현직
	2025.02.	김현곤	-	-	변시2	현직
	2025.02.	이동훈	-	-	43	현직
	2025.02.	전종택	-	-	43	현직
	2025.02.	윤장훈	-	-	44	현직

서울고등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검사장◎	2022.05.	김후곤	서울 경동고	동국대 법학	25	
	2022.09.	공석 ⁹¹				
	2023.09.	이주형	대구 경원고	고려대 법학	25	
	2024.05.	임관혁	대전 보문고	서울대 사회학	26	
	2024.09.	박세현	서울 현대고	서울대 사법학	29	
차장○	2022.06.	노만석	창녕 대성고	성균관대 법학	29	검사장 직무대리
	2023.09.	이종현	서울 선덕고	서울대 법학	30	
	2024.05.	박현철	통영고	고려대 법학	31	
인권보호관	2022.07.	이은강	-	-	30	
	2023.03.	전미화 (代)	-	-	30	
	2023.09.	김남순 (代)	-	-	30	
	2024.06.	윤상민	-	-	32	
형사부 부장	2022.07.	박세현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학	29	
	2023.09.	장동철	강원 횡성고	서울시립대 법학	30	
	2024.05.	공석 ⁹²				
공판부 부장	2024.06.	차순길	-	연세대 법학	31	
	2022.07.	박지영	-	연세대 법학	29	
	2023.09.	박찬록	-	서울대 국어국문	30	
송무부 부장	2024.06.	강성용	순천고	서울대 정치학	31	
	2022.07.	손준성	대구 경북고	서울대 사법학	29	
	2023.09.	김윤섭	-	연세대 법학	30	
감찰부 부장	2024.06.	이덕진	서울 남강고	서울대 생물교육	31	
	2022.07.	최호영	부천고	고려대 법학	29	
	2023.09.	최재민	경산 무학고	성균관대 법학	30	
	2024.06.	최지석	-	-	31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검사장○	2022.05.	송경호	서울 중동고	서울대 법학	29	
	2024.05.	이창수	서울 대원고	성균관대 법학	30	2025.06. 사직
1차장	2022.07.	성상현	서울 영동고	서울대 공법학	30	
	2023.09.	김창진	대구 경북고	경북대 법학	31	
	2024.06.	박승환	-	-	32	
2차장	2022.05.	박영진	-	고려대 법학	31	
	2023.09.	박현철	통영고	고려대 법학	31	

⁹¹ 2022.09.부터 2023.09.까지 서울고검 검사장 공석으로 노만석 차장이 직무대리

⁹² 2024.05.장동철 형사부장 제주지검 검사장으로 이동하며 2024.06.까지 공석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3차장	2024.05.	공석 ⁹³				
	2024.06.	공봉숙	-	서울대 지구과학교육학	32	
	2022.05.	박기동	대구 영남고	고려대 법학	30	
	2023.09.	김태은	서울 경기고	서울대 사법학	31	
	2024.05.	공석 ⁹⁴				
4차장	2024.06.	이성식	-	-	32	
	2022.05.	고형곤	부산 동아고	부산대 행정학	31	
	2024.05.	공석 ⁹⁵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⁹⁶	2024.06.	조상원	-	건국대 법학	32	2025.06. 사직
	2022.07.	이환기	서울 대원외고	서울대 법학	31	
	2023.09.	김형주	-	-	32	
	2024.06.	민영현	-	-	33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단장	2021.06.	위성운	서울 휘문고	서울시립대 행정학	18	
	2023.09.	백찬하	-	-	18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2022.07.	김정호	인천 제물포고	연세대 법학	29	
	2022.07.	반종욱	-	-	32	
	2023.09.	류지열	-	-	29	
	2023.09.	이준식	-	-	31	
	2023.09.	김제성	-	-	33	현직
	2024.06.	박소영	-	-	27	현직
	2024.06.	김종호	-	-	31	현직
	2024.06.	이영준	-	-	31	현직
	2024.06.	김기윤	서울 서문여고	고려대 법학	32	
	2022.02.	김영태	-	-	19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단장	2024.06.	김기준	-	-	23	
	2022.07.	이세진	-	-	31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2022.07.	채수양	-	-	32	
	2022.07.	최원석	-	-	32	
	2023.09.	김용균	-	-	30	
	2023.09.	김진호	-	-	33	
	2023.09.	신혜진	-	-	33	현직
	2024.06.	최영의	-	-	28	현직
	2024.06.	신교임	-	-	29	현직
	2024.06.	김정현	-	-	32	
	2024.06.	주민철	-	-	32	현직

⁹³ 2024.05. 박현철 2차장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하며 2024.06.까지 공석

⁹⁴ 2024.05. 김태은 3차장 대검 공공수사부 부장으로 이동하며 2024.06.까지 공석

⁹⁵ 2024.05. 고형곤 4차장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하며 2024.06.까지 공석

⁹⁶ 2017.08. 일선 검찰청 인권감독관이 고검 소재 5개 지검(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2018.07.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인천·수원지검에, 2019.08. 울산·창원지검에, 2020.01.

춘천·청주·전주·제주지검에까지 설치됨으로써 18개 모든 지검으로 확대됐음. 또한 2020.08.에는 수도권 5개 자치지청(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에도 설치됐음. 이후 2021.06. 인권보호관으로 확대개편됨.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형사1부 부장	2022.07.	박혁수	순천고	서울대 전기공학	32	
	2023.09.	김승호	서울 영동고	서울대 공법학	33	
형사2부 부장	2022.07.	권유식	서울 영훈고	고려대 법학	33	
	2023.09.	손정현	-	-	34	
	2024.06.	조아라	-	연세대 법학	34	
형사3부 부장	2022.07.	김수민	순천고	서울대 사법	33	
	2023.09.	조석균	-	-	34	
	2024.06.	최순호	순천고	고려대 법학	35	
형사4부 부장	2022.07.	신대경	경북대부속고	연세대 법학	32	
	2023.09.	이유선	-	-	34	
	2024.06.	정현	-	고려대 법학	35	
형사5부 부장	2022.07.	최우영	-	-	33	
	2023.09.	이준동	-	-	34	
	2024.06.	김태현	-	서울대 영문학	35	
형사6부 부장	2022.07.	공복숙	-	서울대 지구과학교육학	32	
	2023.09.	정지은	광주여고	전남대 법학	34	
	2024.06.	조영희	-	서울대 경제학	35	
형사7부 부장	2022.07.	성상욱	-	-	32	
	2023.02.	김형석	-	-	32	
	2023.09.	박건욱	-	-	34	
	2024.06.	권성희	-	경북대 법학	34	
형사8부 부장	2022.07.	김형석	-	-	32	
	2023.02.	구태연	천안 복자여고	고려대 법학	32	
	2023.09.	홍완희	-	-	34	
	2024.06.	장재완	-	-	34	
형사9부 부장	2022.07.	구태연	천안 복자여고	고려대 법학	32	
	2023.02.	김현아	-	-	33	
	2023.09.	김상민	창원 경상고	서울대 법대	35	
	2023.12.	공석 ⁹⁷				
	2024.02.	박성민	-	-	34	
국제범죄수사부 부장 (구 형사11부)	2022.07.	나욱진	-	-	33	개편
	2023.09.	이지형	-	-	33	
	2024.06.	홍용화	-	-	35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부장 (구 형사12부)	2022.07.	이성범	-	-	34	개편
	2023.09.	이춘	-	-	33	
	2024.06.	안동건	-	-	35	
중요범죄조사부 부장 (구 형사14부 ⁹⁸)	2022.07.	조광환	남대전고	연세대 법학	32	개편
	2023.09.	이일규	-	-	34	
	2024.06.	어인성	-	-	35	

⁹⁷ 2023.12. 김상민 부장검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한 인사조치로 2024.02.까지 공석

⁹⁸ 2021.07. 조사1부와 조사2부를 통합해 신설됨.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공공수사1부 (구 공안1부)	2022.07.	이희동	서울 중동고	서울대 경영학	32	개편
	2023.09.	김종현	-	-	33	
	2024.06.	이찬규	서울 대성고	서울대 공법학	34	
공공수사2부 부장 (구 공안2부)	2022.07.	이상현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33	
	2023.09.	정원두	-	-	34	
	2024.06.	조민우	-	-	34	
공공수사3부 부장 (구 공공형사수사부 → 형사10부)	2022.07.	이준범	-	-	33	
	2023.09.	임삼빈	광주 전남고	성균관대 법학	34	
	2024.06.	김태훈	-	-	35	
공판1부 부장	2022.07.	김현아	-	-	33	
	2023.02.	최혁	서울 광양고	서울대 법학	33	
	2023.09.	백수진	-	-	33	
공판2부 부장	2024.06.	박은혜	서울 동덕여고	이화여대 법학	35	
	2022.07.	김윤선	-	-	33	
	2023.09.	김해경	-	-	34	
공판3부 부장	2024.06.	강선주	-	-	35	
	2022.07.	이정렬	서울 상문고	서울대 법학	33	
	2023.09.	임선화	-	고려대 법학	34	
공판4부 부장	2024.06.	주혜진	-	-	35	
	2022.07.	최대건	-	-	34	
	2023.02.	강민정	-	-	34	
공판5부 부장	2024.06.	김은미	-	-	36	
	2022.07.	김민아	-	부산대 사법학	34	
	2023.09.	유민종	-	-	36	
공정거래조사부 부장 ⁹⁹	2024.06.	정일권	-	-	37	
	2022.07.	이정섭	서울 대일고	연세대 법학	32	개편
	2023.09.	용성진	서울 석관고	서울대 경영학	33	
조세범죄조사부 부장 (구 형사13부)	2024.06.	김용식	-	서울대 경제학	34	
	2022.07.	민경호	-	-	33	
	2023.09.	박현규	-	-	34	
반부패수사1부 부장 (구 반부패·강력수사1부)	2024.06.	이진용	-	-	35	
	2022.07.	엄희준	대구 영신고	서울대 경제학	32	
	2023.09.	강백신	진주 동명고	서울대 인류학	34	
반부패수사2부 부장 (구 반부패강력수사2부)	2024.06.	이준동	-	-	34	
	2022.07.	김영철	목포 영흥고	서울대 공법학	33	
	2023.09.	최재훈	서울 구정고	서울대 법학	34	
반부패수사3부 부장 (구 특수3부→경제범죄형사부)	2022.07.	강백신	진주 동명고	서울대 인류학	34	
	2023.09.	김용식	-	서울대 경제학	34	
	2024.06.	이승학	-	-	36	
강력범죄수사부 부장	2022.07.	신준호	대구 계성고	경북대 법학과	33	개편

⁹⁹ 2018.02.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분리하여 설치함.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구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2023.09.	김연실	-	-	34	
	2024.06.	김보성	-	-	35	
범죄수익환수부 부장	2022.07.	임세진	-	-	34	
	2023.09.	이희찬	-	-	35	
	2024.06.	유민중	-	-	36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	2022.07.	김은미	-	-	33	폐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 부장	2022.12.	김은미	-	-	33	분리개편
	2023.09.	장혜영	-	-	34	
	2024.06.	김지혜	-	-	35	
여성아동범죄조사2부 부장	2023.02.	김봉준	-	-	33	분리개편
	2023.09.	원신혜	대구 신명여고	경북대 법학	35	
	2024.06.	박윤희	-	서울대 천문학	36	
인권보호부장	2022.07.	유도윤	서울 광성고	고려대 법학	32	
	2023.02.	성상욱	-	-	32	
	2023.09.	임일수	-	-	33	
부장	2024.06.	김남훈	-	-	33	
	2022.07.	임세호	-	-	32	
	2023.09.	한진희	-	-	33	
	2024.06.	황현아	-	-	3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검사장○	2022.06.	임관혁	대전 보문고	서울대 사회학	26	
	2023.09.	황병주	익산 남성고	서울대 법학	29	
	2024.05.	박세현	서울 현대고	서울대 사법학	29	
	2024.09.	양석조	제주 오현고	한양대 법학	29	
차장	2022.07.	전무곤	대구 경북고	고려대 법학	31	
	2023.09.	성상욱	-	-	32	
	2024.06.	이동균	대구 계성고	서울대 사법학	33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2022.07.	김종철	-	-	31	
	2023.09.	이만흠	공주대부고	서울대 대기과학	32	
	2024.06.	손진욱	-	-	33	
	2025.02.	이정배 (代)	-	-	34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2020.08.	임채원	-	-	19	
	2023.02.	이중제	-	-	22	
	2023.09.	고병민	-	-	23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2022.07.	전계광	-	-	30	
	2022.07.	김원학	-	-	31	
	2022.07.	변수량	-	-	32	
	2023.02.	공태구	-	-	31	현직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형사1부 부장	2023.09.	정지영	-	-	24	현직
	2023.09.	박광현	-	-	32	
	2023.09.	이영규	-	-	32	
	2024.06.	윤철민	-	-	30	현직
	2024.06.	이현철	대구 영신고	고려대 법학	25	현직
	2024.06.	정재현	-	-	32	현직
	2024.06.	최성국	-	-	30	현직
	2022.07.	김남훈	-	-	33	
	2023.09.	김영남	전북 고창고	서울대 지구과학교육	34	
	2024.03.	이정배	-	-	34	
형사2부 부장	2022.07.	이용균	-	-	34	
	2023.09.	박명희	-	-	34	
	2024.06.	송영인	-	-	35	
	2025.06.	최수봉	-	-	36	
형사3부 부장	2022.07.	황현아	-	-	34	
	2023.09.	김희영	-	-	35	
	2024.06.	김지용	-	-	35	
형사4부 부장	2022.07.	강민정	-	-	34	
	2023.02.	김승걸	-	-	35	
	2024.06.	조윤철	-	-	36	
형사5부 부장	2022.07.	김해경	-	-	34	
	2023.09.	안창주	-	-	35	
	2024.06.	한문혁	-	-	36	
형사6부 부장	2022.07.	서현욱	-	-	35	
	2023.09.	최순호	순천고	고려대 법학	35	
	2024.06.	이상현	-	-	36	
공판부 부장	2022.07.	조영희	-	서울대 경제학	35	
	2023.09.	박대환	-	-	36	
	2024.06.	정현주	-	-	36	
	2025.02.	유정현	-	-	36	
사이버범죄수사부 부장 (구 사이버수사부→ 사이버범죄형사부)	2022.07.	이희찬	-	-	35	명칭변경
	2023.09.	김영미	-	-	35	
	2024.06.	심형석	-	-	37	
여성아동범죄조사부 ¹⁰⁰ 부장	2022.07.	장혜영	-	-	34	
	2023.09.	임유경	-	-	34	
	2024.06.	최나영	-	-	35	

¹⁰⁰ 2018.02. 수원, 인천, 서울 동·남·북·서부 등 6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신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검사장○	2022.05.	양석조	제주 오현고	한양대 법학	29	
	2023.09.	김유철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학	29	
	2024.05.	신응석	서울 영등포고	고려대 법학	28	
1차장	2022.07.	구상엽	서울 휘문고	서울대 사법학	30	
	2023.09.	박성민	서인천고	서울대 사법학	31	
	2024.06.	이희동	서울 중동고	서울대 경영학	32	
2차장	2022.07.	허정	서울 남강고	연세대 경제학	31	
	2023.09.	배문기	부산대사대부고	연세대 법학	32	
	2024.06.	김종우	-	-	33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2022.07.	김희경	-	-	31	
	2023.09.	황우진	-	서울대 법학	32	
	2024.06.	최현철	-	-	32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2021.07.	박철완	-	-	21	
	2024.06.	하충헌 (代)	-	-	23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2022.07.	박재영	-	-	28	
	2022.07.	윤철민	-	-	30	
	2023.09.	변창범	-	-	25	현직
	2023.09.	김영익	-	-	27	현직
	2023.09.	송연규	-	-	28	현직
	2023.09.	도상범	-	-	29	현직
	2023.09.	최원석	-	-	32	
	2023.09.	김진남	-	-	33	현직
	2024.06.	하충헌	-	-	23	현직
	2024.06.	황성연	-	-	30	현직
	2024.06.	정광일	-	-	31	현직
	2022.07.	이응철	-	-	33	
	2023.09.	김형원	-	-	34	
	2024.06.	이승훈	-	-	34	
형사2부 부장	2022.07.	권방문	-	-	33	
	2023.09.	강선주	-	-	35	
	2024.06.	박성민	-	-	34	
형사3부 부장	2022.07.	권현유	-	-	34	
	2023.09.	서원익	-	-	35	
	2024.06.	손상희	-	-	35	
형사4부 부장	2022.07.	조만래	부산 브니엘고	서울대 언론정보학	34	
	2023.09.	김정국	-	-	35	
	2024.06.	남수연	-	-	36	
형사5부 부장	2022.07.	박은혜	서울 동덕여고	이화여대 법학	35	
	2023.09.	허지훈	-	-	35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형사6부 부장	2024.06.	조재철	-	-	36	
	2022.07.	이준동	-	-	34	
	2023.09.	이재만	-	-	36	
공판부 부장	2024.06.	추창현	-	-	37	
	2022.07.	공준혁	-	서울대 정치학	35	
	2023.09.	이재연	서울 현대고	서울대 경영학	36	
금융조사1부 부장	2024.06.	최선경	-	이화여대 법학	35	
	2022.07.	이승형	-	서울대 국제경제	34	101
	2023.09.	권찬혁	-	-	35	
금융조사2부 부장	2024.06.	김수홍	-	-	35	
	2022.07.	채희만	-	서울대 법학	35	
	2023.09.	박건영	-	-	36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	2024.06.	장대균	-	-	37	
	2025.02.	김수홍 (代)	-	-	35	
	2022.07.	안성희	-	-	34	
인권보호부 부장	2023.09.	최재아	-	-	34	
	2024.06.	강정영	-	-	35	
	2022.07.	최영아	서울 서문여고	고려대 법학	32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¹⁰² 장	2023.09.	강석철	-	-	33	
	2024.06.	백수진	-	-	33	
	2025.02.	손진욱	-	-	33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2022.07.	단성한	서울 동성고	서울대 경제학	32	2022.05. 재출범
	2023.05.	단성한	서울 동성고	서울대 경제학	32	2023.05. 정식 직제화
	2023.09.	하동우	-	-	33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2024.06.	공준혁	-	서울대 정치학	35	
	2025.02.	안창주 (代)	-	-	35	
	2024.06.	박건욱	-	-	34	2025.02. 정식 직제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검사장○	2022.06.	정영학	부산 해동고	서울대 사법학	29	
	2023.09.	이진수	서울 영동고	서울대 사법학	29	
	2024.05.	정진우	서울 단대부고	서울대 사법학	29	
차장	2022.07.	김형수	-	-	30	
	2023.09.	단성한	서울 동성고	서울대 경제학	32	
	2024.06.	김영철	목포 영흥고	서울대 공법학	33	

¹⁰¹ 2023.05.부터 공식으로 2023.09.까지 채희만 금융조사2부장이 직무대리

¹⁰² 2020.01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2022. 05 재출범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2022.07.	서인선	-	-	31	
	2023.09.	장윤택	대전고	서울대 법학	32	
	2023.09.	박광현	-	-	32	
	2024.06.	김봉준	-	-	33	
	2024.10.	임유경 (代)	-	-	34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2021.07.	권도욱	-	-	20	
	2024.06.	최용석	-	-	24	
	2025.03.	박혜경 (代)	-	-	30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2022.07.	최영의	-	-	28	
	2022.07.	최성국	-	-	30	
	2023.09.	김명수	마산 중앙고	한양대 법학	30	
	2023.09.	박혜경	-	-	30	현직
	2023.09.	유현정	전주 유일여고	연세대 영문학	31	현직
	2024.06.	이세진	-	-	31	현직
	2024.06.	남상관	-	-	30	
	2022.07.	이종민	-	-	32	
	2023.09.	장윤영	-	-	34	
	2024.06.	임유경	-	-	34	
형사2부 부장	2022.07.	이영화	-	-	33	
	2023.09.	김재혁	-	-	34	
	2024.06.	최준호	-	-	34	
형사3부 부장	2022.07.	이장우	-	-	33	
	2023.09.	신금재	-	-	35	
	2024.06.	박종민	-	-	35	
	2025.06.	황정임 (代)	-	-	36	
형사4부 부장	2022.07.	이완희	-	-	34	
	2023.09.	송정은	-	-	35	
	2024.06.	윤수정	-	-	36	
형사5부 부장	2022.07.	박경섭	-	-	35	
	2023.09.	천대원	-	-	36	
	2024.06.	박지훈	-	-	37	
조세범죄수사부 부장 (구 형사6부→조세범죄형사부)	2022.07.	정유리	-	-	35	명칭 변경
	2023.09.	용태호	-	-	36	
	2024.06.	안광현	-	-	35	
공판부 부장	2022.07.	김재화	-	-	35	
	2023.02.	오미경	-	-	35	
	2023.09.	박순애	-	-	36	
	2024.06.	황정임	-	-	36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	2022.07.	이선녀	-	-	35	
	2023.09.	구미옥	-	-	34	
	2024.06.	김재남	-	-	35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단장	2022.09.	유진승	서울 상문고	서울대 사법	33	2022.09 출범
	2023.09.	민경호	-	-	33	
	2024.06.	이일규	-	-	3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검사장○	2022.05.	한석리	제천고	한양대 법학	28	
	2023.09.	이진동	서울 경동고	연세대 생화학	28	
	2024.05.	김선화	서울 성신여고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30	
차장	2022.07.	변필건	여의도고	서울대 경영학	30	
	2023.09.	유태석	서울 대원외고	서울대 법학	32	
	2024.06.	신동원	-	-	33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2022.07.	김민형	-	-	31	
	2023.02.	유상민	-	-	32	
	2024.06.	조남철	-	-	32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2022.02.	정성윤	광주 송일고	고려대 법학	19	
	2024.02.	서종혁(代)	서울 휘문고	연세대 법학	26	
	2024.06.	전영준	부산 금성고	서울대 법학	29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2022.07.	서종혁	서울 휘문고	연세대 법학	26	
	2022.07.	배창대	-	-	29	
	2022.07.	황성연	-	-	30	
	2023.09.	조남철	-	-	32	
	2024.06.	강수산나	-	-	30	
	2024.06.	이상민	-	-	34	
형사1부 부장	2022.07.	김상현	-	-	33	
	2023.09.	박성민	-	-	34	
	2024.02.	허성환	-	-	34	
	2024.06.	조만래	부산 브니엘고	서울대 언론정보학	34	현직
	2022.07.	장소영	-	-	33	
	2023.09.	허성환	-	-	34	
형사2부 부장	2024.02.	최태은	-	-	35	
	2024.06.	추혜윤	진주 경해여고	고려대 법학	33	
	2022.07.	김창수	-	-	33	
형사3부 부장	2023.09.	권내건	-	-	35	
	2024.06.	김은하	-	-	35	
	2022.07.	주혜진	-	-	35	
형사4부 부장	2023.09.	유효제	-	-	35	
	2024.06.	여경진	-	-	36	
	2022.07.	이병주	-	-	35	
형사5부 부장	2023.09.	김정훈	-	-	36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공판부 부장	2024.06.	김종욱	-	-	37	
	2025.02.	하준호	-	-	37	
	2022.07.	이세희	-	-	35	
	2023.09.	정영주	-	-	36	
	2024.06.	김지영	-	-	36	
식품의약품범죄수사부 부장 (구 식품의약조사부 → 식품의약형사부 → 식품의약범죄형사부)	2022.07.	박혜영	-	-	34	명칭변경
	2023.09.	송명섭	-	-	35	
	2024.06.	박향철	-	-	36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	2022.07.	박종민	-	-	35	
	2023.09.	정현승	-	-	34	
	2024.06.	이정민	-	-	35	

의정부지방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검사장○	2022.06.	신응석	영등포고	고려대 법학	28	
	2023.09.	김선화	서울 성신여고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30	
	2024.05.	김성훈	서울 마포고	서울대 서어서문학	30	
차장	2022.07.	차순길	-	연세대 법학	31	
	2023.09.	윤병준	공주대부고	명지대 법학	32	
	2024.06.	하담미	부산 중앙여고	서울대 서어서문학	32	
	2022.07.	강범구	서울 휘문고	고려대 법학	31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2023.09.	김준섭	-	-	32	
	2024.06.	이종민	-	-	32	
	2021.07.	김기정	-	-	13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2023.02.	김대룡	-	-	28	
	2023.09.	김태광	-	-	21	
	2024.07.	공석 ¹⁰³				
	2022.07.	양성필	-	-	32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2022.07.	이동원	-	-	32	
	2023.09.	김종철	-	-	31	현직
	2023.09.	이성일	-	연세대 법학	31	
	2023.09.	김명운	-	-	32	
	2024.06.	김충한	-	-	24	현직
	2024.06.	최현기	-	-	23	현직
	2024.06.	박지용	-	-	34	현직
	2022.07.	원형문	-	-	33	
	2023.09.	김일권	-	-	34	
	2024.06.	조희영	-	-	34	
형사1부 부장	2022.07.	원형문	-	-	33	
	2023.09.	김일권	-	-	34	
	2024.06.	조희영	-	-	34	

¹⁰³ 2024.07. 김태광 단장 사퇴 이후 공석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형사2부 부장	2022.07.	최재봉	-	-	33	
	2023.09.	윤동환	-	-	34	
	2024.06.	장윤영	-	-	34	
형사3부 부장	2022.07.	유옥근	-	-	34	
	2023.09.	강호준	-	-	35	
	2024.06.	오미경	-	-	35	
형사4부 부장	2022.07.	홍용화	-	-	35	
	2023.09.	이상훈	-	-	36	
	2024.06.	장옥환	-	-	37	
환경범죄조사부 부장 (구 형사5부 ¹⁰⁴)	2022.07.	어인성	-	-	35	신설
	2023.09.	이호석	-	-	36	
	2024.06.	조철	-	-	37	
공판송무부 부장	2022.07.	남계식	-	-	35	
	2023.09.	고은별	-	-	36	
	2024.06.	조영성	-	-	36	
	2025.02.	장은희	-	-	36	

고양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장동철	강원 횡성고	서울시립대 법학	30	
	2023.09.	허정	서울 남강고	연세대 경제학	31	
	2024.06.	단성한	서울 동성고	서울대 경제학	32	
차장	2022.07.	안병수	서울 오금고	연세대 경제학	32	
	2023.09.	곽영환	서울 경희고	단국대 법학	33	
	2024.06.	임삼빈	광주 전남고	성균관대 법학	34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2022.07.	김성동	경북 경산고	고려대 법학	31	
	2023.09.	김상현	-	-	33	
	2024.06.	임삼빈(代)	광주 전남고	성균관대 법학	34	
형사1부 부장	2022.07.	최명균	-	-	33	
	2023.09.	김상균	-	-	34	
	2024.06.	김해중	-	-	35	
형사2부 부장	2022.07.	정보영	-	-	34	
	2023.09.	김재남	-	-	35	
	2024.06.	정영주	-	-	36	
형사3부 부장	2022.07.	황수연	-	-	35	
	2023.09.	조은수	-	-	36	
	2024.06.	이승희	-	-	37	
공판부 부장 (구 환경보건범죄전담부→형사4부)	2022.07.	장혜영	-	-	35	

¹⁰⁴ 구 공안부 → 구 공공수사부 → 구 형사6부 → 형사5부(2022.02.)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2023.09.	임연진	-	-	36	
	2024.06.	이주현	-	연세대 법학	37	

남양주시청¹⁰⁵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3.	구승모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	31	
	2023.02.	백재명	부산 동천고	서울대 법학	26	
	2024.06.	최영아	서울 서문여고	고려대 법학	32	
형사1부장	2022.03.	이찬규	서울 대성고	서울대 공법	34	
	2023.02.	손정숙	-	-	35	
	2023.09.	유정현	-	-	36	
	2024.06.	정혁준	-	-	35	
형사2부장	2022.03.	손정숙	-	-	35	
	2023.02.	한문혁	-	-	36	
	2023.09.	남대주	-	-	37	
	2024.06.	이재연	서울 현대고	서울대 경영학	36	

인천지방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검사장○	2022.06.	심우정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학	26	
	2023.09.	송강	서울 휘문고	고려대 법학	29	
	2024.05.	박재익	진주 대아고	한양대 법학	29	
1차장	2022.07.	박영빈	부천고	고려대 법학	30	
	2023.09.	김도완	대구 오성고	서울대 정치학	31	
	2024.06.	박혁수	순천고	서울대 전기공학	32	
2차장	2022.07.	서정식	배문고	고려대 법학	31	
	2023.09.	박주성	서울 한영외고	서울대 법학	32	
	2024.06.	차범준	춘천고	고려대 법학	33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2022.07.	김현	-	-	31	
	2023.09.	이환기	대원외국어고	서울대 법학	31	
	2023.09.	정지영 (代)	-	-	33	
	2024.06.	정지영	-	-	33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2021.07.	이종대	-	-	18	
	2024.06.	이승영	인천 광성고	한양대 법학	18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2022.07.	윤원상	-	-	29	
	2022.07.	장성철	-	-	30	

¹⁰⁵ 2022.3.1. 개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2022.07.	이영준	-	-	31	
	2022.07.	김종호	-	-	31	
	2023.09.	박영준	부천고	서울대 법학	29	현직
	2023.09.	정지영	-	-	33	
	2024.02.	정성윤	광주 송일고	고려대 법학	19	현직
	2024.06.	변수량	-	-	32	현직
	2024.06.	최두천	-	-	32	현직
	2024.06.	정광수	-	-	34	
형사1부 부장	2022.05.	주민철	-	-	32	
	2023.09.	이정배	-	-	34	
	2024.06.	유평호	-	-	34	
	2024.03.	이곤호	-	-	33	
형사2부 부장	2022.07.	위수현	-	-	33	
	2023.09.	최재준	-	-	34	
	2024.06.	김희영	-	-	35	
형사3부 부장	2022.07.	손정현	-	-	34	
	2023.09.	남계식	-	-	35	
	2024.06.	유효제	-	-	35	
형사4부 부장	2022.07.	김형원	-	-	34	
	2023.09.	이정민	-	-	35	
	2024.06.	용태호	-	-	36	
형사5부 부장	2022.07.	박성민	-	-	34	
	2023.09.	김은하	-	-	35	
	2024.06.	조은수	-	-	36	
형사6부 부장	2022.07.	손상욱	-	-	34	
	2023.09.	엄재상	-	-	35	
	2024.06.	최종필	-	-	36	
공판송무1부 부장 (구 공판송무부)	2022.07.	김재남	-	-	35	
	2023.09.	박혜란	-	-	35	
	2024.06.	노정옥	-	-	35	
공판송무2부 부장	2022.07.	장형수	-	-	35	
	2023.09.	김재성	-	-	36	
	2024.06.	장진성	-	-	37	
강력범죄수사부 부장 (구 강력부→강력범죄형사부)	2022.07.	김연실	-	-	34	명칭변경
	2023.09.	이영창	전북대부고	서울대 공법학	33	
	2024.06.	박성민	-	-	35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	2022.07.	구미옥	-	-	34	
	2023.09.	장일희	-	-	35	
	2024.06.	정희선	-	-	36	
국제범죄수사부 부장 (구 외사부→외사범죄형사부)	2022.07.	김태형	-	-	35	명칭변경
	2023.02.	강석철	-	-	33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인권보호부 부장	2023.09.	김지연	-	-	36	
	2023.11.	정유선	서울 숙명여고	고려대 법학	36	
	2022.07.	김지완	-	-	32	
	2023.09.	김은미	-	-	33	
	2024.06.	이곤호	-	-	33	

부천시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주상용	-	-	29	
	2023.09.	차순길	-	연세대 법학	31	
	2024.06.	엄희준	대구 영신고	서울대 경제학	32	
차장	2022.07.	김용자	-	한국외대 중국어	32	
	2023.09.	권유식	서울 영훈고	고려대 법학	33	
	2024.06.	김동희	광주 전남여고	한양대 교육공학	34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2022.07.	김원호	-	-	32	
	2023.09.	권유식(代)	서울 영훈고	고려대 법학	33	
	2024.06.	김동희(代)	광주 전남여고	한양대 교육공학	34	
형사1부 부장	2022.07.	백승주	-	-	34	
	2023.09.	오기찬	-	-	34	
	2024.06.	박혜란	-	-	35	
형사2부 부장	2022.07.	허준	-	-	34	
	2023.09.	이선녀	-	-	35	
	2024.06.	황성민	서울 한성고	고려대 법학	35	
형사3부 부장	2022.07.	김해중	-	-	35	
	2023.09.	박상수	-	-	36	
	2024.06.	문지석	-	-	36	
공판부 부장 (구 형사4부)	2022.07.	홍승헌	-	서울대 외교학	35	
	2023.09.	이유현	-	-	36	
	2024.06.	최혜경	-	-	37	

춘천지방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검사장○	2022.06.	예세민	대구 오성고	서울대 법학	28	
	2023.09.	정진우	단대부고	서울대 사법	29	
	2024.05.	이영림	강릉여고	이화여대 법학	30	
차장	2022.07.	진정길	경북대 사대부고	연세대 법학	31	
	2023.09.	하담미	부산 중앙여고	서울대 서어서문학	32	
	2024.06.	장준호	서울 상문고	고려대 법학	33	
인권보호관	2022.07.	유현정	전주 유일여고	연세대 영문학	31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구 인권감독관)	2023.09.	임세호	서울 장훈고	고려대 법학	32	
	2024.06.	최현	서울 광양고	서울대 법학	33	
형사1부 부장	2022.07.	추혜윤	진주 경해여고	고려대 법학	33	
	2023.09.	조만래	부산 브니엘고	서울대 언론정보학	34	
형사2부 부장	2024.06.	오세문	서울 청량고	서울대 경제학	34	
	2022.07.	민병권	-	-	34	
	2022.07.	김상균	-	-	34	
	2023.09.	한상훈	대전 보문고	서울대 법학	35	
	2024.06.	홍승현	-	서울대 외교학	35	

강릉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서정민	대구 덕원고	서울대 사법학	31	
	2023.09.	문영권	-	한양대 법학	31	
	2024.06.	이정렬	서울 상문고	서울대 법학	33	
형사부 부장	2022.07.	이재연	서울 현대고	서울대 경영학	36	
	2023.09.	국진	이화외고	연세대 법학	37	
	2024.06.	문하경	광주 전남여고	전남대 법학	37	

원주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이정봉	-	-	30	
	2023.09.	김호삼	-	연세대 법학	31	
	2024.06.	정지은	광주여고	전남대 법학	34	
형사1부 부장	2022.07.	황성민	서울 한성고	고려대 법학	35	
	2023.09.	신건호	-	고려대 법학	35	
	2024.06.	장인호	인천 대인고	인하대 법학	36	
	2025.02.	류주태(代)	서울 성보고	연세대 법학	37	
형사2부 부장	2022.07.	정가진	서울 동덕여고	이화여대 법학	36	
	2023.09.	이주현	-	연세대 법학	37	
	2024.06.	류주태	서울 성보고	연세대 법학	37	

속초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오종렬	-	-	34	
	2023.09.	정현	-	고려대 법학	35	
	2024.06.	원신혜	대구 신명여고	경북대 법학	35	

영월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신태훈	-	-	34	
	2023.02.	송준구	청주 청석고	충북대 경영학	36	
	2024.06.	김현우	부산 사직고	고려대 법학	36	

수원고등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검사장◎	2022.06.	이주형	대구 경원고	고려대 법학	25	
	2023.09.	변필건 (代)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경영학	30	
	2024.05.	권순정	서울 단대부고	서울대 법학	29	
차장○	2022.06.	문성인	-	-	28	
	2023.09.	변필건	여의도고	서울대 경영학	30	
	2024.05.	고형곤	부산 동아고	부산대 행정학	31	
인권보호관	2022.06.	한윤경 (代)	-	-	30	
	2023.09.	정희원 (代)	-	-	28	
	2024.06.	박윤석 (代)	-	-	29	

수원지방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검사장○	2022.05.	홍승욱	서울 오금고	연세대 법학	28	
	2023.09.	신봉수	전주 영생고	건국대 법학	29	
	2024.05.	김유철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학	29	
1차장	2022.07.	박찬록	-	서울대 국어국문	30	
	2023.09.	강성용	순천고	서울대 정치학	31	
	2024.06.	배문기	부산대사대부고	연세대 법학	32	
2차장	2022.07.	김형록	-	-	31	
	2022.09.	김영일	광주 살레시오고	성균관대 법학	31	
	2023.09.	이정섭	서울 대일고	연세대 법학	32	
	2023.11.	안병수 (代)	서울 오금고	연세대 경제학	32	106
	2024.06.	안병수	서울 오금고	연세대 경제학	32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2022.07.	박광현	-	-	32	
	2023.09.	김종호	-	-	31	
	2024.06.	황우진	-	서울대 법학	32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2022.07.	이용민	-	-	21	
	2024.06.	서종혁	서울 휘문고	연세대 법학	26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2022.07.	박찬일	-	-	24	
	2022.07.	조남철	-	-	32	
	2022.07.	이주영	-	-	32	
	2023.09.	강남수	-	-	31	현직
	2023.09.	김은심	-	-	31	현직
	2024.06.	양요안	-	-	27	현직
	2024.06.	이종찬	-	-	31	현직
형사1부 부장	2024.06.	윤재슬	-	-	33	현직
	2022.07.	손진욱	-	-	33	

¹⁰⁶ 2023.11.27. 이정섭 검사 대전고검 전보(12.1. 탄핵안 국회 가결)로 안병수 검사 직무대리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2023.09.	오종렬	-	-	34	
	2024.06.	손정현	-	-	34	
	2025.02.	박준영	-	-	34	
형사2부 부장	2022.07.	양선순	-	-	33	
	2023.09.	유옥근	-	-	34	
	2024.06.	정현승	-	-	34	
형사3부 부장	2022.07.	김성원	-	-	34	
	2023.09.	정화준	-	-	35	
	2024.06.	이동현	-	-	35	
형사4부 부장	2022.07.	국상우	-	-	34	
	2023.09.	홍승현	-	-	35	
	2024.06.	김정국	-	-	35	
형사5부 부장	2022.07.	장윤영	-	-	34	
	2023.09.	이정화	-	-	36	
	2024.06.	천대원	-	-	36	
형사6부 부장 (구 특수부)	2022.07.	김영남	-	-	34	
	2023.09.	서현욱	-	-	35	
공공수사부 부장 (구 공안부)	2022.07.	정원두	-	-	34	
	2023.09.	김동희	-	-	34	
	2024.06.	허훈	-	-	35	
공판부 부장 (구 공판송무부)	2022.07.	최나영	-	-	35	
	2023.02.	김제성	-	-	33	
	2023.09.	남수연	-	-	36	
	2024.06.	김은경	-	-	36	
공판1부 부장 ¹⁰⁷	2025.02.	김은경	-	-	36	명칭변경
공판2부 부장	2025.02.	김은경 (代)	-	-	36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부장 (구 산업기술범죄수사부 →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	2022.07.	박진성	-	-	34	
	2023.09.	안동건	-	-	35	
	2024.06.	박경택	-	-	36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	2022.07.	김봉준	-	-	33	
	2023.02.	최나영	-	-	35	
	2024.06.	장진영	-	-	36	
인권보호부 부장	2022.07.	장윤태	대전고	서울대 법학	32	
	2023.09.	추혜윤	진주 경해여고	고려대 법학	33	
	2024.06.	한지희	-	-	33	

¹⁰⁷ 2025년 2월 조직 개편에 따라 공판1, 2부로 분리.

성남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이창수	서울 대원고	성균관대 법학	30	
	2023.09.	전무곤	대구 경북고	고려대 법학	31	
	2024.06.	서정식	서울 배문고	고려대 법학	31	
차장	2022.07.	조상원	-	-	32	
	2023.09.	박규형	서울 대원외고	고려대 법학	33	
	2024.06.	강백신	진주 동명고	서울대 인류학	34	
인권보호관	2022.07.	김명운	-	-	32	
	2023.09.	박규형 (代)	서울 대원외고	고려대 법학	33	
	2024.06.	강백신 (代)	진주 동명고	서울대 인류학	34	
형사1부 부장	2022.07.	김영오	-	-	34	
	2023.09.	허훈	-	-	35	
	2024.06.	송준구	청주 청석고	충북대 경영학	36	
형사2부 부장	2022.07.	송정은	-	-	35	
	2023.09.	황정임	-	-	36	
	2024.06.	박순애	-	-	36	
형사3부 부장	2022.07.	유민중	-	-	36	
	2023.09.	하준호	-	-	37	
	2024.06.	강성기	-	-	37	
공판부 부장	2022.07.	한상훈	대전 보문고	서울대 법학	35	
	2023.09.	여경진	-	-	36	
	2024.06.	박인우	-	-	37	

여주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이형관	-	-	29	
	2023.09.	공봉숙	-	서울대 지구과학교육학	32	
	2024.06.	김용자	-	한국외대 중국어과	32	
형사부 부장	2022.07.	이정화	-	-	36	
	2023.09.	정대희	-	-	37	
	2024.06.	정우석	-	-	37	

평택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김영일	광주 살레시오고	성균관대 법학	31	
	2022.09.	이준엽	-	-	29	
	2023.09.	유도윤	서울 광성고	고려대 법학	32	
	2024.06.	김훈영	서울 선덕고	성균관대 법학	32	
형사1부 부장	2022.07.	김희영	-	-	35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형사2부 부장	2023.09.	김희주	-	-	35	2022.02 신설
	2024.06.	황수연	-	-	35	
	2022.07.	김윤정	-	-	35	
	2023.09.	김주현	-	-	36	
	2024.06.	최용락	-	-	36	
형사3부 부장	2022.07.	김봉진	-	-	36	
	2023.02.	용태호	-	-	36	
	2023.09.	이지연	-	-	37	
	2024.06.	신희영	-	-	37	

안산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이종혁	서울 선덕고	서울대 법학	30	108
	2023.09.	정희도	-	연세대 법학	31	
	2024.06.	김도완	대구 오성고	서울대 정치학	31	
	2025.05.	이영창 (代)	전북대부고	서울대 공법학	33	
차장	2022.07.	박상진	-	서울대 법학	31	
	2023.09.	신준호	대구 계성고	경북대 법학과	33	
	2024.06.	이영창	전북대부고	서울대 공법학	33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2022.07.	최인상	-	-	32	
	2023.09.	이장우	-	-	33	
	2024.06.	김형원 (代)	-	-	34	
형사1부 부장	2022.07.	허성환	-	-	34	
	2023.09.	조희영	-	-	34	
	2024.06.	김형원	-	-	34	
형사2부 부장	2022.07.	김재혁	-	-	34	
	2023.09.	최선경	-	이화여대 법학	35	
	2024.06.	이세희	-	-	35	
형사3부 부장	2022.07.	박석용	-	-	34	
	2023.09.	이동원	-	-	36	
	2024.03.	공석 ¹⁰⁹				
	2024.06.	김영준	-	-	36	
공판부 부장 (구 형사4부)	2024.10.	임두환	서울 대원외고	성균관대 법학	37	
	2022.07.	송명섭	-	-	35	
	2023.09.	최희정	-	-	35	
	2024.06.	박상범	-	-	37	
형사4부 부장	2022.07.	김일권	-	-	34	2022.02 재설치
	2023.09.	배철성	-	-	36	

¹⁰⁸ 2023.07.부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검찰 수사본부 파견으로 신준호 차장이 직무대리

¹⁰⁹ 2024.03.부터 공석으로 최선경 형사2부 부장검사가 직무대리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2024.02.	이동근	-	-	37	

안양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김성훈	서울 마포고	서울대 서어서문학	30	
	2023.09.	강대권	진주고	한양대 법학	31	
	2024.06.	김우	서울 영동고	서울대 공법학	32	
차장	2022.07.	안동완	광주 서강고	서울대 사법	32	
	2023.09.	장준호	-	-	31	
	2024.06.	임선화	-	고려대 법학	34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2022.07.	김정진	-	-	32	
	2023.09.	장준호 (代)	-	-	31	
	2024.06.	임선화 (代)	-	고려대 법학	34	
형사1부 부장	2022.07.	최재준	-	-	34	
	2023.09.	국상우	-	-	34	
	2023.09.	최형원	-	-	34	
	2024.06.	손정숙	-	-	35	
형사2부 부장	2022.07.	박진석	-	-	35	
	2023.09.	노정옥	-	-	35	
	2024.06.	기노성	-	-	36	
형사3부 부장	2022.07.	이진용	-	-	35	
	2023.09.	최종필	-	-	36	
	2024.06.	김희영	대구 과학고	서울대 산업공학	37	

대전고등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검사장◎	2022.06.	이두봉	강릉고	서울대 공법학	25	
	2022.09.	공석				
	2023.09.	임관혁	대전 보문고	서울대 사회학	26	
	2024.05.	황병주	익 남성고	서울대 법학	29	
차장○	2022.05.	구자현	청주고	서울대 사법학	29	
	2023.09.	이영림	강릉여고	이화여대 법학	30	
	2024.05.	박성민	서인천고	서울대 사법학	31	
인권보호관	2022.07.	이병대	-	-	30	
	2023.03.	이종찬	-	-	31	
	2023.09.	김현	-	-	31	
	2024.06.	권기환 (代)	-	-	30	

대전지방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검사장○	2022.06.	이진동	서울 경동고	연세대 생화학	28	
	2023.09.	박재익	진주 대아고	한양대 법학	29	
	2024.05.	성상현	서울 영동고	서울대 공법학	30	
차장	2022.07.	김경수	-	-	30	
	2023.09.	서정식	서울 배문고	고려대 법학	31	
	2024.06.	유광렬	서울 경성고	서울대 경제학	33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2022.07.	이준식	-	-	31	
	2023.09.	최인상	-	-	32	
	2023.09.	김원지 (代)	-	-	32	
	2024.06.	김선문	-	-	32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2021.07.	박문수	-	-	22	
	2023.09.	이중제	-	-	22	
	2023.10.	공석 ¹¹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2024.06.	이종구	-	-	25	
	2022.07.	김찬중	-	-	24	
	2022.07.	박재현	-	-	28	
	2022.07.	이광우	-	-	32	
	2022.07.	김지연	-	-	32	
	2022.07.	김원지	-	-	32	
	2023.09.	최현만	-	-	28	현직
	2024.06.	배성호	-	-	29	
	2024.06.	임은정	-	-	30	현직
	2024.06.	윤중현	-	-	31	현직

¹¹⁰ 2023.10. 이중제 사직 후 2024.06.까지 공석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형사1부 부장	2022.07.	황우진	-	-	32	
	2023.09.	백승주	-	-	34	
	2024.06.	안성희	-	-	34	
형사2부 부장	2022.07.	유태호	-	-	34	
	2023.09.	서영배	-	-	35	
	2024.06.	이정화	-	-	36	
형사3부 부장	2022.07.	조석규	-	-	34	
	2023.09.	조재철	-	-	36	
	2024.06.	허성규	-	-	36	
형사4부 부장	2022.07.	김태훈	-	-	35	
	2023.09.	송봉준	-	-	36	
	2024.06.	김가람	-	-	37	
공판부 부장	2022.07.	권성희	-	경북대 법학	34	
	2023.09.	장인호	-	-	36	
	2024.06.	최정민	-	-	37	
특허범죄조사부 부장	2022.07.	정지은	-	-	34	
	2023.09.	김윤용	-	-	35	
	2024.06.	박대환	-	-	36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 (구 여성아동조사부)	2022.07.	김지혜	-	-	35	
	2023.09.	박은혜	-	-	35	
	2024.06.	이주희	-	-	36	
인권보호부 부장	2022.07.	이동언	-	-	32	
	2023.09.	손진욱	-	-	33	
	2024.06.	김재혁	-	-	34	

홍성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정종화	-	-	30	
	2023.09.	이영남	-	-	31	
	2023.09.	최인상	-	-	32	
	2024.06.	김해경	-	-	34	
형사부 부장	2022.07.	박철	-	-	36	
	2023.09.	박지나	-	-	37	
	2024.06.	정원석	-	-	37	

공주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김지용	-	-	35
	2023.09.	최재순	-	-	37
	2024.06.	김민구	-	-	37

논산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안광현	-	-	35	
	2023.09.	김가람	-	-	37	
	2024.06.	전수진	-	-	37	

서산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박주현	-	-	31	
	2023.09.	원지애	-	성균관대 무역학	32	
	2024.06.	김승언	-	-	33	
형사부 부장	2022.07.	박경택	-	-	36	
	2023.09.	박지훈	-	-	37	
	2024.06.	정수정	-	-	37	

천안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정유미	-	서울대 교육학	30	
	2023.09.	최지석	-	-	31	
	2024.06.	성상욱	-	-	32	
차장	2022.07.	김우	서울 영등고	서울대 공법학	32	
	2023.09.	이준범	-	-	33	
	2024.06.	김민아	-	부산대 사법학	34	
형사1부 부장	2022.07.	이상록	-	-	33	
	2023.09.	문지선	-	-	34	
	2023.09.	오세문	-	-	34	
형사2부 부장	2024.06.	최형원	-	-	34	
	2022.07.	손상희	-	-	35	
	2023.09.	최용락	-	-	36	
형사3부 부장	2024.06.	김종필	-	-	35	
	2022.07.	윤수정	-	-	36	
	2023.09.	홍정연	-	-	37	
인권보호관	2024.06.	최성수	-	-	37	
	2022.07.	이곤형	-	-	32	
	2022.07.	민영현	-	-	33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2023.09.	최재봉	-	-	33	
	2024.06.	김민아 (代)	-	부산대 사법학	34	

청주지방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검사장○	2022.06.	배용원	순천고	서울대 법학	27	
	2024.05.	박영빈	부천고	고려대 법학	30	
차장	2022.07.	이영림	강릉여고	이화여대 법학	30	
	2023.09.	조광환	남대전고	연세대 법학	32	
	2024.06.	정수진	대전 동방여고	고려대 법학	33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2022.07.	정재훈	-	-	31	
	2023.09.	이종민	-	-	32	
	2024.06.	황정현	-	-	33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2021.07.	김석우	-	-	22	
	2023.09.	윤춘구	-	-	26	
	2024.06.	이수철	-	-	22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2022.07.	윤춘구	-	-	26	
	2022.07.	최현철	-	-	32	
	2023.09.	김정진	-	-	32	
	2024.06.	최재봉	-	-	33	
	2024.07.	양재혁	-	-	30	현직
형사1부 부장	2022.07.	이곤호	-	-	33	
	2023.09.	이승훈	-	-	34	
	2024.06.	유옥근	-	-	34	
형사2부 부장	2022.07.	신건호	-	고려대 법학	35	
	2023.09.	김지혜	-	-	35	
	2024.06.	신도욱	-	-	36	
형사3부 부장	2022.07.	안창주	-	-	35	
	2023.09.	남철우	-	-	37	

충주시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최임열	-	-	32	
	2023.09.	김윤선	-	-	33	
	2024.06.	강민정	-	-	34	
형사부 부장	2022.07.	나하나	-	-	36	
	2023.09.	조정호	-	-	37	
	2024.06.	김상문	-	-	37	

제천시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박양호	-	-	35	
	2023.09.	최수봉	-	-	36	
	2024.06.	김준선	-	-	37	

영동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박윤희	-	서울대 천문학	36	
	2023.09.	강성기	서울 청원고	고려대 법학	37	
	2024.06.	송규영	-	-	37	
	2025.02.	신기련	-	-	37	

대구고등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검사장◎	2022.06.	최경규	서울 송문고	한양대 법대	25	
	2023.09.	노정연	서울 중앙여고	이화여대 법학	25	
	2024.05.	이진동	서울 경동고	연세대 생화학	28	
	2024.09.	신봉수	전주 영생고	건국대 법학	29	
차장○	2022.05.	이종근	-	-	28	
	2022.06.	홍종희	광주 전남여고	서울대 사법학	29	
	2023.09.	손준성	대구 경북고	서울대 사법학	29	111
인권보호관	2022.07.	이계환	-	-	30	
	2023.09.	김희경	-	-	31	
	2024.06.	최인상	-	-	32	

대구지방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검사장○	2022.05.	주영환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학	27	
	2023.09.	신응석	영등포고	고려대 법학	28	
	2024.05.	박기동	대구 영남고	고려대 법학	30	
1차장	2022.07.	조대호	순천고	서울대 공법	30	
	2023.09.	임승철	-	-	31	
	2024.06.	유도윤	서울 광성고	고려대 법학	32	
2차장	2022.07.	최지석	-	-	31	
	2023.09.	조상원	-	-	32	
	2024.06.	김수민	순천고	서울대 사법	33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2022.07.	정우식	-	-	31	
	2023.09.	김원호	-	-	32	
	2023.09.	민영현 (代)	-	-	33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2024.06.	박광현	-	-	32	
	2021.07.	노상길	-	-	26	
	2023.09.	박문수	-	-	22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2022.05.	임은정	-	-	30	
	2022.07.	송연규	-	-	28	
	2022.07.	김봉현	-	-	31	
	2022.07.	김공주	-	-	32	
	2022.07.	유상민	-	-	32	
	2023.09.	이방현	-	-	33	현직
	2024.06.	박규은	-	-	23	현직
	2024.06.	심재계	-	-	24	현직
	2024.06.	서성호	-	-	29	현직

¹¹¹ 2023.12.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로 인한 직무정지로 고석홍 대구고검 검사가 직무대리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형사1부 부장	2024.06.	전미화	-	-	30	현직
	2024.06.	김원학	-	-	31	현직
	2022.07.	조홍용	-	-	32	
	2023.09.	유정호	-	-	34	
형사2부 부장	2024.06.	원형문	-	-	33	
	2022.07.	신종곤	-	-	33	
형사3부 부장	2023.09.	김성원	-	-	34	
	2022.07.	조용우	-	-	34	
	2023.09.	김해중	-	-	35	
형사4부 부장 (2021.07 형사5부(구公安부) 통폐합, 2023.05 폐지)	2024.06.	남계식	-	-	35	
	2022.07.	서경원	-	-	35	2023.05 폐지
공공수사부 (구公安부 → 형사5부 → 형사4부 통폐합 → 공공수사부)	2023.05.	서경원	-	-	35	신설
	2023.09.	윤수정	-	-	36	
	2024.06.	김정옥	-	-	36	
공판1부 부장 (구 공판부)	2022.07.	이정민	-	-	35	
	2023.09.	정명원	-	-	35	
	2024.06.	유정현	-	-	36	
공판2부 부장	2022.07.	정화준	-	-	35	
	2023.09.	문지석	-	-	36	
	2024.06.	곽계령	-	-	37	
공판부 부장 ¹¹²	2025.02.	곽계령	-	-	37	
강력범죄수사부 부장 (구 강력부→강력범죄형사부)	2022.07.	홍완희	-	-	34	명칭변경
	2023.09.	최재만	-	-	36	
	2024.06.	소창범	-	-	36	
반부패수사부 부장 (구 특수부)	2022.07.	이일규	-	-	34	
	2023.09.	공준혁	-	서울대 정치학	35	
	2024.06.	박철	-	-	36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 (구 여성아동조사부)	2022.07.	장일희	-	-	35	
	2023.09.	장진영	-	-	36	
	2024.06.	최희정	-	-	36	
인권보호부 부장	2022.07.	천기홍	-	-	32	
	2023.09.	민영현	-	-	33	
	2024.06.	이상록	-	-	33	

¹¹² 2025.02 공판1, 2부 통합

안동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홍승표	-	-	35	
	2023.09.	임종필	서울 선덕고	고려대 법학	32	
	2024.06.	엄재상	-	-	35	

경주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문현철	-	-	32	
	2023.09.	이상현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33	
	2024.02.	최명규	-	-	33	
형사부 부장	2022.07.	장은희	-	-	36	
	2023.02.	정유선	-	-	36	
	2023.09.	김지영	-	-	36	
	2024.06.	최소연	-	-	37	

김천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고필형	-	-	31	
	2023.09.	진정길	경북사대부고	연세대 법학	31	
	2024.06.	최재아	-	-	34	
형사1부 부장	2022.07.	추의정	-	-	35	
	2022.07.	최준호	-	-	34	
	2023.09.	이치현	-	-	36	
	2024.06.	박상수	-	-	36	
형사2부 부장	2025.04.	정미란 (代)	-	-	37	
	2022.07.	김진호	-	-	36	
	2023.09.	김진혁	-	-	37	
	2024.06.	정미란	-	-	37	

상주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김은미	-	-	36	
	2023.02.	정명원	-	-	35	
	2023.09.	김상현	-	-	37	
	2024.06.	박수민	-	-	37	

의성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이상혁	-	-	36	
	2023.09.	김희영	대구 과학고	서울대 산업공학	37	
	2024.06.	나영욱	-	-	37	

영덕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최종필	-	-	36	
	2023.09.	윤국권	김해고	성균관대 법학	37	
	2024.06.	김창선	-	-	37	

포항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이성식	-	-	32	
	2023.09.	조주연	대전 동산고	서울대 외교학	33	
	2024.06.	이완희	-	-	34	
형사1부 부장	2022.07.	신금재	-	-	35	
	2023.09.	김종필	-	-	35	
	2024.06.	고은별	-	-	36	
형사2부 부장	2022.07.	박향철	-	-	36	
	2023.09.	김금이	-	-	37	
	2024.06.	김영주	-	-	37	

대구 서부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한제희	-	-	30	
	2023.09.	김영일	광주 살레시오고	성균관대 법학	31	
	2024.06.	김형석	-	-	32	
차장	2022.07.	박주성	-	-	32	
	2023.09.	김현아	-	-	33	
	2024.06.	이춘	-	-	33	
형사1부 부장	2022.07.	조용후	-	-	34	
	2023.09.	이동현	-	-	35	
	2024.06.	한상훈	대전 보문고	서울대 법학	35	
형사2부 부장	2022.07.	강호준	-	-	35	
	2023.09.	정혁준	한성과학고	서울대 기계항공공학	35	
	2024.06.	김금이	-	-	37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형사3부 부장	2022.07.	서영배	-	-	35	
	2023.09.	장유강	-	-	37	
	2024.06.	서성목	-	-	37	
인권보호관	2022.07.	신지선	-	-	32	
	2023.09.	허준	-	-	34	
	2023.09.	김현아 (代)	-	-	33	
	2024.06.	(겸) 이준	-	-	33	

부산고등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검사장◎	2022.06.	노정연	서울 중앙여고	이화여대 법학	25	
	2023.09.	최경규	서울 송문고	한양대 법대	25	
	2024.05.	송경호	서울 중동고	서울대 법학	29	
차장○	2022.06.	이철희	울산 학성고	서울대 불어불문학	27	
	2023.09.	주영환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학	27	
	2024.05.	임승철	-	-	31	
	2024.09.	이재구 (代)	-	-	20	
인권보호관	2022.07.	김도형	-	-	30	
	2023.09.	정재훈	-	-	31	
	2024.06.	조영찬 (代)	-	-	34	

부산지방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검사장○	2022.06.	박종근	-	한양대 법대	28	
	2023.09.	정영학	부산 해동고	서울대 사법학	29	
1차장	2022.07.	최재민	경산 무학고	성균관대 법학	30	
	2023.09.	박상진	-	서울대 법학	31	
	2024.06.	김향연	-	-	32	
2차장	2022.07.	임승철	-	-	31	
	2023.09.	안동완	광주 서강고	서울대 법학	32	113
	2024.06.	이지형	-	-	33	114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2022.07.	이영규	-	-	32	
	2023.09.	김지완	-	-	32	
	2024.02.	유진승 (代)	서울 상문고	서울대 사법학	33	
	2024.06.	김준섭	-	-	32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2022.07.	정지영	-	-	24	
	2023.09.	노상길	-	-	26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2022.05.	김덕곤	-	-	31	
	2022.07.	정재현	-	-	32	
	2023.09.	김재호	-	-	29	현직
	2023.09.	이영화	-	-	33	
형사1부 부장	2023.09.	하재무	-	-	33	
	2024.06.	김공주	-	-	32	
	2022.07.	박대범	-	-	33	
	2023.09.	김도연	서울 구정고	연세대 법학	34	
	2024.02.	신종곤	-	-	33	

¹¹³ 2023.12.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로 인한 직무정지로 박상진 2차장 검사가 직무대리

¹¹⁴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파견으로 김향연 1차장 검사가 직무대리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형사2부 부장	2024.06.	김상균	-	-	34	
	2022.07.	최형원	-	-	34	
	2023.09.	정유리	-	-	35	
	2023.09.	최준호	-	-	34	
형사3부 부장	2024.06.	구미옥	-	-	34	
	2022.07.	송영인	-	-	35	
	2023.09.	서효원	-	-	35	
	2024.06.	허지훈	-	-	35	
형사4부 부장 (구 특수부)	2020.02.	폐지				
반부패·강력수사부 부장 (구 강력부 → 강력범죄형사부)	2022.07.	박현균	-	-	34	
반부패수사부 부장	2022.12.	박현균	-	-	34	분리개편
	2023.09.	김익수	-	-	35	
	2024.06.	국원	-	-	36	
강력범죄수사부 부장	2022.12.	박성민	-	-	35	분리개편
	2023.09.	김보성	-	-	35	
	2024.06.	윤국권	-	-	37	
공공·국제범죄수사부 부장 (구 공안부 → 공공수사부, 2021.07. 외사부와 통합 → 공공·외사수사부)	2022.07.	임길섭	-	-	34	명칭변경
	2023.09.	김형원	-	-	36	
	2024.06.	김상현			37	
	2024.10.	최근영	-	-	37	
공판1부 부장 (구 공판부 → 공판1부)	2022.07.	박성민	-	-	35	2022.12 개편
공판2부 부장	2022.07.	박종선	-	-	36	2022.12 개편
공판부 부장 ¹¹⁵ (공판1부, 2부 통합)	2022.12.	박종선	-	-	36	개편
	2023.09.	김상준	-	-	36	
	2024.06.	정명원	-	-	35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 (구 여성아동조사부)	2022.07.	최미화	-	-	35	
	2023.09.	이주희	-	-	36	
	2024.06.	손은영	-	-	36	
인권보호부 부장	2022.07.	이만흠	공주대부고	서울대 대기과학	32	
	2023.09.	윤진승	서울 상문고	서울대 사법학	33	
	2024.06.	신종곤	-	-	33	

¹¹⁵ 2020.02. 공판부에서 공판1부, 공판 2부 확대 개편. 2022.12. 통합

부산 동부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이진수	서울 영동고	서울대 사법학	29	
	2023.09.	김형수	-	-	30	
	2024.06.	박주성	서울 한영외고	서울대 법학	32	
차장	2022.07.	하담미	부산 중앙여고	서울대 서어서문학	32	
	2023.09.	차범준	-	-	33	
	2024.06.	김연실	-	-	34	
형사1부 부장	2022.07.	김병문	-	-	34	
	2023.09.	송영인	-	-	35	
	2024.06.	송정은	-	-	35	
형사2부 부장	2022.07.	박기환	-	-	34	
	2023.09.	김정옥	-	-	36	
	2024.06.	천헌주	-	-	36	
형사3부 부장	2022.07.	송봉준	-	-	36	
	2023.09.	나희석	-	-	37	
	2024.06.	김용제	-	-	37	
인권보호관	2022.07.	김형주	-	-	32	
	2023.09.	원형문	-	-	33	
	2023.09.	차범준(代)	-	-	33	
	2024.06.	공석 ¹¹⁶				

부산 서부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강지성	광주 석산고	한양대 법학	30	
	2023.09.	이덕진	-	-	31	
	2024.06.	윤병준	공주대부고	명지대 법학	32	
차장	2022.07.	유태석	-	-	32	
	2023.09.	한기식	마산고	고려대 사회학	33	
	2024.06.	장혜영	-	-	34	
형사1부 부장	2022.07.	강상묵	-	-	34	
	2023.09.	장형수	-	-	35	
	2023.10.	이영화	-	-	33	
	2024.06.	신건호	-	고려대 법학	35	
형사2부 부장	2022.07.	정혁준	-	-	35	
	2023.09.	천헌주	-	-	36	
	2024.06.	김상준	-	-	36	
형사3부 부장	2022.07.	김종필	-	-	35	
	2023.09.	장옥환	-	-	37	

¹¹⁶ 2024.06. 차범준 직무대리 인천지검 2차장 발령 이후 공석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인권보호관	2024.06.	정선제	-	-	37	
	2022.07.	황정현	-	-	33	
	2023.09.	황보현희	-	-	34	
	2023.09.	한기식 (代)	-	-	33	
	2024.06.	장혜영 (代)	-	-	34	

창원지방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검사장○	2022.06.	박재익	진주 대아고	한양대 법학	29	117
	2023.09.	김성훈	서울 마포고	서울대 서어서문학	30	
	2024.05.	정유미	-	서울대 교육학	30	
차장	2022.07.	박현준	서울 고려대부고	고려대 법학	30	
	2023.09.	박주현	-	-	31	
	2024.06.	권유식	서울 영훈고	고려대 법학	33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2022.07.	박태호	-	-	32	
	2023.09.	신종곤	-	-	33	118
	2024.02.	박주현 (代)	-	-	31	
	2024.06.	권유식 (代)	서울 영훈고	고려대 법학	33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2022.07.	손준호	-	-	22	
	2023.02.	박승환	-	-	27	
	2024.06.	윤종기	-	-	25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2022.07.	박승환	-	-	27	
	2022.07.	허정수	-	-	30	
	2023.09.	박홍균 ¹¹⁹	-	-	31	
	2024.06.	채수양	-	-	32	현직
형사1부 부장	2022.07.	임종필	-	-	32	
	2023.09.	임길섭	-	-	34	
	2024.02.	황보현희	-	-	34	
형사2부 부장	2022.07.	정현승	-	-	34	
	2023.09.	최미화	-	-	35	
	2024.06.	강호준	-	-	35	
형사3부 부장 (구 특수부)	2022.07.	윤동환	-	-	34	
	2023.09.	박종민	-	-	35	
	2024.06.	이치현	-	-	36	
형사4부 부장 (구 공안부 → 공공수사부)	2022.07.	엄재상	-	-	35	
	2023.09.	박철	-	-	36	
	2024.06.	김호경	-	-	37	

¹¹⁷ 2023.05부터 공석으로 2023.09.까지 박현준 차장 검사가 직무대리

¹¹⁸ 2024.02.부터 공석으로 박주현 차장 검사가 직무대리

¹¹⁹ 2024.02. 정직 3개월 징계 처분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공판송무부 부장	2022.07.	이동원	-	-	36	
	2023.09.	김병철	-	-	37	
	2024.06.	신미량	-	-	37	

진주시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5.	박현주	-	-	31	
	2023.03.	이병대	-	-	30	
	2023.09.	김봉준	-	-	33	
	2024.06.	김상현	-	-	33	
형사1부 부장	2022.07.	이동현	-	-	35	
	2023.09.	허성규	-	-	36	
	2024.06.	박석용	-	-	34	
형사2부 부장	2022.07.	정영주	-	-	36	
	2023.09.	곽금희	-	-	37	
	2024.06.	김미수	-	-	37	

통영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최성완	-	-	29	
	2023.09.	김성동	-	-	31	
	2024.06.	정원두	-	-	34	
형사1부 부장	2022.07.	노정옥	-	-	35	
	2023.09.	조영성	-	-	36	
	2024.06.	임연진	-	-	36	
형사2부 부장	2022.07.	배철성	-	-	36	
	2023.09.	최성수	-	-	37	
	2024.06.	송인호	-	-	37	

밀양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허훈	-	-	35	
	2023.09.	김정환	-	-	37	
	2024.06.	정영서	-	-	37	

거창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최재만	-	-	36	
	2023.09.	이수창	-	-	37	
	2024.02.	임길섭	-	-	34	

마산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박용호	-	-	22	
	2023.09.	박대범	-	-	33	120
	2024.02.	김지완	-	-	32	
형사1부 부장	2022.07.	김은하	-	-	35	
	2023.09.	이상목	-	-	36	
	2024.02.	소창범	-	-	36	
형사2부 부장	2024.06.	이용균	-	-	34	
	2022.07.	김상준	-	-	36	
	2023.09.	김수민	-	-	37	
	2024.06.	정지영	-	-	37	

울산지방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검사장○	2022.06.	노정환	대구 경원고	경찰대 법학	26	
	2023.09.	한석리	제천고	한양대 법학	28	
	2024.05.	박현준	서울 고려대부고	고려대 법학	30	
차장	2022.07.	양동훈	광주 금호고	전남대 사법학	30	
	2023.09.	김훈영	-	-	32	
	2024.06.	구태연	천안 복자여고	고려대 법학	32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2022.07.	진철민	-	-	31	
	2023.09.	주민철	-	-	32	
	2024.06.	김원지	-	-	32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2022.07.	박석재	-	-	26	
	2024.06.	홍보가	-	-	31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2022.07.	김기윤	-	-	32	
	2022.07.	박정의	-	-	32	현직
	2023.09.	홍보가	-	-	31	
형사1부 부장	2022.07.	김승언	-	-	33	
	2023.09.	김병문	-	-	34	

¹²⁰ 2023.12. 박대범 지청장 비위로 인한 인사조처로 2024.02.까지 공석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형사2부 부장	2024.06.	이영화	-	-	33	
	2022.07.	임유경	-	-	34	
	2023.09.	박진석	-	-	35	
형사3부 부장	2024.06.	김일권	-	-	34	
	2022.07.	이정배	-	-	34	
	2023.09.	이세희	-	-	35	
형사4부 부장 (구 특수부)	2024.06.	하재무	-	-	33	
	2022.07.	황보현희	-	-	34	
	2023.09.	박성민	-	-	35	
형사5부 부장 (구 공안부 → 공공수사부)	2024.06.	정화준	-	-	35	
	2022.07.	노선균	-	-	35	
	2023.09.	김윤정	-	-	35	
공판송무부 부장	2024.06.	인훈	-	-	37	
	2022.07.	서원익	-	-	35	
	2023.09.	손은영	-	-	36	
	2024.06.	이대성	-	-	37	

광주고등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검사장◎	2021.06.	조종태	마산 중앙고	서울대 국문	25	
	2023.09.	홍승욱	-	연세대 법대	28	
	2024.05.	신봉수	전주 영생고	건국대 법학	29	
	2024.09.	임승철 (代)	-	-	31	
차장○	2020.01.	공석				
	2022.06.	김지용	-	-	28	
	2023.09.	구자현	청주고	서울대 사법학	29	
	2024.05.	구승모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	31	
	2024.09.	임승철	-	-	31	
인권보호관	2022.07.	신흥식	-	-	30	
	2023.09.	정우식	-	-	31	
	2024.06.	정경진	-	-	31	

광주지방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검사장○	2022.06.	이수권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학	26	
	2023.09.	박종근	-	한양대 법대	28	
	2024.05.	이종혁	서울 선덕고	서울대 법학	30	
차장	2022.07.	이영남	-	-	31	
	2023.09.	문현철	-	-	32	
	2024.06.	임일수			33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2022.07.	노진영	-	-	31	
	2023.09.	조홍용	-	-	32	
	2024.06.	이장우	-	-	33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2021.07.	강길주	-	-	20	
	2023.09.	김환	-	-	27	
	2024.06.	김용승	-	-	22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2022.07.	박은정	-	-	29	2024.03. 해임
	2023.09.	박병규	-	-	29	현직
	2023.09.	김정훈	-	-	30	현직
	2023.09.	정성현	-	-	33	현직
	2024.06.	김환	-	-	27	현직
	2024.06.	손석천	-	-	29	현직
	2024.06.	김지연	-	-	32	현직
형사1부 부장	2022.07.	정태원	-	-	33	
	2024.02.	이상록	-	-	33	
	2024.06.	허성환			34	
형사2부 부장	2022.07.	이영창	-	-	33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형사3부 부장	2023.09.	안성희	-	-	34	
	2024.06.	김희주	-	-	35	
	2022.07.	정영수	-	-	34	
	2023.02.	박성민	-	-	34	
	2023.09.	한문혁	-	-	36	
	2024.06.	신금재	-	-	35	
공공수사부 부장 (구公安부 → 공공수사부 → 형사4부 ¹²¹)	2022.07.	임삼빈	-	-	34	
	2023.09.	김명옥	-	-	36	
	2024.06.	서영배	-	-	35	
공판부 부장	2022.07.	권나원	-	-	34	
	2023.09.	기노성	-	-	36	
	2024.06.	윤나라	-	-	36	
반부패·강력수사부 부장 (구 특수부 →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형사부 ¹²² 와 통합)	2022.07.	최순호	-	-	35	
	2023.09.	김진호	-	-	36	
	2024.06.	조정호	-	-	37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 (구 여성아동조사부)	2022.07.	강정영	-	-	35	
	2023.09.	정희선	-	-	36	
	2024.06.	김창희	-	-	36	
인권보호부 부장	2022.07.	정용환	-	-	32	
	2023.09.	김남훈	-	-	33	
	2024.06.	백승주	-	-	34	

목포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권기대	-	-	30	
	2023.09.	최혁	-	-	33	
	2024.06.	곽영환	서울 경희고	단국대 법학	33	
형사1부 부장	2022.07.	김정국	-	-	35	
	2023.09.	김은경	-	-	36	
	2024.06.	이윤희	-	-	36	
형사2부 부장	2022.07.	이태순	-	-	36	
	2023.09.	박인우	-	-	37	
	2024.06.	이경석	-	-	37	

¹²¹ 2023.05. 형사4부에서 공공수사부로 변경

¹²² 2021.07. 통폐합

장흥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장인호	-	-	36	
	2023.09.	조철	-	-	37	
	2024.06.	이태협	-	-	37	

순천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김윤섭	-	연세대 법학	30	
	2023.09.	최호영	부천고	고려대 법학	29	
	2024.06.	김성동	경북 경산고	고려대 법학	31	
차장	2022.07.	김훈영	-	-	32	
	2023.09.	이응철	-	-	33	
	2024.06.	강석철	-	-	33	
인권보호관	2022.07.	정지영	-	-	33	
	2023.09.	이응철 (代)	-	-	33	
	2024.06.	강석철 (代)	-	-	33	
형사1부 부장	2022.07.	이승훈	-	-	34	
	2023.09.	오미경	-	-	35	
	2024.06.	신승희	-	-	35	
형사2부 부장	2022.07.	최선경	-	이화여대 법학	35	
	2023.09.	박종선	-	-	36	
	2024.06.	김병철	-	-	37	
형사3부 부장	2022.07.	조은수	-	-	36	
	2023.09.	방지형	-	-	37	
	2024.06.	김형걸	-	-	37	

해남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김승걸	-	-	35	
	2023.02.	조윤철	-	-	36	
	2024.06.	강용묵	-	-	37	

전주지방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검사장○	2022.06.	문홍성	-	-	26	
	2023.09.	이창수	서울 대원고	성균관대 법학	30	
	2024.05.	박영진	-	고려대 법학	31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차장	2022.07.	황금천	-	-	31	
	2023.09.	김우	서울 영동고	서울대 공법학	32	
	2024.06.	한기식	창원 마산고	고려대 사회학	33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2022.07.	김윤후	-	-	32	
	2022.08.	최원석	-	-	32	
	2023.09.	김선문	-	-	32	
	2024.06.	이영규	-	-	32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2022.07.	안성수	-	-	24	
	2024.06.	배용찬	-	-	27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2022.07.	정규영	-	-	28	
	2022.07.	정은혜	인천여고	서울대 사법학	32	
	2023.09.	김호준	-	-	33	현직
형사1부 부장	2022.07.	이정우	-	-	33	
	2023.09.	원형문	-	-	33	
	2024.06.	정보영	-	-	34	
형사2부 부장	2022.07.	문지선	-	-	34	
	2023.09.	황성민	-	-	35	
	2024.06.	윤동환	-	-	34	
형사3부 부장	2022.07.	권찬혁	-	-	35	
	2023.09.	이승학	-	-	36	
	2024.06.	한연규	-	-	37	
	2025.02.	배상윤	-	-	37	

군산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손우창	-	-	31	
	2023.09.	손찬오	-	서울대 법대	33	
	2024.06.	박진성	-	-	34	
형사1부 부장	2022.07.	오세문	-	-	34	
	2023.09.	김창희	-	-	36	
	2024.06.	김재성	-	-	36	
형사2부 부장	2022.07.	정현주	-	-	36	
	2023.09.	장진성	-	-	37	
	2024.06.	김지숙	-	-	37	

정읍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국원	-	-	36	
	2023.09.	이시전	-	-	36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2024.06.	김윤정	-	-	35	

남원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22.07.	천대원	-	-	36	
	2023.09.	김종욱	김해고	서울대 법학	37	
	2024.06.	반지	-	-	37	

제주지방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검사장○	2022.05.	박종근	-	한양대 법대	28	
	2022.06.	이근수	-	-	28	
	2023.09.	노만석	창녕 대성고	성균관대 법학	29	
	2024.05.	장동철	강원 횡성고	서울시립대 법학	30	
차장	2022.07.	강대권	진주고	한양대 법학	31	
	2023.09.	최영아	서문여고	고려대 법학	32	
	2024.06.	김윤선	-	-	33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2022.07.	김선문	-	-	32	형사1부장 직무대리
	2023.09.	황정현	-	-	33	
	2024.06.	양성필	-	-	32	
형사1부 부장	2021.07.	이동언	-	-	32	
	2023.09.	황현아	-	-	34	
	2024.06.	최미화	-	-	35	
형사2부 부장	2022.07.	오기찬	-	-	34	
	2023.09.	장영일	청도 이서고	한영대 법학	36	
	2024.06.	최용보	-	-	37	
형사3부 부장	2022.07.	신재홍	-	-	35	
	2023.09.	윤원일	-	-	36	
	2024.06.	남대주	-	-	37	

법무연수원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원장◎	2022.06.	여환선	김천고	연세대 법학	24	
	2022.09.	공석				
	2023.09.	김석우	대구 덕원고	서울대 사법학	27	
	2024.09.	신자용	순천고	한양대 법학	28	
기획부장○	2022.07.	공석				
	2024.05.	김창진	대구 경북고	경북대 법학	31	
연구위원	2022.05.	이성윤	전주고	경희대 법학	23	2024.03. 해임
	2022.05.	이정수	서울 남강고	서울대 법학	26	사직
	2022.05.	이정현	나주 영산포상고	고려대 법학	27	현직
	2022.05.	심재철	전주 동암고	서울대 법학	27	사직
	2022.06.	신성식	-	-	27	2024.02. 해임
	2022.06.	고경순	서울 명일여고	한양대 법학	28	현직
	2022.06.	이종근	-	-	28	사직
	2022.06.	최성필	순천 매산고	성균관대 법학	28	사직
	2022.06.	김양수	전북 원광고	서울대 공법학	29	사직
	2022.07.	박철완	-	-	27	현직
	2023.09.	이철희	울산 학성고	서울대 불어불문학	27	사직
	2023.09.	문성인	-	-	28	사직
	2023.09.	홍종희	광주 전남여고	서울대 사법학	29	사직
	2024.05.	주영환	-	-	27	사직
	2024.05.	구자현	청주고	서울대 사법학	29	현직
기획과장	2022.07.	김영미	-	-	35	
	2023.09.	정유선	서울 숙명여고	고려대 법학	36	
	2023.11.	손지혜	-	-	37	
총괄교수	2022.07.	김남순	-	-	30	
	2023.09.	서정민	-	-	31	
	2024.06.	이만흠	공주대부고	서울대 대기과학	32	
용인분원 분원장	2022.07.	명점식	-	-	27	
	2023.09.	한제희	-	-	30	
	2024.06.	서정민	대구 덕원고	서울대 사법학	31	
용인분원 법무교육과장	2022.07.	윤경원	-	-	31	
	2023.09.	김용자	-	-	32	
	2024.06.	김은미	-	-	33	

II.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살아있는 권력에 굴종한 ‘선택적 징계’와
검사 징계 외 검사 탄핵

2023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징계위원회가 처분한 검사들은 총 30명이며, 징계 사유는 37건입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한 처분 내용과 징계 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관보에 수록된 징계 이외에도 문제나 논란이 된 검사의 징계나 비위 행위도 기록했습니다.

1. 징계처분 받은 검사 현황

2022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검사징계법 제2조의 제2호, 제3호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처분한 검사들은 총 30명이며, 징계 사유는 37건이다.

징계 처분 수준을 보면 △해임 5명, △정직 14명, △감봉 4명, △견책 7명이다.

크게 직무 관련 징계사유와 품위유지 위반 징계사유로 구분한 직무 관련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다. 직무 관련 징계사유로는 △직무 태만(8건), △직무상의 의무 위반(4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3건), △뇌물/향응 수수(3건), △성실의무위반(2건),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관계(1건), △부적절한 지휘·감독권 행사(1건), 품위유지 위반 징계사유로는 △음주운전(7건), △허위사실 적시(2건), △성 비위(2건), △부적절한 언행(1건), △연구윤리 부정행위(1건), △기타(2건)으로 총 37건이다.

징계 현황 자료는 정부 관보¹²³와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자료¹²⁴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징계처분 시기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징계양정 기준 등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 징계 관련 법령 및 규정>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7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조에 따라 징계청구자가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거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그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검찰청법」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¹²³ 법무부공고 제2022-273호(2022년 9월 13일), 제2022-420호(2022년 12월 21일), 제2023-57호(2023년 2월 21일), 제2023-190호(2023년 5월 23일), 제2024-46호(2024년 2월 19일), 제2024-65호(2024년 2월 29일), 제2024-77호(2024년 3월 7일), 제2024-446호(2024년 10월 29일), 제2024-487호(2024년 11월 29일), 제2025-180호(2025년 5월 14일)

¹²⁴ 검사 징계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다. 이때 검사징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내역과 법무부의 징계결정 내역을 모두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대검찰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2025년 6월 검사징계법 7조 제1항이 개정되어 법무부장관도 징계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검찰*보고서 2025는 2025년 5월까지 다룬다.)

<징계 받은 검사 30명의 징계 처분 및 사유>

(기간 : 2022. 5. ~ 2025. 5.)

	처분일	이름 (징계 당시 소속)	법무부 징계 처분	징계 사유 (당시 소속)
1	2022.08.31.	안제홍 (청주지검 검사)	견책	송치사건 수사과정에서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처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태만 (-)
2	2022.08.31.	김도균 (부산고검 검사)	견책	2021.12.03. 08:30경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km 구간을 운전하여 품위 손상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3	2022.09.13.	성인욱 (인천지검 검사)	정직 1월	2022.01.23. 01:18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하여 품위 손상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4	2022.12.20.	김정훈 (창원지검 검사)	감봉 2월	2020.08.03.부터 2021.11.11.까지 반복적으로 무단지각 및 무단퇴근하여 직무태만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5	2023.02.17.	김필수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견책	송치사건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의자 및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를 도과시킴으로써 직무태만 (-)
6	2023.02.17.	김형근 (서울고검 검사)	견책	2022.12.22. 11:40경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품위손상 (서울고검 검사)
7	2023.05.22.	정용수 (수원고검 검사)	정직1월	2020.03.07.부터 2022.01.14.까지 반복적으로 무단지각 및 하급자로 하여금 공무원증을 대리 태그하도록 하는 등 성실의무 위반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8	2024.02.15.	박용호 ¹²⁵ (부산고검 검사)	정직 3월	2023.02.경 지인이 피의자인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억울하다고 하니 억울한 점이 없는지 잘 살펴봐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2023.03.경 위 사건 피의자 등과 식사하였다가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9	2024.02.15.	박홍규 (창원지검 검사)	감봉 1월	2023.01.~04.경 4개월간 배당받은 사건 중 불기소처분 2건만 처리하고, 배당받은 사건 중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등 직무태만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부장)

¹²⁵ 박용호 검사는 징계 처분 직후 곧바로 검찰에서 퇴직한 뒤, 2024년 3월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인이 피의자인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잘 살펴봐달라' 말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부정한 청탁이나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024년 9월 26일 원고 박 전 검사 패소로 판결했다.

	처분일	이름 (징계 당시 소속)	법무부 징계 처분	징계 사유 (당시 소속)
10	2024.02.15.	박대범 (광주지검 ¹²⁶ 검사)	감봉 3월	2023.12.경 국회의원을 찾아가 ‘정치를 하고 싶으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11	2024.02.15.	김상민 ¹²⁷ (대전지검 ¹²⁸ 검사)	정직 3월	2023. 9.경 정치활동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사직서 제출 전인 2023. 11.경부터 출판기념회 개최를 준비하고, 2024. 1.경 언론을 통해 정당한 검찰 절차를 비난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12	2024.02.15.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해임	2020.06.~0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KBS 기자들에게 위 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언론사가 오보를 하게 하는 등 품위손상 (서울중앙지검 3차장)
13	2024.02.28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	정직 2월	2020.07.경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징계대상자가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손상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14	2024.03.06.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해임	○ 2020.10.~1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이던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에서 확보된 통화 내역 등 중요 수사자료를 수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위배하여 법무부에 제공하도록 하여, 위 자료가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 절차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서울중앙지검장) ○ 2023.01.경부터 2023.11.경까지 SNS 게시글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검찰의 수사·기소를 비난하는 등 검찰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하고, 징계대상자의 지휘·감독을 받던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담당한 사건 피고인의 복권서트에 참석하여 위 피고인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품위손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¹²⁶ 2024년 4월 기준 광주고검의 검사실 배치표, 법률신문 법조인대관, 언론기사 등에 따르면 광주고검 소속으로 알려졌으나, 관보(법무부공고 제2024-46호)는 광주지검 소속으로 표기하고 있는 바 관보의 표기를 따름.

¹²⁷ 김상민 전 검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정치 활동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정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나 2025년 2월 7일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김 전 검사는 2024년 3월 퇴직 후 22대 총선 경선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됐고, 이후 8월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¹²⁸ 2024년 4월 기준 법률신문 법조인대관, 언론기사 등에 따르면 당시 대전고검 소속으로 알려졌으나, 관보(법무부공고 제2024-46호)는 대전지검 소속으로 표기하고 있는 바 관보의 표기를 따름.

	처분일	이름 (징계 당시 소속)	법무부 징계 처분	징계 사유 (당시 소속)
15	2024.03.06.	박은정 (광주지검 검사)	해임	○ 2020.10.~1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이던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에서 확보된 통화 내역 등 중요 수사자료를 수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위배하여 법무부에 제공하도록 하여, 위 자료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절차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 ○ 2023.11.경 소속 검사로 하여금, 위 검사가 기준에 작성하여 이미 검찰총장 감찰 기록에 편철한 검사 명의의 조사보고서 내용을 수정·삭제하도록 하고, 날짜를 소급하여 새로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위 기록에 편철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 (법무부 감찰담당관)
16	2024.10.10.	정민희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견책	2016.12.경 교수와 조교가 일부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논문을 본인의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하여 품위손상 (춘천지검 원주지청 검사)
17	2024.10.23.	김미은 (부산지검 검사)	정직 1월	2023.02.경 회식 중 술에 취하여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품위손상 (창원지검 검사)
18	2024.10.23.	박지용 (의정부지검 검사)	정직 4월	2023.01.~06.경 육아시간을 사용승인 받은 후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 위반 (부산지검 검사)
19	2024.10.23.	배철성 (광주지검 검사)	정직 6월	2023.09.~12.경 회식 중 술에 취하여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으로 품위손상 등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장)
20	2024.11.26.	이규원 ¹²⁹ (대구지검 검사)	해임	○ 2024.04.11.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등 (대구지검 검사) ○ 2024.05.02.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하여 정치운동관여금지의무 위반 등 ○ 2018.11.경부터 2019.06.경까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의 면담결과서 등을 작성하여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면담결과 등을 기자들에게 유출하여 보도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등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서울동부지검 직무대리) ○ 2019.03.23.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하여

¹²⁹ 이규원 전 대구지검 검사는 정치운동관여 금지 위반 등 이유로 검사직에서 해임된 것에 대해 법무부의 해임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2024년 12월 26일 제기했다. 법무부는 해임 사유로 이규원 전 대구지검 검사가 지난 4월부터 출근을 거부하고 5월부터 특정 정당(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한 점을 들었다. 이규원 전 검사는 2024년 3월 사표를 냈지만, 법무부가 수리해주지 않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직을 거쳐 현재는 당 전략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처분일	이름 (징계 당시 소속)	법무부 징계 처분	징계 사유 (당시 소속)
				위법한 긴급출국금지를 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등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서울동부지검 직무대리)
21	2024.11.26.	임병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정직 1월	2024.02.15.경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품위손상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22	2024.11.26.	강지원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정직 6월	○ 배우자가 있음에도 2024.03.경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품위손상 ○ 2023.12.12.경 대법원의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파기 판결을 간과한 채 형 집행지휘 하여 2024.01.16.경 대상자에 대해 4시간 20분 간 형 집행을 함으로써 업무상 과오로 인한 직무상 의무 위반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23	2024.11.26.	김원재 (서울남부지검 검사)	해임	○ 2024.04.1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에 응하지 않아 품위손상 ○ 2024.04.2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품위손상 (서울남부지검 검사)
24	2024.11.26.	고유정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정직 4월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4.03.경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품위손상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25	2025.05.09.	나의열 (수원지검 검사)	정직 1월, 징계부가금 3배(3,491, 301원)	2019.07.18. 21:30경부터 07.19. 01:00경까지 유흥주점에서 ○○○ 변호사 및 그의 소개로 만난 (주)○○○○○○○ 운영자로부터 합계 1,163,767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검사로서의 품위손상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26	2025.05.09.	유효제 (인천지검 검사)	견책, 징계부가금 1배(664,7 67원)	2019.07.18. 21:30경부터 22:50경까지 유흥주점에서 ○○○ 변호사 및 그의 소개로 만난 (주)○○○○○○○ 운영자로부터 합계 664,767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검사로서의 품위손상 (대구지검 검사)
27	2025.05.09.	임홍석 (서울중앙지검 검사)	견책, 징계부가금 1배(664,7 67원)	2019.07.18. 21:30경부터 22:50경까지 유흥주점에서 ○○○ 변호사 및 그의 소개로 만난 (주)○○○○○○○ 운영자로부터 합계 664,767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검사로서의 품위손상 (부산지검 검사)
28	2025.05.09.	심성현 (수원지검 검사)	정직 2월	2024.04.21.경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하여 품위손상 (인천지검 검사)

	처분일	이름 (징계 당시 소속)	법무부 징계 처분	징계 사유 (당시 소속)
29	2025.05.09.	이정현 ¹³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직 1월	2022.08.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서 「법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과제를 부여받아 2023.08.31.까지 연구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한 내에 기한연장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채 중간보고 및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았고, 기한 도과 전·후 10회에 걸쳐 연구결과 또는 연구 결과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향후계획이라도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2년 8개월이 경과한 징계의결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아 성실의무위반 등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30	2025.05.09.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감봉 3월	2022.08.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서 「법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과제를 부여받고 연구 기한 2개월 연장승인을 받아 2023.10.31.까지 연구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한 내에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았고, 기한 도과 전·후 10회에 걸쳐 연구결과 또는 연구 결과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향후계획이라도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2년 6개월이 경과한 징계의결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아 성실의무위반 등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징계 받은 검사 30명의 징계 처분에 따른 분류>

(기간 : 2022. 5. ~ 2025. 5.)

징계 종류	인원(명)	비고
해임	5	
정직	14	1개월 6건, 2개월 2건, 3개월 2건, 4개월 2건, 6개월 2건 징계부가금 3,491,301원(1,163,767원 상당 향응 3배) 1건
감봉	4	1개월 1건, 2개월 1건, 3개월 2건
견책	7	징계부가금 664,767원(664,767원 상당 향응 1배) 2건
계	30	

¹³⁰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는 5월 8일 서울행정법원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검사는 “징계사유의 근거가 된 ‘2개월 단위로 법무연수원장으로부터 논문 제출 기한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며 징계 사유와 목적이 부당하다는 반박 입장을 냈다. 5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은 이 검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검사와 법무부 각각 주장에 대한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징계처분취소 본안소송은 아직 첫 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징계 받은 검사 30명의 징계 사유에 따른 분류>

(기간 : 2022. 5. ~ 2025. 5.)

구분	징계 사유	건수	비고
직무 관련	직무 태만	8	강지원, 김정훈, 김필수, 박지용, 박홍규, 안제홍, 이규원, 정용수
	직무상의 의무 위반	4	박은정(2건), 이성윤, 정진웅
	뇌물/향응 수수	3	나의엽, 유효제, 임홍석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3	김상민, 박대범, 이규원
	성실의무위반	2	고경순, 이정현
	부적절한 지휘·감독권 행사	1	이규원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관계	1	박용호
품위유지 위반	음주운전	7	김도균, 김원재(2건), 김형근, 성인욱, 심성현, 임병일
	성 비위(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등)	2	김미은, 배철성
	허위사실 적시	2	신성식, 이규원
	기타	2	강지원, 고유정
	연구윤리 부정행위	1	정민희
	부적절한 언행	1	이성윤
계		37	

※ 동일인이 여러 사유로 징계받은 경우 각 유형에 포함, 이름 가나다순

<징계 받은 검사 30명의 징계 사유 중 위법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현황>

(기간 : 2022. 5. ~ 2025. 5.)

징계대상	혐의	징계 종류	형사 처벌 경과
김도균 (부산고검 검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 전)	견책	2021.12.20. 경찰,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원재 (서울남부지 검 검사)	도로교통법상 위반(음주운 전), 음주 측정거부 등	해임	2024.04.14. 경찰, 채혈 요구 거부에 경찰 조사 2024.06.14. 남부지검, 불구속 기소 2025.02.06. 1심 재판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나의엽 (수원지검 검사)	청탁금지법 위반	정직 1월	2020.11.15. 서울남부지검, 나의원 및 접대 받은 현직 검사 3명, 검찰 출신 변호사 소환조사 2020.12.08. 서울남부지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¹³¹ 2022.09.30. 1심 재판부,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 선고 2023.08.24. 2심 재판부,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 선고 2024.10.08. 대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 선고한 원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5.05.23. 나의원 사직서 제출 2025.06.19. 파기환송심 재판부, 벌금 1천만 원 선고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명예훼손	해임	2020.07.19. 한동훈, KBS의 보도 관련 기자 및 허위 수사정보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고소 2022.08.25. 검찰, 신성식 압수수색 2023.01.05. 검찰, 한동훈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 현재 1심 진행 중 2024.03.04. 신성식, 법무부 장관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 제기
이규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서울동부지검 직무대리)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¹³²	해임	2021.12.19. 서울중앙지검,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의혹 관련 불구속 기소 2025.02.26. 1심 재판부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쌍방 항소 / 현재 항소심 진행 중 → 윤중천 3회 면담 중 녹취 없이 진술 요지를 허위로 복기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유죄 /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공문서 기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형사사법절차정보화촉진법 위반 등 무죄
이규원 (대검찰청 과거사)	자격모용공문 서작성,	해임	2021.04.01. 수원지검,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¹³¹ 당시 함께 접대를 받은 유효제 검사, 임홍석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전체 술값은 536만 원이
결제됐으나, 유효제·임홍석 검사는 밴드와 유흥접객원이 오기 전 자리를 떴기 때문에 그 전과 후를 구분해야 한다는
계산 결과다. 정리해보면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 1백만 원에 4만 원 못 미친 '96만 원어치 접대'로 유효제·임홍석 검사는
불기소되며 법망을 빠져나갔다.

¹³²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관련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문서 기밀 누설,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사사법절차정보화촉진법 위반 등이다.

징계대상	혐의	징계종류	형사 처벌 경과
진상조사단, 서울동부지검 직무대리)	공용서류은닉 등		2023.02.15. 1심 재판부, 징역 4개월 선고유예. 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무죄. 쌍방 항소 2024.11.25. 2심 재판부, 1심 판결과 달리 전부 무죄 선고 2025.06.05. 대법원 무죄 선고
이성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해임	2021.05.10.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성운 수사 중단 및 기소 권고 2021.05.12. 검찰, 이성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2023.02.1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중단 외압 의혹 1심 재판부 무죄 선고, 검찰 항소 2024.01.25. 2심 재판부 무죄 선고, 검찰 상고 2025.06.12. 대법원 무죄 선고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	특정범죄가중 법 상 독직폭행	정직 2월	2020.07.29. 한동훈, 정진웅 고소 2020.10.27. 검찰, 정진웅 한동훈에 대한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1.08.12. 1심 재판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선고 2022.07.21. 2심 재판부 무죄 선고 2022.11.30.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확정 2024.04.30. 정진웅, 법무부 장관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 제기 2025.01.21. 1심 정진웅 승소 판결, 검찰 항소 2025.06.25. 항소심 정진웅 승소 판결

대검찰청 징계 청구의 불투명성

법무부 징계 처분 결과는 관보를 통해 공개되는 반면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 내역은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 때문에 대검의 징계 청구가 규정에 준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대검의 청구에 비해 법무부가 더 가볍게 징계 처분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내역(청구 사유·징계 수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대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를 들어 비공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해당 청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가 확정되어 공직자의 성명과 징계사유, 처분 수위가 관보에 게시된 된 상황에서 대검찰청의 징계 처분 청구 수위 등 내역이 공개된다고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고,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검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은 일련의 징계 절차에서 대검의 징계 청구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2. 문제가 된 사건의 징계 처분

1) ‘라임 향응·뇌물 수수 검사’ 사건 폭로 1,672일 만의 솜방망이 징계 (2021~2025)

2025년 5월 14일, 법무부가 ‘라임 향응·뇌물 수수’ 검사 3인 나의엽·유효제·임홍석에 대한 징계 결과를 공고했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지 6년, 사건 폭로로부터 1,672일만에 내려진 결과다. 나의엽 검사는 정직 1월, 징계부가금 3배(3,491,301원)의 처분을, 유효제·임홍석 검사는 견책과 징계부가금 1배(664,767원)의 처분을 받았다.

과거 검찰은 해당 검사 3인에 대해 부실한 수사와 적은 형량의 혐의를 적용한 기소로 ‘제 식구 감싸기’ 수사·기소의 전형을 보여줬다. 특히 전체 술값 536만 원 중 밴드와 유흥접객원이 오기 전 자리를 떴기 때문에 그 전후를 구분해야 한다는 계산법으로,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 1백만 원에서 4만 원 못 미친 ‘96만 원어치 접대’ 받은 유효제·임홍석 검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기소, 재판과 더불어 징계가 이뤄지기까지 지난한 과정 또한 문제가 됐다. 법무부가 대검에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청했고, 대검은 2021년 8월 23일 기소된 나의엽 검사와 불기소된 유효제·임홍석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찰청은 나의엽 검사에겐 면직을, 나머지 두 검사에 대해 각각 정직과 감봉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¹³³는 2021년 12월 이들에 대한 징계심의를 정지 및 보류했다. ‘징계 사유에 관하여 공소 제기가 있을 때에는 사건 완결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검사징계법 제24조가 근거였다. 기소된 나의엽 검사 징계심의를 정지하며, 불기소로 재판을 받지 않는 유효제·임홍석 검사도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해 심의를 보류했다.

하지만 검사징계법 제24조는 공소 제기가 있더라도 징계 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을 때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2년 9월, 1심 재판부는 나의엽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향응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판결을 통해 증명자료가 마련된 만큼 징계 심의가 진행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했으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징계 절차에 재착수하지 않았다. 나의엽 검사는 1심과 항소심 재판부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2024년 10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원심이 향응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잘못 산정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법무부는 2025년 5월에서야 징계결과를 공고했다. 그리고 2025년 6월 19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의엽 검사는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101만 9,166원을 부과받았다.

¹³³ 검사징계법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에 따르면 검사 징계위원회는 법무부장관(위원장),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나익엽 징계와 관련하여 같은 날 발표된 이정현 검사 징계 사례와 비교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연구결과 제출기한 도과를 이유로 이정현에게 항응·뇌물 수수한 나익엽과 동일한 정직 1월을 내린 것이다.

2) 혐의 일부 확인에도 징계 없는 ‘고발사주’ 검사(2022~2025)

2025년 5월 현재,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2차례 변론을 마치고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검찰총장 직속 부서인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손준성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것이다.

2022년 5월,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손준성 검사는 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2024년 12월 6일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손준성 검사의 고발장 작성 관여 사실을 인정했다. 고발장 등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가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 역시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미래통합당에 전달된 고발장 초안이 검찰 내부에서 작성됐고, 해당 문건은 수사정보를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활용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2025년 4월 24일, 대법원은 상고기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검찰청은 2024년 1월 31일 감찰 결과 비위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재판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손준성 검사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거쳐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라임 항응·뇌물 수수 혐의의 나익엽 검사의 경우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절차를 중단한 것과 상반된 조치로, 검찰과 법무부의 ‘제 식구 감싸기’식, ‘이현령 비현령’식 징계와 감찰 행태를 보여준다.

이 ‘고발사주’ 사건은 국회의 탄핵소추로도 이어졌다. 2023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등 168명 의원이 국회에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의혹’을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는 ‘공정한 선거 방해’, ‘정당 민주주의 파괴’, ‘언론 자유 침해’, ‘검찰의 선거 개입’ 등 자유민주주의와 형사사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2023년 12월 1일, 재적의원 298명 중 175명 찬성으로 가결돼 손준성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됐다(사건번호 2023헌나3).

2024년 4월 3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근거로 “동일한 사유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일시 정지했다. 탄핵심판과 형사소송 목적과 성격이 다른 만큼 헌법재판소 자체적으로 별도 증거조사가 가능한데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결정에 비판이 일었다.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종료된 뒤인 2025년 5월 13일 탄핵심판이 재개됐으며, 변론을 마친 후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발장 작성 관여 사실이 일부 인정됐음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손준성의 혐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실수사로 인해 입증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손준성 검사에

대한 대검의 징계청구는 없었다. 윤석열, 한동훈 검사와 관련된 사건으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검사 대부분(이성윤, 박은정, 신성식)은 2024년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징계 받는 등 대조적인 징계 처분은 형평성 논란과 함께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 주요 관계자와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한 ‘선택적 징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3)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무력화, ‘감찰 주도’ 검사들 보복성 징계 의혹(2020~2025)

윤석열 검찰총장에 내려진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징계처분 적법성을 주장해야 할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및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 이후 소송에 소극적으로 임하며 결국 징계처분 취소가 결정됐다. 이후 상황이 급변해,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검찰 간부들에 대한 검찰 재기수사가 시작됐으며 여전히 결과가 나지 않은 상황이다.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12월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청구한 징계 사유 8개 중 ▲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혐의, ▲ 채널A-한동훈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한동훈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총 4개 사유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당시 윤 총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3월 4일, 윤 총장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제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항의하며 사표를 제출했지만, 사임 후에도 소송을 계속 진행했다.

2021년 10월 14일,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윤석열은 패소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이 인정되고 의결 절차상으로도 적법했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오히려 해당 처분이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석열은 항소했다.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은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됐다. 그런데 취소소송의 공정한 공소유지에 대한 의문이 크게 제기되었다. 소송을 진행해야 할 법무부장관에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 한동훈이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징계처분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에 채널A-한동훈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논란이 되었다.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법무부다. 따라서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할 법무부에 징계 이해당사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피고와 원고가 한 편인 기이한 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이노공 차관에게 담당 업무를 넘기면서도,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그를 “찍어 내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는 항소심에서 1심 승소를 이끈 법무부 소송대리인을 2022년 6월 해임했고, 7월까지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이 두 차례 미뤄지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가 ‘소송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만 제출하거나 증인 미신청 등 적극적인 항소 방어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알려지며, 사실상 패소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결국 2023년 12월 19일, 항소심은 절차상 위법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윤석열 손을 들어줬다. 정작 핵심인 판사사찰 등 징계사유에 전혀 판단하지 않은 판단이었다. 게다가 재판부는 징계 청구자인 법무부장관이 사건심의에 대한 직접 참가는 물론, 실질적 영향을 미칠 모든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봤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이 법무부장관에게만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자체를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셈이다. 이에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검사징계법’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 자체를 형해화시킨 판결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2023년 12월 29일, 법무부는 2심이 종료된 후 10일 만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 측의 승소가 확정되면서, 윤석열에 대한 징계처분은 취소됐다. 재판부 불법사찰, 수사 및 감찰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중차대한 사건과 관련된 징계가 대법원의 판단도 받지 못한 채 취소되어 버린 것이다.

이처럼 윤 전 총장 징계가 제도적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무력화된 반면, 징계를 주도한 검찰 간부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2022년 6월, 서울고검 형사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1년 만에 수사가 시작됐다. 이성윤, 박은정 검사 등이 ‘윤석열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즉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 목적으로 ‘한동훈-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자료를 받아서, 윤 총장 징계를 위해 법무부 검찰위원회에 제공한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한 것이다. 불과 1년 전, 이미 검찰은 법무부 검찰위원회 위원에게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들에게 감찰과 관련된 수사기록을 전달한 행위에 법령 위반이 명확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그럼에도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 박은정 검사의 친정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성윤 검사를 소환조사 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의 재기수사가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 진행되면서, 해당 소송을 염두에 둔 수사가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2023년 2월,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던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로 이첩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는 주임검사와 부서를 반복 교체하는 등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내부에서는 공수처 지휘부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직권남용이 아니다”는 판단을 전제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오고, 여 차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공수처 규정 위반 행위로 폭로자에 대해 감찰 실시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연되는 수사에 고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결국 윤석열 전 총장 징계처분은 소극적 대응으로 방기됐고, 징계를 주도한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맥락 속에서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징계와 감찰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한 것은 물론, 수사기관마저 제도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2023년 9월에는 검찰이 이성윤, 박은정 검사에 대한 감찰에도 착수했고, 이성윤, 박은정 검사는 2024년 3월 6일 해임됐다. 이 둘은 모두 ‘보복성 해임’이라며 반발했다.

4) 정치권 직행 현직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024)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들이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 출마를 준비하거나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한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는 「검찰청법」 제43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가 명시한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2024년 관련 징계들이 이뤄졌다.

가장 논란이 된 인물은 김상민 검사이다. 2023년 추석 무렵,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던 김상민 검사는 지인들에게 “저는 뺏속까지 창원 사람입니다. (중략) 지역 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김상민이 되겠습니다”는 등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사실이 국회를 통해 알려지자, 김 검사는 ‘정치적 의미가 없는 안부 문자였고 총선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검찰에 착수했던 대검찰청 검찰위원회는 이런 해명을 고려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검사장 경고’를 권고했다. 그러나 대검 검찰위 결정 직후인 2023년 12월 28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며 출판기념회 개최를 예고했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상민 검사 행보를 정치적 중립 훼손으로 보고 추가 감찰을 지시, 김상민 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전보조치했다.

김상민 검사는 2024년 1월 6일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출판기념회를 강행했고, 1월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제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2024년 2월 15일, 법무부는 최종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상민 검사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남 창원의회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3월 2일 예비후보에서 컷오프됐다. 검찰은 3월 초순, 김상민 검사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사례는 더 있었다. 박대범 당시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은 2023년 12월경 국회의원을 찾아가 ‘정치를 하고 싶으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드러나 특별감찰을 받았다. 박대범 검사가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징계는 감봉 3개월에 그쳤다. 그러나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 활동을 시사한 점은 김상민 검사와 같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란 문제가 제기됐다.

이밖에도 ‘국회로 가려는 검사님들’의 행렬이 이어졌다.¹³⁴ 박용호, 박은정, 신성식, 이규원, 이성윤 검사 등 총 6명의 현직 검사가 총선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이들은 징계 절차(심의 정지 포함) 중에 있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 선언 등 현직 검사의 정치권 직행을 뒤따랐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 통제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치적 사안과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 검사들은 직무 수행에 있어 공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정치적 중립이 담보되어야 한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총선 출마를 준비한 것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훼손한다. 현직 검사의 신분으로 특정 정당에 공천을 신청하고 입후보한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총선이라는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이 특정 정당에 입당하고 공천을 신청하는 과정은 ‘검찰의 정치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현실화한 것으로 부적절하다.

¹³⁴ [참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유권자가 알아야 할 ‘국회로 가려는 검사님들’](#)”, 2024.04.03.

5) 사건방치 공소시효 도과 직무태만 검사들 (2022~2024)

공소시효는 사법절차에서 피의자 처벌 가능성을 가르는 최소한의 시간적 기준으로, 검사 직무수행에 있어 기본 중 기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건을 방치해 공소시효를 넘기는 직무태만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검찰 내부 징계 수준은 여전히 경미하다.

이례적으로 2021년 7월, 공수처가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장 모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사건이 있다. 장 모 검사는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피해자는 장 모 검사가 고의적으로 공소시효를 넘겨 무혐의를 내린 것이라 보고, 장 모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례적으로 해당 검사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2년 5월 장 검사는 불기소 처분됐다. 이 사건은 검사 직무태만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으려는 첫 사례로 주목받았으나,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3년 간 공소시효 도과해 사건을 방치하여 직무태만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 3인 중 2인(안제홍 청주지검 검사, 김필수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는 견책을, 1인(박홍규 창원지검 검사)은 감봉 1개월을 받았다.

사건 처리를 방기해 피의자를 기소하지 못하게 된 것은 검찰 기본 책무 방기이지 직무유기에 해당함에도, 반복적으로 미미한 수준의 징계를 내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비위, 불법 행위 등에 대해 단죄해야 할 공수처조차 공소시효 도과라는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이 일었다.

6) 음주운전(2022~2024)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공직사회에서도 강력한 징계와 처벌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사가 '예비살인'이라 불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검사들의 음주운전은 반복되고 있고, 이에 대한 징계 수위도 여전히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12월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공무원은 음주운전 1회라도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이라면 정직에서 해임까지 가능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지침」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고, 최대 면직까지만 허용하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 기준을 유지했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지침」은 2022년 9월이 되어서야 개정되어, '음주운전 1회,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에 대해 정직~해임 조치한다는 기준과 '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 불응'에 대해 정직~해임 조치한다는 기준이 도입됐다. 그러나 실질적인 징계 처분은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 2022년 8월 징계처분을 받은 김도균 부산고검 검사는 2021년 12월 3일, 혈중알콜농도 0.044% 상태로 약 11km 정도 운전했다. 당시 옆 차선을 달리던 차와 충돌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한 인물이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지침」상 음주운전으로 인적 혹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징계 조치 기준은 정직에서 해임까지로 규정돼있다. 그러나 김도균 검사가 받은 징계는 검사 징계 중 정직보다 두 단계 낮은 수준의 징계임은 물론, 제일 낮은 수위의 처벌인 ‘견책’이다.

- 성인욱 인천지검 검사는 2022년 1월 23일 새벽 1시 18분께 혈중알콜농도 0.107% 정도로 술에 취해 약 20km 구간을 운전했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8%를 훌쩍 넘긴 수치이다. 법무부는 2022년 9월, 징계 조치 기준(정직~강등(정직·면직)) 안에서 정직 처분을 내렸는데, 그마저도 정직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개월에 그쳤다.
-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징계는 시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혈중알콜농도 0.034%로 음주운전한 김형근 서울고검 검사는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지침」상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의 음주운전(1회) 징계 기준은 감봉에서 정직까지라는 것을 무력화한 징계이기도 하다.
- 임병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는 2024년 2월 15일경,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법무부는 이에 2024년 11월, 정직 1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지침」상 감봉~정직 범위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면죄부성 징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 수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조차 가장 낮은 정직 수준에 그친 점은 검사에 대한 징계가 여전히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주 사이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적발된 김원재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해임됐다. 김원재 검사는 2024년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김원재 검사는 경찰과 함께 혈중알콜농도 측정 목적의 채혈을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병원 접수 과정에서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2주 뒤인 4월 25일, 김원재 검사는 서울 양천구에서 음주 상태로 또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으며 검거됐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7%였다. 그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2024년 11월 최종 해임 처분을 내렸지만, 결국 두 차례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까지 이어진 뒤에야 해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징계 기준이 관대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7) 부실수사·과잉수사 등 수사권 오남용에도 징계나 처벌받지 않는 검사들(2025)

2025년 법원의 확정 판결과 재정신청 기각 결정 등을 통해 과거 주요 사건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검사 비위와 관련된 사법적 결론이 뒤늦게 나왔지만, 징계와 책임 규명은 여전히 실종된 채 마무리 된 사례들이 적지 않다.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되거나 수사와 처벌이 지체됐고 종국에는 유야무야된 것이다.

김학의 성 접대 의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재수사를 거친 끝에 기소가 이뤄졌으나 대법원에서 공소시효 도과, 혐의 입증 부족 등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2025년 5월 8일,

김학의는 구금에 대한 보상 1억 2,510만 원과 비용에 대한 보상 899만 5,000원, 즉 1억 3,400만 원 가량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

2013년 3월 15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던 검사장 김학의가 2007년과 2008년 경 건설업자인 윤중천의 별장에서 여성들을 강간하는 등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6일만에 사퇴하고, 경찰이 수사하여 증거와 함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계속 반복해 무혐의 처분하며 진상을 은폐했었다. 이후 2018년 과거사청산을 위해 설치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조사사건으로 선정하고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검찰이 재수사했지만, 2019년 6월 김학의를 성범죄 혐의를 제외한 뇌물 혐의로만 구속기소했다. 1심 무죄로 석방됐다가 2심 유죄 판결로 다시 구속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석방되었고, 재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 결과 국가가 김학의에게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 등을 형사보상을 한 것이다.

김학의의 무죄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검찰이 제때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결과이다.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검찰(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검찰 출신으로 최초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1회 밖에 실시하지 않고 불기소했다.

공수처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검사들에 대해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여러건 고발이 있었다. 특수직무유기 공소시효가 10년이기에 2013년 11월 11일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들이 혐의가 인정되면, 공수처가 2023년 11월 10일까지 재판에 넘겨야 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11월 8일, “당시 수사팀에서 혐의를 명백히 인식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피고발인 3명 중 현직 검사 2명은 끝내 조사도 못한 채 내린 결론이었다. 결국 과거 부실·왜곡 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파묻어 당시 수사지휘라인이던 검사들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

‘김학의 사건’은 정치검찰의 부패와 제 식구 봐주기, 권력 유착을 우리 사회 알린 대표적 사건임에도, 김학의는 무죄 확정 판결로 형사보상금을 받고 사건 수사를 몽갓던 검사들은 10년이 지나도록 그 어떤 징계도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것이다.

(참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2013, 2014, 2019\)](#))

검찰의 무리한 기소권 행사로 무죄가 확정되고, 보복성 기소로 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건에서도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보복성 기소 피해자 유우성 씨는 관련 검사들을 권한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공수처는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이들을 불기소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했지만 2025년 2월 13일,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 사실상 검사의 권한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더 이상 물을 수 없게 됐다.

2013년 2월, 검찰(서울중앙지검장 최고일 - 2차장 이금로 - 공안1부장 이상호 - 주임검사 한정화)과 국정원은 당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유 씨의 동생을 협박, 회유해 허위 진술했다는 것이 드러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2심 재판과정에서는 국정원이 조작한 문서를 증거로 검찰에 제시했고 검찰은 이를 사실상 인지하고도

이를 그대로 법정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 등이 드러나 무죄가 확정됐고, 담당 검사들은 직무 태만으로 정직 1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2014년 5월, 검찰(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 - 1차장 신유철 - 형사2부장 이두봉 - 검사 안동완)은 수년 전 기소유예 처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어 2014년 5월 보복성 기소를 했고,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은 사법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임을 인정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이런 위법적 권한 남용에도 불구하고 처벌받거나 징계 받은 검사는 없다. 검사들이 증거로 제출된 문서 조작에 관련한 바가 없고 알고도 제출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수사 및 공판 관련 검사 2명(이시원, 이문성 검사)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이후 증거조작이 아닌 위조된 서류에 대한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정직 1월의 징계를 받기는 했다).

이시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됐다. 아울러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명예퇴직을 하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해당해 명예퇴직 수당을 받았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한정화 역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이 되었다. 이두봉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 인천지검장, 대전고검장 등 영전하다가 무탈하게 의원사직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안동완은 2024년 현직 검사 최초로 탄핵소추된 불명예를 받았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각 5명, 인용 4명으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파면에 이르지지는 않았다. 올해 5월, 안동완 역시 무탈하게 의원사직했다. 이 외에도 김수남은 검찰총장까지 역임하는 등 다른 수사권 남용 검사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사건은 10년을 끌어온 검찰의 보복성 기소와 증거조작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음에도 정작 해당 검사는 법적 처벌을 면했다.

유우성 씨는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피해자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범죄자를 공직에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참고.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 \(2013\)](#))

한편, 비위행위는 확인됐음에도 제대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재판에서 유죄가 확인된 사례도 있다. 윤혜령 전 부산지검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2015)이다. 이 사건은 2025년 3월 13일 대법원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다시 관심이 집중됐다.

2025년 윤혜령 전 검사는 부산지검 재직 당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문건을 위조했다. 윤혜령 전 검사는 사건이 알려지자 ‘고소장 분실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서를 냈고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 2022년 공수처는 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윤혜령을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소장을 대체 편철한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공수처의 증거만으로 윤씨에게 문서를 위조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3. 검사 탄핵(2023~2025)

헌법 제65조¹³⁵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즉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이다.¹³⁶

탄핵제도는 일반적인 정치과정 혹은 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 징벌하기 곤란한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나 법관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하는 비리를 범한 경우, 이를 특별한 절차 특히 의회의 절차를 통해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이다. 이는 법적 책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후적 교정장치이자,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사전 예방장치로 기능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이 일반 징계법률로는 파면할 수 없는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검사 역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등 위헌·위법적 행위를 했을 시 탄핵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는 반면,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바로 검사탄핵제도이다.

즉 검사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일반적인 징계절차로는 단순 해임까지만 가능하고 향후 5년간 공직취임이 금지되는 파면 처분을 할 수는 없다. 검사가 외압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래서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 등의 정치기관에 의해 함부로 파면이라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에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 검사를 파면하는 검사탄핵제도는 국회가 검찰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가장 유력한 장치이자 민주적통제장치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검사의 탄핵은 전무했는데,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고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인 가운데, 수사통치와 정치검찰의 권한 남용의 폐단이 극심해지면서, 국회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적극 고려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하(2023~2025)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14회의 검사 탄핵소추안이 제안됐다. 이중 6건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았다(4건 철회, 5건 국회 계류(본회의 보고 전)). 5명(안동완, 이정섭,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렸고, 1명(손준성)은 심리 중에 있다.

¹³⁵ 제65조 ①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¹³⁶ 헌법재판소 2004.05.14.선고 2004헌나1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5번의 검사 탄핵심판에서 모두 기각을 결정했다. 각각의 탄핵소추 사유에 따라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와 그 위반의 중대성 등을 판단하여야 함을 당연지사나 헌법재판소의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종래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중대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최근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검찰권 오남용의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하고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했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징계나 처벌을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가 개별 검사의 탄핵소추 발의에 있어 탄핵사유 등을 증명하는 청문회나 증거수집 등의 절차를 충실히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탄핵안이 가결되었으나 현재에서 기각된 대부분의 경우 탄핵사유를 증명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안동완 검사처럼 명백한 탄핵사유(위법)가 있음에도 현재가 기각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앞으로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등 검찰개혁 추진후 과연 검사를 일반공무원과 구별해 탄핵심판제도를 통해 파면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 [▲광장에 나온 판결 : 공소권 남용 검사에 면죄부 준 현재, 수치는 왜 우리의 몫인가? / 헌법재판소의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청구 기각 결정 판결비평](#))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 명단>

(2022. 5. ~ 2025. 5.)

	제안일자 (의안번호)	피소추자 (당시 소속)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일자)	현재 결정 (일자/사건번호)	소추 사유
1	2023.09.19. (2124564)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가결 (2023.09.21.)	기각 (2024.05.30. 2023헌나2) <5(기각)대 4(인용)>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 등
2	2023.11.09. (2125309)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철회 ¹³⁷ (2023.11.10.)	-	수사정보정책관이란 직위를 이용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작성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침 등
3	2023.11.09. (2125310)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철회 (2023.11.10.)	-	검사 신분을 남용해 일반인의 범죄기록 등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친인척에게 제공,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를 기업 관계자 조력받아 이용, 위장전입 등
4	2023.11.09. (2125311)	이희동 (대검 공공수사기 획관)	철회 (2023.11.09.)	-	고발사주 사건에 직접 연루된 김웅 수사 과정에서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웅 불기소처분 등
5	2023.11.09. (2125312)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	철회 (2023.11.09.)	-	검사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 수천억 원대 횡령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유혹주점에서 향응 및 접대의혹 등
6	2023.11.28. (2125635)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가결 (2023.12.01.)	심리 중 (2023헌나3)	수사정보정책관이란 직위를 이용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작성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침 등
7	2023.11.28. (2125636)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가결 (2023.12.01.)	기각 (2024.08.29. 2023헌나4) <전원일치 기각>	검사 신분을 남용해 일반인의 범죄기록 등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친인척에게 제공,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를 기업

¹³⁷ 2023년 11월 9일 발의됐던 손준성·이정섭·이희동·임홍석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11월 9일~11월 10일 철회된 바 있다. 탄핵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에서 팀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합의된 일정 외에 추가로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일정을 잡을 수 없다고 해 부득이 철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제안일자 (의안번호)	피소추자 (당시 소속)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일자)	현재 결정 (일자/사건번호)	소추 사유
					관계자 조력받아 이용, 위장전입 등
8	2024.07.02. (2201277)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소관위심사 ¹³⁸	-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하게 압수수색 등
9	2024.07.02. (2201278)	김영철 (서울북부 지검 차장검사)	소관위심사 ¹³⁹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 요구 및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
10	2024.07.02. (2201279)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소관위심사 ¹⁴⁰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의혹 등
11	2024.07.02. (2201280)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소관위심사 ¹⁴¹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 위증 교사 의혹 등
12	2024.12.02. (2206108)	이창수 (서울중앙 지검 검사장)	가결 (2024.12.05.)	기각 (2025.03.13. 2024헌나3) <전원일치 기각>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부실 수사 및 수사 관련 대국민 상대 허위 수사결과 발표 등
13	2024.12.02. (2206109)	조상원 (서울중앙 지검 제4차장)	가결 (2024.12.05.)	기각 (2025.03.13. 2024헌나4) <전원일치 기각>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부실 수사 및 수사 관련 대국민 상대 허위 수사결과 발표 등
14	2024.12.02. (2206110)	최재훈 (서울중앙 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	가결 (2024.12.05.)	기각 (2025.03.13. 2024헌나5) <전원일치 기각>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부실 수사 및 수사 관련 대국민 상대 허위 수사결과 발표 등

¹³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4년 11월 27일 강백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안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2024년 12월 1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12.3 내란사태가 발발하며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¹³⁹ 2024년 8월 1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가 열렸다. 탄핵소추 대상자인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는 “당사자가 조사 절차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¹⁴⁰ 2024년 10월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가 열렸다. 김영철 검사에 이은 두 번째 검사 대상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였으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를 비롯해 주요 증인이 대거 불출석했다.

¹⁴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4년 11월 27일 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안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2024년 12월 1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12.3 내란사태가 발발하며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제안일자 (의안번호)	피소추자 (당시 소속)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일자)	헌재 결정 (일자/사건번호)	소추 사유
15	2025.05.01. (2210329)	심우정 (검찰총장)	소관위접수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및 윤석열 구속기소 관련 헌법·법률 위배 등
참 고	2024.12.10. (2206348)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가결 (2024.12.12.)	기각 (2025.04.10. 2024헌나6) <전원일치 기각>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삼청동 안가 회동 참여 등으로 비상계엄 사태 적극 관여

III. 검찰청 검사 파견 현황

대통령실-법무부-검찰 카르텔 공고화 검찰의 법무부 재장악

참여연대는 검찰보고서에 법무부의 검찰화, 외부기관의 검사 파견 확대 등을
검찰 권력 확대의 주요 징후로 보고 이에 대한 현황을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법무부와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의 수는 각각 58명, 50명(35개 기관)으로
총 108명이 검찰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대통령실과 법무부 · 검찰 관계

민정수석비서관 : 대통령과 법무부 · 검찰의 연결고리

민정수석실은 여론 및 민심을 파악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며, 법률 보좌 및 반부패는 물론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직무 감찰과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 그 역할이 광범위했다. 그러나 사정기관 총괄 기능이 핵심 권한이라고 여겨졌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총괄해 사정기관이 수집하거나 생산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 사실상 대통령의 눈과 귀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실이 사정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은밀히 내사를 지시하고, ‘적당한 시기’에 이를 언론이나 정당에 공개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수사권, 기소권 등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검찰이었다.

검찰이 과거 정부에서 진행했던 수사가 차기 정부에서 재수사하며 결과가 뒤바뀌거나, 새로운 정부의 방향에 따른 수사는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검찰 - 법무부장관 - 민정수석비서관 - 대통령(비서실)이라는 오랜 유착 관계가 있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비서관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의 수사와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검찰을 통제하고, 검찰이 정권의 보위 기관 노릇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민정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한 유착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검찰이 정권에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민정수석비서관을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검찰개혁을 시도하거나 주도했던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는 임기 내 각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비검사 출신을 임명한 반면,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는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민정수석비서관의 ‘출신’ 여부가 곧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나타낸다고 여겨질 만큼, 민정수석비서관의 영향력이 지대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윤석열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며 공약한 바와 같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2022년 5월 윤석열정부가 시작되면서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비서관을 폐지하되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기능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 이관하고,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지만 법률비서관을 포함해 그 기능 일부는 유지했다.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는 법무부에 공직후보자의 인사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그러나 최측근인 한동훈 당시 검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

강력한 검찰을 통할하는 법무부에 현직검사가 파견된 인사정보관리단까지 설치됨으로 인해 법무부와 검찰의 정보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민정수석비서관직이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그 기능의 상당부분을 법무부에 이관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통령의 최측근 검사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과거 민정수석비서관의 권력까지 행사하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검찰을 지휘감독하고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장관에 현직 검사를 지명하여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및 견제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후에도 후임으로 측근인 검사 출신 박성재 변호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 검찰의 수사 및 인사 개입 우려는 지속되었다.

2024년 5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 정보’를 듣겠다며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켜 검사 출신 김주현 변호사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여당의 총선 패배하자 민정수석을 부활시켜 검찰·경찰 등의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대통령실의 정보수집이 확대하겠다는 취지였다. 실제 검사 출신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 부활은 검찰국가를 더욱 공고화하는데 수단이 되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 검찰 : 검찰 카르텔

2024년 5월 13일, 법무부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장으로 좌천성 승진 조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수사를 지시하고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후였다.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취업 청탁 의혹 수사를 담당할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되었다.

2024년 9월,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이원석의 후임으로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 인사청문회에서 김주현 민정수석이 대검 및 법무부 근무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고, ‘민정수석의 지시를 잘 따르고, 대통령 일가 수사를 안 할 수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김주현 민정수석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요식적인 국무회의를 거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수사, 기소, 재판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들의 검찰 카르텔은 그 힘을 발휘했다.

12월 4일,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그날 저녁,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이 참석한 안가(안전가옥) 회동이 있었다. 이들 외에도 경찰 수사 결과 한정화 법률비서관도 현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주현, 박성재, 이완규는 국회 진술에서 안가 회동은 후속 논의나 2차 계엄 모의 목적이 아닌 단순한 식사모임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진술이 바뀌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4일 낮 1시 6분경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 ‘의원들을 국회에 출입시켜 계엄 해제가 빨리 해결되어 유혈 충돌 없이 잘 끝났다고 격려’하는 내용으로, 1시 45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에게 전화해 ‘절박했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해볼 도리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년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는 취지로 모인 것이었다고 밝혔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12월 4일) 점심이 조금 지난 무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김주현) 민정수석과 모여 식사 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현 민정수석은 안가 회동 전인 오전 11시 18분과 안가 회동

후인 오후 10시 43분, 윤석열과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고, 김주현은 대통령 직무 정지 전이므로 특별한 통화가 ‘아닐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이 모임 이후 휴대폰을 교체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윤석열의 최측근이자 검사 출신 법조인인 김주현, 박성재, 이완규, 그리고 이상민의 안가 회동 목적에 대한 의혹이 크다.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은 회동이 있었던 바로 다음날인 12월 5일, 강익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에게 전화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고 질문하자, 강익구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된 비상계엄 선포문을 새롭게 작성해 한덕수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며칠 뒤 한덕수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했고, 이를 보고 받은 윤석열이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면서도 한덕수의 뜻대로 하라고 지시해, 결국 문건은 폐기됐다. 사실상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인지하고 사후에 공문서를 조작하려고 한 것이다. 이같은 시도가 삼청동 안가 회동 바로 다음날에 김주현의 전화로 시작되었는 점에서 삼청동 안가 회동의 목적에 대한 의혹은 더욱 짙다.

김주현 민정수석은 2025년 1월 22일,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거부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12월 5일 오전, 민정수석실에서 격노해 ‘홍장원을 때려죽이겠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12월 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날 또는 당일 날, 출석과 관련해서 대통령이나 국방부, 검찰과 어떠한 이야기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출석과 관련해 검찰과 통화하면서 ‘대통령과 통화해 보겠다’고 전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 ‘지금 출석해도 되겠냐’고 묻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협의해 보라’고 답해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출석 여부를 상의했다는 김용현의 검찰 진술에 대한 의혹도 부인했다. 검찰이 통화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비화폰 전화번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방부 차관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자진출석과 김용현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2025년 3월 7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시간’ 산정에 즉시항고로 대응하지 않았으면서도, 관례대로 ‘날’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였다. 결국 검찰은 기간 만료시까지 즉시항고하지 않았고,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4월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측근이자 안가 회동에 참여했던 검사 출신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으나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으로 중단되었다.

2024년 12월 12일, 국회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렸다고 알려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비상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함께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을 해 2차 계엄 논의 의혹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5년 4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하자, 120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였다.

윤석열정권 3년은 정부 요직에 포진한 검찰출신 인사들로 시작해 검찰로 이어지는, 검찰 카르텔의 시간이었다.

대통령비서실 : 검찰 출신, 검찰 근무연이 장악

과거 검사의 대통령 비서실 편법 파견은 검찰과 정권 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과거 대통령비서실 파견 검사를 통해 정부가 ‘하명수사’를 지시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주고받아 정치적으로 악용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되었다. 대통령실과 검찰은 관행적으로 파견할 검사의 사직 후 대통령실 취업, 대통령실 퇴직 후 곧바로 검사 임용이라는 꼼수를 써왔다. 이와 같은 폐단이 계속되자, 검사 사직 후 1년간 대통령실 임용 금지, 대통령실 퇴직 후 2년간 검사 임용을 금지하도록 검찰청법이 개정되었다(2017.2.).

윤석열정부와 검찰, 법무부 간의 유착관계는 대통령실에 검찰 출신을 다수 임명하는 방식으로 강화됐다. 대통령 당선 직전까지 검찰에 오랫동안 재직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 인맥을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예견된 미래이자 현실이었다. 이미 직간접적으로 선거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검찰 출신이 대거 참여했으며, 이들은 정부 요직 곳곳에 임명되었다.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 또한 당연히 예외가 아니었다.

윤석열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함께 근무했었던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을 차관보급 인사기획관을 신설해 임명했고, 강익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총무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공소권 남용 비판을 받았던 이시원 전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대통령 장모 등 처가 관련 의혹에 대응했던 이원모 전 대검 검찰연구관을 인사비서관으로, 대선캠프 법률지원팀에서 활동했던 주진우 전 검사를 법률비서관으로 임명했다.

한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해병대 수사관의 채 상병 사망사건 경찰 이첩 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회수 과정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하거나 대면한 사실이 공수처 수사로 드러났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회수한 채 상병 사망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재검토 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이첩하지 않았다.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사건 이전 통화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공직기강 문제와 연루되어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공직기강비서관이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는 점, 경찰 이첩 후 회수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통화했다는 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사건을 회수한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게 10차례 넘게 대면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 등으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잇는 수사 외압의 연결고리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시원 비서관은 2024년 5월 사직했다.

이시원 비서관의 뒤를 이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윤석열정부 초대 인사비서관을 역임한 이원모 비서관은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했으나, 낙선한 후 대통령실로 복귀했다. 그러나 2025년 4월 다시 인사비서관을 사직하고 정당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초대 법률비서관을 맡았던 주진우 전 검사는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사직한 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검사 출신인 이영상 전 국제법무비서관이 법률비서관을 사임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역시 검사 출신인 한정화 변호사를 법률비서관으로 임명했다. 한정화 법률비서관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함께 공소권 남용 비판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바 있다. 한정화 비서관이 2024년 12월,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후 사직하자, 윤석열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 채명성 변호사를 새로운 법률비서관으로 임명했다. 비검사 출신 채명성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과 국정농단 형사재판 변호인단이었다. 임명 시기로 인해 법률비서관실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실이 '윤석열 로펌 용산출장소'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로펌 용산출장소'라는 비판은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있어왔다. 일례로 대통령 비서실이 2023년 1월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국회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소송끝에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공개 받아 확인한 결과, 해당 규정 어디에도 법률비서관실이 김건희 씨의 개인의혹과 관련된 소송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당시 법률비서관, 즉 주진우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 공적 권한과 자원을 사유화한 것이다.

142

<윤석열정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검찰청 및 검사 출신 근무자 현황>

(2022.5.~2025.5.)

직책	이름	전직 ¹⁴³	근무 기간 (2024.05. 기준)	비고
민정수석비서관	김주현	전 대검 차장 전 법무부 차관	2024.05.07. ~ 현재	재직중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전 대구고검 검사 (2014.8~2016.1)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	2022.05.10. ~ 2024.05.	-
	이원모	전 대검 검찰연구관 (2019.8~2020.8) 전 인사비서관	2024.05. ~ 2025.04.(추정)	-
법률비서관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2022.05.10. ~ 2024.01.08.	총선 출마로 퇴직 (국민의힘, 당선)
	이영상	전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전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 전 국제법무비서관	2024.01.08. ~ 2024.05.	-

¹⁴² 참여연대 보도자료, 대통령실, 법적 근거 없이 김건희 개인의혹 관련 명예훼손 고발 업무 수행해(2025. 4. 21.) <https://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990075>
¹⁴³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대검 검찰총장 2019.07.~2021.03.,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2017.05.~2019.07. 등)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근무 연월을 함께 기재함.

직책	이름	전직 ¹⁴³	근무 기간 (2024.05. 기준)	비고
	한정화	전 대검 범죄정보담당관	2024.05.30. ~ 2024.12.	비상계엄 후 사직 ¹⁴⁴
인사비서관	이원모	전 대검 검찰연구관 (2019.8~2020.8)	2022.05.10. ~ 2024.01.08.	총선 출마로 퇴직 (국민의힘, 낙선) ¹⁴⁵
민생특별보좌관	주기환	전 광주지검 수사과장 (2003~2005) 전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2024.03.21. ~ 2024.06.	이후 공석(추정)
총무비서관	윤재순	전 서울중앙지검 수사제2과장(2016.8) 집행제2과장(2018.7)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2020.2~2022.1)	2022.05.10. ~ 현재	재직중
부속실장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 (윤 총장 재직 중 ~2021.8)	2022.05.10. ~ 현재	재직중
인사기획관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2019.10~2021.10)	2022.05.10. ~ 2024.05.23.	보직 폐지 (2024.05.)
국제법무비서관	이영상	전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전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	2023.01.09. ~ 2024.01.08.	보직 폐지 (2024.01.)

인사정보관리단 : 인사 실패의 책임은 누가지나

2025년 2월 6일,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비상계엄 이전에 민주당으로 인한 국가 기능에 심각한 훼손이 있었다, 특히 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며 인사정보관리단 운영비 3억 3천만 원 전액 삭감과 검찰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주진우 의원의 발언의 배경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이다. 앞선 2024년 예산안 심사 당시 검찰과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등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비(인건비 제외) 근거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024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근거 자료 미제출 등으로 검증이 불가능하므로 검찰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비 포함 총 4억 1,90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며, 법무부의 소관 업무가

¹⁴⁴ 후임으로 채명성 변호사를 임명했음. 채명성은 비검사 출신 변호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과 국정농단 형사재판 변호인이었음.

¹⁴⁵ 이원모 후임으로 최지현 부대변인을 임명함. 최지현은 비검사 출신으로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했음.

아님에도 시행령에만 근거하여 운영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타 부처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덧붙였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인 2022년 6월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인 「공직후보자 정보수집·관리 규정」과 법무부 직제 개편만 시행해 행정조직 법률주의 헌법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행정각부 하나에 불과한 법무부가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을 맡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과 3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점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행정각부 중 하나인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을 부여해 다른 행정각부의 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을 담당해 권력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인사혁신처가 아닌 인사정보관리단에 광범위한 정보 생산 기능을 부여하고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 법무부와 검찰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다는 점 등의 우려도 제기되었다.

대통령실은 “향후 권한의 분산과 견제의 원리에 따라 인사 검증 업무의 객관성, 중립성,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대통령실에 집중되었던 인사추천, 인사검증, 검증결과 최종판단 기능을 다수 기관에 분산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 하에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사검증 업무를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하고 ‘밀실에 이뤄진다는 과거 민정수석실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 통상의 부처 업무에 편입시켜 인사검증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7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가 사실 확인과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데 특징점이 있고, 대통령실에서 하던 밀실에서 이뤄진 업무를 루틴하고 부서의 통상업무에 편입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법무부를 선택한 것”이며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3년 동안, 인사정보관리단¹⁴⁶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다. 예를 들어, 2023년 2월,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내정된 후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검사 출신을 독립성이 필요한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해 경찰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라는 문제에 더해,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과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법무부는 검증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았고 대통령실 또한 변명에 급급했을 뿐 인사검증 담당자 문책 등도 없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 내정자 뿐 아니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자녀 학교폭력 논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10억 원 가량의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논란), 김형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주식 파킹 논란)와 같이 임명이 불발되거나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자녀 학교폭력 논란, 근무 중 주식 논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음주운전 논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¹⁴⁶ 참여연대는 2023년 3월, 인사정보관리단의 생산문서목록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상 ‘세부사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의 제목과 그 목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야 하는데도 인사정보관리단이 공개하지 않는 목록이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본질적인 기능과 관계없는 일부 목록만 공개하는데 그쳤다. 또한 인사정보관리단은 ‘세부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세부사항’은 인사검증 결과나 개인정보가 아니라 법무부가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 또는 관리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즉, 운영지침에 불과했는데도 비공개처분한 것이다. 법무부는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했다는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정감사에서의 자료 요구도 거부했다.

후보자(법인카드 유용 논란) 등 임명이 강행된 인사들에게서도 자질과 더불어 인사 실패 논란이 이어졌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집한 자료는 의견을 부기하지 않은 상태로 기계적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까지만 한다”며 윤석열정부의 인사실패 책임에 선을 그었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실패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2025년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된 후, 4월 8월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¹⁴⁷ 등을 지명했다. 2025년 4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4월 7일 오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연락을 받고, 오후에 검증동의서를 송부한 후 4월 8일 10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을 발표했다는 질의가 있었다. 해당 회의에서 국무총리비서실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공문을 주고받은 내역이 없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인사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으며, 탄핵으로 인해 직무정지된 기간 중 발생한 일이므로 확인 후 답하겠다고 했다.

인사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고, 밀실에서 이뤄진 업무가 루틴한 부처의 통상 업무로 편입하겠다는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인사 절차의 개선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¹⁴⁸. 법무부와 검찰의 확대된 인사 정보 수집 권한이 남았다. 윤석열정부 3년 동안 벌어진 일이다.

¹⁴⁷ 권한대행일 뿐인 한덕수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으로 중단되었으나 윤석열의 최측근 중 한 명이자 비상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었다는 사실은 큰 논란을 일으켰다.

¹⁴⁸ 2025년 6월 10일, 이재명정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 검사의 법무부 파견

검사의 법무부 파견 문제 : 검찰의 법무부 장악

검찰청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 외청(外廳)이다. 그러나 장관과 차관, 법무부 국실장 등 주요 보직은 물론, 검찰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한 부서의 주요 직책까지 검사들이 대거 임명되면서 법무부가 검찰청에 역으로 장악되었다.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었고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은 검찰 기득권 중심 사고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검찰 내부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독립적인 감독과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법무부¹⁴⁹는 검찰 사무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인권과 민생 정책 등을 조율해야 하지만, 법무부의 요직 대부분을 검사들이 장악하면서 국가 법무행정이 검찰의 시각으로 진행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를 검사 출신으로 채운다는 것은 검찰의 기득권이 그만큼 강해지는 것이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그 자체가 법무부의 개혁이자, 더 큰 검찰개혁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이에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문재인정부는 법무부 탈(脫)검찰화를 추진했다. 박근혜정부 시기 법무부 파견 검사가 최고 검사 70명에 달했던 것에 비해, 문재인정부 시기 파견 검사는 32명까지 대폭 감소하고 비검사 보직 직제 개편 등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문재인정부가 대부분의 직제를 검사 보임이 불가능하게 개정한 것이 아니라 검사도 보임가능한 복수직제로 개정한 것이 언제든지 법무부 탈검찰화가 역진 가능하다는 우려는 표명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같은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윤석열정부는 탈검찰화 지우기는 넘어 법무·검찰 내부에서의 폐쇄적 인사 운영 방침을 명확히 했다.

검사의 법무부 파견 현황

윤석열정부는 복수 직제(일반직 또는 검사 임명 가능)되어 있는 자리에 검사로 보임하거나 신설/개편된 보직에 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법무부 파견 검사 인원을 늘리면서 법무부 재검찰화를 진행했다.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답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법무부 파견 검사 인원은 2023년 기준 45명, 2024년 기준 56명, 2025년 5월 기준 58명이다. 윤석열정부는 2024년부터 법무부 차관에 검사가 보임해, 이를 포함하면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의 수는 각각 57명, 59명이다. 2021년 기준 문재인정부 법무부 파견 검사 인원인 33명에 비해 2025년 윤석열정부의 파견 검사 인원은 26명이 증가한 수치다(약 80% 증가).

¹⁴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갇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별치조항을 포함한다)·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1. 4. 23., 2007. 5. 4., 2016. 10. 11., 2021. 1. 5.>

복수 직제로 법무부 일반직공무원 등이 임명되어 법무부 내부 승진 가능성을 열어 두었던 법무실장, 법무심의관, 송무심의관, 행정소송과장, 상사법무과장 등의 보직에도 검사가 파견됐다. 인권국의 경우에도 복수직제이지만 탈검찰화 이후 비검사가 임명되어 왔던 인권구조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에 검사가 파견됐다. 탈검찰화로 2019년 이후 검사가 파견되지 않았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도 검사 파견이 이뤄졌다.

특히 법무부는 비검사직으로 신설(2020.08.)되었던 송무심의관을 복수직제로 개편(2024.03.)하고 검사를 임명했다(2024.06.). 또한 법무부 예규¹⁵⁰를 개정하여 송무심의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삭제했다(2024.03.). 검사 임명을 가능하게 하면서, 외부 공모를 통한 임용도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비검사 대신 검사 임명에만 그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을 통해 검사 임명 가능 보직을 확대했다. 2022년 6월 인사정보관리단장(복수직제) 및 인사정보1담당관(검사 단수직제) 신설, 2023년 8월 국제법무과장과 국제분쟁대응과장(복수직제) 폐지 후 국제법무국장, 국제법무정책과장, 국제법무지원과장, 국제투자분쟁과장의 4개 보직이 복수직제로 신설되었다. 2024년 3월, 비검사 직제였던 송무심의관이 복수직제화되었다. 송무심의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삭제했다(2024.03.). 결과적으로 문재인정부 당시에 비해 윤석열정부의 법무부에서 검사가 임용될 수 있는 보직은 총 5개 자리가 늘어났다.

부서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이용구 판사 출신 변호사, 강성국 판사 출신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며, 차관직을 탈검찰화했다. 반면 윤석열정부는 집권하면서 이노공 검사 출신 변호사를 차관을 임명했다. 이후 현직 검사(심우정 대검차장, 김석우 법무연수원 원장 순)를 임명하면서 법무부 차관직은 다시 검사가 장악하게 되었다.

불법 비상계엄 선포 후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법무부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사직했다. 공석 6개월만인 2025년 5월 1일,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관** 공모를 개시했고, 김도완 당시 안산지청장을 임용했다. 윤석열 파면으로 새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이자, 강도 높은 감찰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큰 상황에서 법무부가 ‘알박기 인사’를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윤석열정부가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에는 3년 내내 검사 단수직제인 인사정보1담당관 1명을 포함해 파견검사가 3명으로 유지됐다. 2025년 5월 26일,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3명을 각각 전보 조치했고, 후임 인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인사정보관리단 해체 수순이라고 전망되었다.¹⁵¹

기획조정실 실장의 경우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복수직제화되었지만 문재인정부에 이어 윤석열정부에서도 검사 보임이 지속되고 있다.

법무실에는 비검사로 임명되어 있던 법무실장, 법무심의관, 상사법무과장, 행정소송과장 등이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검사로 임명되고 있다. 파견검사의 수가 0명으로 유지되어 온 법무실 산하 상사법무과와 법무심의관실에도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검사 파견이 이뤄졌다(상사법무과

¹⁵⁰ 법무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예규 제1339호, 2024. 3. 26., 일부개정]

¹⁵¹ 2025.6.10. 폐지됨.

3명, 법무심의관실 5명 / 2025년 5월 기준). 이 외에도 법무과 1명, 통일법무과 2명이 증가해 각각 2명, 3명이다. 2024년 3월, 윤석열정부는 비검사 단수직제였던 법무실 송무심의관을 복수직제로 개정하고, 같은 해 6월, 법무부는 검사를 파견했다.

검찰국 국장은 검사 단수직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산하 부서 직원 또한 검사 임명이 지속되고 있다.

인권국에는 2019년 이후 탈검찰화로 검사 수가 2명으로 줄었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증가해 2025년 5월 기준으로 총 5명의 검사가 파견된 상태다. 특히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인권국의 비검사 출신 간부들을 배제하고 결재나 회의가 이뤄지는 등 ‘비검사 간부 패싱’이 이어지면서 2022년 7월부터 인권구조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인권정책과장이 사임한 이후 인권구조과장과 여성아동인권과장 자리가 검사로 채워졌다.

2023년 8월 확대 신설된 **국제법무국**에는 7명의 검사가 파견되었는데, 이는 전신이었던 법무실 산하 국제법무과·국제분쟁대응과에 파견된 검사가 3명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는 파견 중단 6년만인 2023년 9월, 검사가 다시 파견됐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이전하고 검사 파견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2023년 8월, 한동훈 전 장관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상화’를 내세우며 정부과천청사로 환원했고, 기존 인권실에서 법무실 산하로 직제를 개편하면서 통일법무과장이 소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파견을 유지하고 있다.

복수직제로 비검사 임용이 가능하지만 검사가 임용되어 있는 간부급 직책은 △대변인, △감찰관실 감찰관, 감찰담당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법무실 법무심의관 및 송무심의관, 법무과장, 통일법무과장, 상사법무과장, 법조인력과장, 행정소송과장,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인권국 인권구조과장, 인권조사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정책과장, 국제법무지원과장, 국제투자분쟁과장 등으로 총 20명이다.

이 중 **윤석열정부 들어 재검찰화된 직책**은 △감찰관, △법무실 법무심의관 및 송무심의관, 상사법무과장, 행정소송과장, △인권국 인권구조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이며, 신설되며 검사가 보임된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정책과장, 국제법무지원과장, 국제투자분쟁과장이 있다. 특이사항으로 법무실장에 구상엽 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 제1차장이 임명된 바 있지만 2025년 2월 퇴임하여, 2025년 5월 기준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 파견직은 아니지만 2024년 1월부터 검사가 임용됐다.

법무부의 재검찰화 강화, 법무행정·인권분야 전문성 약화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의 법무부 직제 규정 개정과 법무부 파견검사 수를 증원해 ‘탈검찰화 지우기’를 넘어 ‘재검찰화’에 몰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탈검찰화’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하더니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해 복수직제 보직에 임명한 비검사 인사 18명 중 절반에 달하는 9명을 파견검사로 교체했다¹⁵².

법무부 인권국에 대한 파견 검사 증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자리에마져 검사의 영향력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했다. 법무부 인권국은 국가 인권정책 수립 및 총괄,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 작성 등을 담당한다. 하지만 기존에 인권국이 담당했던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회의 (UPR)’에 비검사 출신인 위은진 당시 인권국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등 ‘인권국 비검사 패싱’이 이어졌다. 위은진 인권국장이 “의미있는 일을 하기 어렵다”며 사직한 후 비검사 간부들의 사직이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인권국 간부급 인사는 복수직제 5개 중 3개에 검사가 임명되었다. 이로써 7년 만에 다시 검사가 여성아동인권과장이 되었다.

수사나 기소도 아닌 법무행정과 인권 정책 수립 및 이행에 반드시 검사가 필요한 이유도, 오로지 검사만 임명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3년 동안 검사를 중심으로 법무부를 재편해 법무부 재검찰화를 이뤘다. 윤석열정부가 3년 동안 ‘법무부 탈검찰화’를 손쉽게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은 ‘인사권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불완전하고 가역적인 미완의 개혁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3년 동안, 검찰에 의해 장악된 법무부의 감독과 견제 기능은 약화되었고, 그 반대로 검찰의 권한이 강해지는 결과를 목도했다.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법무부 탈검찰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¹⁵² 법무부차관, 검찰관, 법무실장, 법무심의관, 국제법무과(→국제법무정책과), 국제분쟁대응과(→국제투자분쟁과),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 상사법무과, 범죄예방정책국장, 범죄예방기획과장, 보호정책과장, 치료처우과장,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 인권구조과, 여성아동인권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총18명) 중 밑줄 친 9개 보직이 재검찰화 됨. 국가송무과의 경우 국가소송과와 행정소송과로 확대개편된 바, 계산에서 제외함.

<법무부 직제 및 재검찰화 현황>¹⁵³

윤석열정부 재검찰화(검사 임명) : 연한 음영 표시

폐지/개편된 직제 : 진한 음영 표시

괄호(빨간색 글씨) : 2025년 5월 기준 파견된 검사의 수

부서			보직	문재인정부 탈검찰화	윤석열정부 재검찰화
대변인실 (1명)	대변인(1명)		일반직(나등급) 또는 검사	검사 임명	검사 임명 유지
		홍보담당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감찰관실 (4명)	감찰관(1명)		검사 또는 일반직(나등급)	2017.10.20 복수직제화 비검사 임명	2025.05.19 검사 임명 ¹⁵⁴
	감찰담당관실 (2명)	감찰담당관 (1명)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 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2017.10.20 복수직제화, 검사 임명	검사 임명 유지
		감사담당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인사정보 관리단 (3명 ¹⁵⁵)	인사정보관리단장 ¹⁵⁶ (0명)		검사 또는 일반직(나등급)		2022.06.07 신설, 검사 임명
		인사정보1담 당관 (1명)	검사(단수직제)		2022.06.07 신설, 검사 임명
		인사정보2담 당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장관정책 보좌관 (0명)	장관정책보좌관(0명)		나등급 별정직 1명, 3·4급 상당 별정직 1명, 특별한 사유 시 4급 이상 일반직 또는 검사 로 대체할 수 있음		
기획 조정실 (3명 ¹⁵⁷)	기획조정실장(1명)		검사 또는 일반직(가등급)	2017.08.01 복수직제화, 검사 임명	검사 임명 유지
		정책기획관	일반직(나등급)		
		비상안전기획관	임기제(나등급)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혁신행정담당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시설담당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과학기술서 기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¹⁵³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¹⁵⁴ 법무부는 12.3 불법계엄 직후 류혁 감찰관이 사직한 후 5개월간 공석으로 두다가, 4월 공고한 후 5월 김도완 안산지청장을 감찰관으로 임용함. 이는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임기 2년의 공모직을 현직 검사로 임명한 것이 ‘알박기’라는 비판이 있었음.

¹⁵⁵ 파견검사 2명 포함

¹⁵⁶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4(인사정보관리단장)는 2025.6.10. 삭제됨

¹⁵⁷ 기획검사 1명 포함

부서			보직	문재인정부 탈검찰화	윤석열정부 재검찰화
		정보화데이터 담당관 (0명)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검사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서기관	2019.05.07 신설	
		형사사법공동 시스템운영단장 (1명)	서기관/총경 또는 검사	검사 임명	검사 임명 유지
		범죄예방데이터 담당관	서기관	2020 신설, 2021 이전 ¹⁵⁸	
법무실 (16명)	법무실장 (0명)		검사 또는 일반직(가등급)	2017.08.01 복수직제화 비검사 임명	2023.02.06 검사 임명 ¹⁵⁹
	법무심의관실 (5명)	법무심의관 (1명)	검사 또는 일반직(나등급)	2017.10.20 복수직제화 비검사 임명	2023.02.06 검사 임명
	송무심의관실 (1명)	송무심의관 (1명)	검사 또는 일반직(나등급)	2020.08.05 비검사직 신설	2024.03.26 복수직제화, 2024.06. 검사 임명
	법무과 (2명)	법무과장 (1명)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2017.10.20 복수직제화, 검사 임명	검사 임명 유지
	국가소송과 (0명)	국가소송과장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2020.08.05 신설 후 비검사 임명	
	행정소송과 (1명)	행정소송과장 (1명)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2020.08.05 신설 후 비검사 임명	2023.02.06 검사 임명
	통일법무과 (3명)	통일법무과장 (1명)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2017.10.20 복수직제화, 검사 임명	검사 임명 유지
	상사법무과 (3명)	상사법무과장 (1명)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 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2017.10.20 복수직제화 비검사 임명	2023.02.06 검사 임명
	법조인력과 (1명)	법조인력과장 (1명)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2017.10.20 복수직제화	
	국제법무과 ¹⁶⁰	국제법무과장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 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2017.10.20 복수직제화 비검사 임명	2023.02.06 검사 임명
	국제분쟁대응과 ¹⁶¹	국제분쟁대응 과장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 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2020.08.05 신설 후 비검사 임명	

¹⁵⁸ 2021.07.01.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범죄예방데이터과로 직제 개편

¹⁵⁹ 2025.02. 검사 사직 후 공석

¹⁶⁰ 2023.08.08. 국제법무국 (신설) 산하 국제법무정책과와 국제법무지원과로 확대 개편되면서 부서 폐지

¹⁶¹ 2023.08.08. 국제법무국 (신설) 산하 국제투자분쟁로 직제 개편되면서 부서 폐지

부서			보직	문재인정부 탈검찰화	윤석열정부 재검찰화
	국가송무과 ¹⁶²	국가송무과장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2017.10.20 복수직제화 비검사 임명	
검찰국 (18명)	검찰국장(1명)		검사(단수직제)		검사 임명 유지
	검찰과(5명)	검찰과장(1명)	검사(단수직제)		검사 임명 유지
	형사기획과 (3명)	형사기획과장 (1명)	검사(단수직제)		검사 임명 유지
	공공형사과 (구 공안기획과) (3명)	공공형사과장 (1명)	검사(단수직제)		검사 임명 유지
	국제형사과 (3명)	국제형사과장 (1명)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 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2018.12.31 복수직제화, 검사 임명	검사 임명 유지
	형사법제과 (3명)	형사법제과장 (1명)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 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2018.12.31 복수직제화, 검사 임명	검사 임명 유지
범죄예방 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장(0명)		검사 또는 일반직(나등급)	2017.08.01 복수직제화 비검사 임명	
	범죄예방기획과 (0명)	범죄예방기획 과장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사	2017.10.20 복수직제화 비검사 임명	
	보호정책과 (0명)	보호정책과장 (구 법질서선진화과장)	서기관 또는 검사	2018.04.02 비검사 임명	
	치료처우과 (0명)	치료처우과장 (구 보호법제과)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사	2017.10.20 복수직제화 비검사 임명	
	보호관찰과	보호관찰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소년보호과	소년보호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전자감독과(구 특정범죄자관리과)	전자감독과장	서기관		
	범죄예방디지털 정책팀 ¹⁶³	범죄예방디지털 정책팀장	서기관/보호사무관		
	소년범죄예방팀 ¹⁶⁴	소년범죄예방팀 장	서기관/보호사무관		
인권국 (5명)	인권국장(0명)		검사 또는 일반직(나등급)	2017.09.29 비검사 임명	
	인권정책과	인권정책과장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	2017.11.16	

¹⁶² 2020.08.05. 법무부의 국가소송기능 환수에 따라 국가소송과와 행정소송과로 개편되면서 부서 폐지(신설 당시
부서에 검사 임용 안함)

¹⁶³ 2023.06.08. 범죄예방데이터과에서 개정

¹⁶⁴ 2022.08.04. 신설

부서			보직	문재인정부 탈검찰화	윤석열정부 재검찰화
	(0명)		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비검사 임명	
	인권구조과 (2명)	인권구조과장 (1명)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 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2018.09.03 비검사 임명	2022.11.14 검사 임명
	인권조사과 (2명)	인권조사과장 (1명)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2017.10.20 복수직제화, 검사 임명	검사 임명 유지
	여성아동인권과 (1명)	여성아동인권과 장(1명)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 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2018.04.02 비검사 임명	2023.09.25 검사 임명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¹⁶⁵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국제 법무국 (7명)	국제법무국장(0명)		검사 또는 일반직(나등급)		2023.08.08 신설, 비검사 임명
	국제법무정책과 (2명)	국제법무정책과 장(1명)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2023.08.08 신설, 검사 임명
	국제법무지원과 (3명)	국제법무지원과 장(1명)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2023.08.08 신설, 검사 임명
	국제투자분쟁과 (2명)	국제투자분쟁과 장(1명)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 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2023.08.08 신설, 검사 임명
교정본부	교정본부장(0명)		검사 또는 일반직(가등급)		
		교정정책단장	일반직(나등급)		
		보안정책단장	일반직(나등급)		
	교정기획과	교정기획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직업훈련과	직업훈련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사회복귀과	사회복귀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복지과	복지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보안과	보안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분류심사과	분류심사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의료과	의료과장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심리치료과	심리치료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마약사범재활팀 ¹⁶⁶	마약사범재활팀 장	서기관 또는 교정관		
	특별점검팀 ¹⁶⁷	특별점검팀장	서기관 또는 교정관		

¹⁶⁵ 2024.06.25 신설

¹⁶⁶ 2023.06.08. 신설

¹⁶⁷ 2023.06.08. 신설

부서		보직	문재인정부 탈검찰화	윤석열정부 재검찰화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0명)		검사 또는 일반직(가등급)	2017.09.04 비검사 임명
		출입국정책단장	일반직(나등급)	
		국적·통합정책 단장	일반직(나등급)	
	출입국기획과	출입국기획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출입국심사과	출입국심사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체류관리과	체류관리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이민조사과	이민조사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이민정보과	이민정보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외국인정책과	외국인정책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국적과	국적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이민통합과	이민통합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난민정책과	난민정책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020.02.25 신설
	난민심의과	난민심의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020.02.25 신설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¹⁶⁸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북한인권 기록보존 소(1명 ¹⁶⁹)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¹⁷⁰ (0명)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2019.08.06 비검사 임명
계	법무부 파견 검사 58명(2025.05. 기준) ¹⁷²			2023.09.25 검사 파견 ¹⁷¹

¹⁶⁸ 2023.06.08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에서 개정

¹⁶⁹ 파견검사 1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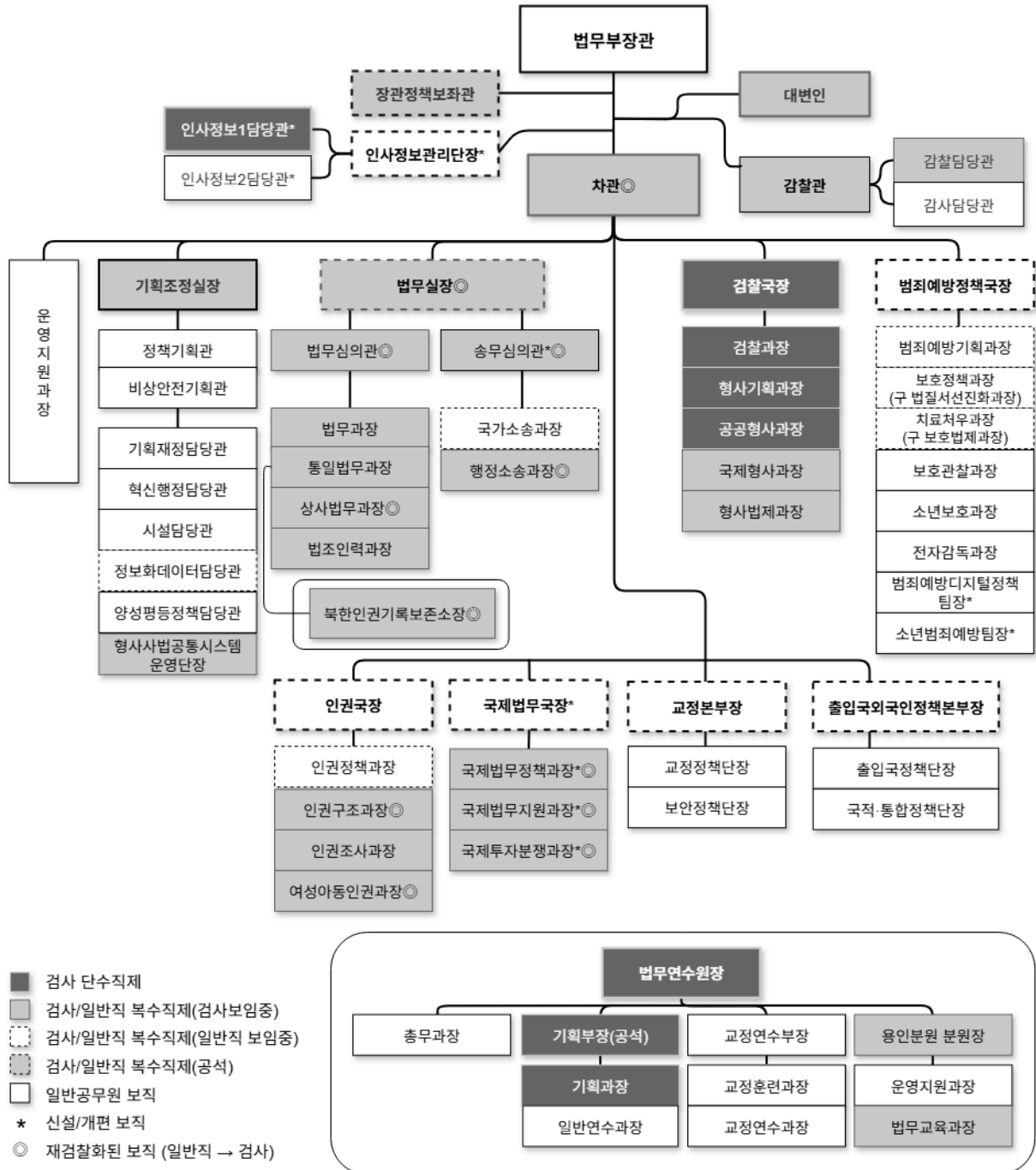
¹⁷⁰ 2023.08.08 직제 개편으로 통일법무과 산하에 두고 법무실 통일법무과장이 소장 겸직(참고 : [법무부 보도자료](#)).

¹⁷¹ 2023.08.08. 통일법무과장이 소장을 겸직하게 한 것에 이어, 2023.09.에는 검사 1명을 파견함.

¹⁷² 법무부 차관(1명)을 제외한 수치로, 법무부 직제와 시행규칙에 근거하지 않은 비직제 파견이나, 사직한 전직 검사를 공채로 임용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윤석열정부의 법무부 재검찰화 - 법무부 본부 조직 및 검사/비검사 임용>

(2025.05. 기준)



<법무부 파견 검사 수 현황 : 연도별>¹⁷³

문재인정부 시기 파란색 음영 표시, 윤석열정부 시기 붉은색 음영 및 강조표시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5.
개수	70 ¹⁷⁴	38 ¹⁷⁵	34	32	33	37	45	56	58

출처. 정보공개청구, 법무부 검사 인사 보도자료

<법무부 파견 검사 수 현황 : 부서별>¹⁷⁶

문재인정부 시기 파란색 음영 표시, 윤석열정부 시기 붉은색 음영 및 강조표시(단위: 명)

배치 부서		'17	'18	'19	'20	'21	'22	'23	'24	'25.5.	변동폭 ¹⁷⁷
-	법무부 차관 ¹⁷⁸	1	1	1	0	0	0 ¹⁷⁹	0	1	1	+1
대변인실	대변인	1	1	1	1	1	1	1	1	1	0
감찰관실	감찰관	1	0	0	0	0	0	0	0	1	1
	감찰담당관실	3	3	3	3	3	3	3	3	3	0
인사정보관리 단	인사정보관리 단장	신설					0	0	0	0	0
	인사정보1담당관	신설					1	1	1	1	+1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2	2	2	2	+2
장관정책보좌 관	정책보좌관	1	1	1	1	2	0	0	0	0	-2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1	1	1	1	1	1	1	1	1	0
	기획검사	2	1	1	1	1	1	1	1	1	0
	형사사법공동 시스템운영단	1	1	1	1	1	1	1	1	1	0
법무실	법무실장	0	0	0	0	0	0	1	1	0	0
	국가송무과	3	2	0	0	-	-	-	-	-	폐지
	국제법무과	5	2	2	0	0	0	1	-	-	폐지
	법무과	3	1	1	1	1	1	1	2	2	+1
	법무심의관실	6	0	0	0	0	1	3	5	5	+5
	법조인력과	2	2	2	1	1	1	1	1	1	0
	상사법무과	3	0	0	0	0	0	2	3	3	+3

¹⁷³ 법무부 차관(1명)을 제외한 수치로, 법무부 직제와 시행규칙에 근거하지 않은 비직제 파견이나, 사직한 전직 검사를 공채로 임용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¹⁷⁴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파견검사 포함(3명)

¹⁷⁵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파견검사 포함(2명)

¹⁷⁶ 정책기획단 등 비직제기구는 포함되지 않은 표임. 문재인정부의 탈검찰화 이전 정책기획단에는 단장 포함 2명의 검사가 파견근무해왔으나, 2018년 7월부터 단장 1명만 검사가 파견되어 왔음. 그러나 2023년 3월부터 단장을 포함한 3명의 검사가 파견근무하고 있어 재검찰화의 양상을 보임.

¹⁷⁷ 문재인정부의 실질적 마지막 해인 2021년 기준

¹⁷⁸ 법무부 차관은 검사를 '파견'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나, 정부조직법상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검사로 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직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이 보임되어 온 바를 기록하고자 표에 포함함. (총계에는 포함하지 않음)

¹⁷⁹ 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으로, 현직에서 임명된 것이 아니므로 본 집계에서는 제외함.

	통일법무과	5	1	1	1	1	1	1	2	3	+2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1	1	2	2	-	-	폐지(-1)
	송무심의관실	신설				0	0	0	1	1	+1
	국가소송과	신설				0	0	0	0	0	0
	행정소송과	신설				0	0	1	1	1	+1
검찰국	검찰국장	1	1	1	1	1	1	1	1	1	0
	검찰과	5	5	5	5	5	5	5	5	5	0
	형사기획과	3	3	3	3	3	3	3	3	3	0
	공공형사과	3	3	3	3	3	3	3	3	3	0
	국제형사과	3	3	3	3	3	3	3	3	3	0
	형사법제과	3	3	3	3	3	3	3	3	3	0
범죄예방 정책국	범죄예방정책 국장	1	0	0	0	0	0	0	0	0	0
	범죄예방기획과	3	0	0	0	0	0	0	0	0	0
	보호정책과	1	0	0	0	0	0	0	0	0	0
	치료처우과	2	0	0	0	0	0	0	0	0	0
인권국	인권국장	0	0	0	0	0	0	0	0	0	0
	여성아동인권과	1	0	0	0	0	0	0	1	1	+1
	인권구조과	2	0	0	0	0	1	2	2	2	+2
	인권정책과	0	0	0	0	0	0	0	0	0	0
	인권조사과	2	2	2	2	2	2	2	2	2	0
국제법무국	국제법무국장	신설						0 ¹⁸⁰	0	0	0
	국제법무정책과	신설						0	2	2	+2
	국제법무지원과	신설						0	2	3	+2
	국제투자분쟁과	신설						0	2	2	+2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0	0	0	0	0	0	0	0	0	0
북한인권 기록보존소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장	1	1	0	0	0	0	0	0	0	0
	북한인권 기록보존소	2	1	0	0	0	0	0	1	1	+1
계		70	38	34	32	33	37	45	56	58	+25

출처. 정보공개청구, 법무부 검사 인사 보도자료

¹⁸⁰ 국제법무국은 2023년 8월 신설되어 2023년 9월 자 정기인사에 검사가 파견된 기록이 있으나, 2024년 3월 법무부가 정보공개한 자료에는 2023년 국제법무국 파견검사 수를 일괄 기재하지 않아 0으로 표기함.

<윤석열정부 재검찰화된 법무부 중간간부급 이상 직책 및 검사 임용 현황>

(2022.5.~2025.5.)

부서	직책	이름	보임 일자	직전 검사 직책
법무부 차관		심우정	2024.01.19.	대검 차장검사
		김석우	2024.09.23.	법무연수원 원장
인사정보관리단	인사정보1담당관(신설)	이동균	2022.06.07.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 부장
		윤원기	2023.09.25.	법무부 형사법제과 과장
		최수봉	2024.06.03.	청주지검 제천지청 지청장
법무실	법무실장	김석우	2023.02.06.	서울고검 검사
		구상엽	2023.09.25. (2025.01. 사직 후 공석)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법무심의관	구승모	2023.02.06.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지청장
		유태석	2024.06.03.	서울서부지검 차장
	송무심의관 (2024.03.26. 검사 복수직제화)	신대경	2024.06.03.	대구지검 부부장
	국제법무과장 (2023.08. 폐지)	김태형	2023.02.06.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부장
	행정소송과장	김은미	2023.02.06.	대구지검 상주지청 지청장
		서효원	2024.06.03.	부산지검 형사3부 부장
	상사법무과장	김봉진	2023.02.06.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 부장
	인권국	인권구조과장	이유선	2022.11.14.
강정영			2023.09.25.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부 부장
정가진			2024.06.03.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 부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정가진	2023.09.25.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 부장
		김수민	2024.06.03.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 부장

부서	직책	이름	보임 일자	직전 검사 직책
국제법무국 (신설)	국제법무정책과장 (전신 법무실 국제법무과장)	조아라	2023.09.25.	대검 공판1과 과장
		최태은	2024.06.03.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 부장
	국제법무지원과장	신동환	2023.09.25.	대전지검 부부장
	국제투자분쟁과장 (전신 법무실 국제분쟁대응과장)	김지언	2023.11.01.	인천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 부장

<윤석열정부 법무부 파견 검사 명단>¹⁸¹ (2025.05. 기준)

1) 장차관 직속부서

직책	이름	전입일	비고(재검찰화)
법무부 차관	이노공	2022.05.	
	심우정	2024.01.	*대검 차장검사
	김석우	2024.09.	*법무연수원 원장
대변인	신동원	2022.05.	
	노선균	2024.06.	
대변인실 검사	김종욱	2022.07.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파견
	조수영	2023.09.	*서울중앙지검 소속 파견
인사정보1담당관	이동균	2022.06.	신설(검사 단수직제) *서울남부지검 소속 파견
	윤원기	2023.09.	
	최수봉	2024.06.	2025.06.02.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전보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김현우	2022.06.	신설 *창원지검 소속 파견
	김주현	2022.06.	신설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법무부 정책기획단 소속견
	최수은	2023.09.	2025.06.22. 서울중앙지검으로 전보
	김태겸	2024.06.	2025.06.02. 서울남부지검으로 전보
정책기획단장	김승호	2022.07.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파견
	박승환	2023.09.	*광주지검 소속 파견
	윤원기	2024.06.	*광주지검 소속 파견
정책기획단 검사	김준선	2022.07.	*인천지검 소속 파견
	이수창	2022.07.	*서울남부지검 소속 파견
	이지영	2023.09.	*부산지검 소속 파견
	정대희	2024.06.	*부산지검 소속 파견
	홍정연	2024.06.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파견

¹⁸¹ 음영 표시된 인사는 전 검사 출신이거나, 업무지원 형식의 파견 등으로 법무부 정보공개 청구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직원검색 등으로 확인되는 인사임.

2) 감찰관실

직책	이름	전입일	비고(재검찰화)
감찰관	류현	2020.07.(文정부)	검찰출신
	김도완	2025.05.	공모
감찰담당관	김도완	2022.05.	
	김형석	2023.09.	
	민경호	2024.06.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대환	2022.07.	
	조철	2022.07.	
	나영욱	2023.09.	
	장려미	2023.09.	
	김동율	2024.06.	
	정정욱	2025.02.	

3) 기획조정실

직책	이름	전입일	비고(재검찰화)
기획조정실장	권순정	2022.05.	*2024년 1월 법무부 검찰국장 보직 후 기획조정실장 직무 대리
	변필건	2024.05.	
기획검사	김대현	2022.02.	
	양찬균	2023.02.	
	온정훈¹⁸²	2023.02.	
	온정훈	2024.02.	
	김예은	2025.02.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	원지애	2022.07.	
	정수진	2023.09.	
	김현아	2024.06.	

¹⁸² 정식 발령이 아닌 업무 지원 형식의 파견으로 법무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자료나 법무부 보도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무부 직원검색으로 확인되었음.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검사	강용목	2023.09.	*의정부지검 소속 파견
	김진혁	2024.06.	*의정부지검 소속 파견

4) 법무실

직책	이름	전입일	비고(재검찰화)
법무실장	김석우	2023.02.	비검사 이상갑 전 실장(文정부) 이후 재검찰화 지속
	구상엽	2023.09.	
	공석	2025.02.	
법무심의관	구승모	2023.02.	비검사 정재민 전 심의관 이후 재검찰화 지속
	유태석	2024.06.	
법무심의관실 검사	석수민	2022.07.	2018년 이후 파견검사 0명에서, 2023년 2명, 2024년 4명으로 증가
	홍현준	2023.02.	
	최형균	2023.09.	
	김영민	2023.09.	
	박준석	2023.09.	
	이경화	2024.06.	
송무심의관	신대경	2024.06.	비검사 정재민 전 심의관 사직 후 복수직제 개편 재검찰화
법무과장	최재아	2022.07.	
	박양호	2023.09.	
	이시전	2024.06.	
법무과 검사	석동현	2024.02.	
	김유완	2025.02.	2018년 이후 파견검사 0명에서, 2024년 1명으로 증가
통일법무과장	김태현	2022.07.	
	홍승표	2023.09.	
	장영일	2024.06.	
통일법무과 검사	심재신	2024.09.	
상사법무과장	김봉진	2023.02.	비검사 임철현 전 과장 이후 재검찰화 지속

상사법무과 검사	정성두	2023.02.	2018년 이후 파견검사 0명에서, 2023년부터 1명씩 증가
	박광호	2024.09.	
법조인력과장	이준호	2022.07.	
	주혜진	2023.09.	
	이상훈	2024.06.	
법조인력과 검사	정주희	2025.02.	
행정소송과장	김은미	2023.02.	비검사 송창현 전 과장 이후 재검찰화 지속
	서효원	2024.06.	

5) 검찰국

직책	이름	전입일	비고(재검찰화)
검찰국장	신자용	2022.05.	
	송강	2024.05.	
검찰과장	임세진	2024.06.	
검찰과 검사	김봉경	2021.02.(文정부)	
	이승주	2022.02.(文정부)	
	최수봉	2022.07.	
	안홍균	2023.02.	
	김민수	2024.02.	
	최형균	2024.06.	
	홍석원	2025.02.	
형사기획과장	용성진	2022.07.	
	임세진	2023.09.	
	김태형	2024.06.	
형사기획과 검사	윤석환	2022.02.(文정부)	
	이시전	2022.07.	특정경제사범관리팀장 *수원지검 소속 파견
	문종배	2022.07.	
	차병곤	2023.02.	

	전수진	2023.09.	특정경제사범관리팀장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파견
	문호섭	2024.02.	
	황진아	2024.06.	*서울중앙지검 소속 파견
	곽중욱	2024.09.	
	이윤석	2025.02.	
	한웅세	2025.02.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파견
공공형사과장 (구公安기획과장)	박규형	2022.07.	
	조민우	2023.09.	
	이병주	2024.06.	
공공형사과 검사 (구公安기획과)	진세연	2022.07.	
	남상오	2023.02.	
	조혜민	2024.02.	
	이윤희	2024.09.	
	이수영	2025.02.	
	박상환	2025.02.	*인천지검 소속 파견
국제형사과장	이지형	2022.07.	
	김태형	2023.09.	
	김형원	2024.06.	
국제형사과 검사	이진희	2022.02.(文정부)	
	윤기선	2023.02.	
	전성환	2024.02.	
	황익진	2025.02.	
	최선희	미상	*수원지검 소속 파견
형사법제과장	윤원기	2022.07.	
	한상형	2023.09.	
형사법제과 검사	장태형	2022.02.(文정부)	
	이정아	2023.02.	
	남소정	2024.02.	

	김동직	2025.02.	
	김진영	2025.02.	*의정부지검 소속 파견

6) 범죄예방정책국¹⁸³

직책	이름	전입일	비고(재검찰화)
범죄예방정책국장	-	-	-
범죄예방기획과장	-	-	-
보호정책과장	-	-	-
치료처우과장	-	-	-

7) 인권국¹⁸⁴

직책	이름	전입일	비고(재검찰화)
인권구조과장	이유선	2022.11.	비검사 김종현 전 과장 이후 재검찰화 지속
	강정영	2023.09.	
	정가진	2024.06.	
인권구조과 검사	박지영	2023.02.	2018년 이후 파견검사 0명에서, 2023년 이후 1명으로 인원 증가
	강민정	2025.02.	
인권조사과장	이유선	2022.07.	
	손찬오	2022.11.	
	이진용	2023.09.	
	이호석	2024.06.	
인권조사과 검사	최현주	2022.02.(文정부)	
	김보미	2024.02.	
여성아동인권과장	정가진	2023.09.	

¹⁸³ 2018년 비검사 임명 통한 탈검찰화 이후 검사 파견 없음 유지

¹⁸⁴ 문재인정부는 당시 인권국장·인권정책과장·인권구조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 등을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하면서 탈검찰화를 진행하였으나, 윤석열정부 이후 해당 간부들이 사직하고 외부 인사 임명이 불발되면서 자리가 공석으로 남거나 검사로 채워졌다. 비검사 출신 간부들의 사직에는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위은진 전 인권국장을 통하지 않고 결재나 회의가 이뤄지는 등 인권국 내 업무 처리 절차 상의 ‘비검사 간부 패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전 국장은 이전까지 인권국이 담당해왔던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회의(UPR)에서까지 제외됐다.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수민	2024.06.	비검사 김연정 전 과장 이후 재검찰화

8) 국제법무국

직책	이름	전입일	비고(재검찰화)
국제법무정책과장	조아라	2023.09.	
	최태은	2024.06.	검찰 복수직제로 신설 *전신인 국제법무과 비검사 박정현 전 과장 후 재검찰화
국제법무정책과 검사	박재성	2024.02.	*전신인 국제법무과 2020년 이후 파견검사 0명에서, 2024년 1명으로 인원 증가
국제법무지원과장	신동환	2023.09.	검찰 복수직제로 신설
국제법무지원과 검사	이성직	2023.08.	신설 후 파견검사 1명
	박제연	2025.02.	
국제투자분쟁과장	김지연	2023.11.	검찰 복수직제로 신설 *전신인 국제분쟁대응과 비검사 한창완 전 과장 이후 재검찰화
국제투자분쟁과 검사	양준열	2023.08.	
국제법무국장	정홍식	2024.02.	미국변호사, 교수

9) 교정본부¹⁸⁵

직책	이름	전입일	비고(재검찰화)
교정본부장	-	-	-

1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¹⁸⁶

직책	이름	전입일	비고(재검찰화)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	-	-

11)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직책	이름	전입일	비고(재검찰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최용보	2023.09.	2019년 이후 파견검사 0명에서, 2023년 부터 1명으로 인원 증가

¹⁸⁵ 2007년 법무부 교정본부 신설(구 교정국 확대 개편) 이래로 비검사 임명 유지

¹⁸⁶ 2017년 9월 비검사 임명 통한 탈검찰화 이후 검사 파견 없음 유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곽금희	2024.06.	

*검사 이름을 참여연대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에서
검색해보세요. 공직 이력과 관련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일부 평검사 제외).

3.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문제 : 검찰 영향력 확대 통로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나열하여 정의하고 있다.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등이 그것이다. 또한 [제5조](#)에서 검사는 특별한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검찰청에 소속되어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검사파견심사위원회에서 직무 수행하는 경우에도 “수사에 필요할 때”로 국한하고 있다. 검사가 형사사법체계상의 강력하고 넓은 권한을 수행하는 주체인 만큼, 검찰권이 행사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그러나 검사는 검사의 직무 범위와 무관하게 법무부를 비롯한 다른 정부 기관은 물론, 대사관이나 국제기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기관에 파견되고 있다. 검사가 파견된 외부기관(검찰청 외 기관)의 수는 가장 많을 때는 40여 개 이상에 달했으며, 외부파견 검사의 수도 70여 명에 달하는 등 웬만한 지방검찰청 검사 정원¹⁸⁷에 맞먹었다.

검사가 무분별하게 검찰청 외 정부기관에 파견되면서 공직사회 각 분야에 유형, 무형으로 검찰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반면 검찰청 내부에서는 일선 검사들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외부 기관 파견을 갔다 온 검사들은 해당 기관과 인맥,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2년 국정원의 댓글조작 선거개입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당시, 국정원에 파견근무 중이던 검사들이 ‘국정원 현안TF’에 소속되어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공작에 동참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직무와 무관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검찰의 정식 인사 발령이 아니라 법무부의 공식 발표에 포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참여연대는 매년 검사가 파견되는 기관들과 검사의 수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록하고 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현황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 기조에 따라 법무부 이외의 정부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을 축소했다. 2019년 10월 8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검찰 예규로 제정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통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승인 여부를 심사했다. 박근혜정부(2016년 기준)와 비교해 문재인정부의 파견검사 수는 21명이 줄었고 파견 기관 수도 7개 줄어(2022년 3월 기준) 검사 파견 축소에 성과를 보였다.

윤석열정부는 파견 검사 수를 다시 증가시켰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문재인정부 당시 마련된 법무부 예규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2022년 6월 10일 자로 폐지했다.

¹⁸⁷ 검사정원법 시행령의 검찰청별 검사정원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정원이 70명이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72명, 대전지방검찰청이 73명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해당 지침이 검사의 내부파견도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팀 파견에 간섭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겠다는 명목이었다. 법무부는 해당 예규 폐지 이후 검사 파견 결정 관련 업무 절차를 묻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내부 공모,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파견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해명했지만, 과거 검사파견심사위원회가 규칙을 통해 검사 파견 최소화 원칙과 그에 따른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던 것과 달리 검찰청법상의 검찰인사위원회 관련 조항과 해당 시행령에는 관련 내용이 부재하다. 검사 파견의 필요성이나 검사의 인력 현황, 전체 검사 중 파견 검사의 비율 등을 고려한 충실한 심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법무부의 정보공개청구 답변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말(2022.3.) 46명이던 파견 검사 수는 윤석열정부 1년(2023.3.) 53명으로 증가했다가, 50명 수준을 유지했다. 내란사태 이후 2025.4.기준 46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준으로 파견 받은 기관의 수는 34개에서 37개로 증가, 유지하다가 2025.4. 기준 34개로 줄었다. 박근혜정부 말(2016) 당시 파견 검사 수는 67명, 파견 기관 수는 41개였던 것이 문재인정부 들어 크게 감축되었다가, 윤석열정부 들어 조금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세부적인 현황을 들여다보면 윤석열정부의 파견 실태가 보다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023년 **교육부**에 11년만에 검사가 파견됐고, △ **고용노동부**에는 처음으로 검사가 파견됐다. 문재인정부 시기, 검사 파견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에 전달하며 2020년 9월 파견검사를 복귀시켰던 △**감사원**도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검사 1명을 파견받았다. △**유엔 주제네바대표부**에는 2020년 2월 파견검사를 복귀시킨 이후 다시 1명의 검사가 파견됐다. △유엔 방콕 아태지부도 1명을 파견했고, △**금융감독원**도 파견 검사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국정원**에는 무려 3명이 추가로 파견되어 총 5명이 파견되었다. 윤석열정부 들어 2023.3. 기준 총 9명의 검사들이 새로 더 파견된 것이다. 국정원, 교육부를 제외한(2025년 파견 없음) 이 기관들은 윤석열정부 말까지 파견을 유지했다.

반면 파견의 필요성이 사라져 자연 감소한 사례도 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활동이 각각 2022년과 2023년에 종료되어 검사 파견도 종료되었고, 로스쿨의 도입으로 기능이 대폭 축소된 △**사법연수원**도 검사 파견이 중단되는 등 자연감소분이 3명, 3기관 있다.

한편 2024년에만 **보건복지부**에도 검사가 1명 새로 파견됐다. 윤석열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하여 집단행동에 돌입한 의사들과 관련하여 신속한 법률 자문을 담당한다는 취지였다. 윤석열정부는 집권하면서 국정원 파견 검사 수를, 문재인정부 당시 2명이었던 것을 5명을 무려 3명이나 늘렸다가 이듬해인 2024년부터 2명으로 파견을 축소, 유지한 점이 특이할만하다.

검찰은 2025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도 검사 파견을 중단했다. 금융위원회에 6명을 파견하다 2025년에는 5명으로, 2명을 파견하던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도 1명으로 축소했다. 그 이유로 검찰 내 인력난과 사건 적체가 그 이유로 거론됐다. 참고로 파견된 검사의 규모가 약 50여 명으로

이는 검사정원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57명), 서울고등검찰청(50명), 성남지청(47명) 등과 비슷한 수준의 규모이다.

직무와 무관한 외부기관 검사 파견 근절해야

윤석열정부에서 과거 파견이 중단되었던 외부기관에 검사가 파견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산적인 교육개혁 과제와 법률적 해석에 대한 자문’을 이유로 이미 7명의 변호사와 13명의 고문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던 교육부에 11년 만에 검사를 파견했다¹⁸⁸.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2023년 2월 16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의) 법률자문 변호사는 교육부와 오래 일해서 객관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교육부는 변호사 7명을 직원으로, 13명의 비상임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2023년,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하여 집단행동에 돌입한 의사들과 관련해 신속한 법률 자문을 담당한다며 보건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했다. 당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교육부의 의대 증원 확대 문제에서 비롯된 점을 볼 때,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대화나 협의보다는 ‘검사’를 파견해 사법처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윤석열정부의 검찰주의적 사고가 두드러지는 사례였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2023년 국정원예의 검사 파견 수는 무려 2명에서 5명으로 증가했다. 당시 문재인정부의 북한 주민 북송 결정,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등의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위 사건들은 국정원이 재조사 후 수사의뢰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기소했다.

2019년에 검사 파견을 중단했던 감사원에도 새로 검사가 파견됐고, 검사 파견을 유지했다. 우연의 일치인지, 감사원의 전 정권 관련 표적감사와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가 반복됐다. 금융감독원에도 파견검사가 늘어나면서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수사에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장으로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이복현 전 검사를 임명한 이후 이뤄진 파견검사 증원이라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가 2024년 12월 12일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됐다. 친위쿠데타 직전 외부기관 파견 검사 수와 기관 수는 전년 대비 변동이 없다가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 금융위원회,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곳에서 4명의 검사 파견이 철회됐다. 이를 통해 새정부 출범 직전 파견 검사 수와 기관의 수의 감축은 윤석열정부의 재검찰화 기조 변화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정부 3년은 주요 외부기관에의 파견을 통한 검찰의 영향력 확대와 검찰권의 남용이 일어난 기간이었다. 검사는 그 직무와 권한이 검찰청법 제4조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검찰청법상 명시된 검사의 직무와 유관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단순 법률 업무나 자문업무, 감독 업무에 검사를

¹⁸⁸ 교육부는 우재훈 검사를 장관 법무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지만, 국회 교육위원회로부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상에 ‘법무정책보좌관’ 직제가 없다고 지적받았다. 교육부는 홈페이지 조직현황에서 우 검사의 담당 업무를 ‘법무자문담당’으로 수정했다.

파견하는 것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은 물론이거니와 정부 기관들도 법률전문가 인력 수급을 검사 파견으로 해결하려는 관행을 스스로 근절해야 한다.

<외부기관 파견 검사 인원 및 파견 기관 현황 : 연도별>¹⁸⁹

연도(연)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3	2023.3	2024.3	2024.12.3.	2025.4
검사 수(명)	62	58	61	51	47	46	53	50	50	46
외부기관 수(개)	37	37	39	35	33	34	37	37	37	35

출처. 정보공개청구, 법무부 검사 인사 보도자료 (2022.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명 파견은 통계에서 제외)

<외부기관 파견 검사 인원 및 파견 기관 현황 : 기관별>

연도 외부파견기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3	2023.3	2024.3	2024.12.3	2025.4	변동1 ₁₉₀	변동2 ₁₉₁
국가정보원	5	2	2	3	3	2	5	2	2	2	0	0
법제처	1	1	1	1	1	1	1	1	1	1	0	0
식약처	1	1	1	1	1	1	1	1	1	1	0	0
한국거래소	1	1	1	1	1	1	1	1	1	1	0	0
국민권익위원회	2	2	2	1	1	1	1	1	1	1	0	0
국무조정실	2	2	2	2	3	2	2	2	2	2	0	0
국회	1	1	1	1	1	1	1	1	1	1	0	0
형사·법무정책 연구원 (구 형사정책연구원)	1	1	1	1	1	1	1	1	1	1	0	0
여성가족부	1	1	1	1	1	1	1	1	1	1	0	0
외교부	1	1	1	1	1	1	1	1	1	1	0	0
감사원	2	1	1	1	0	0	1	1	1	1	0	+1
금융위원회	7	7	7	6	6	6	6	6	6	5	-1	-1
공정거래위원회	2	2	2	2	2	2	2	2	2	2	0	0
방송통신위원회	1	1	1	1	1	1	1	1	1	1	0	0
금융부실책임 조사본부	3	3	3	3	2	2	2	2	2	1	-1	0
헌법재판소	4	4	4	4	4	4	4	4	4	4	0	0
금융감독원	1	1	1	1	1	1	2	2	2	2	0	+1
특허청	0	0	0	0	0	1	1	1	1	1	0	0
법조윤리협의회	1	1	1	1	1	1	1	1	1	1	0	0

¹⁸⁹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 선포와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2일 가결되고 대통령 직위가 정지됨. 이후 새정부 출범(2025년 6월 4일)때까지 권한대행체제를 거듭하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외부기관 파견 현황을 2024년 12월 3일과 2025년 4월의 2가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보공개청구 함.

¹⁹⁰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포 직전 2024.12.3. 대비 2025.4. 기준 변동

¹⁹¹ 문재인정부 말 2022.3. 대비 2025.4. 기준 변동

연도 외부파견기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3	2023.3	2024.3	2024. 12.3	2025.4	변동1 190	변동2 191
통일부	1	0	1	0	0	0	0	0	0	0	0	0
환경부	1	1	1	1	1	1	1	1	1	1	0	0
교육부	0	0	0	0	0	0	1	1	1	0	-1	0
고용노동부	0	0	0	0	0	0	1	1	1	1	0	+1
보건복지부	0	0	0	0	0	0	0	1	1	0	-1	0
문화체육관광부	1	0	0	0	0	0	0	0	0	0	0	0
서울시	1	1	1	1	1	1	1	1	1	1	0	0
인천광역시	1	0	0	0	0	0	0	0	0	0	0	0
주미국대사관	1	1	1	1	1	1	1	1	1	1	0	0
주LA총영사관	1	1	1	1	1	1	1	1	1	1	0	0
주일본대사관	1	1	1	1	1	1	1	1	1	1	0	0
주중국대사관	1	1	1	1	1	1	1	1	1	1	0	0
주유엔대표부	1	1	1	1	1	1	1	1	1	1	0	0
주제네바대표부 (제네바유엔및 국제기구대표부)	1	1	1	0	0	0	1	1	1	1	0	+1
주독일대사관	1	1	1	1	1	1	1	1	1	1	0	0
주네덜란드대사관	1	1	1	1	1	1	1	1	1	1	0	0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1	1	1	1	1	1	1	1	1	1	0	0
UN ODC (방콕 아태지부)	1	1	1	1	1	0	1	1	1	1	0	+1
UN ODC(비엔나)	1	1	1	0	0	1	1	1	1	1	0	0
UN상거래법위원회	1	1	1	1	0	0	0	0	0	0	0	0
국제부흥개발은행 (월드뱅크)	1	1	2	2	1	1	1	1	1	1	0	0
사법연수원	7	5	5	2	1	1	0	0	0	0	0	-1
군사안보지원사령부	0	3	3	0	0	0	0	0	0	0	0	0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0	1	1	1	1	1	1	0	0	0	0	-1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0	1	1	1	1	1	0	0	0	0	0	-1
세계식식재산기구	0	0	1	1	1	1	1	1	1	1	0	0
파견된 검사수(명)	62	58	61	51	47	46	53	50	50	46	-4	0
검사가 파견근무 중인 외부기관 수(개)	37	37	39	35	33	34	37	37	37	35	-2	+1

출처. 정보공개청구, 법무부 검사 인사 보도자료 (2022.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명 파견은 통계에서 제외)

3장. 수사

- I. 12.3 내란 사태 수사
- II. 윤석열정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및 부패 혐의 수사
- III. 문재인정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및 부패 혐의 수사
- IV. 고위공직자·정치인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
- V. 정권 비판 세력·야권·시민사회 관련 수사
- VI. 재벌·기업 범죄 및 산업재해 수사
- VII. 검사·법관·경찰 비위 의혹 수사
- VIII. 기타 의혹 수사

윤석열정부 3년간(2022. 5. ~ 2025. 5.) 주요 수사를 여덟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사건 개요를 정리하고, 피의자 및 피고발인, 수사 지휘라인, 수사경과와 결과, 재판경과와 결과를 하나하나 조사해 수록했습니다.

〈윤석열정부 3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Part 1. 윤석열정부 3년 검찰과 검찰*를 말하다〉 3장 〈수사〉는 윤석열정부 3년간 진행된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 중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50건의 개요와 수사 경과, 수사 담당자와 지휘라인, 처분 결과 등을 기록했다. 내란 사태 수사 4건을 비롯해 윤석열정부 3년 차 신규 사건 총 12건을 새롭게 담았고, 지난 2년간 검찰*보고서에 수록되었던 사건 총 36건과 문재인정부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사건 중 윤석열 관련 사건 총 2건도 업데이트하여 기록했다.

총 50건의 사건을 ▲ 12.3 내란 사태 수사(4건), ▲ 윤석열정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9건), ▲ 문재인정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및 부패 혐의 수사(5건), ▲ 고위공직자·정치인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18건), ▲ 정권 비판 세력·야권·시민사회 관련 수사(4건), ▲ 재벌·기업 범죄 및 산업재해 수사(1건), ▲ 검사·법관·경찰 비위 의혹 수사(8건), ▲ 기타 의혹 수사(1건)로 분류해 기록했다.

윤석열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외환을 모의하고 실행했다. 그러나 결국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내란·외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내란 특검’이 발족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지만, 내란 종식을 위해 규명되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이에 특검 이전까지 진행된 〈내란 사태 수사〉를 기록했다. △ 내란 사전모의 및 12.3 비상계엄 당일 불법행위 관련 수사(2024), △ 윤석열의 외환죄 수사(2024), △ 대통령경호처의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및 수사 방해 혐의 수사(2025), △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수사(2025) 등 총 4건을 수록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10.29 이태원참사,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등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시민들이 희생되었음에도, 책임 회피는 물론 수사 외압까지 행한 사건이 두드러졌다. 특히 윤석열 측의 비리에는 부실하게 감사하고, 전 정권 및 야권 관련 사건은 수사 의뢰하며 윤석열정부의 ‘수사 통치’에 일조한 감사원의 행태도 특징적이었다. 〈윤석열정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에는 △ 10.29 이태원참사 구조실패와 책임규명 수사(2022), △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수사(2023), △ 대통령실 관저 이전 수사 및 감사원 부실감사 수사(2022), △ 방통위의 종편 조건부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관련 감사원의 수사의뢰 사건 수사(2022),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감사 의결 과정 직권남용 혐의 수사(2023), △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사건 관련 수사(2023), △ 세관 직원 마약 밀반입 수사외압 의혹 수사(2024) 등 총 9건을 수록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정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및 부패 혐의 수사〉가 이어졌다. △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2022), △ 문재인정부의 북한 주민 복송 결정 의혹 수사(2022), △ 문재인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2022), △ 문재인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 수사(2023), △ 문재인정부의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수사(2024) 등 총 5건을 수록했다.

윤석열과 가족의 범죄 및 비위에 대해서는 윤석열정부 동안 봐주기, 부실 수사가 이어지다가 12.3 내란 이후 정권 교체가 가시화된 뒤에야 (재)수사에 착수한 사례가 두드러졌다. 한편, 이재명 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는 윤석열정부 시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고위공직자·정치인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에는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 수사(2021), △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2021), △ 윤석열 대통령 부부 명품백 등 금품수수 사건 수사(2023), △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의 공천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수사(2023), △ 건진법사의 공천 브로커 및 통일교 - 김건희 간 알선수재 혐의 수사(2024), △ [대장동1]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비리 사건 및 이재명 성남시장 관련 의혹 수사(2021), △ 이재명 성남시장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수사(2021), △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2022), △ [대장동2]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2022), △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2022), △ 문재인정부 고위급 인사의 채용 외압 혐의 수사(2022),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 사건 수사(2021), △ 송영길 당대표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2023), △ 감사원 고위 공무원의 뇌물 수수 혐의 기소 관련 공수처와 검찰 간 권한 다툼 있는 사건(2022) 등 총 18건을 수록했다.

윤석열정부 3년간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막기 위한 ‘입막음 수사’는 끊임없이 이뤄졌다. <정권 비판 세력·야권·시민사회 관련 수사>에는 △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2022), △ 뉴스타파 등 언론사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2023), △ 화물연대 노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공정위의 수사의뢰 사건 수사(2022), △ 시민노동단체 ‘간첩단 사건’ 수사(2022) 등 총 4건을 수록했다. <재벌·기업 범죄 및 산업재해 수사>에는 △ SPC계열사(SPL사업장) 제빵공장 노동자 작업중 사망 사건 수사(2022)를 수록했다.

수사기관인 검찰(검사)과 경찰, 사법기관인 법원(법관)의 범죄와 비위 의혹도 기록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첫 인지수사에 착수해 기소하는 등 출범 취지에 맞는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윤석열정부 당시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임면 지연으로 인해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검사·법관·경찰 비위 의혹 수사>에는 △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2021), △ [대장동3] 김만배 등의 50억 클럽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2021), △ [대장동4]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비리 혐의 봐주기 수사(2021), △ 임정혁 전 대검 차장 등 고위직 검·경 출신 변호사들 수사 무마 금품 수수 수사(2023), △ 이정섭 차장검사 비위 수사(2023), △ 부장판사의 골프채 수수 등 비위 수사(2021), △ 현직 경무관급 경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공수처 첫 인지 수사(2023), △ 연예인 마약 사건 수사 피의사실 유출 등 수사(2023) 등 총 8건을 수록했다. 이외에도 <기타 의혹 수사>로 △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수사(2022)를 수록했다.

12.3 내란 사태 수사

1. 12.3 내란 및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관련 수사(2024)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군경 및 국무위원 등과 모의하고 지시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와 선관위 등을 무력화하며, 체포조를 동원하여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체포·구금하는 등 국헌문란 목적으로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한 사건에 대한 수사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담당 부서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 안보수사1·2과, 검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 공수처 ▪ 조은석 특별검사팀
주요 처분	▪ 윤석열 구속 기소(구속 취소 후 재구속) ▪ 김용현·노상원·김용균·조지호·김봉식 구속 기소, 윤승영·목현태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내란 모의

12.3 내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군인·경찰·국무위원 등과 사전 모의하고 지시하여, 국회·선거관리위원회·야당 당사 등에 군을 투입해 봉쇄·장악하며, 체포조를 조직하여 자신에게 비판적인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체포·구금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증명할 증거를 조작해내고 이를 명분으로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여 일인 독재체제를 만들고자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사건이다.

윤석열은 대통령 임기 내내 각종 논란을 유발했다. 잦은 지각 출근이나 수도권 집중 호우사태 와중 퇴근 등 불성실한 직무 수행, 이태원 참사를 유발한 행정 무능 및 이상민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국민 안전을 경시하고 정부 책임을 부정하는 태도, 검사 출신들을 과도하게 각종 정부기관에 등용하는 등 인사 논란, ‘바이든 날리면’ 등 외교 결례 논란에 더해 의혹제기한 언론을 전용기에서 배제하는 등 실정이 계속됐다. 방통위와 방심위를 동원해 공영언론을 민영화하거나 비판적 보도를 징계하고,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들을 활용해 전정부 정책이나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거나 수사하는 등 반민주주의적 행태도 극심했다. 여소야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거부하는 등 협치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윤석열의 지지도는 임기 초부터 계속해서 하락해왔으며, 그럼에도 야당을 적대시하는 태도가 계속되자 집권여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쟁점 법안 처리, 장관과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 정부예산안 감액 등을 의결하는 등 입법부 권한으로 정부의 폭주에 대응했다. 윤석열은 이에

국회를 상대로 강한 불만을 품었으며, 2024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자신의 실정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부정선거론에 심취했다.

이에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정치인들과 언론들을 제거하고자 했다. 2024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삼청동 안가모임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처음으로 ‘비상대권’을 언급하였고, 6월에는 “비상대권,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다”, 10월에는 “헌 사법체계 하에서 이재명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도 말하였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반대하던 신원식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전보하고 대신 경호처장 출신 김용현을 2024년 9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했으며, 장관이 된 김용현은 곧바로 정보사령부 기밀유출 문제로 경질이 예상되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유임시켰다. 이렇게 윤석열은 김용현과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특전사령관 곽종근, 정보사령관 문상호 등과 몇차례 회동하며 내란을 모의했다.

내란의 전체적인 실행 계획은 김용현과 함께 전 정보사령관 출신이자 무속인 비선실세인 노상원이 구상했다. 노상원은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나 민주노총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정부비판적 인사들을 수거(체포) 대상으로 분류해 감금하고 사살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작성했고, 11월 17일부터 자신의 점집 근처에 위치한 안산 햄버거 가게에서 세차례에 걸쳐 전현직 군인들을 모아 선관위 점령계획과 부정선거 강압수사 계획 등을 구체화했다. 국회를 무력화한 뒤에는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해 입법 기능을 대통령에게 예속시키는 등 사실상 독재 장기집권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구상했다. 북한 도발 유도 계획은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에 대북전단을 실은 무인기를 두차례 보냈다는 의혹으로 연결되었다(참고. ▲ 윤석열의 외환죄 수사(2024)).

2024년 11월 초부터 계엄 실행 준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윤석열은 당시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던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의식했다. 김용현은 후일 검찰수사에서 윤석열이 11월 24일 경 검사, 감사원장, 국방부장관 탄핵 등을 이야기하면서 명태균 사건도 언급했고, 그러면서 김용현에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김용현은 그 다음날인 11월 25일 전군에 ‘적에게 자비는 없다’라는 제목의 정신교육 교재를 배포하였으며, 11월 30일 여인형에게 “계엄령을 발령해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 전산자료를 확보해 부정선거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12월 1일~2일에 걸쳐 김용현이 초안 작성하고 윤석열이 검토 및 승인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등이 작성됐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소집 및 비상계엄 선포

명태균이 기소된 12월 3일 저녁 7시 20분 경 윤석열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계엄 선포 이후 후속조치 등을 지시했다. 그리고 12월 3일 밤 8시, 윤석열은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참석한 위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 및 후속조치를 지시한 다음, 밤 10시 27분에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포고령 제1호를 선포해 모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및 집회, 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했으며, 국민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계엄이 선포된 후 군과 경찰은 국회가 위치한 여의도 일대와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해 움직였다. 계엄법에 따라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야 하지만 윤석열은 합참의장 김명수 대신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고, 박안수는 김용현의 지휘를 받으며 특전사, 방첩사, 수방사, 정보사, 707특수임무단 등 병력들을 국회가 위치한 여의도와 중앙선관위에 출동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은 국회 경비대, 경찰기동대, 영등포경찰서 경찰들이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고, 특전사 헬기 12대를 타고 온 특수부대 병력이 국회 본청에 진입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 국회로 모여든 시민들과 국회 보좌진들, 직원들은 국회 담장 안과 밖, 국회 건물 내부에서 계엄군을 막고 저항했다.

방첩사에는 중앙선관위 건물3곳과 여론조사 ‘꽃’에 출동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여의도에 출동한 병력은 경찰과 협력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어준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다. 윤석열은 국정원 홍장원 1차장에도 연락해 ‘이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테니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지시했다.

중앙선관위원회에는 정보사령부 병력과 특전사, 경찰 일부가 출동했다. 경찰이 외곽을 경계하는 동안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 10여명이 권총을 무장하고 선관위로 진입, 직원들을 감금하고 통합선거인명부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특전사 병력이 도착했고 역시 방호 임무를 맡았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일부도 각 부처로 돌아가 윤석열로부터 지시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에서 국회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처리해주라고 지시했고,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그 외 장관들도 각부처에 돌아가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한편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계엄군의 진입을 막는 동안 국회의원들이 속속 국회 본청으로 모여들었고, 12월 4일 새벽 1시 2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적 300명 중 재석 190, 찬성 190으로 가결시켰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군부대 일부는 출동 명령을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태업하였고, 정치인 체포를 위해 군과 합류할 예정이던 경찰들도 철수하거나 대기하였다. 계엄해제 의결 직후 윤석열은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군 간부들과 대책을 논의했지만, 결국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새벽 4시 25분 경 계엄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여의도와 선관위원회 일대에 투입되었던 부대들도 모두 철수, 복귀했다.

비상계엄 실패 이후

비상계엄을 통한 장기집권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야당과 시민사회들이 즉각 윤석열과 공범들을 내란혐의로 고발하였고 수사기관들도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고, 검찰은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군검찰도 관련된 간부들을 직무배제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국회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진상규명에 나섰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계엄이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다며, 내란이나 국헌문란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에 출석한 핵심 관여자들은 거짓증언을 반복했고, 윤석열정부의 국무위원들과 비서실, 경호처는 증거인멸과 수사방해를 위해 움직였다. 특히 윤석열과 불가분의 관계인 검찰도 경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축소수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반복했다.

특히 경찰이 김용현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김용현의 신변을 경찰보다 먼저 확보하기 위해 검찰 수뇌부까지 움직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언론 보도 및 더불어민주당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12월 6일 경찰이 김용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김선호 국방부차관에게 연락해 김용현의 비화폰 번호를 받았고, 이를 공유 받은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 김용현과 두차례 통화하며 검찰 출석을 회유했다. 이에 김용현은 ‘대통령과 통화한 후 말하겠다’고 답변했고,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검사 출신인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고 말했다. 이후 김용현은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통화하고 8일 오전 1시 30분에 검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검찰은 김용현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김용현의 검찰 자진 출석 배후에는 윤석열이 있으며, 그 과정에 김주현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주현은 국회 청문회 출석 당시 김용현과 통화한 사실이 있냐는 질의에 ‘있다’ 혹은 ‘없다’도 아닌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만 답변했다. 이때문에 검찰이 김용현의 신변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확보하려 한 것은 계엄의 전모를 축소 수사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 및 직무정지 후 수사, 법원과 검찰의 윤석열 석방 결정

윤석열은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계속된 공수처와 경찰의 출석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결국 법원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2025년 1월 3일 체포는 무산되었고, 2차로 발부된 영장에 의해 1월 15일에야 체포되었다. (참고. ▲ 대통령경호처의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및 수사 방해 혐의 수사(2025))

이 과정에서 검찰이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로 경찰이 청구한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차례나 거부하면서 검찰이 오히려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가중되었다. 한편 윤석열은 체포된 후에도 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공수처는 1월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1월 19일 발부되어 윤석열은 구속됐다. 이후 수사는 검찰 특수본으로 이첩되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특수본은 1월 26일 윤석열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측은 검찰의 기소 시점이 날짜가 아닌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구속영장 만료 시각을 넘어서 이뤄졌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은 3월 7일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구속 취소 결정문에 검찰의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긴 했지만, 이는 수십년 형사 사건 처리 실무를 뒤집은 결정으로 많은 논란이 일었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 반박이 이어졌다. 그러나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찰총장

심우정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하도록 수사팀에 지시했고, 그 결과 윤석열은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에 검찰은 보통 항고도 하지 않았다. 재구속될 때까지 124일간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내란특검 출범과 윤석열 재구속

윤석열과 내란범들의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은 윤석열이 석방된 이후에도 추가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았고, 재판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 결과 김용현 노상원 등 주요 피고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6월 18일 활동을 개시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내란특검, 특별검사 조은석)’가 사건을 이첩받은 후 김용현과 노상원 등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으며, 이어서 윤석열에 대한 소환조사를 2차례 진행한 후 윤석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 받았다. 이로 인해 윤석열은 검찰의 항고 포기로 풀려난 이래 124일만에야 다시 구속되었으며, 검찰의 내란 사태 수사 의지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육군정보학교장
김용균 예비역 대령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그외 계엄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및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소속 공직자 다수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 안보수사 1·2과]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이의신청 기각¹⁹²

[검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

본부장 박세현(서울고검장) - 차장 김종우(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 부장 이찬규(주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순

[공수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이의신청 기각¹⁹³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특검보)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4-12-03	대통령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2024-12-04	국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비상계엄 해제
2024-12-06	검찰,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
2024-12-07	국방부, 검찰 특수본에 군검사 5명 등 12명 파견
2024-12-08	검찰 특수본, 윤석열을 내란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2024-12-08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150명으로 확대
2024-12-08	경찰 특수단, 김용현 공관 및 집무실 등 압수수색
2024-12-08	김용현, 검찰 자진 출석
2024-12-08	검찰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김용현 조사 후 긴급 체포 및 휴대전화 압수
2024-12-08	검찰 특수본, 국회 출동한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참고인 소환조사
2024-12-08	검찰 특수본,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 입건
2024-12-09	검찰 특수본,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참고인 소환조사
2024-12-09	법무부, 윤석열 출국금지
2024-12-09	경찰 특수단, 이상민 출국금지조치 및 소환 통보
2024-12-09	검찰 특수본, 방첩사 압수수색

¹⁹² 경찰청은 2025년 5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담당부서(경찰청 안보수사과)만 부분공개 처분하고,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경찰청은 “안보수사관의 인사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 시 국가안보에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안보수사부서 근무자 신원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는 인사관리 업무에 직접적·구체적 장애를 초래하고, 향후 안보수사의 업무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바 안보수사부서 근무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는 일체 비공개”한다고 답변함.

¹⁹³ 공수처는 2025년 5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처분하고, ‘귀 단체가 해당 사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 공수처는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날짜	수사경과
2024-12-10	경찰 특수단,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소환조사
2024-12-10	검찰 특수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소환조사
2024-12-10	경찰 특수단, 한덕수 등 국무위원들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11명 소환 통보. 내란 혐의로 한덕수, 조태용은 피의자로 추가 입건
2024-12-10	검찰 특수본, 과천 중앙선관위 전산실 당직 직원 5명 참고인 조사
2024-12-11	경찰 특수단, 국회 봉쇄 관련 조지호, 김봉식 긴급체포
2024-12-11	경찰 특수단,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등 압수수색.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2024-12-11	경찰 특수단,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참고인 소환조사
2024-12-11	경찰 특수단, 목현대 국회경비대장 피의자 소환조사
2024-12-11	검찰, 특수본 인력 110여 명 규모로 확대
2024-12-11	검찰 특수본, 광종근 특전사령관 주거지, 특전사, 방첩사령부 등 압수수색
2024-12-11	검찰 특수본, 김용현 피의자 소환조사
2024-12-11	검찰 특수본, 국회 헬기 투입한 김세운 특전항공단장 참고인 소환조사
2024-12-11	검찰 특수본,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등 소환조사
2024-12-1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12.3비상계엄 사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출범
2024-12-11	공수처, 홍장원 조사
2024-12-12	경찰 특수단, 국무회의 관련 김한수 행정안전부 의전담당관 참고인 소환조사 통보
2024-12-12	경찰 특수단, 국회 봉쇄 관련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소환조사
2024-12-12	경찰 특수단, 조지호 및 김봉식 구속영장 신청
2024-12-12	공조본, 비화폰 서버 확보 위해 수방사 서버실, 국방부 장관실 등 압수수색
2024-12-12	검찰 특수본,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피의자 소환조사
2024-12-12	검찰 특수본, 여인형 방첩사령관 재소환
2024-12-12	검찰 특수본, 특수전사령부, 방첩사, 수방사, 이진우 수방사령관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4-12-12	검찰 특수본, 체포조 관련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참고인 소환조사
2024-12-13	검찰 특수본, 김정근 특전사 3공수여단장 참고인 소환조사
2024-12-13	검찰 특수본, 체포조 관련 강상문 참고인 소환조사
2024-12-13	검찰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여인형 구속영장 청구
2024-12-13	검찰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진우 체포
2024-12-13	법원(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내란 중요임무중사 등 혐의로 조지호, 김봉식 구속영장 발부
2024-12-14	국회,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2024-12-14	검찰 특수본, 박안수 피의자 소환조사
2024-12-14	검찰 특수본, 광종근 구속영장 청구
2024-12-15	검찰 특수본, 박안수, 이진우 구속영장 청구

날짜	수사경과
2024-12-15	경찰 특수단,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소환조사, 긴급체포
2024-12-15	검찰 특수본, 윤석열 출석 요구. 윤석열 불응
2024-12-15	경찰 특수단, 박성재 참고인 소환조사 언론 보도
2024-12-15	경찰 특수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참고인 소환조사
2024-12-16	검찰 특수본, 여인형 피의자 소환조사
2024-12-16	법원(중앙지역군사법원), 광종근, 이진우 구속영장 발부
2024-12-16	검찰 특수본, 김용현 출석 거부에 강제인치 불발
2024-12-16	검찰 특수본, 윤석열 출석 요구
2024-12-16	공조본, 윤석열 출석요구서 전달 불발, 우편 발송
2024-12-16	경찰 특수단, 내란 혐의로 이상민 피의자 소환조사
2024-12-16	경찰 특수단,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참고인 소환조사
2024-12-16	검찰, 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 노상원 승인
2024-12-16	경찰,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여인형 등 사건 공수처로 이첩
2024-12-17	경찰 특수단, 노상원 구속영장 신청, 문상호 공수처 이첩
2024-12-17	법원, 김용현 구속기간 연장
2024-12-17	법원(중앙지역군사법원), 박안수 구속영장 발부
2024-12-17	대통령실, 공조본 출석요구서 수취거부 반송
2024-12-17	공조본, 조지호 경찰청장 비화폰 서버 확보 위해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 시도. 경찰, 조지호 공관 등 압수수색
2024-12-17	경찰 특수단,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수사과장 등 참고인 소환조사
2024-12-17	검찰 특수본, 송미령 참고인 소환조사
2024-12-18	공수처, 내란 혐의로 문상호 체포
2024-12-18	검찰 특수본, 김현태 707특임단장, 정성우 참고인 소환조사
2024-12-18	검찰,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관련 사건 공수처에 이첩 결정. 내란 수사 일원화 합의
2024-12-18	경찰 특수단,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긴급체포
2024-12-19	검찰 특수본, 조태열 외교부장관참고인 소환조사
2024-12-19	검찰 특수본, 김영호 통일부장관 참고인 소환조사
2024-12-19	검찰 특수본, 체포조 관련 경찰 국수본 기획조정관실,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 압수수색
2024-12-19	검찰 특수본, 윤승영, 전창훈 참고인 소환조사
2024-12-19	경찰 특수단, 노상원 피의자 소환조사
2024-12-19	경찰 특수단,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참고인 소환조사
2024-12-19	경찰 특수단, 김용군 구속영장 신청
2024-12-20	검찰 특수본, 최상목 참고인 소환조사
2024-12-20	검찰 특수본, 공조본의 김용현 대면조사 요청 거부
2024-12-20	공수처, 김용현 최측근 관계자 참고인 조사 언론 보도

날짜	수사경과
2024-12-20	공조본, 문상호 구속영장 청구
2024-12-20	법원(중앙지역군사법원), 문상호 구속영장 발부
2024-12-20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2차 출석 요구, 불응
2024-12-20	경찰 특수단, 한덕수 피의자 신분 1차 소환조사 언론 보도. 국무회의 참석자 9명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
2024-12-20	경찰 특수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지호, 김봉식 검찰 송치
2024-12-20	경찰 특수단, 박종준 경호처장 참고인 소환조사
2024-12-21	경찰 특수단, 김영호 소환조사
2024-12-21	공조본, 문상호 피의자 소환조사
2024-12-21	법원(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 김용군 구속영장 발부
2024-12-21	검찰 특수본, 한덕수 피의자 소환조사
2024-12-22	공조본, 문상호 피의자 소환조사
2024-12-22	검찰 특수본, 정보사 출장 조사
2024-12-22	검찰 특수본,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참고인 소환조사
2024-12-22	검찰 특수본, 강익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참고인 소환조사
2024-12-22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일반 휴대전화 통신영장 발부, 통신기록 확보
2024-12-24	경찰 특수단, 노상원 구속 송치
2024-12-24	경찰 특수단, 김봉규, 정성욱, 고동희 공수처 이첩
2024-12-26	경찰 특수단, 김준영 피의자 소환조사
2024-12-26	검찰 특수본, 노상원 피의자 소환조사
2024-12-26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3차 출석 요구, 불응
2024-12-26	공수처, 노상원과 계엄 사전 모의한 혐의로 받는 정보사 김봉규 대령, 선관위 장악 가담한 혐의로 고동희 대령 피의자 소환조사
2024-12-27	경찰 특수단, 내란 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김용군 구속 송치
2024-12-27	경찰 특수단,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시도, 불발
2024-12-27	공수처, 선관위 장악 시도한 국군 정보사령부 정성욱 대령 피의자 소환조사
2024-12-27	검찰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김용현 구속기소
2024-12-28	검찰 특수본, 김용현 휴대전화 압수
2024-12-30	공조본,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수색영장 청구
2024-12-31	검찰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로 여인형, 이진우 구속기소
2024-12-31	공수처, 비상계엄 체포조 관련 방첩사 압수수색
2024-12-31	법원(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 발부
2024-12-31	검찰 특수본, 선관위 장악 등 관련 국방부 조사본부,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모 대령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4-12-00	경찰 특수단, 이완규 법제처장 피의자 소환조사

날짜	수사경과
2025-01-02	검찰 특수본, 신원식 참고인 소환조사
2025-01-03	공수처·국수본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위해 용산 대통령 관저 진입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 체포영장 집행 중지될 때까지 5시간 넘게 대기 후 철수
2025-01-03	검찰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박안수, 박종근 구속기소
2025-01-04	경찰 특수단, 수방사 55 경비단장 참고인 소환조사
2025-01-05	경찰 특수단, 서울경찰청 101, 202 경비단, 22경호대장 등 참고인 소환조사
2025-01-06	경찰 특수단, 대통령실, 국무위원, 당정 관계자, 경호처 관계자 25명, 군인 19명, 경찰 5명 등 총 49명 피의자 소환조사 언론 보도
2025-01-06	공수처, 윤석열 영장 집행 경찰 국수본에 일임하되 수사권 유지 방침 발표
2025-01-06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재청구
2025-01-06	검찰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노상원 등과 비상계엄 사전 모의 등 혐의로 문상호 구속기소
2025-01-07	경찰 특수단, 신원식 피의자 소환조사
2025-01-07	법원(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2025-01-08	경찰 특수단, 김주현, 피의자 소환조사
2025-01-08	검찰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조지호, 김봉식 구속기소
2025-01-10	검찰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노상원 구속기소
2025-01-11	경찰 특수단, 내란 혐의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피의자 소환조사
2025-01-15	검찰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김용군 구속기소
2025-01-15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체포, 공수처 피의자 조사
2025-01-15	윤석열 변호인단,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심사 신청, 기각됨
2025-01-16	윤석열, 공수처 조사 거부
2025-01-16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 윤석열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
2025-01-17	공수처, 윤석열 소환조사 통보. 윤석열 불응
2025-01-17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구속영장 신청
2025-01-18	법원(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영장실질심사 실시
2025-01-19	법원(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2025-01-19	공수처, 윤석열 소환 통보. 윤석열 불응
2025-01-20	공수처, 윤석열 소환 통보. 윤석열 불응
2025-01-20	공수처, 윤석열 지속적 조사 거부로 강제구인 불발
2025-01-20	경찰 특수단, 삼청동 안가 및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 시도, 불발
2025-01-21	공수처, 윤석열 강제구인 불발
2025-01-21	검찰 특수본, 한덕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2025-01-22	공수처,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 시도, 대통령실 불응인으로 불발

날짜	수사경과
2025-01-23	공수처, 검찰에 윤석열 사건 이첩 및 기소 요구 -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인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쓰되, 공수처가 열흘보다는 일찍 검찰에 기록을 송부하기로 사전에 협의해 5일 먼저 검찰에 이첩
2025-01-23	경찰 특수단,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소환조사
2025-01-23	검찰 특수본, 체포조 관련 등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2025-01-24	검찰 특수본, 체포조 관련 등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2025-01-24	검찰 특수본,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신청
2025-01-24	법원(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불허
2025-01-25	검찰 특수본,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2025-01-25	법원(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불허
2025-01-26	검찰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구속 기소.
2025-01-30	경찰 특수본, 이상민 소환조사 언론 보도
2025-01-30	경찰 특수본, 2024년 12월 조태용 국정원장 소환조사 언론 보도
2025-01-31	검찰 특수본, 박성재 피의자 소환조사
2025-01-31	검찰 특수본, 체포조 관련 경찰 국가수사본부, 윤승영, 전창훈,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5-02-01	검찰 특수본, 김대우, 정성우 피의자 전환
2025-02-03	공수처, 한덕수 및 이상민 사건 경찰 이첩
2025-02-04	경찰 특수단, 한덕수 2차 피의자 소환조사
2025-02-04	공수처, 이상민 사건 검찰 재이첩
2025-02-05	검찰 특수본, 김현태 피의자 소환조사
2025-02-10	검찰 특수본, 김현태 피의자 소환조사
2025-02-11	검찰 특수본,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소방청 관계자 조사 언론 보도
2025-02-11	검찰 특수본, 국방부 국회협력단 관계자 참고인 조사 언론 보도
2025-02-12	경찰 특수단, 원천희 등 군 관계자 6명 사건 공수처 이첩
2025-02-15	경찰 특수단, 박현수 전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참고인 소환조사
2025-02-18	경찰 특수단, 이상민 서울·세종 집무실 및 주거지, 소방청장과 소방차장 집무실 등 압수수색
2025-02-18	검찰 특수본, 양재웅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5-02-19	검찰 특수본, 양재웅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5-02-21	공수처,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 주거지와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5-02-21	검찰 특수본, 김현태 피의자 소환조사
2025-02-24	검찰특수본, 목현태, 전창훈 피의자 소환조사
2025-02-25	공수처, 국회 출입 차단한 서울경찰청 주진우 경비부장 피의자 소환조사
2025-02-28	검찰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707특임단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정보사 고동희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현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불구속 기소

날짜	수사경과
2025-02-00	검찰 특수본, 강의구 소환조사
2025-03-04	경찰 특수단,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등 외환 혐의 공수처, 서울중앙지검 이첩
2025-03-04	경찰 특수단, 내란 혐의 등으로 박현수 전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 경찰 관계자 57명 피의자 입건
2025-03-07	법원, 윤석열 구속 취소. 윤석열 석방
2025-04-04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직 파면
2025-04-16	경찰 특수단, 대통령 집무실 및 공간 등 압수수색 시도, 불발
2025-04-18	경찰 특수단, 단전·단수 의혹으로 이상민 피의자 소환조사
2025-05-01	검찰 특수본,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2025-05-26	경찰 특수단, 한덕수 3차 피의자 소환조사
2025-05-26	경찰 특수단, 내란혐의로 이상민 피의자 소환조사
2025-05-26	경찰 특수단, 최상목 피의자 소환조사
2025-05-30	경찰 특수단, 김영호 피의자 소환조사
2025-05-30	경찰 특수단, 조규홍 소환조사
2024-06-05	국회,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가결(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
2025-06-13	조은석 변호사, 특별검사로 임명
2025-06-18	내란 특검(조은석), 기존 검찰 공소 유지 이첩받고 공식 수사 개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김용현 추가 기소 및 추가 구속영장 신청
2025-06-23	경찰 특수단, 조태용 소환조사
2025-06-24	내란 특검(조은석),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2025-06-25	법원(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2025-06-25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25-06-27	내란 특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혐의로 노상원 추가 기소
2025-06-30	법원(중앙지역군사법원), 여인형, 문상호 추가 구속영장 발부. 내란특검과 군검찰 협의.
2025-06-30	내란특검, 강의구 소환조사
2025-07-02	내란특검, 한덕수 소환조사
2025-07-02	내란특검, 김정한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소환조사
2025-07-03	내란특검, 김주현 소환조사
2025-07-07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현복 재판장) 노상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25-07-10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 내란특검이 신청한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윤석열	2025-03-07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 김의담, 유영상 판사),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2025-07-09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 내란특검이 신청한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2025-07-00	1심(2025고합129,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 진행중
김용현 · 노상원 · 김용군	2025-06-16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 직권으로 김용현 조건부 보석 결정. 김용현 측은 보석결정에 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
	2025-06-24	법원(서울고법 형사20부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김용현의 보석허가결정 항고 기각
	2025-06-26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 내란특검이 신청한 김용현 추가구속영장 발부
	2025-07-07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현복 부장판사), 내란특검이 신청한 노상원 추가구속영장 발부
	2025-07-09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 김용군 보석 허가
	2025-07-00	1심(2024고합152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 진행중
조지호 · 김봉식 · 윤승영 · 목현태	2025-01-23	법원, 조지호 보석 허가
	2025-06-26	법원, 김봉식 보석 허가
	2025-07-00	1심(2025고합5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 진행중
여인형 · 이진우	2025-07-00	1심(2024고46, 중앙지역군사법원) 진행중
박안수 · 곽종근	2025-07-00	1심(2025고1, 중앙지역군사법원) 진행중
문상호	2025-07-00	1심(2025고2, 중앙지역군사법원) 진행중
정성욱 · 이상현 · 김현태 · 김대우 · 박현수 · 고동희 · 김봉규	2025-07-00	1심(2025고12, 중앙지역군사법원) 진행중

2. 윤석열의 외환죄 수사(2024)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무력충돌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시민사회가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여 수사한 사건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담당 부서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1·2과 ▪ 조은석 특별검사팀
주요 처분	-

1. 사건개요

2024년 10월 11일 북한 외무성은 ‘중대 성명’을 통해 10월 3일, 9일, 10일 심야에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진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주제로 지목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다 1시간 만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입장을 번복해 의혹을 키웠다. 2024년 10월 19일 북한 국방성은 ‘평양에서 한국군 드론과 같은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해당 무인기는 “한국 군부의 ‘드론작전사령부’에 장비돼 있는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으로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돼 공개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다. 이어 2024년 10월 27일 북한은 추락한 무인기의 잔해에서 비행 조종 모듈을 분해하여 비행 계획 및 비행 이력 자료를 분석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 무인기에서 분석한 비행 이력에 따르면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했으며 북한은 ‘한국군의 소행’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확인해 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2024년 11월 7일 윤석열도 대국민담화에서 평양 무인기 사건에 대해 “적반하장식 억지에는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오물 풍선과 GPS 교란을 거론해 북한을 비판했지만,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며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는데 반복되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로 맞대응해 왔다. 2024년 5월 30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위험물질을 담아 보낼 경우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군사훈련 등 강경 조치로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었다.

그러던 중,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한다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포고령 1호에서는 계엄의 목적으로 “헌정질서의 수호 및 중복 세력의 척결”을 명시했다.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내는 동안 '12월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우여곡절 끝에 비상계엄은 해제됐다. 이후 국정조사와 수사 등을 통해 진상이 서서히 드러났다.

2024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방첩사에서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제보를 받았다. 계엄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2024년 12월 8일 국내 드론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작전사령부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 일부 장비가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북한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12월 13일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드론작전사 화재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자연 발생했다고 밝히면서도,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2024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이기현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부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북한에서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원점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다만 김명수 의장과 합참 작전본부장은 김 전 장관 명령에 반대해 실제 작전이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합동참모본부는 관련 의혹에 대해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저희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죄(일반이적죄)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2024년 12월 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첩의 표현대로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4년 12월 26일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1,439명의 시민 고발인이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일반이적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2025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공수처가 최근 드론사 사정을 아는 군 관계자로부터 ‘드론사 예하 101드론대대와 드론교육연구센터가 지난달 중순부터 활용가능한 문서세단기를 모두 동원해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101드론대대는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 침투 무인기의 출발지라고 주장한 백령도 지역의 드론 작전을 총괄하는 부대이다. 제보에는 드론교육연구센터가 최근 모든 컴퓨터를 포맷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은 증거 인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문서 세절은 일상적으로 사무실에서 하는 수준일 뿐 대규모 자료 파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025년 5월 14일 부승찬 의원실이 공개한 국방과학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와 전체적인 형상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결론

내렸다. 전체 형상뿐 아니라 좌우 수직꼬리날개의 조종면 구동기, 데이터링크 안테나, 엔진 배기구, 냉각덕트, 덕트베인 작동기 등 핵심 부품 5종의 위치가 동일하며, 성능상 북한이 공개한 비행경로인 백령도에서 평양까지 비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담당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작전을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작전 이후 군 내부에서는 조직적인 은폐 시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외환죄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6월 5일,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 의혹까지 수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조은석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외환죄 법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석열 재구속영장 심사 때 별도로 관련 의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오물풍선 원점타격, 노상원 메모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자 무엇을 계획하고, 어떠한 사전 준비가 있었는지, 실제 실행된 조치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1·2과]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이의신청 기각¹⁹⁴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4-10-11	북한 외무성, ‘대한민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진입해 대북 전단 살포했다는 ‘중대 성명’ 발표 / 김용현 국방부장관 “그런 사실 없다”에서 “사실 여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 번복

¹⁹⁴ 경찰청은 2025년 5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담당부서(경찰청 안보수사과)만 부분공개 처분하고,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경찰청은 “안보수사관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 시 국가안보에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안보수사부서 근무자 신원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는 인사관리 업무에 직접적·구체적 장애를 초래하고, 향후 안보수사의 업무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바 안보수사부서 근무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는 일체 비공개”한다고 답변함.

날짜	수사경과
2024-10-19	북한, 무인기 잔해 사진 공개
2024-10-27	북한, ‘한국군의 소행’이라며 최종결과 발표
2024-11-07	윤석열, 대국민담화 진행(무인기 침투 언급하지 않음)
2024-12-03	윤석열, 12.3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에 계엄의 목적으로 “헌정질서의 수호 및 중북 세력의 척결” 명시
2024-12-09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김용현 일반이적죄 혐의로 고발
2024-12-26	시민사회,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 일반이적죄 혐의로 고발
2024-06-05	국회,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가결(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
2025-06-18	내란 특검(조은석), 공식 수사 개시
2025-07-09	내란 특검, 윤석열 재구속 영장심사 재판부에 외환죄 관련 300쪽 의견서 별도 제출

5. 재판 경과 및 결과

해당 없음

3. 대통령경호처의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및 수사 방해 혐의 수사(2025)

대통령경호처가 내란 혐의로 발부된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및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비화폰 단말기와 비화폰 통화 내역이 저장된 서버의 데이터 삭제를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12.3 내란 수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수사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담당 부서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 서울서부지검
주요 처분	-

1. 사건개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수사기관들로부터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받았다. 검찰과 군검찰이 구성한 12.3 비상계엄사태 특별수사본부는 2024년 12월 15일, 21일에,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이 구성한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는 12월 18일, 25일, 29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윤석열은 모두 거부했다.

이에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는 내란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2025년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 공조본이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다. 당시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 150명이 체포작전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경호처는 건물 전체를 봉쇄하며 수사관들의 진입을 가로막았다.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 80여 명이 대통령관저 경내에 진입했지만, 경호처의 건물 봉쇄에 막혀 건물 내부로는 진입하지 못했다. 5시간 넘게 대치가 길어지며 유혈 충돌이 예상되자 공수처와 경찰은 결국 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이 1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고 하며, 박종준을 필두로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직원들을 압박했다고 한다.

경찰이 확보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윤석열 1차 체포영장이 저지된 후 1월 10일 경, 윤석열은 대통령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묻자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그 이후 10일~12일 사이에 이광우가 총기와 실탄을 무기고에서 꺼내 관저 안으로 옮겨두고, 상황 발생 시 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경호관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이무렵 박종준은 사표를 내고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했으며,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김성훈은 경호처장

직무대행이 되었다. 한편 경찰은 2차 윤석열 체포 시도를 앞두고 김성훈과 이광우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1월 14일 발부받았다. 현장에서 윤석열 체포를 저지할 경우 체포한다는 방침이었다.

1월 14일 늦은 밤부터 경찰 기동대가 다시 관저 입구로 집결해 정차하기 시작했다. 15일 새벽 경찰과 공수처는 지지자들의 연좌농성을 해산시키고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¹⁹⁵ 일부는 윤석열 지지자들과 함께 관저 입구에서 인간띠를 만들며 대치했다. 경찰과 공수처가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끌어내 해산시키고 경호처의 저지선을 뚫어 오전 7시 56분 경 관저 정문 앞까지 도착하자, 김성훈은 경찰과 공수처를 계속 저지하라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경호처 직원들 대부분은 이런 지시에 따르지 않고 대기동 등에서 머물렀다. 이에 김성훈은 상황실을 찾아 전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비상동보를 명령했지만, 담당 직원도 이를 거부했다. 결국 윤석열은 15일 10시 33분 경 체포됐다.

한편 경찰은 15일 당일 김성훈 역시 체포하려고 시도했지만, 김성훈이 경호 임무를 마무리한 후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당일 체포는 하지 않았다. 이후 17일 김성훈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결국 체포됐으나,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를 반려함에 따라 19일에 다시 석방되었다.

이후 내란특검 등의 수사를 통해 경호처 체포 방해의 배후에는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윤석열은 공수처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이후,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불법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는 관할권 위반이다’,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을 공관촌 안으로 들여보내면 안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집행 저지

경호처는 체포영장 뿐 아니라 계엄의 진상규명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거부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 비상계엄 직후부터 법원에 의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처는 수사기관의 출입과 증거물 압수를 모두 거부했으며, 이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악용한 것이었다. 동법 각 2조에는 책임자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호처장 박종준, 차장 김성훈, 경호본부장 이광우 등이 이런 불법적 수사 거부를 주도했다. 특히 김성훈은 상관인 박종준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에게 직보하는 경우도 많아 경호처 실세로 여겨졌다.

¹⁹⁵ <https://watch.peoplepower21.org/impeach2#watch>

국민의힘 의원 44명 명단 : 강대식(대구 동군위) 강명구(경북 구미) 강민국(경남 진주)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 구자근(경북 구미) 권영진(대구 달서) 김기현(울산 남) 김석기(경북 경주) 김선교(경기 여주) 김승수(대구 북) 김위상(비례) 김은혜(경기 성남분당) 김장겸(비례) 김정재(경북 포항) 김중양(경남 창원) 나경원(서울 동작) 박대출(경남 진주) 박성민(울산 중) 박성훈(부산 북) 박준태(비례) 박종권(비례) 서일준(경남 거제) 서천호(경남 사천남해) 송언석(경북 김천) 엄태영(충북 제천) 유상범(강원 홍천) 홍성영(월평) 윤상현(인천 동미) 이달희(비례) 이만희(경북 영천) 이상휘(경북 포항) 이종욱(경남 창원) 이철규(강원 동해) 백삼척(정선) 임이자(경북 상주) 임종득(경북 영주) 양봉화(장동) 장동혁(충남 보령) 정동만(부산 기장) 정점식(경남 통영) 조배숙(비례) 조은희(서울 서초) 조지연(경북 경산) 최수진(비례) 최은석(대구 동군위) / 심재철(안양 동안)·구상찬(서울 강서) 전 의원 등 원외 당협위원장 12명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포함하면 윤 대통령 ‘방탄’에 동참한 이들의 숫자는 57명까지 늘어남. (출처. 한겨레 기사 ‘윤석열 방탄’ 도시락 먹으며 관저 지킨 국회 의원 44명 (검색일자 2025.07.08.)

2024년 12월 11일,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경찰의 청사 진입을 거부했다. 이후 17일에도 경찰 국수본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위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는 또다시 거부했다. 경찰은 12월 27일에도 대통령 안전가옥의 CCTV 영상 압수수색을 위해 삼청동 안가와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지만 경호처는 이번에도 3시간 가량 버티며 압수수색을 불응인했다.

경호처는 1월 15일 윤석열 체포 이후에도 합법적으로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실 및 관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저지했다. 국수본이 1월 20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와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는 김성훈 명의의 집행불능사유서를 제출하고 진입을 막아섰다. 김성훈은 1월 17일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가 체포되었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반례로 풀려난 후 직무에 복귀해 경찰의 내란 수사를 다시금 방해한 것이다. 1월 22일에는 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관저에 수사관을 투입해 윤석열이 사용했던 비화폰과 서버 기록 확보를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경호처가 진입을 막아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된 후, 경찰은 윤석열 1차 체포 시도 당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4월 16일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와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의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에도 경호처는 김성훈 차장 명의의 불응낙 사유서를 제시하며 진입을 거부해 경찰의 압수수색은 무산됐다. 김성훈은 이날 대통령실로 출근해 집행 거부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이 주도한 압수수색 거부 방침은 결국 경호처 내에서조차 극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경호처 직원들이 김성훈과 이광우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기에 이르렀다. 이에 김성훈은 4월 15일에 조만간 사의를 표할 의사를 밝혔고, 4월 25일 사표를 제출했다. 4월 21일부터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게된 안경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은 김성훈과 이광우를 직무배제하고 대기발령했다.

내란특검의 수사에 따라 관저 압수수색 저지에도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도 박종준과 김성훈에게 대통령실 인근에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라고 지시했고, 수사기관의 내란 수사가 본격화되자 김성훈에게 대통령 관저와 국방부장관 공관 등 공관촌 일대에 수사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박종준이 12월 8일 경찰과 협의해 경찰관 1명을 공관촌으로 들여보내자 윤석열은 김성훈과 박종준에게 전화해 왜 경찰을 들어가라고 했냐고 질책했다. 이로 인해 당일 압수수색중이던 경찰관은 공관촌 밖으로 쫓겨났다.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경호처는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내란의 진상 규명에 필수적인 물증인 비화폰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려 했다. 윤석열은 12월 7일 경 김성훈 차장에게 전화해 비화폰으로 전화해 비화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돼냐, 서버 삭제는 얼마마다 한번씩 되냐고 물었고, 이후 다시 김성훈에게 전화해 수사받고 있는 내란 공범들의 단말기를 수사기관이 쉽게 볼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성훈은 같은 날 비화폰 서버 담당자에게 윤석열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계엄에 관여한 육군 사령관들의 전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를 지시했다. 그러자 해당 관리자는 “처(處)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는데, 문건에는 서버에서 원격 로그아웃으로 단말기 통화기록 삭제가 가능하다고 그 방법을 적시하면서도 이 경우 형법 155조(증거인멸) 관련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함께 적시했다. 사실상 삭제 지시를 거부한 것이다.

경호처 수사 방해 의혹 산 검찰

한편 검찰(서울서부지검_검사장 김선화)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과 이광우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경찰의 영장청구 신청을 세 차례 반려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거나 ‘혐의의 다툼이 있다’라는 등 검찰의 반려는 사실상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였다. 이에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청했고, 서울고검은 영장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성훈과 이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1일 서울서부지법(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 검사를 출석시키지 않으면서 끝내 경호처 수사를 방해했다.

한편, 6월 5일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했다. 조은석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어 6월 18일 공식 수사를 개시했고, 내란 관련 수사 일체를 이어갔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윤석열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¹⁹⁶

[서울서부지검]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¹⁹⁷

지검장 김선화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5-01-03	더불어민주당, 박종준·김성훈·이광우와 경호처 소속 공무원 및 경호처가 통제하는 군인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수본 고발 윤석열즉각퇴진사회개혁비상행동, 박종준·김성훈·경호처 지휘를 받은 성명불상자 등을 범인은닉,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국수본 고발
2025-01-14	경찰 특수단, 김성훈·이광우 체포영장 확보
2025-01-17	김성훈, 경찰 소환조사 출석. 휴대전화 지참하지 않음. 경찰, 조사 후 김성훈 체포
2025-01-18	경찰 특수단, 검찰에 김성훈 구속영장 신청
2025-01-19	검찰 특수본,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 거부. 김성훈 석방
2025-01-24	경찰 특수단,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검찰에 2차 신청
2025-01-31	검찰 특수본, 구속영장 청구 거부.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
2025-02-13	경찰 특수단,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검찰에 3차 신청
2025-02-18	검찰 특수본, 구속영장 청구 거부.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
2025-02-24	경찰 특수단,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적정성 심의 요청
2025-03-06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 심의 후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 권고.
2025-03-17	경찰 특수단,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검찰에 4차 신청
2025-03-18	검찰 특수본, 법원에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
2025-03-21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되었으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시.
2025-04-15	김성훈, 4월 말까지 사퇴하겠다는 의사 표명
2025-04-25	김성훈 사직서 제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과 이광우를 28일자로 대기발령
2025-05-30	경찰 특수단, 김성훈 소환조사. 비화폰 정보 삭제 관련
2025-06-01	경찰 특수단, 윤석열 출석 요구. 윤석열 불응
2025-06-04	경찰 특수단, 김성훈 다시 소환조사.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관련

¹⁹⁶ 경찰청은 2025년 5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담당부서(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만 부분공개 처분하고,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경찰청은 “안보수사관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 시 국가안보에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안보수사부서 근무자 신원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는 인사관리 업무에 직접적·구체적 장애를 초래하고, 향후 안보수사의 업무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바 안보수사부서 근무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는 일체 비공개”한다고 답변함.

¹⁹⁷ 서울서부지검은 2025년 5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 진행 중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함”이라며 비공개 처분함. 이에 아래 지검장만을 기재함.

2025-06-05	경찰 특수단, 윤석열 2차 출석 요구. 윤석열 불응
2025-06-18	내란 특검, 공식 수사 개시
2025-06-19	경찰 특수단, 윤석열 3차 출석 요구. 윤석열 불응
2025-06-24	내란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2025-06-25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내란 특검, 윤석열에 28일 출석 요구
2025-06-28	내란 특검, 윤석열 1차 소환조사 진행
2025-07-03	내란 특검, 김성훈 소환조사
2025-07-04	내란 특검, 박종준 소환조사
2025-07-05	내란 특검, 윤석열 2차 소환조사 진행
2025-07-06	내란 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2025-07-10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판사),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재수감

5. 재판 경과 및 결과

해당 없음

4.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수사(2025)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법원이 2024년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하던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 수백여 명이 새벽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의 유리창과 외벽을 깨 뒤 청사 내부로 진입하여 건물 전체를 파손했을 뿐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하고 영장을 발부한 부장판사를 색출한다며 집무실까지 뒤지는 등 사법 역사상 벌어진 초유의 법원 난입 및 폭동 사건에 대한 수사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재판중
담당 부서	▪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형사5부)
주요 처분	▪ 서부지법 폭동 가담 혐의 :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모씨 등 62명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 ▪ 법원 내부 난입 혐의 :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윤모씨 등 7명 구속 기소 ▪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깨 '녹색점퍼남' 등 4명 기소 ▪ 이상 총 74명 기소 ▪ 선동·방조 등 혐의 : 일간베스트(일베), 디시인사이드(디시) 운영진 4명 무혐의 처분

1. 사건개요

2024년 12월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024년 12.3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내란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였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세차레나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석열이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2024년 12월 31일 오전 9시경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측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가 한남동을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불법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만 응하겠다고 했다. 윤석열과 경호처 등의 불법적 저지로 1차 체포가 불발되고 공수처가 빈손으로 돌아가자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밤샘 집회가 이어졌다. 이에 공수처는 1차 영장기한 만료일인 1월 6일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대규모 시민들의 체포 요구 밤샘 집회 등 여론이 거셌고 다수의 경호원들의 소극적 경호, 대규모 경찰 출동 등으로 결국 1월 15일 윤석열이 체포됐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체포 직후 남긴 영상편지에서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자신의 SNS에 올린 자필 편지에는 계엄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고,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때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들의 집회가 있었고, 체포적부심이 기각되자 공수처는 17일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하였다.

이날 윤석열 구속 반대 광화문 집회에서 주최측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우리는 서울구치소로 들어가서 강제라도, 왜 국민 저항권이 최고의 권리니까,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 당시 집회에는 경찰 추산 최대 4만 4천 명이 운집했다. 18일 저녁 6시 경에는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청사에 침입하였다가 17명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되었다.

18일 밤 8시쯤에는 극렬지지자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서부지법을 떠나는 공수처 차량 2대를 공덕역 인근에서 포위, 손팻말로 유리창을 덮고 차량을 거세게 흔들며 “공수처 해체”를 외치며 차량 2대를 파손했고 공수처 관계자 1명이 시위대의 집단 구타로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공수처는 사건 직후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공수처는 경찰에 이같은 행위에 대한 채증자료를 토대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또한 언론에 따르면 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이 현행범으로 시위대 40명을 체포했으며 경찰 33명이 다치고 이 중 3명은 중상을 입었다. 당시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문화방송(MBC) 취재진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월 19일 새벽 3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분노한 폭도 수백 명이 서부지법 정문 앞으로 몰려가 경찰과 대치했다. 이들은 탈취한 경찰 방패, 경광봉 등으로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고 경찰 병력이 거의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 담장으로 몰려갔다. 폭도들은 소화기를 이용해 유리창과 문 등을 파괴하고 법원 내부로 진입한 후 법원 경비업무를 보던 경찰을 집단 폭행하고 법원 내부에서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렸다. 또한 법원 내 TV를 비롯한 각종 전자기기와 음료수 자판기,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등도 모두 부숴다. 남아있던 법원 직원들은 옥상 등으로 대피해 있었다고 한다. 법원 내로 침입한 폭도들 중 일부는 “판사X 나와라”라고 외치며 부장 판사를 찾기 위해 개인집무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가 뒤졌으나 해당 판사는 이미 법원을 빠져나가 화를 면했다. 새벽 4시경 인근을 지나던 시민도 법원 후문 앞에서 폭도들에게 붙잡혀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후 경찰이 4시부터 진압작전에 돌입한 결과 폭도들이 내부에 진입한지 3시간 8분, 188분 만인 1월 19일 오전 6시 9분에 마포경찰서가 ‘서부지법 인근 질서 완전 회복’이라고 발표함으로써 폭동 사태가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폭동의 피해규모를 대략 6~7억원이라고 했다. 폭도들에 의해 서부지법 건물의 외벽 타일, 유리문, 법원 간판, 내부 시설물, 소화전 등 기물뿐 아니라 법원내 전산서버, 법원외부 CCTV 등도 파괴되었다. 이 사건으로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재판과 소송 및 처리 사안들이 전부 중단되었다.

이날 오전 7시 13분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관련 수사 전담팀을 설치한다”고 밝히고 형사기동대 1팀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엄정수사할 것과 전원 구속수사 방침이며 극우 유튜브들이 배후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도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서울서부지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9명으로 구성하고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월 19일 오전, 전광훈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사랑제일교회 주최로 전국 주일 연합 예배를 갖고 “우리는 이미 국민저항권을 발동했다”,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거나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라면서 또다시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밤 서부지법 앞 현장에 나가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바로 30분전에 이 현장에 왔다”며 “우리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노 의원은 “이 내용은 다른 경로로도 급속히 시위대 사이에 공유됐고 이후 습격, 폭동의 도화선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윤상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서울서부지법에서의 과격행동이 가볍게 처리될 것처럼 말해 참가자들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거셌다. 윤상현은 시민단체에 의해 내란선동혐의로 고발되었다.

1월 20일 서부지법 폭도들에 의해 카메라, 메모리칩 등을 빼앗기고 기자들이 폭행을 당한 연합뉴스, MBC, MBN, JTBC 등 언론사들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기자협회 등 9개 언론단체는 현장 취재진에 대한 폭행과 장비 파손, 탈취 시도 등을 “전례 없는 충격적 행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뒤흔든 폭도들에게 어של픈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며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내 내란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1월 31일 일베저장소 운영진과 디시인사이드의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미국 정치 마이너 갤러리 매니저를 내란방조죄 또는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온라인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월 16일부터 공수처 차량번호를 공유하고, 법원 침투 경로와 방법이 논의됐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가 유포되는 등 구체적 폭동 계획을 사전 모의하였다는 혐의이다.

서울경찰청(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월 19일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18일에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침입한 혐의, 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혐의 등으로 40명을 연행, 19일엔 영장 발부 직후 경찰 저지선을 뚫거나 담장을 넘어 법원에 침입, 각종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46명이 현행범으로 검거되어 18개 경찰서에 분산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신동원 차장검사)은 2월 10일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모씨 등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고, 2월 26일에 법원 내부로 난입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윤모씨 등 7명을 추가 구속 기소하였다. 2월 27일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깬 '녹색점퍼남' 등 4명이 추가 기소되어 2월 27일 현재 서부지법 불법 사태와 관련해 총 74명을 기소했다.

서부지법 사태 배후로 지목되어 내란선동혐의로 고발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다.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가 1월 31일 고발한 건에 대해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디시인사이드(디시) 운영진 4명과 이용자들의 내란 선동·방조 등 혐의에 대해 4월 29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각하) 결정하였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사건1. 법원 앞에서 난동, 폭력 등 행사 혐의(18명)]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2006년생 투블럭남(자택에서 체포,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구속 기소)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17명

[사건2. 폭력 선동 방조 등 혐의(6명 등)]

전광훈

윤상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디시인사이드(디시) 운영진 4명과 이용자들

[사건3. 법원 건물 내 진입 난동 혐의(6명)]

15만 구독자 가진 최씨 서울경찰청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상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최모씨를 입건해 조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

7층 판사실에 침입하고 법원 기물을 부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40대 남성 유튜버 (구속)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

방화범 이모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깬 '녹색점퍼남'

[사건4. 경찰이 밝힌 피의자(56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공무집행방해 1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물건손상 1명

공용물건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서울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수사
청장 치안정감 김봉식(~'25.02), 직무대리 치안정감 박현수('25.02~) - 대장 총경
김기현('25.01~03), 백승언('25.03~) - 팀장 경정 최재호 - 이하 비공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 전광훈 수사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이의신청 기각¹⁹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형사5부)] 서울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이O 외 94명 수사
지검장 김선화 - 차장 신동원 - 부장 하준호 - 주임 이한울, 전철호, 이영진, 김정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형사5부)] 서울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박O호 외 50명 수사
지검장 김선화 - 차장 신동원 - 부장 하준호 - 주임 비공개(수사중)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5-01-15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체포
2025-01-15	윤석열 변호인단,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심사 신청, 기각됨
2025-01-17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구속영장 신청
2025-01-18	서울서부지법(차은경 부장판사) 영장실질심사 실시
2025-01-18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 발생
2025-01-18	경찰,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46명과 시위 가담자 등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은, 66명 중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
2025-01-19	서울서부지법(차은경 부장판사),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2025-01-20	경찰,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침입하고 출입문 등을 부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
2025-01-22	경찰, 건물에 방화를 하려 했던 의혹을 산 '투블럭남'(10대) 긴급체포 서부지방법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공무집행방해 1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물건손상 1명, 공용물건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2025-01-25	법원, 서부지법에 난입하거나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10대 남성 등 2명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25-02-10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신동원 차장검사)은 10일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모씨 등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 이외 추가 구속된 8명 수사 계속
2025-03-17	경찰청 정례 브리핑, 총 140명 수사중, 그 중 92명 구속했다고 밝힘

¹⁹⁸ 서울경찰청은 2025년 5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서울경찰청은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날짜	수사경과
2025-04-21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정례 기자간담회, 143명 입건, 이 중 95명을 구속 송치, 48명 불구속 송치 등 사실상 수사 마무리했다고 밝힘
2025-04-29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디시인사이드(디시) 운영진 4명과 이용자들의 내란 선동·방조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각하) 결정

5. 재판 경과 및 결과¹⁹⁹

피고인	날짜	내용
김 모(35,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등을 던져 건물 외벽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2025-05-14	1심 서울서부지법(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 -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징역 1년 6개월 선고
소 모(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등을 던져 건물 외벽을 부순 혐의)	2025-05-14	1심 서울서부지법(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 -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징역 1년 선고
우 모(MBC 취재진의 머리를 가방으로 폭행해 상해 혐의)	2025-05-16	1심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 상해 혐의 징역 10개월 선고
안 모(철제 울타리를 넘어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한 혐의)	2025-05-16	1심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 (재판장 김우현)건조물침입 혐의 징역 10개월 선고
남 모(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	2025-05-16	1심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 공무집행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만 원 선고
이 모(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	2025-05-16	1심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 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조 모(41, 서부지법에 침입해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	2025-05-28	1심 서울서부지법형사6단독(김진성 판사) -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징역 1년 선고
박 모(37, MBC 영상기자 폭행)	2025-05-28	1심 서울서부지법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 특수상해 등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전 모(29,당시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손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혐의)	2025-06-19	1심 서울서부지법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 - 징역 3년6개월 선고
최 모(66,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025-06-19	1심 서울서부지법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 - 징역 1년 선고

¹⁹⁹ 관련 재판 경과를 최대한 담으려고 했지만 누락되거나 완결적으로 기록하지 못한 사건이 있을 수 있음.

피고인	날짜	내용
문 모(33, 영상기자를 폭행한 혐의)	2025-06-25	1심 서울서부지법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한 모(72, 법원에 침입해 소화기를 들거나 특수한 장갑을 착용해 법원 기물을 파괴한 혐의), 정 모(38, 한 모씨와 같은 혐의)	2025-06-25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 -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 선고
이 모(38, 탄핵 반대 단체 'MZ 자유결사대' 단장)	2025-07-02	1심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윤석열정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및 부패 혐의 수사

5. 10.29 이태원참사 구조실패와 책임규명 수사(2022)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인파밀집 상황에서 예방조치는 물론 인파 통제 및 초기 조치나 구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총 159명(참사 당시 158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나온 압사 참사 사건에 대한 수사

사건 진행상태	▪ 재판중
담당 부서	▪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 →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주요 처분	▪ 총 23건, 21명 기소 ▪ 이상민 등 무혐의 처분

1. 사건개요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해밀톤호텔 옆 좁은 골목에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다치는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헬러원을 맞아 수많은 시민들이 모였지만 안전관리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파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참사 직전에 연이은 112 신고에도 즉각적 대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참사 발생 이후에도 정부가 꾸린 원스톱 지원센터나 행정안전부 지원단에서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하지 못하는 등 미진한 대응이 이어지면서 피해생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친구 2명을 참사 현장에서 떠나보낸 생존자 1명이 죄책감과 2차 가해로 고통받다가 12월 12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희생자는 159명에 이르렀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규모의 인명피해였다.

2022년 10월 31일, 서울경찰청은 475명 규모로 수사 본부를 구성했고, 다음 달 1일에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했다. 특수본은 서울경찰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수사 결과, 2023년 1월에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피의자 6명을 구속 송치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특수본 수사가 실무 책임자들을 송치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뒷선을 겨냥하지 못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국회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출범 초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예산안 협상 등을 두고 여야 간의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실질적인 국정조사는 12월 19일이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55일간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등 국정조사가 진행됐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내용 등에 반발하면서 퇴장했다. 우여곡절 끝에 채택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시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였고, 동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은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만 검찰에 송치됐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수사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은 특수본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2023년 1월부터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112신고 기록이 허위로 기재되었고 최초 신고에 대해서는 2차례 사후수정까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했다.

2023년 1월, 서울서부지검은 용산경찰서 관련자 5명을 기소하고, 이어서 용산구청 관련자 4명을 기소했다. 해밀톤 호텔 대표·별관 주점 프로스트 대표·호텔 임차인 1명·호텔 법인 1곳·임차 법인 1곳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2월에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을 추가로 기소한 반면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 엄준욱 119종합상황실장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서 기소된 사람은 18명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뒷선을 향하지 못하면서, 유가족과 시민들은 독립적인 조사를 위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대검찰청이 경찰과 서울서부지검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구속 의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검의 ‘뒷선 꼬리자르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서울서부지검이 김광호 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대검찰청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라고 하여, 사실상 기소가 1년 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유가족들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지난 2024년 1월 15일에서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소,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1월 1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5명이 기소되었다. 이들 중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은 추가로 기소되면서, 총 23건, 21명이 기소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위기에 놓였다가 2024년 5월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제정됐다. 그러나 정부의 느장 행정과 이태원 참사 특조위 위원 임명 지연 등으로 법 통과 1년이 지난 2025년 5월까지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 활동을 하지 못했다.

새 정부 출범후인 2025년 6월 17일 특조위는 유가족 1호 진정사건 포함 41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림으로써 본격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착수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용산구청]

박희영 용산구청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유승재 부구청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직무유기 혐의

[경찰]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3팀장(경정)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혐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국회 허위증언 혐의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박인혁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3팀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혐의

곽영석 전 용산경찰서 정보관 경위 -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혐의

최용원 전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서무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정현우 전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윤경수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구제진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소방]

용산소방서 최성범 서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최종 불기소)

[보건소]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기타]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 이상용, 안준혁, 박정근, 해밀톤관광(주), 디스트릭트(주) - 건축법, 도로법 위반 혐의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장 손제한 경무관

- 수사 1대 총경 김기현 - 수사1계 경정 박창환, 수사2계 경정 고태완, 수사3계 경정 이승하

- 수사 2대 총경 이정철 - 수사4계 경정 이민희, 수사5계 경감 김수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 형사5부] 서울경찰청, 이태원파출소 관련

(~23.9. 형사3부) 지검장 한석리 - 차장 변필건 - 부장 김창수 - 주임 김창수, 김은혜, 이상돈(서울경찰청), 비공개(이태원파출소)

(23.9.~ 형사5부) 지검장 이진동 - 차장 유태석 - 부장 김정훈 - 주임 김정훈(서울경찰청), 허강녕(이태원파출소)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 형사5부] 용산경찰서 피의자 박성민, 김진호, 곽모 경위 관련

(~23.9. 형사3부) 지검장 한석리 - 차장 변필건 - 부장 김창수(주임) - 주무 최정민, 홍등불, 박원석

(23.9.~ 형사5부) 지검장 이진동 - 차장 유태석 - 부장 김정훈(주임) - 주무 홍등불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용산경찰서 피의자 이임재, 송병주, 정현우 등 관련

지검장 한석리 - 차장 변필건 - 부장 김창수(주임) - 주무 김은혜, 이상돈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해밀톤 호텔 관련
 지검장 한석리 - 차장 변필건 - 부장 김창수 - 주임 전형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용산구청 피의자 박희영, 최원준 등 관련
 지검장 한석리 - 차장 변필건 - 부장 이병주(주임) - 주무 이은주, 박경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용산보건소 피의자 최재원 관련
 지검장 한석리 - 차장 변필건 - 부장 이병주(주임) - 주무 이아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소방청 및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관련
 (~23.9.) 지검장 한석리 - 차장 변필건 - 부장 이병주 - 주임 비공개
 (23.9.~ 소방청 및 용산소방서) 지검장 이진동 - 차장 유태석 - 부장 김정훈 - 주임
 비공개(불기소사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 지능범죄수사1팀] 국조특위가 고발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혐의 관련 경찰수사
 서장 총경 조창배 - 수사2과장 경정 윤신규 - 담당수사관 경감 이지원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2-10-31	서울경찰청, 이태원 참사 수사를 위한 수사본부 설치 경찰(서울경찰청 수사본부), 이태원 참사 현장 감식
2022-11-0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를 특별수사본부로 전환
2022-11-02	경찰(특별수사본부),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용산구청·용산소방서 등 8곳 압수수색
2022-11-06	경찰, 피의자 6명 입건 -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 - 류미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 : 직무유기 혐의 - 박희경 용산구청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용산경찰서 정보과 과장, 계장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2022-11-08	경찰, 윤희근 경찰청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박희영 용산구청장 집무실 등 55곳 압수수색
2022-11-09	경찰,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로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 입건 및 압수수색.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용산소방서 지휘팀장 입건
2022-11-11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출국 금지 경찰청 특별감찰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대면 조사
2022-11-14	국가공무원노조 소방청지부, 이상민 장관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특수본 고발 경찰청 특별감찰팀,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정보외사부장 특수본 수사의뢰
2022-11-16	경찰,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입건
2022-11-17	경찰, 행정안전부·서울시청·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 22곳 압수수색
2022-11-18	경찰,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고발 건 공수처에 이첩
2022-11-22	특수본,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실장(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수사, 정보과 직원 4명(증거인멸 혐의) 입건

날짜	수사경과
2022-11-23	경찰, 피의자 9명 입건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정대경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상황3팀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재입건),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 문인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 증거인멸 혐의 :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 1명
2022-11-25	시민단체, 한덕수·이상민·윤희근·오세훈 등 고위공직자 16명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고발 특수본,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등 6곳 압수수색 및 소방청 직원 1명(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입건
2022-12-01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입건 경찰,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 신청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 증거인멸교사 혐의 :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2022-12-06	경찰, 피의자 3명 입건 -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김유미 영장전담판사), 이임재·송병주 구속영장 기각 및 박성민·김진호 구속영장 발부
2022-12-06	경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용산경찰서 직원 1명 입건
2022-12-13	경찰(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손제한 경무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박성민·김진호 검찰에 구속 송치. 증거인멸 혐의로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과모 경위) 검찰에 불구속 송치
2022-12-19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3명 구속영장. 이임재 전 서장 등 구속영장도 재신청
2022-12-20	검찰(서울서부지검), 경찰 신청으로 5명 구속영장 청구, 1명 보완수사 요구 - 이임재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송병주와 공동정범) - 송병주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박희영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최원준 :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 - 문인환 : 보완수사 요구(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2022-12-21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조사
2022-12-23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박원규 영장전담판사), 이임재·송병주 구속영장 발부
2022-12-23	경찰, 소방청 119대응국장과 119종합상황실장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입건
2022-12-26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김유미 영장전담판사), 박희영·최원준 구속영장 발부, 문인환 안전국장 구속영장은 기각
2022-12-26	경찰, 소방청 소속 직원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입건
2022-12-27	경찰, 해밀톤 호텔 별관 주점 프로스트 대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으로 입건.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2022-12-27	경찰, 서울서부지검에 최성범 구속영장 신청.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2022-12-28	검찰(서울서부지검), 경찰에 최성범 보완수사 요구
2022-12-28	공수처(수사3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수사 불개시결정
2022-12-30	경찰(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손제한 경무관), 검찰에 이임재·송병주 구속 송치.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과 직원 1명 불구속 송치

날짜	수사경과
2022-12-30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김창수 부장검사), 박성민·김진호 구속 기소.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교사 혐의 적용. 용산경찰서 광모 경위 불구속 기소. 증거인멸,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혐의 적용
2023-01-03	경찰(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손제한 경무관), 검찰에 박희영·최원준 구속 송치. 유승재·문인환 불구속 송치
2023-01-10	검찰, 경찰청·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용산구청 등 10곳 압수수색
2023-01-13	경찰(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손제한 경무관), 검찰에 17명 불구속 송치 후 수사 종료. 남은 사건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등으로 이첩 - 업무상 과실치사상 : 김광호, 류미진, 정대경, 전 용산경찰서 112팀장,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 유승재, 문인환, 최성범, 송은영, 이권수 -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직원, 최재원 - 업무상 과실치사 : 용산소방서 지휘팀장 - 건축법, 도로법 위반 :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 별관 주점 프로스트 대표 - 검찰, 이태원 역장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
2023-01-18	검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홍보담당관실 등 압수수색
2023-01-18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김창수 부장검사), 용산경찰서 관련자 5명 기소 - 구속 기소 : 이임재(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송병주(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 불구속 기소 :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직원(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여성청소년과장(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2023-01-20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이병주 부장검사), 용산구청 관련자 4명 기소 - 구속 기소 : 박희영(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최원준(업무상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 - 불구속 기소 : 유승재, 문인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2023-01-20	경찰(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참사 희생자 158명, 피해자 및 부상자 280명 총 450명의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금융기관 거래내역 등 금융정보조회 및 검찰 영장 집행
2023-01-26	검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압수수색
2023-01-27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김창수 부장검사), 해밀톤 호텔 대표·별관 주점 프로스트 대표·호텔 임차인 1명·호텔 법인 1곳·임차 법인 1곳 불구속 기소.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 적용
2023-02-08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김창수 부장검사), 박성민·김진호 추가 기소. 증거인멸 혐의 적용
2023-02-08	국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의결
2023-02-09	검찰, 경찰청 정보국 정보분석과·정보상황과·정보관리과 등 7곳 압수수색
2023-02-09	경찰(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방청 직원 1명 검찰에 불구속 송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적용.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 엄준욱 119종합상황실장 무혐의 처분
2023-03-03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이병주 부장검사),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불구속 기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적용. 송은영 이태원역장, 이권수 전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무혐의 처분
2023-03-27	검찰,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압수수색
2023-04-01	검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4-03	경찰(서울영등포경찰서), 국조특위 고발건 관련

날짜	수사경과
	-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무혐의 불송치 : 이상민, 윤희근, 김광호,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정현욱 용산서 112운영지원팀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 국회모욕 혐의 송치 : 송병주 - 재판 진행 중으로 인한 수사 중지 결정 : 이임재
2023-04-06	검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7-25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 기각
2023-10-20	서울서부지검, 경찰 지휘부 수사를 맡던 형사3부와 행정관청 수사를 맡은 형사5부로 나뉜 수사팀을 형사5부로 일원화
2024-01-04	이원석 검찰총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 안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직권 회부 - 대검, 10.29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범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
2024-01-15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공소 제기(공소 제기 9명, 불기소 6명) 권고,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불기소(불기소 14명, 공소 제기 1명) 권고 의결
2024-01-19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총경, 정모 112상황팀장 불구속 기소.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추가 기소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모 현장지휘팀장 불기소 처분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불기소 처분
2024-01-22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 112시스템에 현장 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공전자기록등위장 등 혐의로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A경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A경감, B경위 불구속 기소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이임재·송병주·박인혁 (이태원에 인파 사고 위험이 예견되는데도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지 않은 혐의 등)	2024-09-30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에 금고 2년 - 박인혁 용산경찰서 112상황실 상황3팀장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25-06-00	2심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재판중
최용원·정현우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각을 실제보다 빠르게 허위 기재한 조치 보고서를 작성 및 송부한 혐의)	2024-09-30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 - 당직 근무자 전원 무죄 선고
	2025-06-00	2심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유동균) 재판중
이임재(국회 국정조사 특위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인지시점 및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요청했는지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	2024-09-30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무죄 선고
박희영·유승재·문인환·최	2024-09-30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

피고인	날짜	내용
원준 (이태원에 인파사고 위험이 예견되는데도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지 않은 혐의 등)	2025-06-00	- 박희영 용산구청장, 유승재 부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전원 무죄 선고 2심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재판중
김광호·류미진·정대경 (헬로원데이 인파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서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은 혐의)	2024-10-17	1심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당직 근무자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 전원 무죄 선고
	2025-06-00	2심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유동균) 재판중
박성민·김진호·곽영석 ('헬러원 축제 공공안전 위험분석' 보고서와 헬러원 축제 관련 SRI 보고서 3건 등 4건의 정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	2024-02-14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 -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정보외사부장에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형 선고 - 곽영석 정보관 징역 4월 선고 유예
	2025-06-00	2심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남성민) 재판중
박성민(헬러원 대비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	2025-07-09	1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 -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정보외사부장에 징역 6월 실형 선고
최재원(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	2025-06-00	1심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중 - 검찰 징역 2년 구형 - 판사 교체로 7월 변론 재개 예정
윤경수·구제진 (압사 위험을 언급하는 112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	2025-06-00	1심 서울서부지법 형사 1단독(박지원 판사) 재판중 - 판사 교체로 8월 변론 재개
이상용해밀턴호텔사장·안준혁·박정근·해밀톤관광(주)·디스트릭트(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	2023-11-30	1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 - 이상용 해밀턴호텔 사장에 벌금 800만원 선고 - 안준혁 해밀턴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벌금 500만원 선고 - 박정근 라운지바 프리스트 대표 벌금 100만원 선고 - 해밀톤관광(주) 벌금 800만원 선고 - 프리스트 법인 디스트릭트(주) 벌금 100만원 선고
	2025-04-10	2심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 (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 검찰 항소 기각

6. 대통령실 관저 이전 수사 및 감사원 부실감사 수사(2022)

윤석열이 취임 직후 용산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낭비·계약 체결 등에서의 부패행위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축소 감사에 대한 수사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담당 부서	▪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공수처 수사4부 → 수사2부
주요 처분	-

1. 사건개요

윤석열은 대통령으로 당선된지 열흘 만인 2020년 3월 20일, 대통령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뒤집고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윤석열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을 총 496억 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대통령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합동참모본부는 남태령(수도방위사령부)으로 연쇄 이전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이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한 다음 날,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하는 데에만 1,2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막대한 예산 소요와 국방군사시설의 연쇄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대통령실·관저를 이전하는 데에 이미 발표된 496억 원을 넘어 최소 306억 원이 추가 지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공사계약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대통령집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영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이 언론에 보도됐고,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업체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와 대통령실 용산 청사 건축설계와 감리 등을 맡은 사실도 드러났다.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해 불분명한 의사결정과정 및 비용 추계와 편성·집행 과정, 재정 낭비 의혹, 불투명한 계약 체결 과정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시민 723명과 함께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12월 감사청구 항목 중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여부, 건축 공사 등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비용 추계와 편성·집행의 불법성 및 재정낭비 의혹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에서의 적법성, 국가공무원상 검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각하하여,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감사원(감사원장 최재해)은 2023년 2월 8일 감사에 착수해 2023년 3월 17일 실시감사를 마쳤으나 감사 기간을 연장해 4월 총선 이후인 5월 10일에 감사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부실한 조사로 의결되지 못하고 감사는 재심의 결정과 함께 다시 연장됐다. 2023년 2월 첫 연장 통지 이후, 2024년 8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감사기간이 연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2023년 4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국민감사를 총괄하던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1과장에게 해당 감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에 참여연대는 유병호를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감사 의결 과정 직권남용 혐의 수사(2023) 참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5조는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 감사를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2022년 12월 14일 감사 실시를 결정한 이후 638일 만인 2024년 9월 12일에서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지선정 관련 의사결정과정의 타당성을 감사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하며 감사 범위를 축소했고, 김건희의 후원업체들이 관저 공사업체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도 ‘내부 관계자와 경호처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결정했다’며 김건희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감사결과, 예산 확보 및 계약 체결 전에 업체가 공사에 착수하고, 사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상 공사기간 및 실제 공사기간이 일치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공사참여 업체들이 대통령비서실의 승인도 받지 않고 무자격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었음에도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에 ‘주의 요구’조치만 내렸다. 한편 2023년 10월 경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방탄유리 시공업체 간 유착으로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뇌물)로 수사의뢰하였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2024년 4월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 경호처간부는 2024년 10월 구속기소된다.

참여연대는 2024년 10월 22일, 감사원의 부실·축소 감사 및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오진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등을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 범위에서 부지선정 관련 의사결정의 타당성 등을 제외한 위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김영신 감사위원,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했고, 관저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총괄 책임자로서 위법행위가 드러난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밖에 성명불상의 행정안전부 공무원은 국고손실죄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에 배당했다(사건2. 감사원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감사 의혹 사건).

한편, 2024년 12월 4일, △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적 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회장에 대한 표적 감사 실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등의 사유로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최재해 감사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2025년 1월 7일,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직권으로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의 재심의 검토를 지시했다. 이어 2025년 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감사원은 5월 12일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 국회법 제127조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최재해 감사원장은 2025년 3월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2024년 6월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부실감사 의혹 수사는 ‘김건희특검’에 이첩되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대통령집무실·관저 이전 공사 관련 불법 의혹 관련 수사]
정OO 대통령경호처 간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김OO 대통령집무실·관저 공사 관련 알선업체 관계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김OO 대통령집무실·관저 공사 관련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뇌물공여죄 등 혐의)
[대통령집무실·관저 이전 공사 관련 부실 감사 의혹 수사]
최재해 감사원장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혐의)
김영신 감사위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혐의)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혐의)
김오진 前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
성명불상의 행정안전부 담당 공무원 (국고손실죄 혐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 중단 압력 행사 의혹 사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 교사 혐의)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지검장 이창수²⁰⁰, 박승환²⁰¹(’25.06~) - 차장 조상원²⁰², 공봉숙²⁰³(’25.06~) - 부장 김보성 - 주임 비공개
[공수처 수사4부 → 수사2부]
공수처장 오동운 - 차장 이재승 - 수사4부 부장 차정현(~’25.05) - 송영선(주임)
공수처장 오동운 - 차장 이재승 - 수사2부 부장 김수환(’25.05~) - 송영선(주임)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2-10-12	참여연대 등 시민 723명,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 접수
2022-12-14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2개 사항 감사실시 결정
2023-02-02	참여연대,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07-06	참여연대,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방해 관련,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고발

²⁰⁰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박승환 1차장 직무대리. 2025년 6월 3일 사직.
²⁰¹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지검장 직무대리
²⁰²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이성식 3차장 직무대리. 2025년 6월 3일 사직.
²⁰³ 서울중앙지검 2차장, 4차장 직무대리

날짜	수사경과
2023-10-00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확인된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인테리어 업체 간 유착 정황 검찰에 국고손실죄 혐의로 수사 의뢰
2024-09-12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결과 발표
2024-10-02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불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구속기소
2024-10-22	참여연대,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에서 과정 및 결과에서 확인된 위법사항 관련, 최재해 감사원장·김오진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김영신 감사위원·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성명불상의 행정안전부 공무원 검찰(서울중앙지검) 및 공수처에 고발
2024-10-25	서울중앙지검, 참여연대의 최재해 등 고발 건 강력범죄수사부 배당
2024-12-05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2025-01-06	조은석 감사원장 대행,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직권 재심의 검토 지시
2025-03-13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청구 기각

5. 재판 경과 및 결과

해당 없음

7.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수사(2023)

수해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한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사건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재판중
담당 부서	▪ 사건1. 국방부 조사본부 →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 대구지검 형사2부 ▪ 사건2. 국방부 검찰단 ▪ 사건3. 공수처 수사4부
주요 처분	▪ 박정훈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채수근 상병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수해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되었다가 같은날 23:08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7월 20일 고 채상병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수사단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은 중수대 및 1광수대 수사관들과 함께 사건조사를 지휘하였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의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은 사건을 이첩받을 경북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혐의자와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었다.

박정훈 수사단장은 2023년 7월 21일 유가족에게 1차 중간 수사결과를 설명하였고, 2023년 7월 22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해 다음 주부터 수사단장이 직접 현장지휘 하겠다”고 보고한 후, 2023년 7월 24일부터 포항과 예천을 오가며 수사를 지휘하였다.

박정훈 수사단장은 2023년 7월 28일 07:20경 김계환 사령관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한 뒤, 같은날 14:00경 남원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어 다음 주 초 관할인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기겠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국가안보실에 파견되었던 해병대 소속 김형래 대령은 2023년 7월 28일 해병대 수사단 중수대장에게 연락하여 ‘장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박정훈 수사단장은 2023년 7월 30일 16:00경 국방부장관 이종섭에게 대면으로 수사보고하면서, 임성근 사단장 포함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이

자리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 박진희 군사보좌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이 배석하였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결재하였다. 이어 김계환 사령관은 이종섭 장관과 15분간 독대하며 1사단장 인사조치(분리 파견 계획)와 관련하여 보고하였다.

같은날 17:49 장관보고를 마치고 돌아가는 김계환 사령관은 보고 내용을 대통령 안보실에도 보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수신하였다. 또한 국가안보실의 김형래 대령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김계환 사령관도 몇 차례 통화하였다. 김계환 사령관은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보고서를 김형래 대령에게 보내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난색을 표하자, ‘수사 보고서를 보낼 수 없으면 내일 예정된 언론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7월 30일 18:22경 국가안보실에 언론브리핑 자료를 제공하였다. 자료를 받은 안보실의 김형래 대령은 ‘이거 알리지 마, 아무 데도 말하지 마’라고 요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

그런데 2023년 7월 31일 11:00 열린 대통령 주재 비공개 수석비서관 회의 중 대통령이 국방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격노하면서, ‘이런 문제로(장병 1명이 사망했다고)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 군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상황이 급변했다.

8월 1일 예정된 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브리핑과 국회 국방위원회 대면 보고가 갑자기 취소되고,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군검찰단에 입건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해병대가 사상 초유의 항명 혐의로 수사단장을 보직해임 의결하고, 수사단장을 맡았던 박정훈 대령이 ‘사단장은 빠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임성근 파견 취소, 휴가 처리 등 신변 정리 과정

2023년 7월 31일 11:17 김계환 사령관은 임성근 1사단장을 해병대사령부로 분리파견한다는 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이를 전후로 정종범 부사령관이 후임자로 내정되었으며, 임성근 사단장이 집무실 이전 준비를 완료하고 공관 이사 준비 등을 진행하고 있었고, 김계환 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장, 여야 간사 및 해병대전우회 총재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등과 이러한 사실을 공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를 나누었다.

2023년 7월 31일 11:45경 국방부 장관실에 경호처 명의 대통령실 유선전화(02-800-7070)로 전화가 걸려왔으며, 이종섭 장관과 2분 48초동안 통화하였다. 곧바로 이종섭 장관은 11:57경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 및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하였다. 김계환 사령관은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사령부에 복귀하라고 지시하였다.

11:59 이종섭 국방부장관으로부터 1사단장 복귀 명령을 수명한 후 급히 분리파견을 취소하였으며, 임성근 사단장은 파견명령으로 인한 당일 미출근 상태를 소급 휴가 상신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정 처리가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이종섭 장관은 13시 30분에 열린 국방부 대책회의에서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에게 임성근 휴가 처리와 관련한 지시를 하달하고(정종범 메모), 이후 사령부로 복귀 중인 정종범에게 다시 전화하여 관련 사항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 등 지시

이종섭 장관은 13:30경 장관실에서 긴급 현안 토의를 소집하였고, 허태근 정책실장, 전하규 대변인 그리고 새로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참석했다. 이 현안 토의에서 이종섭 장관은 서울에 나와 있는 해병대 간부를 찾아 장관실로 보내라고 했고 국회에 나와 있던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국방부에 호출되었다. 이종섭 장관은 정종범 부사령관에게 ‘10가지 지시’ 사항을 전달하였다. 이 지시사항 중에는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후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박정훈 수사단장은 총 5차례 통화하였다.

임기훈 국방비서관과의 통화를 통해 대통령의 격노사실을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김계환 사령관은 2023년 7월 31일 17:00경 박정훈 수사단장을 불러 대통령 격노 사실에 대해 전했다. 박정훈 수사단장은 수사단 부하들에게 이 대통령 격노 발언을 전달하였다.

이어 박정훈 수사단장은 ‘故 상병 채수근 익사사건의 관계자 변경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18:00경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달하였다(반으로 접어 수첩 사이에 끼워 넣었다는 박단장의 진술). “수사과정에서 관계자 변경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적시하였다.

한편,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장관을 수행 중이던 우즈베키스탄에서 김계환 사령관과 여러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이 중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2023년 8월 1일 10:25경, “지난번 보고가 중간보고이고, 이첩 전 최종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12:06경에는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의뢰, 지휘책임 관련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계환 사령관은 “지금 단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라고 답신하였다.

김계환 사령관은 2023년 8월 1일 15:29경 박진희 군사보좌관에게 “군사보좌관님! 수사단 수사 결과를 어제와 오늘 다 확인했는데 문제점을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해 재검토해줄 것을 건의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내일로 예정된 수사기록 이첩을 국방부 장관 귀국 이후로 연기하고 대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기록을 이첩받아 재검토하여 달라는 요구였다. 당시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의 통화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이종섭 장관은 조사본부 이관을 거부하였다.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15:53경 김계환 사령관에게 “사령관님! 장관님께서서는 ‘수사’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수사권이 없기에 ‘수사’가 아닌 ‘조사’라고 하였고, 조사본부로의 이첩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계환 사령관은 2023년 8월 1일 17:20경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경찰 이첩 서류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사건 인계서와 기록 목록을 살펴보았다. 박정훈 수사단장은 “내일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겠다”고 김계환 사령관에게 보고하였다.

해병대 수사단(박정훈 수사단장),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 시작

박정훈 수사단장은 2023년 8월 2일 7:20경 제1광수대장에게 이첩을 위해 경북경찰청으로 출발하라고 지시하였다. 10:00경 박정훈 수사단장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수사기록을 이첩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서 김계환 사령관은 “내가 지금 너에게 ‘멈춰!’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박정훈 수사단장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김계환 사령관은 “알았다. 나가봐라”라고 말했다.

김계환 사령관은 2023년 8월 2일 10:51경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화하여, “정훈아! 멈추면 안 되겠니?”라고 말하고, 이어 “이첩 멈춰!”라고 명령하였다. 사령관, 비서실장, 수사단 간부들이 여러 차례 전화하였지만 경북경찰청에서 사건기록을 이첩 중이던 제1광수대장 등은 사건을 이첩하는 동안 전화를 다른 곳에 둔 상태여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계환 사령관은 2023년 8월 2일 11:13경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이종섭 장관에게 이첩 사실을 보고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8월 2일 12:07경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장관과 첫 번째 통화하였다. 윤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과의 통화는 총 3차례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 통화는 12:43경이었으며, 세 번째 통화는 12:57경이었다.

국방부 검찰단, 불법적 사건 회수 및 박정훈 수사단장 입건

김계환 사령관은 2023년 8월 2일 12:45경 박정훈 수사단장을 호출하여 보직 해임을 통보하였으나 13:15경 해병대 참모장의 건의를 받고 보직 해임을 보류하였다. 이후 15:00경 국방부 차관의 지시를 받은 김계환 사령관은 박정훈 수사단장 보직 해임을 인사처장에게 지시하였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2023년 8월 2일 13:50경 경북경찰청 노규호 수사부장(현 경기도북부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오전에 이첩시킨 수사기록을 반환해 달라는 전화를 걸었다. 양자를 연결하여 준 것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파견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인 박종현 경정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정철 과장(총경)에게 연락하여 법무관리관과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간 연결을 부탁하였다.

- 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파견 경찰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7관계자
- ② 12:4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7관계자 → 경북경찰청 간부, “국방부에서 사건 회수 원한다”
- ③ 12:50~오후 3:56 임종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2차례 전화
- ④ 오후 1:03, 김계환 사령관 →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 ⑤ 오후 1:26 국가안보실 파견 김형래 대령 → 김화동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 ⑥ 오후 1:50 유재은 법무관리관 → 경북경찰청 간부, “사건기록 회수하겠다”
- ⑦ 오후 4:13 김계환 사령관 →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 ⑧ 오후 늦게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통화
- ⑨ 오후 7:20 국방부 검찰단, 경북경찰청 방문해 사건기록 회수
- ⑩ 오후 8:40 김계환 사령관,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개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2023년 8월 2일 14:40경 긴급회의를 열고 이첩된 서류를 회수하기로 결정하고, 박정훈 수사단장 및 ‘성명불상’으로 적은 3명에 대해 ‘집단항명수괴 혐의’를 적용하여 입건하기로 결정하였다.

휴가차 외국에 나갔던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23년 8월 2일 16:00경 귀국하여 곧바로 공항에서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하여 이첩상황을 물었고, 김계환 사령관은 “이첩이 강행된 전후 사정에 대해 임 차장에게 설명”하였다(8월 25일 국회 국방위 답변).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 2일 17:00경 해병대사령부에서 김계환 사령관을 3시간동안 조사하였다.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 2일 19:20경 경북경찰청에서 사건 이첩 기록을 회수하였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을 위해 온나라시스템으로 발송한 공문은 약 3주간 방치되다가 8월 23일 반송되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 13일 박정훈 수사단장의 혐의를 집단항명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하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재검토TF) 조사 결과의 변경

국방부 조사본부(재검토TF)는 2023년 8월 14일 임성근 1사단장, 7여단장, 채상병이 속한 부대의 대대장 등 6명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검토 결과 법리 판단’이라는 문건을 국방부 검찰단과 법무관리실에 보내 각각 의견을 구하였다. 2023년 8월 15일 국방부 검찰단과 법무관리실은 검토의견을 회신하였다. 임성근 1사단장과 7여단장은 제외시키고,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4명은 사실만 적시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종섭 장관은 2023년 8월 17일 이른바 ‘5인 회의’(이종섭 장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조사본부 수사단장)를 소집하였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23년 8월 21일 임성근 1사단장과 7여단장의 혐의를 제외시킨 재검토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박정훈 수사단장 ‘항명’ 혐의 기소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 31일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해 집단항명수괴가 아닌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023년 9월 1일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은 김계환 사령관에 대한 항명 혐의와 이종섭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박정훈 대령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실의 개입 또는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이유

7월 28일 박정훈 수사단장이 임성근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사건을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할 예정이라는 수사보고를 받은 후 임성근 사단장 교체 작업을 진행하는 등 군 내에서 임성근의 책임에 대해 아무런 문제 의식 없었다. 그런데 7월 31일 소위 ‘VIP 격노’가 발생하면서 예정되어 있던 수사결과 언론 브리핑과 국회 대면 보고가 중단됐다.

임성근에게 해병대사령부로 분리파견 명령을 했다가 파견 취소, 소급휴가, 휴가처리강조, 휴가결재 등 임성근 사단장 신상 처리를 위해 비정상적인 행정처리가 이어진 것이 ‘임성근 구명로비’ 때문이라는 의혹에 힘을 실었다. 이 과정에 대통령실 - 국방부 - 해병대사령부 간 오고간 통화가 다수 확인됐다. 아울러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자 보직 해임되었다가 취소되고, 재차 보직해임되었는데 이같은 보직해임 결정 반복된 것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하다.

국방부 검찰단 수사기록이 무단 회수됐다.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이첩공문을 발송하고 수사기록을 송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경찰이 국가수사본부 과장과 통화했고 해당 과장이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과 통화했다. 공직기관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시도했고 국방부에서는 국방부차관,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의를 했고, 이어서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과 통화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수사관을 파견해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해갔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기록을 정상적으로 압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관 협조’라는 명목 하에 무단으로 회수한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처음에는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했다가 항명의 주체를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 변경하고, 항명죄로 기소하는 등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 초기 혼선도 ‘윗선’의 외압 때문이라는 의혹을 샀다.

국방부장관은 채 상병 사건 관할을 해병대 수사단에서 국방부조사본부로 변경해 국방부조사본부가 재검토에 나섰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임성근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의 중간 재검토결과를 국방부 검찰단장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담당관에 송부하고 검토 의견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자

연석회의의 진행하고,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재이첩할 때에는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했다.

축소 은폐 의혹 제기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채 상병 사망사건은 군에 복무 중이던 한 청년이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사건임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부당한 개입으로 사건이 축소, 은폐되었다는 의혹이 크게 일면서 국회는 2023년 10월 6일 채 상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2024년 3월 4일 주 호주 대사에 임명하였다가, 공수처 출국금지 논란과 함께 이종섭은 3월 10일 출국하였지만, 결국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해명 여론으로 21일 귀국하였고 29일 면직되었다.

202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5월 21일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국회는 2024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였지만 부결되었다(투표수 294명, 찬성 179명, 반대 111표, 무효 4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4년 6월 21일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를 열었다.

그러던 와중에 2024년 6월 25일 블랙펠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종호 등 해병대 출신들이 임성근 1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추진하는 단체 대화방 내용이 보도되었다. 임성근 구명로비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가 관련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4년 7월 4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7월 9일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7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였지만 부결되었다(총 299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

2024년 9월 1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2024년 10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법률안은 10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되었지만, 결국 부결되었다(총 300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2표).

한편 경북경찰청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2024년 7월 8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병대 7여단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송치했지만 이번에도 유독 임성근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23년 7월 채 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했지만, 사망사건 규명은 미진했으며, 수사외압 수사를 맡은 공수처 또한 인력난 등의 이유로 수사는 거의 진척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3차례 거부권 행사로 특검을 통한 수사조차 가로막혔다.

윤석열이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파면된 후에서야,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외압 의혹 수사가 진행됐다.

내란 수사에 나섰던 공수처도 윤석열 파면 이후 2025년 4월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외압 수사를 재개했다. 한편 2024년 7월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상병 사망사건을 송치 받은 대구지검(형사2부)이 2025년 5월 임성근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때 검찰이 지난 10월경 임성근을 피의자로 두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시작했지만 내란 사태로 중단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6월 5일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되며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사건1.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대대장 8명

[사건2.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해병대 대령

[사건3.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등 혐의]

윤석열 대통령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전 호주대사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육군 56사단장

김동현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 경찰 최모씨 등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5인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사건1.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국방부 조사본부]

본부장(대리) 해군 대령 박경훈 - 수사단장 육군 대령 김진락

[경북경찰청 수사부 형사과 강력범죄수사대 → 형사기동대 형사기동2팀]

청장 치안감 최주원 - 부장 경무관 노규호 - 과장 총경 김기범 - 대장 경정 이진식

- 수사1팀. 경위 김창동, 경사 이재오, 경사 김주현, 경사 전경민, 경장 박태원, 순경 김현우

- 수사2팀. 경감 이창희, 경사 조영길, 경사 금시호, 순경 류수근

- 수사3팀. 경감 윤언, 경사 허진, 경사 김준형, 경장 임한별, 경장 최두훈(~'24.02)

청장 치안감 김철문 - 부장 경무관 김형률 - 대장 총경 최문태 - 팀장 경정 김규은

- 수사1팀. 경위 김창동, 경사 이재오, 경사 김주현, 경장 박태원, 순경 김현우('24.02~')

[대구지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팀]

지검장 박기동 - 팀장 유도윤 1차장 검사 - 부팀장 김성원 형사2부장검사 - 이외 비공개

사건2.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 → 고등검찰부] 담당부서 외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²⁰⁴

사건3.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등 혐의

[공수처 특별수사본부 → 수사3부 → 특별수사본부 → 수사4부]

처장 김진욱²⁰⁵ - 차장 여운국²⁰⁶ - 부장 이대환 - 주임 차정현('23.07~)

처장 오동운('24.05~) - 차장 이재승('24.07~) -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3-07-19	해병대 채 상병, 수해 피해 복구 작전 중 사망
2023-07-30	- 오후 4시 30분경, 해병대 수사단,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대대장 포함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조사 결과 대면 보고 및 결재 - 오후 5시 49분, 박진희 군사보좌관 김계환 사령관에게 메시지 발송. '안보실에도 보고가 돼야 할 것 같다. 내일 아침엔 국방비서관에겐 인지가 되어야' 등 내용으로 알려짐 - 오후 6시 및 6시 15분, 김계환 사령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통화 - 오후 6시 34분, 해병대 수사단 유모 소령, 국가안보실 파견 해병대 김형래 대령에게 언론 브리핑 자료 이메일 전송. 김형래 대령,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회신
2023-07-31	- 오전 9시 53분, 김계환 사령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통화 - 오전 11시경, 대통령 주재 비공개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 오전 11시 54분경, 이종섭 장관, 대통령 경호처 유선전화(02-800-7070) 수신 - 오전 11시 56분경, 이종섭 장관, 김계환 사령관에게 언론 브리핑, 국회 국방위원회 대면 보고 취소, 경찰 이첩 보류 지시 주장 - 오후 1시경, 국방부, 언론 브리핑 및 국회 국방위원회 대면 보고 취소 - 오후 1시 30분, 이종섭 장관, 긴급 현안 회의 소집하여 임성근 휴가조치 등 지시(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박진희 군사보좌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배석) - 오후 2시 47분, 이종섭 장관(박진희 군사보좌관 휴대전화), 정종범 해병대

²⁰⁴ 국방부는 2025년 5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담당부서(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장)만 부분공개 처분함. 경찰청은 2024년 3월에도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를 결정했고, 2024년 4월 이의신청 이후에야 담당부서(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를 부분공개한 바 있음.

²⁰⁵ 임기만료(24.1.21.)로 여운국(24.1.22.~28.), 김선규(24.1.29.~3.4.), 송창진(24.3.4.~20.), 김선규(24.3.20.~5.29.) 직무대리

²⁰⁶ 임기만료(24.1.28.)로 송창진(24.1.29.~3.4.), 박석일(24.3.4.~20.), 송창진(24.3.20.~7.30.) 직무대리

날짜	수사경과
	부사령관에게 임성근 휴가 처리 재강조 - 오후 3시 18분경, 박정훈 대령,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사건인계서’ 요청하며 혐의자와 혐의 내용,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제외 압박 주장 - 오후 4시경, 박정훈 대령,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 다 빼고 일반 서류처럼 넘겨라’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주장 - 오후 4시경, 김계환 사령관, 회의를 통해 박정훈 대령에게 ‘이종섭 장관의 해외 출장 복귀 후 조사자료 보고 및 이첩’ 1차 지시했다고 주장. 박정훈 대령은 명확한 지시 없었고, 김계환 사령관에게서 VIP 격노 사실 전해들었다고 진술. - 오후 5시경, 김계환 사령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통화
2023-08-01	- 오전 9시 14분경, 해병대 수사단,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사건인계서 전송 - 오전 9시 43분경, 박정훈 대령,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직접적인 과실 있는 사람으로 혐의 한정’하라고 발언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인지 반문했고, ‘그렇다’고 답변했다고 주장. 외압으로 느껴 ‘사단장 빼라’는 것이나 반문했으나, 답하지 않았고, 묵시적으로 빼라고 느꼈다고 주장 - 오전 10시 17분, 박진희 군사보좌관, 김계환 사령관에게 경찰 이첩 일정 문의하며, ‘조만간 이첩 어려워 보인다’고 메시지 전송. 김계환 사령관, 8/2 오전 10시 일정 및 이첩 어려운 점 고민된다고 회신하고 이에 대해 박진희 군사보좌관, ‘지난 보고를 중간보고로, 이첩 전 최종 보고로 제안’ 답신. - 오후 12시 6분, 박진희 군사보좌관, 김계환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 검토 요청’ 메시지 전송 - 국방부, 오후 2시 예정된 수사결과 언론브리핑과 국회 국방위원회 대면 보고 일정 취소 - 오후 3시 37분, 김계환 사령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통화 - 오후 4시경, 박정훈 대령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통화. 스피커폰으로 해병대 수사단 청취 - 오후 4시 30분경, 김계환 사령관, 회의를 통해 박정훈 대령에게 경찰 이첩 보류 최종 지시 주장.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이 명확한 하나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
2023-08-02	- 오전 10시경, 해병대 수사단,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망사건 이첩 시작 - 오전 10시 51분경, 김계환 사령관, 박정훈 대령에게 인계 중단 전화 지시.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 전화 연락 시도했으나 불통 주장 - 오전 11시 13분, 이종섭 장관, 군검찰단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 지시 - 오전 11시 46분 및 52분,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 - 오전 11시 50분경, 해병대 수사단,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망사건 이첩 종료 - 오전 11시 52분, 박진희 군사보좌관, 김계환 사령관에게 “ㄱㄱ님이 통화 원하신다. 나중에 이첩하는 것으로 정확히 전했는지 궁금해하신다” 문자 - 오후 12시 7분,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하여 통화 - 오후 12시 40분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모 과장,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경찰청 소속 박모 행정관으로부터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경북경찰청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전화번호와 함께 ‘국방부에서 사건기록 회수 원한다’는 취지 전달 - 오후 12시 43분,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하여 14분여간 통화 - 오후 12시 50분,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 - 오후 12시 51분, 국가안보실 파견 해병대 김형래 대령, 해병대 사령관 김화동 비서실장에게 전화 - 오후 12시 55분경, 김계환 사령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통화 - 오후 12시 57분,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하여 통화 - 오후 1시 42분,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통화. 유재은은 임기훈이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는 말을 해줬다”고 증언함. - 오후 1시 50분경, 유재은 법무관리관, 경북경찰청에 사건기록 회수 취지 전화 - 오후 2시 40분경, 김동혁 군검찰단장, 회의에서 사건기록 회수 지시 - 오후 3시경, 군검찰단, 경북경찰청에 사건기록 회수 전화

날짜	수사경과
	- 오후 3시 40분, 신범철 국방부 차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하여 통화 - 오후 3시 56분,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 - 오후 4시 13분, 김계환 사령관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통화 - 오후 4시 21분, 윤석열 대통령,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하여 통화. 신범철은 국회 입법청문회(법사위, 2024.6.21.)에서 이 날 통화가 '회수와 관련' 됐다고 말한 바 있음. - 오후 4시 45분부터,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두 차례 문자 후 통화 - 오후 4시 59분, 유재은 법무관리관 대통령실(02-800-) 번호로부터 전화 수신 - 오후 5시 55분,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 - 오후 7시경, 군검찰단,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채 상병 사망사건 회수, '사건기록 인계인수증' 작성
2023-08-03	군검찰단, 집단항명 혐의로 해병대 수사단 압수수색. 박정훈 대령 집단항명 수괴 혐의, 수사단원 집단항명 혐의 입건
2023-08-08	법무관리관실, 이종섭 장관에게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해병대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 보고 문건을 올려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경찰에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힘. - 오전 7시 55분,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하여 통화 -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1분 사이,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박진희 군사보좌관 3회 통화 - 오전 8시 59분, 박진희 군사보좌관과 김형래 국가안보실 행정관(해병대 대령) 통화 - 오전 9시 29분,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통화 - 오전 10시 8분,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6분여 통화
2023-08-09	이종섭 장관, 채 상병 사망사건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지시 - 이날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최소 5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짐
2023-08-09	김규현 변호사, 블랙펠트 인베스트 이종호 대표·송호정 전 청와대 경호부장과 통화. 이들이 임성근에게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이종호)', '전혀 사표라든지 이런 건 내지 말아라, 사의 표명을 하지 말아라(송호정)'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힘.
2023-08-11	국방부 조사본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 기록 넘겨 받음
2023-08-11	박정훈 대령,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수사외압을 폭로하며 국방부 검찰단의 집단항명수괴 혐의 수사 거부하겠다고 밝힘
2023-08-14	군검찰단,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로 변경 및 해병대 수사단 참고인 전환
2023-08-14	박정훈 대령 국방부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2023-08-14	국방부 조사본부, 초기 보고서 "고 채 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 작성 및 의견 요청 공문 국방부 장관(군사법정책담당관) 및 국방부 검찰단장(공공형사과장) 앞으로 발송. 혐의자로 임성근을 포함한 6명을 구체적 혐의와 함께 적시한 것으로 알려짐(말단 간부 2명 제외).
2023-08-15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및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 조사본부의 의견 요청에 회신. 임성근 사단장과 7여단장 등 과실이 있다면서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관계 적시하고 관련자로 기재한 뒤 통보하라는 취지로 처리 방향 제시.
2023-08-17	이종섭 장관, 박경훈 등 국방부 조사본부 간부들과 연석회의 진행. 유재은·김동혁 등은 회의에서 처벌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 제시
2023-08-18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임성근 사단장 포함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권한 없는 군검찰단에 채 상병 사건 기록 반환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날짜	수사경과
2023-08-20	국방부 조사본부, '해병대 사망 건 재검토 결과' 최종 보고서 국방부장관 보고.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적시한 8명 중 2명에 대해서만 범죄 인지통보서 작성하고, 임성근 등 4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적시해 경찰 송부하겠다는 내용 담김(하급간부 2인 제외).
2023-08-21	국방부 조사본부, 임성근 사단장 등 제외 대대장 2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포함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재검토 결과 공개
2023-08-2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군인권센터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임성근 사단장 포함 8명 고발 건 대구경찰청 배당
2023-08-22	박정훈 대령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피의자로 경찰에 이첩된 대대장 이모 중령, 임성근 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 고발
2023-08-23	박정훈 대령,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군검찰단장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수처 고발
2023-08-24	국방부 조사본부, 임성근 사단장 등 제외하고 대대장 2명 범죄 혐의 적시해 경북경찰청 이첩
2023-08-24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24명 규모 수사전담팀 구성
2023-08-25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박정훈 대령 신청에 대해 수사중단 5:수사 계속 4(기권1)로 '의견없음' 결정
2023-08-28	군검찰단,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대령 소환 조사
2023-08-30	군검찰단, 김계환 사령관에 대한 항명 혐의와 이종섭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
2023-09-01	법원(중앙지역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기각
2023-09-04	국방부, 박정훈 대령의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 신청 기각
2023-09-05	더불어민주당, 이종섭 장관, 신범철 차관, 김계환 사령관, 성명불상 대통령실 관계자 등 7명 공수처 고발
2023-09-05	군검찰단,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대령 소환 조사
2023-09-07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전담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2023-09-08	공수처, 박정훈 대령 참고인 신분 조사
2023-09-14	경북경찰청, 채 상병 사망원인 합동 실황조사
2023-09-14	공수처, 박정훈 대령 참고인 신분 조사
2023-09-20	군검찰단,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대령 소환 조사
2023-09-25	공수처, 해병대 수사단 참고인 조사 및 면담. 경북경찰청 관계자 일부 면담
2023-09-26	공수처, 해병대 중앙수사대장 박모 중령 참고인 소환 조사
2023-10-06	군검찰단, 김계환 사령관에 대한 항명 혐의와 이종섭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박정훈 대령 불구속 기소
2023-10-06	국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패스트트랙 의결
2023-10-13	공수처, 임성근 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고발 건 생존 장병 모친 고발인 조사
2023-10-24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공수처 고발
2023-10-25	생존 장병, 해병대 전역 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임성근 사단장 공수처 고소

날짜	수사경과
2023-11-28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에 대한 군검찰 수사기록 공수처 제출
2023-12-07	경북경찰청, 30~40명의 참고인 조사를 했다는 언론 보도
2023-12-12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임성근 사단장 입건
2024-01-00	공수처,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군검찰단장, 김계환 사령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출국금지 조치
2024-01-16	공수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주거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해병대 관계자 사무실 등 압수수색(~1/17)
2024-01-17	공수처, 김계환 사령관 및 부사령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4-01-30	공수처,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사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
2024-02-22	군인권센터, 대통령실 수사외압 은폐 목적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김동혁 군검찰단장 등 공수처 고발
2024-03-04	외교부,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등 공관장 인사 발표
2024-03-07	공수처, 이종섭 전 장관 자진 출석 형식 조사. 이종섭, 채 상병 사망 후 사용한 휴대전화 제출
2024-03-08	공수처, 법무부에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 유지 요청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 해제
2024-03-10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2024-03-29	이종섭 호주대사,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참석 위해 귀국
2024-03-29	이종섭 호주대사, 대사직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 면직안 재가
2024-04-03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부의 간주
2024-04-22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대장 이모 중령 피의자 소환 조사 및 고발인 조사
2024-04-23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대장 이모 중령 2차 피의자 소환 조사 및 고발인 조사
2024-04-24	공수처,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피의자 소환 통보
2024-04-26	공수처, 유재은 법무관리관 피의자 소환 조사
2024-04-29	공수처, 유재은 법무관리관 2차 피의자 소환 조사
2024-04-30	공수처, 김계환 사령관 피의자 소환 통보
2024-05-02	국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
2024-05-02	공수처,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피의자 소환 조사
2024-05-04	공수처, 김계환 사령관 피의자 소환 조사
2024-05-07	공수처,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착수, 임의제출 협의
2024-05-10	공수처, 해병대 이윤세 공보정훈실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4-05-13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임성근 전 사단장 피의자 소환 조사
2024-05-19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해병대 7여단장과 해병대 포병 11대대장 대질 조사
2024-05-20	공수처,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피의자 소환 조사

날짜	수사경과
2024-05-21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2024-05-21	공수처, 김계환 사령관 피의자 소환 조사 -김계환 사령관, 박정훈 대령과의 대질 신문 거부
2024-05-21	공수처, 박정훈 대령 참고인 소환 조사
2024-05-25	공수처, 사건 기록 회수 후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참고인 소환 조사
2024-05-28	국회, '채상병특검법' 재의결하지만 부결됨(투표수 294명, 찬성 179명, 반대 111표, 무효 4표)
2024-05-30	더불어민주당, '채상병특검법' 재발의
2024-06-00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에 경북청에 배당된 채상병 사건을 다시 국방부검찰단으로 인계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배당
2024-06-03	공수처, 사건 기록 회수 후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2차 참고인 소환 조사
2024-06-21	국회 법사위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개최
2024-06-25	JTBC,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전 대표를 통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멋쟁해병' 카톡방 보도
2024-07-04	국회, '채상병특검법' 가결(2번째)
2024-07-04	공수처, 김규현 변호사 참고인 신분 출석 조사를 시작으로 '골프 모임 의혹' 관련 관계자 조사 착수
2024-07-05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주요 혐의자 9명 중 하급간부 2명과 임성근 전 사단장(3명) 불송치 의견, 이외 6명 송치 의견
2024-07-08	경북경찰청,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 발표 -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송치, 임성근 사단장 등 3명 불송치(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름)
2024-07-08	대구지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 구성(팀장 유도운 1차장 검사, 부팀장 김성원 형사2부장, 3개 검사실)
2024-07-09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특검법'(2번째) 거부권 행사
2024-07-15	공수처, '도이치 공범' 변호 이력 있는 검사 2명 직무 배제
2024-07-18	공수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소환조사
2024-07-25	국회, '채상병특검법' 재의결하지만 부결(총 299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
2024-07-25	조국혁신당, '채상병특검법' 재발의(3번째)
2024-08-08	더불어민주당, '채상병특검법' 재발의(3번째)
2024-08-12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2024-08-19	박정훈 대령, 대통령 상대로 군사법원에 사실조회 요청
2024-09-03	야5당, 제3차 추천 '채상병특검법' 재발의(3번째)
2024-09-19	국회, '채상병특검법' 가결(3번째)
2024-10-02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특검법'(3번째) 거부권 행사

날짜	수사경과
2024-10-04	국회, '채상병특검법' 재의결하지만 부결(총 300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2표)
2024-10-07	대구지검, 이용민·임성근·공수처 등에 대해 압수수색. 이용민 중령 측은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신청
2024-10-25	윤석열 대통령, 8월에 제출된 채상병 담당 공수처 검사 4명 연임신청 재가하지 않고 있다가 임기만료 2일을 남기고 재가
2024-11-05	공수처, 인력부족을 이유로 채상병 사건을 수사4부에서 수사3부로 재배당
2024-11-27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 사건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 이모 중령 참고인 소환 조사(약 4개월만의 수사 재개)
2025-04-23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 임성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절차 진행(약 4개월만의 수사 재개). 임성근, 조사 녹음 요구에 휴대폰 포렌식 조사 불발
2025-04-30	공수처, 임성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재개
2025-05-07	공수처, '채상병 외압' 안보실·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시도했지만 불발
2025-05-08	공수처, '채상병 외압' 안보실·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재개, 오후 4시 30분쯤 종료. 대상 기관 협조하에 순조롭게 진행
2025-05-09	공수처, 임성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진행
2025-06-04	대구지검, 임성근 소환조사
2025-06-05	국회, '채상병특검법'(4번째) 통과
2025-06-12	이재명 대통령,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특별검사로 임명
2025-07-02	채상병 특검, 공식 수사 개시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박정훈 -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2024-11-21	군검찰,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법정최고형 징역 3년 구형
	2025-01-09	1심(중앙지역군사법원 2023고43) 무죄 선고
	2025-05-30	국방부 검찰단, 공소장 변경신청서 제출 - 박 대령의 혐의를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에서 “상관인 국방부 장관과 상관인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변경
	2025-06-00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난영) 2심 진행중

8. 윤석열 대통령 처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수사(2023)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2022년 윤석열정부 출범 후 강상면 종점으로 수정 발표되면서, 강상면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수사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담당 부서	▪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 공수처 수사4부 →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
주요 처분	-

1. 사건개요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6번 국도) 일대의 상습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으로 2017년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양서면 종점을 전제로 한 양평고속도로는 2019년 3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후 2년 간 조사를 거쳐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했다. 2022년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도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은 양서면이었다. 그런데 2023년 5월 8일, 국토교통부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양평고속도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2023년 6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 행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되었다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유는 ▲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강상면 일대에 대지나 창고용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소유해 종점 변경으로 인한 손해가 예상된다는 점 ▲ 강상면 종점안이 예타 등 관련 절차에서 한 번도 제시되지 않은 채 새롭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포함되었다는 점 ▲ 노선변경시 소요 예산이 증가한다는 점 ▲ 변경된 종점안으로 인해 두물머리(6번 국도) 일대 교통 정체 해소 및 장래 노선축 연결과 양평군과 서울시 지역 간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즉 국토교통부의 종점 변경안이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사익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원희룡 장관과 국토교통부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정하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등 반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강상면 종점 변경이 2022년 7월 양평군청의 제안을 받은 이후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평군청은 국토교통부의 의견 제시 요청에 따라 나들목 설치를 요청했을 뿐 노선 위치 변경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는 2022년

5월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가 강상면 종점안을 제안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용역업체가 발주처의 지시와 다른 새로운 변경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과 착수보고 후 보고서 발간까지 한 달여의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설득력이 없었다. 오히려 국토교통부가 2022년 4월 이전, 즉 대선 직후에 강상면 종점안을 확정해 발주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실무자가 양평고속도로에 대해 2023년 7월 국토교통부가 국가 상위계획에 양평-춘천 연결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밝힌 공식입장을 재확인하며 ‘단연코 상위계획에는 연결 계획이 없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는 두물머리 인근 6번 국도 교통 정체 해소와 ‘장래 노선축 연결’이라는 양평고속도로 건설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장래 노선축이란 2021년 발표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서울-춘천-양양으로 이어지는 동서9축 지선을 말한다. 장래 노선축과 연결하지 않는다면 서울-양평고속도로를 건설할 타당성은 부족해진다.

정권과 무관하게 수십 년에 걸친 국가 교통망계획 관리의 책임이 있음에도 원희룡 장관은 계획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국토교통부가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는 또다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국토교통부의 말 바꾸기와 원희룡 장관의 1조 7천억 원대 국책사업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선언 후 강상면 종점안의 경제성 평가 발표, 타당성 조사 재개 등 모순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대한 언론의 검증과 국토교통부의 말 바꾸기, 원희룡 장관의 갑작스런 서울-양평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선언으로 논란이 증폭되었다.

전·현직 양평군청 관계자 등도 의혹의 대상이 되었다.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양평군수 후보로 나선 전진선 후보자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양평고속도로 건설 공약을 내세웠으나, 군수 취임 이후 강상면 종점안이 더 적합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아울러 전진선 군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2023년 5월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고 알았다더니, 2023년 8월 18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강상면 종점 변경안 요구 집회에서 ‘국토교통부가 2022년 7월 18일에 보낸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양평군 의견 요청 문서에 강하IC가 포함되지 않아 내부 논의 후 7월 26일 강하IC 설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회신했으며, 2023년 1월 국토교통부가 강하IC 포함 계획을 통보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4~6대 양평군수를 지낸 국민의힘 소속 김선교 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여주지청장 재직 당시 친분 등이 회자되었고,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연루된 양평군청 안철영 도시국장이 양평고속도로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2022년 7월 1일 취임한 전진선 양평군수는 7월 7일 안철영 도시과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원포인트 승진 발령했고, 7월 18일 국토교통부가 양평군청에 종점안 의견을 요청했다. 안철영 도시건설국장은 양서면과 강상면 종점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문의 최종 결재자였다.

2023년 7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한 시민단체는 원희룡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각각 고발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와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전진선 양평군수, 안철영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하여 국토부 공무원과 협의 기관인 양평군 공무원, 타당성 조사 용역사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였으나, 원희룡 장관과 전진선 양평 군수 등 핵심 피고발인을 상대로 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해당 고발 사건 수사에 나섰다.

한편 6월 5일 국회는 이른바 내란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김건희특검법의 수사대상에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이 포함되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진선 현 양평군수
안철영 양평군 도시건설국장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양평군청 관계자
청장 치안정감 홍기현 - 광역수사단장 경무관 김철문 - 수사대장 총경 반진석 - 경정 신동현(~'24.02)
청장 치안정감 홍기현 - 광역수사단장 경무관 김종민 - 수사대장 총경 이정철 - 경정 신동현('24.02~)
청장 치안정감 김준영('24.08~) - 광역수사단장 경무관 이충섭 - 수사대장 총경 오지용 - 경정 조주현('25.03~)
[공수처 수사4부 →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 원희룡, 김선교
공수처 처장 김진욱²⁰⁷ - 차장 여운국²⁰⁸ - 부장 박석일 - 주임 최장우(~?)²⁰⁹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 지청장 김용자 - 부장 정우석 - 주임 비공개('23.12~)²¹⁰

²⁰⁷ 임기만료(24.1.21.)로 여운국(24.1.22.~28.), 김선규(24.1.29.~3.4.), 송창진(24.3.4.~20.), 김선규(24.3.20.~5.29.) 직무대리

²⁰⁸ 임기만료(24.1.28.)로 송창진(24.1.29.~3.4.), 박석일(24.3.4.~20.), 송창진(24.3.20.~7.30.) 직무대리

²⁰⁹ 공수처는 2025년 5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진행중인 재판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공수처는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그러나 공수처는 2024년 4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부분공개를 결정하고 답변한 바 있음.

²¹⁰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2025년 4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백지화 선언 등 관련하여 공수처에서 여주지청으로 이첩한 사건의 피고발인은 김선교, 원희룡 2명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함. 한편, 공수처에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배당한 것은 2023년 12월 31일 언론보도로 알려진 바 있음.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3-06-16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원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고속도로 투기 의혹 등 제기
2023-07-06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등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공수처 고발
2023-07-13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공수처 고발
2023-07-25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직권남용, 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와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전진선 양평군수, 양평군 도시건설국장 경찰 고발
2023-08-01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등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공수처 추가 고발
2023-09-21	국토교통부, 노선 변경을 둘러싼 윤석열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경제성 분석 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재개. 이번 2차 타당성 조사 계약기간은 2024년 1월까지 총 120일로 알려짐
2023-09-26	경찰(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전진선 양평군수 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고발인 조사
2023-10-05	국토교통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대안노선이 당초 원안보다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힘.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의 시점을 서울 송파구가 아닌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감일 분기점(JCT)으로 변경해 통행량을 줄인 것 아니냐는 의혹과 ▲이번 경제성 분석을 맡은 외부 업체가 강상면 중점의 대안을 마련한 회사라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음
2023-10-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야당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해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일방적인 발표”라며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반면, 원 장관은 “그럴 수 없다”고 반발
2023-10-11	양평군 주민 411명, 윤석열 처가 특혜 의혹 관련해 양평군의 사무처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경기도에 주민감사 청구
2023-10-1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더해 도로 종점부와 연결 예정인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경기도 양평구간에 있는 휴게소 건립 및 운영 관련 특혜 논란 불거짐. 국가 재정으로 남한강휴게소 시설을 거의 다 지어 놓고 뒤늦게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며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해줬는데, 이 업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성도 있다는 주장. 이에 한국도로공사 측은 윤석열테마주 사전 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전에는 몰랐고, 최근에 알았다”고 답변
2023-10-18	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해 ‘정부여당이 남탓으로 일관하면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며 진상규명 기자회견 개최. 이날 간담회는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에 집중됨
2023-10-18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공현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 대화한 내용을 녹취해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전 양평군원회의 징계 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날짜	수사경과
2023-10-22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바꾼 주된 이유가 '민원' 때문이라는 국정감사 증언이 나왔으나 정작 변경된 노선(강상면 종점)은 기존 노선(양서면 종점)보다 더 많은 마을을 지나고 한곳은 관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언론보도. 기존안은 4개 마을(3649명, 1744세대)을 지나지만 변경안은 10개 마을(18만498명, 8525세대)을 지나며 더 많은 마을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
2023-10-29	국토교통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용역 과업수행계획서 일부 고의 누락 의혹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2023-12-03	민주당, 12월 임시국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3개 국정조사 안건 올려 연내 처리 입장 밝힘. 국민의힘 이에 불응하겠다고 반발(실질적으로 23년 연내 처리되지 못함)
2023-12-20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
2023-12-22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퇴임
2023-12-26	경기도, 경기연구원(GRI)에 의뢰해 '경기 동부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노선 발굴'에 관한 자체 연구를 11월부터 시작해 5개월 간 진행할 것이라는 언론보도
2023-12-31	대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배당. 사세행이 2023년 7월 공수처에 원 전 장관 등을 고발했으나 공수처는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이첩했음
2024-01-05	경기도, 심의위원회 열어 지난해 10월 11일 양평군 주민 411명이 요청한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경찰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의 경우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자치법' 등을 근거로 최종 각하 결정했다는 것
2024-04-17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 대화한 내용을 녹취해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제명 징계 의결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024-08-28	국토교통부, 2025년 예산안 규모 58조 2000억원 편성 발표. 이때 원희룡 전 장관 당시 백지화 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설계비 예산 그대로 반영
2024-09-27	경찰(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고발인 소환 조사
2024-10-07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입장 밝힘. 또한 "지난해 국감 과정을 보면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특혜나 외압 의혹이 밝혀진 바 없다.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선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함
2024-10-14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선을 왜, 누가, 어떤 근거와 절차로 바꿨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진상규명 없이는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라고 발언함
2024-11-1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비를 62억 원 가량 삭감
2024-12-12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 통과. 이는 네 번째 김건희특검법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총 15개 혐의를 다룰 예정
2024-12-2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김건희특검법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거부권 행사

날짜	수사경과
2025-03-11	국토교통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중점 변경안이 처음 제시된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 발표. 자료 일부를 고의 삭제한 후 공개했다는 의혹이 자체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기도 함. 2023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자체 감사를 요구한지 1년 6개월 만. 국토부 감사관은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으며, 실시되지 않은 3억3400만원 상당의 용역 금액을 회수하라는 시정 명령 내림
2025-03-11	민주당, 국토교통부가 실무진 7명의 인사처분만 권고한 것은 “영락없는 꼬리 빠르기”라며 특검으로 특혜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
2025-03-13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토교통부 자체감사를 ‘맹탕감사’라고 비판하며 말단 실무자 징계에 그칠 게 아니라 윗선과 몸통의 실제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
2025-03-17	민주당과 김건희고속도로국정농단진상규명국민모임 등 시민단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특혜 의혹 관련 윤석열 신속 파면 및 전면수사,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2025-05-16	경찰(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 관계기관 대상으로 동시다발 압수수색 실시
2025-06-05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를 포함한 다섯 번째 김건희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6-08	경찰(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원희룡 장관 소환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

5. 재판 경과 및 결과

해당 없음

9. 방통위의 종편 조건부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관련 감사원의 수사의뢰 사건 수사(2022)

2020년 3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당초 평가됐던 것보다 점수를 고의로 낮게 수정하여 TV조선이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게했다는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의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 및 채널A 재승인 보류 결정이 직권남용이라고 고발되어 검찰이 수사한 사건

사건 진행상태	▪ 재판중, 수사중
담당 부서	▪ 사건1 :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 ▪ 사건2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 서울북부지검
주요 처분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2020년 3월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결정이 보류됐다. 재승인 기준은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으로,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았으나 방송의 공적책임 등 중점심사사항에서 평가점수가 미달되어 개선계획 등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친 후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여, 11개 조건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3년 뒤 다시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채널A는 662.95점으로 재승인 기준을 넘었으나 부가적인 권고사항 확정 등을 위해 재승인이 보류됐다. ‘검언유착’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채널A가 고발되는 등의 사건이 있었으나, 2020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채널A에 대해 추후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붙여 재승인을 의결하였다.

2022년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에 대해서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압박이 있었다. 2022년 6월 검찰은 한 단체가 한 위원장의 채널A 재승인 보류 결정이 직권남용이라며 고발한 건에 대해 약 2년 만에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 7월에는 감사원이 방통위 실지 감사에 착수했고, 감사 종료 후 감사원은 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중 일부가 의도적으로 TV조선의 점수를 낮췄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방통위 사무실 등에 대해 세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 참여한 일부 심사위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방통위공무원노조는 연이은 감사와 압수수색에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한 위원장도 방통위를 향한 감사 등이 중도사퇴 압박을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을 추가로 진행하며 수사를 이어갔고, 차 모 방송정책지원과장과 양 모 방송정책국장을

각각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 광주대 교수 또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23년 3월, 검찰은 한상혁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심사위원 임명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여부와 점수 조작 지시 또는 묵인 여부를 확인할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한 위원장은 해당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자,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사혁신처는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2023년 5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임기 두 달을 남겨둔 한상혁 위원장을 서둘러 면직하는 것은 방통위 개편을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후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점수 조작 의혹이 여전히 입증되고 있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증거를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았고, 공판검사는 공소장에 적시된 '점수 조작'이라는 표현 대신 '점수 수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서울북부지법(형사합의13부, 2023고합199)에서 진행 중인 1심에서 증인들은 감사원 조사관이 조사 전에 이미 답변 내용이 적힌 문서를 가져왔다고 증언하며 조사 과정에서 수정하기는 했으나, 진술서 일부 내용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작성됐다고 하는 등 감사원 조사 당시 유도 질문이 이뤄지고 감사원이 정해 놓은 답변서를 받았다는 증언했다.

한편, 채널A 재승인 보류 결정이 직권남용이라고 고발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를 진행하다 2023년 10월 23일 관련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했으며, 진행상황은 현재 알려진 바 없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당시 심사위원장 윤 모 광주대 교수
방통위 차 모 방송정책지원과장
방통위 양 모 방송정책국장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 A씨, B씨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사건1. TV조선 재승인 사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

지검장 정영학 - 차장 김형수 - 부장 박경섭(주임)('22.09~'23.09)

지검장 이진수 - 차장 단성한 - 부장 천대원 - 주임 비공개('23.09~'24.06)

지검장 정진우 - 차장 김영철 - 부장 박지훈 - 주임 비공개('24.06~)

사건2. 채널A 재승인 사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 서울북부지검 이송('23.10)]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 차장 허정 - 부장 이준동 - 주임 비공개(~'23.09)
 서울남부지검장 김유철 - 차장 배문기 - 부장 이재만 - 주임 비공개('23.09~)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2-06-16	검찰(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채널A 사건 고발 2년 만에 이중배 전 법세련 대표 고발인 조사
2022-07-25	감사원, 방통위 실지감사 착수
2022-08-26	감사원, 방통위 실지감사 종료
2022-09-07	감사원,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중 일부가 의도적으로 TV조선의 점수를 낮췄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감사자료 전달
2022-09-19	대검찰청, TV조선 재승인 사건을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 배당
2022-09-23	검찰(서울북부지검 형사5부), 방통위 사무실과 심사위원 자택 등 압수수색. 일부 심사위원들에 대해 출국금지 3개월 조치
2022-11-17	검찰, 방통위 사무실 추가 압수수색
2022-12-28	검찰, 방통위 사무실 전산실, 상임위원 사무실 등 3번째 압수수색. 일부 심사위원에 대한 기존 출국금지 조치 1개월 연장
2022-12-28	검찰,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 전산실, 의안조정팀 등에 수사관들 보내 관련 자료 압수수색
2023-01-06	검찰, 업무방해 혐의로 방통위 차모 과장 및 양모 국장 구속영장 청구
2023-01-11	검찰,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방통위 이 모 정책위원 입건
2023-01-11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문경훈 영장전담판사), 증거인멸 우려로 차 모 과장 구속영장 발부. 법리적 다툼의 여지 있어 방어권 보장 위해 양 모 국장 구속영장 기각
2023-01-17	검찰, 이 모 정책연구위원 및 양 모 국장 등 소환조사
2023-01-19	검찰, 허욱 전 방통위 상임위원 소환조사
2023-01-20	검찰,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소환조사
2023-01-27	검찰, 양 모 국장 구속영장 재청구
2023-01-27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문혜정 부장판사), 차 모 과장 구속적부심 기각
2023-01-31	검찰(서울북부지검 형사5부 박경섭 부장검사), 차 모 과장 구속 기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
2023-02-01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임기환 영장전담판사), 양 모 국장 구속영장 발부
2023-02-14	검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심사위원장 윤 모 광주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2023-02-16	검찰,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
2023-02-17	법원(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 윤 모 교수 구속영장 발부
2023-02-20	검찰(서울북부지검 형사5부 박경섭 부장검사), 양 모 국장 구속 기소.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 적용
2023-03-08	검찰(서울북부지검 형사5부 박경섭 부장검사), 윤 모 교수 구속 기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날짜	수사경과
2023-03-22	검찰, 한상혁 방통위원장 소환조사
2023-03-24	검찰,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2023-03-29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이창열 영장전담판사), 주요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있어 피의자 방어권 위해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2023-05-02	검찰(서울북부지검 형사5부 박경섭 부장검사),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 A, B씨 불구속 기소
2023-05-02	검찰, 한상혁 전방통위원장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전 심사위원장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3-05-23	인사혁신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2023-05-30	윤석열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재가
2023-06-01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취소 소송 제기 및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2023-06-23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강동혁 부장판사),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 기각
2023-06-27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장 제출
2023-07-12	방송통신위원회, 윤석년 전 KBS이사 해임제청
2023-07-13	윤석열 대통령, 윤석년 전 KBS이사 해임
2023-07-21	법원(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즉항고 기각
2023-08-14	방송통신위원회, 정미정 전 EBS이사 해임
2023-09-15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강우찬 부장판사), 윤석년 전 KBS이사 해임 집행정지 기각
2023-10-23	검찰(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채널A사건 서울북부지검 이송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윤모 교수, 양모 국장, 차모 과장	2023-03-08	1심(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 신상렬) 진행
	2023-04-12	윤모 교수, 1심 재판부에 보석 청구
	2023-05-01	양모 국장, 1심 재판부에 보석 청구
	2024-05-04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 형사합의13부 재정합의
한상혁 방통위원장, 윤모 교수, 양모 국장, 차모 과장 등 6명	2023-05-12	1심(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부장판사 이태웅, 2023고합199), 피고인별 사건 병합결정
	2023-06-07	1심 재판부(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부장판사 이태웅), 윤모 교수·양모 국장·차모 과장 보석 인용
	2025-06-00	1심(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부장판사 이태웅, 2023고합199) 진행중

10.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유권해석 부당개입 의혹 관련 감사원의 수사의뢰 사건 수사(2022)

문재인정부 시기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건에 대한 수사 및 이 수사의뢰 과정에서 감사원이 전현희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등 표적감사를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담당 부서	▪ 사건1 : 대전지검 형사4부 →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3팀 → 수사1팀 → 대전지검 형사2부 ▪ 사건2 : 공수처 수사3부 → 특별수사본부
주요 처분	▪ 검찰, 전현희 무혐의 처분

1. 사건개요

2020년 9월 초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및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성일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미복귀 의혹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이해충돌 여부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사건 관련 지휘를 받거나 보고한 적 없다는 대검 공문을 근거로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기에 ‘이해충돌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당시 권익위(당시 위원장 박은정)는 조국 장관의 장관직 수행이 이해충돌의 소지 있다고 유권해석했던 전례가 있어 이중잣대 논란이 일었다.

정권이 교체된 뒤인 2022년 6월 말 성일종 의원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피해자의 월북 판단 과정이 국민 권리 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권익위(위원장 전현희)에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는데 권익위가 이런 기조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비판했다. 7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위원장직 사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나, 전현희는 임기를 완수할 뜻을 밝혔다.

7월 28일 감사원은 전현희의 근태 등에 대한 제보를 이유로 갑작스레 공직기강 특별감사에 착수한 후 2022년 8월 1일부터 19일까지 실지 감사를 진행하고, 9월 2일까지 감사기간을 연장했다. 이후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다시 감사기간을 연장해 권익위를 대상으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을 진행했다. 10월 21일 감사원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이해충돌 여부 유권해석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월북 판단 과정에 대한 유권해석 불가 판단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직권남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결정 과정에 전현희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고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는 문구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으며,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답변 거부 과정에서도 전 위원장이 관련한 정황을 발견했고, 권익위 직원들에게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강요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 2022년 12월 전현희는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특별조사국장 및 과장, 권익위 고위관계자이자 내부제보자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 부패방지법위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의뢰에 대해, 전 정부에서 임명되어 임기가 남은 전현희 위원장의 조기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감사원이 2021년에 권익위 정기감사를 시행한 바 있어 정권교체 후 시행된 특별감사는 이례적이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전현희의 위원장직 사퇴 압박 질의 등이 이어진 후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었다는 점 등이 비판에 힘을 실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변하는 등 감사원의 위상 훼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전현희에 대한 감사원의 최종 감사보고서는 2023년 6월 9일에서야 공개됐다.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유권해석 관련 건을 포함해, 감사 쟁점 모두에 대해 사안이 경미해 전현희 위원장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결정이 담겼다. 그 뿐만 아니라, 해당 감사의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이 6월 12일 감사원 내부게시판에 감사결과 의결 절차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새로이 논란이 점화됐다.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끌고 있었던 감사원 사무처가 전현희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감사위원들의 최종 열람 결재를 거치지 않고 공개했다는 것이었다. 이 논란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감사 의결 과정 직권 남용 혐의 수사로 이어졌다.

2023년 3월 공수처(처장 김진욱)는 처장 직속 특별수사본부(특수본부장 이대환 공수처부장검사)를 설치했다. 기존 수사팀이 수사하면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사건을 배당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신설했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최재해, 유병호, 권익위 내부제보자 등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5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 끝에 2023년 12월 9일 유병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후 수사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알려진 바 없다.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은 대전지검에 배당되었다가 다시 세종경찰청으로 이관되어 수사가 진행됐다. 세종경찰청은 2023년 9월 전현희를 소환 조사했고, 2023년 11월에는 이후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대전지검 제2형사부가 맡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2024년 12월 4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2025년 3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시스템 변경을 통한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없는 감사보고서 시행과 관련해서는,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는 않으나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권한을 침해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사건1.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전현희의 유권해석 부당개입 의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건2. 공수처가 수사 중인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직권남용, 증거조작, 조작감사 등 혐의]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원에 제보한 국민권익위 내부제보자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사건1.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전현희의 유권해석 부당개입 의혹

[대전지검 형사4부]

지검장 이진동 - 차장 김경수 - 부장 김태훈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3팀 → 수사1팀]

(사건접수시) 청장 손장목(~'23.10) - 총경 백기동 - 경정 윤병근 - 경감 염동조 - 경위 현창익 - 경사 김경민, 노백두

(사건종결시) 청장 한형우('23.11~) - 총경 황석현 - 경정 윤병근 - 경감 조경훈 - 경위 현창익 - 경사 김경민, 노백두

[대전지검 형사2부]

지검장 박재억(~'24.05) - 차장 서정식 - 부장 서영배 - 주임 비공개(~'24.06)

지검장 성상헌('24.05~) - 차장 유광렬 - 부장 이정화 - 주임 비공개('24.06~)

사건2.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직권남용, 증거조작, 조작감사 등 혐의

[공수처 수사3부 → 특별수사본부]

처장 김진욱 - 차장 여운국 - 수사3부장 김선규 - 주임 차정현(~'23. 03)

처장 김진욱 - 특수본부장(처장직속) 이대환 - 주임 차정현('23. 03~)²¹¹

4. 수사 경과 및 결과

사건1. 전현희의 유권해석 부당개입 의혹

날짜	수사경과
2022-10-21	감사원, 직권남용 혐의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대검 수사의뢰
2022-10-26	대검, 대전지검 배당
2022-11-00	대전지검, 세종경찰청에 이관
2022-11-30	국민권익위,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서류 등 경찰에 임의제출
2023-09-15	경찰(세종경찰청), 유권해석 부당개입 의혹 등 관련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소환 조사

²¹¹ 이후 수사지휘라인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 의결 과정 직권 남용 혐의 수사(2023) 참고

2023-11-21	경찰(세종경찰청), 전현희 전 위원장 유권해석 부당개입 의혹 등 관련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대전지검 제2형사부 담당
2025-06-16	전현희, 대전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종결 통보 받았다고 발표

사건2.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직권남용, 증거조작, 조작감사 등 혐의

날짜	수사경과
2022-12-15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특별조사국장 및 과장, 권익위 고위관계자이자 내부제보자 등 6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 부패방지법위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2022-12-15	공수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고발 건 수사3부 배당
2023-02-24	공수처, 처장 직속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
2023-03-08	공수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고발 건 특수본 재배당
2023-04-04	공수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고발인 조사
2023-05-03	전현희, 감사원 대심 출석 - 이후 수사경과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 의결 과정 직권 남용 혐의 수사(2023) 참고

5. 재판 경과 및 결과

해당 없음

11.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사건 관련 수사(2023)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이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해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심의를 요구하는 민원을 내도록 사주한 것에 대한 수사와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한 제보자에 대해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규정하고 진행한 보복수사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담당 부서	▪ 사건1 :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2과 지능범죄수사2팀 ▪ 사건2 :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주요 처분	-

1. 사건개요

2023년 11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KBS, MBC, YTN, JTBC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하여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조치를 취한 것이다.

해당 결정의 배경에는 방심위에 접수된 다수의 민원이 있었다. 2023년 9월 4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범죄행위, 즉 국기문란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는데, 4일부터 방심위 온라인 창구를 통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9월 5일, 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 허연희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해당 민원을 근거로 뉴스타파 보도 관련 사안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항의하며 김유진 위원(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이 퇴장하였으나, 차기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한 심의가 이어졌고 결국 최종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2023년 12월 23일 익명의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했다. 신고자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동안 방심위에 제기된 다수의 민원 중 10건이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해당 민원들이 단기간 내 집중적으로 제기된 점, 오타까지도 유사한 문구의 민원이 다수 제기된 점, 민원인의 실명이 류 위원장의 가족과 류 위원장이 이전에 대표를 지낸 미디어연대의 관련자로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뉴스타파는 9월 4일부터 18일까지 제기된 277건의 민원 중 127건이 류 위원장의 이해관계자가 낸 민원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가족 및 지인 70건, 연관 의심 단체 57건).

2023년 12월 26일 류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공익제보를 민원인 개인 정보 유출로 규정하고, 특별 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당사자인 류 위원장의 지시로 꾸려진 감사반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공익신고자 측은 제보자 색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불이익이 가시화될 시 적극 시정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12월 27일 공익신고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심위가 수사 의뢰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경찰(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가 검찰에 공익신고자 수사를 의뢰하자 류 위원장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권 추천 위원 3인(김유진, 옥시찬, 윤석열)이 방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여권 추천 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후 개최된 방심위 전체회의(2024.1.8.)에서 “‘청부민원’ 의혹 제기에 대한 위원장 대응에 관한 건” 등 민원사주 의혹 관련 안건 3건이 상정되었으나, 비공개 논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당사자인 류 위원장이 참여하면서 야권 추천 위원 측이 항의했고 회의는 파행됐다. 다음날 개최된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옥시찬·김유진 위원이 류 위원장의 심의 참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류 위원장은 수용하지 않았고, 옥시찬 위원이 욕설 후 퇴장하면서 회의가 종료됐다. 결국 다음 방심위 임시회의(2024.1.12.)에서 옥시찬·김유진 위원에 대해 옥 위원은 ‘폭력행위’와 ‘욕설 모욕’등으로, 김 위원은 ‘비밀유지의무 위반’등의 사유로 해촉이 의결됐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김유진 위원은 법원(부장판사 김영민)에 해촉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월 김 위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김 위원의 문제 제기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측면이 있으며 뉴스타파와 MBC 등의 ‘민원사주’ 관련 보도가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5년 5월, 재판부는 김 위원의 해촉 취소소송 1심에서 김 위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법원(부장판사 이정희)은 2024년 3월 옥시찬 위원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취소소송 1심에서는 2024년 12월 옥 위원이 패소했다.

2024년 1월 15일, 고발 3주 만에 경찰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를 약 8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류 위원장에 대한 민원사주 의혹 수사보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수사가 먼저 이뤄지면서 전국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등은 크게 반발했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수사 자체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1월 5일 류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사건은 경찰(서울 양천경찰서)에 이송됐다. 하지만 경찰은 두 달이 넘도록 피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경찰은 총선 다음날인 4월 11일 고발인인 더불어민주당 측에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여당에 불리한 총선 결과가 나오니 경찰이 이례적인 문자메시지까지 보내며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도 늑장 조사를 이어갔다. 공익제보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사건 처리 기한인 60일이 임박할 때까지 업무 분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심지어 2024년 2월, 사건을 검토한 결과 더 진행하기 어렵다며 종결을 시사했다. 이에 공익신고자 측에서 직무유기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그제서야 권익위는 신고자 측에 자료 보완을 요청해 자료를 제출받았다. 하지만 권익위는 방심위에서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사건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했다. 7월 8일, 결국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민원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방심위로 사건을 송부하기로 결정했다. 류 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류 위원장과 참고인들 간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이첩 대상인지 종결 대상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 송부 이유였다. 반면 해당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로부터 이 사건을 송부받은 방심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에 따라 사건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여야 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8월 중순이 되도록 방심위는 일부 참고인들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조사에 미온적이던 방심위는 2025년 2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권익위에 통지했다.

2024년 9월 25일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은 스스로 신원을 공개하고 류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이후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만이 수 차례 더 진행되었을 뿐, 여전히 류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은 진행되지 않았다. 2025년 1월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류 위원장 출석조사를 진행했다며 곧 수사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2025년 3월 5일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2023.09. 당시 방심위 종편보도팀장)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류희림 동생의 민원 신청 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했다”며 류 위원장의 지인 및 가족의 민원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진 후 권익위는 3월 10일 방심위에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재조사할 것을 요구했으며, 뒤이어 경찰이 3월 12일 장경식 강원사무소장을 중요 참고인으로 추가조사했다.

4월 16일 방심위 공익신고자들은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규칙 위반과 관련해 변경된 진술과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다시 조사해 달라고 권익위에 재신고했다. 권익위는 해당 재신고를 검토한 후, 4월 21일 브리핑을 통해 류 위원장이 민원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고 방심위의 조사 역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피신고인인 류 위원장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 등이 있다며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건을 감사원으로 이첩했다.

4월 17일, 양천경찰서는 류 위원장을 소환조사했다. 류 위원장은 4월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류 위원장의 사표는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 당일,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수리했다. 사의 표명 40일 만이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사건1.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건2.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사건1.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2과 지능범죄수사2팀]
서장 총경 오창배- 과장 경정 한성현 - 팀장 경감 김태균 - 수사 담당자 경위 온정귀(~’24.02)
서장 총경 윤정근- 과장 경정 최을천 - 팀장 경감 김태균 - 수사 담당자 경위 온정귀(’24.02~)
서장 총경 안찬수(’25.03~) - 과장 경정 김의동 - 이하 비공개

사건2.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청장 치안정감 김광호(~’24.01), 조지호(’24.01~) - 광역수사단장 경무관 김병찬 -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총경 이충섭(~’24.02)
청장 치안정감 조지호 - 광역수사단장 경무관 임경우 - 반부패범죄수사대장 총경
안동현(~’24.08) - 반부패범죄수사1계장 경정 김태현 - 이하 비공개(’24.02~)²¹²
청장 치안정감 조지호(’24.08~), 김봉식(’24.08~’24.12), 박현수 직무대리(’25.02~) -
광역수사단장 경무관 오승진(’25.03~) - 반부패수사대장 총경 변민선(’24.08~) -
반부패수사2계장 경정 노정웅 - 이하 비공개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3-11-23	익명의 신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비실명 대리 신고
2023-12-27	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행위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서 접수
2024-01-03	검찰(서울남부지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방심위의 수사의뢰 건 이송
2024-01-05	더불어민주당, 류희림 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
2024-01-10	검찰, 서울 양천경찰서로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건 이송
2024-01-12	방심위 사무처 직원 149명, 권익위에 류희림 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

²¹² 서울경찰청은 2024년 4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분공개 처분하고, 과거 수사지휘라인과 당시(2024.04.) 일부 수사담당자를 비공개함. 이에 언론보도 등을 기반으로 담당부서를 기재함.

날짜	수사경과
2024-01-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부민원 문제제기 과정에서 욕설 및 전체회의 안건 배포를 이유로 옥시찬,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건의
2024-01-15	경찰(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방심위 민원상담팀, 전산 서버실 등 압수수색
2024-01-17	윤석열 대통령, 옥시찬,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2024-01-18	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 등 4개 단체, 류희림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고발. 사건은 서울 양천경찰서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짐
2024-01-29	경찰(서울 양천경찰서),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고발 관련 더불어민주당 측 고발인 조사
2024-02-27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집행정지 인용
2024-02-29	민주당, 경찰(서울 양천경찰서)에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수사 촉구
2024-03-06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집행정지 기각
2024-03-20	권익위, ‘민원사주 의혹’ 사건 신고 건 처리 기간 연장 통지
2024-06-25	류희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민원사주 의혹 질의에 “(가족과 지인이 민원 넣었다는) 보고 받은 적 없다” 답변
2024-07-02	민주당(노종면 의원),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관련 류희림 위증 증거로 방심위 직원 간 카톡 대화 제시
2024-07-08	권익위,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 사건 방심위 송부 결정.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을 언론에 제보한 성명불상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이첩 결정.
2024-07-23	윤석열 대통령, 류희림 방심위원 위촉. 이후 신규 위촉된 방심위원 3명(강경철, 김정수, 류희림)과 기존 여당 추천 방심위원 2명(김우석, 허연희)이 문을 걸어 잠그고 비공개 회의로 류희림 위원장으로 호선
2024-07-25	권익위,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본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조사 종결한 사실 언론보도로 드러남
2024-08-07	권익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7월 초 방심위로 사건 송부 결정 내렸으나 관련 공문 2주 지나 발송된 사실 언론보도로 드러남. 방심위에선 진위 파악을 위한 직원 대상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감사실 측은 감사 시작 여부 공개할 수 없다 밝혀 권익위, 방심위 모두 의혹 진상 규명 의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 일음
2024-08-26	방심위, 언론노조 방심위지부가 신청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조사 책임자인 감사실장 조사 업무 기피 신청 거부
2024-09-10	경찰(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공익신고자 자택 및 방심위 사무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4-09-13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국회의원 퇴장한 가운데 9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 실시’ 의결
2024-09-20	방심위, 권익위에 송부받은 사건 조사 기간 연장 통보 공문 발송 서울경찰청, 공익신고자 대상 1차 포렌식
2024-09-25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들, 스스로 신원 공개 후 류희림 수사 촉구
2024-09-26	서울경찰청, 공익신고자 대상 2차 포렌식
2024-09-30	류희림, 국회 청문회 불출석
2024-10-02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관련 업무방해죄 등 경찰 추가 고발
2024-10-02	류희림 친인척 측, 공익신고자 및 MBC, 뉴스타파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날짜	수사경과
	서울경찰청에 고소
2024-10-09	경찰(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 민원사주 제보자 관련 압수수색. 네이버 본사 및 SK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 압수수색해, 민원사주 제보자 이메일 및 메신저 기록 확보
2024-10-10	경찰(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 민원사주 제보자 관련 카카오톡 사육 압수수색. 민원사주 제보자들이 언론사에 민원인 정보를 제보했는지 여부 조사
2024-10-14	경찰(본청), 공익신고자 대상 1차 포렌식
2024-10-14	방심위, 언론노조 방심위지부가 7일 신청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조사 책임자인 감사실장 조사 업무 기피 신청 두 번째 거부
2024-10-21	국회, 방심위 국정조사에서 류희림 위원장의 근태 문제, 인사 불이익 등 의혹 제기
2024-11-22	경찰(본청), 공익신고자 대상 2차 포렌식
2024-11-26	서울경찰청, 공익신고자 대상 3차 포렌식
2024-12-10	서울경찰청, 공익신고자 대상 4차 포렌식
2024-12-20	서울경찰청, 공익신고자 대상 5차 포렌식
2024-12-24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무효소송 1심 기각
2025-01-03	서울경찰청, 공익신고자 대상 6차 포렌식
2025-01-10	경찰(서울 양천경찰서),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관련해 출석 조사
2025-02-07	방심위 감사실(실장 박종현), 권익위에 민원사주 의혹 자체 조사 결과 통보. “피신고자(류희림 위원장)의 내부 통신망 게시물 열람 여부와 피신고자 및 참고인 등을 추가 조사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민원신청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전달
2025-02-12	권익위, 민원사주 의혹 사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종결처리
2025-02-20	방심위 박종현 감사실장, 최고 직급 ‘1급’으로 승진. 방심위 노조 “부역자들에게 하사한 포상”이라고 비판
2025-03-05	국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장경식 전 종편보도채널 팀장(현 강원사무소장), 자신이 류희림 위원장에게 동생 민원임을 보고했다고 증언
2025-03-10	권익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재조사 필요 여부 밝힘. 다만 권익위 직접 재조사는 아니며 방심위에 재조사 요청 진행
2025-03-11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 불출석한 류희림 위원장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고발 의결
2025-03-12	경찰,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관련 기존 진술을 번복한 방심위 간부 추가 조사
2025-03-13	국회,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퇴 촉구 및 감사원에 감사 요구안 국회 통과. 또한 권익위 이해충돌 재조사 및 경찰 신속 수사 촉구
2025-04-15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 권익위에 민원사주 의혹 재신고
2025-04-17	경찰(서울 양천경찰서), 류희림 위원장 소환 조사
2025-04-18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 불출석한 류희림 위원장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재차 고발 의결
2025-04-21	권익위, 재신고된 사건 감사원에 이첩
2025-04-25	류희림 위원장 사의 표명

날짜	수사경과
2025-05-02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무효 1심 인용
2025-06-03	류희림 위원장 사표 수리

5. 재판 경과 및 결과

해당 없음

12.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감사 의결 과정 직권남용 혐의 수사(2023)

표적감사 논란이 일었던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 의결 절차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통상적인 감사 결과 의결 과정을 무시하고 의결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에 대한 수사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담당 부서	▪ 사건1 : 공수처 특별수사본부 → 수사4부 ▪ 사건2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주요 처분	-

1. 사건개요

2022년 7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정부 하에서 임기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월 28일 감사원(감사원장 최재해)은 전현희의 근태 등에 대한 제보를 이유로 갑작스레 공직기강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감사기간을 연장해 권익위를 대상으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을 진행했다. 10월 21일 감사원은 전현희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의뢰에 대해, 전정부에서 임명되어 잔여임기가 남은 전현희 위원장의 조기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23년 6월 9일 전현희와 권익위의 13개 의혹 중 6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그런데 그 이전인 6월 2일, 한 언론사가 6월 1일에 있었던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전현희에 대한 감사결과가 최종 부결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6월 1일 감사위원회 회의가 있었지만, 최종 부결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해당 감사의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의결 절차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쟁점은 ‘간담회’를 둘러싼 ‘열람 결재’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다. 조은석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감사위원 전원이 각자 문서를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간담회’라는 단어로 표현한 형식이었을 뿐 실질은 ‘전원 열람’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통상적인 업무 처리상, ‘열람 결재’는 단순히 문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 사무처가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감사위원들이 함께 상호 협의해 감사보고서를 확정하는 과정이며, 사무처의 초안에 대한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 절차가 ‘열람’이라는 단어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반면 감사원 사무처는 ‘간담회’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절차이므로 이를 통한 의결은 무효이고, 열람 결재는 법상 정해진 권한이 아니며,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변경시행의 경우 문안 확정은 사무총장의 결재에 따르되, 주심위원은 변경된대로 작성 여부만 열람한 후에 시행하라는 행정명령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 사무처는 주심위원이 열람하지 않았으나, 감사원장의 승인을 받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재해는 총 7명의 감사위원 중 원장인 본인을 포함한 4명의 감사위원 동의를 받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절차상 문제에 대한 조은석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처 간의 공방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통상적인 감사 결과 의결 과정을 무시하고 의결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의심되면서 더욱 격렬해졌다. 감사 결과도 대부분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다.

2023년 7월 참여연대는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전자정부법 제35조 위반 등의 혐의로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과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을, 직원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최달영·김영신의 범죄행위 교사 혐의로 유병호 사무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사건1. 유병호 등 감사원 사무처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 2023년 9월 공수처는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고 다섯 번째 소환 통보 끝에 유병호를 12월 초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중이나, 이후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2023년 9월 감사원은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결과가 언론에 알려진 것에 대해 ‘내부 논의사항 유출 등에 대한 진상조사 티에프(TF)’를 구성, 조사한 후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조은석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사건2. 조은석 감사위원 직권남용 등 의혹 수사). 검찰 수사 상황은 알려진 바 없다. 2023년 10월 감사원은 전현희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직권 재심의를, 조은석 위원에게는 경고 및 주심위원 배제를 처분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2023년 6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재해와 감사원 사무처가 주장한 발언 내용과 배치되고, 전현희 감사의 기존 결론을 번복하라는 취지였기에 논란은 더 증폭되었다.

한편 2024년 2월,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는 등 감사의결 절차상 불법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이 영전했다. 조은석 감사위원은 퇴직 후 2025년 6월 ‘내란특검’의 특별검사로 임명되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사건1. 유병호 등 감사원 사무처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

유병호 사무총장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 교사 혐의)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등 혐의)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등 혐의)

[사건2. 조은석 감사위원 직권남용 등 의혹 수사]

조은석 감사위원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사건1. 유병호 등 감사원 사무처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

[공수처 특별수사본부 → 수사4부]
처장 김진욱 - 차장 여운국 - 특별수사본부 부장 이대환 - 특별수사본부 주임 차정현(~'23.12)
처장 김진욱²¹³ - 차장 여운국²¹⁴ - 수사4부 부장 이대환(~'24.11) - 주임 차정현('23.12~)
처장 오동운('24.05~) - 차장 이재승('24.07~) - 부장 차정현(주임)

사건2. 조은석 감사위원 직권남용 등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송경호(~'24.05) - 차장 김창진(~'24.05) - 부장 김승호 - 주임 비공개
지검장 이창수²¹⁵('24.05~) - 차장 박승환('24.06~) - 부장 김승호 - 주임 비공개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2-07-28	감사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근태 등 공직기강 특별감사 착수
2023-05-03	전현희, 감사원 대심 출석
2023-06-09	감사원, 전현희와 권익위 감사 결과 발표
2023-06-12	조은석 감사위원, 전현희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위원회 ‘열람결재’ 누락 문제 제기
2023-06-19	더불어민주당,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고발
2023-06-20	최재해 감사원장, 전현희 감사 결과 발표 관련 내부 조사 지시
2023-06-23	전현희, 공수처에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최재해, 유병호,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등 추가 고발
2023-07-06	참여연대,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병호,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전자정부법 제35조 위반 등의 혐의로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 김영신, 최달영과 김영신의 범죄행위 교사 혐의로 유병호 공수처에 고발
2023-07-13	더불어민주당,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감사방해, 전자정보시스템 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유병호 공수처 고발
2023-09-06	공수처(특별수사본부 부장 이대환), 감사원과 권익위 압수수색
2023-09-19	감사원,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조은석 수사 의뢰
2023-10-04	감사원 ‘내부 논의사항 유출 등에 대한 진상조사 티에프(TF)’, 전현희 비위 의혹 직권 재심의, 조은석 경고 및 수사 의뢰, 의혹 해소 시까지 주심위원 배제 처분 등을 포함한 진상 조사 결과 보고서 국회 제출
2023-10-10	공수처, 감사위원 6명 전원 참고인 소환 조사 통보
2023-10-13	공수처, 유병호 피의자 소환 통보. 유병호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불응

²¹³ 임기만료(24.1.21.)로 여운국(24.1.22.~28.), 김선규(24.1.29.~3.4.), 송창진(24.3.4.~20.), 김선규(24.3.20.~5.29.) 직무대리
²¹⁴ 임기만료(24.1.28.)로 송창진(24.1.29.~3.4.), 박석일(24.3.4.~20.), 송창진(24.3.20.~7.30.) 직무대리
²¹⁵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박승환 1차장 직무대리. 2025년 6월 3일 사직.

날짜	수사경과
2023-10-17	공수처, 조은석 사무실 압수수색
2023-10-18	공수처, 유병호 피의자 소환 통보, 유병호 불응
2023-10-24	공수처, 유병호 피의자 2차 소환 통보, 유병호 불응
2023-11-01	공수처, 유병호 피의자 3차 소환 통보, 유병호 불응
2023-11-06	공수처, 유병호 피의자 4차 소환 통보, 유병호 불응
2023-11-22	공수처, 유병호의 휴대전화, 주거지와 사무실 등 압수수색(~11/23). 유병호 부하직원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3-12-05	공수처(수사4부 부장 이대환), 감사원 직원 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 조사 언론보도
2023-12-09	유병호, 공수처 피의자 출석. 혐의 전면 부인, 15시간 조사 후 귀가
2024-02-16	윤석열 대통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안 재가. 이에 유병호 사무총장 2월 18일자로 감사위원 영전
2024-05-01	공수처, 국회에 '표적감사 제보 의혹' 임윤주 전 권익위 실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 요청. 임 전 실장은 전 전 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
2024-05-09	국회 정무위원회,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의결
2024-05-14	공수처,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고발 사건 배당 및 기록 검토 시작
2024-07-28	공수처,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소환조사 언론보도
2024-10-15	감사원,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 감사 과정에서 '감사·수사요청 방향'과 반대되는 디지털포렌식 증거를 확인해놓고도 의도적으로 은폐한 사실 언론보도로 알려짐
2024-12-05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으로 조은석 선임 감사위원 감사원장 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전현희 관련 감사 건 포함
2025-01-17	조은석 감사위원 임기만료 퇴임
2025-03-13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청구 기각.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결정문에 전현희 감사 결과 처리 과정에서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없이 감사 결과를 시행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명시

5. 재판 경과 및 결과

해당 없음

13. 세관 직원 마약 밀반입 수사외압 의혹 수사(2024)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의 필로폰 밀반입에 관세청 세관 직원들이 연루되었고, 세관 직원에 대한 경찰 수사와 브리핑을 막기 위해 관세청, 경찰청, 심지어 대통령실까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담당 부서	▪ 공수처 수사4부, 대검찰청 합동수사팀
주요 처분	-

1. 사건개요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필로폰 투약을 끊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중국 국적 투약자의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이 제조한 필로폰 74kg을 국내에 유통시킨 국제범죄조직을 검거했다. 해당 필로폰은 시가 약 2,220억 원, 약 246만 명이 투약 가능한 분량으로 필로폰 단일 유통 적발 사례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당시 정부가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영등포경찰서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은 필로폰 밀반입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수사결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관세청과 경찰청 수뇌부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조직원으로부터 “밀반입 당시 세관 직원들이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세관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백해룡 경정은 당초 9월 22일 수사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었지만, 9월 20일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받았고, 실제 10월 10일로 연기됐다.

10월 5일 오전, 백해룡 경정은 강상문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최형욱 폭력계장과 브리핑 보도자료를 협의했고, 이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보도자료가 수정되었으며, 관계청과 관련 문구는 모두 삭제됐다. 그러나 백해룡 경정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의 문의가 있을 경우 밀반입 경위에 대해 “세관을 상대로 확인 중”이라고 답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경찰 지휘부와 대립했다. 같은 날 오후 백해룡 경정은 수사 지휘 계통에 없는 조병노 경무관(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부터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하면 정부기관끼리 싸우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다음 날인 10월 6일 오전에는 정기섭 인천항공세관 통관국장과 감사과장 등이 영등포경찰서를 찾아와 백해룡 경정에게 관세청장의 지시로 찾아왔으며, 브리핑에서 인천세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백해룡 경정이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경우 ‘밀반입 경위에 대해 확인해보겠다’

또는 ‘수사중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절하자 그날 오후, 최형욱 서울경찰청 폭력계장은 백해룡 경정에게 마약수사대로 사건 이첩이 결정되었다며, 수사 중지를 지시했다.

하지만 브리핑 다음날인 10월 11일, 최형욱 서울경찰청 폭력계장은 다시 영등포경찰서에서 계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다시 수사가 재개됐다. 그러나 브리핑 이전까지 협조적이던 검찰이 언론 브리핑 이후 CCTV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수사는 지지부진해졌다.

2024년 7월 16일, 백해룡 경정은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조병노 경무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고, 이를 계기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공론화되면서 8월에는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다. 그러나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은 ‘용산’ 발언 자체를 부인했고, 최형욱 서울경찰청 폭력계장 등은 “사건 이첩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이첩 여부를 검토하라고 한 것”이라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고광호 관세청장 역시 “세관 연루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정당한 기관 협조 요청이었다”고 해명했다. 관련 인사들이 일제히 외압 의혹을 부인하면서,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 지휘부가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던 정황, 이첩 지시, 관련자들의 개입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단순히 관세청장의 과잉 대응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3년 10월 10일 브리핑 직후, 서울남부지검의 사건 담당 검사가 교체됐고, 검찰은 영등포경찰서가 요구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반려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사이 밀반입 혐의를 받던 세관 직원은 휴대전화를 초기화했고, 고광호 관세청장은 세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신준호 부장검사 등은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을 검거하기 이전인 2023년 2월, 이미 말레이시아 공범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는 자백을 받고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은 2024년 7월 18일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지구대로 발령되며 사실상 수사에서 배제됐다. 이후, 필로폰 밀반입 연루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던 세관 직원이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바탕으로 백 경정에 대한 감찰이 개시되었고, 서울경찰청은 2024년 8월 22일 “수사 중인 사안이 언론에 단독 보도되었음에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공보 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백해룡 경정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 백해룡 경정은 해당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백해룡 경정은 2024년 11월 6일 서울경찰청장의 경고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률대리를 맡고 참여연대가 소송을 지원했다.

반면,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은 2024년 2월,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로 발령 받았고, 강상문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2024년 3월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승진했다. 해당 사건의 총괄 책임자였던 김봉식 서울경찰청 수사부장도 2024년 6월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승진했다. 조병노 경무관은 외압성 전화를 한 사실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에 회부됐으나, ‘불문 처분’(징계 대상

해당 안 됨)을 받았고,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불거지며, 2024년 8월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좌천됐다.

지난 2025년 3월 20일, 국회에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통과됐다(재석 의원 255인 가운데 찬성 175인, 반대 76인, 기권 4인). △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마약 밀반입 시도 사건 및 인천 세관 지권 연루 의혹 △ 영등포경찰서장·서울경찰청·관세청·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4월 2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아 상설특검은 결국 출범하지 못했다.

지난 6월 10일 대검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여명 규모의 합동수사팀(팀장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을 서울동부지검에 꾸렸다. 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상설특검의 필요성은 언급한지 하루만의 일이었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야 하지만 수사를 하지않은 검찰 역시 직무유기의 공범이라며 검찰이 수사하는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 외에도 국세청 등 수사외압 의혹 중심에 있는 기관들이 합동수사팀을 꾸려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 받았다.

7월 7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김건희특검’에 세관 직원 마약 밀반입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 5일 국회는 이른바 내란특검법, 채상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건희특검법에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인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되었고,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됐다. 조병노 경무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공무원 등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의혹이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는 김건희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정보 전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강상문 전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최형욱 전 서울경찰청 폭력계장
고광효 관세청장
김재일 전 인천본부세관장
정기섭 인천공항본부세관 통관2국장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세관 직원 마약 밀반입 수사외압 의혹 수사

[공수처 수사4부]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이의신청 기각²¹⁶
[대검찰청 합동수사팀]
팀장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

세관 직원 마약 밀반입 수사

[서울영등포경찰서] 정보공개청구 청구외 부존재 및 종결 처분²¹⁷
[서울남부지검] 기소 이전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²¹⁸
지검장 김유헌 - 차장 배문기 - 부장 이재만 - 주임 조혁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
지검장 송경호 - 강력범죄수사부 고형곤 - 부장 신준호(주임)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3-07-00	서울영등포경찰서, 투약자 제보로 내사 착수
2023-08-11	서울영등포경찰서, 중국조직원 유통책 2명 검거, 필로폰 총 21g 압수
2023-08-14	서울영등포경찰서, 경찰서장의 지시로 형사2과장을 팀장으로 한 12명으로 구성된 마약수사전단팀 구성
2023-09-16	서울영등포경찰서, 9월 16일까지 26명 검거, 필로폰 총 27.8kg 압수 3개 조직이 국내 밀반입시킨 필로폰이 총 74kg 확인
2023-09-22	백해룡 경정, 수사결과 언론 브리핑 예정(김찬수 서장의 지시로 연기)
2023-10-06	최형욱 서울경찰청 폭력계장, 마약수사대로 수사 이첩 지시, 수사 중단
2023-10-10	백해룡 경정, 수사결과 언론 브리핑 진행
2023-10-11	최형욱 서울경찰청 폭력계장, 영등포경찰서에서 계속 수사하라고 지시
2023-10-15	고광효 관세청장, 휴대폰 1차 교체
2023-10-00	영등포경찰서, 세관 직원 5명 입건
2024-07-16	백해룡 경정,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고광효 관세청장, 조병노 경무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2024-05-00	영등포경찰서, 세관 직원 2명 추가 입건

²¹⁶ 공수처는 2025년 5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처분하고, ‘귀 단체가 해당 사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 공수처는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²¹⁷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025년 6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본서에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문서를 생산하는 경우 정보공개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처분함. 이에 참여연대는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다시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정보공개법 제9항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사 중인 사항’이라고 이유를 들면서도 비공개 처분이 아닌 ‘정보공개 청구외(종결)’ 처분함. ‘정보공개 청구외’ 처분은 이의신청이 불가함.

²¹⁸ 서울남부지검은 2025년 7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내부 업무 분장에 관한 것으로 공개시 검찰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분공개 처분하고, 기소 이전 수사지휘라인 전체 명단은 비공개함.

2024-06-00	영등포경찰서 수사전담팀 인원 축소
2024-07-17	공수처,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
2024-07-17	고광효 관세청장, 휴대폰 2차 교체
2024-07-18	백해룡 경정,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지구대로 발령
2024-07-21	고광효 관세청장, 휴대폰 3차 교체
2024-07-29	백해룡 경정,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2024-07-31	공수처, 고발인(백해룡 경정) 조사, 백해룡 경정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진행
2024-08-2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마약 수사 외압 청문회
2024-08-22	서울경찰청, 백해룡 경정에게 경고처분
2025-03-20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
2025-04-21	우원식 국회의장,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2025-06-10	대검, '세관 직원 마약 밀수·尹정부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 출범. 수사팀은 20여명 규모로 서울동부지검에서 꾸려지고 팀장은 윤국권(사법연수원 37기)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맡음.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짐
2025-06-25	대검 합동수사팀, 인천세관과 밀수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의 주거지 등 10여 곳 압수수색
2025-07-07	참여연대·민변, 김건희특검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수사촉구 의견서 제출

5. 재판 경과 및 결과

해당 없음

문재인정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및 부패 혐의 수사

14.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2022)

문재인정부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이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압박하고, 새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사적 추천을 받은 내정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이 수사하다 3년여 중단된 뒤 정권이 바뀌고 다시 수사한 사건

사건 진행상태	▪ 재판중
담당 부서	▪ 사건1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 사건2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주요 처분	▪ 사건1 : 백운규 · 조명균 · 유명민 · 조현옥 · 김봉준 불구속 기소 ▪ 사건2 : 임종석 · 조국 · 조현옥 · 김상곤 · 홍남기 · 강경화 무혐의 처분

1. 사건개요

2018년 12월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었던 김태우 검찰수사관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정보수집 의혹 폭로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드러났다. 2019년 1월,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감찰을 통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등을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 한전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당시 산업부 박성택 국장을 통한 장차관의 압박으로 사표를 낸 정황이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전 장관,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한 후 산업부 박성택 국장을 추가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어서 2019년 3월, 23개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이 압박으로 중도 사임했다고 주장하며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등 교육부, 통일부, 과기정통부 관계자 11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2019년 4월 서울동부지검(지검장 한찬식)은 자유한국당이 수사의뢰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불법감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조국, 박형철, 이인걸을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공공기관 및 산업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 고발 건에 대해서는 산업부 산하의 전 기관장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고는 이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2022년 3월 서울동부지검(지검장 심우정)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산업부 및 산하 기관인 한국남동발전 등 8개 기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재개했다. 2019년 3월 자유한국당의 고발 이후 3년이 지나 윤석열 정권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새로운 물증이 발견되거나 증인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대선 직후 수사가 재개된 것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서울동부지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유죄가 확정(2022. 1.)된만큼 수사가 재개될 수 있으며, 정치보복이나 앞으로 들어설 윤석열 정권 코드 맞추기 수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통일부 산하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교육부 산하 국책기관 전 이사장, 이상권 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문재도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백창현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정용빈 전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2022년 4월, 국민의힘은 2017~2018년 박근혜정부 공공기관 인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으로 임종석, 조국, 강경화, 김상곤을 비롯해 조현욱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영록 전 농식품부장관, 정현백 전 여가부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 감찰 및 비위행위를 묵살한 의혹으로 이미 2019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조국, 임종석, 박형철, 이인걸을 비롯해 당시 검찰에 수사의뢰 했던 강경화, 김현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대검은 해당 고발 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첩했으나 서울동부지검은 기존에 수사 중이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과 함께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불법감찰 의혹 사건'을 남기고(사건1. 산업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 및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불법감찰 의혹 사건),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사건2.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 기획조정실과 원전국, 백운규 전 장관의 주거지와 사무실, 산하 기관 3곳을 압수수색하고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거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 외에도 통일부와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장관, 조현욱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등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2023년 1월, 서울동부지검(지검장 임관혁)은 2018년 4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11개 기관장의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2018년 2월~3월 산업부 산하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사적으로 추천받은 내정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산업부 소관 기관 임원의 사표를 받은 후 대선캠프 인사를 임명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 6월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산하 후임 기관장으로 정치권 인사를 내정해 면접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조현욱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2017년 11월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장의 사직을 요구한 유영민 전 과기부장관, 2017년 7월 통일부 산하 기관장 사직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등 통일부, 과기부 차관, 김우호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박상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실무자로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산업부 장차관을 대리해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박성택 산업부 국장은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임명된 후 이들과 함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이 기소한 5명 중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명균이 당시 차관에게 통일부 산하 기관장의 사표 청구를 지시했는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조명균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4명(백운규·유영민·조현옥·김봉준)에 대한 심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창수)은 2024년 5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 홍남기 전 부총리,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사건1. 산업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 및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불법감찰 의혹 사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사건2.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등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사건1. 산업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 및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불법감찰 의혹 사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지검장 한찬식(~'19.07) - 차장 권순철(~'19.08) - 부장 주진우(~'19.08)
지검장 심우정 - 차장 성상헌 - 부장 최형원('22.03~'22. 07)²¹⁹
지검장 임관혁 - 차장 전무곤 - 부장 서현욱(주임) - 기소검사 이재만('22. 07~)

사건2.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송경호 - 차장 성상헌 - 부장 박혁수 - 주임 비공개('22.07~)
지검장 송경호 - 차장 김창진 - 부장 김승호 - 주임 비공개('23.09~)
지검장 이창수²²⁰('24.05~) - 차장 박승환('24.06~) - 부장 김승호 - 주임 비공개

²¹⁹ 서울동부지검은 2023년 3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023년 3월 이전의 수사지휘라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 처분함. 2025년 5월에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5호에 따라 비공개 처분함. 이에 법무부 보도자료 등에 기반하여 작성함.

²²⁰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박승환 1차장 직무대리. 2025년 6월 3일 사직.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19-01-07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등을 통해 330개 공공기관 임원 660여 명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으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장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
2019-01-24	자유한국당,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 한전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당시 산업부 박모 국장과 장차관의 압박으로 사표를 낸 정황이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산업부 백운규 전 장관, 이인호 전 차관,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담당관 등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 산업부 에너지정책기획관 박모 국장 추가 고발
2019-03-28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에서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친여권 인사 비위 은폐 및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사건 39건에 대한 관련 공직자 38명(중복 제외)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힘. 후일 해당 고발장에는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이진규 전 과기정통부 1차관 등 교육부, 통일부, 과기정통부 관계자 11명이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고발인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2019-03-31	검찰,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A 전 이사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19-04-22	검찰, 강남훈 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 등 소환 조사
2019-04-25	검찰,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특감반을 통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수사의뢰 무혐의 처분
2019-05-13	검찰, 장재원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1-27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유죄 선고
2022-03-25	검찰, 산업부 압수수색
2022-03-28	검찰,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압수수색
2022-03-31	검찰,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전 이사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4-14	검찰, 이상권 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4-15	검찰, 문재도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백창현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4-18	검찰, 정용빈 전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4-19	검찰,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획처장과 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등 3명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4-22	국민의힘, 2017년~2018년 박근혜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의혹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조현욱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 김영록 전 농식품부장관, 정현백 전 여가부장관 대검찰청에 고발 2017년~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 감찰 및 비위행위를 묵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대검찰청에 고발
2022-04-26	대검, 국민의힘 고발 건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
2022-04-28	검찰, 김영민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4-29	검찰, 산업부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1차 피의자 소환 조사

날짜	수사경과
2022-05-03	서울동부지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 감찰 및 비위행위 고발 건 수사
2022-05-06	서울중앙지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고발 사건 반부패수사2부 배당
2022-05-09	검찰, 산업부 문모 전 원전산업정책관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5-14	검찰, 산업부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2차 피의자 소환 조사
2022-05-16	검찰, 산업부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3차 피의자 소환 조사
2022-05-18	검찰이 5월초부터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박모 국장, 손모 과장 등에 대해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해 대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짐
2022-05-19	검찰, 산업부 기획조정실, 원전국, 백운규 전 장관 주거지와 사무실,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에너지기술평가원 압수수색
2022-06-09	검찰,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피의자 소환 조사
2022-06-13	검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2022-06-15	서울동부지법(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22-06-20	검찰, 청와대 파견 근무했던 산업부 A과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7-0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에 배당했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 형사1부 재배당(윤석열정부 들어 형사부도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자 반부패부에 몰려 있던 사건을 분산시키는 조치로 알려짐)
2022-07-27	검찰,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압수수색
2022-08-18	검찰, 과기정통부 전직 감사관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8-22	검찰, 용홍택 과기정통부 전 1차관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8-25	검찰, 한국판유리산업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유탄유공업협회 압수수색
2022-10-07	검찰,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피고발인 소환 조사
2022-10-13	검찰, 이진규 전 과기정통부 1차관 피고발인 소환 조사, 김우호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소환 조사
2022-10-28	검찰,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장관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1-11	검찰,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1-13	검찰, 박상혁 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환 조사
2022-12-16	검찰, 조현욱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소환 조사
2023-01-19	검찰(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장관, 조현욱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불구속 기소.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이진규 전 과기정통부 차관, 김우호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박상혁 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 박성택 전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등 불기소 처분
2024-05-24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현욱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 홍남기 전 부총리,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무혐의 처분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조명균	2025-01-24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김종남 부장판사 2023고합44) 무죄 선고 - 검찰 항소
	2025-06-00	2심(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5노508) 진행중
백운규·유영민·조현욱·김봉준	2024-04-29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김승정 부장판사 2023고합45) 진행중

15. 문재인정부의 북한 주민 복송 결정 의혹 수사(2022)

2019년 해군에 의해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문재인정부가 흉악범죄를 저질렀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복송한 결정에 대해, 윤석열정부의 통일부와 국방부가 전 정부의 복송 결정이 잘못된 조치였다며 정부 입장을 번복하고, 감사원 감사 개시와 함께 국정원이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된 사건

사건 진행상태	▪ 재판중
담당 부서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주요 처분	▪ 정의용 · 노영민 · 김연철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2019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북한 주민 2명 송환'을 주요 내용으로 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한 언론사 기자에 의해 포착되었다. 해당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된 후, 통일부의 브리핑과 정경두 국방부장관,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안 질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은 이해훈 위원장의 브리핑이 이어졌다.

이에 따르면, 북한 김책항에서 19명의 선원을 태우고 출항한 17톤급 오징어잡이 어선에서 기관장, 갑판장, 고참 선원 세 명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반감을 품고 선박의 격리공간과 취침시간을 이용해 선장 등 16명을 차례대로 살해한 후 시신과 흉기를 바다에 유기했다. 이들은 북한 자강도로 도주하기 위한 자금 마련 목적으로 북한 김책항으로 귀항했으나 이 과정에서 기관장이 북측에 체포되었다. 갑판장과 고참 선원은 오징어잡이 어선을 타고 북한 해역으로 도주하다 10월 31일, 동해 NLL을 침범했다. 우리 해군이 방송과 위협사격으로 NLL 남하 경고 조치하자, 이들은 북측 해상으로 도피하다 다시 남하했으나 귀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북쪽과 남서쪽 방향으로 다시 도주를 시도하다 11월 2일 해군에 의해 나포되었다. 해군은 이 사실을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부, 국정원 등에 보고했고 나포한 북한 주민 2명(갑판장과 고참 선원)을 수사기관에 인계하였다. 정부는 합동조사 과정에서 갑판장과 고참 선원을 각각 분리신문해 이들의 16명 살해 사실 등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그들의 자백이 국정원이 확보했던 첩보와 일치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은 해군의 나포 과정에서 삶을 포기하려 생각했다고 진술했으며, 보호 요청 취지 즉 자필 귀순의향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한편 2019년 6월 삼척 목선 귀순 사건 후 정부는 초기 군사 작전과 합동신문 등은 국정원이, 대북조치는 통일부가 담당하도록 하며 이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컨트롤 타워로 정한 바 있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합동조사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들을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헌법상 북한 주민은 잠재적 남한 주민에 해당하나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고, 이들에게 사법적 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귀순 절차와 여건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들이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라고 합의했다고 진술했고, 우리 해군의 단속에 불응해 도피한 후 나포돼 이들의 귀순의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박 안에서 혈흔과 같은 것이 발견되는 등 범죄사실 혐의가 매우 명확했으나 시신이나 흉기와 같은 증거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한에서 기소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들의 귀순 동기, 목적, 준비 과정, 행적 등을 종합해 볼 때 귀순 진정성이 없으며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고,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추방의 근거로 제시했다.

통일부는 11월 5일,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이들에 대한 추방 및 선박인계 입장을 통지했고, 북한은 이들이 16명을 살해했다고 먼저 밝히고 인수에 동의했다. 11월 7일, 정부는 이들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계하고, 선박도 다음날 북측에 인도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11월 7일, 이들을 북한에 인계하기 전 관계부처가 발표문을 작성하고 오후 3시에 이들을 북송한 직후 그 사실을 국회에 보고한 후인 4시에 공식발표를 예정했으나 예정된 공식 일정 전에 언론사 기자의 사진에 포착된 것이지, 사건을 묵인하거나 감추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나포한 어선을 북측에 인계하며 사진이 공개되자 어선의 규모 등으로 미루어 3명이 16명을 살해할 수 있었는지, 정부가 북송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은 아닌지와 북송을 결정한 정부의 충분한 조사 여부, 군 관계자가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고한 경위, 북한에서 사형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추방한 근거 미비 등에 대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의혹 제기과 논란이 계속되었다. 자유한국당은 해당 사건에 대한 국정 조사 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2019년 연말, 검찰청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으로 인해 자유한국당의 대응은 이어지지 못했다. 11월 11일, 보수단체가 서훈 국정원장, 정경두 국방부장관, 김연철 통일부장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살인방조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21년 11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이 보수단체는 항고했다.

2022년 대통령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문재인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이 재점화되면서 북한 출신 지성호,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북한 주민 북송에 대한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통일부가 '북송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는 발표를 해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북송된 북한 주민 2명의 자필 귀순의향서가 공개되며 논란이 시작되었다. 2019년 당시 통일부는 대북조치를 담당하는 부처이고 조사신문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 추방에 대한 여러 사항을 검토하고 소통했으며 호송과정 등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 북한 주민 2명이 추방 전까지 북송 사실을 몰랐는지는 답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2022년 현재 통일부는 북송 당시 북한 주민 2명이 자신들의 북송 사실을 몰랐다면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고, 이들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로 눈이 가려진 채 북송에 저항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언론에 공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통일부는 윤석열정부 들어 입장이 바뀐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정원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북한 주민 복송 사건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윤석열정부에서 뒤바뀐 결정에 대한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고 증언해 문재인정부에 대한 사정 의혹이 제기되었다. 통일부에 이어 외교부와 국방부, 국정원도 북한 주민의 복송은 잘못된 조치였다는 등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다. 2022년 8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함께 '탈북어민 강제 복송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처리결과와 유권해석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개시했다. '신적폐청산'이라는 여당의 주장과 낮은 대통령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신북풍몰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공방으로 이어졌다.

2022년 7월,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서호 전 통일부 차관,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 서훈 전 국정원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2023년 2월, 검찰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지검장 송경호 - 차장 박기동 - 부장 이준범(주임)
 지검장 송경호 - 차장 김태은 - 부장 임삼빈('23.09~)
 지검장 이창수²²¹('24.05~) - 차장 이성식('24.06~) - 부장 김태훈('24.06~)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19-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북한 주민 2명 송환'을 주요 내용으로 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한 언론사 기자에 의해 포착됨. 국회 정보위원회 이해훈 위원장, 국정원의 비공개 현안보고 뒤 국정원이 복송된 주민 2명의 범죄 혐의를 파악했으며, 철저히 조사했다며 언론 브리핑에서 공개
2019-11-02	북한 선원 2명, 나포 5일 만에 북한으로 추방
2019-11-02	한반, 헌법·유엔(UN)고문방지협약·북한이탈주민법 등에 반하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

²²¹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박승환 1차장 직무대리. 2025년 6월 3일 사직.

날짜	수사경과
2020-11-23	인권위, 진정 각하
2022-05-10	윤석열정부 출범
2022-06-20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직권남용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범인도피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2022-07-06	국정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복송된 북한 주민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
2022-07-07	검찰, 국정원의 고발 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배당
2022-07-11	통일부, 북한 주민 복송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정례브리핑에서 발표. 기존의 ‘휴약범죄 북한 주민 추방’ 사건에서 ‘북한 어민 강제 복송’이라고 사건 재규정
2022-07-12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센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22-07-12	통일부, 북한 주민 복송 사진 공개
2022-07-13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서해 피살 공무원 및 북한 주민 복송 의혹에 대해 국정원 압수수색, 국정원 임의제출
2022-07-15	검찰,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장 고발인 조사
2022-07-15	검찰, 서훈 전 국정원장 입국시 통보 조치
2022-07-1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7개 단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범죄 공모),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 체포 및 감금, 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
2022-07-19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배당
2022-07-21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고발인 조사
2022-07-25	검찰, 해군 A중령, B소령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7-28	검찰, 법조기자단 티타임에서 “문재인정부의 복송 결정을 ‘통치행위’로 보기 어렵고, 유죄 선고 및 형사재판 관할권 법리 문제 없었을 것”이라고 발언
2022-08-03	검찰, 북한 주민 복송 해명자료 담당 통일부 직원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8-15	검찰, 서훈 전 국정원장 피고발인 소환 조사
2022-08-18	검찰,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북한 주민 복송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임의진 전 JSA 경비대대장 피고발인 소환 조사
2022-08-19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을 살인 및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2022-08-21	검찰, 서훈 전 국정원장 피고발인 재소환 조사
2022-08-26	검찰, 대통령기록관 추가 압수수색
2022-09-19	검찰,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 조사
2022-09-20	검찰,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 소환 조사 검찰,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피고발인 소환 조사
2022-09-21	검찰,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재소환 조사

날짜	수사경과
2022-10-19	검찰,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피고발인 소환 조사
2022-12-26	검찰, 서훈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
2023-01-31	검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피고발인 소환 조사
2023-02-01	검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차 피고발인 소환 조사
2023-02-28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이준범 부장검사),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불구속 기소 - 정의용 - 강제 복송 총괄, 조사 중단 관여 등 - 노영민 - 강제 복송 방침 결정 관여 등 - 서훈 - 조사 결과 보고서 중 귀순 요청 삭제, 조사 종결 허위 기재 등 - 김연철 - 강제 복송 관여 등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2025-02-19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허경무 부장판사 2023고합157) 선고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 -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 쌍방 항소 *판결문 공개열람 불가 처리
	2025-06-00	2심(서울고법 형사1부 2025노851) 재판중

16. 문재인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2022)

2020년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문재인정부의 결론에 대해, 2022년 윤석열정부 집권 후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해양경찰청이 정면으로 번복하고, 감사원 감사 개시와 함께 국정원이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된 사건

사건 진행상태	▪ 재판중
담당 부서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주요 처분	▪ 서훈 구속 기소 ▪ 서육·박지원·노은채·김홍희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2020년 9월 21일 낮 12시 51분경,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 모씨가 승선했던 무궁화10호에서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해양경찰(해경)에 접수되었다. 해군과 해경은 해수부 등과 함께 선박 20척, 항공기 2대로 정밀수색을 실시했고 다음 날인 9월 22일 오후 3시 30분경, 북한 해역에서 북측이 이 모씨를 발견한 정황을 포착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이 모씨의 실종과 수색, 북측에서 발견된 사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 보고되었다. 당국은 오후 9시 40분경 북한군이 이 모씨에게 사격을 하고 오후 10시 11분경 시신을 불태운 정황을 포착, 오후 10시 30분경 청와대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9월 23일 새벽 1시, 청와대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한 시간 반 가량 개최했으나 회의 개최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았다. 오전 8시 30분,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고, 이후 국방부는 이 모씨의 실종과 북한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9월 24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군의 총격으로 이 모씨가 사망했으며, 월북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 사과를 요구하는 대북 메시지를 발표했고, 9월 25일 북한은 시신이 아닌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밝히는 통지문을 전송했다. 9월 29일, 해경(해양경찰청장 김홍희)은 이 모씨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9월 21일부터 진행해 온 ‘해수부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으로 종결했다. 해경과 해군은 시신을 수색했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수색을 종료했다.

이 모씨의 유족들은 월북을 부인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당시 조류의 방향이나 월북 동기 등이 뚜렷하지 않다고 월북 사실 여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이 모씨가 사살되기 전까지 6시간여 동안 생존했는데도 구조하지 않은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정부는 관련 정보가 청와대에 입수된 후 논의 과정 등을 해명했다. 군과 해경은 이 모씨가 단순 표류로는 북한 해역에 도달하기 어려운

위치에서 구멍조끼를 입은 채 발견되었다는 점, 북측이 이 모씨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으며 이 모씨가 북측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 그 외 여러 경로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이 모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며, 사살할 가능성을 예견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연이어 발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도 국방부 발표 당일 개최된 국방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방부의 보고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혹 제기는 계속되었다.

보수단체들은 정부가 우리 국민을 구조하려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서욱 국방부장관, 이인영 통일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2021년 9월 20일,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 최창민)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발 건을 각하했다. 서욱 국방부장관 등 6명도 무혐의 처분됐다. 유족들은 해경과 청와대 등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가 비공개 처분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청와대가 항소해 정보를 받지 못했다. 2022년 1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유족에게 당선되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후 2022년 6월 16일, 해경(해양경찰청장 정봉훈)은 최종수사결과 브리핑을 열어 이 모씨의 월북을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어떤 의혹도 없도록 수사했지만 최종적으로 북한 해역에 자의적으로 갔다고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정리하며 정황과 추정을 넘어서 월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에 판단을 달리한다며 수사결과를 번복한 것이다. 2020년 수사 때와 동일한 증거를 두고 상반된 결과가 발표되자 해경이 새 정부의 입맛에 맞춰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해경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수사의 책임을 표명하며 치안감 이상 9명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의 감사 등 진상규명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 국방부 등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고, 다음 날 감사원(감사원장 최재해)은 해경,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반면, 2022년 7월,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는 국방부와 면담 후, 국방부는 ‘월북’ 추정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면담 결과를 밝혔다.

대선 이후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이 모씨의 월북 여부에 대해 해경 등 정부기관이 기존 입장과 정반대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시 시작된 ‘월북몰이’ 논란은 국정원(국정원장 김규현)이 이 모씨 사건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면서 더욱 커졌다. 새롭게 수집된 정보가 없음에도 2020년 당시 정보를 토대로 군과 해경이 입장을 번복하고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 이희동)이 수사를 시작하자, 문재인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문재인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진실규명 과정이라는 주장과 신북풍몰이에 불과하다는 반박 등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사안의 핵심인 문재인정부 월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의 출처, 수집 방법 등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한미 정보당국의 대북 정보수집 방법 중 하나이자 공개되어서는 안될 휴민트(Humint, 인간 정보. 위장 정보원) 존재와 SI(Special Intelligence, 특별 취급 기밀정보)의 수집 과정과 담당기관, 처리체계, 해당 정보의 취급인가 기관과 당사자 등까지 공개되자, 기밀이어야 할 군의 정보 등이 여야의 정쟁에 이용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함께 이어졌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논란은 김규현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의 고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승인받았다’고 발언하면서 다시 재점화되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승인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국정원과 윤석열 대통령실은 ‘대통령 승인’ 사실을 부인했으나 김규현 국정원장은 본인의 발언을 철회하거나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해경,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서해 연평도 해역에서 현장검증을 이어가는 동안, 감사원은 서해 피살 공무원 이 모씨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공방이 진행되던 중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해명자료를 언론에 발송할 예정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었다. 이로 인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감사가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명 감사라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는 대통령실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022년 10월, 감사원(감사원장 최재해)이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감사원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 미이행, 자진 월북 판단과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은폐 및 왜곡 등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모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한자(漢字)’가 적혀 있었고,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으며 국적 미상의 선박에 승선했던 정황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당시 인근 해역에는 중국 어선밖에 없었기에, 감사원은 이 모씨가 중국 선박에 구조되어 부상을 치료하고 구명조끼를 입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모씨가 국적 미상의 선박에 의해 구조된 후 북한에 가게 된 정황은 밝히지 못했다. 월북을 단정지을 수 없다는 근거로 제시된 한자 구명조끼와 붕대, 국적 미상의 선박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은 처음 듣는 사실이라고 부인했고, 국방부는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었던 것은 맞으나 간체자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관련 선박에 대한 정보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I 첩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고, 휴민트 승선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 주변 해역에 중국 선박이 있었는지 유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 이희동)은 20여 명에 대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수사의회와 감사 결과 등에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았고,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1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지만, 법원이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이들은 석방됐다. 2022년 12월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자 결론이 바뀌었다며 ‘안보 전쟁’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각각 피의자, 피고발인 소환 조사한 후 12월 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월 3일, 법원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 모씨가 북한 군인에 의해 사망하자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자진 월북’ 결론에 부합하지 않는 첩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12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기소됐고, 같은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허위사실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12월 29일, 검찰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감사원은 2023년 12월 7일, 1년여 만에 감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해당 사건은 문재인정부 당시 국방부·해경 등 관계기관이 이 모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은폐·왜곡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엄중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 안보실, 해경,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이 ‘서해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생존했을 당시’에는 상황을 보고·전파하지 않고 조기 퇴근, 대북전통문 미발송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신변보호 및 구호 조치를 검토·이행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어 ‘서해 공무원의 피살·소각 사실 인지 후’에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비밀자료를 삭제하고, 실종(생존) 상태인 것처럼 관련 자료를 작성·배포하고 최초 실종지점을 그대로 수색했다고 발표했다. ‘서해 공무원 사망이 언론에 발표된 이후’에는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 내기 위해 군 첩보에도 없는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하고, 미확인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13명 중 주요 인사는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기관들에도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렸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지검장 송경호 - 차장 박기동 - 부장 최창민(~'22.07), 이희동('22.07~) -
주임 김명옥(~'22.07), 하준호('22.07~)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0-09-24	국방부, 북한군의 총격으로 공무원 이 모씨 사망, 월북 가능성 발표
2020-09-29	해경, 중간 수사 결과 발표 - 부유물과 구명조끼 착용, 북측에 월북 의사 표명 정황, 북측에서 이 모씨의 인적 사항 파악,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월북으로 판단
2020-10-04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직무유기 혐의로 서욱 국방부장관, 이인영 통일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고발. 이후 무혐의 처분(날짜 미상)
2020-10-28	유족,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정보공개청구
2020-10-29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 고발
2021-01-13	유족,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2021-09-20	검찰,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고발 각하
2021-10-08	유족,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과장,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고소
2021-11-12	서울행정법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공개 판결, 청와대 항소
2021-12-29	유족, 대통령기록물 지정 금지 가처분 신청
2021-12-29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압수수색
2022-01-11	서울행정법원, 유족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
2022-01-3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유족에게 진상 규명 약속
2022-05-02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윤성현 전 해경 수사정보과장 피의자 조사
2022-05-10	윤석열 대통령 취임
2022-06-16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사자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윤성현 전 해경 수사정보과장 무혐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기각 처분
2022-06-16	해경 최종 수사 결과 발표 - 월북 단정 근거 없어 - 국제형사사법공조 진행했으나 이 모씨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군인 수사가 불가능하여 수사 중단
2022-06-16	대통령실, 유족의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2022-06-17	감사원,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 월북 보고 과정을 중심으로 감사 착수
2022-06-22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6명 고발
2022-06-22	유족,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고발
2022-06-22	검찰, 유족의 고발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배당
2022-06-28	유족,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청와대 행정관A, 윤성현 전 해경 수사정보과장, 김태균 전 해청 형사과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고발
2022-06-29	검찰, 고발인(유족) 조사
2022-07-06	국정원, 첩보 관련 보고서 등 무단 삭제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박지원 전

날짜	수사경과
	국정원장 고발
2022-07-07	검찰,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배당
2022-07-08	유족,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서욱 전 국방부장관,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 고발
2022-07-08	검찰, 서욱 등의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배당
2022-07-13	검찰,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 참고인 조사
2022-07-13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2022-07-13	유족, 사자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서 제출, 인천지검 송치
2022-07-14	검찰, 국방부 MIMS(밈스,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담당자 3명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7-15	검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출국금지 조치. 해외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은 공항 입국 시 즉시 검찰 통보 조치
2022-07-18	검찰, SI(특별취급정보) 수집 대북 감청부대원 참고인 조사
2022-07-19	감사원,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합참, 해양경찰청, 해군본부 실지 감사 착수
2022-07-23	검찰, 사자명예훼손 혐의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배당
2022-07-27	검찰, 인천해경 홍보실 직원 참고인 조사
2022-08-03	검찰, 해경 수색구조과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8-16	검찰, 서욱 전 국방부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산하 부대, 해양경찰청 등 압수수색
2022-08-17	검찰, 박지원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해양경찰청 압수수색
2022-09-01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2022-09-23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감사원 출석 요구 거부
2022-09-28	감사원,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청,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수령 거부
2022-09-28	검찰, 서해 연평도 해역 현장검증
2022-10-03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조사 요청 거부
2022-10-06	유족,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노영민 전 대통령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 고발
2022-10-07	유족,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고발
2022-10-11	검찰, 안영호 전 합참 작전본부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2-10-13	검찰, 서욱 전 국방부장관 피고발인 소환 조사
2022-10-13	검찰, 감사원법 위반 고발인(유족) 조사, 이첩 검토(수사개시 대상 사건 아님)
2022-10-14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 발표 - 위기관리 관련 매뉴얼에 따른 조치 미이행 - 관련 사실의 은폐 - 자진 월북 판단과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은폐 및 왜곡 등 :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국가안보실 3명, 국방부 7명, 통일부 3명, 국정원 1명, 해경 6명 총 20명 수사의뢰
2022-10-14	검찰,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피고발인 소환 조사

날짜	수사경과
2022-10-18	검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로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영장 청구
2022-10-22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영장 발부
2022-10-28	검찰,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 기간 연장
2022-11-06	검찰,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일시 석방(친족상)
2022-11-08	서울중앙지법, 서욱 전 국방부장관 구속적부심 석방
2022-11-11	서울중앙지법,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적부심 석방
2022-11-16	검찰,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1차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1-17	검찰,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2차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1-18	검찰,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3차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1-22	검찰,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참모부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2-11-24	검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1차 피고발인 소환 조사
2022-11-25	검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2차 피고발인 소환 조사
2022-11-29	검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2022-12-01	검찰,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 언론 브리핑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최종결정권자이자 최종책임자로 판단한다고 발표
2022-12-01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문 발표 :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했으며, 정권이 바뀌자 결론이 바뀐 상황에 대해 비판하는 등의 내용
2022-12-03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발부
2022-12-05	검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2-09	검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 기소,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 서훈 - 피격 사실 은폐와 허위 자료 배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제외) : 김홍희 - 기존 증거 은폐, 실험결과 왜곡, 피격 사망 첩보 확인 후 실종상황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 배포, 월북 가능성 및 판단 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 작성 및 배부로 이 모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자명위훼손 혐의
2022-12-13	검찰, 노영민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피고발인 소환 조사
2022-12-14	검찰, 박지원 전 국정원장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2-14	유족,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
2022-12-22	국가인권위원회, 한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황희·김철민 의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발언으로 유족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진정 각하
2022-12-29	검찰,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실족’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불구속 기소 : 박지원, 노은채 -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혐의 : 서욱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2023-07-21	유족,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 멸실 책임 묻겠다며 서훈 추가 고발

날짜	수사경과
2023-08-11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박지원 감사원 요청 조사 거부한 혐의로 검찰 송치
2023-08-18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서훈 감사원 요청 조사 거부한 혐의로 검찰 송치
2023-09-06~ 2023-09-08	공수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위법을 이유로 감사원 수사. 서울의 감사원 본원과 특별조사국 사무실, 세종의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
2023-10-06	감사원, 서해 공무원 이 모씨 피살사건 문재인 정부의 '월북 조작'결론
2023-11-01	검찰(울산지검 형사5부, 김윤정 부장검사), 문재인 감사원 요청 조사 거부 고발에 무혐의 처분
2023-12-07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점검 주요 최종 감사결과 '문재인 정부 은폐 및 왜곡' 발표. "초동대처 부실 및 사실은폐, 수사결과 왜곡 등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국방부·통일부·해경 등 3개 기관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 주의, 통보 등 인사 조치 요구 및 안보실 등 6개 기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서훈·서욱·박지원·노은채·김홍희	2023-01-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2022고합1011), 재판 병합
	2023-04-0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서훈 보석 석방
	2025-06-0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박정제 지귀연 권성수 부장판사 2022고합1011) 진행중

17. 문재인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 수사(2023)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 및 관계자들이 소득주도성장·일자리·부동산 정책을 위해 통계청 등 관계 기관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등 통계 조작 및 왜곡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사건

사건 진행상태	▪ 재판중
담당 부서	▪ 사건1 : 대전지검 형사4부 사건1 ▪ 사건2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주요 처분	▪ 사건1 : 김수현 · 김상조 · 홍장표 · 황덕순 · 김현미 · 윤성원 · 강신욱 등 11명 불구속 기소 ▪ 사건2 : 강신욱 무혐의 처분

1. 사건개요

문재인정부 주요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과 연계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소득 통계), 일자리 정책과 연계된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 통계), 부동산 가격과 연계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부동산 통계) 등에 대해 통계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2022년 4월 대선 직후 한 언론사가 감사원 연간감사계획에 문재인정부의 주택과 일자리 통계 등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2022년 9월 감사원(감사원장 최재해)은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국가 주요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에 나섰다. 감사 기간을 거듭 연장한 후 약 1년 만인 2023년 9월 문재인정부 청와대 관계자 등을 포함한 22명에 대해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범죄혐의가 확인되었다며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역대 문재인정부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비서관, 그리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통계 작성 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총 94회에 걸쳐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했다고 보았다. 부동산 통계와 관련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통계 작성 및 공표 과정에서 통계를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그간 주 1회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던 관행과 달리 주중치, 속보치, 확정치로 구분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주 3회 제공하도록 압박했다고 판단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중조사 중단요구를 거듭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묵살하고 압박했으며 부동산 대책 효과를 가장하기 위해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고 보았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와 중간 감사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및 관련자들은 문재인정부를 향한 표적 감사이자 보복이라고 반발하며 통계 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감사원이 부처의 정책을

감사하는 정책3과에 이어 공무원의 비위감찰을 감사하는 특별조사국까지 감사에 투입하면서 감사 기간을 연장했으나 ‘윗선’의 개입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감사원이 범죄라 단정한 통계자료 공식 발표 전 보고가 실무적 관행이었다는 점,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중간 감사결과 형식을 빌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는 점 등 수사 의뢰 절차가 합당한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치 감사 의혹도 제기되었다.

2023년 10월 검찰(대전지검 형사4부)은 사건을 배당받은 지 2주만에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강제수사를 시작했다(사건1. 문재인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 이들에 걸쳐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사무실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감사원의 수사 의뢰 대상자 일부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대통령기록관, 황덕순, 김수현 등의 주거지를 차례로 압수수색하고 황수경을 참고인으로, 강신욱, 윤성원, 홍장표를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대통령비서실·국토부·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 대상자만 100여명에 달했다.

2024년 1월 검찰은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성원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성원과 이문기가 부동산 통계 조작 시기 당시 국토교통부 1차관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대전지방법원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윤성원과 이문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현미, 장하성, 김상조, 김수현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후 2024년 2월 윤성원과 이문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또다시 기각했다. 문재인정부를 목적으로 한 정치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2024년 3월,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22명 중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홍장표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 총 11명을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재인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 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이자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이고 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를 명확히 밝혔다’고 발표했다.

이와 별개로, 감사원은 2022년 9월 감사 착수, 2023년 9월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하지 않다가, 2025년 4월에서야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가 통계의 작성 및 활용 실태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보고서는 약 900쪽 분량의 방대한 내용이며, 수사의뢰 이외에 청와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관계자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하였다.

한편, 2022년 9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후인 12월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018년 가계동향조사의 표본 집단 중 저소득층 비율을 고의 축소하고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왜곡해 발표했고,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과정에서 통계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상이한 ‘병행조사’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강요, 통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강신욱을 경찰에 고발했다(사건2. 강신욱 전 통계청장의 소득통계 조작 의혹 사건).

2024년 4월, 수사를 맡았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강신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경찰은 가계소득 통계가 정확성과 일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 방법에 따라 작성, 보급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정 값을 산출하기 위해 조작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통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사건1. 문재인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

[대전지검 형사4부]
지검장 박재억(~'24.05) - 차장 서정식(~'24.06) - 부장 송봉준(~'24.06) - 주임 비공개
지검장 성상헌('24.05~) - 차장 유광렬('24.06~) - 부장 김가람('24.06~) - 주임 비공개

사건2. 강신욱 전 통계청장의 소득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청장 김광호(~'24.01) - 대장 총경 이충섭 - 1계장 경정 김태현 - 팀장 경감 조현 - 경위 김광휘(~'24.02)
청장 조지호('24.01~) - 대장 총경 정환수 - 2계장 경정 신재문 - 팀장 경감 조현 - 경사 최정인('24.02~)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2-09-26	감사원(감사원장 최재해), 2023년 3월 31일까지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2022-12-22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2018년 가계동향조사 및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 조작 및 왜곡 발표해 직권남용, 강요, 통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강신욱 통계청장 경찰 고발
2023-01-06	경찰, 강신욱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배당
2023-02-10	경찰(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고발인 조사

날짜	수사경과
2023-09-13	감사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핵심 정책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려는 의도로 통계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 원장 등 22명 검찰 수사 의뢰
2023-09-19	대검찰청, 대전지검 배당
2023-10-05	검찰(대전지검 형사4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사무실,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통계청 전 차장 등 전현직 관계자 주거지 및 휴대전화 압수수색, 감사원 수사의뢰 대상자들 일부 출국 금지 조치. 장하성, 김수현, 홍장표, 김현미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원 기각 언론 보도
2023-10-05	검찰, 통계청 등 압수수색
2023-10-10	검찰, 통계청 고용통계과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3-10-19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2023-10-20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2023-10-27	검찰, 강신욱 전 통계청장 피의자 소환 조사
2023-11-16	검찰, 황덕순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3-11-22	검찰, 황수경 전 통계청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3-12-07	검찰, 강신욱, 윤성원 피의자 소환 조사
2023-12-20	검찰, 김수현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3-12-22	검찰, 홍장표 피의자 소환 조사
2024-01-02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성원,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구속영장 청구
2024-01-08	법원(대전지방법원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도망의 염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성원 및 이문기 구속영장 기각
2024-01-16	검찰, 김현미 피의자 소환 조사
2024-01-18	검찰, 장하성 피의자 소환 조사
2024-01-19	검찰, 김상조 피의자 소환 조사
2024-01-22	검찰, 김수현 피의자 소환 조사
2024-02-22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 윤성원과 이문기 구속영장 재청구
2024-02-26	법원(대전지방법원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 도망의 염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보기 어렵다며 윤성원 및 이문기 구속영장 기각
2024-03-14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 장하성·이호승·차영환 등 전 청와대 관계자 4명, 한국부동산원 전현직 원장단 3명, 통계청 관계자 4명 등 11명 혐의없음 및 불기소 처분. 주택 및 고용, 소득 통계 조작과 왜곡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를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로 김수현·김상조·홍장표·하동수·황덕순·이준협 등 청와대 관계자, 김현미·윤성원, 국토부 실장 2명,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2024-04-01	경찰, 강신욱 혐의없음 처분
2025-04-17	감사원(감사원장 최재해), 최종 감사 결과 발표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김수현·김상조·홍장표·황 덕순·김현미·윤성원·강신 욱 등 11명	2024-03-15	1심(대전지법 형사2단독 임성실 판사) 배당
	2024-03-22	법원, 형사합의부 이송 재정합의 결정, 대전지법 제12형사부 배당
	2024-12-18	피고인 측, 통계법 제27조의2 제1항 헌법소원 제기
	2025-06-00	1심(대전지법 제12형사부 김병만 재판장) 진행중

18. 문재인정부의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수사(2024)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사드 정식 배치를 고의적으로 지연 시키기 위해 군사 기밀을 사드 반대 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사건

사건 진행상태	▪ 재판중
담당 부서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주요 처분	▪ 정의용 · 정경두 · 서주석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2023년 7월,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방중(2017년 5월)을 기점으로 중국의 의사를 반영해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1한(사드 운용 제한)’이 사실상 결정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국방부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을 공개하며, “감사원 감사와 수사 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7월 31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감사원에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이 지연된 이유 ▷사드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의 측정 결과 공개 기피 여부 ▷사드 관련 문서 의도적 파기 여부 ▷중국과의 ‘3불 1한’ 합의 실체 등을 조사해달라고 청와대, 국방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감사원장 최재해)은 2023년 10월 23일 ‘3불 1한’을 제외한 사드 지연 의혹에 대해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 경북 성주군 등 11개 기관에 대한 실지 감사에 착수하였다. 감사는 특별조사국 1과가 맡았으며, 1년 가량 감사가 진행됐다.

2024년 11월 18일, 감사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이기현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 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 측에 유출했으며 이에 2020년 5월 29일 주민시민단체와 경찰의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이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정경두 전 장관은 “중국 측에는 외교적 차원에서, 시민단체에는 충돌을 막기 위한 상황 관리 차원에서 알려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5년 1월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주거지와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군 소성리 원불교 진발평화교당 천막과 사드 반대 시민단체 활동가 1명, 성주 주민 3명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2025년 3월 4일 사드 배치 추진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소환조사하고, 3월 30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5년 4월 8일 검찰은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전 장관이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된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2020년 5월29일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를 위한 한국군과 미군의 군사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서주석 전 차장에 대해 국방부 차관 재직 시절인 2018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와 국가안보실 1차장 시절인 2020년 8월~이듬해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군사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도 제기했다.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전 장관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사법원의 전속 관할 범죄인 점을 고려해 군검찰로 이송했다.

한편, 검찰은 감사원 수사 의뢰 내용 중 정 전 실장 등이 중국 국방무관에게 군사작전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군사기밀 누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으며, 이기현 전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 비서관이 사드 배치 반대단체에 넘긴 정보 및 사진 등도 공무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관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지검장 이창수²²² - 차장 이성식 - 부장 김태훈(주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
담당 부서 외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²²³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3-07-31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²²²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박승환 1차장 직무대리. 2025년 6월 3일 사직.

²²³ 국방부는 2025년 6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부분공개(국방부검찰단장, 보통검찰부장) 처분함.

2023-10-23	감사원, ‘3불 1한’을 제외하고 사드 지연 의혹에 대해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 경북성주군 등 11개 기관에 대한 실지 감사 착수
2024-11-18	감사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현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한 사실 공개
2025-01-09	검찰,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반대 단체 사무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주거지 압수수색
2025-03-04	검찰, 임기훈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소환 조사
2025-03-30	검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25-04-08	검찰, 정의용, 정경두, 서주석 불구속 기소, 이기현 무혐의 처분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정의용·정경두·서주석	2025-06-00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재판중

고위공직자 · 정치인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

19.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 수사(2021)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가 과거 2010년~2012년경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조작 범죄 행위에 필요한 자금과 계좌를 제공했다는 혐의 수사

사건 진행상태	▪ 재수사중
담당 부서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 형사6부 → 반부패강력수사2부 ▪ 서울고검 형사부(재기수사)
주요 처분	▪ 권오수 등 구속 기소 ▪ 김건희, 최은순 무혐의 처분

1. 사건개요

독일 자동차 수입업체인 도이치모터스는 비상장 회사였으나, 2008년 말 코스닥 상장사였던 다르앤코를 인수합병하며 코스닥에 우회상장하였다. 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하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시세조작을 잘하는 소위 ‘선수’로 알려진 이정필을 영입하였고, 자기 주식과 주식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이정필에게 넘겨 2010년부터 주가조작을 지시했다. 이를 포착한 경찰은 2013년경부터 내사를 진행했지만, 당시에는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못하고 종결되었다. 수사에 필수적인 금감원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금감원은 “검찰과만 거래하겠다, 경찰에는 자료를 줄 수 없다.”라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때 주식과 계좌를 이정필에 제공한 인물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도 있었다. 뉴스타파가 경찰 내부자로부터 입수해 보도한 경찰 내사보고서에 따르면, 김건희는 2009년 5월경 권오수 회장이 대주주였던 두창섬유 소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 원어치를 장외 인수하는 등 권오수 회장과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다. 이에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錢主)’ 역할, 혹은 공범 수준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윤석열이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고, 이어서 2019년 6월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서 해당 의혹은 정치권에서 간헐적으로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러다 2020년 2월 뉴스타파가 경찰의 내사보고서를 입수, 김건희가 경찰 내사 대상자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가 본격화되었다. 2020년 4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황희석·조대진 비례대표 후보 등은 김건희가 2010~2011년 권오수 회장에게 현금과 주식을 맡기는 방식으로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애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가 2020년 9월 형사6부에 재배당했는데, 고소장 접수로부터 5개월여 지난 2020년 9월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당시 총장에게 윤석열 총장의 가족 및 측근과 관련된 의혹 사건들과 함께 이 사건도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휘감독을 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 후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로 다시 재배당되었다.

이후에도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가, 2021년 3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한 후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검찰은 2021년 7월 금감원을 압수수색해 도이치모터스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10월에는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뒤이어 2021년 11월에는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잠적했던 이정필을 검거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12월에는 권오수 회장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오수 회장에게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동안 투자자문사·증권사 임직원과 공모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1,661만 주(약 654억 원 상당)를 직접 매수하거나 투자회사 등에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 상승,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가 적용되었다. 권오수 회장과 이정필을 포함하여 총 5명이 구속 기소되고 4명이 불구속 기소, 5명이 약식기소되었다.

그러나 다른 관련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와중에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김건희는 2010년 2월경 권오수의 소개에 따라 만난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 원이 든 계좌를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검찰은 1년여가 넘는 수사기간동안 김건희에 대해 소환조사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총장 출신이자 유력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의 부인에 대해 검찰이 눈치보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21년 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런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윤석열은 김건희가 과거 이정필에게 계좌를 맡겼다가 오히려 크게 손해를 봐서 다시 회수했고, 2010년 5월 이후로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조작과는 관계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2009년 1월 초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김건희의 신한금융투자 계좌 주식거래 내역을 공개했다. 하지만, 당시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은 주가조작이 공격적으로 이뤄진 시점은 2011년~2012년도라며 이때 계좌를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다 2022년 2월, KBS가 권오수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분석해 2010년 5월 이후에도 김건희 명의의 주식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활발히 거래되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거래는 신한증권 계좌가 아니라 김건희 명의의 DS·대신·미래에셋 증권사 등의 계좌를 통해 이뤄졌고, 그 횟수도 최소 40여 차례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2010년 5월 이후 거래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측의 기존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그런데 이는 모두 도이치모터스 사건 피고인들이 ‘통정 거래 수법’ 등으로 저지른 주가 조작 범죄 사실들로 검찰이 파악한 내역이었다. 이는 검찰이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충분히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수사 결론을 내리지 않았음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었다. 그러나 김건희의 혐의 유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장기간 방치하다가 2024년 7월, 서울중앙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백 수수 혐의에 대한 김건희 대면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대면조사 장소를 김건희가 직접 정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 검사들이 김건희측의 요구에 따라 핸드폰을 제출한 채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총장에게 사전에 보고되지도 않아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수사가 윤석열 탄핵 촉구 청원 관련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여론을 무마하고 무혐의 처분을 위한 수순으로 김건희 대면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그리고 검찰은 2024년 10월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고, 이에 대해 고소인 측에서 항고하였다.

그 후 2025년 4월 대법원은 권오수 전 회장과 공범 9명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를 확정했으며, 김건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도 유죄가 확정되면서 김건희의 연루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았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4월 4일 파면됐다.

서울고등검찰청은 2025년 4월 25일 김건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차순길)는 평검사 2명을 파견받아 기록을 검토하고 5월 서울남부지검이 압수한 김건희 휴대전화에 대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을 통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김건희가 담당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시세조종을 인지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대화가 다수 수록된 것으로 알려지며 서울중앙지검의 부실수사, 봐주기수사 의혹은 더욱 커졌다.

한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7월 2일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한편, 2024년 12월 5일 국회는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창수 검사장(2024헌나3), 조상원 4차장검사(2024헌나4),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2024헌나5)를 탄핵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기각했다. 이창수, 조상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고 대선이 열리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선 당일 수리되었다.

경찰과 검찰은 뉴스타파 측에 주가조작사건 내사 보고서를 전달한 제보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송치·기소했다.²²⁴ 뉴스타파의 보도 직후 내사 보고서의 유출 경위를 수사한 경찰은 현직 경찰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022년 2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2022년 4월 법원은 해당 제보와 보도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지고 관련자들이 구속기소되는 등 공익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며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으나, 2022년 12월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부는 이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김건희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정필 등 9명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²²⁴ 수사지휘라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지검장 심우정 - 차장 성상헌 - 부장 최형원 - 주임 권근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20.04~'20.09)]

지검장 이성윤 - 차장 이정현(~'20.08) - 부장 정진웅(~'20.09)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재배당 ('20.09~'20.11)]

지검장 이성윤 - 차장 김욱준('20.09~'20.11) - 부장(주임) 박순배('20.09~'20.1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20.11 재배당 이후)]

- 지검장 이성윤(~'21.06), 이정수('21.06~), 송경호('22.05~), 이창수²²⁵('24.05~)

- 4차장 형진휘(~'21.06), 김태훈('21.07~), 고희곤('22.05~), 조상원²²⁶('24.06~)

- 부장(주임) 정용환('20.11~), 조주연('21.07~), 김영철('22.07~), 최재훈²²⁷('23.09~)

[서울고검 형사부('25.04 재수사)]

고검장 박세현 - 차장 박현철 - 부장 차순길 - 주임 비공개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13-01-01	경찰 내사 착수했지만 중단됨(시점 불명)
2020-02-17	뉴스타파, 경찰 내사보고서를 토대로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
2020-04-07	최강욱·황희석·조대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검찰 고발
2020-08-10	경찰(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이 2020년 6월경 현직 경찰관A씨를 뉴스타파에 내사보고서 유출해 공무상 비밀누설한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한 것으로 알려짐
2020-09-08	검찰, 사건을 기존 형사1부에서 형사6부로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짐
2020-09-25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황희석·조대진 고발인조사
2020-10-19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지 말고 결과만을 보고받을 것을 지시함
2020-11-2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
2021-03-04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2021-07-14	검찰이 6월에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해 권오수 회장 관련 자료 가져간 것으로 알려짐
2021-10-08	검찰, 도이치모터스 본사 압수수색
2021-11-12	검찰, 권오수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검거. 법원, 이모씨 구속영장 발부
2021-11-17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권오수 구속영장 발부
2021-11-30	검찰, 이정필 구속기소. 공소장에 김건희 언급 없음
2021-12-03	검찰, 권오수 구속기소. 공소장에 김건희 언급 없음
2021-12-28	검찰이 김건희 무혐의 처분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됨. 최종 처분 전 김건희 조사 진행할 방침이지만, 김건희 측은 검찰에게 통보받은바 없다는 반응.
2022-01-10	검찰이 김건희에게 소환조사 출석을 통보하고 일정 협의중이라고 보도됨
2022-01-25	민주당,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보유주식 22억 전량 매도했다고 주장

²²⁵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박승환 1차장 직무대리. 2025년 6월 3일 사직.

²²⁶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이성식 3차장 직무대리. 2025년 6월 3일 사직.

²²⁷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 직무대리

날짜	수사경과
2022-02-09	KBS 보도로 검찰 공소장 분석 결과 주가조작이 이뤄진 시기에 김건희 명의의 계좌로 실제 주식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 보도됨
2022-02-14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최형원 부장검사), 경찰관 A씨 직무상 기밀 유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3-02-1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권오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선고, 전주 손씨 무죄 선고
2023-04-27	국회,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2023-12-28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2024-01-05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2024-02-29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재의 부결
2024-07-20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백 수수 혐의로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 대통령경호처 건물에서 비공개로 이뤄지면서 비공개 출장조사 형태로 진행되었고, 검찰총장에게 사전보고 없이 조사 진행 중에 보고가 진행됨.
2024-09-12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권오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 전주 손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2024-10-17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최재훈 부장검사), 김건희와 최은순 불기소 처분 - 김건희 : 계좌 2개는 전문가에게 맡겨 주가조작 활용 여부를 알지 못했고, 직접 운용한 계좌 1개는 직접 매매 결정을 했음. 다만, 2010년 10월 28일, 11월 1일 진행된 통정매매 건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한 것으로 추정됨. 김건희가 주가조작 총책의 요청에 따라 매매했다는 사정이나 정황이 없음. 드러난 정황만으로 김건희가 주가조작을 알고,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가조작 관련자들도 관련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으며, 김건희가 주식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상의 정황으로 불기소 처분함. - 최은순 :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신뢰해 투자하며 계좌나 자금을 제공했을 뿐, 명확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함.
2024-10-31	최강욱·황희석,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 불기소처분 항고
2024-11-1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2025-04-03	대법원 3부, 권오수, 전주 손씨 등 유죄 선고한 원심 확정
2025-04-25	서울고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재기수사 결정
2025-05-21	서울고검,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김건희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 확보
2025-06-05	국회, '김건희 특검법' 가결(재석 198, 찬성 194, 반대 3, 기권 1)
2025-06-12	이재명 대통령,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특별검사로 임명
2025-06-17	서울고검, 김건희 자신의 계좌를 담당했던 증권사 직원과 3년간 통화한 내용 녹음 파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2025-07-02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공식 수사 개시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권오수 · 이정필 등 9명	2023-02-1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조병구 부장판사, 2021고합982) 선고 - 권오수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 이종호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 이정필 : 징역 2년, 벌금 5,000만 원. 도이치모터스 관련 면소 및 무죄 - 추가조작에 가담한 4명 :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 전주 손모씨 등전주 역할 2명 : 무죄 - 쌍방 항소
	2024-09-12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2023노649) 선고 - 권오수 :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벌금 4억 원, 사회봉사 200시간 - 이종호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 사회봉사 160시간 - 이정필 : 징역 2년, 벌금 5,000만 원 - 전주 손모씨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추가조작에 가담한 5명 :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 쌍방 상고
	2025-04-04	3심(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 2024도15788) 원심 확정 판결

20.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202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을 중심으로 한 처가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인허가 및 개발부담금 산정 특혜와 전현직 양평군청 공무원 등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재판중
담당 부서	▪ 경기 양평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
주요 처분	▪ 최은순·김건희·윤석열·김선교 불송치 등 무혐의 처분 ▪ 김진우 등 사업시행자 5명 불구속 기소, 안철영 등 양평군청 공무원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2021년 3월 언론사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과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해에 윤석열이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서 최은순에게 제기된 농지법 위반 등의 의혹,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이에스아이엔디와 양평군청의 절차상 불법성 등 특혜와 유착 의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배우자가 특혜의 배후라는 의혹으로 확대되었다.

최은순의 아들 김진우가 대표이사로 있는 이에스아이엔디는 최은순과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가족회사로, 최은순이 이에스아이엔디의 대표이사를 역임할 당시인 2006년 12월, 이에스아이엔디는 공흥리 일대 임야를, 같은 달 최은순은 자신의 명의로 공흥리 일대 농지를 매입했다. 2011년 이에스에이엔디, 최은순은 추가로 매입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확신 없이 임야와 농지를 추가 매입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2012년 4월 30일 양평군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2012년 11월 22일에는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스아이엔디는 2014년까지 공흥지구 아파트 건설을 완료해야 했지만 2016년 7월 아파트를 분양했다. 통상적으로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인허가 취소와 같은 행정조치를 하는데도, 행정조치 없이 무려 1년 8개월가량의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었다는 점 등이 드러나면서 양평군청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양평군청이 이에스아이엔디에 부과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이 0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양평군청에서 2011년에서 2021년까지 진행된 아파트 개발 사업 중 이에스아이엔디에만 유일하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었다.

2016년 시행기간 연장 공시 및 개발부담금 경감을 비롯한 인허가권을 가진 양평군수와, 이를 집행한 양평군청 관계자가 유착 의혹의 배경으로 지목되었다. 2012년 당시 공흥지구 개발을 결정했던 양평군수는 제20대 대선 시기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이었다. 김선교는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양평군수를 역임했고, 윤석열 후보는 2013년 4월 여주지청장으로 부임했으며 부임 시기에 김건희는 이에스아이엔디 사내이사를 맡고 있었다.

경기도의 양평군청 감사 및 수사의뢰, 최은순, 이에스아이엔디, 양평군청 관계자 등에 대한 고발과 고소가 이어졌다. 경기도는 최은순이 양평군의 개발부담금 경감을 목적으로 세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공무원을 기망했고, 양평군 토지정보과 공무원들이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부실하게 검증해 과소 부과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단체들은 윤석열, 김건희, 김선교, 최은순 등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양평경찰서는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후 양평군청 및 관계 공무원의 주거지 압수수색,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 등 수사를 이어갔다. 공흥지구 고발 등의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 수사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아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수사 공정성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2023년 5월, 최은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 7년 도과 이유 및 양평 공흥지구 비리에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하고,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경찰은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산정에 관여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개발부담금 의혹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에스아이엔디 대표 김진우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민사 법원이 최은순이 공흥지구 사업을 주도했고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엔디를 지배했다는 기초 사실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최은순을 한 차례의 서면조사만으로 불송치 결정해 비판이 제기되었다. 양평군의 공흥지구를 공공하수처리 구역 지정 과정에 대한 의혹, 이에스아이엔디가 부담해야 할 20억 원가량의 하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양평군이 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한 의혹 등도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도 논란이 됐다. 경찰은 2022년 김진우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이 김진우의 휴대전화를 제외하고 네 번째로 영장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2023년 6월, 검찰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하고, 이와 같은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가장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안철영 도시건설국장 등 양평군 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3년 7월 양평군의 개발부담금 경감을 목적으로 공사비 증빙 서류에 위조자료를 포함해 제출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진우 등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허위로 작성한 개발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 개발비용 부풀리기가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 등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비교적 형량이 적은 죄목으로 축소 기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23년 5월,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김선교 등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및 각하 처분 등으로 인해 시민단체는 공수처에 이들을 재고발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다시 사건을 다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한편, 6월 5일 국회는 이른바 내란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김건희특검법 수사대상에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포함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인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되었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7월 2일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건희, 윤석열의 배우자
최은순, 윤석열의 장모
김진우, 윤석열의 처남·이에스아이엔디 대표이사
김선교 전 양평군수,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박모 양평군청 공무원
이모 양평군청 공무원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특혜 의혹

[경기 양평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서장 총경 이은애 -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과장 경감 서종석 - 팀장 경위 신명복(~'21.12)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특혜 및 뇌물, 직권남용 등 의혹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 청장 치안정감 김원준(~'21.12), 최승렬(~'22.06), 박지영(~'22.12), 우종수(~'23.02), 홍기현(~'24.06), 김봉식(~'24.08), 김준영('24.08~)
- 수사부장 경무관 송병일(~'21.12), 김광식(~'22.06), 노규호(~'22.12), 김철문(~'24.02), 김종민(~'25.03), 이충섭('25.03~)
- 수사대장 총경 고석길(~'21.12), 정명진(~'23.02), 반진석(~'24.02), 이정철(~'25.03), 오지용('25.03~)
- 경정 이승명(~'21.12), 신동현(~'25.03), 조주현('25.03~)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사문서 위조 등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형사부]

지청장 이형관(~'23.09), 공봉숙('23.09~) - 부장 이정화(~'23.09), 정대희('23.09~) - 주임 이정화(~'23.09), 주임 비공개('23.09~)

공흥지구 특혜 의혹 재고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 청장 치안정감 홍기현(~'24.06), 김봉식(~'24.08), 김준영('24.08~)
- 광역수사단장 경무관 김철문(~'24.02), 김종민(~'25.03), 이충섭('25.03~)
- 수사대장 총경 반진석(~'24.02), 이정철(~'25.03)
- 경정 신동현(~'25.03), 조주현('25.03~)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1-10-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 확인하겠다고 답변
2021-10-12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공흥지구 인허가 관련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당시 양평군수) 공수처 고발
2021-10-15	양평경찰서, 내사 중 양평군청의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 임의제출 확보
2021-11-16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공흥지구 인허가 관련 양평군청 담당자 경찰 고발. 경찰 정식 수사 전환
2021-11-29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관련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윤석열 및 김선교, 김건희 및 최은순 공수처 추가 고발
2021-11-30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관련 최은순, 윤석열, 김선교 등 추가 고발
2021-12-08	양평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 이송
2021-12-09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양평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 받았다고 공개
2021-12-09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공흥지구 인허가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건희, 최은순 추가 고발
2021-12-14	경기도, 12/14~12/17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양평군청 특별감사
2021-12-19	경찰(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양평 공흥지구 관련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자료 확보 언론 보도
2021-12-21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특별감사 결과 - 개발부담금 축소 의도로 세부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혐의로 최은순 - 개발부담금 부과 부실 검증 의혹으로 양평군청 토지정보과 공무원 및 -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기한 변경 특혜 의혹으로 양평군청 도시과 공무원 4명 경찰 수사 의뢰
2021-12-30	경찰, 양평군청 관련 부서 8곳 및 관련 공무원 8명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2-01-27	민생경제연구소,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최은순, 김건희 고소
2022-02-11	경찰, 민생경제연구소 고발인 조사
2022-03-00	공수처, 윤석열, 김선교, 김건희, 최은순 등에 대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고발 건 경찰 이첩 언론 보도(날짜미상)
2022-03-23	경찰,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 고발인 조사
2022-04-01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수사대장 총경 정명진), 이에스아이엔디

날짜	수사경과
	대표이사 김진우의 회사, 차량, 신체,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강선주 부장검사) 소명 부족 기각
2022-04-14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수사대장 총경 정명진), 김진우 및 이에스아이엔디 직원 4명의 회사, 차량, 신체,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2차 신청.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강선주 부장검사) 소명 부족 기각
2022-10-04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수사대장 총경 정명진), 김진우의 휴대전화 등 4명의 회사, 차량, 신체,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3차 신청.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 김진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필요성 보완 지시
2022-10-12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수사대장 총경 정명진), 김진우의 휴대전화 제외 4명의 회사, 차량,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4차 신청.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 청구 및 법원 발부
2022-10-12	경찰, 최은순, 김선교 각 1차례 서면 조사 언론 보도
2022-11-14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수사대장 총경 정명진), 김진우 제외 이에스아이엔디 직원 3명 등의 주거지, 회사, 차량,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 청구
2022-11-17	법원, 김진우 제외 이에스아이엔디 직원 3명 등의 주거지, 회사, 차량,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2023-01-16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 공흥지구 관련 상당히 많은 압수수색과 참고인 및 관련자 조사 이뤄졌다고 발언
2023-03-08	경찰, 김선교 서면조사 언론 보도
2023-03-11	경찰, 최은순 서면조사 언론 보도
2023-05-12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수사대장 총경 반진석),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의혹, 사업기간 소급적용 의혹 관련 등 처분 - 개발 부담금 의혹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에스아이엔디 김진우 대표이사 등 시행사 관계자 5명 검찰 송치, 개발부담금 산정 관여 양평군 공무원들 무혐의 처분 - 이에스아이엔디의 공흥지구 사업기간 소급적용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안철영 도시개발국장 등 3명 검찰 송치 : 김건희 여사 일가와 양평군과의 유착은 없다고 보고 최은순과 당시 양평군수 김선교 의원 검찰 불송치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혐의 각하 조치 - 최은순의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7년 도과 이유로 검찰 불송치
2023-05-26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건희, 최은순, 김선교를 뇌물 등 혐의로 공수처 재고발
2023-06-12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안철영 등 양평군청 도시과 공무원 3명 불구속 기소
2023-07-10	민생경제연구소, 뇌물 및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 김선교 등에 대한 경찰 불송치 처분 이의신청서 제출
2023-07-28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이에스아이엔디 대표이사 김진우 등 사업시행사 5명 불구속 기소
2023-11-11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대희 부장검사)가 공흥지구 관련 총 4회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20여 곳 압수수색 집행했다는 언론 보도
2023-12-00	공수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김건희, 최은순, 김선교 뇌물 등 혐의 고발 건 검찰 이첩(날짜미상)

날짜	수사경과
2023-12-22	대검, 공수처가 이첩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김건희, 최은순, 김선교 뇌물 등 혐의 고발 건 수원지검 여주지청 배당
2024-01-26	수원지검 여주지청,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윤석열, 김선교, 김건희, 최은순 뇌물 등 혐의 고발 건 경기남부경찰청 이송
2024-05-00	경찰(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사건 재수사(날짜미상)
2024-06-18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 경기남부경찰청 출석 및 고발인 조사
2024-07-15	검찰, 양평군 공무원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구형
2025-05-07	경찰(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최은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 이때, 최씨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경기 양평에 농지를 취득한 후 타인에게 임대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짐
2025-06-10	국회, '김건희 특검법' 가결(재석 198, 찬성 194, 반대 3, 기권1)
2025-06-12	이재명 대통령,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특별검사로 임명
2025-07-02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공식 수사 개시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 등 5명	2025-06-00	1심(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진민희 판사) 진행중
안철영 등 양평군청 공무원 3명	2024-08-14	1심(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 선고 - 각 무죄 - 검찰 항소
	2025-06-00	2심 진행중

21. 윤석열 대통령 부부 명품백 등 금품수수 사건 수사(2023)

김건희가 두 차례에 걸쳐 180여만 원의 향수와 화장품,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총 48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수사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담당 부서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 공수처 수사1부 → 수사2부
주요 처분	▪ 윤석열·김건희·최재영 불기소

1. 사건개요

2023년 11월 26일 인터넷언론사 서울의소리가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디올 백)을 수수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2022년 9월 촬영된 것으로, 영상에는 김건희가 사치품 가방을 건네는 상대방에게 ‘왜 자꾸 이런 걸 사오냐’는 취지로 발언하는 장면, 김건희가 선물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탁자 위에 올려둔 장면과 함께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중략)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을 생각을 먼저 하게끔 돼 있어요.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중략) 윤석열정부가 잘 해내서 통일돼서 목사님도 크게 저랑 같이 할 일 하시고’라고 발언하는 장면이 포함되었다.

해당 영상의 제보자인 재미교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는 이전에도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180만 원 상당의 고가 향수와 화장품을 전달했는데, 당시 김건희가 금융위원 임명 관련 인사 청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국정 개입을 의심하게 되어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최재영이 김건희에게 전달한 명품 가방을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명수는 제20대 대선 시기 김건희와의 이른바 ‘7시간 통화’를 녹음해 공개했던 인물로, 김건희와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적 인연을 통해 사치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대통령실이 침묵하면서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가중됐다.

2024년 1월 19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재영이 김건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불법 촬영을 했고,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된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어 관리, 보관된다고 하며 해당 명품 가방을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의 대통령 배우자 신분, 대통령직 직무 수행과의 관계,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 여부 등과 함께 대통령실의 해당 명품 가방의 국가 귀속 시점, 보관 장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었다.

2024년 2월 7일 KBS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 영상을 방송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대담에서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몰카로 촬영했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 공개한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며, 매정하지 못한 것이 문제고 아쉽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의 사치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아쉽다로 표현했을 뿐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 대담 영상에서 기자가 ‘자그마한 파우치’로 표현해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의 가치를 축소하려 했다는 점 등에서 비판이 일었다.

2023년 12월 19일 참여연대는 김건희가 고가의 향수 및 화장품, 명품 가방 등 모두 479만 8천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에 대한 지체 없는 반환 또는 거부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최재영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에 신고했다. 2023년 12월 6일 서울의소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에, 12월 19일 한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및 대통령경호법 등 위반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2024년 1월 28일 한 단체는 불법촬영과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검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재영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4년 4월 경찰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재영,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및 기자를 공범으로 입건했다는 점이 알려졌다.²²⁸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참여연대의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한 조사 기간을 거듭 연장하다가, 2024년 6월 10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종결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이 종결 결정에 반발해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문 및 회의록, 회의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고 해당 사건을 권익위에 재신고했다. 이와 더불어 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성윤, 김태규, 박종민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2024년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건과 관련한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다. 그러나 이후 7월에서야 김건희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이 보도되었는데, 김건희 및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기는커녕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건물에서 김건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 조사는 검찰총장도 모르게 이루어진 ‘비공개 출장 조사’였다는 것이 알려져 특혜 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칙을 어긴 일’이라며 사과했다.

2024년 8월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최재영이 김건희에게 제공한 명품과 청탁 사안이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윤석열의 신고 의무도 없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담은 수사결과 보고서를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²²⁸ 최재영의 주거침입,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의 수사지휘라인은 다음과 같음.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1과 수사10팀 : 서장 총경 지지환 - 수사과장 경정 육승민 - 이하 비공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5년 5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사항’,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들어 서장 및 수사과장 이름만을 부분공개함. / 최재영, 서울의소리 등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사건의 수사지휘라인은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서울 서초경찰서)되었고, 이의신청 후 담당부서만 공개하여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강력팀(서장 총경 이충섭)으로 확인됨.

회부했다. 9월 24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권고’를 결정했다. 그러나 10월 2일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창수)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윤석열, 김건희, 최재영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의 소리는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2024년 12월 5일 국회는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창수 검사장(2024헌나3), 조상원 4차장검사(2024헌나4),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2024헌나5)을 탄핵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기각했다. 이창수, 조상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고 대선이 열리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선 당일 수리되었다.

한편 6월 5일 국회는 이른바 내란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김건희특검법에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포함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인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되었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7월 2일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의 배우자

최재영, 재미교포 통일운동가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사건1. 윤석열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등 수사 및 최재영 주거침입 등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송경호(~'24.05), 이창수²²⁹(~'24.05) - 차장 김창진(~'24.05), 박승환('24.06~) - 부장 김승호 - 주임 비공개

사건2. 윤석열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등 수사

[공수처 수사1부 → 수사2부]

처장 김진욱(~'24.01)²³⁰ - 차장 여운국(~'24.01)²³¹ - 부장 김선규(~'24.05) - 주임 공기광
처장 오동운('24.05~) - 차장 이재승('24.07~) - 부장 송창진(~'24.11), 김수환('25.05~) - 주임 김상천(~'24.10)²³²

²²⁹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박승환 1차장 직무대리. 2025년 6월 3일 사직.

²³⁰ 임기만료(24.1.21.)로 여운국(24.1.22.~28.), 김선규(24.1.29.~3.4.), 송창진(24.3.4.~20.), 김선규(24.3.20.~5.29.) 직무대리

²³¹ 임기만료(24.1.28.)로 송창진(24.1.29.~3.4.), 박석일(24.3.4.~20.), 송창진(24.3.20.~7.30.) 직무대리

²³² 공수처는 2025년 5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부분공개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참여연대가 사건 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그러나 공수처는 2024년 4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일부공개를 결정하고 답변한 바 있음. 위의 수사지휘라인은 참여연대의 2024년 정보공개청구와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해 작성함.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3-11-26	인터넷언론사 서울의소리, 재미교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13일 촬영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디올 백’ 전달 영상 공개
2023-12-06	서울의소리, 검찰에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고발
2023-12-15	대검, 김건희 고발 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언론 보도
2023-12-19	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최재영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2023-12-19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 공수처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및 대통령경호법 등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고발
2024-01-28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최재영 검찰 고발
2024-01-31	대검, 최재영 고발 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공수처, 수사1부 배당 언론 보도
2024-01-00	시민단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재영,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기자 경찰 고발 후 서초경찰서 배당. 서초경찰서 고발인 조사 언론 보도(날짜 미상)
2024-02-28	시민단체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경찰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최재영, 서울의소리 및 소속 기자 고발
2024-03-07	경찰, 주거침입 등 혐의로 최재영 피의자 출석 통보. 경찰, 최재영의 일정 연기 요청 수락 후 조사 연기 통보
2024-03-26	국민권익위원회, 참여연대가 2023년 12월 19일 신고한 사건에 청탁금지법에는 사건 처리 연장 근거 조항이 없음에도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과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처리기간 연장 통지
2024-04-25	참여연대, 국민권익위원회에 김건희 고발 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것을 촉구
2024-05-01	국민권익위원회, 참여연대가 2023년 12월 19일 신고한 사건에 한 차례 연장한 처리기한 4월 30일을 또 넘겨 여전히 “조사 중”이라는 입장 전달함. 이미 법적 처리기한 60일을 넘기고 두 차례 연장한 것으로 공식적 통지도 아니었으며 실무자 전화로 연장처리 통지
2024-05-02	이원석 검찰총장,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2024-05-05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전담수사팀 구성(형사1부 검사 1명,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 검사 1명,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1명, 범죄수익환수부 검사1명) 언론 보도
2024-05-07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건희 고발 건에 윤석열 대통령 법 위반 여부 확인 검토. 수사팀 내 윤 대통령이 신고받는 기관장이라 서면 신고 여부 따지는 것 필요 없다는 의견과 법 조항대로 서면 신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 대립 언론 보도
2024-05-07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김 여사가 명품 가방뿐만 아니라 명품 화장품과 양주를 수수하고 대통령실이 불법 보관한 사실 등 추가 고발 예정” 언론 보도
2024-05-08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던 서초동 아파트 주민 권성희 변호사, 2022년 연말 분리수거장에서 ‘최재영 목사’가 저자인 도서 4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부에게 기증한 도서 여러 권 습득했다고 언론에 제보 - 최재영 목사, 권성희 변호사가 습득한 도서가 2022년 7월 23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보안검색대에 맡겼던 40만 원대 양주 1병과 자신의 저서 8권 중 일부라고 확인
2024-05-09	검찰, 최재영 고발 관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고발인 조사. 두 시간여 만에 조사 종료

날짜	수사경과
2024-05-13	검찰,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재영 피의자 소환 조사. 첫 검찰 조사로 12시간 여 조사 진행
2024-05-13	법무부, 김건희 고발 건 수사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인사 교체 발표.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올백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엄정 수사를 지시한지(5/2) 11일만에 전격 단행. 이로 약 2년 간 수사 총괄한 송경호(지검장→부산고검장), 김창진(1차장검사→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이동함. 대통령실은 이번 검찰 인사는 민정수석실 신설과 특별한 관련 없다는 입장 언론 보도
2024-05-20	검찰, 김건희 고발 관련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 고발인 조사. 백은종 대표 조사 전 “최 목사가 2022년 9월 촬영한 면담 영상과 (최 목사의) 청탁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힘
2024-05-20	서울의소리, 검찰에 최재영으로부터 고가 화장품, 양주 등을 수수하고, 금융위원 인사 청탁 등에 관여하는 등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건희 추가 고발
2024-05-21	검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던 서초동 아파트 주민 권성희 변호사 참고인 소환 조사 -권성희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등 검찰 인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습득한 최재영 목사 저서 제출 거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직접 제출 요구
2024-05-23	검찰, 최재영이 인사 청탁 외에도 여러 차례 청탁을 했고, 김건희가 이에 대통령실 직원 등을 통해 청탁 들어주려 했다는 의혹 제기해 최재영 출국정지 및 추가 소환조사 언론 보도
2024-05-26	검찰, 김건희 고발 건 보관기간 경과로 가방이 건네진 김건희 사무실 방문객 명단과 관련 CCTV 영상 확보에 실패했다는 언론 보도
2024-05-30	검찰, 김건희에게 전달한 고가의 가방의 원구매자이자 최재영이 김건희에게 전달한 과정 등을 보도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피의자 소환 조사. 9시간 여 조사 진행
2024-05-31	검찰, 최재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등 혐의로 2차 조사
2024-06-03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고발 건 말은 부장검사에게 이례적으로 직접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 같은 날 이 총장은 김건희 소환 필요성을 묻는 언론 질문에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발언
2024-06-10	국민권익위원회, 참여연대가 2023년 12월 19일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와 관련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신고한 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라며 종결 결정
2024-06-12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출입기자단과 오찬에서 종결 처리를 두고 “(설사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디올백을 선물한 최재영 씨는 미국 국적을 갖고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
2024-06-13	참여연대,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6월 10일 종결처리 결정한 것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요청함
2024-06-13	경찰(서울 영등포경찰서),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최재영 사건 말아 소환조사. 6시간 여 걸쳐 조사 진행
2024-06-14	경찰(서울 영등포경찰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소환조사
2024-06-17	시민단체 사세행,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형법상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 고발
2024-06-19	참여연대, 사건 종결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신청 제기
2024-06-19	검찰, 김건희 고발 건으로 김건희 측근인 조모 대통령실 행정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검찰이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측근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

날짜	수사경과
2024-06-19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건희 여사 공수처에 고발
2024-06-25	공수처, 조국혁신당의 고발 사건을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힘.
2024-07-01	대통령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디올백이 대통령실 어디에 보관돼 있느냐는 질의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포장 그대로 청사 내 보관 중”이라고 주장. 해당 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은 “금년 말까지 판단 할 것”이라는 부연 설명
2024-07-02	검찰, 김건희 고발 건 관련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의 배우자 제니퍼 안씨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최재영이 김 전 의원의 국정자문의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한 데 있어, 김건희에게 해당 청탁이 들어간 경위 등을 알아보겠다는 언론 보도
2024-07-03	검찰, 김건희 고발 건으로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실에 합류해 김건희를 보좌한 측근 중 한 명인 행정관 유모씨 조사. 이때 김건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유모씨 본인이 깜빡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사실이 이후 언론 보도(7/15)로 알려짐
2024-07-04	참여연대, 최초 신고 이후 최재영 목사가 추가 폭로한 금품·청탁 내용 포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면 재조사 촉구하며 재신고
2024-07-04	경찰(서울 서초경찰서), 스토킹 혐의 고발 관련해 최재영 피고발인 신분으로 첫 번째 소환 조사. 9시간 여 동안 조사 진행
2024-07-07	검찰, 김건희 측에게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최재영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분석 중이라는 언론 보도
2024-07-08	김건희(법률 대리인 최지우 변호사), “검찰과 소환 조율 착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 발표. 검찰이 해당 사건 수사 착수한 이후 김건희 측이 공개적으로 처음 밝힌 입장. 또한 “현직 영부인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소환은 유례가 없다”며 부당하다고 주장
2024-07-09	국민권익위원회, 김건희 고발 건 관련 종결 결정한 의결서 전문 공개. 2008년 권익위 출범 후 의결서 공개는 첫 사례
2024-07-10	국민권익위원회,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 건에 결정문 공개
2024-07-16	검찰, 김건희 측에 디올백 제출 요청하는 공문 발송한 사실 언론 보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아니라 김건희 측과 조율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명품백을 받기로 결론 낸 데 따른 조치
2024-07-20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백 수수 혐의로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 대통령경호처 건물에서 비공개로 이뤄지면서 비공개 출장조사 형태로 진행되었고, 검찰총장에게 사전보고 없이 조사 진행 중에 보고가 진행됨.
2024-07-26	대통령실, 검찰에 ‘디올 백’ 임의 제출.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디올백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것으로, 검찰은 김건희가 최재영에게 받은 것과 동일한 가방인지, 사용 흔적 여부 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힘
2024-08-01	백은종 대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2024-08-13	검찰, 김건희 여사 보좌하는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 참고인 소환 조사. 지난 6월 19일 조사에 이은 두 번째 조사로, 앞서 비공개 대면조사한 김건희의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치
2024-08-14	검찰(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 없이 절차 종료 결정.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상 개인 고발인은 소집 신청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짐.
2024-08-19	서울의소리, 김건희 고발 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 자체를 종료함. 요청이 무산된 이유로 소집요청자인

날짜	수사경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개인 고발인이라 수사심의위 신청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
2024-08-20	최재영, 서울의소리가 검찰 수사심의위 요청했으나 무산된 것에 직접 신청권자(피의자)인 본인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하겠다고 밝힘
2024-08-22	서울중앙지검(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 대검찰청에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수사 결과 보고한 것으로 알려짐
2024-08-22	검찰(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김건희 고발 건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
2024-08-23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직권 상정
2024-08-23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2024-08-28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김건희 측에 출석 안내문 전달 및 수사심의위원 15명 선정(비공개). 안건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기소 여부(서울의소리 측 고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따른 기소 여부(이원석 검찰총장 추가)로 두 안 건 모두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관건임
2024-09-02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 ▲청탁금지법위반·변호사법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로, 김건희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혐의 모두를 살펴보겠다는 취지
2024-09-05	최재영, 9월 6일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 회부로 열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 및 의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촉구함. 최재영은 “김 여사 측이 동일성 검증을 위해 검찰에 제출한 디올백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
2024-09-06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원석 직권),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사건을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약 5시간 현안위원회 논의 끝에 불기소 처분 권고. 오후 7시경 입장문을 내고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힘
2024-09-09	검찰, 지난 9월 2일 최재영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 논의. 해당 수사심의위는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 회부 결정에 따라 6일 열린 수사심의위원회가 별도임
2024-09-10	검찰, 최재영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별도 개최 결정
2024-09-10	공수처, 김건희 고발 건 관련 검찰 처분을 지켜본 뒤 같은 내용으로 고발된 사건 처분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힘
2024-09-24	검찰수사심의위원회(최재영 목사 신청),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소제기 권고, 그 외 혐의 불기소 처분 권고.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제외하고 표결에 참여한 위원 15명 중 과반수(8명)가 기소 의견에 표를 던졌고, 7명은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짐
2024-09-25	검찰,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참고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 처리하겠다는 언론 보도
2024-09-26	검찰,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김건희와 최재영 모두 불기소한다’는 사건 수사 결과 보고
2024-10-02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불기소 처분 - 김건희 : 처벌규정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없고, 공무원이 아니므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고,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증거가 없으므로 공범으로 처분할 수 없음. 김건희가 가방을 받은 사실과 대통령 및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음.

날짜	수사경과
	- 윤석열 : 김건희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 최재영 :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2024-10-03	서울의소리, 검찰 불기소 결정에 항고 및 디올백 반환 소송 진행하겠다는 입장 밝힘
2024-10-04	서울의소리,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 무혐의 관련 항고
2024-10-07	백은종 대표,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항고. 서울고검 형사부 배당
2024-10-29	공수처(수사2부 송창진 부장검사), 검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일부 넘겨받아 사실관계·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됨.
2025-04-25	검찰(서울고검), 서울의소리 항고 기각
2025-05-25	서울의소리,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 무혐의 관련 재항고
2025-06-10	국회, '김건희 특검법' 가결(재석 198, 찬성 194, 반대 3, 기권1)
2025-06-12	이재명 대통령,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특별검사로 임명
2025-07-02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공식 수사 개시

5. 재판 경과 및 결과

해당 없음

22.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의 공천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수사(2023)

명태균이 불법여론조사 등을 진행하며 제3의 인물로부터 비용을 대납받거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재판중
담당 부서	▪ 사건1 : 창원지검 형사4부 →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 사건2 :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 사건3 :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 사건4 : 창원지검 형사4부 ▪ 사건5 :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주요 처분	▪ 사건1 : 명태균 · 김영선 구속 기소, 김태열 · 배기동 · 이미영 불구속 기소 ▪ 사건4 : 김영선, 강혜경 등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현재 명태균과 관련한 의혹 수사는 △ 명태균과 김영선의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이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김영선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개입과 대선 당시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 2024년 김영선, 김상민 전 검사 국회의원 선거 공천개입 및 직권남용 의혹, △ 창원산단 국정개입 의혹, △ 명태균과 오세훈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조작 및 대납 의혹이 진행되고 있다. △ 홍준표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의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여론조사 대납 의혹, △ 명태균의 2021년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조은희 후보 여론조사 조작 의혹, △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 의혹, △ 윤석열 부부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 △ 명태균의 대통령실 채용청탁 의혹 등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수사 진행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상당하다.

2024년 9월, 한 언론사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22대 총선)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언론사의 취재로 이른바 ‘칠불사’ 회동 참석자가 김영선 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변호사, 정치 컨설턴트 혹은 브로커라 불리던 명태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울러 명태균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강혜경이 명태균과의 통화 녹음을 공개하면서 ‘칠불사 회동’은 크게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해당 의혹은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조작을 바탕으로 한다.

강혜경은 2022년 경남 창원의회창구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된 김영선의 국회의원실 비서관으로 근무하기 전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 근무했다. 강혜경은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태열은 명목상의 대표일 뿐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소유주가 명태균이라고 주장했다. 명태균의 지시를 받아 여론조사를 수행하거나 조작했다는 것이었다. 반면 명태균은 미래한국연구소에 자문했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소유주 논란, 즉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각종 선거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개입 의혹을 밝히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강혜경의 명태균과의 통화 내용과 언론이 공개한 자료 등을 토대로 볼 때, 명태균은 여론조사를 매개로 정치권과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각종 선거의 공천 과정에 개입하거나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기 때문이다. 명태균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직함으로 참석한 바 있다.

사건1. 명태균·김영선·강혜경 |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이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23년 12월,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명태균과 김영선, 강혜경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근거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을 희망하던 예비후보자들로부터의 금전 거래였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경남 선관위)의 수사의뢰를 받은 창원지검은 검사가 배치되지 않아 실질적인 수사가 어려운 수사과에 배당한 후 명태균을 한 차례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혜경이 창원지검에 명태균 및 김영선과의 통화 녹음 4천여 개의 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나 수사과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9월 언론 보도 후, 창원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4부로 재배당한 후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 2024년 10월 10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창원지검은 명태균과 김영선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내사종결하면서 검찰의 사건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했다.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을 맡았던 강혜경은 명태균의 지시로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기동과 이미영 등 세 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게 제공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방선거에서 배기동과 이미영 등이 낙선되면서 명태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2022년 7월 29일 김영선 당시 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들에게 자신의 선거보전금 중 총 9천여만 원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자신을 미래한국연구소의 명목상 대표라고 주장한 김태열 소장은 명태균의 지시로 예비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이며 경남 선관위와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명태균과 예비후보자들이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을 빌린 것으로 모의해 차용증을 작성했고, 명태균이 차용증을 회수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들에게 받은 돈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반면, 명태균은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김태열에게 예비후보자들을 소개했을 뿐 차용증의 존재는 모르며, 이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예비후보자 배기동과 이미영은 검찰 조사에서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2021년 8월 11일 이후 2022년 1~2월경까지 각 1억 2천만 원을 김영선과 김태열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김태열과의 대질신문에서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김태열에게 빌려주었으나 변제 약정서를 찢어 버렸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기동은 2021년 7월 대구, 9월 김해공항에서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대선캠프 민생안전특별대책본부 활동을 하던 중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예비후보자들이 명태균에게 공천을 부탁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확인했다.

창원지검은 2024년 9월 30일, 김영선과 명태균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명태균의 휴대전화는 이른바 ‘깡통폰’으로 추적할 내용이 없어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폐업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집기 등을 모두 옮긴 뒤에야 뒤늦게 해당 장소를 압수수색해, 명태균이 사용하던 컴퓨터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김태열 및 예비후보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들이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말맞추기용 메모 등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강혜경 그리고 명태균이 각자 통화 녹음이나 윤석열 또는 김건희와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공개하면서 미진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검찰은 2024년 10월 검사 2명과 계좌추적 전문 2명, 11월에 검사 4명을 창원지검 수사팀에 파견해 총 1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명태균을 두 차례 소환조사한 후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2024년 11월 11일, 명태균이 강혜경을 통해 김영선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회에 걸쳐 총 7천6백여만 원의 자금 즉 김영선의 세비 절반을 받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기동, 이미영으로부터 공천 현금 2억 4천만 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김영선은 명태균 덕분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 전략공천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 세비 절반을 명태균에게 분배하고, 보좌관 등의 임명권을 포함해 의정활동 대부분을 명태균에게 넘겨, 사실상 명태균을 국회의원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았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기동과 이미영은 공천을 받기 위해 명태균에게 공천 현금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2024년 11월 15일, 법원은 예비후보자 배기동과 이미영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으나, 명태균과 김영선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월 3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과 김영선을 구속 기소했고, 예비후보자 배기동과 이미영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2. 윤석열 부부 |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개입(김영선)과 대선 당시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 명태균과 김영선을 구속하면서 적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핵심은 명태균과 김영선이 김영선의 세비(국회의원 수당) 절반을 주고받은 이유였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측근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향후 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의 사실 여부, ‘향후 선거에서도’라는 표현에 숨어 있는 이전의 선거,

즉 2022년 경남 창원의회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공천 개입 의혹 여부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않았다.

2024년 9월 5일 최초 보도 이후 강혜경이 명태균과 김영선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김영선의 공천에 김건희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명태균은 강혜경의 주장을 대부분 반박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은 인정하고, 김건희와의 온라인 대화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정치 컨설턴트 혹은 브로커로 불리던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인정하자,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명태균이 재반박하고, 공방이 이어지던 중 2024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과 윤석열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2022년 5월 9일,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은 명태균에게 “(2022년 경남 창원의회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하자 명태균이 감사 인사를 하는 내용이었다. 이들의 대화가 이뤄진 후 김영선은 경남 창원의회창구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되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김영선을 언급한 육성 통화 녹음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21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 후보의 여론조사 81회를 무상으로 제공한 후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영선의 공천을 받았다는 강혜경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 현직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권한 없이 당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이어지자,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니 인정할 수 없고, 누구 공천 주라는 얘기를 해 본 적 없으며,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정진석 비서실장으로 알고 있었고 윤상현 의원인지 몰랐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적도 없고,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24년 11월 12일, 언론은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보낸 500만 원 돈봉투 사진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명태균은 김건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회사 명의 봉투를 기념 촬영했고, 이후 교통비 명목으로, 김건희로부터 받았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건희와 명태균이 대통령 특별열차에서 만난 사실이 있고, 김영선도 동행했다는 강혜경의 주장에 반박하던 김영선도 추후 검찰 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명태균과의 관계를 부정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나 대통령실의 입장과 달리 명태균과 김건희는 대선 이후로도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명태균을 구속한 2024년 11월 15일, 여론조사 업체 PNR 네트워크를 압수수색했다. PNR 네트워크는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윤석열 대선 후보의 여론조사 81건 중 58건을 의뢰받는 등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아 미수금을 지불하겠다’라는 내용의 채무이행각서를 받았다는 곳이다. 2025년 2월 25일, 한 언론사가 11월 13일 작성된 창원지검 수사팀이 ‘여론조사업체 PNR 압수수색 필요성’ 수사보고서를 작성했고, 평검사 8명의 이름과 직인이 찍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2025년 1월, 한 언론사가 이 수사보고서를 입수해, 창원지검이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온라인 대화 메시지 등을 확보해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대선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보고했는데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구속 중인 명태균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 2024년 12월 12일 명태균으로부터 핵심 증거라고 여겨진 일명 ‘황금폰’을 포함해 휴대전화 3개와 USB 1개를 제출받았다. 이 중 2022년 대선,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의 시기와 사용 기간이 겹치는 휴대전화가 있어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12월 24일, 명태균이 제출한 자료에서 윤석열과 명태균의 공개된 통화 뒷부분이 밝혀졌다. 2022년 5월 9일 통화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내가 윤상현한테도 (말을) 하고. (중략) 알았어요. 내가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명태균에게 전했다. 앞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인 줄 알았다,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인 줄 몰랐다면 대국민담화를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이었다.

2025년 2월 17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의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결과 조작 의혹 및 여론조사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인사 등 사건 관계인의 거주지가 주로 서울에 있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이 낫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중 일부를 명태균 전담수사팀에 포함해 수사에 나섰다. 2025년 2월, 한 언론사가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2022년 5월 9일에 명태균과 윤석열의 통화 후 명태균과 김건희의 통화 내용이었다. 김건희는 명태균에게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말고 (김영선을) 그냥 밀으라고 했다.”라는 내용이었다. 2022년 경남 창원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또 제시된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부부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의 공천에 개입한 배경에도 이목이 집중되었다. 강혜경은 명태균이 2022년 대선 시기 윤석열을 위해 총 81회의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해당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영선의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혜경은 여론조사 결과를 ‘윤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명태균의 대화 내용을 여럿 공개했는데, 이후 창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명태균 PC 등을 압수해 확보한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실제로 명태균이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해당 논란이 불거진 2024년 9월 이후 자체 조사 결과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등 당시 경선 후보 캠프와 미래한국연구소 간의 여론조사 계약 체결 내용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 또는 미래한국연구소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출받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여론조사 81회를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에 개입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현직 대통령과 당무 권한이 없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직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책임이 매우 크다.

2025년 6월 10일, 김건희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에 명태균에게 지급한 500만 원은 정치자금이나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무관하고, 액수가 과장되었으며,

여론조사 조작 이유도 없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 제출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의 5월 14일 출석 요구와 6월 13일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한 후였다. 6월 13일, 김건희는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은 세 번째로 출석을 요구했다. 6월 27일, 퇴원한 김건희는 측근을 통해 특검팀이 법규에 따라 정당한 소환을 요구하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사건3. 윤석열 부부 |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개입(김영선, 김상민 전 검사) 및 직권남용 의혹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 변호사, 김영선 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명태균이 만난, 이른바 ‘칠불사 회동’은 김영선이 김건희의 공천개입 의혹을 개혁신당에 제공하는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거래하려는 목적으로 알려졌다.

이준석은 김영선이 제공한 관련 자료의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비례대표 거래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후 명태균이 김건희의 공천개입 의혹을 부정하는 증거로 김건희와의 온라인 대화를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 김건희는 김영선의 공천을 부탁하는 명태균에게 경선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했다. 이를 통해 명태균과 김건희의 친분이 확인되었으나, 명태균이 당무 권한이 없는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공천을 부탁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2025년 2월 명태균 측이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명태균의 변호인은 2024년 총선에 앞서 김건희가 김영선과 김영선의 김해 갑 출마를 논의한 뒤, 명태균에게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했고, 김영선에게는 ‘김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하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명태균과 김영선은 이를 거절했고, 이후 김영선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로 인해 김영선이 개혁신당 측에 김건희의 선거개입 의혹 자료를 제공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창원의창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김상민 전 검사도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했다. 김영선과 김상민은 해당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김상민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웅동학원 수사를 맡았고,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특수3부에서 근무했다는 전력이 있어 친윤 라인으로 불렸다. 아울러 2024년 총선 시기,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마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출판기념회 개최를 준비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24년 2월 15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건희의 김상민 공천 개입 의혹은 2025년 2월 21일, 윤석열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김건희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2024년 12월 2일 오후 두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 조태용이 김건희에게 답장했다는 통신기록이 주목을 받았다. 왜 문자를 주고받았냐는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 조태용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고, 김상민 법률특보 임명 경위에 관한 질문에는 ‘법조계 인물이라 모셨다’라고 답했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국정원장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위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면서 2024년 8월 김상민이 국정원장 법률특보에 임명된

사실이 논란이 되었다. 김상민이 공천에 탈락한 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국정원장 법률특보를 새로 만들어 김상민을 임명하도록 압박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은 김건희의 통화기록을 토대로 김상민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고, 2025년 6월 김상민의 채용 과정에 윤석열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에 김상민의 채용 과정에 대한 근거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국정원은 영장 발부를 요구하며 거절했다.

2025년 7월 2일 공식 출범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관련 사건 수사를 검찰에게서 넘겨받았다.

사건4. 명태균·김영선·윤석열 부부 | 창원산단 국정개입 의혹

강혜경은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통해 창원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부지 선정에 개입했고, 창원산단이 결정되기 전인 2022년 하반기부터 명태균이 자신을 비롯해 지인들에게 창원산단 부지 매입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강혜경은 2022년 12월 28일 김영선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한 ‘창원국가산단2.0 신규 지정을 위한 서명 건의문’을 명태균의 지시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창원산단 부지 조성과 관련해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후 명태균이 ‘어제 수천억을 한다, 김영선한테 잘 전해’라고 말하는 2022년 7월 1일 통화, 윤석열 사진에 ‘국가산단이 필요합니다’라는 문구 삽입을 지시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해야 한다고 말하는 2022년 11월 23일 통화, 김영선과 원희룡이 함께 찍은 사진을 산단 선정 축하 현수막에 더 크게 실어야 한다는 부지선정 하루 전인 2023년 3월 14일 통화, 명태균이 10시에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니 11시에 현수막과 보도자료를 배포하라고 지시하는 부지선정 당일 2023년 3월 15일 통화를 공개했다. 김태열은 2022년 말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창원산단 입지 현장 조사 당시, 명태균이 현장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사 동행에는 창원시 직원들만 참여하고, 민간인은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거래 규제 정책이라 토지거래가 오가는 창원산단과 큰 관계가 없고, 창원산단 후보지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2021년 8월이었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산단을 포함한 신규 산단 후보지는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고 밝혔다.

명태균은 창원산단을 기획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부지 선정과 이권 개입 의혹은 부인했다. 창원시가 50여 년간 박정희 전 대통령 덕분에 살아왔고, 향후 미래 50년은 윤석열로 하자는 생각으로 국가산단을 기획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명태균은 국가산단을 창원시에 제안해 창원시 공무원들을 만났을 뿐이라며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혜경을 격려하기 위해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을 강조했을 뿐이며, 강혜경이 제작한 홍보물은 김건희가 아닌 관계 부처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자료였다고 밝혔다. 또한 발표 전날 김영선이 ‘잘될 거’라며 창원산단 선정 사실을 귀띔해 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창원산단은 김영선의 주요 의정활동이었고, 총괄본부장으로서 후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2024년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창원을 포함해 국가산단 지정은 대선공약이고, 국토부와 산자부가 위원회를 만들어 투명하게 진행하며, 대통령이 보고 받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며, 창원산단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2024년 11월 29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김영선의 동생 두 명이 창원산단 예정지 인근의 부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주거지와 창원시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영선은 동생들의 부지 매입 사실을 몰랐다고 창원산단 부지 정보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통해 김영선의 동생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창원산단 인근 주택에서 김영선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하면서 김영선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강혜경은 김영선이 지시에 따라 지인에게 빌린 빈집으로 해당 컴퓨터 등을 옮겼고, 해당 주택의 소유주가 김영선의 동생들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밝혔다. 2025년 2월 17일,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은 2023년 1월 창원산단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3월 후보지 인근 토지 및 건물 등을 매입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영선과 두 동생을 기소했다.

한편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명태균이 창원산단의 최초 입지를 제안하고, 창원시 동읍 일대 산지를 창원산단에 포함하도록 했다는 창원시 공무원의 증언을 확보했다. 창원시 공무원들이 부지 규모를 논의하던 중 2022년 11월 명태균을 처음 만나 ‘창원산단 현황’을 보고했고, 명태균이 ‘대산면을 추가하라’며 구체적인 입지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후 창원시는 대산면 일대가 포함된 대외비 문건을 명태균에게 전달한 뒤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 농업보존가치를 이유로 대산면 일대의 용도 변경에 반대하자, 명태균이 동읍 일대 산지를 추가할 것을 제안해 그대로 부지가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언론사가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 확보했던, 이른바 ‘명태균 PC’를 입수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류 모 창원시 미래전략산업국장이 명태균에게 창원산단 관련 대외비 문건을 전달하거나, 2023년 1월 18일 부지 선정과 관련해 명태균에게 ‘국토부, 농림부에서도 의원님께 보고되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한다’는 취지로 온라인 메시지를 보냈다. 아울러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창원산단 필요성을 강조하는 온라인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했다는 사실도 또 다른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 있었다. 그러나 언론이 확보한 창원지검 수사보고서에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직보’한 정황이 담긴 온라인 메시지가 포함되지 않았다.

2025년 2월,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명태균의 창원산단 개입 의혹 사건을 남기고 윤석열 부부의 공천개입 및 선거개입 의혹 등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이 부지 선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명태균을 수시로 만나 논의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계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명태균이 김종양 현 국민의힘 창원의창구 국회의원이 당시 김영선의 지역구 사무실에 수시로 들러 정보를 빼갔고,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도를 보며 고암리를 짚어줬으며 실제로 창원산단 부지에 고암리가 포함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명태균은 박완수의 측근이 창원산단 부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양은 토지 매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박완수는 명태균과 김영선이 창원산단 관련 도지사 집무실 방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명태균이 지목한 인물이 측근도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편, 2025년 2월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 사업구역에서

발견된 일제강점기 폐광산으로 인한 사업구역 조정 등 계획 보완을 전제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결정했다.

2025년 6월 26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사건 수사를 창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았다.

사건5. 명태균·오세훈 |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조작 및 대납 의혹

강혜경은 명태균의 지시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경선 후보를 위해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그중 일부를 조작했으며 원본 데이터를 전달했고, 비용을 대납받았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혹 제기 초기부터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과 두 번 만났을 뿐, 석연치 않다는 측근의 보고를 받고 2021년 2월 중순 관계를 단절했고,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혜경이 오세훈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과 통화와 입금 기록 등을 공개하고, 명태균이 오세훈과의 만남 등을 밝히며 반박했다. 오세훈은 명태균과 강혜경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 명태균과 김영선의 공천개입 의혹에 집중하면서 오세훈에 대한 수사는 진척되지 못하다가,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 2025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사건을 이첩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다.

2025년 2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은 김한정, 오세훈의 공관 및 집무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부부시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명태균, 김한정, 오세훈, 강철원 등을 피의자로, 관련 인물들을 참고인으로 수차례 소환 조사했다.

사건의 핵심은 명태균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에게 13차례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중 일부가 조작되었으며, 오세훈이 여론조사 대가를 자신이 아니라 후원자인 김한정에게 3천3백만 원을 대납하도록 지시하거나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지 여부이다. 특히 2021년 3월 4일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기 전,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당시 후보에게 대부분 뒤처졌으나 3월 13일, 미래한국연구소가 PNR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를 앞질렀다는 점에서 의혹을 받고 있다.

오세훈은 명태균과 2021년 2월 중순 관계를 단절했고, 7번 만났다는 명태균의 주장은 명태균이 일방적으로 캠프에 기웃거린 것이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으므로 비용 대납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김한정에게 비용 대납을 부탁하지 않았고, 김한정과 미래한국연구소 간의 금전 거래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김한정은 오세훈과 상의하거나 여론조사를 전달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해 비용을 납부했을 뿐이라며 대납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수사 과정에서 강혜경은 명태균이 오세훈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수차례 진행했고, 그 결과를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여의도 연구원에 상시 보고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표 여론조사가 김종인에게 보고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는 것이다. 아울러 명태균이 김종인과의 친분을 과시해 간접적으로라도 오세훈을 도우려고 몇 차례 여론조사를 했을 뿐 그 결과를 오세훈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명태균이 김종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나 돈이 없다고 해 2021년 1월 말부터 2022년 대선 당시까지 최소 5천만 원 이상을 송금했고, 20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으며 입금하지 않아도 명태균이 알아서 결과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알려졌다. 또한 명태균, 오세훈, 김한정의 3자 회동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3자 회동은 2021년 2월 중순경, 당시 김한정이 ‘이렇게 돈이 들었는데, 이기는 조사는 왜 안 나오냐’라며 따져물었다던 명태균의 주장이다.

강혜경은 오세훈 측에 전달한 13차례의 여론조사 중 일부는 정상, 일부는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정상적인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명태균을 통해 지상욱 당시 여의도연구원장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했다.

명태균은 2021년 2월 중순 이후에도 오세훈과 연락을 지속했고, 최소 7번 만났으며 오세훈이 자신에게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김영선은 2021년 2월 24일 명태균과 함께 오세훈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아울러 명태균은 오세훈이 보궐선거 전, 김영선에게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자리를 제안했고, 강혜경은 김영선이 사장 임명을 실제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명태균은 2021년 1월 20일 중식당 회동 당시 오세훈이 강철원에게 ‘여론조사 업체를 알아보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이 김한정의 압수수색 영장에 2021년 1월 22일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기재한 사실이 추후 드러났다. 또한 강철원은 오세훈이 자리를 제안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SH 사장에는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은 명태균이 진행한 비공표 여론조사가 강철원에게 전달되었고, 강철원이 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할 서울 소재 언론사 접촉을 위해 명태균에게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소개했다고 보았다. 실제로 전광삼이 김태열에게 언론사를 소개해 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명태균과 강철원이 보궐선거 전 수차례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삼은 명태균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했고, 명태균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오세훈 측과 연락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은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전화해, ‘선거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못 쥐 김한정에게 2천만 원을 빌리러 가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 ‘빨리 서울로 올라오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명태균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명태균과 강철원이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당일에 만났고, 안철수 당시 후보와 단일화 협상이 이뤄지던 2021년 3월 19일에 강철원과 명태균이 만났다는 김태열의 진술과 포렌식 과정에서 강철원과 명태균이 2021년 3월경까지 주고받은 온라인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고 4월 25일, 공천개입 의혹이 포함된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다. 2025년 6월 10일 공포된 김건희 특검법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명태균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여론조사,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 명태균·건진법사 등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사건 등의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사건1. 명태균·김영선·강혜경 |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이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윤석열의 배우자

명태균 전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및 동생 2명

강혜경 전 김영선 의원 회계책임자, 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배기동 및 이미영,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사건2. 윤석열 부부 |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개입(김영선)과 대선 당시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윤석열의 배우자

명태균 전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현 제22대 개혁신당 국회의원

윤상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 현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건3. 윤석열 부부 |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개입(김영선, 김상민 전 검사) 및 직권남용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윤석열의 배우자

명태균 전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건4. 명태균·김영선·윤석열 부부 | 창원산단 국정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윤석열의 배우자

명태균 전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전 창원시장

[사건5. 명태균·오세훈 |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조작 및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김한정,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명태균 전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기타 피고발인]

정진석 전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홍준표 전 대구시장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사건1. 명태균·김영선·강혜경 |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이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창원지검 형사4부 →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지검장 정유미 - 차장 권유식 - 형사4부 부장 김호경 - 주임 비공개(∼'24.11)

지검장 정유미 - 팀장 이지형 차장 - 부장 인훈 - 주임 비공개('24.11∼)

사건2. 윤석열 부부 |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개입(김영선)과 대선 당시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지검장 이창수²³³ - 팀장 이지형 차장 - 부장 인훈 - 주임 비공개('25.02∼)

사건3. 윤석열 부부 |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개입(김영선, 김상민 전 검사) 및 직권남용 의혹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지검장 이창수²³⁴ - 팀장 이지형 차장 - 부장 인훈 - 주임 비공개('25.02∼)

사건4. 명태균·김영선·윤석열 부부 | 창원산단 국정개입 의혹

[창원지검 형사4부]

지검장 정유미 - 차장 권유식 - 형사4부 부장 김호경 - 주임 비공개('24.09∼)

사건5. 명태균·오세훈 |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조작 및 대납 의혹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지검장 정유미 - 팀장 이지형 차장 - 부장 인훈 - 주임 비공개('24.11∼'25.02)

지검장 이창수²³⁵ - 팀장 이지형 차장 - 부장 인훈 - 주임 비공개('25.02∼)

²³³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박승환 1차장 직무대리. 2025년 6월 3일 사직.

²³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박승환 1차장 직무대리. 2025년 6월 3일 사직.

²³⁵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박승환 1차장 직무대리. 2025년 6월 3일 사직.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3-12-13	경남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명태균, 김영선, 강혜경 등 창원지검 수사 의뢰
2023-12-00	창원지검, 수사과 배당
2024-02-05	창원지검 수사과, 명태균 피의자 소환 조사
2024-03-00	창원지검 수사과, 강혜경 소환 조사
2024-04-00	강혜경, 김영선과의 통화 녹취 등 4천여 개의 파일 창원지검 수사과 제출
2024-06-00	창원지검 수사과, 김영선 소환 조사
2024-09-05	언론, '칠불사 회동' 최초 보도
2024-09-00	창원지검, 형사4부 재배당
2024-09-23	시민단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명태균, 김영선 등 공수처 고발
2024-10-09	공수처, 고발 사건 수사4부 배당
2024-09-30	창원지검 형사4부, 김영선, 명태균, 강혜경 주거지, 미래한국연구소 등 압수수색
2024-09-30	시민단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명태균, 김영선 등 공수처 추가 고발
2024-10-09	공수처, 고발 사건 수사4부 배당
2024-10-10	창원지검 형사4부, 명태균, 김영선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내사 종결
2024-10-16	국민의힘,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캠프 모두 공식적으로 명태균과 관련된 여론조사 업체와 공식 계약 체결하지 않았다고 발표
2024-10-17	검찰, 창원지검에公安전문 검사 2명, 계좌추적 요원 1명 파견
2024-10-22	창원지검 형사4부, 명태균 추가 압수수색
2024-10-23	창원지검 형사4부, 강혜경 5차 피의자 소환 조사
2024-10-23	시민단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검찰 고발
2024-10-24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2024-10-24	창원지검 형사4부, 김영선 전 보좌관, 선임비서관, 수행비서 참고인 소환 조사
2024-10-25	창원지검 형사4부, 10월 초중순경 미래한국연구소 집기류 보관된 공인중개사무소 압수수색 언론보도
2024-10-25	창원지검 형사4부, 김태열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압수수색. 김태열 자진 출석 조사
2024-10-27	창원지검 형사4부, 김태열 소환 조사
2024-10-27	창원지검 형사4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이미영 소환 조사
2024-10-28	창원지검 형사4부, 김태열 피의자 소환 조사
2024-10-28	창원지검 형사4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기동, 이미영 피의자 전환
2024-10-29	창원지검 형사4부, 명태균 전 운전기사 소환 조사 언론 보도
2024-10-29	창원지검 형사4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기동, 강혜경 6차 피의자 소환 조사
2024-10-29	창원지검 형사4부, 강혜경 7차 피의자 소환 조사

날짜	수사경과
2024-10-31	창원지검 형사4부, 명태균과 처남, 장모 등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추가 압수수색
2024-10-31	시민단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후 부정처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명태균, 김영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전 공관위원장 등 6명 검찰 고발
2024-11-03	창원지검 형사4부, 김영선 피의자 소환 조사
2024-11-04	창원지검 형사4부, 김영선 피의자 소환 조사
2024-11-04	검찰, 창원지검에 계좌추적 요원 1명 추가 파견
2024-11-05	검찰, 창원지검에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 추가 파견해 전담수사팀 구성
2024-11-06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강해경 8차 피의자 소환 조사
2024-11-07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명태균 처남 참고인 소환 조사 언론 보도
2024-11-07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2024-11-08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명태균 피의자 소환 조사
2024-11-09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명태균 피의자 소환 조사
2024-11-11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 공천헌금을 받은 명태균과 정치자금을 기부한 김영선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기동과 이미영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24-11-13	서울중앙지검, 시민단체 고발건 창원지검 이송
2024-11-15	법원(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 명태균과 김영선 구속영장 발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기동, 이미영 구속영장 기각
2024-11-15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명태균 피의자 소환 조사
2024-11-15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여론조사 기관 PNR 네트워크 압수수색
2024-11-18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창원산단 관련 창원시 전현직 공무원 소환 조사 언론 보도
2024-11-18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강해경 9차 피의자 소환 조사
2024-11-19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명태균과 김태열 피의자 소환 조사
2024-11-19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윤석열 부부 및 명태균, 김영선, 원희룡, 홍남표 등 고발건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2024-11-19	시민단체,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 홍남표 창원시장, 국민의힘 정진석 전 공관위원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 추가 고발
2024-11-20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명태균 피의자 소환 조사
2024-11-21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신용한 전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4-11-21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김태열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기동, 이미영 대질 조사
2024-11-21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2022년 국민의힘 재보궐 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일부 위원 참고인 조사 언론 보도
2024-11-22	창원지방법원, 명태균과 김영선 구속기간 연장
2024-11-22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명태균 피의자 소환 조사
2024-11-22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김건희와 명태균의 공천 및 국정개입 의혹 언론 제보자로 유력한 김범준 전 개혁신당 대표 비서실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4-11-24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2022년 대선 경선 당시 국민의힘 당원명부 유출 및 여론조사비용

날짜	수사경과
	대납 등 의혹으로 전 홍준표 캠프 관계자 최 모씨 참고인 소환 조사
2024-11-25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강혜경 10차 피의자 소환 조사
2024-11-25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명태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이미영 피의자 소환 조사
2024-11-25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명태균의 요청으로 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구명 요청을 전달한 장 모씨 참고인 소환 조사
2024-11-25	시민단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 및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명태균의 대통령실 취업청탁 관련 윤석열, 명태균, 조 씨 등 검찰 고발
2024-11-26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명태균 피의자 소환 조사
2024-11-26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2024-11-26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명태균의 대통령실 채용청탁 의혹 관련 대통령실 직원 조 모씨 소환 조사
2024-11-27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명태균의 대통령실 채용청탁 의혹 관련 대통령실 직원 조 모씨의 부친 소환 조사
2024-11-27	법원(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 윤민 부장판사), 명태균 구속적부심 기각
2024-11-27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국민의힘 당사 및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2024-11-28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국민의힘 당사 및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2024-11-29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창원산단 의혹 관련 경상남도청과 창원시청 등 압수수색, 11월 초 창원시 공무원 3명 소환 조사 언론 보도
2024-12-02	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창원지검 고발
2024-12-02	강혜경, 윤석열 부부의 옛 휴대전화 증거보전 청구
2024-12-03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김영선 구속 기소, 김태열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기동과 이미영 불구속 기소
2024-12-03	오세훈 서울시장,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명태균과 강혜경 고소고발
2024-12-05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홍남표 창원시장 보좌한 창원시청 간부 공무원 참고인 소환 조사, 창원시 감사관실 직원 참고인 조사 언론 보도
2024-12-05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강혜경 11차 피의자 소환 조사
2024-12-10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2022년 지방선거 등 관련 의혹으로 지상욱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4-12-11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참고인 소환 조사
2024-12-12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명태균의 과거 휴대전화 3대와 USB1개 임의제출 수령
2024-12-17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2022년 지방·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한기호(국민의힘 국회의원) 참고인 소환 조사
2024-12-18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2022년 지방·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강대식(국민의힘 국회의원) 참고인 소환 조사
2024-12-23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강혜경 12차 피의자 소환 조사
2024-12-24	시민단체,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 대납 등 의혹으로 홍준표, 박재기 등 고발
2024-12-31	법원(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증거보전을 구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아니므로 강혜경의 윤석열 부부 옛 휴대전화 증거보전 청구 기각

날짜	수사경과
2025-01-02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명태균의 대통령실 채용 청탁 등 관련 사업가 김 씨, 정 씨, 조 씨 주거지 및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5-01-03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명태균의 대통령실 채용청탁 관련 사업가 조 모씨 등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5-01-06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강혜경 13차 피의자 소환 조사
2025-01-09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2024년 12월 말 명태균 처남 채용비리 의혹 남명학사 및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압수수색 언론 보도
2025-01-10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명태균 피의자 소환 조사
2025-01-13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명태균의 대통령실 취업청탁 등 의혹 관련 김태열 참고인 소환 조사, 청탁한 사업가를 소개한 정 씨와 대질 신문
2025-01-26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창원시 공무원 참고인 조사 언론 보도
2025-02-17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영선과 동생 두 명 추가 기소,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천여만 원 수수한 혐의로 김영선 추가 기소, 김영선에게 불법 정치자금 제공한 혐의로 사업가 조 씨 기소, 허위 정책보고서 제출해 정책개발비 2천만 원 편취한 사기 혐의와 정치자금 회계처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영선과 강혜경 각각 기소
2025-02-17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중간 수사결과 발표. 61곳(국민의힘 중앙당사, 경남도청, 창원시청, 여론조사기관 등) 압수수색 및 100여 명(2022년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국회의원 및 주요 당직자 등) 소환 조사 발힘. 창원산단 국정개입 의혹과 명태균 처남 채용비리 의혹 등 제외 공천개입 의혹 등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2025-02-18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참고인 소환 조사 언론 보도
2025-02-18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 명태균의 대통령실 취업청탁 관련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2025-02-24	대구지검, 시민단체의 홍준표 등 고발건 대구경찰청 이첩
2025-02-26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5-02-27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1차 피의자 소환 조사
2025-02-27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명태균 소환 조사
2025-02-28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명태균 소환 조사
2025-03-05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의혹 등 강혜경 참고인 소환 조사
2025-03-06	서울 방배경찰서, 2022년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공천 관련 강혜경 참고인 소환 조사
2025-03-06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추가 입건, 피의자 소환 조사. 김태열 참고인 소환 조사
2025-03-07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의혹으로 명태균, 김영선 대질 조사
2025-03-10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 및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 참고인 겸 고소인 조사
2025-03-10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강혜경 참고인 소환 조사

날짜	수사경과
2025-03-11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5-03-11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의혹으로 명태균 소환 조사
2025-03-12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의혹으로 명태균 소환 조사
2025-03-13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의혹으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5-03-14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2022년 지방선거 공천개입 등 관련 의혹으로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참고인 소환 조사
2025-03-14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2차 피의자 소환 조사.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참고인 소환 조사 언론 보도
2025-03-17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3차 피의자 소환 조사
2025-03-19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여론조사업체 PNR 서명원 대표 소환 조사
2025-03-20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 및 공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5-03-21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의혹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5-03-29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칠불사 회동'에 참여했던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참고인 소환 조사
2025-04-07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김건희 여사 2차례 피의자 출석 구두 요구 언론 보도
2025-04-09	창원지검 형사4부, 명태균 처남 채용비리 의혹 관련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압수수색
2025-04-10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명태균 피의자 소환 조사
2025-04-11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명태균 피의자 소환 조사
2025-04-18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2024년 공천개입 의혹 등 관련 김상민 국정원장 법률특보(전 검사, 당시 경남 창원의회창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 참고인 소환 조사
2025-04-22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의혹으로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참고인 소환 조사
2025-04-22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김건희 변호인과 면담해 김건희 출석 구두 요청
2025-04-22	대구경찰청, 여론조사 대납 등 홍준표 고발건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2025-04-23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관련 국민의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소환 조사
2025-04-23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관련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당시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 소환 조사
2025-04-24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관련 공재광 전 국민의힘 평택시장(당시 예비후보), 구상찬 전 국민의힘 강서구 당협위원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5-04-29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관련 최호 당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 참고인 소환 조사
2025-04-29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공천개입 의혹과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의혹으로 명태균, 김영선 참고인 소환 및 대질 조사
2025-04-30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공천개입 의혹과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의혹으로 명태균, 김영선 참고인 소환 조사

날짜	수사경과
2025-05-08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김태열 참고인 소환 조사
2025-05-11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김건희 1차 피의자 출석 소환 통보
2025-05-13	김건희,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에 대선 영향 등 이유로 한 불출석 사유서 제출
2025-05-14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김건희 2차 피의자 출석 소환 통보, 김건희 불응
2025-05-23	대구경찰청,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강혜경 참고인 소환 조사
2025-05-24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 피의자 소환 조사
2025-05-25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 피의자 소환 조사
2025-06-02	창원지검 형사4부, 창원산단 국정개입 의혹 관련 명태균 피의자 소환 조사
2025-06-05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의결
2025-06-09	김건희,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에 의견서 제출
2025-06-12	이재명 대통령,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명
2025-06-13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관련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당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5-06-16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 김건희 3차 피의자 출석 소환 통보, 김건희 특검 수사와 중복 이유로 불응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명태균·김영선·김태열·배기동·이미영(사건1)	2024-12-05	명태균, 보석 청구
	2024-12-23	1심(창원지법 형사4부 김인택 부장판사) 진행중
	2025-03-11	김영선 구속취소 청구
	2025-03-13	명태균 구속취소 청구
	2025-04-09	1심(창원지법 형사4부 김인택 부장판사) 명태균, 김영선 보석 허가. 구속취소 청구 기각
김영선·김영선의 동생 2명·강혜경·사업가(사건4)	2025-06-00	1심(창원지법 형사2부 김성환 부장판사) 진행중

23. 건진법사의 공천 브로커 및 통일교 - 김건희 간 알선수재 혐의 수사(2024)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가 통일교 인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김건희에게 일부를 건네며 캄보디아 ODA 사업 수주 등 통일교 관련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전성배가 2018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정재식으로부터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는 등 금품을 수수하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청탁받은 후보들을 친분이 있는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추천하거나 경선상황을 보고 받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재판중
담당 부서	▪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주요 처분	▪ 전성배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통일교 청탁 의혹

검찰은 소위 ‘건진법사’ 전성배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금품을 받고 김건희에게 관련 현안을 청탁 및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샤넬 가방과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거액의 금품을 전성배에게 전달했는데, 검찰은 이 금품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일교가 수주하는 등의 혜택을 받고자 김건희에게 청탁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무속인 전성배, 일명 건진 법사는 윤석열 김건희 내외와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으며, 이를 배경으로 윤석열의 대선 선거운동 시 국민의힘 선대본 산하 네트워크본부 고문으로 활동하며 캠프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건희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직 명함도 발견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선대본부가 네트워크본부를 해체하고 이후 전성배도 공식석상에서 활동을 중단했지만,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윤석열 내외와의 연관설이 제기되어 왔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통일교 행사에서 자신이 2022년 3월 22일 윤석열을 만났으며 공적개발원조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는데, 이후 6월 외교부가 캄보디아와 공적개발원조 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해 7억 달러 규모였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한도액을 15억 달러로 증액하기도 했다. 이후 2024년 5월 캄보디아 총리 정상회담을 거쳐 지원한도액은 다시 30억 달러까지 증액됐다. 이 외에도 통일교가 청탁한 사유에는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검찰은 김건희 로비용 금품의 자금 출처를 추적 중이다. 윤영호 본부장의 비서실장 서 모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통일교 아시아 대륙본부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17만 달러, 약 2억 2천만 원을 빼돌렸다가 통일교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서 모는 당시 통일교 내부 감사에서 이것이 “윤영호 본부장이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통일교는 검찰 수사가 윤영호 본부장과 김건희의 청탁 의혹으로 번져가자, 고소를 취하였다. 검찰은 이 돈이 윤영호 본부장이 전성배에게 건넨 로비자금으로 쓰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영호 본부장은 검찰조사에서 전성배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전성배는 윤영호 본부장에게 금품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이것을 김건희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건희 또한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다. 검찰은 청탁용 선물로 전달된 사넬 가방의 행방과 자금원을 추적 중이다. 한편, 전성배 주거지 수색 과정에서 한국은행 관봉 형태로 현금 5,000만 원이 발견되었는데, 관봉에 찍힌 날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3일 후인 2022년 5월 13일이었다. 개인에게 갈 수 없는 관봉이기에 검찰은 이 금액의 출처 또한 추적하고 있다.

2025년 7월 2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식 출범했으며, 김건희 관련 사건들을 이첩받으면서 남부지검으로부터 전성배와 통일교 로비 의혹 관련 혐의 수사도 이첩받아 수사를 개시했다.

건진법사의 영천시장 경선 공천 개입 의혹

이 같은 건진법사 전성배의 김건희 청탁 의혹은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된 후인 2024년 12월 17일, 검찰(서울남부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성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전성배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영천 시장 예비후보 정재식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사건2). 전성배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지방선거기획위원)과 1년간 60여 회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로 면식이 있었는데, 검찰은 전성배가 윤한홍 의원을 통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정재식에게 말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았다. 검찰은 전성배와 정재식 전 예비후보를 기소했다. 다만 윤한홍 의원은 자신이 당시 공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다며, 전성배도 제대로 알게 된 것은 2022년 대선 과정 이후라며 의혹을 반박했다.

검찰은 이후 전성배의 휴대전화를 통해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도 영남 지역 군수와 시장, 도의원 등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발견해 수사 중이다. 전성배가 경북 출신 모 사업가로부터 출마 예정자 5명에 대해 공천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문자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전성배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2명에게 이들을 추천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그들 중 실제로 당선된 사례가 나오자 청탁받은 사업가로부터 감사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전성배는 경북 지역 시장·구청장·도의원 후보자 3명으로부터도 공천 부탁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며 자신은 국민의힘 대구 현역 의원과 친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 외에 검찰은 당시 전성배가 국민의힘 모 당직자로부터 서울 지역 구청장 후보 경선 상황에 관해 보고 받은 사실도 파악했다. 해당 당직자는 전성배에게 “고문님의 지휘 아래 B 후보와 C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라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전성배를 구속 시도 및 기소하는 과정에서 전성배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성립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전성배가 정치인 신분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인 윤한홍이 금품을 받아 정치활동을 했는지 여부가 소명되어야 하는데, 검찰은 전성배가 받은 돈이 최종적으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밝히지 않았고, 윤 의원을 공범으로 기소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기소 후에도 재판부가 법리검토 여부를 검찰에게 문의했으나 검찰은 윤한홍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전성배
정재식 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후보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서 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비서실장
이 모 경북지역 사업자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지검장 신응석 - 차장 이희동 - 부장 박건욱(주임) - 수사참여 검사 최재현, 박기태, 신의호(기소 이후)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4-12-17	검찰(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전성배 긴급체포. 정재식 전 후보로부터 1억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 전성배 자택과 법당 등 압수수색
2024-12-18	검찰,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
2024-12-19	법원(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전성배 구속영장 기각.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2024-12-27	검찰, 정재식 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전성배에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 건넨 혐의. 정재식을 전성배에게 소개해 주고 정치자금 거래를 방조한 혐의로 사업가 이 모씨도 불구속 기소
2025-01-07	검찰, 전성배 구속영장 2차 청구.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사유 추가
2025-01-09	법원(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 법리상 다툼의 여지 지적
2025-01-10	검찰, 전성배 불구속 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25-03-04	검찰, 전성배 카카오톡 대화 내역 확인 위해 카카오편교사옥 압수수색
2025-04-30	검찰, 윤석열 사저 및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코바나컨텐츠 출신 대통령실 행정관 2명 자택 등 압수수색. 전성배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받은 금품 추적.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날짜	수사경과
	집에서 샤넬 제품 상자 압수
2025-05-03	검찰, 전성배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윤영호 본부장에게 받은 금품 행방과 통일교 쪽 청탁 논의 등 추궁
2025-05-16	검찰,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 출신 조 모 주거지와 샤넬코리아 압수수색. 전성배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받은 금품 추적
2025-05-17	검찰, 전성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다시 소환조사
2025-05-21	검찰이 유경옥이 전성배에게서 샤넬백을 받은 후 샤넬 매장을 방문, 100만 원을 보태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 후 다시 200만 원을 추가로 내고 또 다른 샤넬 가방과 샤넬 제품으로 바꾼 사실을 확인됐다는 언론보도
2025-05-28	검찰,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주도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부 집 압수수색. 업체 대표 부인이 유경옥 전 행정관과 함께 샤넬 매장 방문한 정황 포착
2025-06-05	국회, '김건희특검법' 가결(재석 198, 찬성 195, 반대 3, 기권0)
2025-06-12	이재명 대통령,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특별검사로 임명
2025-06-17	검찰이 김건희 수행비서인 유경옥 행정관이 전성배로부터 받은 가방을 샤넬 매장에서 다른 가방으로 교환받을 때 가방 외에도 신발도 함께 교환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2025-06-22	검찰이 전성배의 휴대전화에서 김건희의 수행비서 정모씨('건희2'로 저장)에게 통일교 총재의 만머느리 등 통일교 관계자 4명의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요청한 문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2025-07-02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공식 수사 개시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전성배, 정재식, 사업가 이 모, 성명불상 조력자 등 4인	2025-06-00	1심(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진행중

24. [대장동1]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비리 사건 및 이재명 성남시장 관련 의혹 수사(2021)

2014년 5월부터 진행된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이하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개발업자에게 초과수익이 과도하게 돌아간 것이 공직자와 민간사업자의 유착과 특혜, 배임, 뇌물 의혹 등이 제기됐고, 민간개발업자가 초과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당시 사장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도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사건 진행상태	▪ 재판중, 수사중
담당 부서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반부패수사1부
주요 처분	▪ 유동규·정진상·김만배·남욱·최윤길 구속 기소 ▪ 정영학·이재명 등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 방대한 사건으로 인해,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의 위례·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이익 분배를 대가로 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및 측근들의 개발인허가 과정 개입 여부는 [\[대장동1\]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비리 사건 및 이재명 성남시장 관련 의혹 수사\(2021\)](#)로, [\[대장동2\]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2022\)](#), 김만배 등의 대장동 개발 사업 비자금 조성과 ‘50억 클럽’ 등 법조계 인맥 등 로비 의혹은 [\[대장동3\] 김만배와 50억 클럽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2021\)](#)로, 김만배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등 검찰의 수사 무마와 재판 거래 의혹은 [\[대장동4\]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비리 혐의 봐주기 수사\(2021\)](#)로 구분했다.

2021년 9월 한 언론사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주식회사(화천대유)’에 대한 특혜 의혹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의 막이 올랐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지분 참여한 부동산 투자회사 ‘천화동인(1호~7호)’에서도 높은 배당 수익을 얻었고, 각 천화동인의 주주들이 김만배를 비롯한 화천대유 관련자로 알려지며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은 계속됐다. 각 정당의 20대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시기에 제기된 의혹으로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동시에 광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수령한 것도 언론에 보도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고발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사건 초기, 경찰과 검찰이 각각 대장동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다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검찰은 화천대유의 고액 배당금, ‘50억 클럽’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4년 말부터 성남시 대장동의 공공개발 방식을 추진하다 개발 계획이 유출되면서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대장동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장동 주민들은 2009년 민간개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부동산 개발업체 ‘씨세븐’과 토지개발 계약을 맺었다.

씨세븐 대표이사 이강길은 대장동 택지 개발을 위해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등 여러 법인을 설립하고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동업자인 감정평가사 민홍철로부터 도시개발 사업 경험이 있는 회계사 정영학과 변호사 남욱을 각각 소개받았다. 정영학이 대학 동문 조우형, 고교 동문 김용철, 정재창을 합류시켜 초기 대장동 개발팀이 구성되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매제인 조우형을 통해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 원대 자금을 대출받았다. 정영학은 대출을 위해 토지매입자금 영수증을 위조해 47억 5천만 원을 마련해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자본금을 불법으로 조성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금 만기 상황을 해야 했으나, 상황 기일 연장에 실패한 이강길은 김용철에게, 김용철은 남욱에게 씨세븐 등의 대장동 토지개발 사업권을 양도했다. 이후 남욱은 회사명을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로 바꾼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척되지 않으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남욱은 2011년, 당시 YTN 배성준 기자(이후 천화동인 7호 소유주)로부터 법조계 등 다양한 인맥을 갖고 있던 머니투데이 김만배 법조기자를 ‘로비스트’로 소개받았다. 이로써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이른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이 구성되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재명은 성남시 내 모든 대형 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010년 7월 이재명이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LH가 주도하는 공영 개발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또한 이재명의 공약이었던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성남시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성남시장인 이재명이 민간 개발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을 유지해 대장동 민간 개발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정영학은 배우자를 통해 알게 된 최윤길 성남시의원을 김용철에게 소개해 최윤길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등 관계를 맺었다. 남욱은 대장동의 민간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사업 방향을 바꿔 정영학에게 민관합동 개발 방안을 구상하도록 한 후 최윤길에게 성남시에 민관 합동 개발사업 추진을 청탁했다. 2012년 최윤길은 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에게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유동규를 연결해 줬다. 이후 유동규는 남욱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시 민관합동 개발을 돕겠다고 제안했고, 최윤길에게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통과를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아가 김만배가 조례 통과와 대가로 의장 당선을 도왔다고 봤다. 검찰은 이후 실제로 의장이 된 최윤길은 유동규 등과 함께 조례 통과를 위한 계획과 역할을 협의했고, 결국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봤다.

이후 설립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2014년부터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로 특수목적법인(SPC)인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설립해 시행했고, 위례자산관리가 자산관리회사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위례투자 및

위례파트너가 참여해 총 418억 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냈다(2022.12. 검찰 공소장 기준). 대장동 개발 사업은 SPC인 ‘성남의 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행했고,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자산관리회사로,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천화동인이 참여해 총 9,606억 원 상당의 수익을 냈다(2023.3. 검찰 공소장 기준). 두 개발 사업이 이재명 성남시장 시기 유사한 구조로, 유사한 민간사업자(남육, 정영학 등)와 성남시 관계자(유동규 등)에 의해 진행된 점을 두고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있어 특혜 비리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수사에 착수하자 정영학은 자수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에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대장동 수사팀’이라 불리던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만배, 남육, 정영학, 유동규 등 관련자들을 압수수색 및 구속하고, ‘퇴직금 50억’ 관련 광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기소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한편, 정영학 녹취록에서 유동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총 700억 원(세금 등 공제 후 428억 원)의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받기로 약정한 정황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은 해당 지분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준 대가로 유동규·정진상·이재명에게 사전에 약정된 것이 아니냐며 ‘대장동 몸통 이재명’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과 광상도의 ‘퇴직금 50억’ 의혹을 들어 반발했다. 양측 모두 검찰을 향해 부실수사 비판을 이어갔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대장동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에 대해 대장동 전담수사팀에 대한 수사 미진 문책이자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라는 추측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통과와 의정 당선 지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시 민관합동 개발 등 최윤길과 남육과의 협상 내용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보고했고 이재명이 수락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재명은 표면적으로는 성남시의회의 반대로 자신의 공약이었던 위례신도시 개발을 포기했다고 발표하면서도 유동규가 은밀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준비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후에 위례신도시 개발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동규에게 자신의 첫 공약이행 성과인 위례신도시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하고, 비밀리에 유동규가 남육 등 민간사업자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내정하는 등 이권에 개입한 것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재명과 정진상이 수락하여 유동규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육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육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육,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았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관련 혐의(2013))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천화동인 등의 이익 배당 지분의 형태 등으로 이익금 분배를 약속받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김만배 등이 소유한 ‘성남의 뜰’에 특혜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혐의(2014))

구체적으로 검찰은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가 △ 이재명의 공약 이행을 위한 대장동 공공개발 사업 민관합동 방식 변경, △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들의 대장동과 1공단 도시개발 분리 청탁 수용, △ 대장동 부지 공동주택용지 용적률 상향 및 용도 변경, △ 대장동 토지 보상가액 산정시까지 서판교터널 추진 정보를 비공개해 민간사업자들의 토지 취득 비용 절감, △ 대장동 토지를 환지 방식이 아닌 수용 방식으로 확보하며 화천대유의 토지수용비 절감 혜택 등을 주었다고 보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의 택지 분양 수익금을 확정이익의 분배 방식으로 약정하면서 성남의뜰에 총 4,195억여 원의 재산상 이익(4,054억여 원의 배당금 및 140억여 원의 자산관리 위탁 수수료)을 취득하게 했다고 봤다. 또한 검찰은 2014년경 이미 대장동 택지 분양수익 중 민간업자의 개발이익이 4천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데도 ‘확정이익’ 방식으로 결정하고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적정 배당이익으로 검토했던 전체의 70%, 6,725억 원(검찰 산출 총 개발이익 9,606억 기준)이 아니라 확정 배당이익 1,830억 원을 받도록 해 그 차액인 4,895억여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배당이익을 지분 배분 방식이 아닌 확정이익 방식으로 결정해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수천억 원의 이익을, 반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2021년 10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50%의 배분 방식을 약정한 결과 민간사업자들의 비용 부풀리기로 인해 예상 수익 1,100억 원이 아닌 최종 이익 300억 원 중 성남시가 150억 원을 취득한 사례, 경기 의왕시 백운밸리 사업의 경우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확정이익 방식 환수를 택하고, 재원조달을 위해 건설사가 아닌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공모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개발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사정, 대장동 분양 시기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해 확정이익 배분 방식 결정이 안전한 조치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결정에 대한 검찰 수사라는 점에서 비판과 우려도 제기되었다.

아울러 검찰은 이재명이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정진상, 유동규가 김만배 등에게 약속했던 이익금 분배를 요청하자, 김만배 등이 ‘천화동인 1호’ 지분 24.5%, 총 700억 원에서 세금 등 공제 후 428억 원의 지급을 약속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과정에 참여한 유동규가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승인 받았으며, 김만배 등은 해당 금액을 전달할 방법을 모의했다고 보았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이재명의 관여 여부를 부인하던 유동규는 구속기간 만료 석방 후 위례 및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은 ‘이재명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천화동인 1호 지분이 김만배 자신의 것이라는 김만배의 말에 세뇌되었지만 실제 지분 소유주는 이재명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남욱은 애초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유동규 소유라고 주장했던 것에 반해 구속기간 만료 석방 후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이 선거, 노후자금으로 생각했던 것이라 말했다며 초기 진술을 번복했다. 이재명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소유에 대해 부인하던 유동규와 남욱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이 현행법상 불법인 유죄협상(플리바게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 유동규와 남욱 모두 이를 부인했다. 검찰은 정영학이 자진 출석해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특정범죄신고자’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유동규는 이재명에 대한 배신감을 진술 반복의 주된 이유로 밝혔고, 남욱은 유동규의 자백을 보며 본인도 자백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만배는 남욱과 정영학의 권유로 지분을 인수했으나 천화동인 1호

지분 소유주는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김만배는 의혹 제기 초기부터 남욱 등과의 공동비용을 늘려 자신의 이익을 확대할 의도로 ‘허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김만배·남욱 등 민간사업자들과 유동규·정진상 등 성남시 관계자들을 기소했다(아래 표 참고). 2023년 3월에는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재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재명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 확정 분배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과 공모하여, 2014년~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민간사업자 선정에 특혜를 제공했고, 그 결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분양 수익 등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했다고 봤다(이해충돌방지법).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정진상, 유동규와 공모하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욱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욱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봤다(부패방지법). 다만,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 대가로 428억 원 상당의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이 유동규·정진상과 김용-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대장동 개발 특혜 지시 혹은 수락을 대가로 김만배 등으로부터 428억 원을 약속받기로 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유동규, 정진상, 김용의 공소장과 달리 이재명의 공소장에 ‘428억 원 약속’을 제외한 것에 대해 비판과 의혹이 제기되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재명 연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상황에서 검찰이 핵심 의혹으로 본 ‘428억 원 약속’을 제외한 것은, 검찰이 유동규, 남욱 등 관련 혐의를 진술한 관련자들의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또는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것을 들었다’와 같은 전문진술에만 의존해 ‘여론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손해’ 또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으로 대변되듯 검찰 추산액과 이재명의 추산액이 상이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대가성 금품이 아닌 정치적 업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대장동 개발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추가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해 영장에 의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막상 추가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2023년 9월,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가결되었다. 체포동의안에 ‘428억 원 약속’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이 이재명을 목적으로 짜맞추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과 구속 후 ‘428억 원 약속’ 관련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현재까지 ‘428억 원 약속’ 관련 검찰 수사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영학 녹취록으로 인해 진전되었지만, 녹취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었다.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유동규 혹은 제3자와의 대화 내용을 남욱에게 전달하고, 남욱이 정영학에게 재전달하는 대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 남욱과 정영학은 전해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김만배는 ‘허위’라거나 과장했을 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보도들이 지속됐고, 먼저 기소된 혐의들에 대한 김만배 등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재판과 검찰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피의자, 참고인 등의 발언이 보도되며 혼란이 계속됐다. 여야의 정쟁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이재명 연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피의사실 공표와 알권리, 검증 없는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참고] 위례 및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주요 피의자 혐의

검찰은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을 거쳐 혐의를 확정하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유동규, 정진상과 김만배, 남욱, 정영학, 조우형, 그리고 최윤길의 혐의는 아래와 같다.

피의자	기소 혐의(기소일)
이재명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2023-03-22) -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이 공모하여, 2014년~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이용해 민간사업자 선정 특혜 제공, 그 결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분양 수익 등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함 - 대장동 개발 이익 확정 분배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 [유동규·남욱·정영학·정재창, 정진상 동일 혐의] 정진상, 유동규와 공모하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욱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욱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득을 취득 *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 대가 428억 원(천화동인1호 지분 환산액) 약속 관련 혐의 제외 ** 함께 기소된 뇌물 혐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2022) 참고
유동규	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2021-10-21) - 남욱·정영학·정재창으로부터 3억 5,200만 원 뇌물 수수 - 2021년에 대장동 사업개발 이익 중 428억 원(세금 공제 후)을 약속받은 부정처사후수뢰 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2021-11-01) -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김만배·남욱·정민용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작성,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 개입, 대장동 개발이익 분배구조 협의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확정이익 분배받도록 하고, 예상 택지개발 이익축소 등 특혜 통해 최소 651억 원 상당 배당이익,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 김만배로부터 5억 원을 받은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2022-04-04) - 동거인에게 자신의 휴대폰 폐기 지시 [유동규·남욱·정영학·정재창] 부패방지법 위반(2022-09-26) - 유동규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욱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욱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득을 취득 뇌물 공여 혐의(2022-12-09) - 2019년~2020년 정진상에게 6천만 원 공여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이해충돌방지법 위반(2023-01-12) -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이 공모하여, 2014년~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이용해 민간사업자 선정 특혜 제공, 그 결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분양 수익 등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함
정진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2022-12-09) - 유동규로부터 2013~2014년 위례 및 대장동 개발 사업 등에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1억 8천만 원, 2019년 예산 배정 및 유동규의 인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현금 3천만 원, 유동규의 개인사업 인허가 편의제공 대가로 3천만 원, 총 2억 4천만 원의 뇌물 수수 -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유동규와 공모하여 특혜를 제공해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로부터 배당이익 428억 원 지급 약속을 받은 부정처사후수뢰 -[유동규·남욱·정영학·정재창 동일 혐의] 유동규와 공모하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욱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욱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득을 취득 - 유동규에게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배임 등 혐의(2023-03-22) - [이재명 동일 혐의]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이 공모하여, 2014년~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이용해 민간사업자 선정 특혜 제공, 그 결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분양 수익 등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함 ** 함께 기소된 뇌물 혐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2022) 참고
김만배	배임 및 뇌물 공여 혐의(2021-11-22) -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김만배·남욱·정민용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작성,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 개입, 대장동 개발이익 분배구조 협의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확정이익 분배받도록 하고, 예상 택지개발 이익축소 등 특혜 통해 최소 651억 원 상당 배당이익,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 유동규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 원을 빼돌려 공여
	[최윤길·김만배] 뇌물공여 혐의(2022-02-15) - 2012년 김만배가 최윤길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하고, 2021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최윤길을 채용해 성과급 40억 원 등을 약속하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공여
	뇌물 공여 및 횡령 혐의(2022-02-22) - 광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 제공 요청 대가로 그 아들에게 성과급 형식의 뇌물 공여 - 해당 뇌물을 화천대유 자금에서 사용한 횡령
	횡령 혐의(2022-05-16) - 천화동인 1호 자금 100억 원을 이기성에게 전달해 횡령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이해충돌방지법 위반(2023-01-12) -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이 공모하여, 2014년~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이용해 민간사업자 선정 특혜 제공, 그 결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분양 수익 등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 및 증거인멸교사, 농지법 위반(2023-03-08)

	- 2021년 10월~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 원 은닉 -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및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수표 실물을 숨기도록 한 증거은닉교사 - 수사기관의 추정보전 등에 대비하고 시세차익을 얻은 목적으로 부동산(농지)을 매입한 농지법 위반
남육	배임 및 뇌물 공여 혐의(2021-11-22) - [유동규·김만배·남육·정영학·정민용] 김만배·남육·정민용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작성,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 개입, 대장동 개발이익 분배구조 협의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확정이익 분배받도록 하고, 예상 택지개발 이익 축소 등 특혜 통해 최소 651억 원 상당 배당이익,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 정민용에게 35억 원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2022-02-22) - 광상도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 공여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2022) 참고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2022-04-04) - 2019년 9월 개인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천화동인 4호 법인자금 38억 원 횡령 후 범행 은닉을 위해 허위 회계 처리해 수익 은닉 [유동규·남육·정영학·정재창] 부패방지법 위반(2022-09-26) - 유동규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육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육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육,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익을 취득 [유동규·김만배·남육·정영학·정민용] 이해충돌방지법 위반(2023-01-12) - 유동규·김만배·남육·정영학·정민용이 공모하여, 2014년~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이용해 민간사업자 선정 특혜 제공, 그 결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분양 수익 등 7,886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함
정영학	배임 혐의(2021-11-22) [유동규·김만배·남육·정영학·정민용] 김만배·남육·정민용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작성,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 개입, 대장동 개발이익 분배구조 협의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확정이익 분배받도록 하고, 예상 택지개발 이익 축소 등 특혜 통해 최소 651억 원 상당 배당이익,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유동규·남육·정영학·정재창]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2022-09-26) - 유동규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육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육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육,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익을 취득 [유동규·김만배·남육·정영학·정민용] 이해충돌방지법 위반(2023-01-12) - 유동규·김만배·남육·정영학·정민용이 공모하여, 2014년~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이용해 민간사업자 선정 특혜 제공, 그 결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분양 수익 등 7,886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함
조우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2023-05-01) - 2015년 3월~4월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 대장동 개발 사업 자금 조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7,886억 원 상당의 개발 이익 취득

	-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 끼침 - 천화동인 6호 소유주를 조현성 변호사로 허위 기재해, 실소유주로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천화동인6호 배당이익 283억 원 취득해 범죄수익은닉
최윤길	[최윤길·김만배] 부정처사후수뢰 혐의(2022-02-15) - 2012년 김만배가 최윤길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하고, 2021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최윤길을 채용해 성과급 40억 원 등을 약속하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공여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현 NSJ홀딩스)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조우형,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정재창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

이기성 더감 대표(대장동 독점 분양대행 업체, 박영수 전 특검 친인척)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대장동 특혜 비리 사건 등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22.07)]

지검장 이정수(~'22.05), 송경호('22.05~) - 차장(팀장) 김태훈(~'22.05), 고흥곤('22.05~) -
부장 유경필(~'22.02), 유진승('22.02~) - 주임 김세현, 전효곤 - 이하 비공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22.07~)]

지검장 송경호 - 차장 고흥곤 - 부장 강백신 - 주임 김익수, 호승진, 이정우, 조재학, 이주용,
이정규 - 이하 비공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22.07~)]

지검장 송경호 - 차장 고흥곤 - 부장 엄희준 - 주임 비공개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11-01-01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2014-05-01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대장동 개발 사업) 시작
2021-04-01	금융정보분석원(FIU), 경찰에 화천대유 관련 3명과 법인의 횡령 배임 의심 통보, 용산경찰서 배정. 이후 5월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참고인 조사
2021-09-01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불분명한 자금 흐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다수의 언론보도
2021-09-18	경찰(용산경찰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소환. 대장동 사업 자금 흐름 조사
2021-09-23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이재명 캠프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착수. 개발사업 인허가와 사업자 선정 과정, 배당금 설계 과정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의 자금 흐름 추적하겠다고 밝힘
2021-09-2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 유동규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욱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욱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득을 취득
2021-09-27	경찰,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참고인 소환 조사
2021-09-28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참고인 소환 조사
2021-09-28	국민의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 등 9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대검에 고발. 서울중앙지검(경제범죄형사부, 유경필 부장)에 이첩
2021-09-28	경찰,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경기남부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 착수
2021-09-29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정영학 소환 조사
2021-09-29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유동규 등 핵심 관계자 출국금지
2021-09-29	검찰, 대장동 전담수사팀 구성.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지휘 아래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9명(부장 유경필 포함), 공공수사2부 검사 3명(부장 김경근 포함),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등 검사 1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박범계 장관 전담팀 구성 승인
2021-09-29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화천대유 사무실 포함 관련자들 사무실, 거주지 등 압수수색. - 유동규 자택,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무실, 김만배 자택, 남욱 사무실, 유원홀딩스(유동규, 정민용) 사무실, 천화동인 2~7호 소유주 자택 등
2021-09-30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유동규에 출석 통보했지만 불응
2021-09-30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성남도시개발공사 2차 압수수색. 유동규 컴퓨터 등 확보
2021-10-01	경찰, 화천대유 수사팀 확대. 회계 분석 등 전문 수사인력 포함 62명으로 증원
2021-10-01	경찰, 이성문·김만배·이한성(천화동인 1호) 등 8명 출국금지 조치
2021-10-0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피의자 조사 예정된 유동규 체포
2021-10-02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유동규 구속 영장 청구. - 유동규가 지난 1월 김만배로부터 5억 원을,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 모씨로부터 3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와 배임 등 혐의

날짜	수사경과
2021-10-03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유동규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사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 소환 조사
2021-10-03	법원(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 유동규 구속영장 발부
2021-10-05	경찰,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김만배 등 8명 계좌 압수
2021-10-06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소환 조사
2021-10-06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남욱 사무실 압수수색
2021-10-07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유동규·김문기·화천대유 컨소시엄 추진 하나은행 실무진 소환 조사
2021-10-07	공수처,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 검찰로 이첩
2021-10-08	경찰, 이한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21-10-08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김만배 동생 김석배(화천대유 이사)·김민걸 회계사 소환 조사
2021-10-08	경찰, 화천대유 협력업체 분양대행사 대표 이기성(박영수 전 특검의 친인척) 소환 조사
2021-10-09	경찰, 9/29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라진 유동규 휴대전화 확보
2021-10-09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외교부에 남욱 여권 무효 요청. 경찰, 남욱 소재 파악 위해 인터폴에 공조 요청
2021-10-09	경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민용 소환 조사
2021-10-1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김만배 소환 조사
2021-10-12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김만배 뇌물 공여 및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김만배가 유동규와 함께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그 대가로 유동규에 700억 원 지급 약속. 실제 5억 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 - 전 민정수석인 광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을 통해 50억 원 상당의 뇌물 공여를 했다는 혐의 - 김만배가 화천대유에 빌린 473억 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55억 원이 횡령이라는 의혹
2021-10-14	경찰(국수본)과 검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협의체 구성
2021-10-14	법원(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2021-10-15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성남시청, 문화재청 등 압수수색
2021-10-18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귀국한 남욱 긴급체포. 압송 후 조사
2021-10-20	검찰, 김만배·남욱·유동규·정영학 동시 소환 조사
2021-10-20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남욱 석방 *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석방해야 함
2021-10-2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유동규 구속 기소 - 남욱·정영학·정재창으로부터 3억 5,200만 원 뇌물 수수 - 2021년에 대장동 사업개발 이익의 세금 공제 후 428억 원을 약속받은 부정처사후수뢰
2021-10-2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성남시장실·비서실 압수수색
2021-10-2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김만배·남욱·유동규·정영학 대질 조사
2021-10-24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김만배·남욱 소환 조사.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날짜	수사경과
	소환
2021-10-26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김만배·남욱·정민용 소환 조사
2021-10-27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경제범죄형사부, ‘황무성 사직강요 의혹’ 수사 착수
2021-10-27	경찰, 이한성, 정민용, 조현성(천화동인 6호 대표) 변호사 피의자 소환조사
2021-10-3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정민용 소환 조사
2021-11-0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김만배·남욱·정민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21-11-0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유동규 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추가 기소 - 김만배·남욱·정민용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작성,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 개입, 대장동 개발이익 분배구조 협의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확정이익 분배받도록 하고, 예상 택지개발 이익축소 등 특혜 통해 최소 651억 원 상당 배당이익,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 김만배로부터 5억 원을 받은 부정처사후수뢰
2021-11-04	법원(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만배 구속영장 발부. 법원(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남욱 구속영장 발부, 정민용 구속영장 기각
2021-11-09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이기성·하나은행 관계자 소환 조사
2021-11-09	법원, 검찰 요청에 따라 유동규 공판기일 연기
2021-11-11	법원(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 김만배와 남욱 구속기간 연장 결정 *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음
2021-11-14	김만배, 구속 후 3번째 검찰 소환조사 불응
2021-11-15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유동규 재산 3억 5,200만 원, 8억 원 상당 오피스텔 등 약 11억 원 추정보전 청구 인용
2021-11-15	검경(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 2차 실무진 회의
2021-11-15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 소환 조사. 정민용은 배임 혐의 공범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전담했었음
2021-11-17	경찰, 최윤길 자택 압수수색. 압수수색 영장에 ‘사후수뢰 40억’ 적시
2021-11-18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우형 참고인 소환 조사
2021-11-19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대장동 초기 사업자 씨세븐 당시 대표이사 이강길 참고인 소환 조사, 남욱·정영학 소환 조사
2021-11-2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김만배와 남욱 소환 조사. 배임·뇌물 액수 산정 조사에 주력. 조현성(천화동인 6호 소유주) 변호사 소환 조사.
2021-11-22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김만배·남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정영학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 - 김만배, 유동규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 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 - 남욱, 정민용에게 뇌물 35억 원을 준 혐의 - 김만배·남욱·정민용·정영학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작성,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 개입, 대장동 개발이익 분배구조 협의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날짜	수사경과
	확정이익 분배반도록 하고, 예상 택지개발 이익 축소 등 특혜 통해 최소 651억 원 상당 배당이익,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2021-11-23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정민용 소환 조사
2021-11-26	경찰, 최윤길 소환조사
2021-11-29	검경 수사협의체 회의 개최 - 검찰,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및 자금흐름 수사 - 경찰, 성남시의원 비리와 특혜분양 의혹 집중
2021-12-0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소환 조사
2021-12-03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양재식 변호사(전 박영수 특검 특검보, 남욱의 변호인) 소환조사
2021-12-07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유한기 소환 조사
2021-12-09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 - 2014년 8월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
2021-12-10	유한기 숨진 채 발견
2021-12-2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정민용 불구속 기소
2021-12-21	김문기 숨진 채 발견
2022-01-13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소환 조사
2022-01-14	‘황무성 사직 강요’를 고발한 고발인,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 제출
2022-01-14	경찰(본부장 김광식 경무관), 최윤길 구속영장 신청. 뇌물수수 혐의
2022-01-18	법원(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 최윤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2022-02-03	검찰, ‘황무성 사직 강요’로 고발된 이재명, 정진상 무혐의 처분. 유한기 공소권 없음
2022-02-03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윤성근), ‘황무성 사직 강요’ 재정신청 접수
2022-02-07	검찰,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 20명으로 축소
2022-02-10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정영학 소환 조사
2022-02-15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성과급 40억 원, 연봉 8천만 원)을 약속받은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최윤길 구속 기소
2022-04-04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유동규,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남욱 추가 기소
2022-05-16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천화동인 1호 자금 100억 원을 이기성에게 전달한 횡령 혐의로 김만배 추가 기소
2022-07-04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 개편, 반부패수사3부 담당
2022-07-2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성남시 도시개발 업무 공무원 4명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7-2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성남시 도시개발 업무 공무원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8-0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2011~2013년 당시 성남시 도시개발단장 등 참고인 소환 조사

날짜	수사경과
2022-08-0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이강길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8-0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정민용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8-3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호반건설, 위례자산관리, 푸른위례프로젝트 및 김만배·유동규·남육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20여 곳 압수수색
2022-09-0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위례 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성남의 뜰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 압수수색
2022-09-1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부국증권 임원 소환 조사
2022-09-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소환 조사 불응한 남육 강제 구인 수사
2022-09-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소환 조사 불응한 유동규 강제 구인 수사
2022-09-2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정민용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9-2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최윤길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9-2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유동규·남육·정영학 추가 기소 - 유동규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육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육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육,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득을 취득
2022-10-1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이기성 참고인 소환 조사
2022-10-1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남육 등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8억 원대의 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및 주거지 압수수색. (참고.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수사(2022))
2022-10-20	유동규, 구속기간 만료 석방
2022-10-2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만배·남육·정영학 재산 약 800억 원 추정보전 청구
2022-11-04	법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의 정진상 체포영장 기각
2022-11-0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뇌물 수수 혐의로 정진상 주거지 및 국회 본청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압수수색
2022-11-1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정진상 뇌물 혐의 관련 유흥주점 대표 참고인 조사
2022-11-1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뇌물 혐의로 정진상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1-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1억 4천만 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차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
2022-11-19	법원(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진상 구속영장 발부
2022-11-2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정진상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1-21	남육, 구속기간 만료 석방
2022-11-2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경기도청 압수수색. 정진상의 이메일 기록 등 확보
2022-11-0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의 배우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관련 이재명과 가족 계좌 추적
2022-11-24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2022-11-24	김만배, 구속기간 만료 석방

날짜	수사경과
2022-11-2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정진상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1-2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정진상 구속기간 연장
2022-11-30	법원, 김만배·남욱·정영학 재산 800여억 원 기소 전 추정보전 인용 결정
2022-12-0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2억 4천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정진상 구속 기소, 정진상에게 뇌물 공여한 유동규 추가 기소 [정진상] - 위례 및 대장동 개발 사업 등에 특혜를 제공하고 유동규의 인사 편의 제공 대가로 2013년경 유동규로부터 1억 8천만 원, 2019년~2020년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유동규로부터 현금 3천만 원, 유동규의 개인사업 인허가 편의제공 대가로 3천만 원, 총 2억 4천만 원의 뇌물 수수 -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유동규와 공모하여 특혜를 제공해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로부터 배당이익 428억 원 지급 약속을 받은 부정처사후수뢰 -[유동규·남욱·정영학·정재창 동일 혐의] 유동규와 공모하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욱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욱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익을 취득 - 유동규에게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유동규] - 2019년~2020년 정진상에게 6천만 원 뇌물 공여
2022-12-1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의혹으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이사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체포 및 주거지와 사무실, 김만배의 변호인 사무실 등 10여 곳 압수수색
2022-12-14	김만배, 극단 선택 시도
2022-12-1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김만배 범죄수익 관련 변호인 소환 조사
2022-12-1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김만배 범죄수익 260억 은닉 조력 혐의로 이한성, 최우향 구속영장 청구
2022-12-16	법원(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한성, 최우향 구속영장 발부
2022-12-1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이한성, 최우향 소환 조사
2022-12-1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이한성, 최우향 소환 조사
2022-12-21	이한성, 구속적부심 청구
2022-12-23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최병률 재판장), 이한성 구속적부심 기각
2022-12-30	김만배 퇴원
2023-01-0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김만배의 대장동 범죄수익 275억 원 은닉 조력 혐의로 이한성, 최우향 구속 기소, 범죄수익 1천억 원 추정보전 및 148억 원 압수
2023-01-0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1명 추가 투입
2023-01-0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만배 소환 조사
2023-01-0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이성문 소환 조사
2023-01-0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김만배 소환 조사
2023-01-1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만배·남욱·유동규·정영학·정민용 추가 기소 -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이 공모하여, 2014년~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날짜	수사경과
	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이용해 민간사업자 선정 특혜 제공, 그 결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분양 수익 등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함
2023-01-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피의자 소환 조사 통보
2023-01-1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 정진상과 유동규,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 소환 조사
2023-01-1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김만배 소환 조사
2023-01-1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의혹으로 화천대유 임직원 5명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3-01-2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 정진상 소환 조사
2023-01-2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차 소환 조사
2023-01-3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 김만배, 정영학 소환 조사
2023-02-1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 이재명 2차 소환 조사
2023-02-1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범죄수익 340억 원 은닉 혐의 등으로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2023-02-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배임 및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제공으로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 상당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 - 대장동 개발 이익 확정 분배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정진상, 유동규와 공모해 남옥과 호반건설에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 - 성남FC 후원금 관련 부지 용도변경 특혜 제공 제3자 뇌물 혐의 등 *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 대가 428억 원(전화동인1호 지분 환산액) 약속 관련 제외
2023-02-18	법원(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대장동 수익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만배 구속영장 발부
2023-02-1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김만배 소환 조사
2023-02-2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김만배 소환 조사
2023-02-2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김만배 소환 조사, 범죄수익 은닉 의혹으로 대학 동창 박 모씨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2-2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 김만배 등의 범죄수익 1,270억 원 추가 몰수·추징보전
2023-02-2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김만배 구속기간 연장
2023-02-27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2023-03-06	더불어민주당·정의당, 50억 클럽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 도입 패스트트랙 합의 추진
2023-03-06	검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추가 파견
2023-03-07	검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추가 파견. 검사 총 14명 규모

날짜	수사경과
2023-03-0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범죄수익 390억 원 은닉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닉 및 증거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만배 구속 기소
2023-03-16	검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2명 추가 파견. 검사 총 16명 규모
2023-03-2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배임 등 혐의로 이재명·정진상 불구속 기소 -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이 공모하여, 2014년~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이용해 민간사업자 선정 특혜 제공, 그 결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분양 수익 등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함 - 대장동 개발 이익 확정 분배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 [유동규·남욱·정영학·정재창, 정진상 동일 혐의] 정진상, 유동규와 공모하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욱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욱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득을 취득 *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 대가 428억 원(천화동인1호 지분 환산액) 약속 관련 혐의 제외
2023-04-0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우형, 조현성 변호사 주거지 및 사무실 등 10여 곳 압수수색
2023-04-2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김만배의 범죄수익 총 360억 원을 은닉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성문·이한성·최우항·김만배의 배우자 등 10여 명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
2023-04-2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조현성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4-2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조우형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5-0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현성 구속영장 청구 - 2015년 3월~4월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 대장동 개발 사업 자금 조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7,886억 원 상당의 개발 이득 취득 -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 끼침 - 천화동인 6호 소유주를 조현성 변호사로 허위 기재해, 실소유주로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천화동인 6호 배당이익 283억 원 취득해 범죄수익은닉
2023-05-04	법원(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조우형 구속영장 기각 - 같은 배임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조우형의 범죄 성립 여부,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등 충실한 심리 위해 불구속 적절 판단
2023-05-1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천화동인 6호 명의상 대표 조현성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5-3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천화동인 6호 명의상 대표 조현성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6-0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우형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6-1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전 YTN 배성준 기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3-06-2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우형의 배우자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7-1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천화동인 6호 관련 범죄수익 124억 원 추정보전 청구 인용 언론 보도(총 146억 원 규모)

날짜	수사경과
2023-08-1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배성준 전 YTN 기자(천화동인 7호 소유주)가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의 자택 등 압수수색
2023-08-2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천화동인 7호 관련 범죄수익 27억 원 추징보전 청구 인용 언론 보도(총 120억 원 규모)
2023-09-0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횡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2023-09-06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재판장),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최윤길 · 김만배	2022-08-10	최윤길 보석 석방
	2024-02-14	1심(수원지법 제11형사부 신진우 부장판사 2022고합97) 선고 - 최윤길 :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 징역 4년 6개월 - 김만배 : 뇌물공여 혐의 2년 6개월 - 쌍방 항소
	2025-04-08	2심(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 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 2024노285) 선고 - 최윤길, 김만배 : 무죄 - 검사 상고
	2025-06-00	3심(대법원 제1부 2025도6075) 진행중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영학 · 정민용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2023-01-13	검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2023고합27)에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영학 · 정민용 - 배임 · 뇌물 · 횡령 등 재판(2021고합970) 병합 요청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영학 · 정민용 - 배임 · 뇌물 · 횡령 등	2023-04-28	검찰, 공범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 혐의 반영한 공소장 변경 신청 (배임액 최소 651억 원에서 4,895억 원 등으로 변경)
	2023-06-0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
	2023-08-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준철 부장판사),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영학 · 정민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재판(2023고합27)을 배임 · 뇌물 · 횡령 등 재판(2021고합970)과 병합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영학 · 정민용 - 배임 · 뇌물 · 횡령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2025-06-0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이준철 부장판사 2021고합970) 진행중
정진상 · 유동규 - 뇌물 · 부정처사후수뢰 등	2023-01-30	정진상 보석 청구
	2023-04-21	정진상 보석 석방
	2023-06-13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2022고합1001), 정진상 사건을 형사33부로 분리(김동현 부장판사 2023고합514) 결정

피고인	날짜	내용
		- 정진상의 중복 재판 출석 감소와 방어권 보장, 반복적인 증인 신문 등 비효율 방지 등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과 공소유지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재판부 변경 결정
유동규 - 뇌물공여 등	2025-06-0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2022고합1001) 진행중
정진상 - 부정처사후수뢰 등	2023-10-12	서울중앙지법, 정진상 사건(형사33부 2023고합514) 병합(형사33부 2023고합217)
이재명 · 정진상 -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뇌물 및 성남FC 제3자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등	2023-10-30	서울중앙지법,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사건 재판 병합(형사33부 김동현 부장판사 2023고합217)
	2025-06-1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부장판사 2023고합217) - 이재명, 기일 추후 지정 - 정진상, 1심 진행중

25. 이재명 성남시장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수사(2021)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청탁을 받아 부지 용도변경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사업 참여 배제 등을 결정해 민간개발 사업자가 수천억 원대의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사건 진행상태	▪ 재판중
담당 부서	▪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
주요 처분	▪ 김인섭·정바울 구속 기소 ▪ 이재명·정진상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2021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으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김만배 등이 구속기소 되면서 이른바 ‘대장동 몸통’으로 이재명이 지목되었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장동 사건과 유사하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전라북도로 본사 이전을 앞둔 2015년 2월 11만 2861㎡의 백현동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민간사업자에게 2,187억 원에 매각했었다.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의 핵심은 △ 백현동에 위치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 및 매각 과정과 △ 부지 매각 후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 관계자와 민간사업자 간의 유착 및 대가성 여부다.

2021년 5월, 성남미래정책포럼 등이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감사에 나섰던 감사원은 2022년 4월,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성남시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 용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참여를 이행조건으로 걸었지만 이후 ‘필요 없다’라며 임의로 조건을 누락하고, 확인 과정 없이 ‘공사의 사업 참여 의사가 없다’라고 간주했다고 밝혔다. 이때 유동규는 사업 참여를 검토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사업 참여 시기를 고의로 지연해, 사업에 참여했다면 성남시와 공사가 확보할 수 있던 지분 10%에 대한 300억 원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않아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기부채납 재산 교환 관련 의혹으로 성남시 공무원들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기존에 민간사업자로부터 R&D 용지와 R&D센터 건물을 기부채납 받기로 계획했으나, 해당 공무원들이 사업 과정에서 보다 축소된 규모의 R&D 용지만 기부채납 받기로 결정하면서도 그 가격을 높게 산출해 성남시에 이익인 것처럼 부당하게 검토했다고 봤다. 검찰은 감사원이 의뢰한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성남지청은 다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백현동 개발 사업자 ‘성남알앤디PFV’의 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바울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사무실·주거지 등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김인섭은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이재명과 오랜 친분을 유지했으며, 정바울이 김인섭을 영입한 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진행된 2015~2016년에 정바울이 김인섭에게 2억 3천만 원을 전달하고 성남알앤디PFV 주식을 넘겼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김인섭이 이재명 등과의 친분을 이용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및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수사를 이어가던 경기남부경찰청은 2023년 1월, 알선수재 혐의로 김인섭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청구했으나, 검찰은 추가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은 김인섭을 성남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성남지청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또한 검찰의 병합수사 요청에 따라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알앤디PFV, 김인섭과 정바울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 나갔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반대해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는 전 성남시 공무원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A씨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 것에 반대했다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검찰에 출석하며 준주거지역 변경은 김인섭이 성남시에 로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참고인으로 소환한 다른 전 성남시 공무원 B씨도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해달라는 성남알앤디PFV의 요청에 반대했다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3년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2023년 4월, 검찰은 백현동 개발 인허가 알선 등을 대가로 정바울로부터 77억 원 등의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김인섭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2023년 5월, 2015년 당시 김인섭이 수감 중임에도 정진상을 중심으로 친분을 유지했으며, 백현동 부지 4단계 용도변경과 과정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개발 사업 배제, 임대주택 비율 축소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김인섭을 구속 기소했다.

2023년 6월, 검찰은 정바울이 성남알앤디PFV·아시아디벨로퍼 등의 법인자금 약 480억 원 상당을 사적으로 편취했다며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바울이 편취한 자금 중 일부가 김인섭 등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관련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의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로 정바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정바울을 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연관된 김인섭과 정바울을 구속기소 한 검찰의 수사는 정진상과 이재명으로 향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한 검찰은 2023년 8월, 백현동 부지 개발 과정에서 로비를 받고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이재명에게 피의자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소환 조사에 응한 이재명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한국식품연구원이 혜택을 받았으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 상당 부분인 1천억 원 대의

자금을 환수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아울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개발 사업 참여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을 뿐, 용도변경의 조건이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참여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1주년이던 2023년 8월 31일,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라며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단식 중이던 이재명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두 차례 출석했고, 조사를 마친 후 검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다는 정치 검사라고 비판했다.

2023년 9월 18일,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관 받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배임, 뇌물 등의 혐의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2017년 당시 친분이 있던 김인섭의 청탁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사업 배제를 결정하여, 민간개발 사업자가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에서 1,356억 원의 이득을 챙기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였다. 검찰은 유동규가 이재명과 정진상으로부터 ‘인섭이 형이 하는 사업이니 신경쓰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고, 이재명과 오랜 친분이 있던 김인섭이 정바울에게 백현동 개발 인허가 청탁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절반은 김인섭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재명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고의로 사업에서 배제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재명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끼친 200억 원 중 절반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고 보면서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재명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2023년 9월 21일, 국회는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지만, 2023년 9월 27일, 법원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등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에 대한 피의자 이재명의 지위, 관련 문건과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불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을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관련 의혹으로 검찰이 376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표적 수사·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고, 이에 검찰에서는 2022년 6월 이후 총 36회 압수수색했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2023년 10월 12일,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백현동 개발 의혹을 병합해 이재명과 정진상(공범)을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이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김인섭의 청탁을 수락해 민간개발 사업자에게 백현동 부지 4단계 용도변경,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배제 등의 특혜를 제공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재명이 백현동 개발 특혜 대가로 200억 원을 김인섭 등으로부터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 관련 혐의는 기소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무차별적 쪼개기 기소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으며, 제1야당 대표의 정치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표적 수사 비판에 대해 전 정부에서 시작된 수사이고,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뿐 아니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은 각각 구속이 가능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백현동 민간개발 시행사 성남알앤디PFV 대주주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21.11)]

지검장 이정수 - 차장 김태훈 - 부장 유경필 - 주임 김익수

[수원지검 성남지청 금융·경제범죄형사부('21.11∼'23.01)]

지검장 박은정 - 차장 박하영 - 부장 김윤후 - 주임 최재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 → 광역수사단]

- 청장 치안정감 김원준(∼'21.12), 최승렬(∼'22.06), 박지영(∼'22.12), 우종수('22.12∼)

- 수사부장 경무관 송병일(∼'21.12), 김광식(∼'22.07), 노규호(∼'23.01), 광역수사단장 경무관 김철문('23.01∼)

- 수사대장 총경 고석길(∼'21.12), 정명진('22.01∼) - 경정 이승명(∼'21.12), 신동현('22.0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23.01∼) → 반부패수사제3부('23.09∼)]

지검장 송경호 - 차장 고형곤 - 부장 엄희준('23.01∼, 주임), 김용식('23.09∼)

- 주임 안성민('23.09∼), 김용식('23.10∼)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1-10-20	국회 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발언. 이후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 (참고. ►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수사(2022))
2021-11-01	검찰(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성남시청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백현동 사업 등을 포함한 성남시 전체 도시개발 관련 서류 및 이메일 등을 포함해 압수수색했다는 언론 보도
2021-11-01	국민의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검찰에 고발
2021-11-00	대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 경제범죄형사부 배당
2021-11-25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송. 수원지검 성남지청, 분당경찰서 이송. 분당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이송
2022-04-22	감사원, 백현동 사업 감사 관련하여 유동규 업무상 배임 혐의, 기부채납 재산 교환 관련 의혹으로 성남시 공무원 검찰에 수사 의뢰
2022-04-28	대검, 감사원 수사 의뢰 성남지청 이첩
2022-05-11	수원지검 성남지청, 감사원 수사 의뢰 경기남부경찰청 이첩
2022-06-15	경찰(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백현동 개발 사업자 대표 주거지와 사무실, 로비 의혹 대상자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
2022-06-16	경찰,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2022-07-22	감사원,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보고서 발표
2022-07-00	경찰, 정바울 두 차례 피의자 소환 조사
2022-09-00	경찰, 김인섭 소환 조사
2022-11-00	경찰, 정진상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2-10	경찰, 유동규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1-16	경찰(수사부장 경무관 노규호), 알선수재 혐의 김인섭 사전구속영장 신청. 검찰, 추가 검토 등의 이유로 반려
2023-01-18	경찰(수사부장 경무관 노규호), 알선수재 혐의로 김인섭 수원지검 성남지청 불구속 송치. 수원지검 성남지청, 서울중앙지검 이송
2023-01-00	경찰, 정진상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1-27	경찰, 검찰의 병합수사 요청에 따라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송
2023-01-00	성남시청, 백현동 부지 관련 자료 등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 제출
2023-02-07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관련 이재명과 정진상을 피의자로 적시해 배임과 알선수재 등 혐의로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알앤디PFV 사무실, 정바울과 김인섭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40여 곳 압수수색
2023-02-08	검찰,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추가 압수수색
2023-02-15	검찰,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반대한 후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는 전 성남시 공무원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2-17	검찰,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반대한 후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는 전 성남시 공무원 참고인 소환 조사

날짜	수사경과
2023-03-15	검찰, 성남알앤디PFV 참여한 부국증권 부사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3-2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엄희준 부장검사), 알선수재와 위증 혐의로 김인섭의 측근 구속영장 청구
2023-03-27	법원(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기각
2023-04-10	검찰, 김인섭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4-11	검찰, 정바울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4-1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엄희준 부장검사), 백현동 개발 인허가 알선 등을 대가로 정바울로부터 77억 원 등의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김인섭 구속영장 청구
2023-04-14	법원(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인섭 구속영장 발부
2023-04-16	검찰, 김인섭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4-17	검찰, 김인섭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4-20	검찰, 인천 소재 속기사무소 압수수색
2023-04-21	검찰, 서울 소재 설계용역업체 압수수색
2023-04-26	검찰, 수감중이던 김인섭을 수차례 면회했던 김인섭의 후배 전 성남시 공무원 소환 조사
2023-05-0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엄희준 부장검사), 백현동 개발 인허가를 대가로 77억 원을 수령하는 등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인섭 구속 기소
2023-05-00	검찰, 성남도시개발공사 백현동 업무 담당자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5-11	검찰, 김인섭의 후배 전 성남시 공무원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5-17	검찰,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정바울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 압수수색
2023-05-30	검찰, 정바울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6-0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엄희준 부장검사), 아시아디벨로퍼 등 법인 자금 480억 원 상당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정바울 구속영장 청구
2023-06-09	법원(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바울 구속영장 발부
2023-06-2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엄희준 부장검사), 아시아디벨로퍼 등 법인 자금 480억 원 상당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정바울 구속 기소
2023-07-00	검찰, 성남시 도시계획과 공무원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7-04	검찰, 백현동 ‘웅벽 아파트’ 산지전용협의 담당 성남시 녹지과 공무원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7-25	검찰, 정진상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8-10	검찰, 이재명 피의자 소환 통보
2023-08-17	검찰, 이재명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9-15	수원지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관
2023-09-1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엄희준 부장검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사건 관련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등 혐의
2023-09-21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2023-09-27	법원(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2023-10-1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김용식 부장검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과 병합해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이재명, 공범으로 정진상

날짜	수사경과
	불구속기소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김인섭	2023-10-10	김인섭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부 보석 석방
	2024-02-1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옥곤 부장판사 2023고합380) 선고 - 징역 5년 법정구속, 63억 5천만 원 상당 추징금 - 쌍방 항소
	2024-08-23	2심(서울고법 형사1-1부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 2024노610) 선고 - 징역 5년, 63억 5천만 원 상당 추징금 - 피고 상고
	2024-11-28	3심(대법원 제2부 2024도14048) 선고 - 상고 기각
정바울	2023-11-08	정바울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부 보석 석방
	2025-04-04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 2023고합552) 선고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2025-06-00	2심(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5노1064) 진행중
이재명·정진상	2023-10-1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 배당
	2023-10-30	서울중앙지법,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사건 재판 병합(형사33부 김동현 부장판사 2023고합217)
	2025-06-1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 2023고합217) - 이재명, 기일 추후 지정 - 정진상, 1심 진행중

26.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2022)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두산 등 6개 기업으로 하여금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을 지원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인허가 등의 편의를 봐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및 이에 대해 성남지청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남지청장이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재판중
담당 부서	▪ 사건1(경찰 수사) : 경기남부경찰청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 ▪ 사건1(검찰 수사)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 ▪ 사건2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수원지검 형사6부, 공수처 수사1부
주요 처분	▪ 사건1 : 이재명 · 정진상 · 전 두산건설 대표 A ·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 · 전 네이버 대표 C · 전 네이버I&S 대표이사 D · 전 두산건설 부회장 E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고발했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해당 사건을 분당경찰서로 이첩했다. 이재명 전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인허가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를 지원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다(사건1.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당시의 성남FC는 기업 6곳(네이버 · 농협 · 두산건설 · 분당차병원 · 알파돔시티 · 현대백화점)으로부터 광고비로 160억 원을 받았다. 분당경찰서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재명 전 시장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당시 고발인 측이 이의제기했고 사건은 성남지청으로 송치됐다. 사건을 검토하던 성남지청은 2022년 2월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2022년 9월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 이재명 전 시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재명 전 시장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6년까지 두산건설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부지의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했으며, 2021년 무혐의 처리와 달리 사건관계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추가 증거에 따른 판단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사를 파견받는 등 수사 인력을 확대한 후 이재명 의원과 밀접한 관계라는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의 주거지, 두산그룹 본사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두산건설 전 대표가 두산건설 관계자들과 공모해 성남시 병원부지의 업무시설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5% 면제 등을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정 청탁하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현금 50억 원을 공여한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는 두산건설의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후원금을 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 이재명 전 시장과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이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성남지청은 주빌리은행을 성남FC 후원금 통로로 보고, 당시 주빌리은행 상임이사를 역임한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시 네이버 대표,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정진상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관련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이어서 2023년 1월 성남지청은 이재명 전 시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고, 2월에는 이재명·정진상 관련 사건을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2023년 2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반부패수사3부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과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사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2023년 3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반부패수사3부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과 함께 이재명 전 시장과 정진상 전 정책비서관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6개의 기업으로부터 제3자인 성남FC에 뇌물 133억 5천만 원을 공여하거나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네이버·두산건설 전 경영진 3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유지와 관련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4년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허용구 부장판사는 검사 편법 파견을 문제 삼아 재판 중에 정승원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성남지청 소속이 아닌 검사들이 공판이 있는 날에만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참여하고 있는 것이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였다. 퇴정명령을 받은 정 검사는 성남지청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검사이나, 2023년 9월부터는 부산지검으로 배치되었고, 부산지검에 소속을 둔 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대리 검사로 파견되어 일했다. 그럼에도 성남FC 사건의 공판이 있는 날에만 부산지검 소속 서울중앙지검 파견 검사이자 성남지청 1일 파견 검사로서 공판 업무를 진행하는 ‘이중 파견’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퇴정명령에 반발하며 허용구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지만 잇따라 기각됐다. 퇴정명령에 대해 검찰이 이의신청한 건은 항고심 심리중이지만, 대검찰청은 직무대리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며 계속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성남지청이 사건을 검토하던 중,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2022년 1월 25일 돌연 사직의사를 밝혔고, 그 배경을 두고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해당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외압을 행사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사건2.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무마 의혹). 수원지검이 진상규명에 착수했으나, 경위보고서가 김오수 검찰총장 지시 후 하루 만에 급조되었고, 여기에 박은정 지청장의 입장이 반영되어 내용이 수정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2022년 1월,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하여 단체들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정 지청장을 검찰, 공수처에 각각 고발했다. 이후 고발인 조사 등 일부 수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수사 진척 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사건1.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A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

전 네이버 대표 C

전 네이버I&S 대표이사 D

전 두산건설 부회장 E

[사건2.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무마 의혹]

김오수 전 검찰총장

박은정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사건1.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경찰 수사

[경기남부 분당경찰서]

서장 김수영(~'22.07)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대장 정명진('22.07~)

[검찰 수사지휘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

지청장 박은정 - 차장 박하영(~'22.02) - 부장 김윤후(주임)(~'22. 07)

사건1.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검찰 수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 지청장 이창수(~'23.09), 전무곤(~'24.05), 서정식('24.06~)

- 차장 조상원(~'23.09), 박규형(~'24.06), 강백신('24.06~)

- 부장 유민종(~'23.09, 주임), 하준호(~'24.06), 강성기('24.06~) - 주임 비공개('23.09~)

[서울중앙지검검찰청 반부패1부·반부패3부]

지검장 송경호 - 4차장 고희곤 - 부장 엄희준 - 주임 비공개

사건2.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무마 의혹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지검장 이정수 - 4차장 김태훈 - 부장 조주연 - 주임 비공개(~'22.03)

[수원지검 형사6부]

지검장 신성식(~'22.05), 홍승욱(~'23.09), 신봉수(~'24.05), 김유철('24.05~) - 차장

양중진(~'22.07), 김형록(~'22.09), 김영일(~'23.09), 이정섭(~'23.11), 안병수('23.11~) -

부장 김형석(~'22.07), 김영남(~'23.09), 서현욱('23.09~) - 주임 비공개

[공수처 수사1부]

처장 김진욱 - 차장 여운국 - 부장 공석(이대환 직무대행, ~'22.09), 김명석('22.10~) - 주임
최진홍²³⁶

4. 수사 경과 및 결과

사건1.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

날짜	수사경과
2018-06-10	바른미래당, 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선거 후보 검찰 고발
2018-06-16	경찰(분당경찰서),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 착수
2021-09-07	경찰,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무혐의 결정
2022-02-07	성남지청,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
2022-05-02	경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2022-05-17	경찰, 두산·성남FC 압수수색
2022-07-04	분당경찰서, 성남FC 의혹 사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송
2022-09-13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검찰 송치
2022-09-16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두산건설, 성남FC, 성남시청, 정진상 더불어민주당대표 비서실장 주거지(전 성남시 정책실장, 전 경기도 정책실장) 등 20여 곳 압수수색
2022-09-20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두산그룹 본사 압수수색
2022-09-24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성남FC 전 대표 박선우 변호사 참고인 조사.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정진상 실장과 모든 것을 상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
2022-09-26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경찰 보완수사 당시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던 네이버, 주빌리은행, 차병원 포함 10여 곳 압수수색
2022-09-27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박선우 전 성남FC 대표 이메일 등 임의제출 수령
2022-09-30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뇌물공여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수수)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불구속 기소. -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당 대표 정부조정실장과 공모했다고 적시
2022-10-04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농협은행 본사와 성남시지부, 알파돔시티 서울 및 판교 사무실,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판교점 등 7곳 압수수색
2022-10-06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성남FC후원 및 신사옥 건설 업무를 맡은 네이버 직원 등 3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2022-10-25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성남FC 인수를 검토했던 안산시청 압수수색
2022-12-15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소환 조사
2022-12-21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정진상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2-21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의자 소환

²³⁶ 공수처는 2025년 5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참여연대가 사건 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분하고,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그러나 2023년 2월, 공수처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분공개 결정하며 수사지휘라인 중 주임검사 이름을 공개한 바 있음. 따라서 2023년 당시 참여연대가 조사했던 자료를 기반으로 반영함.

날짜	수사경과
	요구
2022-12-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소환 요구 불응
2023-01-10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2-15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 이송
2023-02-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죄 등 - 위례 및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경법상 배임, 구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2023-02-21	정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2023-02-27	국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2023-03-10	성남FC와 네이버의 후원 등을 합의했다는 혐의를 받던 전모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사망
2023-03-2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이재명·정진상 불구속 기소 -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관련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푸른위례가 제3자인 성남FC에 뇌물 133억 5천만 원 공여 또는 요구한 혐의 - 대장동 개발 이익 확정 분배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
2023-03-22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중 부장검사), 네이버·두산건설 전 경영진 3명 불구속 기소 -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이사 :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 : 뇌물공여 혐의

사건2.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무마 의혹 수사

날짜	수사경과
2018-06-10	바른미래당, 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검찰 고발
2018-06-16	경찰(분당경찰서),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 착수
2021-09-07	경찰,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무혐의 결정
2022-01-25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 사의 표명. 갑작스러운 사의 배경을 두고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무마하려 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 제기됨
2022-01-26	김오수 검찰총장,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 무마 의혹 경위 파악을 지시
2022-01-27	신성식 수원지검장,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경위 보고서 제출. 박은정 지청장과 박하영 차장검사 간의 갈등은 법리 검토와 보완 수사의 선후 관계에 관한 것으로 밝혀짐. 박은정 지청장은 경찰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제3자 뇌물 혐의'가 성립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박하영 차장검사는 보완 수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
2022-01-27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박은정 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

날짜	수사경과
2022-02-03	한번,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직무유기죄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 장영하 변호사도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정 지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2022-02-07	검찰,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박은정 지청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 배당
2022-02-09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박은정 지청장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2022-03-14	공수처, 박은정 지청장 고발 사건 수사 1부 배당
2022-03-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박은정 지청장 고발 사건 수원지검으로 이송
2022-03-18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은 박은정 지청장 고발 사건 형사6부 배당
2022-04-01	공수처, 한번 이재원 회장 고발인조사 진행
2022-08-07	수원지검, 박은정 검사 수사 무마 의혹 고발 관련 박하영 차장검사 참고인 조사
2022-08-10	수원지검, 박은정 검사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전 성남FC 수사팀 A주임검사 조사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전 두산건설 대표 A,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	2025-06-00	1심(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허용구 부장판사 2022고합260) 진행중
이재명·정진상 -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2025-06-1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 2023고합217) - 이재명, 기일 추후 지정 - 정진상, 1심 진행중
이재명·정진상 -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뇌물 및 성남FC 제3자 뇌물 등	2023-10-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사건 재판 병합

27. [대장동2]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2022)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을 근거로 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1년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수사

사건 진행상태	▪ 재판중
담당 부서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반부패수사3부
주요 처분	▪ 김용 구속 기소 ▪ 남욱, 정민용, 유동규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2022년 10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 강백신)는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선 경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남욱 등 민간사업자로부터 8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용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민주연구원이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당직자, 당원 등의 반발이 이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의 임의제출 제안을 거절한 검찰은 8시간여 대치하다 철수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등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대장동 민간개발사업자인 남욱이 조성한 자금을 천화동인 4호 이몽주 이사에게 전달하고, 다시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과 유동규를 거쳐 김용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김용이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본부부장을 맡았으며 이재명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남욱에게 받은 8억 원을 대선 경선에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유동규와 정민용이 설립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가 김용에게 세 차례에 걸쳐 자금을 전달했다고 파악했다.

김용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냈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반전을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는 등 검찰 수사에 대해 반발했다. 김용이 부원장으로 임명된 후 민주연구원에 한 시간씩 세 차례만 방문했고, 공용컴퓨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으로 확보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임의제출 형식을 제안했음에도 검찰이 거부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서욱 전 국방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 조사 등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과 감사원 등을 지적하며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재명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목적으로 하는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용의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나 국정감사 일정 방해 의도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압수수색 저지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관련해 수감 중인 유동규가 10월 20일 자정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시점에서 검찰이 김용을 체포하고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한 것이 유동규와 검찰이 유죄협상(플리바게닝)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특히 검찰이 유동규의 구속 연장을 위해 재판 병합 신청 등을 했다면서도 재판부에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유동규가 검찰청사에서 동거인을 만났고, 변호사의 접견이 거부된 것이 유동규를 회유한 정황이라는 것이었다. 검찰은 유동규의 유죄협상(플리바게닝) 의혹에 대해 형량은 법원 판단을 통해 결정되므로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변호인 입회가 없는 조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유동규와 동거인을 함께 조사했을 뿐이며, 회유를 위해서라면 유동규를 석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혹을 반박했다.

2022년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김용이 유동규 및 정민용과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민간개발사업자 남욱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21년 2월, 김용이 유동규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가량을 요구했으나 8억 원을 받았고, 이 자금이 2021년 6월 말부터 본격화한 이재명의 대선 경선에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압수수색 무산을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 하나인 ‘도망할 우려’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법원은 김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용은 8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2022년 10월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김용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항의와 반발에도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용의 범죄혐의와 무관한 문서 파일 4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도중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김용을 구속 기소하고 자금 마련 및 전달한 혐의로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전략기획실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 유동규, 정진상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에 연루된 김만배에게 대장동 수익금 700억 원 중 공통비 등을 제외하고 약속한 428억 원의 지급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직접 전달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한 김만배가 자금을 주지 않았다. 김용이 유동규를 통해 대선 경선 자금을 다시 요구하고, 유동규가 이를 남욱에게 전달하자 김만배 동업자인 남욱이 안양 박달동 탄약고 부대 이전 사업,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허가 등에 대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이재명의 대선 경선을 준비하면서, 김용이 유동규와 공모해 남욱에게 자금을 요구하고,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8억 4,700만 원을 수령한 후 이 중 6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김용에게 전달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검찰은 유동규가 김용에게 자금을 전달한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지 않았고, 이재명의 대선 경선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이재명의 지시 여부나 공모관계도 적시하지 않았다.

김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재명을 목적으로 한 ‘여론몰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검찰이 김용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는 보도가 나간 다음 날, 한 언론사가 김용, 유동규, 정진상이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428억 원의 지급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피의자인 김용이 공소장을 받기도 전에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출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비판하며 수사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 등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22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김용이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 9천만 원을 수수했고 이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가 만료되어 뇌물 수수 혐의로 김용을 추가 기소했다. 김용은 검찰이 공소장에 2014년 4월경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기재했음에도 뇌물 혐의로 둔갑시켰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공방은 더욱 치열해졌다. 남욱은 불법 정치자금 8억 4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공모관계는 부인했고, 정민용은 공동정범 사실을 부인했다. 유동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김용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용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김만배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이익 분배를 약속하지 않았으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유동규 등의 진술에만 의존한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남욱의 부하직원인 이몽주가 자금 전달 과정을 기록한 일명 ‘8억 메모’, 자금을 전달한 장소로 지목된 아파트 주차장 등의 차량 출입 내역, CCTV 영상, 유동규가 보유하고 있던 돈가방과 종이 상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증거를 공소장에 기재하지는 않고 재판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재판부가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고 2023년 1월,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재작성을 명령했다. 검찰이 김용의 공소장에 범죄 혐의보다 김용과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이 친분을 맺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집중한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은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기재하고,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김용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물증, 즉 직접 증거없이 유동규 등의 진술에만 의존했고, 자금을 주고받은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김용의 재판에서 유동규가 김용에게 자금을 전달한 날짜를 특정했다. 또한 자금을 조성하고 유동규에게 건넨 남욱, 정민용 등이 자금 전달 날짜와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김용은 검찰이 특정한 날짜를 수정하고, 증인 신문이 종료된 후 자금 전달 일시를 특정한 것은 피의자 방어권을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석을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해 김용은 석방됐다.

2022년 11월, 남욱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김용,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 김만배 등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인터뷰, 법정 진술에서 그간의 입장을 번복했다. 자신의 입장 번복에 대해 남욱은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그간 검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유동규가 먼저 자백한 이후 사실 관계를 밝혔다고 진술했다. 공판이 진행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가 돈을 전달했다는 증언이 오락가락하면서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이 실제로 김용이 돈이 든 백을 들고 갔는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 검찰이 혐의 입증에 불리한 증거는 조서에서 누락시켰다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재판에서 김용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 수사 등이 별도로 진행됐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천화동인 4호(현 NSJ홀딩스) 소유주

정민용 변호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지검장 송경호 - 4차장 고희곤 - 부장 강백신 - 주임 호승진, 강백신('22.11~) - 이하 비공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지검장 송경호 - 4차장 고희곤 - 부장 엄희준 - 주임 정일권 - 이하 비공개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2-10-1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남욱 등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8억 원대의 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및 주거지 압수수색
2022-10-1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불법 대선자금 정황으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더불어민주당 측 반발로 8시간여 대치 후 철수
2022-10-20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증거인멸교사 혐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
2022-10-2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용 구속영장 청구
2022-10-22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용 구속영장 발부
2022-10-2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용 피의자 소환 조사. 김용, 검찰 수사 항의로 진술 거부
2022-10-2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2022-10-2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용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0-2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용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0-25	경찰, 유동규와 동거인 신변보호 결정

날짜	수사경과
2022-10-2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용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0-2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용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0-2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용 구속기간 연장
2022-10-3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용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0-3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용 피의자 소환 조사. 김용 계좌 추적
2022-11-0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 유동규 동거인 소환 조사
2022-11-0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용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1-0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용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1-0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자금 전달 과정을 기록한 메모를 제출한 남욱의 부하직원 이몽주, NSJ홀딩스(전 천화동인 4호) 사내이사 김 모씨 참고인 소환 조사
2022-11-0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용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1-0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용의 예금과 채권 등 불법으로 수수한 정치자금 6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
2022-11-0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용 구속 기소. 남욱, 정민용, 유동규 불구속 기소
2022-11-25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조병구 부장판사), 김용의 재산 6억 원 추징보전 명령
2022-12-2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뇌물 혐의로 김용 추가 기소
2023-06-0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용 재판 위증 혐의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사무실과 자택 등 압수수색
2023-08-1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김용 재판 위증 혐의 수사 위해 이재명의 대선캠프 박모, 서모 상황실장 자택 등 압수수색
2023-08-2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로 김용의 선임변호인 이모 변호사 압수수색
2023-08-2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김용 재판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구속영장 청구
2023-09-02	서울중앙지방법원(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홍우 구속영장 기각 :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며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있다고 보기 어려움
2023-10-1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위증 혐의로 이홍우 소환 조사
2023-12-1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위증 혐의로 이홍우 피의자 소환 조사
2023-12-2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김용의 알리바이 조작 관여 의혹으로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주거지와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3-12-27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김용의 알리바이 조작 의혹 관련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참고인 소환 조사
2024-01-15	법원(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위증교사 등 혐의로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박모 및 서모 씨 구속영장 발부
2024-02-0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 사용 혐의로 이홍우 불구속 기소, 이홍우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등 혐의로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박모 씨와 서모 씨 구속 기소
2024-02-1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위증교사 혐의로 김용의 변호인 이모 변호사 피의자 소환

날짜	수사경과
	조사
2023-08-1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용 전 부원장 재판 위증 관련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선대위 관계자 박모씨, 서모 씨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3-08-2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 위증과 관련한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모 변호사 주거지 압수수색
2023-09-24	검찰, 김용에게 징역 12년, 벌금 3억8천만원, 7억9천만원 추징 구형
2023-11-19	검찰, 이홍우 변호사에 대해 위증교사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
2023-12-22	검찰, 위증교사에 관여한 것으로 추측되는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을 전격 압수수색
2024-01-15	검찰, 이홍우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박모, 서모 구속영장 발부
2024-02-01	검찰, 위증교사 등 혐의 박모, 서모 구속기소,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홍우 불구속 기소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김용(뇌물수수혐의)	2022-12-29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조병구 부장판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병합(2022고합875)
김용·유동규·남욱·정민용	2023-05-04	김용 보석 석방
	2023-11-3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조병구 부장판사 2022고합875) 선고 - 김용 :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 일부 유죄. 징역 5년, 벌금 7천만 원, 6억 7천만 원 추징, 보석 취소 및 법정구속 - 남욱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일부 유죄. 징역 8개월 - 유동규, 정민용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지만, 검찰이 기소한 것과 같이 불법정치자금 수수자(김용)의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선고 전 재판부가 이들을 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검찰에 공소사실 검토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았음.) : 쌍방 항소
	2024-05-08	김용 보석 석방
	2025-02-06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2023노4029) 선고 - 김용 : 1심 동일(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억 7천만 원), 보석 취소 재법정구속 - 남욱 : 1심 동일(징역 8개월), 법정구속 안함 - 유동규, 정민용 : 1심 동일(무죄) : 쌍방 상고
	2025-06-00	3심(대법원 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 2025도3148) 재판중
	2025-04-02	김용, 보석 신청

28.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2022)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중 쌍방울그룹과의 유착, 이재명의 측근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이 제기된 사건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재판중
담당 부서	▪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형사1부, 형사6부(쌍방울 통합수사팀)
주요 처분	▪ 사건1 : 이재명 무혐의 처분(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 사건2 : 이화영 · 방용철 · 안부수 · 김성태 · 양선길 · 수행비서 박모 씨 · 쌍방울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 구속 기소, 이재명 불구속 기소 ▪ 사건3 : 전 수원지검 형사6부 B 수사관 · 쌍방울그룹 임원 C 구속 기소, D 변호사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사건1.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간 동안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캠프는 변론 업무를 맡은 변호인단에 수임료 2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2021년 10월,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한 시민단체 대표 이병철의 제보를 받고 이재명이 사건을 맡은 이태형 변호사에게 현금과 주식을 포함해 20여억 원을 준 의혹이 있고, 2년간 계속된 재판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100억 원 넘게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재명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맞지 않는다면 부당한 자금사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을 검찰에 고발하며,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이태형 변호사와의 대화 녹음 파일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비 의혹을 제보한 이병철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이재명 낙선 운동에 참여한 인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캠프는 정치적 타격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고발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이병철은 이재명의 사건을 맡았던 이태형에게 ‘3억에 주식 23억 원, 총 25억 원을 받았다고?’라고 묻자, 이태형이 ‘개인 신병 사건은 3억 원을 받는다’라고 답한 통화, 이병철과 지인 최모 씨와의 통화 등 총 3건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2021년 11월, 이재명을 2차 고발했다. 그러나 ‘주식

20억 원’ 등의 발언은 이태형 변호사의 수임료를 부풀려 일부 금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병철과 공모하여 지어낸 말이라고 최 모씨가 밝히면서 녹음 파일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한편, 국민의힘과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주식 20억 원’의 출처로 쌍방울그룹을 지목했다. 이재명의 변호인인 이태형 변호사, 나승철 변호사, 이재명의 측근인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키텍스 대표이사가 각각 쌍방울그룹의 각기 다른 계열사 등의 사외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태형의 녹취록에 언급된 ‘3년 뒤 팔 수 있는 주식’이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CB)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쌍방울그룹은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이재명 캠프도 쌍방울그룹과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한편, 2022년 1월,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녹음 파일을 공개했던 이병철이 숨진 채 발견되었고, 경찰은 이병철이 대동맥 파열 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종현 부장검사)는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의 고발 건에 대해 2021년 11월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과 서울지역 세무서 네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수사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가, 2022년 9월 8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을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이고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들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이재명 발언의 허위 여부를 공소시효 내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이태형 등이 받은 변호사 수임료를 확인했으나 이재명의 당시 경기도지사직의 향방이 걸린 재판인 만큼 이재명이 아닌 쌍방울그룹이 수임료를 대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불기소 처분 결정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만 무혐의 처분을 했을 뿐, 국민의힘이 고발한 뇌물수수 등 혐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2. 쌍방울그룹 뇌물 및 대북송금 의혹 수사의 시작

2022년 2월,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수원지검 형사6부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쌍방울그룹의 CB(전환사채) 내역 조사를 의뢰했다. 쌍방울이 2020년 4월 45억 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CB를 발행해 2021년 3월 조기 상환한 후, 6월에 쌍방울의 CB를 구매한 익명의 5인이 CB의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최대 5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한편, 이재명과 쌍방울그룹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던 2022년 6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기자로부터 ‘평소 친분이 두터운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김성태를 소개했다’라는 진술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었다. 그러나 김만배는 최우향이 2018년에 쌍방울에서 퇴직했고 최우향과 2021년 10월 사적 금전거래를 했을 뿐 쌍방울그룹과 무관하며 김성태와도 만난 적은 있으나 금전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쌍방울그룹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김성태는 2022년 5월 하순 싱가포르로 출국한 후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2022년 8월,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형사6부는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의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사건3. 수사기밀 유출 의혹 수사

2022년 7월, 이태형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쌍방울그룹 수사 관련 검찰 자료가 발견되었다. 검찰은 검찰 내부 수사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긴급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를 진행한 수원지검 형사1부는 쌍방울그룹 측이 검찰수사관 출신 임원 C를 통해 B 수사관에게서 계좌 압수수색 영장 초본 등 수사자료를 건네받았고, 핵심 피의자인 김성태·양선길 전현직 회장은 그 직후 해외로 도주성 출국한 것으로 보았다. 이태형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으로 쌍방울그룹 사외이사 출신이자 마찬가지로 이재명 변호인단 중 1명이었던 D 변호사도 유출된 수사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다.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B 수사관과 C 임원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 기소하고, D 변호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2-1.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 수사

2022년 8월 말, 언론 보도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 쌍방울그룹이 각종 이권을 노리고 경기도에 수억 원의 대북교류행사 비용을 우회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8년 11월, 경기도는 민간 대북교류 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와 공동으로 대북교류행사를 주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때 행사 유치를 주도한 이가 쌍방울그룹 사외이사 출신의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다.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는 애초 경기도가 행사 비용 전부를 부담할 계획이었으나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도지사 권한 예산 3억 원만 집행했으며, 남은 5억 원을 부담한 아태협의 유일한 후원 기업이 쌍방울그룹이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행사를 통해 교류협력사업 본격화 약속이 이뤄지면서 쌍방울그룹 계열사는 주가 상승 성과를, 이재명은 대북교류 성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이에 아태협 안부수 회장은 여러 지자체에 국제대회 행사 주최 제안을 했지만 경기도만 수락했고, 쌍방울그룹 또한 선의의 후원자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경기도청·아태협 등과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의 주거지·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도청과 아태협 등에는 쌍방울그룹이 아태협을 통해 대북 관련 행사를 우회지원한 과정과 대가성 여부(횡령 및 배임 혐의), 이화영에 대해서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할 당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로 1억여 원을 쓴 혐의(뇌물 수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1월, 한 언론사에서 이화영이 쌍방울그룹의 사외이사에게 지급되지 않는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 10개월 만에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이후 수원지검 형사6부는 수사를 거쳐 2022년 9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 뇌물 공여 및 증거인멸, 범인도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쌍방울그룹이 이화영을 고문으로 위촉한 2011년 10월부터 고문료 1억 8천여만 원을, 사외이사로 영입한 2017년 3월부터 3,8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화영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취임했던 2018년 7월부터 쌍방울 총무팀 명의 신용카드를 지급했으며 2021년 9월 킨텍스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또 다른 신용카드를 지급해 총 1억 9,900여만 원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화영의 측근 E씨를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기재해 이화영에게 우회 지원한 자금과 차량 리스비 등 3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중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 재임 시기에 받은 2억 6천만 원은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이화영 평화부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위해 아태협을 통해 총 8억 원의 자금을 우회 지원하고, 아태협에게 사무실을 무상 제공했다고 봤다. 또 2019년 1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와의 경제협력 합의서 체결, 2019년 5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경험 합의서 작성에 이화영이 관여해 쌍방울그룹에게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대북 테마주로서 주가 상승이 있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이화영과 방용철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2022년 10월 14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을 구속 기소하고, 이화영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도피를 돕는 등 뇌물 공여, 범인도피,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방용철을 구속 기소했다.

사건2-2.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

2022년 10월 6일, 한 언론사가 아태협과 쌍방울그룹 계열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11월 경기도가 주최한 대북교류행사에 쌍방울그룹이 아태협에 2억 원을 후원한 직후 아태협이 1억 8천만 원을 달러로 환전했고, 2019년 1월 24일 아태협 안부수 회장이 쌍방울그룹의 계열사 나노스 사내이사로 취임했으며, 2019년 5월 나노스가 중국 선양에서 북한 희토류 등 광물 사업권 등 북측과 경제협력 합의를 맺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아태협이 투자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투자금을 모아 대북 관련 코인을 발행했으며, 2018년 경기도가 주최한 대북교류행사에 전시된 북한 그림 수십 점이 밀반입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2022년 10월 14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쌍방울그룹이 대북 사업을 위해 중국으로 자금을 반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그룹 임원 아무개씨와 안부수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가 확보한 아태협 내부 문건에서 ‘2018년 12월 안부수가 통일부 승인 후 평양 방문시 북한에 7만 달러를 지급했다’라는 등의 언급이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안부수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의 연결고리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22년 10월 17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2019년 당시 쌍방울그룹이 수십억 원의 자금을 달러로 교환한 후 임직원 60여 명을 동원해 중국 선양 공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재산 도피 혐의)가 있다며 쌍방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자금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송금되었을 것으로 보고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2022년 11월, 수원지검 형사6부는 출국금지 조치 후 잠적했던 안부수를 긴급체포했고, 이후 수원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년 11월 29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018년 10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양을 방문해 북한 조선아태위와 스마트팜 지원산업 등 6개 분야 교류 협약을 맺었으나 경기도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8년 12월 중국 단둥에서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 등 북측 고위관계자가 안부수, 김성태, 방용철을 만나 경기도 대신 쌍방울그룹에 50억 원 지원을 요구했고, 안부수와 김성태가 수락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2019년 1월 쌍방울그룹이 중국으로 밀반출한 640만 달러(한화 약 72억 원) 중 김성혜가 요구한 50억 원이 포함되었고 이 과정에 안부수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

김성태와 양선길의 체포 후 속도 붙은 각종 의혹 수사

2023년 1월 10일, 태국 경찰이 김성태와 양선길을 체포했고, 수원지검 형사6부는 한국행 비행기에서 김성태와 양선길을 체포해 조사했다. 김성태는 쌍방울그룹의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횡령, 대북송금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1월 19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2018년~2019년 쌍방울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매입 자금 확보를 위해 회사자금 30억 원을 빼돌리고 본인 지분 향상을 위해 투자조합의 다른 조합원 지분을 고의로 감액해 4,5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2019년~2022년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3억 원을 공여한 혐의, 2019년 대북사업 로비 명목 등으로 500만 달러(한화 약 60억 원)를 밀반출해 북한에 건넨 혐의, 회사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김성태와 양선길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포함되지 않았다. 쌍방울그룹 등 수사의 시작이었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막상 제외되면서 이재명에 대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과 김성태가 200억 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과 매입을 통한 비자금 조성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23년 1월 18일, 이화영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2019년~2020년 김성태의 비서실장이었던 아무개씨는 김성태와 이재명이 가까운 사이라고 증언했다. 김성태와 이재명은 서로를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가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던 경기도 주최 ‘한국기업 간담회’에서 이화영을 통해 이재명과 통화했고, 이재명이 ‘고맙다’라는 발언을 했으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월, 4월에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으로 5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목적으로 추가로 3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는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러자 불법 대북송금은 이적 행위라는 국민의힘의 비판과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는 이재명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재명은 김성태가 주장한 통화 당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경까지 재판을 받고 있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과 김성태의 통화 연결 당사자이자 수감 중인 이화영은 자신과 이재명, 경기도는 김성태와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무관하며 관련 보도는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는 옥중 입장문을 발표했다.

2023년 2월,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019년 당시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등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 밀반출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2018년~2019년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3차례의 전환사채(CB) 발행시 허위공시해 주가조작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019년~2021년

쌍방울그룹 임직원 명의로 설립한 비상장회사 자금 592억 원 횡령 및 배임 혐의, 2018년 7월~2022년 7월까지 이화영에게 차량 리스비 등 3억 3천만 원가량을 제공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이 중 2억 6천만 원에 대한 뇌물 공여, 2021년 10월 중 임직원의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김성태를 구속 기소했다. 김성태와 공모해 358억 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양선길도 구속 기소했다.

한편, 2022년 12월, 수원지검 형사6부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김성태의 매제인 ‘금고지기’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를 태국에서 체포했으나 김 모씨가 태국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해 송환 일정을 조율하지 못했다. 이후 2023년 2월이 되어서야 김 모씨가 국내로 송환되었다. 김 모씨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과정에서 자금 조달과 환전 지시 등 자금 마련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했고, 김성태의 비자금 조성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 지목되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김 모씨가 직접 작성한 회계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조사하고, 김 모씨가 김성태와 공모하여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이재명 수사

2023년 2월, 수원지검 형사6부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4자 대질 신문, 이화영과 김성태, 이화영과 안부수의 대질 신문을 진행하며 22일간에 걸쳐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 수사와 이화영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혐의를 부인하던 방용철은 이화영의 요청으로 법인카드 등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부인하던 안부수도 대질 신문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3월, 수원지검 형사6부는 2018년 10월 이화영이 경기도 차원에서 북한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에게 북한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한 후 UN 및 미국의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에 약속한 금액을 지원할 수 없게 되자 김성태에게 대납을 요구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북한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김성태와 상의해 300만 달러를 방북 대가로 지급했다는 등의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들어 이화영을 추가 기소했다. 이화영은 스마트팜 지원 명목 500만 달러에 대해 계약금 성격이 있다는 쌍방울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 검찰이 압수한 쌍방울 내부자료에 대북사업 합의 대가 1억 달러 중 계약금 500만 불 지급이 명시되었다는 점을 들어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의 시초가 되었던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진척되지 않으면서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확대하는 검찰 수사 의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2022년 9월 말, 수원지검 김형록 2차장검사를 보직 배치 두 달여 만에 감사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하고, 역시 평택지청장으로 임명된 지 두 달여 만에 김영일 당시 지청장을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이동 배치한 것에 대한 의문이 일었다.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수사책임자인 차장검사를 감사원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하는 것이 이례적인 만큼 쌍방울그룹 관련 의혹 수사 미진에 대한 좌천 혹은 경질성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김영일 검사가 과거 윤석열, 한동훈 등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한 이력, 윤석열 검찰총장 시기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1담당관으로 근무한 이력 등을 들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윤석열사단’인 김영일 차장검사를 통해 ‘우회적 수사지휘’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2019년 2월 복미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당시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아닌 경기도 차원의 스마트팜 지원 및 방북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법정 진술 등이 공개되고, 이재명이 2019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경기도지사직 유지가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같은 해 11월에 김성태가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것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피의자 및 참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발언, 이재명에 대한 제3자 뇌물죄 또는 직접 뇌물죄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 등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이른바 ‘검찰발’ 여론몰이 수사, 검증 없는 기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화영 1심 재판의 결과와 이재명 기소

검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고, 2023년 8월 이재명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 수사는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검찰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재명 소환조사에 활용된 검찰 측 질문지에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1주년이던 2023년 8월 31일,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라며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단식 중이던 이재명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두 차례 출석했고, 조사를 마친 후 검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다는 정치 검사라고 비판했다. 2023년 9월,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이재명은 이화영과 김성태의 검찰 진술은 회유·협박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병합해 특가법상 배임 및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국회가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은 제기된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재명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수원지검은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로 대북송금을 포함한 쌍방울 그룹 관련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그런데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2차장검사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이 심화되자 검찰은 수원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하고, 이정섭 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직무대리 발령했다. 의혹이 불식되지 않으면서 결국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까지 이어졌다. ▶ 참고 :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수사\(2023\)](#)

2024년 5월, 언론보도를 통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매개로 주가 부양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문건이 공개되면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이재명의 연결고리를 전면에 내세우고자

해당 의혹을 노출시키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에 불법 대북송금 경위 등이 담겨 있으며, 법원 심리 과정에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심리 또한 거쳤다면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2024년 6월, 이화영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는 경기도가 지급해야 했던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이재명에게 쌍방울의 대납을 실제로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이재명을 제3자뇌물,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이화영(제3자뇌물 혐의)과 김성태(뇌물공여 혐의) 또한 추가 기소했다.

이후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담당 박상용 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위법성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의 권한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검찰총장의 위험적 발언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대상이 된 검사들에게 국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이재명을 기소한 서현욱 검사가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후 이재명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 등 혐의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법률적 평가를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공소장을 다시 정리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재명 승인 아래’ 등과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쓰면서도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승인했다’라는 법률적 평가에 그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사건1.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이태형 변호사

[사건2. 쌍방울그룹 뇌물 및 대북송금 의혹 수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

김 모 전 쌍방울그룹 ‘금고지기’ 재경총괄본부장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사건3. 수사기밀 유출 의혹 수사]

전 수원지검 형사6부 B수사관, 쌍방울그룹 임원 C, D 변호사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사건1.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지검장 신성식(∼'22.05), 홍승욱(∼'23.09) - 차장 최재민(∼'22.07), 김형록(∼'22.09) - 부장 김종현(∼'22.07), 정원두('22.07∼) - 주임 비공개

사건2. 쌍방울그룹 뇌물 및 대북송금 의혹 수사

[수원지검 형사6부(쌍방울 통합수사팀)]

- 지검장 신성식(∼'22.05), 홍승욱(∼'23.09), 신봉수(∼'24.05)
- 차장 최재민(∼'22.07), 김형록(∼'22.09), 김영일(∼'23.09), 이정섭(∼'23.11), 안병수('23.11∼)
- 부장 김병문(∼'22.07), 김영남(주임, ∼'23.09), 서현욱(주임, '23.09∼)
- 공판 검사 송민경, 김성훈, 고두성, 함석욱, 이영주, 안지영, 전종택

사건3. 수사기밀 유출 의혹 수사

[수원지검 형사1부]

지검장 홍승욱 - 차장 박찬록 - 부장 손진욱(주임) - 공판 검사 박상용, 함석욱, 왕은진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1-10-07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이재명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2021-10-08	대검,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
2021-10-14	서울중앙지검, 변호사비 대납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로 이송
2021-10-28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이민구 대표 고발인 조사
2021-11-15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법조윤리위원회 및 서울 지역 세무서 네 곳 압수수색
2021-11-16	국민의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
2021-11-18	국민의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허위사실공표·청탁금지법 및 국회증언감정법(위증)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
2021-11-19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CB발행 등에 대해 쌍방울그룹 재무담당 임원 등 참고인 조사
2021-11-29	깨어있는시민연대당, 허위사실공표 혐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이재명을 수원지검에 2차 고발
2022-01-12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관련 의혹을 시민단체에 제보한 이병철 숨진 채 발견
2022-02-00	금융정보분석원(FIU),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대검 통보. 대검, 수원지검 형사6부 이첩. 수원지검 형사6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쌍방울그룹 CB(전환사채) 발행 내역 조사 의뢰
2022-03-00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이재명 변호인단 이태형 변호사 피의자 소환 조사
2022-03-00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이재명 변호인단 나승철 변호사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5-24	쌍방울그룹, 수원지검 형사6부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기밀 입수

날짜	수사경과
2022-05-28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 출국
2022-05-31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출국, 양선길 회장 출국
2022-06-23	수원지검 형사6부,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횡령·배임 의혹으로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2022-07-07	수원지검 형사6부,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횡령·배임 의혹으로 쌍방울그룹 추가 압수수색
2022-07-07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이태형 변호사 등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2022-07-27	수원지검 형사1부, 수원지검 형사6부 A수사관에 대한 감찰 진행.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쌍방울그룹 수사 기밀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포착
2022-07-28	수원지검 형사1부, 형사6부 소속됐던 A수사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2-07-00	수원지검 형사1부, 쌍방울그룹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법무법인 소속 D변호사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8-02	수원지검 형사1부,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2022-08-04	수원지검 형사1부, 쌍방울그룹 수사 자료 유출 의혹으로 전 형사6부 B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긴급체포, 형사6부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 검찰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C 긴급체포
2022-08-05	법원(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수원지검 형사6부 수사관B, 쌍방울그룹 임원C 구속영장 발부
2022-08-08	수원지검 형사1부,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쌍방울그룹 임원C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8-11	수원지검, 쌍방울 관련 통합수사팀 설치. 수원지검 김형록 2차장을 팀장으로, 형사6부와 공공수사부 및 대검과 지검 타 부서 검사 파견.
2022-08-16	법원, 수원지검 형사6부에 횡령 등 혐의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 체포영장 발부
2022-08-17	수원지검 형사1부,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2022-08-18	수원지검 형사1부, 쌍방울그룹 수사자료가 발견된 법무법인 소속 D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2022-08-19	수원지검 형사1부,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D변호사 피의자 소환 조사
2022-08-23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B수사관, 쌍방울그룹 임원C 구속 기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D변호사 불구속 기소
2022-08-23	수원지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및 양선길 회장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요청
2022-08-25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변호사비 대납 관련 KH그룹 압수수색
2022-08-26	수원지검 쌍방울 통합수사팀,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의혹 및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쌍방울 본사와 계열사 10여 곳 압수수색
2022-08-00	수원지검, 쌍방울 이규화 등기이사, 김성태 전 회장 가족 등 인터폴 수배 요청
2022-09-07	수원지검 형사6부,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의혹으로 경기도청, 킨텍스, 아태평화교류협회 등 압수수색. 뇌물 수수 혐의로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
2022-09-08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날짜	수사경과
2022-09-17	수원지검 형사6부, 쌍방울그룹의 경기도 대북관련 행사 비용 우회 지원 의혹 관련 안부수 아태협 회장 소환
2022-09-18	수원지검 형사6부, 뇌물 수수 혐의로 이화영 피의자 소환 조사
2022-09-19	수원지검 형사6부,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쌍방울 이규화 등기이사 프랑스에서 자진 귀국, 체포 및 조사
2022-09-21	수원지검 형사6부, 뇌물 수수 관련 혐의로 이화영의 측근 E씨 체포
2022-09-21	수원지검 형사6부, 쌍방울 이규화 등기이사 석방, 불구속 수사
2022-09-22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 뇌물 공여 및 증거인멸, 범인도피(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사전 구속영장, 업무상횡령 방조 등 혐의로 이화영 측근 E씨 구속영장 청구
2022-09-23	수원지검 형사6부, 쌍방울그룹의 경기도 대북관련 행사 비용 우회 지원 의혹 관련 아태협 직원 소환 조사
2022-09-24	수원지방법원(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업무상횡령 방조 등 혐의 이화영 측근 E씨 구속영장 기각
2022-09-26	법무부,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검사 감사원 파견. 김영일 평택지청장을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직무대리명령
2022-09-28	법원(수원지방법원 김경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 뇌물 공여 및 증거인멸, 범인도피(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방용철 구속영장 발부
2022-10-00	수원지검 형사6부, 안부수 출국금지 조치
2022-10-06	수원지검 형사6부, 쌍방울그룹과 경기도 대북사업 관련 이화영이 설립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화영의 쌍방울그룹 법인카드로 구매한 물품 확인 위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
2022-10-07	수원지검 형사6부, 이화영 구속기간 연장
2022-10-11	수원지검 형사6부,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신 모 사무처장 주거지와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2-10-12	수원지검 형사6부,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신 모 사무처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2-10-14	국세청, 수원지검에 직원 2명 파견. 국세청 직원 총 5명
2022-10-14	수원지검 형사6부, 2019년 중국으로 외화 밀반출한 외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그룹 임원 A씨, 안부수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2-10-14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 구속 기소
2022-10-17	수원지검 형사6부, 외화 밀반출 의혹으로 쌍방울 본사 압수수색
2022-11-09	수원지검 형사6부,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안부수 긴급체포
2022-11-11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안부수 구속영장 청구
2022-11-11	법원(수원지방법원 김경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안부수 구속영장 발부
2022-11-17	수원지검 형사6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 중국법인 공장 직원 체포
2022-11-19	수원지방법원, 쌍방울 중국법인 공장 직원 구속영장 기각

날짜	수사경과
2022-11-29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안부수 구속 기소
2022-12-07	수원지검 형사6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매제인 ‘금고지기’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 태국에서 체포
2022-12-08	쌍방울그룹 ‘금고지기’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 태국 법원에 송환거부소송 제기
2022-12-14	수원지검 형사6부,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2018년~2019년 쌍방울 전환사채(CB) 발행에 관여한 허위공시 혐의로 쌍방울 재무담당 전 부회장 한 모씨, 부장 심 모씨 구속영장 청구
2022-12-21	수원지방법원(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허위공시 혐의에 대한 쌍방울 재무담당 전 부회장 한 모씨, 부장 심 모씨 구속영장 기각
2022-12-27	수원지검 형사6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KH그룹 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입건
2022-12-27	수원지검 형사6부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대북송금 관련 쌍방울그룹과 협력 및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의혹으로 KH그룹 압수수색
2023-01-10	태국 경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양선길 회장 체포
2023-01-17	수원지검 형사6부, 태국발 한국행 비행기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양선길 회장 체포영장 집행.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그룹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대북송금 의혹 등 김성태, 양선길 압송 조사
2023-01-19	캄보디아 경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도피 조력자 수행비서 박 모씨 체포
2023-01-19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김성태, 양선길 구속영장 청구
2023-01-20	법원(수원지방법원 김경록 영장전담판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김성태, 양선길 구속영장 발부
2023-01-20	수원지검 형사6부, 김성태, 양선길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2-03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성태 구속 기소.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양선길 구속 기소
2023-02-07	태국 법원, 쌍방울그룹 ‘금고지기’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 송환거부소송 벌금형 선고. 김 모씨 항소 포기
2023-02-07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도피 조력자 수행비서 박 모씨 국내 송환, 수원지검 형사6부 압송 조사
2023-02-09	법원(수원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도피 조력자 수행비서 박 모씨 구속영장 발부
2023-02-11	쌍방울그룹 ‘금고지기’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 국내 송환, 수원지검 형사6부 압송 조사
2023-02-13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한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쌍방울그룹 ‘금고지기’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 구속영장 청구
2023-02-14	쌍방울그룹 ‘금고지기’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 수원지검 형사6부에 회계자료 임의제출
2023-02-15	수원지검 형사6부, 대북송금 의혹으로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화영 4자 대질 신문

날짜	수사경과
2023-02-22	수원지검 형사6부,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청 비서실 등 압수수색 시작
2023-02-22	수원지검 형사6부,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화영과 김성태 대질 신문
2023-02-23	수원지검 형사6부,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구치소 및 자택 압수수색
2023-02-26	수원지검 형사6부,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화영과 안부수 대질 신문
2023-02-27	수원지검 형사6부,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도피 조력자 수행비서 박 모씨 구속 기소
2023-02-28	수원지검 형사6부,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횡령·배임 혐의로 쌍방울그룹 '금고지기'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 구속 기소
2023-03-15	수원지검 형사6부,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청 비서실 등 압수수색 종료
2023-03-21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대북송금 의혹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이화영 추가 기소
2023-04-03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이화영 및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증거인멸교사 혐의 각각 추가 기소
2023-04-12	법원(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이화영, 방용철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23-08-16	수원지검 형사6부, 이화영 40년 지기로 알려진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이모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3-09-09	수원지검 형사6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9-12	수원지검 형사6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9-1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및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병합해 특가법상 배임 및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2023-09-21	국회, 이재명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2023-09-27	서울중앙지방법원(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 쌍방울 대북송금 및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다툼의 여지와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으나,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2023-10-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혐의 수원지검 재이송, 형사6부 재배당
2023-09-14	수원지검 형사6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이송
2023-04-09	수원지검 형사6부, 이화영의 최측근 소환 조사
2023-04-16	수원지검 형사6부, 이화영의 최측근 소환 조사
2023-04-20	수원지검 형사6부, 이화영의 최측근 소환 조사
2023-04-21	수원지검 형사6부, 특가법상 뇌물 및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이화영 소환 조사
2023-05-02	수원지검 형사6부, 특가법상 뇌물 및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이화영 소환 조사
2023-06-08	수원지검 형사6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의 측근 이모씨 소환 조사
2023-07-27	수원지검 형사6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8-04	수원지검 형사6부, 정진상 참고인 소환 조사

날짜	수사경과
2023-08-22	수원지검 형사6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불구속 입건
2023-05-18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청구 수용(실질적 사실 조회)
2023-05-22	수원지검 형사6부, 국정원 압수수색(임의제출 형식)
2023-08-16	수원지검 형사6부, '이화영 부지사 회유 의혹'으로 '40년 지기'인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회 이모 직무대행 자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3-08-24	수원지검 형사1부, 쌍방울그룹 재판 기록유출 의혹으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3-09-08	수원지검 형사6부, 김성태의 이재명 쪼개기 후원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2024-06-03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24-06-12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 제3자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재명 불구속 기소, 이화영(제3자뇌물 혐의) 및 김성태(뇌물공여 혐의) 추가 기소
2024-06-17	더불어민주당, 각각 모해 위증·모해 위증 교사 혐의로 안부수·김성태 경찰 고발
2024-06-18	수원지검 형사6부,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 추가 기소,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성태와 경기도 관내 건설업체 대표 등 4명
2024-07-02	더불어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담당 박상용 검사 등 검사 4인 탄핵소추안 발의
2024-07-10	수원지검 형사6부, 이화영 1심 재판에서 쌍방울을 모른다고 증언한 측근 3명을 위증 혐의로 기소
2024-07-3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기소한 서현욱 검사가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 고발
2024-10-23	더불어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발의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이화영·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2023-10-23	이화영,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기피 신청
	2023-11-01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법관 기피 신청 기각 - 이화영, 항고
	2023-11-27	수원고법 형사13부(정재오 박광서 송유림 고법판사), 법관 기피 신청 항고 기각 - 이화영 재항고
	2023-12-29	대법원 1부(서경환 대법관),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 기각
	2024-06-07	1심(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 2022고합733) 선고 - 이화영 : 징역 9년 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 - 방용철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쌍방 항소

피고인	날짜	내용
	2024-12-19	2심(수원고법 제1형사부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2024노620) 선고 - 이화영 : 징역 7년 8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원 - 방용철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쌍방 상고
	2025-06-05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박영재 대법관 2025도810) 선고 - 상고 기각
안부수 아태협 회장	2023-04-00	안부수, 1심 재판부에 보석 청구
	2023-05-24	1심(수원지법 형사15부 이정재 부장판사 2022고합882) 선고 -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3년 6개월 - 증거은닉교사 혐의 무죄 - 쌍방 항소
	2023-11-15	법원, 안부수 직권 보석 석방
	2025-02-20	2심(수원고법 1형사부 문주형 재판장 2023노576) 선고 -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년 6개월(일부 무죄) - 증거은닉교사 무죄(검찰 항소 기각) - 쌍방 상고
	2025-06-00	3심(대법원 제3부 2025도4373) 진행중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 양선길 쌍방울 회장 · 금고지기 김 모 전 재정총괄본부장	2023-03-09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금고지기 김 모 전 재정총괄본부장 재판 병합
	2023-07-26	법원, 김성태 구속 기간 연장 및 양선길 보석 석방
	2024-01-23	법원, 김성태·금고지기 김 모 본부장 보석 석방
	2024-05-02	1심(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 분리 변론 결정 ① 김성태·금고지기 김모의 뇌물공여·외국환거래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② 김성태·양선길·금고지기 김모의 횡령·배임 혐의
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 금고지기 김모 전 재정총괄본부장 -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2024-07-12	1심(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 2023고합72(분리), 121(병합, 분리), 2024고합337(병합)) 선고 - 김성태 : 뇌물공여·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징역 2년 6월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금고지기 김모 씨 : 외국환거래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쌍방 항소
	2025-06-00	2심(수원고법 제2-2형사부 2024노869) 진행중
②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 양선길 쌍방울 회장 · 금고지기 김 모 전 재정총괄본부장 - 횡령·배임 등 혐의	2024-10-18	검찰, 김성태 보석 취소 요청
	2024-11-22	법원, 보석 조건 위반한 김성태에 대해 과태료 결정(보석 유지)
	2025-06-00	1심(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 2023고합72 등) 진행중
이재명·이화영·김성태	2024-07-01	이재명, 대장동 사건 등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재판

피고인	날짜	내용
		병합 신청
	2024-07-15	법원(대법원 제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 이재명 재판 병합 신청 기각
	2024-09-30	이재명, 이화영 1심에 유죄 선고를 내린 재판부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며 재판부 재배당 요청
	2024-10-09	법원(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 재판부 재배당 요청 기각
	2024-11-08	이화영, 1심(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기피 신청
	2024-11-28	법원(수원지법 형사13부 박정호 부장판사), 이화영 법관 기피 신청 기각
	2024-12-13	이재명, 1심(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기피 신청
	2025-02-12	법원(수원지법 형사13부 박정호 부장판사), 이재명 법관 기피 신청 각하 -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 달라져 기피 사유 판단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 - 이재명 측 결정문 미수령으로 8차례 송달 시도 이후 재판 재개
	2025-03-28	법원(대법원 제2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 이화영 법관 기피 신청 최종 각하
	2025-06-00	1심(수원지법 형사11부 송병훈 부장판사 2024고합474) 진행중
B수사관·쌍방울그룹 임원C·D변호사	2023-02-09	1심(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량 판사) 선고 - B수사관 징역 2년 - 쌍방울그룹 임원C 징역 1년 6개월 - D변호사 무죄 - 쌍방 항소
	2023-05-01	2심(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김병수 부장판사) 선고 - B수사관 징역 2년(쌍방 항소 기각) - 쌍방울그룹 임원C 징역 1년 8개월 - D변호사 무죄(검찰 항소 기각)

29.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수사(2022)

2022년 대통령선거 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에게 제기된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고, 용지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등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사건 진행상태	▪ 재판중
담당 부서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주요 처분	▪ 이재명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2021년 10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었다. 이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백현동에 위치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으로 인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거짓 증언을 했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배당되었다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되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를 열흘가량 앞두고 성남지청으로 송치하였다.

2021년 12월, 이재명 대선후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몰랐다’라고 발언하였다. 시민단체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해당된다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은 거짓이라며 과거 해외출장 사진 등을 공개하였고,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으나 이후 경기도지사 재직 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반박하였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0대 대선 이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의원에게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면답변서의 발송과 수신에 대한 이재명 의원과 검찰의 공방이 있었으나, 이재명 의원의 서면답변서가 제출된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의원의 출석을 요구했다. 언론은 서울중앙지검이 고(故)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더해 성남지청이 수사중인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한 혐의를 함께 수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재명 의원은 서면답변서 제출로 출석 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재명 의원이 불출석한 다음 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후인 2022년 9월 8일,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은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2025년 4월 4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6월 3일 대통령선거가 열리게 되었고, 이재명은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그런데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4월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9일 만인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가 정치개입이자 선거개입이며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5월 15일을 기일로 잡았지만, 이재명의 재판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연기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부는 재판기일을 추정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회의원 /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백현동 발언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검사장 송경호 - 차장 박기동 - 부장 이상현 - 주임 오민재

고(故) 김문기 발언 관련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성남지청장 이창수 - 차장 조상원 - 부장 유민종 - 주임 박종현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1-10-20	국회 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발언
2021-10-27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했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
2021-12-21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
2021-12-22	이재명,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잘 몰랐다’고 발언
2021-12-22	국민의힘,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당시 고(故) 김문기와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공개
2021-12-23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고(故) 김문기 발언 관련으로 이재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 고발
2021-12-23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검증특별위원회, 이재명과 고(故) 김문기와의 추가 사진 공개
2021-12-28	검찰, 고(故) 김문기 발언 고발 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2022-06-23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고(故) 김문기 발언 관련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권민식 대표 고발인 조사
2022-08-19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고(故) 김문기 발언 관련 이재명 의원에게 서면질의서 전송
2022-08-28	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2022-09-01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사건과 함께 고(故) 김문기 발언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재명 출석 통보
2022-09-06	이재명, 검찰에 서면 답변서 제출
2022-09-06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고(故) 김문기 발언 관련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2-09-08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와 성남지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백현동 관련 발언과 고(故)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일괄 불구속 기소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이재명	2024-11-15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 2022고합66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5-03-26	2심(서울고법 형사6-2부 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 2024노3692) 무죄 선고
	2025-05-01	3심(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박영재 대법관 2025도4697)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5-06-09	파기환송심(서울고법 형사7부 부장판사 이재권 2025노1238) 기일 추후 지정

30.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위증교사 혐의 수사(202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02년 검사를 사칭한 사건을 빌미로 공무원자격사칭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KBS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누명을 썼다는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다시 기소되자, 2002년에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에게 증인으로 출석해서 해당 사실에 대하여 증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했다고 2023년에 또다시 기소된 사건

사건 진행상태	▪ 재판중
담당 부서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반부패수사3부
주요 처분	▪ 이재명·김진성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2018년 5월 20일에 경기도지사후보 KBS토론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2002년 소위 ‘검사사칭 사건’(제1사건)에 대하여 누명을 썼다고 행한 발언에 대하여 2018년 12월 11일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하였다(제2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판과정에서 2002년 당시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에게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증언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에게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범죄혐의로 다시 5년이 지난 2023년 10월 16일에 위증교사죄로 기소된 사건이다(제3사건으로 본 사건).

시간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우선 제1사건인 검사사칭사건이란 다음과 같다. KBS 시사프로그램인 추적 60분이 2002년 성남시장 김병량의 ‘분당 백궁정자지구 파크뷰 용도변경과 특혜 분양사건’을 취재하면서 당시 분당 백궁역 일대 부당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당시 이재명 공동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을 후보의 사무실에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담당 PD가 당시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진성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을 검찰청이라고 소개하면서 시장과의 통화를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공동집행위원장이 PD에게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지에 적어주거나 보충설명을 하였는데, 검찰은 PD와 이재명 공동집행위원장이 공모해서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형법 제118조의 공무원자격사칭죄를 범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1심에서는 벌금 250만 원, 항소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4년 12월, 최종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2002년의 검사사칭사건이 다시 언론에서 재조명되었다. 2018년 5월 29일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KBS초청 토론회’에서 제1사건에 가담여부가 언급되었고, 이재명은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답변하였다. 이 발언을 두고

검찰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가 공무원자격사칭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불구속 기소하여, 이재명 지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제2사건). 검찰은 이때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다. (참고. ►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족사 관련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 \(2018\)](#))

재판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2002년 고(故) 김병량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김진성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기억을 환기시키고자 김진성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냈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에 성남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사칭사건의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하여 PD에 대한 고소취소 협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정황에 대하여 기억을 상기하고 증언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였다. 이에 2019년 2월 14일에 김진성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에 증언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5월에 1심은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2020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제1사건은 2023년도에 다시 소환되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였다. 김진성이 해당 사업에 연루되었음을 이유로, 검찰이 김진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폰에서 제2사건(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하여 증언할 당시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내용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서 위증교사혐의가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하여 검찰은 2023년 10월 16일에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죄, 그리고 김진성을 위증죄로 기소하였다. 무려 20여 년 전 사건이 검찰에 의하여 끊임없이 부활되고 있는 것이다.

1심 공판과정에서 김진성은 위증 혐의를 인정하였지만, 이 대표는 위증을 요구한 적도 없고 요구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 검찰은 2024년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가중구간을 적용하여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2025년 11월 25일 제1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이 증인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을 결의하도록 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023고합927). 법원은 당시 처한 상황에 대하여 이재명 후보가 김진성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김진성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검찰은 1심 판결이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이탈 등으로 명백한 사실오인 또는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인이 있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에 배당되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진성은 자신이 2019년에 행한 6가지 증언 모두가 위증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였다. 즉, 1심에서는 이재명이 시켜서 위증을 하였다고 자백하였으나, 2심에서는 사실이 아닌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한 것이다. 항소심은 2025년 6월 3일을 결심공판일로 지정했지만, 이날이 21대 대선 투표일이고 이재명이 대선후보 등록하자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김진성, 2002년 성남시장 비서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23.09)]

지검장 송경호 - 차장 고희곤 - 부장 엄희준 - 주임 최재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23.09~)]

지검장 송경호 - 차장 고희곤 - 부장 김용식 - 주임 안성민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02-05-10	KBS 프로그램 “추적 60분”이 성남시의 ‘분당 백궁 정자지구 파크뷰 용도변경과 특혜 분양사건’을 취재하면서 당시 성남지역 인권변호사 활동을 하던 이재명 대선후보를 후보의 사무실에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재하던 PD가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제1사건)
2002-07-04	검찰, PD의 검사사칭 과정에서 공범으로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 등 혐의로 이재명 구속기소
2002-11-13	1심,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이재명 벌금 250만 원 선고
2003-07-01	항소심, 제1사건의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이재명 벌금 150만 원 선고
2004-12-24	대법원, 제1사건에 대하여 이재명 벌금 150만 원 확정판결
2018-05-20	경기도지사후보 KBS토론회에서 당시 이재명후보가 제1사건에 대하여 ‘누명을 썼다’라고 발언(제2사건)
2018-12-11	검찰, 제2사건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이재명 불구속 기소
2018-12-22	이재명 후보가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과 22일부터 24일까지 수차례 통화하면서 제1사건 당시의 정황을 증언해 줄 것을 요청
2019-02-14	김진성이 제2사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하여 1심에서 증언
2019-05-16	1심(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최창훈 부장판사) 이재명 전부 무죄 선고
2019-09-06	2심(수원고법 형사2부 임상기 재판장)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재명 벌금 300만 원 선고
2020-07-16	대법원(전원합의체 주심 노정희 대법관),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20-10-16	파기환송심(수원고법 형사2부 심담 부장판사) 무죄 선고
2023-02-27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관련 이재명과 정진상을 피의자로 적시해 배임과 알선수재 등 혐의로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알앤디PFV 사무실, 정바울과 김인섭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40여 곳 압수수색
2023-03-00	검찰,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위증교사혐의 포착
2023-03-22	검찰, 김진성 소환 조사 및 추가 압수수색

날짜	수사경과
2023-03-2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위증 및 백현동 비리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2023-03-27	법원(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진성 구속영장 기각
2023-08-17	검찰, 위증교사 의혹 및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9-1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위증교사 의혹 등 포함해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2023-09-21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2023-09-27	법원(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2023-10-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 이재명 위증교사죄, 김진성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
2023-11-25	검찰, 김진성 소환 조사 언론 보도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이재명·김진성	2024-11-25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김동현), 무죄 선고
	2025-05-12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부장판사 이승한) 기일 추후 지정

31. 문재인정부 고위급 인사의 채용 외압 혐의 수사(2022)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드러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한국복합물류 고문직에 특정인이 채용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2022)

사건 진행상태	▪ 재판중
담당 부서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주요 처분	▪ 노영민·김현미 등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2022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 박우식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로비 의혹으로 구속되자, 한 언론사가 이정근이 한국복합물류 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국토교통부 추천 인사를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고문으로 임명하던 관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직책을 겸하겠다는 점에 난색을 표하던 CJ측에 노영민이 개입해 이정근의 한국복합물류 고문이 가능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정근이 ‘실장님 찬스 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노영민에게 보냈고 이후 노영민이 ‘검직 가능’이라는 회신을 보냈다는 것이다. 언론사는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국토교통부에 이정근을 추천했다고 보도했는데, 노영민은 청와대에서 국토부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정근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받던 박우식도 이정근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전화 통화를 연결하고 친분을 과시했으며, 노영민이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고문으로 취업을 제안했다는 이정근과의 대화 내용을 검찰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노영민이 이정근 외 또 다른 인사의 취업에 관여했다고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정근은 한국복합물류 고문 취업은 노영민이 아니라 민주당 차원에서 추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박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2020년 8월부터 1년간 이정근이 CJ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의 고문으로 취업한 과정에 노영민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업무방해죄 혐의로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실 직원의 주거지, 한국복합물류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윤 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검찰은 2023년 초 한국복합물류가 소재한 경기도 군포시의 시장이었던 한대희와 비서실장 정 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

수사를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 군포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이 보좌관 및 한대희 전 군포시장 등과 함께 자신의 후원회장을 한국복합물류에 취업시켰다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이학영 의원은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2023년 2월, 검찰은 이학영의 국회 사무실을, 3월에는 한국복합물류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노영민, 이학영 등 민주당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야권 인사들에 대한 탄압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후 1년 넘게 별다른 수사 관련 보도가 없다가, 검찰이 2024년 6월 한국복합물류 관계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또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했다.

2025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이승학 직무대행)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권모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비서관, 전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따르면, 국토부를 통해 한국복합물류 인사 담당자에게 '후임 상근고문으로 이정근을 고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한국복합물류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운영 등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씨를 상근고문으로 고용해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연간 1억 3,560만 원 상당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1,410만 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이보다 앞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정치권 인사 김 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고용 과정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했으며, 회사 측이 수차례 반대 입장을 표하자,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자 결국 김씨를 상근고문으로 고용했다고 적시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권 모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비서관
전 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대희 전 군포시장
윤 모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직원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지검장 송경호('22.05~), 이창수²³⁷('24.05~) - 4차장 고희곤('22.05~), 조상원²³⁸('24.06~) - 부장(주임) 김영철('22.07~), 최재훈²³⁹('23.09~)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2-11-23	검찰, 전 청와대 인사수실비서관실 직원 A씨 사무실 및 주거지, 국토교통부, 한국복합물류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2-12-04	검찰,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출국금지 조치
2022-12-09	검찰,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직원 윤 모씨 주거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전 보좌관 태 모씨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3-01-13	검찰,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직원 윤 모씨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2-01	검찰, 한대희 전 군포시장과 비서실장 정 모씨의 주거지, 군포시청 등 압수수색
2023-02-15	검찰, 이학영 의원 지역구 사무실과 주거지, 이학영 의원 전 보좌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3-02-16	검찰, 한대희 전 군포시장과 비서실장 정 모씨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2-20	검찰, 한대희 전 군포시장 비서실장 정 모씨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2-21	검찰, 국회 소통관 압수수색
2023-03-13	검찰, CJ대한통운, 한국복합물류 및 임직원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4-07-12	검찰, 업무방해 혐의로 노영민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거지, 국토교통부 사무실 등 7곳 압수수색
2024-10-31	검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직 보좌관 압수수색
2024-12-00	검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소환 조사
2025-01-23	검찰, 노영민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과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5-01-2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이승학 직무대행)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권모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비서관, 전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5-02-26	검찰, 김외숙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노영민 전 비서실장·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2025-06-0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 재판중

²³⁷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박승환 1차장 직무대리. 2025년 6월 3일 사직.

²³⁸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이성식 3차장 직무대리. 2025년 6월 3일 사직.

²³⁹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 직무대리

32.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 수사(2024)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프랑스 국민 방문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 외유성 인도 출장,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로 옷 구매 의혹 등을 수사한 사건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담당 부서	▪ 사건1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 사건2 :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주요 처분	▪ 사건1 : 김정숙 무혐의 처분 ▪ 사건2 : 청와대 특활비 옷값 지불 의혹 수사중

1. 사건개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프랑스 국민 방문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 수수 의혹, 외유성 인도 출장,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로 옷 구매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0월 프랑스 국민 방문 당시 샤넬사가 제작한 한글 패턴의 재킷을 입은 바 있다. 국립한글박물관이 2022년 3월 인천국제공항에 그 한글 패턴 재킷을 전시하면서, 김 여사가 착용한 것과 국립한글박물관이 전시한 것이 동일하지 않아 보인다고 김 여사가 재킷을 샤넬 측에 반납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뿐만 아니라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재킷을 구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는 재킷을 무상으로 대여해 바로 반납했고, 샤넬 측이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샤넬 측이 김 여사가 착용한 것과 박물관에 전시된 옷은 서로 다른 옷으로 별도 제작해 기증했다고 밝히면서 반납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은 계속됐다.

2022년 여름,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외유성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정숙 여사의 3박 4일 인도 단독 방문이 한국 외교부의 ‘셀프 초청’으로 이뤄진 것이며 ‘6000만 원대 초호화 기내 식비’ 의혹 등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제기한 것이다.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정숙 여사를 위 2가지 의혹과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의 개인 수영강습 의혹, 기업 고위임원 오찬 주재 의혹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수사의뢰하면서 검찰(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이 2024년 6월 “1차장 산하 부서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한 후 수사가 급물살을 타며 관계자 소환 조사가 이어졌다. 2025년 2월, 검찰은 모든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사건1. 샤넬 재킷 수수 의혹 등 수사).

검찰은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한 감정 결과 김정숙 여사가 착용한 재킷과 샤넬 족이 소장 중인 재킷이 동일하며 재킷은 무상대여 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에 재킷이 반납된 것이니 뇌물죄나 절도죄 적용할 수 없으며, 무상이니 청와대 예산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국고손실죄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역시 인도 측이 대통령이나 최고위급 사절단의 참석을 요청해 이뤄진 공식 외교 일정이며, 공군 2호기 사용 역시 ‘정부 전용’ 성격으로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쳐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의 개인 수영강습 의혹도 사실이 아니며, 기업 고위임원 오찬 주재 의혹도 가족·아동 관련 공헌기업 대표들 자율 참여로 이뤄졌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써, 2022년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 가방 수수 문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이 불거질 당시 국민의힘이 맞불처럼 제기한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정숙 여사가 배현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2022년 3월 한 단체가 고발한 김정숙 ‘김정숙 여사 옷값 청와대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에 대해 경찰(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옷 80여 벌 구입비에 1억여 원 이상의 특활비가 사용됐고, 관봉권으로 옷값을 지불했다고 보고 수사중이다(사건2. 김정숙 여사 옷값 청와대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수사).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김정숙,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사건1. 샤넬 재킷 수수 의혹 등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 형사2부(’24. 6~)]

지검장 송경호 - 1차장 김창진 - 형사1부장 김승호 - 주임 비공개

지검장 이창수²⁴⁰ - 1차장 박승환 - 형사2부장 조아라 - 주임 비공개(’24.6~)

사건2. 김정숙 여사 옷값 청와대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수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대장 총경 변민선 - 반부패수사2계장 경정 노정웅 - 수사 담당자 비공개 - 수사참여 경찰 비공개

²⁴⁰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박승환 1차장 직무대리. 2025년 6월 3일 사직.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18-10-00	김정숙 여사, 프랑스 국민 방문하며 한글 재킷 착용
2022-03-00	샤넬, 국립한글박물관에 한글 재킷 기증
2022-03-25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정숙 여사 경찰에 고발
2023-12-28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김정숙 여사 검찰에 고발
2024-01-00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김정숙 여사 수사의뢰
2024-06-11	검찰, 해당 사건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서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추가
2024-06-19	검찰,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고발인 조사
2024-07-00	검찰, 국립한글박물관 김일환 관장, 전시운영과 관계자 등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24-07-17	검찰,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 과장 A씨 소환조사
2024-07-31	검찰, 인도 방문 관여한 외교부 과장 B씨 소환조사
2024-07-00	경찰, 의상실 관계자 조사
2024-08-00	검찰, 주인도한국대사관 근무하던 관계자 C씨 소환조사
2024-08-00	검찰, 전해웅 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 주불한국문화원장 참고인 소환조사
2024-09-03	검찰, 샤넬 본사 소속 디자이너 김모씨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24-10-00	검찰, 김정숙 여사가 착용했던 재킷 샤넬 본사로부터 확보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감정 의뢰
2024-10-00	검찰, 청와대 행정 요원 양모씨(의상·의전 담당)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24-11-06	검찰,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24-00-00	경찰, 의상실 직원, 청와대 예산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했던 제2부속실 당시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힘
2025-02-07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샤넬 재킷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
2025-04-10	경찰(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대통령 배우자 담당인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 조사
2025-05-01	서울고법,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영장 발부
2025-05-19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개최, 김정숙 여사 압수물을 국가기록원에서 넘겨받아 분석중이라고 밝힘

5. 재판 경과 및 결과

해당 없음

33.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 사건 수사(2021)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이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등을 대가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를 자회사인 타이이스타젯에 고위 임원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사건 진행상태	▪ 재판중
담당 부서	▪ 전주지검 형사3부
주요 처분	▪ 문재인 · 이상직 · 조현옥 불구속 기소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부부 기소유예

1. 사건개요

2019년 3월, 광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상직이 중소벤처진흥공단(구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그 대가로 문 대통령의 사위를 이상직이 설립한 이스타항공의 태국 합작을 논의하는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했다는 것이다.

광상도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2019년 6월, 사적 권리관계는 공익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고, 공공기관 사무 처리 관련 사항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감사를 기각했다.

2020년 총선에서 이상직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이스타항공의 석연치 않은 성장 배경과 운영 과정에 문재인정부의 유착과 특혜가 있고, 이스타항공이 그 대가로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를 채용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2020년 9월 광상도의 고발과 함께 이상직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2021년 5월, 검찰은 이상직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참고. ▲ [국회의원 이상직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 배임 사건 수사 \(2020\)](#)).

2021년 12월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이상직 의원의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로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의 고위직으로 특혜 채용되어 해당 기간 급여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뇌물 수수 혐의로 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2023년 4월 검찰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배임 혐의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을 다시 구속기소 했다. 타이이스타젯이 이스타항공의 자회사라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취업 의혹 수사로 이목이 집중되었다.

2023년 11월 검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상직의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 수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수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우호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인사비서관, 김종호 전 공직기강비서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비밀회의를 열어 이상직을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이후 형식적인 채용 과정을 거쳤다고 보았다.

검찰은 서모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신분인 서모 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했으나, 서모 씨는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중, 타이이스타넷 박석호 대표는 언론을 만나 이상직이 서모 씨의 이력서를 주며 채용과 800만 원의 급여 지급을 지시했고, 고용했을 당시 서모 씨와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몰랐다고 밝혔다. 박석호는 서모 씨가 이스타항공과의 업무 협조와 비행기 임대 관련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2024년 3월, 검찰은 이미 이스타항공에 대한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던 박석호를 특혜 채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모 씨를 채용해 타이이스타넷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한편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압수수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024년 5월, 검찰은 친인척 관리 업무 담당이었던 신모 행정관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는데 이때 검찰이 신모 행정관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일체 압수했다. 이에 신모 행정관은 선별 없는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검찰의 연락처 압수를 취소했다.

검찰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해 압수수색하는 등 당시 청와대 고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도 참고인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조현옥 인사수석이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하고, 관련 담당자들에게 이상직 선임에 사전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재인 전 사위의 취업이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선임의 대가였음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문재인과 이상직의 기소 이후 이뤄진 재판을 조현옥 인사수석의 이상직 채용 관련 재판과 병합할 것을 요청하는 등 이를 연결하려는 시도를 이어갔다.

2024년 8월,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융 계좌를 압수수색하고, 딸 문다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문재인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부인 김정숙 전 여사에 대한 참고인 소환 조사도 통보했지만, 김정숙 전 여사 측은 공식 소환장 이전에 검찰이 해당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딸 문다혜 씨 또한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조사 통보에 불응했고, 이후 검찰은 문다혜 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2025년 2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두 차례 검찰의 통보가 이어지며, 문재인 측은 출석을 거부하고 서면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검찰이 서면조사 답변을 수령한 후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2025년 4월 돌연 검찰은 문재인·이상직을 각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딸 문다혜 씨와 전 사위 서모 씨는 기소유예했다. 서면 답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기소가 이뤄지면서, 윤석열 정부 관련자들에 대한 연이은 불기소 처분과 대조되는 정치적 기소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문재인 전 대통령

이상직 전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이스타항공 창업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및 전 배우자 서모 씨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전주지검 형사3부]

- 지검장 문성인('21.06~), 문홍성('22.06~), 이창수('23.09~), 박영진('24.05~)

- 차장 김형수('21.06~), 황금천('22.07~), 김우('23.09~), 한기식('24.05~)

- 부장 홍승표('21.07~), 권찬혁('22.07~), 이승학('23.09~), 한연규('24.06~),
배상윤('25.02~)

- 주임 장대규('21.12~), 온정훈('22.2.~), 권찬혁('22.7.~), 이승학('23.09~),
김현우('23.09~), 박경세('24.08~), 한강일('25.02~)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19-03-19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 당시 대통령 사위의 이스타 항공 태국 합작 법인 취업 특혜 의혹 제기
2020-09-10	국민의힘 이스타비리의혹 진상규명특별위원회,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취업 의혹 포함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고발
2021-05-03	검찰(전주지검 형사3부), 곽상도 고발인 조사
2021-09-00	타이이스타젯 대표이사 박석호, 검찰 요청에 따라 자진 귀국 및 검찰 조사, 검찰 출국 금지 조치
2021-12-06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 뇌물 등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검찰 고발
2021-12-31	검찰, 이스타항공의 타이이스타젯 71억 원 배임 고발 사건 30일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
2023-04-17	검찰, 이스타항공의 타이이스타젯 71억 원 고발 관련 배임 등 혐의로 이상직 구속 기소,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의 모회사 관계 기정사실화
2023-11-13	검찰, 서모 씨 특혜 취업 의혹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사혁신처 압수수색
2023-11-16	검찰, 한국벤처투자 사무실 압수수색
2023-11-16	검찰, 수사 보안 이유로 대상 밝히지 않은 관련 업체/관련자 압수수색
2023-11-17	검찰, 수사 보안 이유로 대상 밝히지 않은 관련 업체/관련자 압수수색
2023-12-11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검사 파견 등 서모 씨 특혜 취업 의혹 수사팀 확대 언론 보도
2024-01-09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2024-01-11	검찰, 최수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참고인 소환 조사

날짜	수사경과
2024-01-16	검찰, 참고인 신분 서모 씨 주거지 압수수색
2024-01-17	검찰,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참고인 소환 조사
2024-01-23	검찰, 김우호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참고인 소환 조사
2024-01-29	검찰, 서모 씨 참고인 소환 조사. 서모 씨 진술 거부
2024-02-02	검찰,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참고인 소환 조사
2024-02-06	검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참고인 소환 조사
2024-02-07	검찰, 서모 씨 참고인 소환 조사. 서모 씨 진술 거부
2024-02-14	검찰, 주영훈 전 대통령 경호처장 참고인 조사
2024-02-14	검찰, 서모 씨 참고인 소환 조사. 서모 씨 진술 거부
2024-02-00	검찰, 전 청와대 경호처 직원 참고인 소환 조사
2024-03-06	검찰, 서모 씨를 채용해 타이이스타트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박석호 피의자 전환
2024-05-08	검찰, 문재인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신모 씨 압수수색
2024-05-17	검찰, 유송화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참고인 소환 조사 및 압수수색(2024년 2월), 유송화 진술 거부에 대한 언론 보도
2024-05-17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자녀이자 전 청와대 계약직 행정요원 A씨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과의 수상한 금전 거래 정황 포착, 프랑스 국적 A씨 출국 정지
2024-05-20	전 청와대 친인척 관리 업무 담당이었던 신모 행정관, 검찰 압수수색 준항고 제기
2024-05-27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태국 정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동남아 직원이 태국 소재 한국 국적 부동산 중개인을 소개했다고 보고, 부동산 중개인 소환 조사 및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언론 보도
2024-06-04	검찰,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 언론 보도
2024-06-07	검찰,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피의자 입건 및 압수수색(2024년 5월) 언론 보도
2024-06-24	검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방콕 센터장 참고인 소환 조사(2024년 5월) 언론 보도
2024-07-03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부부의 태국 이주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각한 감사원 압수수색(2024년 6월) 언론 보도
2024-07-18	전주지법, 전 청와대 친인척 관리 업무 담당이었던 신모 행정관 준항고 인용 검찰, 재항고
2024-08-16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융 계좌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언론 보도
2024-08-20	검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4-08-23	검찰, 참고인 소환 조사에 불응한 전 청와대 친인척 관리 업무 담당이었던 신모 행정관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2024-08-30	검찰, 전 배우자 서모 씨의 약 2억 2300만 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자택 등 압수수색.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적시.
2024-08-31	검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참고인 소환 조사
2024-09-09	서울남부지법, 전 청와대 친인척 관리 업무 담당이었던 신모 행정관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 신모 행정관 증언 거부
2024-09-27	검찰, 전 청와대 친인척 관리 업무 담당이었던 신모 행정관 참고인 소환 조사, 신모 행정관

날짜	수사경과
	대부분의 진술 거부
2024-10-14	검찰, 10/14~10/16까지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등 압수수색
2024-10-15	검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 등 압수수색
2024-10-20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참고인 소환 조사 통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출석 거부
2024-11-01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참고인 소환 조사 2차 통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출석 거부
2024-11-04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참고인 소환 조사 3차 통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출석 거부
2024-11-04	대법원, 전주지검의 전 청와대 친인척 관리 업무 담당이었던 신모 행정관 압수수색에 대한 재항고 기각
2024-11-05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뇌물수수 공범 및 조세 포탈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경찰 고발
2024-11-18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참고인 소환 조사 통보
2024-11-21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측, 공식 소환장 이전에 참고인 소환 조사와 관련해 검찰이 언론에 관련 사실을 미리 공개했다며 비판 및 출석 거부
2024-12-12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구 부장검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현옥 불구속 기소
2025-02-28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 소환 조사 통보(날짜 미상)
2025-03-25	검찰,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피의자 전환
2025-03-28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진행 사실 언론보도
2025-03-31	검찰, 3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피의자 소환 조사 통보, 문재인 전 대통령 출석 거부 및 서면조사 요구 언론보도.(날짜 미상)
2025-04-11	검찰,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 피의자 입건
2025-04-11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답변 수령 후 대응 검토 언론보도
2025-04-24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 뇌물수수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상직 전 이스타항공 창업주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부부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 문재인 : 딸 부부와 공모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를 채용하도록 하고, 딸 부부의 생활비 지원을 취업을 통해 중단할 수 있어 취업하여 수령한 급여 등으로 직접적 경제적 이득을 취함 - 이상직 : 정치인으로서 이득을 목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업 청탁을 수락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끼침 - 딸 부부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공범이나 공무원이 아니고, 문재인과 이상직을 통해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문재인, 이상직	2025-06-0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현복 부장판사, 2025고합543) 재판중
조현옥	2025-05-23	1심 재판부, 문재인 등 사건과 병합해 달라는 검찰 측 신청 받아들이지 않음
	2025-06-0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 2024고합1460) 재판중

34. 송영길 당대표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2023)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당선될 목적으로 불법자금을 마련하고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등에게 돈봉투를 준 사건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재판중
담당 부서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주요 처분	▪ 송영길 · 윤관석 · 이정근 · 강래구 · 박용수 구속 기소 ▪ 허종식 · 임종성 · 이성만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2023년 4월 12일, 검찰(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김영철)은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국회의원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전 국회의원의 박용수 보좌관, 강래구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장, 강화평 전 대전 동구 구의원 등 9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2022년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관련 의혹을 포착했다.

검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시기에 송영길을 당 대표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9,4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마련해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등에게 돈봉투로 전달한 정황이 있다고 보았다. 9,400만 원 중 6천만 원은 강래구-이정근-윤관석을 통해 300만 원씩 총 20개 돈 봉투로 나눠 10명의 국회의원에게 두 차례, 1,400만 원은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강래구-이정근을 통해 50만 원의 돈 봉투 30개로 나누어 17명의 지역본부장에게 두 차례, 강래구가 마련한 2천만 원은 50만 원씩 40개의 돈 봉투로 나누어 20명의 지역 상황실장에게 두 차례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어 강래구와 이정근의 “봉투 10개가 준비되었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는 통화 내용, 이정근이 윤관석과 식당에서 만나 돈 봉투를 전달한 정황과 당시 전달하지 못한 5명에게 추가 전달하라는 대화 내용, 윤관석과 이정근의 돈 봉투를 받은 국회의원들의 실명이 포함된 통화 내용, 이정근이 송영길의 보좌관에게 돈 봉투가 전달됐다고 알린 메시지 등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돈 봉투 전달 및 연루 의혹을 받은 윤관석과 이성만은 돈 봉투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송영길은 이정근의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2022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이정근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담긴 의혹을 뒤늦게 강제수사하는 것은 미국의 윤석열 대통령실 도청을 무마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수사,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실명, 구체적인

돈 봉투 전달 정황 등이 담긴 이정근의 휴대전화 음성 녹음이 공개되면서 설득력을 잃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논란에 대한 사과와 함께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년 4월 19일, 검찰은 2021년 3월~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시기에 송영길을 당 대표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총 9,4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인 등에게 제공할 것을 지시, 권유한 혐의로 강래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차례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2023년 5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강래구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정근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음 파일이 언론에 유출되자, 이정근은 그 배경에 검찰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있던 날 자신의 녹음 파일이 방송된 것은 검찰이 미리 방대한 분량을 정리해 두고 돈 봉투 관련 녹음 파일을 언론에 ‘흘리기’ 했다는 것이다.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은 2023년 4월, 프랑스 체류 중 기자회견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귀국 직후 송영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초 9,400만 원 외에 추가로 더 많이 뿌려졌다는 진술, 송영길이 직접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발언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 한편, 이정근 측은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수사로 확보한 자료를 갖고 있다가 뒤늦게 다른 혐의 수사로 활용하는 것인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자진탈당했고,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2023년 5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8월 국회 회기가 중단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한 때,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윤관석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성만은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돈봉투 수수한 의원들 명단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들은 검찰의 주장일뿐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관석을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3,000만 원을 달라고 지시하고,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성만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송영길 전 보좌관인 박용수에 대해서 돈봉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를 총 20명으로 확정해 명시하는 등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2023년 7월, 검찰은 박용수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23년 11월, 송영길은 검찰이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돈봉투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해지자 ‘전 여수상의 박용하 회장의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는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서울고검 내 검찰시민위원회

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15명으로 구성되어 1시간 40분 논의 후 비밀투표를 거쳐 결정했다고 한다.

2023년 12월, 검찰은 송영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송영길이 검찰의 출석조사요청을 계속 거부하자 검찰은 강제구인을 추진하고, 송영길은 이에 출석은 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2024년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영길을 △당대표경선 금품 살포 관련, 정당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단법인 먹사연의 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송영길이 돈봉투 조성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고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후원을 요청하면서 후원자의 요구 사항을 총선 공약에 반영했다는 혐의 등이 공소장에 담겼다.

한편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의원 조찬 모임에 참석한 의원 1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모임에서 윤관석 의원이 이들에게 300만 원씩 돈을 돌렸다고 판단했다. 2024년 2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은 허종식, 임종성을 돈봉투를 받아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돈봉투를 준 윤관석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참고. 2022년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2022년 3월, 한 언론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사무부총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제보자는 사업가 박우식의 수행비서로, 박우식이 이정근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낙선한 이정근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같은 해 8월, 박우식과의 금전거래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이유로 이정근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우식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정근이 수차례에 걸쳐 선거비용을 요구해 전달했으나, 대부분 되돌려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녹취록을 언론에 제보했다. 반면 이정근은 박우식에게 빌린 금전 대부분을 갚았으며 외려 박우식이 고리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자신을 압박했다고 반박했다.

2022년 10월,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이정근을 구속기소했다.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을 통해 정부 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주겠다고 박우식으로부터 9억 5천만 원을 받고,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비용으로 3억 3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정근과 박우식은 금전거래 관련 소송 중에 있었는데, 검찰은 이를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피하려 한 ‘위장술’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이정근 모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교체 전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혐의를 부인하던 이정근은 재판 과정에서 2020년 11월에 박우식에게 2천 5백만 원을 수수했으나 박우식의 청탁이 실패해 자금 전부를 반환했다 주장했다. 2023년 4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정근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 추징금 9억 8천여만 원과 박우식에게 받은 고가품 몰수를 선고했다. 이때 검찰은 징역 3년형을 구형한 반면 1심 재판부가 더 높은 형량인 4년 6개월을 선고하며, 이정근과 검찰이

유죄협상(플리바게닝)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 형량이 각 5년 이하이고 불법 자금 수수 규모가 10억 원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최대 5년형 구형도 가능한데 3년형을 구형한 점, △이정근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본인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서 대화 내용 맥락과 인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검찰에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 등이 유죄협상 가능성에 힘을 보탰다. 이에 검찰은 법원과의 양형기준이 달랐을 뿐, 통상적인 검찰 구형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유죄협상 의혹을 부인했다. 이정근과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2022년 11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우식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노웅래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웅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3억여 원의 현금에 출판기념회 수입과 조의금일 뿐이라며 검찰의 강제 수사 등을 비판했다. 또한 박우식 등이 몰래 두고 간 돈은 돌려보냈다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노웅래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국회 사무실 추가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이어가며, 노웅래가 박우식의 배우자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노웅래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 전 노웅래 구속 필요성에 대해 ‘돈봉투가 부스럭대는 소리까지 녹음됐다’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발언이 있었으나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부결 이후 검찰의 후속 수사 및 처분이 늦어졌는데, 이를 두고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등을 받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시험 삼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정근 휴대전화 녹음파일 분석 등 방대한 자료로 인한 지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91일 만인 2023년 3월에 발전소 납품 사업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선거자금 명목으로 박우식에게 6천만 원을 수수해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웅래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우식은 노웅래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3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찾은 3억 원 현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웅래는 해당 압수수색에 반발해 준항고를 냈는데 2025년 1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의 일부인용과 2025년 3월, 대법원(형사3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의 검찰 재항고에 대한 기각 결정으로 노웅래의 주거지에서 현금 압수 처분은 취소됐다.

검찰은 박우식과 이정근의 휴대폰 녹음 파일 등을 통해 이정근의 한국복합물류 고문 취업 청탁 의혹 등을 포착해 ‘송영길 당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를 진행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장
박용수 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관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지검장 송경호(~'24.05), 이창수²⁴¹('24.05~) - 차장 고흥곤(~'24.06), 조상원²⁴²('24.06~) -
부장(주임) 김영철(~'23.09), 최재훈²⁴³('23.09~) - 주임 비공개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2-03-04	사업가 박우식의 수행비서 정 모씨,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에게 불법 정치자금 공여 제보
2022-05-00	박우식, 경찰에 사기 등 혐의로 이정근 고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2022-05-00	이정근, 무고와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박우식 고소
2022-08-1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이정근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2-08-24	검찰, 박우식 1차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9-02	검찰, 이정근 피의자 소환 조사
2022-09-14	검찰, 박우식 2차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9-16	검찰, 박우식 3차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9-23	검찰, 이정근 피의자 소환 조사
2022-09-2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정근 구속영장 청구
2022-09-30	법원(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정근 구속영장 발부
2022-10-07	검찰, 이정근 구속기간 연장
2022-10-13	검찰, 이정근의 변호인 외 접견 제한 조치
2022-10-19	검찰이 이정근 모친 주거지 압수수색해 이정근의 휴대전화(교체 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2022-10-1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정근 구속 기소
2022-11-16	검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국회 사무실,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2-11-18	검찰, 노웅래 의원 주거지 추가 압수수색
2022-11-21	검찰, 노웅래 의원 전 보좌관 참고인 소환 조사
2022-11-22	검찰, 노웅래 의원 출국금지 조치
2022-11-24	검찰, 노웅래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²⁴¹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박승환 1차장 직무대리. 2025년 6월 3일 사직.

²⁴²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이성식 3차장 직무대리. 2025년 6월 3일 사직.

²⁴³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 직무대리

날짜	수사경과
2022-11-27	검찰, 노웅래 의원실 전 회계담당자 참고인 소환 조사
2022-11-28	노웅래 의원, 검찰 압수수색 준항고 제기
2022-12-06	검찰, 노웅래 의원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2-12	검찰,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청구
2022-12-15	정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2022-12-27	검찰, 국회 소통관 등 압수수색
2022-12-28	국회,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2023-01-0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우식 불구속 기소
2023-03-2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2023-04-12	검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국회의원, 박용수 전 송영길 대표 보좌관, 강래구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장, ‘스폰서’ 김 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20여 곳 압수수색
2023-04-14	윤관석 의원, 서울중앙지법에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신청
2023-04-16	검찰, 강래구, 강화평 전 대전 동구 구의원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4-19	검찰, 강래구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4-1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강래구 구속영장 청구
2023-04-21	서울지방법원(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 - 주요 혐의 증거 일부 확보했으나 추가 규명할 사실 등 감안해 현 단계 구속시 방어권 제한
2023-04-24	송영길 귀국
2023-04-25	검찰, 강래구 피의자 소환 조사 검찰, 송영길 출국금지 조치
2023-04-27	검찰, 강래구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4-29	검찰, 송영길의 경선캠프 자금 등 확인 위해 송영길의 전·현 주거지,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3-05-01	검찰, 송영길 경선 캠프 참여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등의 주거지 압수수색
2023-05-02	송영길, 검찰 자진출두. 검찰, 조사 거부
2023-05-03	검찰, 송영길 전 보좌관 박용수, 송영길 경선 캠프 참여 지역본부장 서 모씨, 인천시의원 문 모씨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5-0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강래구 구속영장 청구
2023-05-04	검찰, 송영길 경선 캠프 참여 지역본부장 유 모씨, 조 모씨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5-09	법원(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증거인멸 우려로 강래구 구속영장 발부
2023-05-09	검찰, 강래구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5-10	검찰, 강래구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5-1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송영길 전 보좌관 박용수 자택 등 추가 압수수색
2023-05-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전 송영길 비서관 이 모씨 소환 조사(날짜 미상)

날짜	수사경과
2023-05-1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증거인멸 혐의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회계 담당 박 모씨, 김 모씨 입건(날짜 미상)
2023-05-1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5-2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윤관석 의원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5-2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전 송영길 캠프 서울 상황실장 이 모씨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3-05-2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전 송영길 캠프 콜센터 운영 및 지역 상황실장 박 모씨 사무실, 자택 등 압수수색
2023-05-2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관석, 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청구
2023-05-2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강래구 구속 기소
2023-06-01	국회사무처, 검찰의 송영길 캠프 인사들의 국회 출입기록 임의제출 요청 거부
2023-06-0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2023-06-07	송영길, 검찰 자진출두. 검찰, 조사 거부
2023-06-1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컨설팅 업체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등 압수수색
2023-06-12	국회,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2023-06-1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송영길 캠프 지역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소환 조사
2023-06-1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강래구 소환 조사
2023-06-1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전 송영길 캠프 외곽조직의 비용을 수령한 컨설팅 업체 전 모 대표이사 참고인 소환 조사, 증거인멸 혐의로 먹사연 회계담당 직원 박 모씨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6-2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송영길 전 보좌관 박용수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6-2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 정당법·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송영길 전 보좌관 박용수 구속영장 청구
2023-07-03	서울중앙지방법원(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증거 인멸 염려로 박용수 구속영장 발부
2023-07-0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박용수 소환 조사
2023-07-0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증거인멸 혐의로 김 모 먹사연 사무국장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7-1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2023-07-1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송영길의 일정관리 비서 자택 등 압수수색
2023-07-2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 정당법·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박용수 구속기소
2023-07-2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먹사연 지원한 전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자택과 사무실, 먹사연 후원기업 및 단체 사무실, 관계자 자택 등 10여 곳 압수수색
2023-08-0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관석, 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청구
2023-08-04	서울중앙지방법원(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증거인멸 우려로 윤관석 의원 구속영장 발부

날짜	수사경과
2023-08-04	서울중앙지방법원(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기각
2023-08-0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윤관석 의원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8-0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먹사연 불법 후원 의혹으로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8-1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정당법 위반 혐의로 조택상 전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피의자 소환 조사, 이 모 전 먹사연 소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8-1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윤관석 의원 구속기간 연장
2023-08-1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송영길의 전 비서 양 모씨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3-08-1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송영길 경선캠프 식비 대납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업인 송 모 대표이사 주거지,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3-08-2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관석 의원 구속기소
2023-09-0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송영길의 전직 보좌관 3명의 자택 등 압수수색
2023-09-2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입법 로비 대가 4천만 원 수수 등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김 모씨의 자택 등 압수수색
2023-10-1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송영길의 입법 로비 대가 4천만 원 수수 의혹 관련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모씨 참고인 소환 조사
2023-10-1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송영길 캠프식비 대납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업인 송 모 대표이사 피의자 소환 조사
2023-10-2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먹사연 김윤식 이사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3-11-0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임종성,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 및 국회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3-11-03	송영길, 검찰이 ‘돈 봉투’ 사건과 별개인 먹사연의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별건수사 중단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2023-11-10	서울중앙지법(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 윤관석 의원의 압수수색 준항고 기각
2023-11-20	검찰, 윤관석 의원 공판 과정에서 송영길 지지 모임 참석 의원 21명 전체 명단 공개. - 김남국, 김병욱, 김승남, 김승원, 김영호, 김희재,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박정, 백혜련, 안호영, 윤관석, 윤재갑, 이성만, 이용빈, 임종성, 전용기, 한준호, 허종식, 황운하 재판부, 직접 관련 없는 사항으로 제지.
2023-11-20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 송영길의 먹사연 불법 후원금 의혹 별건 수사 진행 여부에 대한 신청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 검찰 수사 계속 진행,
2023-12-0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뇌물 및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영길 피의자 소환 조사, 송영길 진술거부
2023-12-1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 경선 당시 9,400만 원 상당의 돈봉투 살포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먹사연 불법 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23-12-19	서울중앙지법(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송영길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송영길의 변호인외 접견 금지 조치
2023-12-2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송영길 피의자 출석 통보. 송영길, 출석 거부

날짜	수사경과
2023-12-2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송영길 피의자 출석 통보. 송영길, 출석 거부
2023-12-2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송영길 피의자 출석 통보. 송영길, 출석 거부
2023-12-2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송영길 피의자 출석 통보. 송영길 진술거부
2023-12-2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허종식 의원 피의자 소환 조사
2023-12-0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이성만 의원 비공개 피의자 소환 조사
2024-01-0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송영길 피의자 출석 통보. 송영길, 출석 거부
2024-01-0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이성만 의원 피의자 소환 조사
2024-01-0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 경선 과정에서 6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6,650만원의 금품 살포 등으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먹사연 불법 후원금 관련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7억 6,300만 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송영길 구속기소
2024-01-1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임종성 의원 피의자 소환 조사
2024-02-0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돈봉투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 피의자 출석요구서 발송 - 해당 의원 모두 불출석
2024-02-0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이정근에게 100만 원, 강래구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하고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2024-02-2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정당법 위반 혐의로 허종식, 임종성 불구속 기소, 윤관석 구속 기소 - 허종식, 임종성: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 각 1개 수수 - 윤관석: 이성만 등 총 3명에게 900만 원 전달 혐의 추가
2024-04-2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돈봉투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의자 출석 통보 - 해당 의원 모두 불출석
2024-05-0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돈봉투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 7명 피의자 출석요구서 발송 - 해당 의원 모두 불출석
2024-06-1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돈봉투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 7명 피의자 출석요구서 발송 - 해당 의원 모두 불출석
2024-07-0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돈봉투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 7명 피의자 출석요구서 발송(날짜미상) - 해당 의원 모두 불출석
2024-07-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돈봉투 의혹 관련 이성만 전 의원 징역 2년 6개월,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징역 1년 구형
2024-07-3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돈봉투 의혹 관련 박영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피의자 소환조사
2024-09-0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돈봉투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피의자 출석요구서 발송(날짜미상) - 해당 의원 모두 불출석
2024-10-2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돈봉투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 6명 피의자 출석 통보 언론보도
2024-11-0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돈봉투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 6명 피의자 마지막 출석요구서 발송 - 해당 의원 모두 불출석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송영길	2024-05-30	송영길 보석 석방
	2025-01-08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허경무 부장판사 2024고합20) 선고 - 징역 2년, 법정구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 임의제출된 휴대전화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송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 - 쌍방 항소
	2025-06-23	송영길 보석 석방
	2025-06-00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 2025노221) 진행중
윤관석 · 이성만 · 임종성 · 허종식	2024-08-3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우인성 부장판사) 선고 - 윤관석 :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 - 이성만 :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 원 - 허종식 :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 - 쌍방 항소 * 임종성 : 건강상 이유로 선고 연기
	2024-09-12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우인성 부장판사) 선고 - 임종성 :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 - 쌍방 항소
이성만(정당법 위반 등)	2025-06-00	2심(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 진행중
윤관석, 임종성, 허종식(정당법 위반)	2025-06-00	2심(서울고법 형사2부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 진행중
박용수	2023-12-12	박용수 보석 석방
	2025-02-14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허경무 부장판사 2023고합673) 선고 -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9,240만 원
	2025-06-00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2025노732) 진행중
강래구 · 윤관석	2023-08-2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강래구와 윤관석 재판 병합 -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고 상당부분 중첩 이유
	2023-11-14	강래구 보석 석방
	2024-01-31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2023고합469) 선고 - 강래구 :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징역 1년 8개월,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 - 윤관석 : 정당법 위반 징역 2년 - 쌍방 항소
	2024-07-18	2심(서울고등법원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 2024노688) 선고 - 강래구 :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징역

피고인	날짜	내용
		1년 8개월,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 - 윤관석 : 정당법 위반 징역 2년
	2024-10-31	3심(대법원 형사2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 원심 확정 선고 - 강래구 :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징역 1년 8개월,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 - 윤관석 : 정당법 위반 징역 2년
이정근	2023-04-12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옥곤 부장판사, 2022고합790) 선고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9억 8,600여만 원 및 고가품 몰수 - 쌍방 항소
	2023-10-11	2심(서울고등법원 제6-2형사부 박원철·이의영·원종찬 고법판사, 2023노1331) 선고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8억 9,600여만 원 - 쌍방 상고
	2023-12-28	3심(대법원 형사1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3도14714) 선고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8억 9,600여만 원

35. 감사원 고위 공무원의 뇌물 수수 혐의 기소 관련 공수처와 검찰 간 권한 다툼 있는 사건(2022)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가 뇌물을 수수하고 차명 회사에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계약을 수주했다는 혐의 수사 후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를 요구하자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며, 공수처와 검찰이 권한을 다투며 표류하고 있는 사건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담당 부서	▪ 공수처 수사2부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 공수처 수사2부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주요 처분	-

1. 사건개요

2021년 9월, 감사원은 내부 감사를 통해 3급 간부 김모 씨가 직무 연관성이 있는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시간에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김모 씨가 여행 경비는 부담했으나, 정식 휴가가 아닌 업무 기간에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 이후 10월 감사원은 김모 씨에 대해 업무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2년 2월, 공수처는 감사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모 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는 김모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부산 등에 있는 건설업체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모 씨의 금품 수수 혐의는 김모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 특혜와 이를 대가로 한 감사 무마 의혹으로 확대되었다. 공수처는 명의상 대표는 박모 씨지만, 김모 씨의 모친이 실질적 대표를 맡았고 김모 씨의 동생이 회사를 경영했으며, 김모 씨가 회사 설립 자금 상당액을 부담했다고 보았다. 김모 씨가 감사원에서 공공건설사업 감사를 총괄했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전기공사업체가 대기업을 비롯해 감사원 피감기관인 공기업으로부터 공사 계약을 수주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김모 씨뿐 아니라 관계자 등 119명을 소환 조사했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2023년 11월 6일, 공수처는 10억 원대의 뇌물수수 및 차명 회사를 통해 감사원 소속 공무원 신분과 직무를 이용한 공사 수주 특혜 혐의로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김모 씨의 지위, 관련 회사와의 관계, 계약 체결 경위 등을 볼 때 김모 씨의 직무와 관련해 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뇌물 액수 산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3년 11월 24일, 공수처는 15억 8천여만 원의

뇌물 수수와 차명으로 설립한 회사에서 13억 2천여만 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김모 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관계자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요구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는 뜻밖의 암초를 만나 표류하였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2023년 11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으나, 해당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1월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재이송하겠다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의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 등과 관련 법리를 검토했으나 공수처의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공수처가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이송 배경을 밝혔다. 공수처는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의미하는 재이송 사건의 접수를 거절했다. 현행법상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는 대등한 관계이며, 공수처법상 검찰은 공수처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정해진 절차대로 사건을 이송했고, 이송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자체 수사 결과에 따라 공수처장에게 공소 여부만 통보하면 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공수처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수사준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검찰은 공수처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고,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이송받은 사건을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언급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항은 검찰청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11조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이송받은 사건을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부합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상위법인 공수처법 제26조²⁴⁴에 따라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닌 사건의 ‘수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과,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공소 제기 여부 판단 후 공수처장에게 통보 의무 규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사를 한 때에는’라는 조문이 수사의 완결 여부나 범죄 혐의의 유무가 확인된 경우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검찰이 공수처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검찰 기소 요구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대상 범위가 불일치하여 발생한 결과이다. 수사와 기소 대상 불일치로 인해 공수처법 제26조에 공수처가 기소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의 범죄 혐의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검찰과 공수처 간의 권한에 대한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검찰은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이송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 했다. 당시 검찰은 공수처가 밝혀내지 못한 혐의를 자체 수사를 통해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2022년,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이송한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에 대해 손준성 검사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했다.

²⁴⁴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의 사건 이송 논란은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대상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공수처 검사를 사법경찰관으로 해석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반영되었다는 주장과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를 협력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공수처법의 법률적 미비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건 이송 논란으로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국회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공수처와 검찰의 사건 넘기기로 인해 15억 원가량의 뇌물과 13억 원가량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 김모 씨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그로부터 10개월이나 지난 2024년 11월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배당되어 보완수사에 착수하였으나, 2025년 2월 또다시 검찰이 공수처 이송 또는 자체 보완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와 기소 과정은 공수처와 검찰의 힘겨루기로 변질되었다. 중대한 범죄 혐의자는 공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피의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되는 상황이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
명의상 대표이사 박모 씨
공기업 간부 등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공수처 수사2부]

처장 김진욱²⁴⁵ - 차장 여운국²⁴⁶ - 부장 박석일(~'24.01), 송창진 - 주임 김성진('24.01~)²⁴⁷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지검장 송경호(~'24.05) - 차장 김창진(~'24.05) - 부장 이준동(~'24.06) - 주임 비공개

지검장 이창수²⁴⁸('24.05~) - 차장 박승환('24.06~) - 부장 김태현('24.06~) - 주임 비공개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1-10-00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에 대한 비위 정황 확인, 공수처 수사 의뢰(날짜미상)
2022-02-07	공수처 수사 개시
2022-02-21	공수처, 3급 간부 김모 씨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감사원 압수수색
2022-02-23	공수처, 감사원 추가 압수수색

²⁴⁵ 임기만료(24.1.21.)로 여운국(24.1.22.~28.), 김선규(24.1.29.~3.4.), 송창진(24.3.4.~20.), 김선규(24.3.20.~5.29.) 직무대리

²⁴⁶ 임기만료(24.1.28.)로 송창진(24.1.29.~3.4.), 박석일(24.3.4.~20.), 송창진(24.3.20.~7.30.) 직무대리

²⁴⁷ 공수처 수사지휘라인은 2024년 3월 6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 해 2023년 3월 19일 통지 받은 내용으로, 공수처는 2025년 5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니 정보공개청구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분공개하고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2024년 3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수처의 답변을 기재함.

²⁴⁸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박승환 1차장 직무대리. 2025년 6월 3일 사직.

날짜	수사경과
2023-01-17	공수처의 김모 씨 모친 명의 건설업체 등 관계자 사무실, 자택 압수수색 사실 언론 보도
2023-10-27	공수처, 김모 씨 피의자 소환 조사
2023-11-01	공수처, 김모 씨 피의자 소환 조사
2023-11-06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 10억 원대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모 씨 구속영장 청구
2023-11-09	법원(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뇌물 액수 등 다툼의 여지가 있고 공사 개입 혐의 직접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김모 씨 구속영장 기각
2023-11-24	공수처의 2022년 김모 씨 주거지 및 관련 회사 압수수색, 김모 씨 포함 관련자 119명 소환 조사 사실 언론 보도
2023-11-24	공수처, 뇌물 및 횡령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와 김씨가 운영한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박모 씨, 뇌물 공여 혐의로 공기업 간부 등 5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소 제기 요구
2023-11-30	서울중앙지검, 공수처 이송 사건 형사5부 배당 사실 언론 보도
2024-01-12	서울중앙지검, 검찰 증거 및 검토 불충분 등 이유로 공수처에 사건 반송. 공수처, 이송 사건 접수 거절, 검찰 보관 중
2024-11-07	서울중앙지검,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 없이 검찰에서 보완수사 후 기소 여부 결정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도됨.
2025-02-12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수처 이송 또는 자체 보완수사 여부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

5. 재판 경과 및 결과

해당 없음

36.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수사(2023)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진행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특혜 및 비리에 대한 수사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재판중
담당 부서	▪ 사건1 : 군산경찰서 지능팀 ▪ 사건1·2·3 :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합동수사단
주요 처분	▪ 사건1·2·3 : 신영대 불구속 기소, 신영대 전 보좌관 정모 씨 · 태양광 발전 관계자 최모 씨 · 서모 씨 구속 기소

1. 사건개요

문재인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신재생 에너지 전력생산비율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풍력, 태양광 등 발전 사업을 지원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과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요구가 대립하던 중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로 알려진 인물이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2017년,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점검 감사를 시행했지만, 행정조치에 그쳤다.

2021년 12월, 감사원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청구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의혹 등 관련 공익감사 청구 중 일부를 수용해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최대 규모 사업으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설계용역업체 현대글로벌과 수상태양광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를 설립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2019년 4월, 총사업비 4조 6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사업의 설계용역을 설계업 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과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점, 설계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와 계약한 점을 들어 한수원 등에 행정조치를 하고 새만금솔라파워를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한수원과 계약으로 인해 현대글로벌이 30억 원 이상의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지만 이것은 수사를 의뢰하지 않아 문재인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보호를 위한 선별적 수사 의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후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의 계약은 무효가 되었다. 감사원이 2021년 12월, 새만금 수상태양광 의혹(사건1)으로 새만금솔라파워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후 군산경찰서의 수사 진척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고,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2023년 6월,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강임준 군산시장이 고교 동문이 운영하는 입찰공고상 계약조건에 미달하는 부적격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사건2. 새만금 육상태양광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행시 동기 과장들이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민간업체와 공모해 유리한 법령 유권해석 등

특혜를 제공하고 퇴직 후 관련 업체에 재취업했다는 사실(사건3. 안면도 태양광 의혹) 등을 공개하며, 2023년 2월과 6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전 과장급 공무원,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 및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문재인정부 인사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정치 보복 감사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 사건을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배당했다. 당시 합수단은 2022년 9월부터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전문인력 30여 명 규모로 출범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기금 운영 관련 위법 정황들을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이었다. 합수단은 2017년에 비해 2021년까지 “국고보조금 액수·대상이 매년 크게 증가”했지만 “국고보조금 관련 범죄 단속·처벌 건수는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며, 합수단 출범 배경을 밝혔다. 2021년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서 보조금 관련 범죄가 제외되었음에도, 상위 법의 취지를 뒤집는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합수단이 출범한 바,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활용해 전 정권 대상 수사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1. 새만금 수상태양광 의혹

2024년 1월, 합수단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의혹으로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새만금솔라파워 등을 압수수색하고 한수원 간부들이 현대글로벌의 재하청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새만금솔라파워 사업 단장으로 파견된 한수원 간부 최모 씨를 구속 수사하던 검찰은 2024년 4월, 최모 씨가 비자금을 조성해 2억 4천만 원을 공무원 로비 등에 유용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 이어서 현역 국회의원 등 정관계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수령한 알선수재 혐의로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인 서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새만금솔라파워 사업 단장이자 한수원 간부인 최모 씨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청탁을 위해 강임준 군산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서모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았다.

사건2. 새만금 육상태양광 의혹

합수단은 2023년 7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의혹 관련 군산시청 등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2024년 4월, 공사 수주를 위해 군산시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대가로 전기공사 업체로부터 금전을 취득한 브로커 박모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 군산시와의 유착 의혹으로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해 검찰이 압수수색 및 조사에 나선 업체 대표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사건1·사건2. 신영대 의원 등의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2024년 5월, 합수단은 수상태양광 의혹으로 기소된 서모 씨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등 현역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지역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신영대 의원은 사건과 관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합수단은 신영대 의원의 전 보좌관이었던 정모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결국 합수단은 6월, 정모 씨가 육상태양광 의혹으로 기소된 브로커 박모 씨로부터 공무원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2024년 8월, 신영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합수단은 새만금 수산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새만금슬라파워 대표 최모 씨,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0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 또한 적용됐는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구속에 이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사를 이어간 합수단은 신영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5년 1월, 합수단은 군산시청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영장에는 태양광 사업 인허가 등을 맡았던 퇴직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비리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3. 안면도 태양광 의혹

2023년 7월 합수단은 안면도 태양광 의혹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태안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3년 12월, 안면도 태양광 의혹 관련 직권남용 및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전 과장 김모 씨와 행정고시 동기인 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김모 씨가 산업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전 모 씨에게 태양광 발전 업체를 소개했고, 이 업체 대표 이모 씨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중요 기간사업에 해당하도록 유리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이에 응해 이를 태안군청에 보냈다고 보았다. 아울러 김모 씨와 전모 씨가 퇴직 후 해당 태양광 발전 업체와 협력 업체 대표로 재취업해 경제적 대가를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나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합수단은 태양광 발전 업체 대표 이모 씨에 대해서는 용역비 등 회삿돈 1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이를 발부하면서 이모 씨는 구속됐다. 수사를 이어간 합수단은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모 씨는 산업부 전 과장 김모 씨와 전모 씨에 대한 청탁과 함께, 전직 태안군 공무원인 박모 씨에게 태양광 사업 인허가를 대가로 일자리를 뇌물로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박모 씨 또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4년 9월, 합수단은 산업부 전 과장 김모 씨와 전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모 씨는 태양광 발전 업체 대표 이모 씨를 전모 씨에게 소개한 알선수재 등 혐의로, 전모 씨는 이모 씨의 청탁으로 부당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한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대적으로 이뤄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감사 및 수사는 대선에서부터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표적 감사·수사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실제로 감사 및 수사 국면을 계기로 이후 윤석열 정권에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지원 제도 폐지, 예산 삭감 등이 이어진 바 있다. 특히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례들의 피해액이 실제 규모보다 과장되었으며, 사업 참여 기회 제한이나 민사소송을 통한 조치가 아닌 형사적 조치를 취한 것이 과하다고 태양광 업계들이 주장하기도 했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만일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중략) 원전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성장동력은 고사될 거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산림을 파괴할 것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국산 태양광 패널 비중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 들어 증가했고,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 규제가 강화된 바, 윤석열의 왜곡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태양광 사업에 대한 과도한 감사 및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사건1. 새만금 수상태양광 의혹]

새만금솔라파워 대표 최모 씨,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 서모 씨

[사건2. 새만금 육상태양광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브로커 박모 씨

[사건1·2. 새만금 태양광 의혹]

신영대 국회의원, 전 보좌관 정모 씨

[사건3. 안면도 태양광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전 과장 김모 씨, 전모 씨

태양광 발전 업체 대표 이모 씨, 전 태안군 공무원 박모 씨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사건1. 새만금 수상태양광 의혹

[군산경찰서 지능팀]

서장 임종명(~'22.08), 강태호(~'23.07), 박정환('23.07~) - 수사과장 경정 최선용 - 팀장 경감 유영탁 - 경위 김대성

사건1·2·3. 새만금 수상·육상태양광, 안면도 태양광 의혹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지검장 정영학(~'23.09), 이진수(~'24.05), 정진우('24.05~) - 차장 김형수(~'23.09), 단성한(~'24.06), 김영철('24.06~) - 단장 유진승(~'23.09), 민경호(주임)(~'24.06), 이일규(주임)('24.06~) - 이하 비공개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1-12-17	감사원,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청구한 공익감사청구 보고서 발표. 새만금 수상태양광 관련 새만금솔라파워 대표 최모 씨 경찰 수사 의뢰
2023-02-20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관련 검찰에 수사 의뢰
2023-06-12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관련 검찰에 수사 추가 의뢰, 총 13명
2023-06-13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중간 감사결과 발표
2023-06-19	대검, 감사원 수사 의뢰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배당
2023-07-26	합수단, 새만금 육상태양광 의혹 관련 군산시청 등 압수수색
2023-07-28	합수단, 안면도 태양광 의혹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및 태안군청 압수수색
2023-12-28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 안면도 태양광 의혹 관련 직권남용, 알선수재,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과장 김모 씨와 전모 씨, 태양광 발업업체 관계자 이모 씨 구속영장 청구
2024-01-04	법원(서울북부지법 박태현 영장전담 판사), 도주 우려 없고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산업통상자원부 전 과장 김모 씨와 전모 씨, 관계자 이모 씨 구속영장 기각
2024-01-11	합수단, 새만금 수상태양광 의혹 관련 한국수력원자력, 현대글로벌, 새만금솔라파워, 군산시민발전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4-03-18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 새만금 육상태양광 의혹 관련 브로커 박모 씨 구속 수사 언론보도
2024-03-22	합수단, 새만금 수상태양광 의혹 관련 새만금솔라파워 단장으로 파견된 한수원 간부 최모 씨 구속 수사 언론보도
2024-04-03	합수단, 새만금 육상태양광 의혹 관련 브로커 박모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
2024-04-09	합수단, 새만금 수상태양광 의혹 관련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새만금솔라파워 사업 단장으로 파견된 한수원 간부 최모 씨 구속 기소
2024-04-17	합수단, 새만금 수상태양광 의혹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 서모 씨 구속
2024-05-03	합수단, 안면도 태양광 의혹 관련 태양광발전업체 자문회사 대표 이모씨를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힘. 업체로부터 받은 용역비 1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은 산업부 전 과장 2명(이모씨, 전모씨)가 태양광발전업체 대표로 재취업한 점 등을 들어 청탁의 대가로 취업 알선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힘.
2024-05-07	합수단, 새만금 수상태양광 의혹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 서모 씨 구속기소
2024-06-12	합수단, 새만금 육상태양광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 정모씨에 대해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2024-06-28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 새만금 육상태양광 의혹 관련 신영대 의원 전 보좌관 정모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신영대 의원 지역사무소 등 압수수색
2024-08-20	합수단, 신영대 의원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2024-09-29	합수단, 안면도 태양광 의혹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전 과장 김모씨(시행사와 전모씨를 알선한 혐의), 전모씨(청탁을 받고 산업부 장관 명의의 부당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한 혐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힘.

날짜	수사경과
2024-10-31	합수단, 신영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24-11-28	국회,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2024-12-09	합수단, 새만금 태양광 의혹 관련 뇌물 등 혐의로 신영대 의원 불구속 기소
2025-01-14	합수단, 새만금 육상태양광 의혹 관련 군산시청 추가 압수수색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새만금 수상태양광 의혹 -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 서모 씨	2024-11-01	1심(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부장판사 허명산) 선고 -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 징역 1년 6개월
	2025-02-14	2심(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부장판사 강영훈), 징역 1년 6개월 선고한 원심판결 유지(항소기각)
새만금 수상태양광 의혹 - 새만금솔라파워 대표 최모 씨	2025-02-13	1심(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 조미옥) 선고 - 뇌물공여 혐의 : 벌금 200만 원 - 업무상 횡령 : 무죄
새만금 육상태양광 의혹 - 브로커 박모 씨	2024-07-19	1심(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부장판사 허명산),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7,250만원 추징 명령
	2024-11-29	2심(서울북부지법 형사2부 부장판사 강영훈), 징역 2년 선고한 원심판결 유지
새만금 육상태양광 의혹 - 전 보좌관 정모 씨	2024-12-13	1심(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부장판사 허명산) 선고 -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2,000만 원
	2025-04-25	2심(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부장판사 강영훈) 선고 - 징역 1년, 추징금 1,500만 원
신영대 국회의원	2025-06-00	1심(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부장판사 이동식) 진행중

정권 비판 세력 · 야권 · 시민사회 관련 수사

37.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2022)

윤석열 대통령 발언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를 보도한 MBC에 대해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국민의힘 등이 MBC 사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담당 부서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와 사이버범죄수사1대
주요 처분	-

1. 사건개요

미국을 순방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9월 21일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기관인 글로벌펀드(The Global Fund)에 대한 각국의 모금을 촉구하고, 미국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회의 종료 후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약 48초간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장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풀 기자단의 카메라에 촬영되었다. 다음날 MBC는 해당 영상에 담긴 대통령의 발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유튜브에 게재했다. MBC는 해당 영상을 <뉴스데스크> 등에서 보도하며 대통령의 막말 및 비속어 사용 논란이 국내외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되고 15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에 해당 발언이 바이든 미 대통령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 특히 “거대 야당”을 향한 것이었으며 “바이든은”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시에 막말 논란을 “짜깁기와 왜곡”으로 규정하며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언과 해명의 부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커졌고, 해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를 ‘이 XX(새끼)들’이라고 칭한 것임에도 대통령실은 별도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써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이라며 “진상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우리나라 국회 야당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부정했고, 한 인터뷰에서는 나아가 ‘바이든/날리면’ 부분이 “확정할 수 없는 내용”이며 ‘이 XX들’ 발언과 관련한 비속어 논란은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사회를 병들게하고, 국민들을 이간질 시킬 수 있어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9월 26일 대통령실은 MBC 측에 공문을 발송하여 ▲ 음성 분석 전문가도 해석이 어려운 윤 대통령 발언을 어떠한 근거로 특정했는지, ▲ 대통령실 등에 발언 취지 및 사실 확인을 위해 거친

절차는 무엇이었는지, ▲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날리면’의 병기 없이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MBC 측은 보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며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 동남아 순방 이틀 전인 11월 9일 밤 9시, 대통령실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MBC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MBC는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이자 새로운 형태의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했고 대통령실 중앙기자실 풀기자단도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보도는 MBC가 최초 보도했지만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해당 영상을 몇 분의 차이가 있을 뿐 각 언론사에서 자체 판단하고 방송한 것이다. 그럼에도, MBC에 대해서만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고발이 이어졌다. 윤석열이 2022년 9월 26일 출근길 도어스텝핑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진상이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후,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이 MBC 박성제 사장과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에 이어,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위원장 박대출 의원)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하였고 서울서부지검은 접수된 고발 건을 경찰로 이송하면서,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피고발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는 등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크게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2023년 5월에는 경찰(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이 해당 보도의 당사자이자 피고발인인 MBC 기자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MBC 측은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에 MBC 뉴스룸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된 점 등을 들어 과잉수사·표적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2024년 9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선임행정관)가 한 단체를 통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사실을 녹취한 내용이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폭로되었다. 이 단체는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2022년 9월26일 박성제 당시 사장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MBC의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외교부는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의 당사자인 대통령 대신 나서 정정보도를 청구한 외교부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고 대통령의 ‘바이든’ 영상 감정에서 ‘판독불가’라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MBC가 정정보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진실이 가려지지 않았는데도 반론보도도 아닌 정정보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1심 재판부의 정정보도 판결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의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3천만원을 의결하고, 방통위는 이를 그대로 처분하였다. MBC는 방통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2024년 9월 26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본안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사건1. MBC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MBC 박성제 사장, 보도국장, 디지털뉴스국장, 기자 임모 씨 등

[사건2. 외교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외교부 박진 장관, MBC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MBC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1대]

청장 치안정감 김광호(~'24.01) - 과장 총경 정환수 - 대장 경정 서상혁(~'23.02)

청장 치안정감 조지호('24.01~'24.08) - 과장 총경 한원형 - 대장 경정 윤영준('23.02~'24.02)

청장 치안정감 김봉식('24.08~'24.12) - 과장 총경 오창배 - 대장 경정 최형욱('24.02~'25.03)

청장 치안정감 박현수 직무대리('25.02~) - 과장 총경 이병진 - 대장 경정 이명철('25.03~)

[공수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이의신청 기각²⁴⁹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2-09-22	MBC, 유튜브 채널에 “[오늘 이 뉴스]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2022.09.22/MBC뉴스)” 영상을 업로드하고 <뉴스데스크>등에서 보도. 대통령실(김은혜 홍보수석),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국회를 겨냥한 것이며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
2022-09-26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등,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MBC 박성제 사장, 편집자, 기자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각각 경찰에 고발
2022-09-26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 5개 단체,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
2022-09-26	대통령실(이재명 부대변인), “바이든/날리면” 부분이 확정할 수 없는 내용이며 윤 대통령 발언이 한국 국회 야당을 겨냥한 답변이 아니라고 밝힘. “이 XX들”이라는 비속어 사용에 대한 부분은 “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밝힘

²⁴⁹ 공수처는 2025년 5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처분하고, ‘귀 단체가 해당 사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 공수처는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공수처는 2024년 4월에도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처분한 바 있음.

날짜	수사경과
2022-09-26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 명의로 박성제 MBC 사장에게 공문 발송하여 보도에 대한 답변 요구
2022-09-28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윤석열 대통령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 고발. 서울경찰청, 고발 건을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힘
2022-09-28	경찰(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명예훼손 등 고발 건 관련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고발인 조사
2022-09-29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위원장 박대출 의원)’, 박성제 사장, 박성호 뉴스룸 국장, 연보흠 디지털뉴스국장, 임현주 기자 등 4명을 검찰에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2022-09-30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 5개 단체, 박대출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
2022-10-04	경찰, 명예훼손 등 고발 건 관련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고발인 조사
2022-10-20	경찰, 민생경제연구소 등 무고죄 고발 건 관련 고발인 조사
2022-12-19	외교부, MBC에 ‘바이든-날리면’ 보도 정정보도 청구 소송 제기(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부장판사 성지호)
2023-05-0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 9개 언론사 심의의결 보류
2023-05-30	경찰(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MBC 기자 임모 씨·MBC 보도국 등 압수수색.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으나,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됨
2024-09-05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해 관제 데모 지시했다는 의혹 언론보도
2024-01-12	대통령실, ‘바이든-날리면’ 보도 판결 나오자 “허위보도 무책임” 입장 발표
2024-02-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 심의 대상 9개 언론사 중 MBC(과징금), YTN(관계자 징계), JTBC(주의), OBS(주의)등 중징계, KBS, SBS, TV조선, 채널A, MBN에는 행정지도 의결
2024-02-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까지 MBC 법정제재 ‘경고’ 의결
2024-03-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MBC ‘바이든-날리면’보도 과징금 의결(2.20)한 것 확정. 과징금 규모 차후 전체회의를 거쳐 결정기로 함
2024-03-2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 법정제재 ‘경고’ 의결(2.27)한 것 확정
2024-04-0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바이든-날리면’보도 관련 1심 판결 보도한 MBC에 법정제재 의결
2024-04-09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MBC 기자 임모 씨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관련 소환조사
2024-04-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바이든-날리면’ 보도 과징금 의결(3.11)한 것 액수 3,000만 원으로 확정. 관련해 ‘바이든-날리면’ 다루었던 TBS 시사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장식의 신장개업’ 관계자 징계 결정

날짜	수사경과
2024-04-18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바이든-날리면' 보도 비롯해 MBC 보도 17개를 묶어 법정제재 의결. 이때, '바이든-날리면' 방심위 중징계 의결 보도 등을 한 <뉴스데스크> '경고' 등 총 MBC 법정제재 5건 의결함
2024-04-2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바이든-날리면' 논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비판 보도에 MBC 법정제재 '주의' 4건 의결
2024-06-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YTN 관계자 징계 처분 재심 인용
2024-06-2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MBC 과징금 처분 재심 기각
2024-07-01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총 7건의 법정제재 및 벌점 22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보도
2024-07-00	경찰, 박성제 MBC사장 등 소환조사
2024-07-0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YTN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해 YTN 사영화 이후 김백 사장 사과 및 정정보도 등 고려해 재심 청구 유일하게 인용(6.19) 뒤 법정제재 수위 '경고'로 감경
2024-08-00	MBC,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날짜미상)
2024-09-23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대남(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녹취록' 중 대통령실 외곽단체인 '새로운민심 새민연'을 통해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언론보도
2024-09-26	서울행정법원(제8부 재판장 이정희), MBC에 부과된 과징금 효력정지 결정

5. 재판 경과 및 결과

사건1. 해당 없음

사건2. 외교부 정정보도 청구 소송

피고인	날짜	내용
외교부 박진 장관 주식회사 문화방송(MBC)	2024-01-12	1심(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부장판사 성지호 2022가합37946)선고 - 원고(외교부) 승소 - 판결 확정 후 최초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로 1회 낭독 및 낭독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계속 표기할 것을 판시 - 정정보도 의무 미이행 시, 기간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불하라는 간접강제명령 부과 - MBC 항소
	2025-06-00	2심(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재판장 문광섭 2024나2005491) 진행중

38. 뉴스타파 등 언론사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2023)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당시 윤석열 검사가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 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뉴스타파 등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해 직접 수사한 사건

사건 진행상태	▪ 재판중
담당 부서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 반부패수사제3부(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주요 처분	▪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소 ▪ 김용진·한상진 불구속 기소 ▪ 봉지욱·허재현·송평수 불구속 기소 ▪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 무혐의 처분

1. 사건개요

2022년 3월 6일, 대선을 3일 앞두고 뉴스타파는 '김만배-신학림 음성파일'을 보도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2011)을 담당하던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윤석열 검사가, 김만배 머니투데이 법조기자와 박영수 변호사(전 서울고검장)의 청탁으로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이다.

해당 의혹은 2021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2021년 10월 7일, 경향신문은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 당시 조우형이 김만배의 소개로 박영수를 변호사로 선임했고, 당시 주임 검사가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을 보도했었다. 같은 날 뉴스버스는 경향신문의 기사를 언급하며 당시 대검 중수부가 불법대출을 덮어줬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JTBC는 2022년 2월 2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인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 등을 토대로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한 이후 결과적으로 형사 입건을 피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음성파일' 보도가 나온 뒤에는 MBC가 관련 인용·후속 보도를 내보냈다.

그런데 2023년 9월 뉴스타파에 음성파일을 제보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인터뷰 후 김만배에게 1억 6,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은 김만배의 자금 추적 과정에서 해당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여 김만배와 신학림을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신학림은 해당 금전거래가 자신의 저서 3권을 판매한 돈을 받은 것이며, 인터뷰와는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권당 금액(약 5,500만 원)이 지나치게 높아 해명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뉴스타파는 신학림과 김만배의 금전 거래와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사과했지만, 보도 결정 과정에 신학림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녹취 내용을 사실로 볼 근거가 갖춰진 상황에서 보도 가치 등을 고려해 기사가 발행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를 “선거공작”으로 규정하며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야권과의 관련성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서울경찰청)에 김만배·신학림과 함께 뉴스타파, JTBC, MBC 기자 등을 고발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에서 해당 보도를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고, 대통령실도 “가짜뉴스”이자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이번 기회에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를 인용하여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고, 이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사건’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수사를 확대했다. 2023년 10월 26일 서울중앙지검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다른 언론사들과 전·현직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취재 자료를 왜곡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에 한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압수수색 대상이 된 언론사, 언론·시민단체 등은 당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 보도했고, 검찰의 수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장동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의 법조 로비 정황을 진술하는 등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3월 1일, 리포액트의 허재현 기자는 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 부장검사와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이철수 씨의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의 무마 의혹을 보도했다. 2023년 10월,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보좌관 최모 씨와 연구위원 김모 씨, 인터넷 언론사 허재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해당 녹취록에 언급된 인물은 보좌관 최모 씨이나, 리포액트가 해당 인물을 최재경 전 부장검사로 바꿔 보도했고, 해당 보도에 최모 씨와 김모 씨 등이 공모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업 과정에서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 확산한 과정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캠프를 보도의 배후세력으로 지목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검찰의 조사 및 신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기사들이 보도되면서,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와 뉴스타파 측은 검찰이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및 소속 검사 등을 각자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과 같은 최고 권력자의 명예훼손죄는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뉴스타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한 보도가 예정되었던 날 진행됐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요청에 출석을 거부한 뉴스타파 기자 3인에 대해 법원에서 ‘공판기일전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 측은 검찰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한 문자메시지에 기자가 작성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며, 증인신문 자체가 ‘언론플레이’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시작 9개월 만인 2024년 6월 17일 김만배와 신학림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공갈 혐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는 전혀 무관하고, 대장동 사건 수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신학림 자신이 쓴 책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영장에 별건수사로 이 혐의를 넣은 것은 ‘본안’인 명예훼손과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별건인 ‘공갈 혐의’로라도 영장이 발부되길 노린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2024년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는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만배·신학림을 구속 기소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용진·한상진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4년 8월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엑트 대표,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전 뉴스버스 기자 등 4명은 불기소했다.

한편 4월 29일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은 수사개시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요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개시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을 이해하지만, 주장만 들고 재판부가 수사개시가 적법하다, 위법하다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증거조사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은 추후 판결할 때 판단을 하든지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검찰 수사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우선, 언론사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윤석열 대통령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 혐의라는 점이 논란이 됐다. 명예훼손죄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대통령의 의지로 진행되는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명예훼손죄를 수사했다며 강백신 검찰 특별수사팀장 등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중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한 바 없지만 당사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절차적 문제는 없고, 신학림·김만배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이므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법이 아닌 검찰 비공개 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을 우회하여 비공개 예규를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해당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으며 투명성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이후 참여연대는 관련 예규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여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참여연대가 승소했다.

둘째, 2024년 8월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피고인들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바탕으로 3,176명에 해당하는 통신이용자정보를 무차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2에 의거해 2024년 1월부터 통신이용자정보에게 조회 사실을 통지해야 함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용자들이 의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에 검찰이 무차별 신원조회를 하여 비밀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취재원이나 공익제보자들의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대통령 1인 수사를 위해 검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 영장주의 도입 요구도 거세졌다.

셋째,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디지털 파일까지 보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검찰은 디지털 증거 보관은 시인하면서도, 형사소송법과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 등을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검이 근거로 제시한 예규는 2024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이미 발령된 예규에 ‘2025년 5월 1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의 부칙을 추가했다. 별도의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대검찰청은 “부칙에 오기가 있어 정정하여 올림”이라는 문구와 함께 뒤늦게 수정한 예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 또는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에서도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예규는 물론 이에 기반한 검찰의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이 위법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연합 등은 윤석열 대통령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전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한상진, 봉지욱(보도 당시 JTBC 소속) 기자 / MBC 기자 4명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및 전직 기자, JTBC 등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화천대유 TF)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 최모 씨(당시 상황실장),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 씨(당시 조사팀장), 송평수 변호사(당시 대변인)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 반부패수사제3부(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지검장 송경호 - 4차장 고흥곤 - 부장 강백신 - 주임 비공개
지검장 이창수²⁵⁰(’24.05~) - 4차장 조상원²⁵¹(’24.06~) - 부장 이준동(’24.06~) - 주임 신기련

²⁵⁰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박승환 1차장 직무대리. 2025년 6월 3일 사직.

²⁵¹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이성식 3차장 직무대리. 2025년 6월 3일 사직.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1-10-07	경향신문(이효상·허진무·이보라·이흥근 기자), 김만배 당시 머니투데이 법조기자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를 받고 있던 조우형 씨에게 박영수 변호사(전 서울고검장)를 소개해 줬다고 보도. 당시 수사 주임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고 언급. 뉴스버스(윤진희 기자), 경향신문 기사 언급하며 대검 중수부가 당시 불법 대출 사건을 덮어줬을 수 있다는 의혹 보도
2022-02-21	JTBC(봉지욱 기자), 남욱 변호사 검찰 진술 등을 토대로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한 이후 형사 입건을 피했다는 의혹 보도
2022-03-06	뉴스타파(한상진 기자), ‘김만배-신학림 음성파일’ 바탕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김만배와 박영수가 주임검사 윤석열에게 부탁해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보도
2022-03-09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대통령 당선
2023-09-01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관련 금품거래 등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주거지 압수수색
2023-09-06	검찰,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만배 씨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3-09-07	검찰,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하 “특별수사팀”)’ 구성. 국민의힘, 김만배·신학림·뉴스타파 및 MBC 소속 기자 6명을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2023-09-13	경찰(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검찰(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사건 송치
2023-09-14	국민의힘, 뉴스타파 보도 인용·언급한 김어준·주진우·최경영 등을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검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JTBC 본사 및 뉴스타파 소속 한상진, 봉지욱(당시 JTBC 소속) 기자 주거지 압수수색
2023-09-22	국민의힘, MBC PD수첩 제작진·신장식 등 고발 방침 밝힘
2023-10-10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 김만배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2023-10-11	검찰(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 모 보좌관 국회 사무실 및 주거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 씨 사무실, 리포액트 사무실·허재현 기자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3-10-23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 고발
2023-10-26	검찰,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보도(2021.10)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 주거지 압수수색
2023-11-08	뉴스타파,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수처 고발
2023-11-13	검찰, 조우형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2023-11-22	공수처, 뉴스타파의 고발 건을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에 배당. 검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보도한 경향신문 기자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2023-11-27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 통해 허재현 기자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기각
2023-12-06	검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주거지 압수수색. 허재현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날짜	수사경과
2023-12-13	검찰,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2023-12-26	검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
2024-01-02	참여연대, 대검찰청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2024-01-08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원석 검찰총장·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강백신 특별수사팀장을 직권남용죄 및 피의사실공표죄로 공수처 고발
2024-01-10	검찰, 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 부장검사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2024-01-17	검찰, 김만배·신학림 피의자 신분 동시 소환 조사
2024-01-25	검찰,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및 김만배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2024-02-16	검찰, 김병욱 의원 보좌관 최모 씨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2024-02-21	검찰, 송평수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TF 전 대변인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2024-02-22	검찰, 뉴스버스 전직 대표 신모 씨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2024-03-15	검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TF 참석 차 모 변호사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2024-03-22	조국혁신당·더불어민주연합, 윤석열 대통령 등 전·현직 검찰총장 및 강백신 부장검사 등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 고발
2024-03-28	검찰,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검찰, 참고인 소환 조사 불응한 뉴스타파 기자 3명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짐
2024-04-19	검찰, 서울서부지법에서 뉴스타파 기자 3명 중 2명에 대해 공판기일전증인신문 진행
2024-06-05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이준동 부장검사),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피의자 소환 조사
2024-06-17	검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배임수증재·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2024-06-21	법원(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석범),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발부
2024-06-27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 부장판사 안희길),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
2024-07-0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용진·한상진 기자 불구속 기소
2024-07-12	참여연대, 검찰의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근거 대검 비공개예규 정보공개소송 1심 승소(대검찰청 항소)
2024-08-02	검찰(서울중앙지검),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명목으로 3,176명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통지
2024-08-1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엑트 대표,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대변인 불구속 기소.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전 뉴스버스 기자 등 4명 불기소
2024-08-13	검찰, 봉지욱 기자 휴대전화 반환하기로 한 날 통보 없이 재압수하고 포렌식 정보 저장
2024-08-19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본인 휴대전화 포렌식 정보 복제 및 출국금지 연장과 관련하여 국가 상대 3,100만원 손해배상 청구
2024-08-22	검찰, 김만배 등 4명 재판에서 재판부가 요구한 공소장 변경 신청

날짜	수사경과
2024-10-31	김만배,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보석 청구
2024-11-06	신학림,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보석 청구
2024-11-20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허경무), 김만배·신학림의 보석 허가
2024-11-28	뉴스타파, 검찰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발표
2024-12-10	검찰, 김만배 등 4명 재판 7차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하고 김만배 씨를 공범에서 제외
2025-04-01	검찰, 개봉 예정인 뉴스타파의 다큐멘터리 영화 <압수수색 : 내란의 시작>에 대해 재판부에 상영 금지 요청
2025-04-10	뉴스타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9,000만원 청구
2025-05-15	참여연대, 검찰의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근거 대검 비공개예규 정보공개소송 2심 승소(대검찰청 상고)
2025-05-16	서울행정법원(행정4부 부장판사 김영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를 이유로 내린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행정 11부 부장판사 김준영),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에 같은 이유로 부과한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1심 판결
2025-05-27	검찰, 경향신문 기자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 이번 처분으로 검찰이 2023년 9월 검사 1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온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모두 종결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김만배·신학림·김용진·한상진	2025-06-0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부장판사 허경무) 진행중
봉지욱·허재현·송평수	2025-06-0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백대현) 진행중

39. 화물연대 노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공정위의 수사의뢰 사건 수사(2022)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한 화물연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하여 수사한 사건

사건 진행상태	▪ 재판중
담당 부서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주요 처분	▪ 화물연대본부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2022년 6월, 화물연대는 2023년부터 종료될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수송에 대한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과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수차례 교섭을 통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논의 지속을 합의하면서 파업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2022년 연말이 다가오면서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과 차량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당정협의회를 통해 컨테이너와 시멘트 수송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및 적용 대상 품목 확대를 불가하다고 결론내렸다. 화물연대는 당정 합의안이 화주의 책임을 삭제한 일방적인 개약안이라고 반발했다.

정부의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을 위한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화물연대는 2022년 11월 24일, 다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했다. 파업 이틀째인 11월 25일,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 등을 검토중이며, 불응 시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1월 28일, 정부는 이례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화물연대 파업의 불법행위에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대본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파업으로 인한 물류마비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44조는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는 ‘재난’의 범주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파업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중대본을 설치한 것이 정당한지가 논란이 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이 결렬된 다음 날인 11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후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또한 화물연대 파업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 경찰은 업무

복귀 거부자에 대한 수사를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집중수사팀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진행 중이었던 2022년 12월 2일,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 조사 공문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해당 공문에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및 제51조 제1항(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기재했지만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를 누락해 논란이 일었다. 화물연대는 해당 공문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 시 법 위반 혐의 기재 및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해당 공문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지적되었다.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1차 현장조사(12월 2일)에 응하지 않고 다음날 조사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어진 공정위의 2차 및 3차 현장조사(12월 5일, 6일)도 거부했다. 2023년 1월 16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거쳐 화물연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13호 위반행위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의결하고, 1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화물연대 파업에 개입한 것이 적절한지 큰 논란이 일었다. 2022년 12월 2일, 화물연대가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하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발언은 공정위원장의 ‘무관여 원칙’, 즉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조사와 심판을 엄격히 분리하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혹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사업주들에 대한 독과점, 담합 등을 감독, 조사, 처분하는 기관으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검찰에 고발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함께 제기되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운송사업을 위한 개인사업자 등으로 구성되었고,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없으므로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화물연대 구성원들이 지배적 지위에 있는 화주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이며, 대법원이 특고인 학습지교사 및 방송연기자의 노동자 지위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판시한 것을 들어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가 아니라 노동자단체 즉 노조라는 반박이 제기되었다.

법 개정 후 사상 처음이었던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무관여 원칙’ 훼손과 공정거래법에 따른 화물연대 고발, 2023년 정부의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위를 경제 부처가 아니라 경제사법기관으로 주문했던 일련의 상황에 대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서도 국내외 노동계의 반발과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은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제14조 업무개시 명령 도입 후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조항을 실제로 발동한 최초의 사례였다. 2022년 12월, 노동계는 업무개시 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 2024년 3월, 국제노동기구(IL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50차 이사회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의 권고안을 채택하고 한국 정부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화물연대는 2022년 12월 5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12월 19일, 서울행정법원(행정2부 재판장 신명희)에 화물자동차법 업무개시명령 조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024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화물자동차법 14조 1항과 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단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한편 화물연대가 지속 및 확대를 요구했던 안전운임제는 결국 폐지됐다. 정부가 12월 8일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하는 등 대립이 최악으로 격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중재를 위해 품목 확대 없이 안전운임제 기간만 3년 연장하는 애초의 정부 측 협상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 제안은 이미 화물연대 측 파업으로 무효화되었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이튿날인 12월 9일 화물연대는 총투표 결과 총파업을 철회했고,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단독 개의해 애초의 정부 측 협상안을 그대로 수용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사위(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로 회부된 후 더 이상 법안 처리는 진행되지 않았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도는 2022년 12월 31일 일몰제 규정에 따라 폐지됐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 합의로 화주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등 기존 안전운임제의 성격을 약화시키고 이름도 바꾼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후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23년 8월,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이정섭)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본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공정위가 진행한 현장 조사 당시 조사 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한 혐의로, 공정위 주장대로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단체라고 판단한 것이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화물연대본부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지검장 송경호 - 4차장 고흥곤 - 부장 이정섭(주임)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2-12-02	공정위,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관련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했는지 여부 조사를 이유로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 부산지역본부 사무실 방문(1차). 화물연대 건물 진입 거부로 조사 미실시
2022-12-05	공정위,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관련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했는지 여부 조사를 이유로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 부산지역본부 사무실 방문(2차) 화물연대 건물 진입 거부로 조사 미실시
2022-12-06	공정위,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관련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했는지 여부 조사를 이유로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 부산지역본부 사무실 방문(3차) 화물연대 건물 진입 거부로 조사 미실시
2022-12-09	화물연대, 정부의 강경 대응에 총파업 종료 후 업무개시명령, 공정위 조사 개시 등 정부 대응이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인 87호, 98호 위반했다며 국제노동단체와 함께 진정 제출
2022-12-19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근거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울행정법원에 신청
2022-12-2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인 87호와 98호를 위반했다며 ILO에 정부 제소
2023-01-18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화물연대본부 검찰에 고발
2023-08-09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이정섭)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를 불구속 기소
2024-03-15	국제노동기구(ILO),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50차 이사회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의 권고안을 채택, 한국 정부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
2024-12-22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화물자동차법 14조1항과 4항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화물연대본부	2023-10-12	1심 첫 공판
	2025-06-05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 2023고단4519) 선고 - 화물연대본부 무죄 - 검찰 항소
	2025-06-00	2심(서울중앙지법 제4-2형사부) 재판중

40. 시민노동단체 ‘간첩단 사건’ 수사(2022)

2022년 11월 국정원과 경찰이 창원·제주·전북 전주 등 각지에서 시민·노동단체 인사들이 ‘자통 민중전위’, ‘ㅎㄱㅎ’ 등의 단체를 설립해 활동하거나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사건

사건 진행상태	▪ 재판중
담당 부서	▪ 국가정보원 ▪ 사건1 : 경상남도경찰청 안보수사과, 창원지검 형사4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 사건2 : 제주경찰청 안보수사과, 제주지검 형사2부 ▪ 사건3 :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전주지검 형사3부 ▪ 사건4 : 경찰청 안보수사과, 제주경찰청 안보수사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주요 처분	▪ 사건1 : ‘창원 간첩단’ 피의자 4인 구속 기소 ▪ 사건2 : 박현우, 고창건 구속 기소, 강은주 불구속 기소 ▪ 사건3 : 하연호 불구속 기소 ▪ 사건4 :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인 구속 기소

1. 사건개요

2022년 11월 9일, 국정원과 경찰은 서울·창원·경남 진주·제주·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진보 인사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국정원과 경찰은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 제주 지역 진보 인사 3명, 전북 전주 진보 인사 1명, 민주노총 관련자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이어갔다. 진보단체 등은 해당 압수수색이 정권위기 모면을 위한 공안몰이에 해당한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압수수색 절차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정원과 경찰청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은 크게 네 가지이다.

사건1.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등 4명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하여 지령을 받고, 2016년경부터 경남 창원에서 ‘자통(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이다. 경남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 북한 선수를 응원하고, 친일적폐청산운동과 반미운동을 진행한 것이 그 정황이라는 것이다. 2023년 3월, 김규현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창원 간첩단’의 대우조선해양 파업 관여 의혹 수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관련자 4명이 체포되었고, 검찰(서울중앙지검)은 북측 지령을 받아 반정부 투쟁과 반미운동을 벌이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관련 수사 상황 등을 북측에 보고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피의자 측이 제기한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은 기각됐다. 피의자 중 한 명이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소속 대공수사관이 변호사 접견을 방해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은 국정원에 CCTV 영상 녹화물을 보전하도록 했다. 또한 피의자 측은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압수수색 영장 내용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며, 공수처에 피의사실 공표와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국정원을 고발했다.

사건2. 진보당 제주도당 전직 간부가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전한 뒤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포섭해 제주 지역에서 ‘ㅎㄱㅎ’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사상교육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이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제7조(찬양·고무 등)와 8조(회합·통신 등)) 혐의로 체포했다. 국정원 등은 친북활동의 정황으로 2019년 북한 영화 상영식을 들었으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 측에서 해당 행사를 주관했고 통일부의 북한영화상영 승인 허가를 받아 진행했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2023년 4월, 제주지검은 강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박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을 구속기소 했다.

사건3.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대표가 북한 공작원과 베트남과 중국 등지에서 5차례 이상 만나고 이메일 등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이다. 서울경찰청은 하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고, 전주지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1심에서 하연호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건4.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제주 평화쉼터 대표 등 4명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캄보디아 등에서 활동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등 북한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이다. 국정원과 경찰은 2023년 1월 18일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직원 출입 봉쇄와 에어매트리스 설치 등이 진행되면서 과도한 집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 압수수색을 통해 ‘퇴진이 추모다’ 등의 구호를 담은 북한의 지령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측은 집회 시 ‘퇴진’ 용어를 쓴 적 없다며 반박했다. 3월, 검찰(수원지검)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구속했고,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관계자와 보건의료노조 간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이는 국정원 주도로 경찰과 검찰이 함께하는 대공합동수사단의 첫 본격적인 수사였다. 5월, 검찰은 이들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받으며 지하조직 ‘지사’를 결성해 민주노총의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하여 노동단체를 장악해 조종하려고 시도하고,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 등과 접선해 지령을 받고,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전달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구속기소 했다.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간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4명에 대한 1심 재판에서 1명(제주 평화쉼터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이어진 2심에서는 추가로 1명(금속노조 전 부위원장)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 나머지 2명(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보건의료노조 전 조직실장)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민주노총이 비밀조직에 장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령문에 기재된 내용을 수행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점 등을 들어 2심에서는 감형됐다. 특히 2심에서는 비밀조직과 관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2020년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2024년 경찰로의 이관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2022년 말부터 국정원의 주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예정된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방침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국민의힘) 등에서 제기되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공수사권 이관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해당 수사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유지라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수사라고 주장하며, 국정원과 윤석열정부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을 비판하고 있다. 관련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일부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사건1. 창원 ‘간첩단 사건’]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등 4인

[사건2. 제주 ‘간첩단 사건’]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고창건 사무총장

[사건3. 전북 전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

[사건4. 민주노총 관련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제주 평화쉼터 대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사건1. ‘창원 간첩단’ 사건

[경상남도경찰청 안보수사과]

청장 김병수 - 안보수사과장 김민준 - 이외 비공개²⁵²

[창원지검 형사4부(~’23.01)]

지검장 노정연(~’22.06) - 차장 장동철(~’22.07) - 부장 이승형(~’22.07) - 주임 비공개

지검장 박재익(’22.06~) - 차장 박현준(’22.07~) - 부장 엄재상(’22.07~) - 주임 비공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23.01~)]

²⁵² 경상남도경찰청은 2025년 5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담당부서만 부분공개 처분함. 이에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수사지휘라인을 기재함.

지검장 송경호 - 차장 박기동 - 부장 이희동 - 주임 인훈

사건2. '제주 간첩단' 사건

[제주경찰청 안보수사과]

청장 고기철 - 안보수사과장 총경 김종규('22.08~'23.02), 오창한('23.02~) - 이외 비공개²⁵³

[제주지검 형사2부]

지검장 이근수 - 차장 강대권 - 부장 오기찬 - 주임 전철호

(공판) 지검장 이근수 - 차장 강대권 - 부장 오기찬 - 주임 비공개('23.4~'23.9)

(공판) 지검장 노만석 - 차장 최영아 - 부장 장영일 - 주임 비공개('23.9~24.6)

(공판) 지검장 장동철 - 차장 김윤선 - 부장 최용보 - 주임 비공개('24.6~)

사건3. 전북 전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안보수사1대]

청장 김광호 - 안보수사과장 경무관 양태언 - 안보수사1대장 경정 서경민 - 안보수사1대 1팀장

경감 이상원 - 수사 담당자 경위 이주봉 - 수사 참여자 경감 강명석, 경위 정준영, 경사 정달우

[전주지검 형사3부]

지검장 문홍성 - 차장 황금천 - 부장 권찬혁 - 주임 온정훈

사건4. 민주노총 관련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경찰청 안보수사과]

청장 윤희근 - 안보수사과장 총경 신성철('22. 08~'23.02), 임욱성('23.02~) - 이외 비공개²⁵⁴

[제주경찰청 안보수사과]

청장 고기철 - 안보수사과장 총경 김종규('22.08~'23.02), 오창한('23.02~) - 이외 비공개²⁵⁵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지검장 홍승욱 - 차장 김영일 - 부장 정원두 - 주임 이재만 - 공판 이수영, 하용만, 홍철의

4. 수사 경과 및 결과

사건1. 창원 '간첩단 사건'

날짜	수사경과
2022-11-09	국정원과 경찰, 서울·창원·경남 진주·제주·전북 전주 등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 인사들 대상 압수수색
2023-01-11	검찰, '창원 간첩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관할 이송
2023-01-28	국정원과 경찰,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등 4명 체포
2023-01-29	법원(서울중앙지법 박노수 부장판사),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 체포적부심 기각

²⁵³ 제주경찰청은 2025년 5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관련 기밀정보'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담당부서만 부분공개 처분함. 이에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수사지휘라인을 기재함.

²⁵⁴ 경찰청은 2025년 5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담당부서(경찰청 안보수사과)만 부분공개 처분하고,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경찰청은 2023년 4월에도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담당부서(경찰청 안보수사과, 제주경찰청 안보수사과)만 부분공개를 결정하고 답변한 바 있음. 이에 청장과 안보수사과장을 경찰청 자료 등을 기반으로 작성함.

²⁵⁵ 위 각주와 같음

날짜	수사경과
2023-01-30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 구속영장 청구
2023-02-01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김상우 영장전담판사),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2023-02-09	피의자 측, 수사관할 이송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02-15	법원, ‘창원 간첩단’ 피의자 중 1인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청구한 증거보전 신청 인용하여 국정원에 CCTV 저장매체 제출 명령
2023-02-16	법원(서울중앙지법 박노수 부장판사),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 구속적부심 기각
2023-02-17	국정원과 경찰, ‘창원 간첩단’ 피의자 4명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송치
2023-02-22	헌법재판소, ‘창원 간첩단’ 피의자 측의 수사관할 이송 위헌확인 헌법소원 각하
2023-02-23	국정원과 경찰,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및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헌청지회 부지회장 사무실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2023-02-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수사관할 이송 위헌확인 헌법소원 각하
2023-02-28	검찰,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 구속기간 연장
2023-03-08	검찰,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 구속기간 2차 연장
2023-03-15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 이희동), ‘창원 간첩단’ 피의자 4명 구속 기소.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자진지원·금품수수, 편의제공, 찬양·고무 등)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 등 적용
2023-05-23	국정원과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 강원지부 간부, 전 진보당 공동대표,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과 차량 등 8건 압수수색
2023-11-07	국정원과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사무실, 사무국장과 여성농민회 사무국당 등 3명의 자택 등 4곳 압수수색
2023-11-23	국정원, 전교조 강원지부장 진모씨 출석 요구

사건2. 제주 ‘간첩단 사건’

날짜	수사경과
2022-11-09	국정원과 경찰, 서울·창원·경남 진주·제주·전북 전주 등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 인사들 대상 압수수색
2022-12-19	국정원과 경찰,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2023-02-18	국정원과 경찰, ‘제주 간첩단’ 사건 피의자 2명 체포
2023-02-20	법원(제주지방법원), ‘제주 간첩단’ 사건 피의자 2명 체포적부심 기각. 구속영장 발부
2023-02-21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불응 또는 불응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해 강제인치시켜 수사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수사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02-27	국정원과 경찰, ‘제주 간첩단’ 피의자 2명 구인하여 조사
2023-03-08	국정원과 경찰, ‘제주 간첩단’ 강은주 진보당 전 제주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피의자 3명 검찰 송치
2023-04-05	검찰(제주지검 형사2부 오기찬 부장검사), 강은주 불구속 기소, 박현우, 고창건 구속 기소

날짜	수사경과
2023-06-14	국정원과 경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장, 진보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전 사무국장 자택,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4-10-28	경찰(제주경찰청), 고을선 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장, 김성대 전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사무국장, 강정연 전여농 제주도연합 성산지회 사무국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사건3. 전북 전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날짜	수사경과
2022-11-09	국정원과 경찰, 서울·창원·경남 진주·제주·전북 전주 등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 인사들 대상 압수수색
2022-12-28	경찰(서울경찰청), 국정원으로부터 자료 넘겨받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 검찰 송치
2023-02-01	검찰(전주지방법검찰청 형사3부 권찬혁 부장검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하연호 불구속 기소

사건4. 민주노총 관련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날짜	수사경과
2022-11-09	국정원과 경찰, 서울·창원·경남 진주·제주·전북 전주 등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 인사들 대상 압수수색
2023-01-18	국정원과 경찰, 민주노총 및 보건의료노조,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 노조 사무실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2023-03-22	검찰(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제주평화센터 대표 등 4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2023-03-24	국정원과 경찰,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관계자 1명과 보건의료노조 간부 1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당 사무실 등 압수수색, 대공합동수사단의 첫 본격 수사
2023-03-28	법원(수원지방법원 차진석 영장전담판사),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제주평화센터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발부
2023-04-13	국정원, 민주노총 관계자 4명 검찰 송치
2023-05-10	검찰(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정원두 부장검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민주노총 산하 전 모 연맹 조직부장 등 4명 구속 기소
2025-01-31	검찰(수원지검 공공수사부 허훈 부장검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추가 불구속 기소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창원 간첩단’ 사건 관계자 4인	2023-04-17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부장판사 강두레 2023고합196) 관할이전 주장 배척

피고인	날짜	내용
	2023-05-02	서울고법, 관할이전 신청 기각
	2023-05-18	1심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신청 배제(피고인 측 항고 기각)
	2023-10-24	서울중앙지법, 피고인 측의 1심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피고인 측 항고 기각)
	2023-12-07	1심 재판부, ‘창원 간첩단’ 사건 관계자 4인 보석 석방(검찰 측 항고 기각)
	2024-04-16	피고인 측, 재판부에 관할이송 신청
	2024-04-17	1심 재판부, 관할(창원)이송 결정
	2024-05-02	서울중앙지검, 창원지법에 서울중앙지법 재판 재이송 요청
	2024-05-10	현재, 피고인 측의 국민참여재판법 헌법소원 기각
	2024-09-23	1심 재판부(창원지법), 재이송 않기로 결정
	2024-12-01	창원지법, 피고인 측의 1심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피고인 측 항고 기각)
	2025-05-27	1심(창원지방법원 형사4부 부장판사 김인택, 2024고합124) 재개
강은주·박현우·고창건	2023-06-19	1심 재판부(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국민참여재판 신청 배제(피고인 측 항고 기각)
	2023-09-19	1심 재판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박현우·고창건 조건부 보석 결정
	2023-09-25	1심 재판부, 피고인 측의 신청 받아들여 보석조건 변경
	2024-02-26	1심 재판부, 피고인 측의 신청 받아들여 검찰에 석명권 행사(재판장이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에게 사실상, 법률상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거나 입증을 촉구하는 권한)
	2024-05-10	현재, 피고인 측의 국민참여재판법 헌법소원 기각
	2024-07-16	제주지법, 피고인 측의 1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피고인 측 항고 기각)
하연호	2023-09-20	1심 재판부(전주지법 13형사부 부장판사 이용희) 국민참여재판 신청 배제(피고인 측 항고 기각)
	2024-10-30	1심(전주지법 11형사부 부장판사 김상곤) 선고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 - 쌍방 항소
	2024-11-01	2심(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형사부 부장판사 양진수) 진행중
민주노총 관련자 4인	2023-07-19	1심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4부 부장판사 고권홍), 피고인 2명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신청 배제 결정 -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않는 경우 등에 해당
	2023-09-13	1심 재판부, 피고인 1인 보석 신청 인용
	2023-10-27	1심 재판부, 나머지 피고인 3인 보석 신청 인용
	2024-01-29	피고인 측,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024-11-06	1심(수원지법 형사14부 부장판사 고권홍 2023고합273) 선고

피고인	날짜	내용
		-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 징역 15년(특수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3년 포함), 자격정지 15년 - 보건의료노조 전 조직실장 :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 징역 5년, 자격정지 7년 - 제주 평화쉼터 대표 : 무죄 - 쌍방향소
	2025-02-11	2심(수원고법 형사2-3부 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선고 -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 징역 9년 6개월, 자격정지 9년 6개월 - 보건의료노조 전 조직실장 :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제주 평화쉼터 대표 : 무죄 - 쌍방상고
민주노총 관련 추가 기소 2인	2025-01-31	1심(수원지법 형사12부 박건창 부장판사) 진행중

재벌 · 기업 범죄 및 산업재해 수사

41. SPC 계열사(SPL사업장) 제빵공장 노동자 작업중 사망 사건 수사(2022)

SPC 계열사인 평택 SPL 공장에서 2022년 10월 15일 소스 배합 작업 중이던 여성 노동자가 소스 혼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확보 의무 불이행 등으로 책임자들 및 관련자들을 수사한 사건

사건 진행상태	▪ 재판중
담당 부서	▪ 경기남부경찰청 평택경찰서 SPL공장 안전사고 수사전담팀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
주요 처분	▪ 강동석 SPL 대표이사 · 공장장 3명 · SPL 법인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2022년 10월 15일, SPC 계열사인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23세 노동자 A씨가 소스 배합 작업 중 소스 혼합기에 상반신이 끼어 사망했다. A씨는 혼합기 안에 손을 넣었다가 팔이 회전날개에 걸리면서 반죽물에 빨려 들어가 질식사한 것으로 국과수 부검 결과 확인되었다. 관행적으로 SPL 제빵공장에서는 끼임사고의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기계에 붙은 혼합물을 긁어내기 위해 작동 중인 혼합기에 손을 넣어 작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매뉴얼 상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작업이었음에도 A씨는 단독으로 작업에 투입되었고, 안전을 위한 자동방호장치는 기계에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 일부 기계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SPL 공장에서는 사고가 일어난 현장 주변에서 작업을 재개하는 등 안일한 조치로 공분을 일으켰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고, 일부 소비자들은 SPC 그룹에 대한 불매운동을 진행했다. 이에 SPC는 사고 6일이 지나서야 공식 사과하고 3년간 총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재발 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8일에도, 2025년 5월 19일에도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했고, 손가락 끼임사고로 인한 절단, 골절상 등 SPC 내 산재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10월 사망 사건 이후에도 SPC 그룹 주요 6개 계열사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23년 176건, 2024년 144건이다.)

사망 노동자 유족은 허영인 SPC 그룹 회장, SPL 주식회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고, 경찰에도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소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수사 결과 작업자 안전 교육 및 사고 방지 대책 수립이 미흡한 것이 확인되었고,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결여된 상황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이 드러났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와 공장 관리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SPL

주식회사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2023년 8월 2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김윤정)는 강동석 전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대표 취임 후 반복적인 끼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반복 사고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유로 기소된 첫 번째 사례이다. SPL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공장장 등 3명도 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단 SPC 계열사에서 중대재해가 반복하지 않으려면 허영인 회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허영인 SPC 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SPL 주식회사 법인
허영인 SPC그룹 회장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
SPL 제빵공장 관계자 4명
SPC삼립세종생산센터 직원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
지청장 이준엽 - 부장 김윤정 - 주임 신석규
[경기남부경찰청-평택경찰서 SPL공장 안전사고 수사전담팀]
전담팀장(강력범죄수사대장) 총경 양수진 - 형사2과장 경감 차민석 - 강력계장 경감 함윤권 - 강력4팀, 강력3팀, 도경찰청 안전사고수사팀
- 강력4팀 경위 이승엽, 경사 김용구, 박병민, 김남현, 경장 이종혁
- 강력3팀 경감 김진설, 경사 소순찬, 홍준기, 김현수, 경장 권도연
- 도경찰청 안전사고수사팀 경정 정요섭, 경감 강석범, 경위 최영, 경사 노봉현, 심규원, 경장 임승대, 이호성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2-10-15	평택 SPL 제빵공장 노동자 박선빈 씨(23세, 여), 오전 6시 20분경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혼합기 가동하던 중 앞치마가 기계에 빨려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로 사망
2022-10-15	고용노동부, SPL 제빵공장 일부 기계 작업 중지 명령 및 조사 개시
2022-10-15	경찰(경기 평택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초기내사 시작 및 과 수사팀 구성

날짜	수사경과
2022-10-17	고용노동부, 경기지청·평택지청·산업안전보건본부 감독관 등 포함 수사전담팀 구성
2022-10-18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제빵공장 안전관리 관계자 불구속 입건
2022-10-1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 입건
2022-10-20	고용노동부와 경찰, SPL 본사와 제빵공장 합동 압수수색
2022-10-21	허영인 SPC그룹 회장,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2022-10-21	사망한 노동자 박선빈 씨 유가족, SPL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장 접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기 평택경찰서에 고소
2022-10-21	국과수, 노동자 박선빈 씨 사망 원인 질식사로 추정해 경찰 등에 전달
2022-10-24	경찰, 평택 SPC공장 2차 합동감식 실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참여
2022-10-24	SPL, 사망한 노동자 박선빈 씨 장례식장에서 입관식 마치자 '형사고소 말라'며 유가족에게 합의금 제안했던 사실 언론보도
2022-10-27	사망한 노동자 박선빈 씨 유가족, 허영인 SPC그룹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허 회장이 SPC의 실질 경영책임자라는 게 유족 측 주장
2022-10-28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 및 공장 관리자 3명 불구속 입건
2022-11-02	경찰,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공장장 등 2명 휴대전화 확보 및 디지털 포렌식 수색
2022-11-14	SPC그룹, 안전경영 강화를 위한 '안전경영위원회' 공식 출범
2022-12-27	고용노동부, SPC그룹 18개 계열사 58개 사업장 기획 감독한 결과, SPC 그룹 계열사 10곳 중 8곳(86.5%)이 안전보건조치 미흡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및 식품안전법 등 위험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사업장 절반에서도 안전관련법 위반 확인 발표
2023-02-09	경찰(경기 평택경찰서), 사고 발생 이후 110일 간 수사 종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공장장, 공장 관리자 등 5명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2023-02-10	고용노동부(경기고용노동지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SPL 주식회사 법인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단, 허영인 SPC그룹 회장 이번 사고에 직접 책임 없다고 결론내림
2023-02-22	검찰, SPL 강동석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 적용 방침 확정 및 불구속 기소
2023-08-25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공장장 3명, SPL 법인 불구속 기소 - 강동석 SPL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 공장장 3명 :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 SPL 법인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 허영인 SPC 회장 : SPL은 별도의 법인이므로 허영인 SPC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
2023-09-18	SPL 강동석 대표이사, 사망사고 11개월 만에 자진 사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언론보도
2023-09-19	사망 노동자 박선빈 씨 유가족 등, 허영인 SPC 회장 불기소에 대해 검찰 항고
2023-10-00	검찰(수원고검), 허영인 불기소에 대한 항고 기각

날짜	수사경과
2023-00-00	사망 노동자 박선빈 씨 유가족 등, 검찰의 허영인 불기소에 대해 수원고법에 재정신청
2024-02-00	법원(수원고법), 허영인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 공장장 임모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 SPL 주식회사 법인	2025-01-21	1심(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 선고 - 강동석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공장장 임모 씨 및 회사 관계자 3명 : 금고 4~6개월, 집행유예 2년 - SPL 주식회사 법인 : 벌금 1억 원

검사 · 법관 · 경찰 비위 의혹 수사

42.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2021)

대검이 ‘검-언 유착’ 의혹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과 뉴스타파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해, 검찰 출신이자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김웅(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에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사건

사건 진행상태	▪ 재수사중
담당 부서	▪ 공수처 수사3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주요 처분	▪ 공수처, 손준성 불구속 기소 및 윤석열·한동훈 무혐의 처분 ▪ 검찰, 김웅 무혐의 처분

1. 사건개요

인터넷언론매체 <뉴스버스>가 조성은의 제보를 2021년 9월 2일 단독보도했다. 제보자 조성은은 2020년 4월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와 고발장과 첨부자료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주고받았고, 김웅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해야 한다” 등의 대화를 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녹취록이 공개되며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전달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이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으로 확인됐다. 조씨가 해당 고발장을 당에 직접 전달하지 못했지만, 미래통합당이 실제 2020년 8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고발했다. 이 고발장과 조씨가 공개한 고발장이 거의 일치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직속부서이며, 검찰총장 가족과 관련된 고발장이 작성된 만큼 윗선인 윤석열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고발사주 사건은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를 받는 현직 고위 검사가 총선 직전에 여권 유명 인사를 표적으로 한 고발장을 야당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려는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었고, 김웅 의원이 건넨 고발장과 실제로 접수된 고발장이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관련자들이 사유화된 검찰 조직을 통해 자신의 권한을 오남용하여 정치에 적극 개입하고자 한 것으로 검찰 제도와 형사사법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하고 중차대한 사안으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뉴스버스>의 보도 이후 제보자의 실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조성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 제보자임을 밝혔다. 보도 이후 대검 감찰부, 서울중앙지검, 공수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가, 대검 감찰 자료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지고, 공수처와 함께 수사에 착수했던 서울중앙지검이 손준성 등 검사 3명의 연루를 확인하고 9월 말 공수처에 이첩하며 이후 수사는 공수처가 담당했다.

한편 제보자 조씨가 뉴스버스의 최초 보도 전 박지원 국정원장과 두어 차례 만난 것을 두고 윤석열 캠프는 ‘제보 공모’라며 고발했는데, 이 사건은 고발 사주 사건과 병합되었다. 공수처는 2022년 6월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조씨 등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검찰에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22년 9월, 조씨와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고발했던 윤석열 캠프는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했으나 2022년 11월 기각되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9월 10일 김웅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2020년 4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10월 20일 손준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10월 23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이 역시 기각되었다. 공수처의 소환에 대해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수사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11월 2일과 11월 3일에 각각 손준성과 김웅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어졌다.

2022년 5월, 공수처는 손준성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정작 핵심 혐의라던 직권남용 혐의는 불기소했다. 김웅에 대해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혐의가 있으나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라며 검찰에 이첩했다. 함께 입건되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는 소환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건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은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범죄는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가 아니라며 검찰에 이첩했다. 2022년 11월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대해 재정신청이 제기됐지만 기각되었다.

공수처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과 “공모하여” 고발장을 작성,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이것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 검사를 불기소하였고,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죄 부분을 불기소하는 이상,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관련 혐의들은 모두 불기소”한다고 하고 있다. 공수처는 몇 달 동안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대한 의혹에 대해 새롭게 밝혀낸 것이 거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고발장의 실제 작성자를 특정하지도 못했고, 당시 검찰총장으로 손준성 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윤석열 당선이나 한동훈 후보자의 연루 의혹은 ‘수사’까지 가보지도 못했고, 그 결과, 직권남용죄에 관하여 윤석열 당선자와 한동훈 후보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등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내린 것이다.

2022년 9월,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이희동 부장검사)은 김웅에 대해 손준성과의 공모 관계 입증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김웅 의원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한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은 2021년 9월 검찰이 고발 사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손준성을 비롯한 현직 검사 3명이 문제의 고발장 작성에 참여한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김웅 의원이 고발장 제출 방법과 제출할 장소 등을 정당 관계자인 고발 사주 제보자와 논의한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사이의 공모관계를 전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범으로 지목된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검찰로 사건을 다시 이첩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김웅을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건희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2022년 12월 손준성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보고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불기소처분은 당시 수사책임자인 이희동 부장검사가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수사관과의 면담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토대로 했는데, 면담 보고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제3자 개입 가능성에 대해 해당 수사관이 법정에서 이에 관해 본인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한 것이다.

손준성 검사에 대해 2024년 1월 31일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326)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반면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2024노495)는 2024년 12월 6일 손 검사가 자료 작성에 관여한 부분은 인정하였지만, 이를 김웅 전 의원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2025년 4월 24일 대법원(주심 노경필 대법관, 2024도20430)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등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라고 언급했다.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의 자료를 전달한 것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일 가능성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제보자 조성은 씨는 2025년 3월 윤석열·김건희·한동훈·김웅 등을 직권남용·위증·증거인멸 등 혐의로 공수처에 재고발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하고 수사를 이어갔다.

한편, 2023년 12월 국회는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형사재판을 이유로 중단되었다가 무죄 확정판결 이후 재개되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준성 검사 / 2020.4.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김영일 검사 / 2020.4. 당시 수사정보1담당관

성상욱 검사 / 2020.4. 당시 수사정보2담당관

임홍석 검사 / 2020.4. 당시 대검 검찰연구관

한동훈 검사 / 2020.4. 당시 부산고검 차장

권순정 검사 / 2020.4. 당시 대검 대변인

김건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 / 전 검사, 2020.4. 당시 국민의힘 송파갑 총선 후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지검장 이정수 - 차장 진재선 - 부장 최창민 - 주임 비공개

지검장 송경호('22.05~) - 차장 박기동('22.05~) - 이희동('22.07~) - 주임 비공개

[공수처 수사3부]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이의신청 기각²⁵⁶

처장 김진욱 - 차장 여운국 - 부장 최석규(~'22.10)

처장 오동운 - 차장 이재승 - 부장 이대환(재고발건 '25.03~)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1-09-02	뉴스버스 '고발사주' 의혹 최초보도
2021-09-03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당무감사 실시하겠다고 밝힘
2021-09-03	김오수 검찰총장, 대검 감찰3과 진상조사 지시
2021-09-04	제보자 조씨, 대검 감찰부에 고발장과 실명판결문 촬영 텔레그램 이미지 등을 제출하고 진술
2021-09-06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공수처에 윤석열·손준성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2021-09-08	윤석열 전 총장 기자회견 진행. 자신과 무관하다며 여권의 공작 의혹 제기. 김웅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 진행. 주요 의혹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
2021-09-09	조씨, 본인이 김웅으로부터 문건을 받은건 맞지만 당에 따로 전달은 하지 않았다고 밝힘
2021-09-09	공수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준성 검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입건, 김웅 참고인 신분
2021-09-09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 조씨 참고인 신분 조사. 스마트폰과 USB 증거물 제출 받음
2021-09-10	공수처 손준성 검사의 대구고검 집무실과 서울 자택, 김웅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 총 5곳 압수수색. 단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제지로 중단됨. 대검 감찰부, 대검 연구관 추가로 파견받아 총 7명으로 인력 증원
2021-09-10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가 영장에 적시된 범위 외 압수수색하고, 자신의 허락을 받았다고 보좌관에게 거짓말했다며 공수처장 사퇴 요구 및 공수처 검사 고발하겠다고 밝힘
2021-09-10	제보자 조성은, 실명 인터뷰 진행함. 김웅이 자신에게 문건을 전달하면서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라, 절대로 서울중앙지검에 하면 안된다'라고 말했다고 밝힘
2021-09-13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재 실시
2021-09-13	대검, 최강욱 열린민주당 등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²⁵⁶ 공수처는 2025년 5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처분하고, '귀 단체가 해당 사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 공수처는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이에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수사지휘라인을 기재함.

날짜	수사경과
2021-09-13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위’ ‘제보 공모’ 의혹 고발.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씨가 만나 제보를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혹
2021-09-14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에 사건 배당
2021-09-14	국민의힘 공명선거추진단(단장 김재원 최고위원) 고발사주 의혹 조사 나서겠다고 함
2021-09-15	공수처, ‘박지원-조성은 공모’ 의혹 고발한 윤석열 캠프 변호인 고발인조사
2021-09-16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 대검 검찰부 검찰자료 임의 제출 받고 수사 착수
2021-09-23	조씨, 윤석열·김웅 명예훼손, 모욕 및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2021-09-27	공수처, 조씨 참고인 신분 조사
2021-09-28	공수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성상욱 수사정보2담당관, 임홍석 전 대검 검찰연구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 당시 손준성과 함께 일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의 컴퓨터 등 자료 확보
2021-09-30	검찰, 손준성 검사 포함 고발사주 사건 현직검사 3명 공수처에 이첩
2021-09-30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 최강욱 열린민주당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7명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
2021-09-30	검찰, 조씨가 윤석열 등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경찰로 이송
2021-09-30	공수처, ‘박지원-조성은 공모’ 의혹 고발한 윤석열 캠프 변호인 2차 고발인조사
2021-10-01	국민권익위원회, 조씨 공익신고자로 인정, 신변보호 조치
2021-10-05	공수처,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사건 입건, 기존 수사 중 사건과 병합
2021-10-06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 각각 입건 후 병합해 수사2부(부장 김성문)에서 수사한다고 밝힘. 박지원 국정원장 혐의는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2021-10-06	공수처, 정점식 의원실(국민의힘), 당내 고발 담당 조상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2021-10-06	뉴스버스, 김웅 - 제보자 조씨 전화통화 녹취록 내용 일부 보도
2021-10-07	조씨, 공수처에 녹취파일 정보공개청구
2021-10-11	공수처, 당 법률자문위원인 조상규 변호사 참고인 조사.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실장으로부터 고발장 ‘초안’ 받아 2020.8.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대검에 고발했었음. 2020.4. 김웅에게 전달된 고발장 4월 8일 고발장과 거의 동일
2021-10-13	공수처,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실장 참고인 신분 조사. ‘최강욱 고발장’ 초안을 정점식의원으로부터 전달받고, 조상규 변호사에게 전달해 실제 고발로 이뤄지게 한 배경 조사
2021-10-14	공수처, 한동훈 검사와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 입건. 직권남용 등 혐의
2021-10-14	윤석열, 법무부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2021-10-19	PD수첩, 김웅 - 조씨 전화통화 통화 음성 공개(윤석열 언급 확인됨)
2021-10-20	김웅, 통화 내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취재진에 답변
2021-10-20	공수처, 서울중앙지법에 손준성 검사 체포영장 청구했지만 기각
2021-10-21	공수처,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함께 일한 수사관과 파견검사 등 조사했다는 언론보도

날짜	수사경과
2021-10-2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웅) 징계안(박주민의원 등 22인), 국회의원(정점식) 징계안(민병덕의원 등 24인) 제출
2021-10-22	공수처, 윤석열 판사 사찰 문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
2021-10-23	공수처, 손준성 검사 사전구속영장 청구
2021-10-26	서울중앙지법(이세창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기각
2021-10-26	공수처,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 압수수색
2021-10-29	대검 검찰부, 대변인 공용 휴대폰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공용폰은 권순정 전 대변인 등이 사용했었음
2021-11-01	공수처가 김웅과 조성은 폭파된 텔레그램 대화방 복원했다는 언론 보도
2021-11-02	공수처, 손준성 검사 소환 조사
2021-11-03	공수처, 김웅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2021-11-03	공수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A씨 참고인 신분 조사
2021-11-05	공수처, 대검 검찰부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 대검의 포렌식 자료 확보함. 그 직전에 대검 검찰부가 전·현직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로 압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부가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대비한 것이 아니냐는 ‘하청감찰’ 의혹이 제기됨.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의 부하 검사 2명(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전 대검 감찰연구관) 추가 입건
2021-11-10	공수처, 손준성 2차 소환 조사
2021-11-15	공수처, 대검 4번째 압수수색
2021-11-30	공수처, 손준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2021-12-03	법원(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판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2022-01-04	손준성, 퇴원
2022-01-10	손준성, 준향고 법원에 의견서 제출
2022-04-19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 손준성, 김웅 등의 처분에 대한 논의 과정과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함. 이후 공소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의견을 의결하였다는 언론 보도 있음.
2022-05-04	공수처 수사 결과 - 손준성 : 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무혐의 - 김웅 :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 인정하나,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으므로 검찰에 이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무혐의 -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 정점식, 성상욱, 임홍석 외 1인 : 무혐의 - 김건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무혐의, 나머지 범죄는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검찰에 이첩
2022-05-31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손준성의 직권남용,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에 대한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
2022-06-13	제보사주에 대한 공수처 수사 결과 - 박지원 :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 무혐의 - 조성은, 성명불상 전 국정원 직원 등 3명 :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 이첩

날짜	수사경과
2022-09-08	제보사주에 대한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수사 결과 - 조성은 및 성명불상 전 국정원 직원 등 3명 : 불기소처분
2022-09-00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위’, 제보사주에 대한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에 재정신청
2022-09-29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이희동 부장검사), 김웅 불기소 처분. 손준성과의 공모 관계 입증 증거 부족
2022-10-14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웅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2022-11-04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공수처의 손준성의 직권남용 혐의,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
2022-11-10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이해란),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위’의 공수처의 제보사주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
2025-03-06	제보자 조성은 씨, 공수처에 윤석열·김건희·한동훈·김웅 등을 직권남용·위증·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
2025-03-14	공수처, 조성은 씨의 윤석열·김건희·한동훈·김웅 등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3부 배당했다고 밝힘
2025-06-23	공수처(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 윤석열 등 재고발한 조성은 고발인 조사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손준성	2024-01-31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옥곤 부장판사, 2022고합326) 징역 1년 선고 -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 일부 유죄 - 쌍방항소
	2024-02-15	2심(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 정재오 부장판사, 2024노495) 전부 무죄 - 검사 상고
	2025-04-24	3심(대법원 1부 주심 노경필 대법관, 2024도20430) 전부 무죄 확정

43. [대장동3] 김만배 등의 50억 클럽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2021)

김만배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법조계 인맥 등을 통해 로비를 했고, 그 대가로 50억 원 등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했다는 법조계 인맥 로비 의혹 수사

사건 진행상태	▪ 재판중, 수사중
담당 부서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반부패수사3부, 공수처 수사1부
주요 처분	▪ 곽상도 · 박영수 구속 기소 ▪ 양재식 · 권순일 · 홍선근 불구속 기소 ▪ 김만배 · 남욱 추가 기소

1. 사건개요

2014년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공·민간 공동 사업으로 하기로 함에 따라, 하나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동양생명 · 하나자산신탁 등 5개 은행 및 보험사와 SK증권, 화천대유자산관리 주식회사(화천대유) 등은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 주식회사’(성남의 뜰)를 구성했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하나은행을 대표사로 하는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런데 5,000만 원의 자본금으로 사업공모 일주일 전에서 설립되어 아무런 실적도 없었던 화천대유가 자산관리사로서 577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이 2021년 9월 알려지면서, 민간개발업자가 공공개발 사업에 참여해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경위와 배경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SK증권의 경우는 ‘성남의 뜰’에 6%의 지분을 보유했는데 여기에 특정금전신탁을 한 실소유주는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7개의 1인 소유 부동산 투자회사였고, 이들은 모두 화천대유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며, 지분액 3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3년간 3,463억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개발 비리·부패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화천대유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화천대유의 초호화 법률 자문·고문단이 논란이 되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 전현직 고위 법관과 검사, 정치인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의 경우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할 2015년 당시 대장동 개발 관련 로비사건으로 남욱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논란을 샀다. (참고. ► [김만배의 검찰 수사 무마 및 재판 거래 의혹 사건 수사\(2021\)](#) 중 사건2)

이에 김만배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법조계 인맥 등을 통해 로비를 했고, 그 대가로 50억 원 등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했다는 ‘법조계 인맥 로비 의혹’이 일었다. 특히

2021년 9월, 정영학 녹취록에 김만배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언급된 6명 인사들의 명단(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박근혜 대통령실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공개되면서 소위 ‘50억 클럽’을 둘러싼 논란은 가중됐다. 검찰은 김만배가 50억 원 지급을 위해 화천대유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갔다.

곽상도 | 컨소시엄 구성 청탁 대가로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수수 의혹

정영학 녹취록과 검찰 수사에 따르면, 오랜 법조기자 경력을 가진 김만배는 2015년 3월경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통해 하나은행을 성남의 딸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로비했다고 알려졌다. 하나은행이 성남의 딸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부터 동참을 제안받았지만, 김만배의 부탁을 받은 곽상도가 하나은행이 성남의 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만배가 그 대가로 곽상도 아들 곽병채 씨의 퇴직금 50억 원을 가장해 곽상도에게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았다.

2021년 9월, 곽상도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고, 퇴직하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이 알려져 뇌물 의혹이 제기되었다(세금 공제 후 25억 원). 논란이 지속되자 곽상도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사퇴 이후에도 논란은 확대됐다. 검찰은 곽상도가 2016년 3월에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만배의 소개를 받은 남욱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했고, 남욱 측은 해당 돈이 수원지검에서 수사(이강길로부터 로비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을 당시 자문을 받아 변호사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결국,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가 진행된 후 알선수재 및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곽상도와 남욱, 김만배는 기소됐다. 구속 기소된 곽상도는 계속되는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곽상도의 1심 재판에서 15년 형을 구형했지만 2023년 2월, 1심 재판부가 곽상도에 대해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곽상도가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유지하도록 알선하고 직무와 관련해 대장동 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핵심적인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김만배가 남욱에게 “컨소시엄이 깨질 뻔했는데 곽상도가 하나은행 회장에게 전화해서 막아줬다”는 진술을 인정하면서도 김만배가 “별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농담조로 말한 것”이라는 진술을 받아들였다. 즉,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 기재된 ‘곽상도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참여를 압박하기 위해 하나은행 회장에게 전화했다는 의혹’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했고, 이를 부인하는 김만배의 진술 또한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김만배가 “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 며칠 전에도 2천만 원”라고 말한 부분, 곽병채가 김만배에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라며 나눈 대화는 1심에서 검찰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고,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도 유죄인정에 기여하지 못했다.

곽상도의 알선수재, 뇌물 혐의 재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선고를 받아 많은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비판과 별도로, 법원이 ‘전문증거,

재전문증거’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 드러난 대화 내용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녹취록에만 의존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아닌지 비판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곽상도를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뇌물죄로 기소한 점, 곽병채가 피의자로 기소되지 않은 점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오남용이라는 비판 등도 거셌다. 곽상도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회적 파문이 확장되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등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4월, 검찰은 곽상도와 곽병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곽병채를 뇌물 혐의로 입건하고 성남의 딸의 경쟁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호반건설,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상도를 향한 뇌물 및 알선의 대가를 직원인 곽병채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허위 지급한 것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미 기소된 혐의로 추가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기에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 곽상도는 검찰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추가로 인지해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검찰이 영장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는 무관한 별건 압수수색을 했다면 반발했다.

2023년 10월, 수사를 이어간 검찰은 곽상도·곽병채·김만배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곽병채에게는 곽상도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뇌물 혐의와 관련해 공모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적용됐다. 곽상도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추가 기소가 같은 사건으로 이중 기소를 한 것이라며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육이 곽상도에게 추가로 5천만 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하면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존에 진행 중이던 재판에서 곽상도가 받은 정치자금을 총 1억 원으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한 김만배가 곽상도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직원·남육·정영학에게 총 1,300만 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를 확인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영수 | 컨소시엄 구성 관련 청탁 대가로 대한변협 회장 선거자금 수수

검찰은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 박영수 당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대검 중수부장 출신, 이후 국정농단 특검)을 통해 우리은행을 성남의 딸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하고, 부국증권 등을 컨소시엄에서 배제하도록 하기 위해 청탁했다고 보았다. 그 대가로 50억 원 지급을 약속하고, 이후 박영수 딸에게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해 주고 분양대금 대출을 해줬으며, 박영수의 친인척인 대장동 분양대행 독점업체 대표 이기성을 통해 박영수에게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았다.

2014년 10월, 김만배는 당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영수의 소개로 우리은행 측과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 구상을 위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2월, 김만배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총괄할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설립했고, 3월 하나은행과 함께 성남의 딸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당시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던 우리은행은 불참을 결정했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고 성남의 딸 컨소시엄에 여신의향서를 발급했다. 이후 사업 과정에서 여신의향서가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검찰은 이것이 우리은행이 경쟁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성남의 딸 컨소시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만배가 박영수에게 청탁한 결과라고 봤다.

2015년 3월 27일 성남의 딸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그 직후인 4월 2일에는 김만배의 요청으로 이기성이 박영수에게 5억 원을 송금했다. 검찰은 이를 청탁의 대가라고 보고, 당시 추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봤다. 다음날 박영수는 화천대유 계좌로 5억 원을 다시 송금했는데, 김만배와 박영수는 이것이 화천대유 설립 자본금 및 증자대금으로 김만배가 이기성에게서 빌린 돈이며, 박영수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 생색낼 수 있도록 박영수의 계좌를 거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5억 원이 오갈 때 작성된 자금차용약정서에는 ‘박영수가 요청할 경우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적힌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김만배가 박영수에게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제공하면서도 명목상 화천대유 자본금 5억 원을 대여하는 외형으로 꾸미고, 50억 원 상당의 차명 지분을 제공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5년 7월, 김만배는 박영수를 화천대유 고문으로 선정하고, 8월에 박영수의 딸이 화천대유에 입사했다. 박영수의 딸은 2021년 6월 대장동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가로 분양받았고 화천대유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대여했다. 이로 인해 김만배가 박영수의 딸과 이기성을 통해 50억 원 이상을 전달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2년 5월, 검찰은 이기성에게 전달한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만배를 기소했으나, 이기성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만배가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등을 박영수에게 청탁했고, 박영수가 이를 같은 법무법인 소속 양재식 변호사(이후 국정농단 특검보)에게 전달해, 양재식이 정영학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기획한 것으로 보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검찰이 이와 같은 사실을 2021년 9월 이후 초기 수사 단계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박영수를 소환조사 했을 뿐, 별다른 수사를 이어가지 않았다.

이에 검찰의 수사가 유동규, 정진상, 김용, 이재명 등에게 집중하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검찰 출신이라는 신분에 의해 박영수에 대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2023년 2월 광상도의 ‘퇴직금 50억 원’ 1심 재판 판결로 사회적 파문이 확대되자, 야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 불공정성 등을 들어 ‘50억 클럽’ 특검 도입 법안 발의와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다. 2023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50억 클럽’ 특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 도입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자 2023년 3월 17일,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부국증권 부사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고, 박영수와 양재식의 사무실, 우리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박영수가 당초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청탁을 대가로 양재식을 통해 200억 원 상당의 금품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포착하기도 했다. 2023년 4월 3일, 금융감독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박영수의 우리은행 대출 청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은행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국회가 특검 도입 논의를 가시화하자 검찰이 특검 도입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새로운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후 2023년 5월 검찰은 박영수의 대한변협 회장 선거를 도운 남욱을 소환조사하고, 6월에는 양재식, 이기성 등을 소환조사한 끝에 박영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했다. 이후 검찰은 박영수가 남욱에게 2014년 10월경 대한변협 회장 선거자금을 명목으로 3억 원을 요구해, 그해

말까지 현금 3억 원 이상을 전달받았다고 보고, ‘50억 클럽’ 관련 혐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재식 또한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이 박영수의 직무 해당성 여부 등을 들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고, 검찰은 박영수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2023년 7월, 검찰은 박영수의 딸이 화천대유 재직 시절 11억 원의 대여금을 받은 것이 박영수의 ‘50억 약속’의 일부라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박영수가 ‘50억 클럽’ 특검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을 고려해 2023년 8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박영수를 구속 기소하고, 양재식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50억 클럽’ 특검법은 2023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2024년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석열은 ‘50억 클럽’ 특검법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밝혔고, 법무부는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수사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지부진한 검찰의 수사로 인해 발의된 특검법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거부한 것이 본말전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국회에서 재의결에 부쳤으나 부결됐고, 이후 발의된 특검법 또한 임기만료로 폐기되면서 50억 클럽 관련 수사는 검찰에서 계속 진행하게 됐다.

권순일 | 무등록 변호사 활동 및 고문료 수수 혐의 ·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결 로비 의혹

권순일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11월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했다. 2021년 9월까지 권순일은 월 1천 5백만 원 상당의 고문료를 받아 총 1억 5천만 원을 수수했고, 이후 ‘50억 클럽’에도 이름을 올렸다. 고문 활동 당시 권순일은 대한변협에 등록하지 않은 채로 화천대유가 연루된 소송의 재판 상황 분석, 준비서면을 비롯한 법률문서 작성 등의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변호사법 위반 혐의). 권순일은 고문으로서 업무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만배가 권순일의 대법관 재임 기간 동안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8차례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재명 무죄 판결 로비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으로 5,503억 원을 벌여 성남시 1공단에 공원 부지를 매입했다고 공표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 이익이 발생 전이고 공원 조성 사업비 사용 등은 경기도지사 당선을 목적으로 업적을 과장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권순일이 김만배의 청탁으로 이재명의 무죄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김만배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당시 권순일을 만났으나 권순일이 집필하는 책을 상의하거나 언론사 인수를 위해 소개를 요청했을 뿐 재판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재판이 전원합의체로 진행되어 청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남욱은 검찰에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는 말을 김만배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권순일이 이재명 무죄 판결의 대가로서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를 받고 50억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2021년 10월, 권순일을 부정처사 후 수뢰, 공직자윤리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했지만,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 외의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경찰에 넘긴 이후에는 수사에 큰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2023년 9월,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까지 한 수사기관이 맡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검찰에 이송했다. 이송 이후에야 검찰은 ‘50억 클럽’ 혐의와 무죄 판결 로비 의혹을 함께 수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순일에 대한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2024년 8월에 권순일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무죄 판결 로비 의혹과 ‘50억 약속’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홍선근 | 50억 원 ‘무상 대여’, 이자 미지급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홍선근은 김만배가 근무하던 언론사 머니투데이 회장으로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2019년 10월경 김만배는 홍선근에게 50억 원을 빌려줬다. 당시 김만배는 천화동인 1호로부터 자금 총 473억 원을 연이자 4.6%로 빌린 상태였다(2019.05~2020.11.). 이에 김만배가 천화동인 자금으로 홍선근에게 50억 원을 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홍선근은 두 달 뒤 갚았으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2021년 6월경에도 김만배는 홍선근의 두 아들 계좌로 천화동인 1호 자금 49억 원을 송금했다. 김만배는 홍선근이 두 아들의 사업 자금 대여를 요청하며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사라는 관계를 고려해 49억 원을 무담보로 대여하고 곧 상환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송금 시기가 광상도·박영수의 자녀에게 각각 돈과 아파트가 제공된 시기와 유사해, 이 또한 ‘50억 클럽’을 위해 지급된 돈이고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보도 및 수사가 본격화 되기 전에 상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2년 11월, 경찰은 홍선근의 아들들에게 지급된 49억 원이 상환되었음을 들어 홍선근을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홍선근이 면제받은 이자를 김만배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보고 2024년 8월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수남·최재경 | 수사 오리무중

이외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최재경 전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 서면조사를 제외하고는 검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다. 아울러 시민단체가 뇌물수수 혐의로 50억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박영수, 권순일, 최재경, 김수남 등에 대해 공수처에 고발했으나 이후 수사 착수 또는 이첩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박영수 전 특검·박영수 전 특검의 딸·박영수의 친인척 이기성, 대장동 독점 분양대행 업체 대표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곽병채(곽상도의 아들)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최재경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대검 중수부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수원지검장, 화천대유 고문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곽상도·박영수 등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22.07)]

지검장 이정수 - 차장(팀장) 김태훈 - 부장 유경필 - 주임 김세현, 전효곤

지검장 송경호 - 차장(팀장) 고형곤('22.05~) - 부장 유진승('22.02~) - 주임 김세현, 전효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22.07~)]

지검장 송경호 - 차장 고형곤 - 부장 강백신 - 주임 김세현, 전효곤

권순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22.07)]

지검장 이정수 - 차장(팀장) 김태훈 - 부장 유경필 - 주임 비공개

지검장 송경호 - 차장(팀장) 고형곤('22.05~) - 부장 유진승('22.02~) - 주임 비공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22.07~) → 반부패수사1부('23.09~)]

지검장 송경호 - 차장 고형곤 - 부장 강백신 - 주임 비공개

지검장 이창수²⁵⁷('24.05~) - 차장 조상원²⁵⁸ - 부장 강백신('24.06~), 이준동('25.06~) - 주임 비공개

‘50억 클럽’ 관련 공수처 고발건

[공수처 수사1부]

처장 김진욱²⁵⁹ - 차장 여운국²⁶⁰ - 부장 김명석 - 주임 최문정

이후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이의신청 기각²⁶¹

²⁵⁷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박승환 1차장 직무대리. 2025년 6월 3일 사직.

²⁵⁸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이성식 3차장 직무대리. 2025년 6월 3일 사직.

²⁵⁹ 임기만료(24.1.21.)로 여운국(24.1.22.~28.), 김선규(24.1.29.~3.4.), 송창진(24.3.4.~20.), 김선규(24.3.20.~5.29.) 직무대리

²⁶⁰ 임기만료(24.1.28.)로 송창진(24.1.29.~3.4.), 박석일(24.3.4.~20.), 송창진(24.3.20.~7.30.) 직무대리

²⁶¹ 공수처는 2025년 5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진행중인 재판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그러나 공수처는 2024년 4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부분공개를 결정하고 답변한 바 있음.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11-01-01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2014-05-01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대장동 개발 사업) 시작
2021-04-01	금융정보분석원(FIU), 경찰에 화천대유 관련 3명과 법인의 횡령 배임 의심 통보, 용산경찰서 배정. 5월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참고인 조사
2021-09-01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불분명한 자금 흐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다수의 언론보도
2021-09-18	경찰(용산경찰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소환. 대장동 사업 자금 흐름 조사
2021-09-23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이재명 캠프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착수. 개발사업 인허가와 사업자 선정 과정, 배당금 설계 과정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의 자금 흐름 추적하겠다고 밝힘
2021-09-27	경찰,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참고인 소환 조사
2021-09-28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참고인 소환 조사
2021-09-28	경찰,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경기남부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 착수
2021-09-29	검찰, 대장동 전담수사팀 구성.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지휘 아래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9명(부장 유경필 포함), 공공수사2부 검사 3명(부장 김경근 포함),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등 검사 1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박범계 장관 전담팀 구성 승인
2021-10-01	경찰, 화천대유 수사팀 확대. 회계 분석 등 전문 수사인력 포함 62명으로 증원
2021-10-02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 받은 곽상도 아들 자택 압수수색
2021-10-07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화천대유 컨소시엄 추진 하나은행 실무진 소환 조사
2021-10-08	경찰, 곽상도 아들 소환 조사. 퇴직금 50억 원이 곽상도 의원에 대한 뇌물이 아니냐는 시민단체 고발로 피의자 신분 출국금지
2021-10-08	법원, 곽상도 부자 50억 원 추정보전청구 인용
2021-10-08	경찰, 화천대유 협력업체 분양대행사 대표 이기성(박영수 전 특검의 친인척) 소환 조사
2021-10-14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법원에 김만배 출입기록 요청. 이재명 재판에 참여한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
2021-10-14	경찰(국수본)과 검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협의체 구성
2021-10-15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성남시청, 문화재청 등 압수수색
2021-10-19	검경(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 2차 실무진 회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사건을 검찰에서 진행하기로 협의, 경찰 관련 사건 송치
2021-10-2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곽상도 아들 피의자 소환 조사
2021-10-25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박영수 전 특검 딸 참고인 조사
2021-10-28	검찰, 곽상도 아들 소환 조사. 전담팀에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4명 총원
2021-11-04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부인 서 모씨 소환 조사.

날짜	수사경과
2021-11-09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이기성·하나은행 관계자 소환 조사
2021-11-11	국회, 뇌물 수수 의혹 박상도 의원 사직안 가결
2021-11-15	검경(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 2차 실무진 회의
2021-11-17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박상도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
2021-11-26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박영수와 홍선근 소환조사
2021-11-27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박상도와 권순일(재판거래 의혹) 소환조사
2021-11-29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박상도 구속영장 청구
2021-12-00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일 '무죄 판결 로비'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 두 차례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짐
2021-12-00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권순일 재소환조사
2021-12-01	법원(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박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힘
2021-12-30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50억 클럽 관련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소환조사
2022-01-05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박영수 2차 소환조사
2022-01-00	검찰, 50억 클럽 의혹 관련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면조사
2022-01-06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권순일의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외 공직자윤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경찰(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넘기고, 부정처사 후 수뢰 관련 혐의만 수사 계속
2022-01-24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박상도 피의자 소환 조사
2022-01-25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뇌물 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박상도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2022-02-04	법원(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박상도 구속영장 발부
2022-02-07	박상도, 검찰 소환 조사 불응
2022-02-08	박상도, 검찰 소환 조사 불응
2022-02-09	박상도, 검찰 소환 조사 불응
2022-02-10	박상도, 검찰 소환 조사 불응
2022-02-10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박상도 구속기간 연장
2022-02-10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수감중인 김만배·남욱의 소환 조사 불응으로 체포영장 집행. 남욱 - 박상도에게 5천만 원을 전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만배 - 박상도에게 50억 원 뇌물 공여 혐의
2022-02-11	박상도, 검찰 소환 조사 불응
2022-02-12	박상도, 검찰 소환 조사 불응
2022-02-13	박상도, 검찰 소환 조사 불응
2022-02-14	박상도, 검찰 소환 조사 불응
2022-02-16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박상도 강제 구인 조사. 박상도, 진술 거부
2022-02-2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박상도 강제 구인 조사

날짜	수사경과
2022-02-22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광상도 구속 기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광상도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 50억 원의 뇌물 공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만배를, 광상도에게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남육을 추가 기소
2022-03-14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퇴직금 50억 원 관련 광상도 아들 소환 조사
2022-07-04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 개편, 반부패수사3부 담당
2022-10-00	검찰, 박영수 전 특검의 딸 주택법 위반 혐의 사건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배당
2022-11-25	경기남부경찰청, 김만배로부터 50억 원 대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홍선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
2022-11-29	검찰, 서울중앙지검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홍선근 이첩
2023-01-0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1명 추가 투입
2023-01-17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50억 클럽 멤버 박영수·김수남·최재경·권순일·홍선근 등 뇌물 등 혐의로 공수처 고발
2023-03-06	더불어민주당·정의당, 50억 클럽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 도입 패스트트랙 합의 추진
2023-03-06	검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추가 파견
2023-03-07	검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추가 파견. 검사 총 14명 규모
2023-03-16	검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2명 추가 파견. 검사 총 16명 규모
2023-03-1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50억 클럽 의혹 관련 부국증권 부사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3-3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50억 클럽 의혹 관련 박영수, 양재식 변호사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사 등 압수수색
2023-03-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발의 50억 클럽 특검법 법안심사1소위 회부
2023-04-03	금융감독원,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박영수의 우리은행 대출 청탁 여부 확인 위해 우리은행 현장 점검 착수
2023-04-0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 참여한 하나은행 담당자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50억 클럽 특검법 의결
2023-04-1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퇴직금 50억 관련 광상도 부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광상도 아들의 뇌물 혐의 피의자 입건. 대장동 개발 사업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호반건설, 부국증권 사무실 등 10여 곳 압수수색
2023-04-2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광상도 부자의 범죄수익은닉규제 위반, 뇌물 혐의 관련 산업은행, 호반건설 관계자 이메일 서버 등 압수수색
2023-04-25	더불어민주당·정의당, 50억 클럽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 도입 패스트트랙 추진 합의
2023-04-2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의 청탁 여부 확인을 위해 우리은행 본점 사무실 및 전직 임원들 주거지 압수수색
2023-04-27	국회, 50억 클럽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 도입 패스트트랙 지정 본회의 의결
2023-05-0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하나은행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경쟁관계였던

날짜	수사경과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호반건설 전 대표이사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5-1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가 우리은행 사외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당시 우리은행 부동산금융사업본부장이었던 유구현 전 우리카드 대표이사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5-1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광상도가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에 대해 전 하나은행 부행장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짐.
2023-05-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의 청탁 의혹 관련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3-05-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광상도가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에 대해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3-05-1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5-1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광상도의 50억 클럽 의혹 관련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5-2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광상도의 50억 클럽 의혹 관련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5-2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광상도의 50억 클럽 의혹 관련 전중규 전 호반건설 총괄부회장,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이사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5-2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의 50억 클럽 의혹 관련 김종원 전 우리신용정보 대표이사, 이 아무개 전 우리은행 부동산금융사업본부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3-05-2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광상도의 50억 클럽 의혹 관련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금융투자센터 등 압수수색
2023-05-3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의 50억 클럽 관련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제출한 1천 500억원의 여신의향서의 발급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종원 전 우리은행 부동산금융사업본부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5-3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운동을 지원한 남욱 소환 조사
2023-06-1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 지원 대가로 200억원의 토지와 건물을 요구해 특가법상 수재 등 혐의로 양재식 전 특검보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6-1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광상도의 아들 광병채의 요양급여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압수수색
2023-06-1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광상도의 아들 광병채가 이용한 화천대유 명의 법인 차량의 리스 계약업체 등 압수수색
2023-06-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의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 조우형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6-2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광상도의 50억 클럽 의혹 관련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2015년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김병호 베트남HD 회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6-2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50억 클럽 의혹 관련 박영수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6-2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특가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영수, 양재식 구속영장 청구 - 박영수 :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양재식과 공모하여 대장동 민간

날짜	수사경과
	개발사업자들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관련 우리은행의 지분 투자와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금품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 :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불참과 여신의향서 발급으로 청탁이 축소되면서 2015년 4월 여신의향서 발급 대가로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의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
2023-06-30	서울중앙지법(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 -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제한 필요성, 구속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2023-06-30	서울중앙지법(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양재식 구속영장 기각 -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등 범죄사실 일부 부분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판단
2023-06-3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광상도의 50억 클럽 의혹 관련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7-0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의 측근 허진영 변호사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7-1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만배 측근 최우항 화천대유 이사 소환 조사. 김만배와 광상도의 관계, 광병채에게 금전이 건네진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1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 측근 허진영 변호사, 이모·강모 변호사 참고인 소환 조사(날짜 미상)
2023-07-1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박영수가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 이모 변호사 주거지 등 압수수색.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박영수의 딸 입건
2023-07-2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가 운영했던 법무법인 소속 이모 변호사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7-2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양재식 전 특검보, 박영수의 딸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7-2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7-2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광상도의 아들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7-3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구속영장 청구
2023-08-03	서울중앙지법(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증거인멸 우려로 박영수 구속영장 발부
2023-08-0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8-1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 구속 기간 연장
2023-08-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광상도의 아들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8-2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구속 기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양재식 전 특검보 불구속 기
2023-08-3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참고인 소환 조사(날짜 미상)
2023-09-0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배성준 전 YTN 기자(천화동인 7호 소유주) 소환 조사(날짜 미상)
2023-09-1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 재산 20억 원 상당 추정보전

날짜	수사경과
2023-09-27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검찰 송치
2023-10-06	검찰, 변호사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배당(날짜 미상)
2023-10-1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대장동 개발 특혜 및 50억 클럽 의혹,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김만배 피의자 소환 조사
2023-10-2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광상도 피의자 소환 조사
2023-10-3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 광상도, 광병채, 김만배 불구속 기소 - 광상도, 광병채, 김만배 : 김만배가 광상도를 향한 뇌물 및 알선의 대가를 화천대유 직원인 광병채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허위 지급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 광병채 : 광상도와 공모해 김만배로부터 2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특가법상 뇌물 - 김만배 : 광상도와 공모해 남욱의 공소장 변경 청탁 알선 대가 및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2023-12-28	국회, 50억 클럽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 도입 법률안 통과
2024-01-05	윤석열 대통령, 50억 클럽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 도입 법률안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2024-03-2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변호사 등록 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 사무실 압수수색 - 50억 클럽 관련 뇌물 혐의, 재판 거래 의혹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청구해 발부받았다는 언론 보도
2024-07-2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피의자 소환 조사
2024-07-3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조사
2024-08-0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와 관련된 판교 송전탑 지하화 관련 소송 등에 관여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만배로부터 50억 원을 대여했으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과 김만배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권순일의 '무죄 판결 로비' 의혹 관련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는 제외되었고,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광상도 · 남욱 · 김만배	2023-02-08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재판장 2022고합121, 2022고합122병합) 선고 - 광상도 : 벌금 8백만 원, 추징금 5천만 원 (뇌물 및 알선수재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 남욱 : 벌금 4백만 원 - 김만배 : 무죄 - 광상도, 남욱 항소. 검사 모두 항소
	2025-06-00	2심(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이창형 재판장 2023노697) 진행중
광상도와 아들 · 김만배	2025-06-0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오세용 부장판사

피고인	날짜	내용
		2023고합958) 진행중
박영수 · 양재식	2024-01-19	박영수 보석 석방
	2025-02-1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 2023고합769) 선고 - 박영수 : 징역 7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5,000만 원, 보석 취소 후 법정 구속 (변협 회장 선거자금 수수 유죄, 대장동 개발 비리 및 50억 클럽 관련 혐의 무죄) - 양재식 : 징역 5년,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 5,000만 원
	2025-06-00	2심(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윤성식·민성철·권혁준 부장판사 2025노652) 진행중
권순일	2025-06-0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진행중
홍선근 · 김만배	2025-01-08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선고 - 홍선근 :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1,454만 원 - 김만배 : 벌금 1,500만 원

44. [대장동4]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비리 혐의 봐주기 수사(2021)

2021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김만배, 남욱의 동업자였던 정영학이 검찰에 제출한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만배가 동업자들 수사 무마를 위해 대검 중수부 최재형 부장검사, 윤석열 검사, 강우찬/김수남 수원지검장, 윤갑근 성남지청장 등에게 로비했다는 검찰 수사 무마 의혹 사건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담당 부서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반부패수사3부
주요 처분	-

1. 사건개요

사건1. 대검 중수부 최재경·윤석열 등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무마 의혹(2011)

2011년,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매제인 조우형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씨세븐 대표이사 이강길이 세운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를 위해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 원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했다. 대장PFV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1,100억 원대의 자금 중 100억 원을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등에게 금융컨설팅 명목으로 되돌려주고, 대출 알선을 대가로 조우형에게 10억 3천만 원을 전달했다.

2011년,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저축은행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김양 부회장 또한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지만 조우형은 두 차례 소환조사와 계좌추적 등의 수사를 받았음에도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우형의 변호인이 김만배가 소개한 박영수 변호사(대검 중수부장 출신, 이후 국정농단 특검)이었고, 저축은행 불법로비 사건을 수사한 주임 검사가 대검 중수부 2과장 윤석열, 중수부장은 최재경이었다.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남욱은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무마 정황과 관련해 검찰에 진술했다. 조우형이 검찰 조사를 받던 2011년 당시,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라고 말했고 “실제로 주임검사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했다”고 남욱은 진술했다. 이 정황은 정영학이 제출한 녹취록에도 ‘수사관이 그냥 덮어줬다, 김만배가 우형이도 빼주라고 했더니 수사관이 알겠다고 했다’는 내용으로 담겨 있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만배 음성파일에서도 김만배가 조우형의 부탁을 받아 박영수에게 전달하고, 박영수가 조우형을 수사하던 윤석열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정황이 담겨있었다.

2014년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이강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던 예금보험공사의 수사의뢰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2011년 입건도 안됐던 조우형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 최재형 중수부장 등이 김만배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2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저축은행 불법로비 사건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불법대출이었으므로 씨세븐 등은 수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별도의 SPC를 통해 조우형에게 불법대출 알선 대가 10억 3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점, 당시 남욱, 정영학 등이 참여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이 1개 법인당 100억 원이라는 대출 한도액 규정을 무시하고 5개 법인 명의로 총 1,100억 원대의 대출을 받았음에도 조우형이 입건이 안 됐다는 점에서 수사 무마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이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해명한 내용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이 되기도 했다.

아울러 2021년 10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2011년)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최재경이 김만배의 ‘50억 클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재경-윤석열-박영수 등 2011년 당시 검사와 변호인이 2006년을 전후로 대검 중수부 근무연이 있는 ‘최재경 사단’의 일원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최재경이 김만배의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50억 지급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냐며 수사 무마 의혹이 가중됐다.

이에 윤석열-최재경 등 당시 수사지휘라인에 있던 검사들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공수처·검찰에 여러 차례 고발되었다. 공수처는 초기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고,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긴 했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공수처는 추가 고발 건을 각하했고 검찰의 수사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2023년 5월과 6월, 조우형-박영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혐의만 기재했고,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와 관련된 혐의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의 수사 무마 의혹은 2023년 9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음성파일에서 김만배와 인터뷰를 진행한 당사자이자 대선 직전 뉴스타파에 파일을 제보한 신학림(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인터뷰 후 김만배에게 1억 6,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조우형 또한 검찰 수사 조서에서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은 돈거래를 근거로 인터뷰 내용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신학림과 뉴스타파가 대선 직전에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정치공작을 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은 신학림과 김만배, 뉴스타파 등을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고, 윤석열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확대했다. (참고. ► [뉴스타파 등 언론사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2023\)](#))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검찰이 ‘윤석열이 조우형의 사건을 무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성급하게 수사 무마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고 언론사들의 의혹 제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언급했듯, 검찰은 공소장에서 막상 본질적인 ‘수사 무마’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사건2. 수원지검장 김수남·성남지청장 윤갑근의 대장동 개발사업 뇌물사건 내사 무마 의혹(2012)

2012년 8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 등이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내사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길은 김용철로부터 고가의 선물, 내기 골프 등을 접대받았다. 정영학 등은 당시 최윤길이 대장동 민간개발을 위해 힘을 써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2010년 6월 현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최윤길은 유동규(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를 정영학과 남욱에게 소개한 것은 물론, LH의 사업 철회를 위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이자 성남시 수정구 국회의원인 신영수에 대한 로비를 목적으로 성남 분당 총청향우회 회장을 이강길에 소개시켰다. 향우회 회장은 이강길에게서 받은 로비자금 2억 원을 신영수의 동생에게 전달했다.

정영학 녹취록 전문이 2023년에 공개되면서, 당시 최윤길의 뇌물 혐의에 대한 내사를 무마하기 위해 김만배가 수원지검장·성남지청장에게 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남욱이 김만배와의 통화에서 수사 무마 청탁과 관련한 얘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김만배가 김수남 2012년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자신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최윤길이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등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얘기하자 김수남이 ‘알았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김수남은 이후 검찰총장을 역임한 후 김만배의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려 김만배와 김수남의 수사 무마 청탁 대가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참고. ► [\[대장동2\] 김만배와 50억 클럽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2021\)](#))

또한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최윤길을 내사하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윤갑근을 만나기로 했다’는 남욱의 발언도 담겼다. 그러나 윤갑근은 의혹 제기 이후 최윤길에 대한 내사 자체를 부정하고 성남지청장 재직 시 김만배를 만난 적이 없다고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부정했다.

사건3. 수원지검장 강찬우의 대장동 로비사건 수사 무마 의혹(2014)

최윤길 등이 연루된 일명 ‘대장동 로비사건’에 대해 검찰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2014년 경기도지방경찰청이 최윤길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사건을 송치했고, 수원지검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부분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저축은행 불법로비 사건(2011) 이후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한 예금보험공사도 2014년에 씨세븐 등 대장동 초기 개발업자 이강길, 김용철, 조우형, 남욱, 정영학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대장동 로비사건’의 수사를 맡은 2015년 수원지검은 최윤길이 현금을 반환했다고 주장한 점을 인정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현금을 반환했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 시의회에서 대장동

공영개발에 반대하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는 사실이 있어, 수원지검의 무혐의 처분이 적절한 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수원지검은 이강길, 김용철 등을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 등으로, 조우형을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도, 남욱에게 제기된 횡령·배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고 정영학은 아예 기소하지 않았다.

남욱은 애초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횡령 혐의 등은 제외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강길이 남욱에게 국회의원 로비 자금으로 현금 5억 원을 전달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으나, 해당 횡령 혐의를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그나마 기소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강길로부터 받은 8억 3천만 원 중 3억 원은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고 그 외의 금액은 정영학이 자금 세탁 용도로 사용했을 뿐 자신이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검이 남욱을 횡령 혐의가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하고, 정영학을 불기소한 것을 두고 수사 무마 의혹이 일었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장은 강찬우로, 강찬우는 김만배와 친분이 있는 사이이고, 강찬우와 2005년 대검에서 근무연이 있던 박영수·양재식 변호사(이후 국정농단 특검보)가 남욱과 정영학의 변호인이었다는 점 등이 의혹을 가중시켰다. 강찬우는 남욱 기소 이후 2015년 말 검찰을 퇴직했고, 2018년에는 자신이 속한 로펌에서 화천대유(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김만배가 설립한 자산관리 회사)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하지만 강찬우, 윤갑근, 김수남 등의 수사 무마 의혹(사건2·3)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 착수 소식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사건2와 관련한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전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윤석열 전 대검 중수부2과장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수원지검장
윤갑근 전 성남지청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사건1. 대검 중수부 최재경·윤석열 등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무마 의혹(2011)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22.07)]

지검장 이정수 - 차장(팀장) 김태훈 - 부장 유경필 - 주임 비공개

지검장 송경호 - 차장(팀장) 고희곤('22.05~) - 부장 유진승('22.02~) - 주임 비공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22.07~) → 반부패수사1부('23.09~)]

지검장 송경호 - 차장 고희곤 - 부장 강백신 - 주임 비공개

지검장 이창수²⁶²('24.05~) - 차장 조상원²⁶³ - 부장 강백신('24.06~), 이준동('25.06~) - 주임 비공개

[사건1 중 윤석열 직무유기 혐의 고발사건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지검장 이정수 - 차장 김태훈 - 부장 정용환 - 주임 비공개

지검장 송경호 - 차장 고희곤('22.05~) - 부장 엄희준('22.07~) - 주임 비공개

사건2. 수원지검장 김수남·성남지청장 윤갑근의 대장동 개발사업 뇌물사건 내사 무마 의혹(2012)

[서울중앙지검]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 확인 불가 답변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11-11-01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2014-05-01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대장동 개발 사업) 시작
2021-04-01	금융정보분석원(FIU), 경찰에 화천대유 관련 3명과 법인의 횡령 배임 의심 통보, 용산경찰서 배정. 5월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참고인 조사
2021-09-01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불분명한 자금 흐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다수의 언론보도
2021-09-18	경찰(용산경찰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소환. 대장동 사업 자금 흐름 조사
2021-09-23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이재명 캠프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착수. 개발사업 인허가와 사업자 선정 과정, 배당금 설계 과정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의 자금 흐름 추적하겠다고 밝힘
2021-09-27	경찰,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참고인 소환 조사
2021-09-28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참고인 소환 조사
2021-09-28	경찰,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경기남부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 착수
2021-09-29	검찰, 대장동 전담수사팀 구성.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지휘 아래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9명(부장 유경필 포함), 공공수사2부 검사 3명(부장 김경근 포함),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등 검사 1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박범계 장관 전담팀 구성 승인
2021-10-01	경찰, 화천대유 수사팀 확대. 회계 분석 등 전문 수사인력 포함 62명으로 증원
2021-10-07	공수처,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 검찰로 이첩
2021-10-18	김오수 검찰총장,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수사하도록 지휘하겠다고 밝힘

²⁶²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박승환 1차장 직무대리. 2025년 6월 3일 사직.

²⁶³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이성식 3차장 직무대리. 2025년 6월 3일 사직.

날짜	수사경과
2021-11-18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조우형 소환조사
2021-11-19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이강길 소환조사
2021-11-22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이강길 재소환조사,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짐
2021-11-24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조우형 재소환조사
2021-11-30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조우형 재소환조사,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짐
2022-01-05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박영수 2차 소환조사 -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주요하게 조사했으나, 조우형을 변호한 기억이 전혀 없으며 검사들에게 로비한 적도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짐
2022-01-00	공수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 의혹 관련 윤석열 등 고발 사건 검찰(서울중앙지검) 이첩
2022-05-18	공수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 의혹 관련 윤석열 등 추가 고발 사건 각하

5. 재판 경과 및 결과

해당 없음

45. 임정혁 전 대검 차장 등 고위직 검·경 출신 변호사들 수사 무마 금품 수수 수사(2023)

부동산 중개법인 회장이 수사 무마를 청탁하고, 임정혁 전 대검 차장검사 등 검찰과 경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들의 수사 무마 청탁 대가 금품 수수에 대한 수사

사건 진행상태	▪ 재판중
담당 부서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주요 처분	▪ 이동규·곽정기 구속 기소 ▪ 임정혁·박모 경감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2023년 6월, 민간개발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소유주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정바울이 운영하는 아시아디벨로퍼 등 법인자금 약 480억 원 상당을 사적으로 편취한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였다. 이 과정에서 2023년 11월, 법조브로커 이동규가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경까지 정바울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약 13억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동규는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당 후원회장이자 전 KH부동산디벨로퍼먼트 회장이었다.

정바울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2021년부터 경찰, 2023년에는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동규가 정바울에 대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경찰 윗선 로비 명목으로 2억 원가량을 수령했고, 정바울이 검찰 수사 확대를 우려하자 부장검사 선이 아니라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며 2억 원을 받았고, 구속영장 발부를 막기 위한 명목으로 현금 3억 원 등 13억 원 가량을 수령했다고 보았다. 정바울은 돈을 건넨 이틀 뒤 구속됐다.

곽정기 변호사는 정바울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임정혁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이었다. 임정혁은 2013년 서울고검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하고 2015년 법무연수원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퇴직해 201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곽정기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재직하며 ‘버닝썬’ 수사 등을 맡았고 201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은 정바울이 수사 무마 청탁을 위해 곽정기에게 7억 원가량, 임정혁에게는 1억 원가량의 금전을 전달했다고 보았다. 추후 공개된 공소장에 이동규는 변호인을 물색하다가 임정혁 변호사를 만났고, 2022년 5월 박모 경감을 통해 곽정기 변호사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22년 6월 곽정기가 정바울에게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단계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착수금 4억 원과 종료 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사건 수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곽정기가 경찰 수사 마무리를 위해 경기남부청 윗선 인사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요구했으나 정바울이 5천만 원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한편 2023년 5월 이동규가 임정혁을 만나 정바울이 구속되지 않을 방법을 청탁하자 임정혁이 ‘검찰 고위직을 잘 알고 있으니, 대검에서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답하며 10억 원을 요구했다고 보았다. 임정혁이 착수금 1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잔금 9억 원을 성공보수로 송금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정바울이 1억 원을 송금했다고 판단했다. 임정혁은 정식 수임료와 성공보수라며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이 2015년 전원합의체를 거쳐 무효로 결론 내린 바 있다.

2023년 1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수사 무마 대가로 약 13억 원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로 이동규를 구속 기소했다. 이어서 2023년 12월, 임정혁과 곽정기를 각각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 임정혁의 구속영장은 기각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곽정기의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2024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수사 무마를 대가로 7억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무원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별도 수수하고, 해당 사건을 소개한 현직 경찰 박 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제공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한 혐의로 곽정기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22년 6월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고,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업자 이 모씨와 건설업체 대표 우 모씨로부터 각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수수해 변호사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임정혁과 곽정기가 ‘윗선’을 만났는지 여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2024년 8월, 임정혁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1억 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 조형우)는 “관련자 진술과 선임서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받은 1억원은 과거 대검찰청 차장을 지낸 피고인이 검찰의 고위 간부에게 정회장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대가로 볼 수 있다”며 “불구속 공판이나 성공보수로 9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도 정상적인 변호 활동의 대가로 보기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지나친 고액”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금전 액수나 명목, 경위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자신이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변명에 일관하는 점, 금전 처리내용, 압수수색 직후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2024년 4월, 이동규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13억 원가량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적정하고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한 것에 비하면, 13억 원은 별것 아니라’고 선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이동규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후원회장·KH부동산벨로먼트 회장
임정혁 변호사, 전 검사장
곽정기 변호사, 전 총경
박모 경감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

지검장 송경호 - 차장 고희곤 - 부장 김용식 - 주임 문태권(~'24.01), 김용식('24.01~)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3-06-2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엄희준 부장검사), 아시아디벨로퍼 등 법인 자금 480억 원 상당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정바울 구속 기소
2023-11-0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김용식 부장검사), 정바울로부터 백현동 수사 무마 청탁 대가를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로 이동규 전 KH부동산벨로먼트 회장 체포영장 집행
2023-11-0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김용식 부장검사), 이동규 구속영장 청구
2023-11-03	법원(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동규 구속영장 발부
2023-11-10	검찰, 정바울 참고인 소환 조사
2023-11-2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김용식 부장검사), 수사 무마 대가로 약 13억 원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로 이동규 구속 기소
2023-11-27	검찰, 이동규의 수사 무마 청탁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 법무연수원장 임정혁 변호사,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곽정기 변호사 주거지 압수수색
2023-12-13	검찰, 곽정기 피의자 소환 조사
2023-12-14	검찰, 임정혁 피의자 소환 조사
2023-12-1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김용식 부장검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및 곽정기 구속영장 청구
2023-12-22	법원(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임정혁 구속영장 기각, 곽정기 구속영장 발부
2024-01-03	검찰, 곽정기에게 사건 소개하고 400만 원 수수한 경찰관 박모 경감 피의자 소환 조사
2024-01-0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김용식 부장검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정기 구속 기소, 임정혁 불구속 기소, 변호사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모 경감 불구속 기소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곽정기·박모 경감 (변호사법 위반 등)	2024-11-22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허경무 김재원 김창수 부장판사 2024고합36) 선고 - 곽정기 : 변호사법 위반 무죄, ‘사건 소개료 명목’ 400만 원 전달 혐의 유죄로 벌금형 1천만 원 - 박모 경감 :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635만여 원 - 쌍방 항소
	2025-06-00	2심(서울고법 형사6-3부 2024노3708) 진행 중
이동규(알선수재 혐의)	2024-04-12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허경무 김재원 김창수 부장판사 2023고합1034) 선고 - 징역 4년, 추징금 약 13억 원 - 이동규 항소
	2024-08-29	2심(서울고법 형사3부 이창형 부장판사 2024노1070) 선고 - 원심 파기 - 징역 3년, 추징금 13억 3,616만 원 - 이동규 상소
	2024-11-14	3심(대법원 주심 박영재 대법관 2024도14321) 선고 - 상고기각 - 징역 3년, 추징금 13억 3,616만 원
임정혁(변호사법 위반)	2024-08-22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조형우 박성덕 박현진 부장판사 2024고합37) 선고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 - 쌍방 항소
	2025-06-00	2심(서울고법 형사6-3부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 2024노2636) 진행 중

46. 이정섭 차장검사 비위 수사(2023)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의 처남 마약사건 경찰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수사

사건 진행상태	▪ 재판중
담당 부서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공수처 수사4부
주요 처분	▪ 검찰, 이정섭 불구속 기소 ▪ 공수처, 이정섭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2023년 10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 2017년부터 자녀의 명문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2차례 위장전입 △ 위장 전입한 주소지에서 발생한 세금 체납 △ 자신의 처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을 익명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할인해 주는 등 동료 검사들에게 이용 편의 제공 △ 처가의 요청으로 처가 골프장 직원과 가사 노동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하고 해당 자료를 처가에 제공 △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등의 의혹이다. 이정섭 검사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을 당시, 한 스키장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가족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정섭은 위장전입과 이에 따른 세금 체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문제가 해소된 상태라고 해명했고,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전부 부인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정섭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라는 이유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정섭에 대해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은 수원고검에 이정섭의 비위 의혹에 관해 확인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도 이정섭 검사를 고발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1월 9일,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본회의에 발의·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예정했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가 72시간 이내 추가로 열릴 가능성이 사라지자,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이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본회의를 거친 공식 안건이므로 철회와 재추진이 불가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재발의 탄핵소추안이 적법하게 발의되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2023년 11월, 대검은 이정섭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정섭 처가 소유 골프장, 대기업 부회장과 의 식사가 있었던 리조트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고, 2024년 4월 이정섭 검사 자택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와 인사 조치가 취해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도 있었으나,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압수수색한 것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기 위해 혐의를 축소하는 것은 아닌지 등 봐주기 수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고,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당이 불참한 채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헌법재판소는 이정섭의 처남에 대한 경찰의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디지털포렌식 업체에 처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보고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검토하는 등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진술서를 통해 탄핵심판과 관련해 본인이 경험하거나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처남택 강 씨 등 증인 신청을 전부 기각해, 탄핵 사유 입증을 어렵게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탄핵심판 끝에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거나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은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시기 리조트에서의 집합금지명령 위반과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 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사건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최 모씨를 사전 면담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수의견은 “사전면담이 위법 또는 부적절할 수 있다”면서도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학의 뇌물 사건은 2019년 11월에 무죄, 2020년 2심에서는 일부 유죄에 이어 2021년 6월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 취지로 파기됐다. 다만, 이 부분에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내어 “검사라면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행위가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 파면 결정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2024년 내내 진척 없던 검찰 수사는 2025년 1월 이정섭을 불러 피의자 조사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졌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3월 6일 주민등록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형사사법전자절차촉진화법 위반 혐의로 이정섭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 2020년 12월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접대받은 점 △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 기록을 조회한 점 △ 자녀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반면, △ 선후배 검사들에게 골프장 이용 편의 제공 △ 처남 조아무개씨의 마약투약 사건 무마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범죄 기록을 불법 조회하는 등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정섭 처가의 가사도우미 범죄 기록을 사적으로 조회해 그 내용을 전달한 시점을 2020년 3월 30일로 보고 있었다. 문제는 공무상비밀누설 범죄 공소시효가 5년이라 2025년 5월 말로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검찰은 사건을 누장 이첩했고 공수처는 같은 고발

건이 접수돼 있었음에도 1년여간 수사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과 공수처 모두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후 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해 대검찰청,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3월 28일 이정섭을 불구속 기소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 검사(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이정섭 검사에 대한 검찰 감찰

[대검찰청]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이의신청 기각²⁶⁴

이정섭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송경호(~'24.05) - 차장 김창진(~'24.06) - 부장 김승호 - 주임 김승호

지검장 이창수²⁶⁵('24.05~) - 차장 박승환('24.06~) - 부장 김승호 - 주임 김승호

이정섭 검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

[특별수사본부 → 수사4부]

처장 김진욱²⁶⁶ - 차장 여운국²⁶⁷ - 부장 이대환 - 주임 차정현(~'24.01)

이후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이의신청 기각²⁶⁸

이정섭 검사 처남 조모 씨 마약사건 경찰수사

[서울수서경찰서 형사과 강력3팀(~'23.04) → 마약수사팀('23.04~)]

서장 총경 백남익 - 형사과장 경정 민문기 - 강력3팀장 경감 박승만 - 수사참여자 강력3팀 경위 박순우, 경감 서종석, 경위 장동철(~'23.02)

서장 총경 백남익 - 형사과장 경정 김양효 - 강력3팀장 경감 박승만 - 수사참여자 강력3팀 경위 박순우, 경감 서종석, 경위 장동철('23.02~'23.04)

서장 총경 백남익 - 형사과장 경정 김양효 - 마약수사팀장 경감 김지훈 - 수사참여자 마약수사팀 경장 김상준, 경위 윤석호('23.04~)

²⁶⁴ 대검찰청은 2025년 5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이유로 모두 비공개처분함. 대검찰청은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²⁶⁵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박승환 1차장 직무대리. 2025년 6월 3일 사직.

²⁶⁶ 임기만료(24.1.21.)로 여운국(24.1.22.~28.), 김선규(24.1.29.~3.4.), 송창진(24.3.4.~20.), 김선규(24.3.20.~5.29.) 직무대리

²⁶⁷ 임기만료(24.1.28.)로 송창진(24.1.29.~3.4.), 박석일(24.3.4.~20.), 송창진(24.3.20.~7.30.) 직무대리

²⁶⁸ 공수처는 2025년 5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처분하고, '귀 단체가 해당 사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 공수처는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그러나 공수처는 2024년 4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부분공개를 결정하고 답변한 바 있음.

이정섭 검사 처남 조모 씨 마약사건 수사 무마 의혹 감찰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감찰수사계]

청장 치안정감 김광호(~'24.01), 조지호('24.01~'24.07), 김봉식('24.08~) -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총경 백남익 - 감찰수사계 경정 서한정, 경감 진병노, 경위 신동호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3-02-06	이정섭 검사 처남택 강미정 씨, 경찰에 남편 조모 씨의 가정폭력 및 대마 흡입 신고
2023-02-07	처남택 강 씨, 서울 수서경찰서에 남편 조모 씨 정식 고발
2023-02-28	처남택 강 씨, 서울경찰청에 남편 조모 씨 정식 고발
2023-06-21	경찰(서울 수서경찰서), 이정섭 검사 처남 조모 씨 불송치 결정
2023-10-12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 검사 산하 업무 분장 재조정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쌍방울그룹 관련 비리 의혹사건에 대해 수사전담팀 구성
2023-10-17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비위 의혹 제기 이정섭, 위장전입은 딸의 진학을 위해 일시적으로 있었고 해소되었다며 송구함을 표하고 인정했으나 그 외 의혹은 부인 대검, 수원고검에 이정섭 비위 의혹 확인 지시
2023-10-18	더불어민주당, 이정섭에 대해 주민등록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 기록 조회 및 공무상 비밀 누설,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2023-10-19	대검, 이정섭 검사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2023-10-23	김의겸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0년 12월 24일에 코로나19로 폐쇄된 스키장의 리조트에서 이정섭 검사가 수사했던 대기업의 부회장으로부터 가족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추가 제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위반이라고 주장 이원석 검찰총장,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각각 감찰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설명
2023-11-03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의겸 의원실 보좌관과 비서관 등 2명 고발인 조사
2023-11-06	서울경찰청,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이정섭 검사 처남에 대한 마약신고 후 수사가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 전반적 수사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힘
2023-11-09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에 이정섭 접대 의혹에 대해 조사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정섭을 포함한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에 발의 및 보고
2023-11-09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공수처에 주민등록법, 검사윤리강령, 공무상 비밀 누설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으로 이정섭 고발
2023-11-10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여 본회의가 72시간 이내 추가로 열릴 가능성이 사라지자, 탄핵소추안 철회하고 재발의 추진
2023-11-10	더불어민주당(김용민, 김의겸, 전용기 의원), 이정섭 검사 주민등록법, 부정청탁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 고발
2023-11-13	국민의힘,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날짜	수사경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3-11-14	공수처, 이정섭 검사 고발 사건 특별수사본부 배당
2023-11-20	검찰, 청탁금지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정섭 처가 소유 골프장(용인CC)과 대기업 부회장과 식사 있었던 리조트(엘리시안 강촌) 대상 압수수색 실시
2023-11-20	대검, 이정섭을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
2023-11-26	검찰, 이정섭의 후배 등 검찰 관계자들이 ‘불법 전과조회’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을 검색, 조회한 흔적 발견했다고 밝힘
2023-11-27	경찰청 관계자, 서울경찰청 수사정책심의관실이 이정섭 처남 마약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힘
2023-11-27	대검,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로 발령
2023-11-28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 처남 마약수사 무마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이정섭 추가고발
2023-11-28	더불어민주당,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재발의
2023-11-30	국회 본회의에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보고
2023-12-01	국회 본회의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총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 이정섭 검사 직무정지
2023-12-04	서울경찰청, 처남 조모 씨가 아내 강 씨를 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을 수서경찰서로 이첩했다는 언론보도
2023-12-07	검찰, 처남택 강 씨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2023-12-11	경찰, 서울경찰청에서 마약수사 무마 의혹 진상 확인 후 무고 사건 고소인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
2023-12-14	검찰, 처남택 강 씨 2차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23-12-27	공수처, 특별수사본부 폐지하고 수사4부 신설.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수사4부에서 수사 담당
2024-01-16	검찰, 이정섭 배우자 A 씨 참고인 소환조사
2024-01-31	국회,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가결. 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됨
2024-02-02	경찰(수서경찰서), 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남택 강 씨 피의자 소환 조사
2024-04-25	공수처, 처남택 강 씨 참고인 조사
2024-04-29	공수처(수사4부 부장검사 이대환), 이정섭 처남 조씨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요청. 검찰과 공수처가 같은 사건을 수사하며 자료 확보 경쟁을 벌였다는 언론보도
2024-04-30	검찰, 이정섭 주거지와 처남 휴대전화 포렌식 업체 압수수색
2024-05-08	헌법재판소, 이정섭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 진행. 이정섭 출석 이정섭 검사 측, 처남택 강 씨 증인채택 반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이정섭 검사 탄핵 판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24-05-14	법무부, 이정섭 탄핵심판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검사 탄핵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
2024-05-28	헌법재판소, 이정섭 탄핵심판 관련 처남택 강 씨 등 증인 신청 전부 기각
2024-06-11	더불어민주당, 검사탄핵 심판 대리인단 교체 및 보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날짜	수사경과
2024-06-25	헌법재판소, 이정섭 탄핵심판 변론 종결
2024-07-13	정청래 법사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에서 여당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 해임. 탄핵 심판에 소극적으로 임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언론보도
2024-08-29	헌법재판소,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정섭 탄핵 기각. 다만,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이정섭 검사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나 헌법상 공익실현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별개 의견 제출
2025-01-00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김승호), 1월 말경 이정섭 피의자 조사
2025-03-06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김승호), 이정섭 주민등록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 처가가 운영하던 용인CC 골프장 직원의 범죄기록을 불법 조회하는 등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 이첩
2025-03-16	공수처(수사4부 부장검사 차정현), 3월 10일 검찰로부터 이정섭 사건 이첩받아 제보자인 처남댁 강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확보 및 출석 일정 조율 중이라는 언론보도
2025-03-21	공수처(수사4부 부장검사 차정현), 이정섭 비밀누설 혐의 관련 대검 압수수색
2025-03-24	공수처(수사4부 부장검사 차정현), 이정섭 비밀누설 혐의 관련 서울동부지검 압수수색
2025-03-27	검찰 조사 결과, 이정섭이 처남댁 가사도우미의 범죄 이력과 처남의 사건 진행 상황 등을 다른 검사와 실무관에게 조회하도록 지시했다고 알려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정섭 검사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해당 내용이 적시됐다는 언론보도
2025-03-28	공수처(수사4부 부장검사 차정현), '비밀누설 혐의' 이정섭 불구속 기소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이정섭 (탄핵심판)	2024-08-29	헌법재판소(2023헌나4) 선고 - 9명 전원일치 탄핵 기각
이정섭 (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	2025-06-0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진행 중
이정섭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2025-06-0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 진행 중

47. 부장판사의 골프채 수수 등 비위 수사(2021)

현직 부장판사가 사업가 지인의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짜리 골프채 세트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후 ‘짜퉁’ 골프채 세트라는 게 밝혀지고, 알선행위의 실체가 없다며 결과적으로 최종 무죄 확정된 사건

사건 진행상태	▪ 사건종료
담당 부서	▪ 공수처 → 인천지검 형사6부
주요 처분	▪ 김용한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용한은 유통업 사업가 권모 씨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2019년 2월경 인천 계양구의 한 식자재마트 주차장에서 대가로 수천만 원짜리 골프채를 비롯해 과일 상자 등 금품을 받았다. 이를 알게 된 권모 씨 주변인 중 한 명이 2020년 9월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글을 게시하고 공수처에 고발했다는 사실이, 2021년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김 판사와 권모 씨는 급전을 빌리거나 권모 씨의 법적분쟁에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약 10년간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였다. 이후 이 사건을 사회에 알린 권모 씨 주변인은 권모 씨가 평소 김 부장판사를 ‘해결사’라고 부르며 앞으로 생길 여러 문제를 다 봐달라고 ‘미리 약 치는 것’이라 설명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당시 권모 씨는 마트 운영과 관련해 사기죄 등의 실형 전과가 있었고, 여러 건의 민사 재판과 사기 혐의 재판을 받고 있었고, 김 판사에게 자신이 연루된 사기 사건 재판 선고 날 법정 구속까지 진행될지 알아보달라는 등 본인 재판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김 판사는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법원 내부 사건검색 시스템 ‘코트넷’에서 관련 사건을 조회/검색해 보고 권모 씨에게 내용을 전달했다. 2018년 9월 김 판사는 권씨에게 ‘걱정말고 법정에 갔다 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 다만 권모 씨는 법정에 출석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애초 김 판사가 권모 씨에게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 ‘Honma’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외부감정 결과 ‘Humma’라고 적힌 50만 원대 ‘가짜’ 판정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김 판사가 52만 원 상당의 ‘짜퉁’ 골프채 세트와 25만 원짜리 과일 상자 등 총 77만 9,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2021년 6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 소속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김 판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감봉 3개월, 징계부가금 100여만 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처분 결과가 알려지자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고위 법관이 대가성 금품을 받았음이 의심됨에도 ‘골프채가 진짜 명품이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징계 수위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사법 신뢰 훼손의 본질은 뇌물을 수수한 것인데, 골프채 진품 여부에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은 사법부의 도덕적 책임을 흐린다는 지적이다.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받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당시 고발장 등 자료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인천지검(형사6부 부장검사 김영오)은 2021년 8월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해 김 판사 징계 관련 서류 등을 전달받았다. 12월 31일, 인천지검은 김 판사를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권모 씨를 비롯한 공범 2명은 뇌물공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권모 씨와 함께 기소된 변모 씨는 권모 씨에게 골프채를 제공하고 김 판사 감사에 나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직원을 속인 혐의(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인물이다.

당시 통상적으로 1~2개월 내 불구속 피고인의 첫 재판 기일이 정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약 5개월 넘도록 김 판사 재판이 열리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 김 판사에게 재판에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연습용으로 골프채를 받았지만 바로 돌려줬고, 골프채가 너무 조잡해 청탁이나 대가성으로 볼 수 없다며 김 판사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2023년 8월 25일 결심공판에서 김 판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023년 10월 26일, 1심 재판부(인천지법 형사14부)는 “김 부장판사가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권모 씨가 알선 명목으로 골프채를 줬다거나 김 부장판사가 알선 대가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골프채를 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모 씨를 비롯한 공범 2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어 2024년 7월 25일,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3부)도 “김 부장판사가 권모 씨의 선고를 앞두고 권모 씨의 사건 담당 판사에게 청탁했거나 (법정구속 여부를) 알아보았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며 알선행위의 실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청탁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표현이 판결문에서 등장했듯 법원조차 본질적 의혹을 완전히 지워내지 못한 채로 1심부터 상고심까지 무죄 판결이 이어진 것이다.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갖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법관이 사적 친분에 기반해 법원 내부 시스템을 조화, 전달했음에도 면죄부를 준 이 사건은 사법의 자정 능력에 회의론을 확산시킨 한 사례로 남게 됐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김용한 당시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유통업자 권모 씨
공범 변모 씨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공수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이의신청 기각²⁶⁹

[인천지검 형사6부]

지검장 이두봉 - 차장 김윤섭 - 부장 김영오 - 주임 김상현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1-04-28	2019년 2월 경 김용한 부장판사가 유통업 사업가인 지인 권모 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골프채, 과일 상자 등 금품 수수했으며 이에 공수처 고발 등 진행 중이라는 의혹 언론 보도
2021-04-00	대법원, 해당 의혹 불거지자 윤리감사관실 진상조사 착수(날짜 미상)
2021-06-07	검찰(서울중앙지법), 김용한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의견서 대법원 전달
2021-06-09	검찰, 김용한 민사항소부 대등재판부에서 비대면 재판부로 보직 변경
2021-06-30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이유로 김용한에게 감봉 3개월 및 징계부가금 100여만 원 처분
2021-07-00	공수처, 검찰(인천지검 형사6부) 사건 이첩(날짜 미상)
2021-08-26	검찰, 대법원 법원행정처 압수수색해 김용한 징계 관련 서류 등 확인
2021-12-31	검찰, 김용한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및 권모 씨 비롯한 공범 2명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김용한, 권모 씨, 변모 씨	2023-10-26	1심(인천지법 형사14부 류경진 부장판사) 선고 - 김용한, 권모 씨, 변모 씨 : 무죄 - 검사 항소
	2024-07-25	2심(서울고법 형사3부 이창형 부장판사) 선고 - 김용한, 권모 씨, 변모 씨 : 무죄 - 검사 상고
	2024-12-12	3심(대법원 제3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 선고 - 김용한, 권모 씨, 변모 씨 : 무죄 확정(상고기각)

²⁶⁹ 공수처는 2025년 5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처분하고, '귀 단체가 해당 사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 공수처는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48. 현직 경무관급 경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공수처 첫 인지 수사(2023)

현직 경찰 고위 간부인 김 모 경무관이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의혹 수사 무마 목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공수처가 인지수사에 나선 첫 사건

사건 진행상태	▪ 사건1 : 수사중 ▪ 사건2 : 재판중
담당 부서	▪ 사건1 : 공수처 수사3부, 수사2부 ▪ 사건2 : 공수처 수사1부
주요 처분	▪ 김 모 경무관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2022년 1월 2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대표이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같은 해 4월 28일, 대우산업개발 본사와 서울지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2023년 2월, 수사 결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A계장은 이상영과 한재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2월 23일, 이상영을 배임 혐의로, 한재준을 배임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이들과 공모한 공범 2명도 추가 송치했다. 검찰(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은 4월 13일 대우산업개발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섰다.

그런데 2023년 2월경 공수처가 경찰이 수사를 하던 중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이 당시 강원경찰청 소속 김 모 경무관에게 분식회계·횡령 등에 대한 경찰 수사 무마를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자체적으로 포착했다. 동일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도 접수되어 있었는데, 공수처가 세 차례 이첩요청권을 행사한 끝에 공수처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다. 경무관은 경찰 고위 간부 직급이자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해당 사건은 공수처의 첫 인지 수사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2023년 2월 21일,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서울경찰청, 대우산업개발, 사건 관련자 주거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김 모 경무관은 대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던 당시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 2계장 A씨와 과거에 같은 수서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2년 5월, 이 회장이 김 모 경무관을 만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3억 원을 약속하고 1억 2,000만 원을 건넸다고 판단했다(사건1. 대우산업개발 회장 뇌물수수 사건). 공수처는 2023년 8월 김 경무관에 대해 첫 구속영장 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기각했다. 또한 12월 보강수사 후 공수처가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뇌물죄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기각했다. 김 경무관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또한 김 경무관이 의류업체 B 대표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포착해 수사했다. 김 경무관은 B씨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다(사건2. 7억 원대 뇌물수수 사건). 이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김 경무관의 범죄수익 7억여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공수처는 경찰 수사 및 사업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20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7억 7,0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김 경무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2024년 4월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김 경무관이 대우산업개발 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 회장측이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고 지연되고 있다. 이상영은 1,400억 원대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9월 구속기소됐는데, 공수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거듭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 변호인단과 이상영의 변호사 측과도 갈등을 빚으며, 공수처가 이상영의 변호사가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도 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전 서울경찰청 경무부장 김 모 경무관(당시 강원경찰청 소속)
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 2계장 A 계장
대우산업개발 하청업체 대표
김 모 경무관의 자산관리인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사건1. 대우산업개발 회장 뇌물수수 사건

[공수처 수사3부, 수사2부]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이의신청 기각²⁷⁰

공수처장 김진욱(~'24.01)²⁷¹ - 차장 여운국(~'24.02)²⁷² - 부장 송창진, 김선규

공수처장 오동운('24.05~) - 차장 이재승('24.07~) - 부장 송창진(~'24.12)

²⁷⁰ 공수처는 2025년 5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처분하고, ‘귀 단체가 해당 사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 공수처는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이에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수사지휘라인을 기재함.

²⁷¹ 임기만료(24.1.21.)로 여운국(24.1.22.~28.), 김선규(24.1.29.~3.4.), 송창진(24.3.4.~20.), 김선규(24.3.20.~5.29.) 직무대리

²⁷² 임기만료(24.1.28.)로 송창진(24.1.29.~3.4.), 박석일(24.3.4.~20.), 송창진(24.3.20.~7.30.) 직무대리

사건2. 7억 원대 뇌물수수 사건

[공수처 수사1부]²⁷³

공수처장 김진욱(~'24.01)²⁷⁴ - 차장 여운국(~'24.02)²⁷⁵ - 부장 김선규(~'24.05)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3-02-21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 서울경찰청, 대우산업개발, 사건 관련자 주거지 등 10곳 압수수색하며 수사 착수
2023-02-21	공수처,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피의자 소환조사
2023-02-22	공수처, 서울경찰청 추가 압수수색
2023-02-28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김 모 경무관 금품수수 진정 사건 이첩요청권 행사
2023-03-02	공수처, 증거인멸 시도 의혹과 관련 김 모 경무관 자택 등 4곳 압수수색
2023-03-03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공수처에 김 모 경무관 사건 이첩
2023-03-07	공수처, 대한변호사협회에 대우산업개발 자문 변호사들 징계 요청(이해충돌 및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상태로 압수수색 참관)
2023-03-08	공수처,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상영 측 변호인 징계 요청(이해충돌)
2023-03-23	공수처, 김 모 경무관 자산관리인 사무실 및 자택 등에 대해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압수수색
2023-03-29	공수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및 대우산업개발 수사 담당자 A 계장 자택 등 압수수색
2023-05-03	이상영 측 변호인 및 법무법인, 압수수색 검증 기일에 변호인 참여 거부한 공수처 처분 취소 준항고 제기
2023-06-02	법원(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부장판사), 이상영 측 변호인의 준항고 일부 인용.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변호인인 김 변호사의 참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함
2023-06-09	공수처, 준항고 일부인용 결정에 대해 재항고
2023-06-26	대한변호사협회, 이상영 측 변호인 공수처의 징계개시 신청 기각
2023-07-07	법원(수원지법 안양지원), 이상영 측 변호사 등이 추가로 제기한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 입회 제한 조치 취소 준항고 일부 인용(법무법인 준항고 제외)
2023-07-11	공수처(수사2부 김선규 부장검사·수사3부 송창진 부장검사), 김 모 경무관 자택, 금품제공 당사자 등 추가 압수수색. 김 모 경무관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 발견하여 압수수색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2023-07-19	김 모 경무관, 공수처가 추가 혐의에 대해 진행한 추가 압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 제기
2023-07-28	공수처, 김 모 경무관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2023-08-01	공수처, 김 모 경무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23-08-02	법원(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 모 경무관 구속영장 기각. 도망할

²⁷³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수사지휘라인을 기재함.

²⁷⁴ 각주 271과 같음.

²⁷⁵ 각주 272와 같음.

	엄려가 낮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고 밝힘
2023-10-23	대한변호사협회, 이상영 측 변호인에 대한 변호사 징계개시 이의신청 기각
2023-11-28	공수처, 한재준 대우산업개발 전 대표 소환 조사
2023-12-04	공수처, 김 모 경무관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2023-12-05	공수처, 김 모 경무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 재청구
2023-12-07	법원(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 모 경무관 구속영장 기각.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뇌물 해당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힘
2024-01-12	법원(서울중앙지법), 김 모 경무관이 제기한 공수처 압수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취지의 준항고 기각. 처분이 수사 과정에서 인정한 단서를 기초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밝힘
2024-01-18	공수처, 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 2계장 A씨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2024-04-16	공수처(수사1부 김선규 부장검사), 김 모 경무관 등 불구속 기소 - 김 모 경무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 의류업체 대표 B씨 : 김 모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뇌물 공여 등 혐의(대우산업개발 뇌물 수수 사건 수사 중 포착된 추가 혐의) - B씨의 오빠와 지인 : B씨가 뇌물 공여에 활용한 차명계좌를 내준 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
2024-04-00	공수처(수사2부 송창진 부장검사),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 발부 받아 이상영 소환 조사. 이상영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된 상태임
2024-06-07	공수처, 구속수감 중인 이상영 전 대우산업개발 회장에 대해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짐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김 모 경무관	2025-06-00	1심 재판 중

49. 연예인 마약 사건 수사 피의사실 유출 등 수사(2023)

연예인 등 마약 투약 혐의 수사 진행 중 경찰의 수사 보고서 원본이 공개되는 등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 정보가 유출되어 선정적 보도가 양산되고 피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수사

사건 진행상태	▪ 재판중
담당 부서	▪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 인천지검 형사6부
주요 처분	▪ 인천경찰청 ㄱ 경위, 인천지검 ㄴ 수사관, 언론사 기자 ㄷ씨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2023년 10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투약 혐의로 배우 L 씨 등 8명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다수의 언론이 ‘국내 정상급 영화배우’, ‘특유의 저음 목소리’라는 설명을 덧붙여 앞다퉈 보도하면서, 해당 배우가 이선균 씨라는 추측이 기정사실화 됐다. 이 외에도 인천경찰청은 별건으로 다른 연예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예인이라는 것 외에 다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후 보도를 통해 해당 연예인 권지용(활동명 지드래곤) 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연예인들에 대한 공개 소환조사를 이어갔다. 1차 공개소환 조사에서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이들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이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았다. 이에 경찰은 권지용 씨에 대한 불송치 방침을 밝혔지만, 이선균 씨에 대해서는 2차·3차 공개 소환조사를 이어갔다. 특히 3차 소환조사의 경우, 이선균 씨 측이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사 자체도 19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등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다. 이선균 씨 측은 3차 소환조사 이후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하며 경찰에 비공개 소환을 재차 요구했다. 2023년 12월 27일, 이선균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마약 검사에서 연이어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공개 소환조사를 한 경찰에 대한 비판과, 수사기관이 흘리는 수사정보를 그대로 받아쓰며 과열된 보도 양상을 보인 언론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었다. 경찰의 내사 진행 중에 마약 혐의자가 이 씨임을 시사하는 최초 보도가 나오면서 본격적 수사 시작 전부터 ‘범죄자 낙인찍기’가 이뤄졌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유혹업소 실장이 경찰에 진술한 구체적 내용이 JTBC 등 언론사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특히 KBS와 MBC 등 공중파 방송사에서도 이 씨의 사적 통화 내용과 유혹업소 실장의 문자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선정적 보도 경쟁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경찰은 수사 사항 유출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으나, 이후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를 통해 해당 사건의 경찰의 수사 보고서 원본 촬영 사진이 보도되면서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수사를 진행한 마약범죄수사대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제와 디스패치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이

씨의 공개소환 조사 진행 시점까지 지속적인 수사 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ㄱ씨를 수사 정보 유출 혐의로 지목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마약범죄수사계와는 무관한 부서 소속으로, 2023년 10월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보고서를 외부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혐의를 인정했고, 인천경찰청은 그를 직위해제 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씨가 마약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한 경기신문과, 해당 언론사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ㄴ씨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ㄴ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하며, 검찰 소속인 ㄴ씨가 경찰의 내사 단계에서 수사 정보를 파악한 점에 주목해 수사를 진행했다.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어, 압수수색 영장 신청 전에는 경찰의 수사정보를 검찰이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ㄴ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의 수사는 최초 보도 관련 검찰수사관 ㄴ씨에 대한 건, 수사 보고서 원본 사진 유출 관련 인천경찰청 경찰관 ㄱ씨에 대한 건, 두 갈래로 진행됐다. 이후 2024년 7월 8일, 경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경찰청 ㄱ경위, 인천지검 ㄴ수사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신문 등 언론사 기자 4명 불구속 송치했다.

2025년 6월 5일, 검찰(인천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최종필)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ㄱ경위, 인천지검 ㄴ수사관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던 언론사 기자 4명 중 3명은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목적’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으며, 다른 기자에게 수사대상자 개인 정보를 제공한 기자 한 명(ㄷ씨)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ㄱ씨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ㄴ씨
경기신문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연예인 마약 사건 수사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이의신청 기각²⁷⁶

²⁷⁶ 인천경찰청은 2025년 5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따라 ‘사건 담당경찰관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인천경찰청은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장 치안정감 홍기현 - 광역수사단장 경무관 김철문 -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총경 반진석 - 경정 신동현(∼’24.02)

청장 치안정감 홍기현 - 광역수사단장 경무관 김종민 -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총경 이정철 - 경정 신동현(’24.02∼)

[인천지검 형사6부]

지검장 박재익 - 차장 차범준 - 부장 최종필 - 주임 이준명

4. 수사 경과 및 결과

날짜	수사경과
2023-10-14	경찰(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 마약 투약 혐의로 이선균 씨 피의자 신분 전환하여 형사 입건
2023-10-19	경찰, 마약 투약 혐의로 배우 L 씨 등 8명 내사 중이라고 밝힘
2023-10-20	법조계·경찰발 보도로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음이 알려짐 소속사, 이선균 씨가 사건 관련자로부터 지속적 공갈, 협박을 받아 고소하였음을 밝힘
2023-10-21	경찰, 유흥업소 실장 A 씨 구속, 종업원 B 씨 불구속 입건. 이외 관련된 5명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
2023-10-23	경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이선균 씨 불구속 입건. 검찰(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이영창 부장검사), 이선균 씨 측이 고소한 A 씨 등의 공갈 사건 인천경찰청 이송
2023-10-24	경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이선균 씨 추가 입건
2023-10-25	경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수 권지용 씨 불구속 입건
2023-10-26	경찰, 마약 공급 혐의로 의사 D 씨 불구속 입건
2023-10-27	경찰, 법무부를 통해 이선균 씨와 권지용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 발표. 유흥업소 실장 A 씨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
2023-10-28	경찰, 이선균 씨 피의자 신분 공개 소환 조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아 휴대전화, 차량 압수.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음성 판정 받음
2023-11-02	경찰, 유흥업소 종업원 B 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소환조사
2023-11-03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이선균 씨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힘
2023-11-04	경찰, 이선균 씨 피의자 신분 2차 공개 소환 조사.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 A 씨에게 속아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짐
2023-11-06	경찰, 권지용 씨 피의자 신분 공개 소환조사.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음성 판정 받음
2023-11-07	검찰(인천지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유흥업소 실장 A 씨 구속 기소
2023-11-09	경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D 씨와 병원 압수수색
2023-11-13	경찰(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현재까지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밝힘.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입건 전 조사를 한 것인데 그

날짜	수사경과
	내용이 알려진 것”이라고 언급함
2023-11-15	경찰(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 이선균 씨에 대한 국과수의 정밀 검사 결과 감정 불가 판정 받음
2023-11-20	경찰, 권지용 씨에 대한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 음성 판정 받음
2023-11-24	경찰, 이선균 씨에 대한 국과수의 추가 정밀 감정 결과 음성 판정 받음 경찰, 의사 D 씨 사전 구속영장 신청
2023-11-25	경찰, 권지용 씨 출국금지 기간 연장하지 않아 출국금지 조치 해제됨. 이선균 씨의 출국금지는 연장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2023-11-27	법원(인천지법 이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의사 D 씨 구속영장 기각
2023-12-06	경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유흥업소 종업원 B 씨 검찰 불구속 송치
2023-12-14	김희중 인천경찰청장, 혐의없음으로 권지용 씨를 불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고 해명함
2023-12-19	경찰, 의사 D 씨 구속영장 검찰에 재신청
2023-12-20	법원(인천지법 김성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의사 D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2023-12-23	경찰, 이선균 씨에 대해 19시간에 걸쳐 3차 소환 조사(12/23~12/24). 이선균 씨 측에서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으나, 경찰에서 받아주지 않아 공개 소환 조사로 진행. 마약 투약 혐의 조사와 함께 공갈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2023-12-26	이선균 씨 측, 경찰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 의뢰하며 공개 소환 방식이 아닌 비공개 진행을 요청함
2023-12-27	이선균 씨, 숨진 채 발견 경찰, 이선균 씨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경찰, 이선균 씨를 협박해 5천만원을 받아낸 공갈 혐의로 C 씨 강제 구인
2023-12-28	윤희근 경찰청장, 이선균 씨 사망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잘못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힘 김희중 인천경찰청장,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으며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 사항 유출이 전혀 없었다고 밝힘 경찰(인천경찰청), 이선균 씨의 비공개 조사를 거절한 것이 “취재진의 안전사고가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밝힘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 이선균 씨 마약 사건 관련 수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이 포함된 경찰의 수사 보고서 원본 촬영 사진을 보도 법원(인천지법), C 씨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2023-12-29	경찰(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의사 D 씨 검찰 송치
2024-01-05	경찰, 공갈·공갈미수 등 혐의로 A씨와 C씨 검찰 송치
2024-01-16	인천지검 강력부(이영창 부장검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마약 혐의로 의사 D 씨 구속 기소, 유흥업소 실장 A씨 향정 혐의로 추가 기소
2024-01-18	경찰(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인천경찰청의 수사 의뢰로 이선균 씨 마약 혐의 수사 정보의 유출 경위에 대한 정식 조사 착수
2024-01-22	경찰,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와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자세히 보도한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 대상 압수수색 실시

날짜	수사경과
2024-01-23	인천지검 강력부(이영창 부장검사), 전직 영화배우 C 씨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유흥업소 실장 A 씨 공갈 혐의로 추가 기소
2024-02-05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선균 씨 사건 관련 “초기부터 이 씨를 불러 조사할 때까지 지속적인 수사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밝힘
2024-03-21	경찰, 인천경찰청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 진행하고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7경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경찰(인천경찰청), 7경위 직위 해제
2024-03-22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7경위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2024-03-23	법원(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피의자 7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을 들어 구속영장 기각
2024-04-15	경찰, 인천지검과 경기신문 압수수색. 이선균 씨가 마약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지역 언론사에 전달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L 씨 형사 입건
2024-06-03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L 씨 구속영장 신청
2024-06-05	법원(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L 씨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24-07-08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경찰청 7경위, 인천지검 L 수사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신문 등 언론사 기자 4명 불구속 송치
2024-07-17	수원지검, 인천지검 수사관 L 씨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인천경찰청 7 씨 사건 인천지검으로 이송
2024-07-18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사관 L 씨 사건 형사3부 배당
2024-08-22	경찰 해당 사건 수사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언론보도. 이번 사건에서 수사선상에 오른 11명 가운데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와 함께 이선균 씨를 공갈 협박한 A씨, C씨를 비롯해 피의자 5명을 검찰에 송치함
2025-06-05	검찰(인천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최종필), 이씨 수사정보 유출한 인천경찰청 7경위, 인천지검 L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 7경위에게 제공받은 마약 수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언론사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구속 기소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7경위, L 수사관, 기자 D 씨	2025-06-00	재판 중

기타 의혹 수사

50.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수사(2022)

공인중개사, 건축주, 감정평가사, 임대인 등이 공모하여 주택 매매와 동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무자본 갭투기’를 통해 빌라,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거나, 건설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으로 새로운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편취한 방법으로 수도권 일대의 ‘빌라왕’ 사건,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등 전국적으로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자 수사한 사건

사건 진행상태	▪ 재판중
담당 부서	▪ 사건1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 ▪ 사건2 : 인천광역시경찰청 광역수사대 → 인천지검 형사5부 ▪ 사건3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 사건4 : 서울강서경찰서 경제2팀 →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주요 처분	▪ 남헌기,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 씨’, ‘화곡동 빌라왕’ 강 씨 등 기소

1. 사건개요²⁷⁷

서울 강서구 화곡동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실제 매매가보다 임대차 보증금을 높게 받아 주택 매매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 빌라,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깡통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2022년 10월, ‘빌라왕’ 김대성이 사망하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언론보도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김 씨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244채를 사들여 전세로 임대한 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임대사업자 김대성 씨의 사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 보증금 반환마저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졌다. 경찰이 파악한 ‘김대성 전세사기’ 피해자는 1,669명 이상, 피해액은 총 3,280억 원에 달했다(사건1. ‘빌라왕’ 김대성 사건). 경찰은 김대성 사망 이후에도 전세 사기에 가담한 부동산임대업자,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총 60여 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6명은 구속됐으며, 현재 공범들에 대한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5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리베이트를 취득한 강모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는 ‘건축왕’으로 불린 건축업자 남 씨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컸다. 남 씨는 주택 2,700여 세대를 직접 짓고, 차명으로 해당 주택들을 소유하면서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주택 중 다수가 경매에 넘어갔지만, 남 씨에게 고용된 공인중개사들은 그 사실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했다(사건2.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헌기 사건). 결국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임차인들이

²⁷⁷ 전세사기 사건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다수의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관련 수사와 재판 경과를 최대한 담으려고 했지만 누락되거나 완결적으로 기록하지 못한 사건이 있을 수 있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피해 금액은 약 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2023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경찰은 남 씨를 비롯해 그와 공모한 공인중개사, 명의상 임대업자 등 59명을 입건했고, 이들 중 1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2024년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665세대, 전세금 536억 원의 피해금액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다수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반복한 남 씨와 공범 18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한편 2024년 2월 1심 판결에서 남 씨는 징역 15년과 범죄수익 115억 원을 추징받았고, 공범 9명은 각각 4년에서 1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24년 8월 2심 재판부는 남씨의 형량을 징역 7년, 공범 9명은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감형했고, 2025년 1월 대법원은 2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들은 대법원이 전세사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 사건들 외에도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21년 7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240채를 소유하고 있던 ‘빌라왕’ 정 모씨가 제주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망한 ‘빌라왕’들 중 정 모씨의 배후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 씨를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씨는 사망한 정 모씨 외에도 다른 임대업자들까지 총 7명의 ‘빌라왕’의 배후로 알려졌다. 이후 신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인천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주택 임차인 37명을 속여 80억 원의 보증금을 챙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재판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다른 관련자와 차이가 없다며 자신은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사건3.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 씨’ 사건).

한편 검찰은 2019년 고소되었던 ‘화곡동 빌라왕’ 강씨, 공인중개사 조씨 및 동업자 김씨 등에 대해 뒤늦게 2022년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들은 2015년 9월부터 3년 동안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기는 수법으로 자본 없이 화곡동 내 빌라 283채를 매입 및 임대한 후 임차인 18명에게 31억 6천여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를 받았다. 경찰이 2020년 8월에 검찰에 넘긴 사건이었지만, 검찰이 2년 만에 기소하면서 이미 공소시효가 경과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못하게 됐다. 검찰이 이들을 2023년 1월에 뒤늦게 기소하고, 공인중개사 조씨가 사망한 ‘빌라왕’ 김대성과 과거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씨에 대한 검찰의 특장 수사 기소가 더 큰 전세사기 피해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사건4. ‘화곡동 빌라왕’ 사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7월부터 24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꾸려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16,314명, 피해금액은 2조 4,963억 원에 달하며 이 중 62.8%가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전세사기가 아닌 경우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검찰 송치가 늦어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가해자 처벌에 집중되고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이어졌다. 2023년 5월 말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피해자들의 요구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제외되었다. 피해자들은 사각지대 없는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그 결과 2024년 8월 말

피해자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법 개정이 이뤄졌다. 특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약 3만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전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세사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하며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크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사건1. ‘빌라왕’ 김대성 사건]

‘빌라왕’ 김대성(사망)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인 등 18명

[사건2.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헌기 사건]

건축업자 ‘건축왕’ 남헌기

남 씨의 딸 등 명의상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인 등 총 50명

[사건3.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 씨’ 사건]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 씨

공범 빌라 매수인 김 씨

[사건4. ‘화곡동 빌라왕’ 강 씨 사건]

임대사업자 강 씨

공인중개사 조 씨

공인중개 동업자 김 씨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사건1. ‘빌라왕’ 김대성 사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장 총경 윤정근(~’23.07), 고석길(’23.07~) - 금융범죄수사2계장 경정 임정완 - 수사팀장 경감 박용남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검사장 송경호 - 차장 박영진 - 부장 구태연 - 주임 이지연

사건2.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헌기 사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광역수사대장 총경 임실기 - 수사 총책임자 경정 김상식 - 수사 부책임자 경감 김명권 -

수사담당자 경감 노영일 - 수사참여 경찰 경사 차의태, 서동영, 경장 신범진

이후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이의신청 기각²⁷⁸

²⁷⁸ 인천경찰청이 2023년 4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공개를 결정하고 답변해 온 정보. 인천경찰청은 2025년 5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따라 ‘사건 담당경찰관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인천경찰청은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인천지검 형사5부]

지검장 심우정 - 차장 박영빈 - 부장 박성민 - 주임 송윤상, 이영준, 이로운,
한태희('23.03~'23.08)

지검장 송강 - 차장 김도완 - 부장 김은하('23.09~'24.05)

지검장 박재익 - 차장 박혁수 - 부장 조은수 - 주임 강명훈, 이수행('24.06~)

사건3.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 씨' 사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장 총경 윤정근 - 금융범죄수사3계장 경정 최승우 - 수사팀장 경감 정용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지검장 송경호 - 2차장 박영진 - 부장 김형석 - 주임 황영섭

사건4. '화곡동 빌라왕' 강 씨 사건

[서울강서경찰서 경제2팀]

경찰서장 경무관 윤소식(~'20.01) - 수사과장 경정 이용희(~'20.02) - 경제2팀장 경감
박경란(~'20.02)

경찰서장 경무관 허찬('20.01~'20.08) - 수사과장 경정 최승우('20.02~) - 경제2팀장 경위
김병용('20.02~'20.08)

경찰서장 경무관 반기수 - 수사과장 경정 최승우 - 경제2팀장 경위 경감 류경희('20.08~)
- 사건담당자 경제2팀 경위 윤병운 - 부수사관 경위 김병용, 이철우, 경사 고강식, 경장 정기윤,
신연재(위 기간 공통)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형사1부)]

지검장 양석조 - 차장 구상엽 - 부장 이응철 - 주임 정종현

4. 수사 경과 및 결과

사건1. '빌라왕' 김대성 사건

날짜	수사경과
2022-07-2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 운영 (~2023.01.24.)
2022-07-28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2022-09-19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구성
2022-10-13	경찰(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사망한 '빌라왕' 김대성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리 및 전세사기 공범 수사 지속
2022-12-26	경찰, 건축주·분양대행업자 등 5명 사기 혐의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힘
2023-01-16	경찰, 분양대행업자·중개인 등 11명 사기 공범 혐의 추가 입건했다고 밝힘
2023-07-21	경찰, 사망한 김씨가 고용한 직원 2명·주택을 중개해주고 리베이트를 챙긴 부동산업자 56명·전세사기 임대인 2명 등 총 60명을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6명 구속송치)했다고 밝힘
2023-06-07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구태연 부장검사), 사망한 김씨의 공범 3명(법무사사무실 사무장 강 모, 부동산중개보조원 조 모, 바지 임대인 변 모) 구속 기소

사건2.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헌기 사건

날짜	수사경과
2022-07-2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 운영 (~2023.01.24.)
2022-07-28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2022-09-19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구성
2022-12-23	경찰(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왕’ 남씨와 공범 실장 4명 구속영장 신청, 범행 가담 공인중개사·명의상 임대업자·중개 보조인 등 공범 46명 불구속 입건
2022-12-23	법원(인천지법 소병진 영장전담판사), 기만행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인정하여 ‘건축왕’ 남씨와 공범 실장 4명 구속영장 기각
2023-02-17	법원(인천지법 김진원 영장전담판사), 도주 우려로 ‘건축왕’ 남씨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가담 정도 등 다툼의 여지 인정하여 공범 실장 중 40대 A씨 구속영장 기각
2023-02-20	경찰, 공인중개사·명의상 임대업자·중개 보조인 등 공범 8명 추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힘
2023-02-24	경찰(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사기·부동산 실권리자명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건축왕’ 남씨와 공범 9명 검찰에 구속 송치
2023-03-15	검찰(인천지검 형사5부 박성민 부장검사) - ‘건축왕’ 남씨 구속 기소, 공인중개사 3명·중개보조원 1명 불구속 기소(사기·부동산 실권리자명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 재무담당 직원과 공인중개사 각 1명 불구속 기소(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공범 10명 중 공인중개사 2명·중개보조원 1명 추가 구속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
2023-03-21	검찰(인천지검 형사5부 박성민 부장검사), 사기·공인중개사법위반 등 혐의로 추가 구속된 공인중개사 2명·중개보조원 1명 구속 기소
2023-04-18	경찰(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사기·부동산 실권리자명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건축왕’ 남씨의 딸 불구속 입건 및 50명 추가 수사 진행
2023-04-25	경찰(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건축왕’ 남씨 소환 조사
2023-05-02	검찰, 횡령 등 추가 혐의로 ‘건축왕’ 남씨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3-05-11	경찰(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사기,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건축왕’ 남씨 등 51명 검찰 송치 - ‘건축왕’ 남씨 등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 별도 적용
2023-06-27	검찰(인천지검 형사5부 박성민 부장검사), 사기 등 혐의로 ‘건축왕’ 남씨 등 35명 추가 기소. 이 중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활동 혐의로 ‘건축왕’ 남씨 등 18명 기소, 횡령 혐의로 ‘건축왕’ 남씨 기소(2차 기소)
2024-06-17	검찰(인천지검 형사5부 조은수 부장검사),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 원을 가로챈 사기 등 혐의로 ‘건축왕’ 남씨 등 29명 추가 기소(3차 기소). 공범으로 남씨의 딸,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을 포함해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
2025-04-17	검찰, 2021년 인천 미추홀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70여 명에게서 계약금 2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남씨 등 3명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4차 기소)

사건3.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 씨’ 사건

날짜	수사경과
2022-07-2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 운영 (~2023.01.24.)
2022-07-28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2022-09-19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구성
2023-01-03	국토교통부, 제주에서 사망한 ‘빌라왕’ 정 모씨 사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2023-01-0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빌라왕’ 정 모씨 사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하달
2023-01-05	경찰(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빌라왕’ 7명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 모씨 등에 대해 검찰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2023-01-06	검찰(서울중앙지검), 신 모씨 등 사전구속영장 청구
2023-01-13	법원(서울중앙지법), 신 모씨 등 구속영장 발부
2023-02-05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김형석 부장검사),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 모씨 구속 기소. 사기 혐의 등 적용

사건4. ‘화곡동 빌라왕’ 강 씨 사건

날짜	수사경과
2020-08-21	강서경찰서, 임대사업자 강씨(사기 혐의)·공인중개사 조씨(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공인중개 동업자 김씨 등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2022-07-2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 운영 (~2023.01.24.)
2022-07-28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2022-09-19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구성
2022-12-23	검찰(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강씨·조씨·김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2022-12-27	법원, 강씨 구속영장 발부, 조씨 및 김씨 구속영장 기각
2023-01-04	검찰(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이응철 부장검사), 사기 혐의로 강씨 구속 기소, 조씨 및 김씨 불구속 기소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빌라왕’ 김대성(사망) 공범	2025-02-11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선고 - 범무사사무실 사무장 강 모 : 징역 12년 - 바지 임대인 변 모 : 징역 7년 - 부동산중개보조원 조 모 : 공소기각(재판 중 사망)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헌기(1차 기소)	2025-01-23	3심(대법원 제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 2024도15455) 선고 - 남헌기 : 징역 7년 확정, 191명에게서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 인정(2022년 1월 이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죄 무죄 / 1심 징역 15년·추징금 115억 원, 2심 징역 7년으로 감형) - 공범 9명 중 7명 : 징역 8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3년(2022년 5월 이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위반죄 무죄) - 공범 9명 중 2명 : 무죄

피고인	날짜	내용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헌기(2차 기소)	2025-02-20	1심(인천지법 형사14부 손승범 부장판사) 선고 - 남헌기 : 징역 15년 선고, 372명을 상대로 305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 인정 - 공범 30명 중 15명 : 징역 6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공범 30명 중 남헌기의 딸 등 15명 : 무죄 - 쌍방 항소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헌기(3차 기소)	2025-06-00	1심(인천지방법원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진행중 - 남헌기 외 28명 :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헌기(4차 기소)	2025-06-00	1심 재판중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 씨’	2024-03-28	3심(대법원 2부 주심 권영준 대법관 2023도18324) 선고 - 신 씨 : 징역 8년 확정,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인정
‘화곡동 빌라왕 강 모’ 사건	2023-03-00	1심(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 진행중

Part 2.
검찰국가 이후,
검찰개혁을 말하다

1장. 개혁을 말하다

2장. 시민이 말하다

〈윤석열정부 3년 검찰*보고서 2022-2025 Part 2. 검찰국가 이후, 검찰개혁을 말하다〉는 지금까지 윤석열정부에서 자행된 검찰권 남용과 권력 독점에 맞서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짚어보고 새정부에서 개혁해야 할 형사사법체계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검사의 나라를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검찰개혁 열망과 목소리를 담았다.

1부에서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참여연대 형사사법체계 개혁안 정리〉에서 참여연대의 형사사법 개혁 모델(2022)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검찰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오병두 법학교수는 수사와 기소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공적 권력임에도, 현재 형사사법체계는 법률전문가 중심의 ‘관료사법’에 머물러 있어 시민의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에 수사·공소 과정에 시민참여기구를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 중심제 도입을 통해 검찰권의 분산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검찰권 남용의 제도적 기반인 ‘단일검찰체제’의 문제를 지적하며,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병두 법학교수는 검찰개혁이 단지 제도 개선을 넘어서 민주주의와 시민주권 실현의 과제라고 말한다. 시민사법 원리에 따라 수사-기소의 책임을 분리하고 각 단계에서 시민이 실질적으로 감시·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시민참여기구의 전문성 부족은 법률보좌 인력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수사-기소 분리’ 법안들이 참여연대의 개혁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형사사법체계 전체의 민주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3년 만에 끝을 맺은 윤석열정부의 검찰을 돌아보는 〈시민 집담회〉에서 오고간 이야기들을 담았다. 30대와 50대 시민 각 4명, 총 8명이 참여했다. 이 중 4명은 지난 시민집담회에 참석한 바 있어, 당시의 평가와 소회를 환기하며 윤석열 파면 이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3년간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개혁과 멀어졌던 검찰에 대한 평가와 함께 파면 이후 희망을 이야기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기록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만드는 검찰*보고서의 의미를 높이하고자 처음 진행한 제목 공모전과 검찰보고서 제작을 위한 모금에 참여한 시민들의 메시지도 기록했다. 카카오톡이가치를 통해 진행된 모금 〈기록이 바꿀 세상, ‘검찰보고서 종합판’ 함께 만들어요〉에는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변치 않는 마음이 모였다. 모금함에 담긴 댓글 중 일부를 기록하여, 검찰*보고서가 제작될 수 있도록 함께 해준 시민들의 소중한 응원과 검찰개혁을 향한 염원의 메시지를 담았다.

1장. 개혁을 말하다

새정부 형사사법체계개혁 과제

형사사법체계는 공정하고 적법한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사와 기소 권한의 조직적 분리, 시민 참여를 통한 실질적 통제, 권력의 분산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조건입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사법’의 관점에서, 공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혁 모델을 제시합니다.

참여연대 형사사법체계 개혁안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홍익대 법학과 교수

I. 시민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필요성

1.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필요성과 참여연대의 「형사사법 개혁 모델」(2022)

형사절차를 구성하는 수사, 기소와 공판은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 전제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단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고 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천명하고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제수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특별히 규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임의수사라고 하여도 기본권 침해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형사소송법」은 임의수사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일 것은 강조하고 있다(제312조 제1항 등).

또한 공소권의 행사도 마찬가지이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하면서, 검사의 재량에 의한 불기소를 인정하고 있다(제247조). 부당한 불기소에 대하여는 검찰항고(「검찰청법」 제10조)와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제264조의2) 등의 절차를 두고는 있지만,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 그리고 부당한 기소로 인한 인권 침해와 정치적 오·남용 사례들이 그간 문제되어 왔다.

형사사법체계가 가지는 본질적 속성으로 인하여, 수사·공소기구의 권한 행사는 시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 위험성이 있다. 여기에서 「헌법」은 형사법에 관하여 적법절차의 이념(「헌법」 제12조 제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무죄추정의 권리(「헌법」 제27조 제4항) 등 특별히 그리고 명시적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을 천명한다.

그러나 수사·공소기관에 대한 통제는 법원에 의한 일부 사법적 통제를 제외하고는, 행정적 통제라는 점에 한계가 있다. 즉, 일반적인 형사절차에서 수사권과 공소권은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인 경찰공무원과 검사에 의하여 행사된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법률 제정에 의하여 행하는 입법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안에서의 통제는 행정적 통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관료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통제방식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종립성, 그리고 수사과 기소 결과의 공정성 등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부터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는 영장발부 절차에 의해) 별도의 통제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헌법질서는 형사사법체계 그 자체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형사사법체계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국민으로부터 유래한 권력의 행사에 국민에 의한 직접·간접의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요청이다. 행정부 공무원인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권 행사에 대하여 그 합법성과 적정성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수사·기소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형사사법체계는 공정하고 적법한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목표로 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형벌권이 적정하게 실현함에 있어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의한 통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나 행정부에 의한 통제가 미흡한 영역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감시와 통제 방법이 대안으로서 모색하여야 한다. 수사권과 공소권은 국민에 의하여 위임된 국가권력일 뿐만 아니라, 입법적·사법적·행정적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자체가 적법절차원칙에 반하고 그 결과는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 수사권과 공소권의 통제를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남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제2문,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도 반한다. 또한 유명무실한 형식적·관료적 통제는 수사와 공소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을 결여하는 경우, 불법하거나 부적정한 수사·공소에 대하여 면죄부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 시민적·민주적 통제가 형사사법체계 개혁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참여연대의 「형사사법 개혁 모델」(2022)(이하 “「형사사법개혁안」”이라 한다)²⁷⁹은 형사사법체계에서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중시한다. 참여연대의 「형사사법개혁안」은 ‘수사-기소의 분리’, ‘행정경찰-사법경찰의 분리’, ‘국가경찰-자치경찰의 분리’ 등 각 수사·공소기관의 조직적 분리와 재구성, 각 기관 상호간의 효율적 협력 구조, 실질적 시민통제기구 설치 등을 요소로 한다. 조직법상으로는 검찰의 순수 공소기관화 그리고 일반적 수사기구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인력을 통합한 ‘국가수사청’ 신설을 제안한다.

여기에서 다루는 「형사사법개혁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조직구성안이다. 일반적으로 형사사법체계라고 하면 수사와 공소, 형집행을 아우른다. 형집행은 상호 연동되어 있으므로 전반적 개혁이 필요하나, 여기에서는 시급한 개혁이 요청되는 수사절차 및 공소절차만을 다룬다. 또한 수사·공소기구의 개혁을 중심으로 하고 (형사)재판절차와 형집행절차 개혁은 별도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²⁸⁰

²⁷⁹ 이 자료는 오병두, “수사-기소 구조의 개혁 방안: 국가수사청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경찰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관: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2022. 11. 21.), 18-32면과 오병두, “수사-기소 구조의 개혁 방안: 국가수사청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디인가: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안 제언과 검토』 자료집(참여연대, 2024. 7. 16.), 4-30면 등의 내용을 발전시킨 것임. 이들 자료는 참여연대 홈페이지(각각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919942>>과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971003>>, 최종검색: 2025. 5. 10.)에서 볼 수 있음.

²⁸⁰ 따라서 구체적인 형사절차상의 작용에 관한 수사절차에 관한 법적 규율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만 다루고 있다. 수사절차에 관한 법적 규율에 관하여는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다.

2. 시민사법 대 전문가사법(관료사법)

「형사사법개혁안」은 그간 제기되었던 다양한 형사사법 개혁론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한다. 무엇보다도, 다른 형사사법개혁안의 기본 관점부터 살필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방안 사이에는 사법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로서는 ‘[법률]전문가사법과 시민사법’²⁸¹ 혹은 ‘관료사법 대 시민사법’이라는 관점 내지 시각의 대립이 있다.

이때의 “법률전문가 중심의 사법”(전문가사법, legal professionalism)이란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법의 내재적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조하는 관점”을 말한다. 형사사법체계 내부의 각 기관의 ‘견제’를 강조함으로써 체계의 안정성, 적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법원에 의한 수사절차 통제를 강조하는 입장, 예컨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재정신청 제도를 강화하자는 논리나 독일의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여기에 속한다.

전문가사법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형사사법체계에서는 행정부와 사법부 소속 관료인 검사와 법관에 의하여 형사사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점에서 ‘관료사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와 대비되는 “시민 중심의 사법”(시민사법, criminal justice particip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criminal justice)은 시민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 사법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관점이다. 개인 차원에서 사인(私人)이 직접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사인소추제, 검사의 기소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대배심제도, 검찰심사위원회 등 ‘시민참여기구 도입론’이나 그 ‘지위·권한 강화론’ 또는 ‘검사장 직선제 도입론’ 등은 이러한 시각에 기초한다.

일반적으로 전문가사법의 경우, 훈련된 법률전문가에 의한 전문성과 사법제도의 효율적 운영, 형사사법 운영의 일관성, 제3자성에 기반한 공정성, 직위에 따른 책임성, 법조윤리 등 내부적 통제에 의한 윤리성 등이 강조된다. 반면, 법조직역의 자정작용 상실 등 내부적 부패, 정치적 사법, 엘리트주의에 기반한 비(非)-민주성, 반(反)-시민성, 내부적 부패, 정치적 사법, 엘리트주의에 기반한 비(非)-민주성, 반(反)-시민성, 직역이기주의의 작용 등의 문제될 수 있다.

한편, 시민사법의 경우에는 민주주의적 요청, 시민의 참여에 의한 정당성 확보, 시민적 감각에 부합하는 결정과 판단, 참여를 통한 민주적 시민교육(civic education and engagement) 등이 장점으로 꼽히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성, 형사처벌에서의 포퓰리즘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사법(관료사법)에서는 기관 간 통제원리가 강조됨에 반하여, 시민사법에서는 민주적 통제원리가 그보다 우선한다. 시민사법의 관점에서는 각 기관의 독립성이 강조되고 독립성이 커지는 만큼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적인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 관료사법에서는 기관 통제원리, 즉 하나의 기관을 다른 기관이 또는 상급기관이 통제한다는 원리가 강조된다. 관료사법에서는 독립성보다는 중립성의 원리가 우선적으로 작용하는데, 법원과 같은 중립적 기관이 통제함으로써 다른 기관의 권한 남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작동한다.²⁸²

²⁸¹ 이에 관하여는 오병두, “바람직한 형사사법개혁 모델: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중심으로”, 31면.

²⁸² 그러한 예로 검찰이 주장하는 검사의 ‘준사법기관론’을 들 수 있다. 실상은 경찰에 대하여 검찰의 통제는 허용하지만 스스로는 통제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논리이다. 여기에 ‘단독관청론’은 실제 의사결정을 하는 상위직 검사를 배제하고 법적 책임을 개별 검사에게 돌리는 논리로 생각된다.

현재의 형사사법체계는 수사와 관련하여 공소를 담당하는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수사기관을 통제하고, 독립적인 법률 전문가인 법원에 의하여 공소기관을 통제한다는 구상, 즉 경찰은 검찰이, 검찰은 법원이 통제한다는 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검찰이 통제할 수 없는 경찰의 수사활동, 법원이 통제할 수 없는 검찰의 공소권 행사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²⁸³ 각 기관의 권한 남용을 그 기관의 수준에서 그리고 그 자체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도 아울러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장치들이 약화되면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이 사각지대를 확장하고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을 활용할 기회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수사-기소의 분리’에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책임성’과 ‘공소기관의 공소에 대한 책임성’이라는 기관 수준의 책임 분배가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이 사각지대에 대한 법적 통제수단으로서 시민의 참여와 시민에 의한 책임 추궁의 방식이 실효적이다. 따라서 시민사법의 원리는 ‘수사-기소의 분리’나 그에 따른 수사와 기소의 책임성(책임수사와 책임기소의 원리)을 모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이상의 ‘관료사법 대 시민사법’이라는 대비는 하나의 전형을 상정한 것이다. 현실의 형사사법 개혁론이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편향되거나 치중되어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입법자들은 입법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제도의 본질적 구성부분에 속할 것을 인식하고 그 구현에 힘쓸 것을 요청한다는 점에 시민사법 이념은 독자적인 가치가 있다. 시민사법은 형사사법의 기본적 목표를 실현하도록 설계될 경우, 관료사법의 부족을 보완하고 그 장점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시민사법 관점은 특히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와 관련이 깊다. 이는 그간 검찰개혁 과정에서 강조되었던 헌법이념이다. 한국 사회의 정상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검찰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 정치권력의 이익에 복무하는 검찰이나 ‘검찰의 정치’로부터 민주적 정치과정에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현실 입법과정에서 검찰개혁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뒤로 물러서고 전문가사법(관료사법)의 입장이 전면에 등장하곤 하였다. 간접적으로 의회권력이나 선출권력을 매개함으로써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으로 대변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검찰개혁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형사사법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서 주권자인 시민의 직접적 참여를 강조하고자 한다. 이처럼 시민의 직접적 참여를 중시하는 입장이 바로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시민사법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²⁸³ 「검·경 합의문」(2018. 6. 21.)에서 등장하는 경찰의 ‘내사’가 검찰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예이다.

II. 「형사사법 개혁 모델」의 구조

참여연대의 「형사사법개혁안」은 형사사법체계의 조직론 차원으로 보면, 기존의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에서 각각 요구되는 핵심적 명제를 통합한다. 즉, 검찰개혁 모델로서는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경찰개혁 모델로서는 ‘행정경찰-사법경찰 분리’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이를 통일적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형사사법개혁안」은 ① 수사기관으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인력을 통합한 ‘국가수사청’을 도입하고, ② 공소기관으로는 검찰을 분권화하여(단일검찰체제 해소) 지방검찰청 단위로 재편하면서, ③ 수사와 공소에 대하여 실질적 감독권을 가진 시민참여기구를 두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1. 국가수사청의 도입

「형사사법개혁안」에서 ‘국가수사청’안은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분리하고 여기에 검찰의 직접수사 인력을 합친다는 구상이다. 즉, 현재의 경찰조직은 분권화되어 국가경찰(행정경찰), 지방경찰로 나뉘고 국가경찰 중 사법경찰은 ‘국가수사청’²⁸⁴으로 옮겨진다. 이는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그리고 ‘행정경찰-사법경찰 분리’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라는 세 가지 원칙을 통합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하고, 각각에 대하여 책임성을 담보할 제도로써 시민참여기구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와 ‘행정경찰-사법경찰 분리’라는 명제에 따라, 국가수사청을 도입한다고 할 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가 문제된다. 이를 위하여 국가수사청은 분권화된 검찰청의 조직에 대응하여 지방수사청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운영한다.²⁸⁵

2. 단일검찰체제의 해체

: 검찰권 분산 모델로서 지방검찰청 중심제와 시민참여 모델로서 검사장 직선제 도입

「형사사법개혁안」에서 검찰청은 지방검찰청을 중심으로 검찰권(공소권)이 분산되어 행사된다(지방검찰청 중심제). 여기에 추가하여 검사장직선제를 시민에 의한 검찰조직의 구성방식으로 제안한다.

지방검찰청 중심제는 분권형 검찰조직으로서 현행 검찰총장 직할제(「검찰청법」 제12조 제2항)²⁸⁶와 대비된다²⁸⁷. 현행 검찰제도의 특징은 전국적으로 하나의 검찰조직이 모든 사건을 관할하는

²⁸⁴ 이 기구의 명칭을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국가수사‘처’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국가수사‘청’으로 할 것인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여기에서는 기능을 기능하여 후자의 입장을 택하였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²⁸⁵ 이에 관하여는 오병두, “수사구조 개혁을 위한 국가수사청 도입의 필요성”, 237-260면.

²⁸⁶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²⁸⁷ ‘단일검찰체제’와 ‘복수검찰체제’에 관한 서술로는 오병두, “‘검찰권의 일원적 행사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검찰기구의 분할 사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겸하여”, 법과 사회, 제75권(법과사회이론학회, 2024. 2), 169-194면.

집중형 검찰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단일검찰체제’로서 분권형 검찰제도인 ‘복수검찰체제’와 구별된다.

현재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 단일검찰체제를 가진 나라는 한국과 일본 정도이며 두 나라 모두 검찰총장에게 검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여 전국의 검사가 하나의 동일체로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한 나라의 검찰권을 한 명이 독점하면 권력이 집중돼 오남용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이른바 ‘검찰 쿠데타’로 불리는 검찰권력의 사유화 사태를 가능하게 하였던 제도적 기반은 바로 이 단일검찰체제였다(그래서 ‘제왕적 검찰총장 체제’로도 불린다).

지방검찰청 중심제를 취하는 경우 검찰총장의 지위는 검사로서의 업무보다는 조직·인사·예산 등 검찰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 역할은 지방검찰청 협의회에서 협의되지 못하거나 협의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안에서 관할을 조정하는 역할이나 검찰권 행사에 관한 일반규범을 제정하는 등의 역할로 제한된다.

‘제왕적 검찰총장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소권의 행사단위를 지방검찰청 검사장 중심으로 바꾸어 단일검찰체제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지방검찰청 단위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사이의 권한, 관할의 문제를 조정·해결하기 위한 —복수검찰체제에서 일반적인— 제도적 장치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공소권 행사의 주체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4년마다 선거에 의하여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재임은 3기까지로 하며, 그 선거절차는 교육감에 준하고, 주민소환으로 책임추궁이 가능하도록 하면 민주적 책임성을 담보한다는 구상이다.²⁸⁸

지방검찰청 중심제와 검사장직선제는 모두 검찰권 분산방안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지향점과 규범적 목표가 다르다. 지방검찰청 중심제는 관료사법과 시민사법 모두와 결합이 가능한 제도이지만, 검사장직선제는 시민사법의 전형적 형태로서 관료사법 자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다.²⁸⁹

3. 수사기구, 검찰기구에 대한 시민참여기구의 일반화 그리고 권한의 실질화

참여연대의 「형사사법개혁안」에서는 검찰청과 국가수사청 그리고 경찰청은 각각 독자적인 시민참여기구에 의하여 통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일반적 통제기구로 실질화된 권한과 조직을 가진 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위원회)나 수사위원회(국가수사위원회와 지방수사위원회), 검찰시민위원회(중앙시민위원회와 지방검찰시민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였다.²⁹⁰

이들 위원회는 개방형의 구성을 취하여 위원 구성과 자격에 시민의 폭넓은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에 관한 심의·의결 기능을 담당하며 실질적인 통제기구로 기능하게

²⁸⁸ 참여연대의 검사장직선제 제안에 관한 상세는, 이국운, “검사장 직선제 재론: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연장선에서”, 「2021년 검찰개혁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자료집(언론소비자주권행동,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생경제연구소,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김남국 공동주최, 2021. 8. 24.), 6-20면.

²⁸⁹ 따라서 검사장 직선제는 지방검찰청 중심제를 제도적 전제로 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²⁹⁰ 같은 맥락에서, 현재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을 실질화하여야 한다. 즉, 행정안전부 수사기능이 없어진 국가경찰에 대해서도 실질화된 국가경찰위원회가 필요하다.

된다. 기본적인 심의·의결 기능 이외에서도 직무감찰기능, 인권감독 기능 등을 수행하며 시민의 의사가 검찰행정사무나 협의의 검찰사무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민참여기구에서 흔히 지적되는 참여자의 법률지식과 전문성 미비라는 반론에 대하여는, 시민통제 기구에 비(非)-변호사 위원의 업무 지원을 위한 변호사 자격 있는 법률보좌관을 두어 상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이 법률보좌관의 주요 업무는 법률정보의 조사와 의안에 대한 자체 자문 또는 전문가 자문 등 법적 관점의 지원이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2022년 제시한 「형사사법개혁안」의 기본 구조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 참여연대 형사사법 개혁모델 (2022) >

추진 방향	경찰개혁		검찰개혁	
	자치경찰의 실질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조직적 분리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공소권의 기능적·지역적 분할
권 한 의 합 리 적 분 산	○ 국가경찰 ○ 자치경찰 ▶ 경찰청(국가경찰), 국가수사청과 분리된 조직 ▶ 임무: 지역치안 서비스(학교, 가정폭력 등) 중심 ▶ 권한: 초동수사, 관할사건 수사	○ 국가수사청 ▶ 소속: 총리실 소속 외청 ▶ 구성 - 경찰(국가수사본부)과 검찰의 직접수사 인력 이관. ▶ 권한: 모든 범죄 수사를 담당(일반적 권한을 가진 수사기구) ○ 지방수사청 ▶ 수사책임관: 검사에 대응하는 실질적 권한이 있고 독립성·신분이 보장되면서 수사결과에 책임도 지는 직위	○ 지방검찰청 중심제 ▶ 검찰사무의 지휘권한을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부여 ▶ 검찰총장은 협의의 검찰사무를 제외한 검찰행정사무 관장 ▶ 고등검찰청 폐지(재항고 폐지)	
시 민 참 여 와 통 제	○ 국가경찰 위원회 ○ 시도 경찰 위원회	○ 국가수사위원회 ▶ 국가수사청에 대응 ▶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중립성·독립성·개방성) - 수사업무 전반을 심의·의결 - 원칙적으로 일반적 수사지휘 권한 부여 ▶ 수사의 적법성 통제 - 직무감찰 기능 포함[인권감독관(옴부즈만)] ○ 지방수사위원회 ▶ 지방수사청에 대응 ▶ 합의제 행정기관(중립성·독립성·개방성) ▶ 수사의 적법성 통제는 국가수사위원회와 동일함	○ 검사장 직선제 ▶ 지방검찰청 검사장, 매 4년, 재임은 3기까지 ▶ 선거절차는 교육감에 준함. ▶ 주민소환으로 책임추궁 ○ 검찰시민위원회 ▶ 검찰권 행사의 일반적 통제기구 ○ 지방검찰시민위원회 ▶ 지방검찰청에 대응	

		○ 수사적정성심의위원회 ▶ 구속력 있는 의결기관 ▶ 국가수사청과 지방수사청의 구별에 대응하여 구성 ▶ 수사의 적정성 통제→수사의 책임성 담보 -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구가 실질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함.	○ 공소심의 위원회 ▶ 공소권 오·남용 통제 ▶ 불기소·기소의 적정성 심의
기관 통제		○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 ▶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²⁹¹	○ 재정신청 강화 ▶ 공소유지변호사
권한 조정		○ 수사기관 간의 이견과 갈등 조정 ▶ 수사협의체 ▶ 법원의 통제: 재정에 따른 관할 확정	○ 지방검찰청 협의회의 의결→검찰총장의 조정
효율성 담보		○ 수사정보 공유 및 합동수사체 ▶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수사정보 공유 및 수사 협의 ▶ 합동수사체 ○ 수사자문관 제도(변호사 자격, 검사×).	

○ 시민통제 기구의 기본 구성(실질화 모델)²⁹²
- 위원수 9명으로 인원 늘리고 의회 추천비중을 높임[대통령 3, 국회 6(1명은 인권위원장 추천)]
- 최소한도의 조직: 상근직 위원장 + 2인 이상의 상임위원 / 독립된 사무국 설치
- 시민통제 기구에 비(非)-변호사 위원의 업무 지원을 위한 변호사 자격 있는 법률보좌관을 둬.

III. 맺는 말

제22대 국회에는 참여연대의 「형사사법개혁안」과 유사한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특히 제22대 국회의 ‘수사-기소 분리’ 입법안은 검찰청을 공소기능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재편하고 검찰청 소속의 직접수사 인력인 검찰수사관으로 구성되는 중대범죄수사청(또는 중대범죄수사처, 이하 “중수처[청]”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²⁹³

참여연대가 제시한 「형사사법개혁안」에서 ‘국가수사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분리하고 여기에 검찰의 직접수사 인력을 합친다는 점을 제외하면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관점에서

²⁹¹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5항에 따른 송치요구는 폐지한다. 이를 대신하여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송치요구는 인권침해 구제수단은 수사위원회에 의한다.

²⁹² 현재의 경찰위원회의 구성과 권한도 이에 준하여 개편해야 한다. 수사기능이 없어진 국가경찰에 대해서도 실질화된 국가경찰위원회가 필요하다.

²⁹³ 이에 관하여는, 오병두, “‘수사-기소 분리’와 형사사법체계 개혁 —제22대 국회의 법안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37권 제1호, 2025. 4, 203-230면.

중수처[청]의 장기적 위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형사사법체계 전체적인 발전 방향을 염두에 두면서 중수처[청]의 초기 구성과 위상,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제22대 국회의 검찰개혁 법률안의 경우, 현행 검찰제도의 큰 특징을 이루는 단일검찰청 체제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나 지방검찰청 중심의 검찰권 분할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법안들과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안」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검찰권의 분산과 시민의 참여와 통제에 대한 관점에 있다. 시민사법은 수사기구와 공소기구의 독립성과 함께 책임성을 강조하고 그 과정에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될 것을 요구한다. 법률전문가만의 견제로는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편향에 따른 오작동의 가능성도 있다. 결국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사법’이 관철되어야 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한다.

우선, ‘수사-기소의 분리’에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책임성’과 ‘공소기관의 공소에 대한 책임성’이라는 기관 사이의 책임 분배가 작용해야 하므로,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시민의 책임 추궁 원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시민사법’적 대안이 필요하다.

시민사법적 관점의 시민참여기구는 번거롭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수사·공소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모든 제도에는 명(明)과 암(暗)이 있다. 이러한 단점은 제도 설계로 보완해야 할 문제이지 시민의 참여 자체를 막을 명분이 되기 어렵다. 관료사법 체제 내에서도 새로운 대안이 등장할 때마다 역시 비슷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점만 보아도 그렇다.

시민사법의 관점에서 주안점은 주권자 시민의 권한이 형사사법체계에서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헌법 요청을 어떻게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구현할 것인가에 있다. 시민참여기구는 어느 단계에서 어느 위치와 권한으로 할 때 제도적 목표를 잘 달성할 것인지, 시민참여의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도를 설계할 것인지가 고민의 지점이 되어야 한다.

수사·공소의 영역이 민주화가 진전된 사회에서 여전히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불철저함으로 드러낼 뿐 아니라 법치주의나 권력분립의 관점에서나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중대한 위험성의 측면에서 용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2장. 시민이 말하다

I. 시민 집담회

I. 검찰보고서 제목 공모작

III. 검찰개혁 응원 메시지

시민집담회에서는 3년 간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일사분란’하게 개혁과 멀어진 검찰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편향’이란 한 단어로 귀결됐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앞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방법과 고민에 대해 머리를 맞댔고 끝내 개혁을 이루리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의 한 줄 평가와 같은 검찰보고서 제목을 함께 고민해주신 공모전 이야기와
보고서 제작을 위한 모금에 참여해주신 시민들의 소중한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1. 시민 집담회

다시, 새로이

윤석열 정권이 3년 만에 끝을 맺었다. 지난 3년간 매일매일 윤석열을 정점으로 검찰은 ‘일사불란’하게 개혁과 멀어졌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제시한 길과 정반대로 걸었다. 그럼에도 멈출 수 없었다. 거부권이라는 대통령의 방탄 앞에 개혁 법안이 꺾이더라도, ‘검수원복’을 위해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가며 검찰이 그 자체로 권력이 되더라도,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검사를 대통령으로 하는 ‘검사의 나라’ 검찰국가는 내란이라는 자폭적 종말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끝났다.

그런데 ‘검사의 나라’도 정말 끝이 났을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다시 그리고 새로이 모였다. 검찰보고서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록하기 위해 시민 집담회를 개최한 지 네 번째이다. 윤석열정부 1년과 2년 시민집담회 참여자 중 성별과 연령을 고려해 4명을 다시 만났다. 참여했을 당시와 지금의 생각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해 새로운 시민들을 만났다. 윤석열정부 검찰에 실망하고 분노했다는 시민들이었다. 참여자들의 발언을 직접 인용한 경우는 큰따옴표(“ ”)를, 발언의 취지를 정리한 경우는 작은따옴표(‘ ’)를 사용했다. 참여자 기본 정보는 아래〈표〉와 같다.

〈표〉 참여자 기본 정보

	구분	성별	연령	비고
1	A	여성	50대	윤석열정부 1년 시민집담회 참여자
2	B	남성	50대	윤석열정부 1년 시민집담회 참여자
3	C	남성	50대	윤석열정부 2년 시민집담회 참여자
4	D	남성	30대	윤석열정부 1년 시민집담회 참여자
5	E	남성	30대	첫 참여자
6	F	여성	30대	
7	G	여성	30대	
8	H	남성	30대	

우리 모두는 답을 알고 있다

“검찰 권력이라는 느낌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편향성이 극대화된 시기였다. 정치권력으로서의 검찰이 사법의 역할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수단으로 쓰였다고 본다.”

(B)²⁹⁴

시민들의 평가는 윤석열정부 3년 동안의 검찰은 ‘편향적’이었다는 한 단어로 귀결되었다.

새 정부가 이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그 비판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전 정권과의 차이점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정치적 목적의 ‘있을 수 있는 일’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이를 정치가 아닌 수사로 풀었다.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많은 사건들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인사의 비리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빈번했던 사례인 감사원의 감사 후 수사의뢰는 검찰 수사 개시의 명분을 주기에 충분했다.

반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부실수사’를 넘어 당혹감, 수치스러움을 주기에 충분했다. ‘디올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수사에 마지못해 나선 검찰은 수사를 검찰청이 아닌 김건희가 지정한 곳에서 진행했으며, 심지어 휴대전화까지 제출한 채 대면조사에 ‘나선’ 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3년의 검찰을 돌아본 참여자들의 우려는 검찰의 수사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수사보다는 권력화된 집단으로서의 모습이 훨씬 인상에 많이 남았다. 인사정보관리단을 출범시킨 것은 사실상 세평 수집이나 개인에 대한 사찰로 보였다. 대검찰청이 범죄정보기획관을 만들어 정보를 수집했는데, 그것과 같이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 법무부가 정보기관화된 것이다.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국정원 검사 파견 확대까지 했다. 결정적으로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내정한 것이 경찰을 검찰 집단처럼 만들기 위한 포석이었는데 실패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수사나 기소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 실제로 물밑에서 검찰 계통의 권력 집단의 기능과 형태가 작동한 것이다.’ (D)

“솔직히 수사 잘했고 못했고 이런 거는 잘 기억이 안 남거든요. ‘그래서 수사해서 어떻게 됐는데?’를 봤던 기억이 많이 없고, 저한테 되게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던 건 검사들이 법 잘 아는 건 알겠는데 다른 것도 잘하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에서 너무 온갖 고위 공직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김홍일이라는 윤석열의 썬바지 선배라고 불리던 분이 간다든지. ‘이 사람이 방송통신계에 뭘 잘 안다고 이런 자리를 가지?’ 싶은. 모든 검사 출신들이 윤석열정부 하에서 굉장히 영전하는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참여연대에서 보고서 제목을 ‘검사의 나라’라고 한 게 가장 적합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얘기하셨던 김건희 수사 같은 거를 제외하고서 좀 기억에 남는

²⁹⁴ 이하 괄호 () 표기 안의 이름은 해당 의견을 말한 참여자를 뜻한다.

수사가 있나 했을 때 그거는 보통은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들만 언론 보도로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더 문제로 와닿았던 건 인사 문제였던 것 같아요.” (F)

‘인사 참사’ 또한 지난 3년 반복되었던 이야기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 출신들을 대통령실을 비롯해 주요 요직에 두루두루 임명했다. (F)가 말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직전에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금융 수사를 잘해서 금융감독원장이 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운운하며 검사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직행한 경우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카풀했다는 인연으로 회자됐던 법무부차관도 있었다. (D)가 비판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했지만, 검사 출신 변호사를, 그것도 ‘친윤 라인’을 경찰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그야말로 국가수사본부의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것을 뜻한다.

“저도 인사가 되게 눈에 들어왔고 (중략) 별로 욕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드는 게 과거 계엄군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작동하는 기계나 시켜서 하는, 생각이 없는 지키는 개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개인보다 그냥 현재 구조에 적응된 사람들로 보여요. (중략) ‘어떤 검사가 뭘 수사했다’ 그렇게 보도가 된다 한들 그게 큰 의미가 있나, 이미 그냥 검찰은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G)

“사회 전반적으로 검찰이라고 하는 직위가 어디든 갈 수 있는 만능의 권력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중략) 검찰 권력은 누가 얘기하면 이제 일사불란하게 명령 체계로 움직이는 사람들 같은 생각이 들고 그게 또 스스로를 엘리트 집단이라고 여기는 그런 게 존재하는 것 같고. 그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이 결국은 파시즘 형태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B)

지난 3년을 돌아봤을 때 가장 충격적인 경험은 단연코 12.3비상계엄일 것이다. (과거) ‘계엄군’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교과서에 박제된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오가는 것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파괴적 상황을 함께 경험했던 동반자이자 목격자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최악을 보았다

“어떻게 보면 그때 공수처가 과도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결국 윤석열 때 공수처가 일을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무능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수처 폐지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E)

‘솔직히 공수처의 역량에 대해 많이 실망했지만, 여전히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공수처가 한계가 있는 조직인 건 맞지만,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했을 때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이유에 막혀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에 군부독재의 잔재가 뿌리 깊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원조차 합법이라고 적었는데 그조차도 논란이 된다는 점에서, 군의 허가 없이는 군 시설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형사사법적 준비나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 상황은 공수처 탓이라 할 수 없다.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군부독재에 이어 검찰 독재로 넘어간 것으로 보였다. 만약 국방부 차관이 전향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반대로 국방부 차관에 윤석열 심복을 임명했다라면 이만큼의 수사도 진척되지 않았을 것이다. 부끄러울 정도로 사실상 군부독재에서 한 발자국 정도만 넘어온 그런 국가 체계를 갖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D)

윤석열의 체포 과정에서 공수처는 끊임없이 비판받았다. 1차 체포 시도가 불발되면서도 그랬고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일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팀 검사들의 회식 장면이 공개되었을 때도 그랬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회식 논란에 대해 후회하지 않지만, 국민 보기에 부적절하다면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모든 것이 비판받던 시기였다. 처음 시도에서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한 공수처의 ‘잘못’은 정말 잘못이었는지에 대한 (D)의 의견은 공수처의 태생적 한계와 인력 부족 상황을 넘어 우리 사회 군부독재의 잔재에 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내란범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라는 목격담은 지난 겨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리를 가득 메웠던 시민들에게 인지부조화를 가져왔다. 우리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 맞나?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의심하게 만든 것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때문이다. 법원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으나 그 무엇보다 검찰의 책임이 더 크고,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런데 검찰은 혹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왜 즉시항고를 포기했을까?

“저는 의아하지 않았던 게 그냥 그게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저럴 이유가 없는데 왜 저럴까? 그럼 분명하게 동조범이니까. 그러니까 한 배를 이미 탄 사람이면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하는 이유가 설명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G)

“김건희가 비화폰을 소지했다는 것 자체가 법적, 제도적 여러가지 형사사법적으로도 뭐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걸 몰랐을까요? 근데 저는 심우정을 너무 나무라기 어렵다고 보는 게 원래 자기 사건 의뢰인은 변호사 수임하면 법적으로 (비밀) 보장이 되잖아요. 검찰청 자체가 거대한 서초동 윤석열 로펌이라고 보면은 돼요.” (D)

“사실 그 윤석열정부의 국무총리는 한덕수가 아니고 검찰총장이 국무총리였고 그 내무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E)

“제가 검찰은 아니지만 저는 좀 기대했는데 쪽팔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로 검찰 출신 대통령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윤석열이 잘했어요, 예를 들어 검찰 출신 대통령 뽑아봤더니 너무 잘했어. 그러면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검찰 출신 뽑아보니까 일 잘하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검찰 내부에서는 다음번에 우리도 한번 대권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든지 했을 텐데, 전 제대로 말아먹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이 앞으로 그런 기회를 제대로 말아먹었다고 생각해요. (중략) 심우정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그니까 물론 그들만의 우리가 모르는 커넥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검찰이라는 조직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F)

“그거 항고 포기를 지휘를 했고 공식적으로 지휘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지휘를 했고, 수사팀에서 지휘한 건 맞는데, 결국에 그게 저는 어떤 걸로 보이냐면, 쉽게 말해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검사들도 결국엔 이게 수사가 될 거고 어떤 식으로든 사법 처리될 건

분명하지만 우리도 수사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 범위는 (중략) 그 내부적으로 소통이 이뤄지는 거죠. 우리 여기까지 수사할 거야. 근데 여기까지만 해. 그래, 여기까지 할까. 항고는 포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중략)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파견된 검사들의 대부분은 지금 특수본에서 그대로 넘어온 거고.” (D)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은 깊고 무거웠다. 나아가 참여자들에게 검찰은 불신의 대상을 넘어 내란 공범이기도 했다. “검찰청은 제일 친하지 않아요? 당연하죠.”(A)라는 발언은 검찰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아요”(E)의 말도 같은 맥락이었다. (B)는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에 검찰 포렌식팀이 갔었다’라는 주장을 토대로 계엄군과 검찰이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고, 관련된 증거가 밝혀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왜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검찰이 연루되었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을까?

“검사동일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똘똘 뭉쳐야 된다고 하는 자기만의 집단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B)

“이번에 그 최악을 봤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구나. 진짜 검사동일체로 잘 돌아간 걸 본 것 같아요.” (G)

문득, 이런 시가 떠올랐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너에게 묻는다)

윤석열정부 3년, 그토록 뜨겁게 달아올랐던 검찰은 지금 하얗게 타버렸을까?

연탄재가 아닌 검찰을 우리는 재사용할 수 있을까?

검찰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 그리고 고민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참여자들은 시간상으로는 산업혁명을 거쳐 조선 시대까지, 공간적으로는 아시아와 유럽, 미국을 넘나들며 이야기를 나눴다. 시민 집담회는 참여자 간의 합의된 결론을 내놓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참여자들은 제시된 질문에 답을 하거나, 참여자 간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의견을 주고받았다. 모든 참여자들의 공감을 받은 의견도 있었고, 일부 참여자들은 서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기 위해 부연 설명을 생략하고 주제별로 묶었다.

▲ 방법 하나. 권력은 분산해야 한다 - 검찰에게는 기소권만, 수사기관은 다양하게

“검찰 개혁 자체의 방식이 미국 검찰이라든지 일본 검찰이나 전체로 봤을 때 방향 자체는 (검찰은) 공소제기권자가 돼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까 수사관도 얘기해 주셨는데 일본의 검찰이나 미국 검찰은 수사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고 실제적인 수사 지휘는 경찰을 통해 진행하고요.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지. (중략) (현재 한국은) 집행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검사가 전체를 다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는 게 지금 윤석열정부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좀 두드러진 부분이 있는데 이전부터 얘기가 됐어요. 노무현정부 이전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었고 중간에 여러 가지 시도도 했었고 공수처가 생기고 중간에 민정수석이랑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검찰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법치 국가에서 검찰이라는 존재가 없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지금 현재 검찰 제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해갈 것인가’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검찰이나 사법부나 이쪽 입장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H)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부터 해버리면은 그게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해 가는 거 아닌가.” (B)

“아까 검사랑 검찰이랑 비슷한 기관들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잘 작동한 게 저번에 윤석열 체포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를 치고 나갔잖아요. 누가 안 시켰는데. 어찌 보면 다른 기관에 넘길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른 기관이 막 나설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던 건데 존재감을 보여줘야 된다는 욕구가 있으니까 (중략) 자기들끼리 치고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경쟁하는 기관이 여러 개 있으면 이런 식의 긍정적인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

▲ 방법 둘. 검사의 권한남용을 통제해야 한다

“어떤 경우는 기소를 해야 되는 시간대가, 누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몇 년을 미루기도 하잖아요. (중략) 이런 게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공평한데 이거를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둔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중략)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B)

“(중략) 지금은 검사가 검찰에서 첫 번째 재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애를 기소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심지어 요즘 많은 신문에 기사화되고 있는 재판의 결과는 실은 검사가 부실하게 일부러 봐주기 기소를 하거나 증거를 누락시키거나 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기소 편의주의 안에서 그냥 탐승해서 가는 거라면 어떤 범죄에 대해서 기소를 누락하거나 잘못했을 때 기소 법정주의에 근거해서 가야 되고 그걸 잘 못하면 검사를 제대로 징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검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익스큐즈가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C)

“최초에 사법고시 200명 밖에 안 뽑았었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투쟁을 거쳐서 지금 좀 넓혀놓은 거지만 지금 검사가 한 2,300명 되잖아요. (중략) 주변부 빼고 나면 코어는 몇 명

안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거를 많은 사람이 나누어 가져버리면,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대기업이 굳이 검찰 출신 고용 안 해요. (중략) 이걸 좀 분산시켜놓고 희소 가치를 없애 놓으면 자연히 검사동일체도 깨질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경쟁을 해야 하니까.” (C)

“사법개혁 할 때 되게 중요한 실마리일 것 같아요. 타이틀을 좀 진부화시켜가지고 네임 밸류를 없애버리는.” (E)

▲ 방법 셋.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수사보다는 그 구조를 바꾸는 게 우선이다.” (B)

“결국은 기소 독점주의하고 기소 편의주의를 검찰이 칼을 가지고 설치다 보니까 그게 권한이 많아지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잘 먹고 잘살고 싶고, 당연히 전관 예우가 나오면서 자기들만의 이너서클을 구축하게 되고 그러니까 국회에도 제일 많이 진출하는 직종이 변호사잖아요. 검찰은 이미 정치적 중립을 상실하고 정치 세력화된 집단인데 법은 그걸 전제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안 맞으면 형사소송법을 바꿔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안 바꿨을까 저는 계속 그 고민과 짜증 속에서 보내면서 빨리 없애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C)

“형사소송법이라든지 헌법 특정 조항이 있는 건데 왜 그런 구조가 유지되고 있느냐 하면 결국 어려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보는데, 국가 사법 제도 자체에 근본적으로 사법 철학이 좀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는 미국이 정말 좋은 예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적어도 미국은 철학은 분명한 게, 거기엔 인민이나 공동체가 소의 주체가 돼요. (중략) 원고가 검찰청이 아니고, 연방 사법제도면 미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이 되는 거고 주 정부에서 하면 미시건 주가 소의 주체가 돼요. 그 주나 그 국가의 인민을 대변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D)

“그러니까 검사 직선제를 하는데 대구에서 직선으로 선출된 대구 지검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아니면 정부에 대해서 다 구속, 기소,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인정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D)

“수사로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자’ 얘기하는데 항상 전제가 되는 게 누가 잘할 것이냐, 촘촘한 그런 법 집행이나 이런 거. (중략) 저는 그거에 앞서서, 잘하고 말고를 떠나서 누구에게 권한을 줄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못 되더라도 누군가 책임지고 못 되는 게 낫고, 잘 되더라도 누군가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공감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논의하기 어려운 거라고 보거든요.” (D)

“윤석열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국가들에서 다 이상한 사람들이 정치인 당선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해 왔던 제도의 효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검찰·사법개혁 제도도 그중 하나였거든요. 어떤 제도든 시작할 때는 되게 좋은 취지를 갖고 도입이 되잖아요. 그 좋은 취지가 나중에 관료주의나 경로 의존성에 의해서 희석이 돼가지고 단점이 서서히 누적되는 형태가 되는데 (중략) 제도를 일단 교체를 해

놓으면 그 경로 의존성이 깨집니다. 제도를 안 바꾸면 그럼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E)

▷ 고민 하나 - 구조 개혁 만으로 충분한가

“(법무부장관의 검사 징계에 대해) 제가 봤을 때는 간접적인 민주적 통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좋은 대통령을 뽑아서, 그 대통령이 좋은 법무부장관을 선임해서, 그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해줘야 하는 건데... 그 법이 있다 한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대통령이 아주 검찰 친화적인 법무부장관을 뽑아놓으면 사실 유명무실하죠. (중략) 공수처 같은 것도 결국에 그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구조에서는 정부에서 사실 엄청 미뤄버리면 공수처장 뽑는 것도 그렇고, 검사(임명 재가)도 미루면은 답이 없어요. (좋은 시스템에 악의를 가진 권력자의 조합)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중략) (공수처를) 완전히 인사권, 예산권 독립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정권이 들어와도 좌지우지 못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이완규 혹은 김태규가 공수처장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런 거거든요.” (D)

“요즘 들어 생각하는 게, 있는 제도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제대로 만들어서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는데, 유우성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에 법원하고 헌법재판소 이런 데서 다 하게 해 주니까 검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나마 그때 유우성 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권 남용으로 판결이 났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무부에서도 조사도 안 하고 드러나도 징계를 하지 않고, 징계가 나도 징계 집행을 안 하고, 법원에 가도 이 정도를 갖고 검사를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헌법재판소 가서도 이 사실관계는 인정을 해도 탄핵해서 직위 해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D)

“권력이 크니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식으로 제도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즘 들어서 제도가 핵심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상당 부분은 검찰의 관료제적인 조직 보신주의 같은 게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검찰들 아무리 변호사 못 하게 해봐야 대기업 간다고 그랬잖아요. 조선시대식의 청요직들을 선호하는 그런 이상한 문화도 저변에 있는 것 같고. 이런 문화들은 제도로 바꿀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이 권력이 너무 크다면은 그냥 그거를 늘려 버리는 게 해법이 될 수 있거든요.” (E)

“제도적 측면은 제도적은 측면대로 갖추어져 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운영적인 측면대로 두 가지가 동시에 나아가고. 저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좀 강하게 밀어붙여서 나가야 되지 않나. 선비 같은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C)

▷ 고민 둘 -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가능한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일까요? 왜 불가능하냐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더라도 결국은 윗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제도를 바꾸고 해왔지만, 쓰는 사람이 그걸 안 지키잖아요. 법을 만들어놨더니만 법을 피하고 시행령으로만 통치를 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걸 또 막아야 될 사람들도 안 막게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시스템을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고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가는 것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될 거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게 완전하게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차선의 수단으로 결국은 좋은 통치자, 좋은 리더를 세우는 것도 되게 현실적이다. 그래서 저는 제도는 제도로만 풀려고 하면 안 되고 약간은 좀 강제성이 있고 좀 푸시하는 느낌이 들더라도 좋은 법무부장관과 실행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걸 추진해야 바뀌는 거고, 설사 그걸 잘 못해서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또 그 정권에 맞게 약간 각을 틀더라도 그게 정상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상적인 검찰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 아닌가. 원래 그냥 자연스럽게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의 칼이 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한대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지 않나.” (C)

“근데 전 그 점이 잘못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어서 개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무기가 되었잖아요. 힘이 너무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하더라도요. 그 양당이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무기로 썼으니까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억울한 거죠. 잘 썼잖아,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왜 정치적 중립이 불가능하냐 하면, 시스템이나 개인이 당연히 중요한데 시스템이 지금 너무 압도적으로 잘못돼 있다. 그렇다면 그 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중략) 충분히 분산될 시스템을 만들면 더 이상 이런 게 없지 않을까.” (G)

“시스템을 잘 만드는데 그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변수들은 좀 어쩔 수 없는 걸로 우리가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까지 막으려면 각을 만든다고 열심히 만드는데, 그다음에 오면 후루룩 무너지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봤어요.” (C)

“윤석열만 봐도 그 잘못된 구조로 생겨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의 일탈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좋은 구조를 만들고 좋은 개인을 교육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 무기로 쓰일 수 있는 것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면, 저는 그거는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G)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항상 그런 얘기 들으면 첫 번째로 정치적 중립은 이 맥락에서 무엇인가, 국민의 대부분이 특정 정당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데도 가만히 있는게 중립인가. 두 번째로 그러면 정치적 중립이 뭔지를 정리한다고 했을 때 그게 바람직한 건가, 결국에 그런 고민이 되거든요. (중략) 검찰의 독립성을 우리가 보장할수록 그 자체로 권력화가 되는 거고, 그게 국민의 뜻, 인민의 뜻이라고 할수록 또 다른 의미로 정치화되는 걸 막을 수 없는 거예요.” (D)

개와 늑대의 시간

“우리가 아까 공감했듯이 사법 체계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유독 지금 도입이 안 돼 있다라는 거는 다 지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같이 한 목소리가 돼서 자기 밥그릇 지키기로 바뀌니까 이번 이재명정부에서 이걸 정말 바꿀 수 있을지” (C)

낮과 밤이, 밤과 낮이 교차하는 어스름 때에는 저 언덕 너머에 보이는 대상이 내가 기르는 개인지, 나를 해칠 수도 있는 늑대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윤석열정부가 저물고 이재명정부의 동이 트는 지금, 개와 늑대의 시간에 서 있는 이재명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의견은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뉘었다.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으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가속하지 않을 것, 그리고 국회가 나설 것이다 등이다.

“항상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스케줄을 주고 밀어붙이고, 그다음에는 좋은 정부로 바뀌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피로도도 높아지고 저항 세력도 점점 저항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추진력을 잃을 거라는 거죠. 결국은 바짝 한 6개월 내에 모든 셋업 다 끝내고 법 바꿀 것도 모두 한꺼번에 다 바꾸고 그다음부터는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길어지면 이것도 제대로 못 하고 일단 흐지부지가 될 소지가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C)

“고민은 전략적인 선택을 좀 해야 될 타이밍이지 않느냐, 근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걸 다 손을 대면 단기간에 끝내지를 못하고 피로도만 높아지기 때문에 정말 꼭, 죄송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을 잘 골라서 우선순위를 잡아서 빨리 정리를 하고 후순위로 할 수 있는 거는 뒤로 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 잡는 데도 시간이 많이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답답한 면이 좀 있어요. 언제 사람을 셋업해가지고 언제 이걸 다 마무리하나, 벌써 한 달 지나갔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면도 있어서 정말 취사 선택 잘해서 우선 순위 잡아서 진행 안 하면 반격이 있을 수도 있죠.” (C)

“저는 동의하는데, 초반에 다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중략) 기존에 조직이라는 거는 경로 의존성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돌아가던 제도 내에서 오버 피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는 데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엄청난 전지전능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처음에 일단 세팅을 해놓고 그다음에 상황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눈치 보가면서 개혁을 얘기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E)

“그 재판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쥐고 흔들지 않겠냐, 검찰이나 재판 쪽이나 다 쥐고 흔들 거 아니냐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재판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정부가 세계 시동 걸고 갈 수 있을까, 저는 그 현실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F)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그러니까 그래서 개혁한다는 의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미묘한 것 같아요.” (A)

“대통령이 결단하면은 그거는 여당에서는 뒷받침을 해 줄 텐데 어떻게 결단할지가 문제고 (중략) 문재인 때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여당 내에서도 약간 드라이브를 가져가고 싶어 하는 의원들이 있고 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그 아이덴티티 자체를 그쪽으로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알아서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국회에 대한 불신들이 많긴 하지만 (중략) 정답이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해야 하는데 야당이 막고 있고 약간 이렇게 저는 봤었거든요.” (D)

“(중략) 지금 국회 내부에서는 이걸 실제로 발의한다거나 하는 걸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좀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지금 현재 특검도 조국혁신당에서 많이 좀 밀어붙이는 것도 있어서 국회가 자체적으로 아마 주도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H)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대통령이 바뀌면 좀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 믿었지만, 대통령이 바뀐다 한들 검찰개혁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또 경험했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울러 대통령만의 몫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국회만의 몫도 아니다. 검찰개혁은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시민의 공동의 몫이다. 개혁 대상인 검찰의 몫은 당연하게도, 없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세 개의 특검이 수사에 나선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 아니다. ‘검사의 나라’를 끝낼 시민들의 시간이다.

다시, 시민의 힘

“윤석열이라는 전 검찰총장이 나오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개혁의 매개체가 되어 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캐릭터가 나오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다들 인식만 하고 있었던 검찰의 문제, 우리가 가만히 있던 거를 다 같이 국민들이 일어나고 한다는 게 참 의미 있는 것 같고, 저도 정말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H)

윤석열을 개혁의 매개체로 정의한 (H)의 발언 중 인상 깊었던 것은 ‘국민들이 일어났다’라는 부분이었다. 2025년 3월, 추위가 매섭던 그 거리에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 비판하던 시민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광화문이 아닌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집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단순히 윤석열을 풀어주었다는 점에서만 분노한 것은 아니었다. 유독 한 사람만을 위해 법이 정한 제도를 포기하면서까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왜 하지 않는지, 그 의문이

울분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아직도 한 시민이 했던 말이 기억에 남는다. 그는 ‘그런 검찰’이 왜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가 말한 ‘그런 검찰’은 불의를 선택하는 검찰이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그리고 그 이전부터 ‘그런 검찰’을 목격했다. 검찰의 즉시향고 포기는 ‘그런 검찰’의 연장선이자 정점이거나 어쩌면, 마침표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속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안고 있던 응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개혁해야 된다는. 근데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B)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위로가 되고 이런 정보들이 좋은 커뮤니케이션 톨로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C)

“(시민 집담회가) 진짜 좋은 자리였는데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좀 잘 되려면, 물론 지금 정부가 잘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자리가 되게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략)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럼 중요하게, 그러니까 밥 먹고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니까 사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진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계엄 났을 때 계엄 다음 날에 계엄 말 안 한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일상에 침투가 되면서, 이거 아니지 않아 하면서 집회에 많은 사람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 문제도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일상화가 필요하다고 보긴 해요.” (G)

결국, 다시 시민이다.

대통령과 국회뿐 아니라 검찰에 대해,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한 검찰이 개혁될 것이라 믿는다. 검사의 나라를 만든 윤석열을 파면한, 민주주의를 되찾은 시민의 힘을 믿는다. 시민의 힘으로 검사의 나라를 끝낼 것이라 믿는다.

두 시간이 넘도록 풍부한 주제와 깊이 있는 의견, 아낌없이 공감과 연대를 표현해 준 참여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 검찰보고서 제목 공모작

2009년부터 2025년까지, 17년간 참여연대의 검찰보고서는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응원과 후원, 시민집담회를 통해 모은 평가, 검찰감시 특별요원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한 기록은 검찰보고서를 꾸준히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어왔습니다.

2025년 「윤석열정부 3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은 이러한 ‘시민의 힘’을 한층 더 확장한 작업이었습니다. 바로, 검찰보고서 제목 공모전입니다. ‘검사의 나라’를 시민이 감시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라면, 그 이름 또한 시민의 언어로 지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시도였습니다.

공모전은 6월 5일(목)부터 6월 19일(목)까지 진행되었으며, 약 150개의 제목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안된 제목 하나하나에는 시민들이 윤석열정부 3년간의 검찰을 떠올리며 느낀 분노와 통찰, 검찰개혁을 향한 희망, 그리고 유쾌한 창의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연대 내부의 논의를 종합해, 2025년 검찰보고서의 최종 제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 3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022-2025 - 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이 제목은 ‘검사의 나라’로 상징되는 권위주의적 검찰권력에 대해 시민이 책임을 묻고 평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파면하다’라는 표현을 통해 시민주권에 기반한 통제와 심판의 메시지를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최종 제목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과 간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11개의 당선작도 함께 선정되었습니다. 「이른 종료, 늦은 정의: 통제받지 않는 권력, 검찰」을 제안한 시민 THCHOI는 “검찰은 수십 년 동안 통제받지 않은 채 권력에 기대어 사건과 사람, 역사를 제멋대로 재단해 왔다”며, “윤석열 정권 3년은 그 오만과 편향이 극에 달한 시기였다.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일은 앞으로도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그들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당선작인 「검사의 나라, 이젠 안녕!」을 제안한 시민 미라빌리스는 “정치검찰의 영원한 종식을 고한다”는 뜻을 담아 제목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11개 당선작		
출품작	출품자	제안 이유
이른 종료, 늦은 정의: 통제받지 않는 권력, 검찰	THCHOI	그들은 수십 년 동안 통제받지 않은 채 권력에 기대어, 사건과 사람, 역사를 제멋대로 재단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은 그 오만과 편향이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일은 앞으로도 수많은 노력과 좌절을 동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그들을 멈추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독재의) 하수인에서 홀로선 (검찰) 권력의	평형수	7,80년대 정치군인들의 독재권력의 하수인으로 차지한 권력을,19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독자적인 권력으로

갈림길		휘둘러온 검찰. 이제 지난 정부에서 그 권력의 끝장을 보여준 검찰이 "검사의 선서문" 본래의 역할을 할 것인지, 해체수준의 개혁을 할 것인지 갈림길에서 있음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광장의 힘으로 드디어 검찰공화국 심판하다	윤부	시민의 힘으로 드디어 검찰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탄핵 심판했기 때문에
정의의 탈을 쓴 통치술: 검찰, 수사의 정치학	김민철	수사권한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검찰통치의 나라에서 국민주권의 나라로	찌르무르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대표하는 가장 강고한 기득권인 집단, 검찰의 만행을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내란의 완전한 극복과 검찰기득권을 해체해야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모여서 우리사회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온전히 회복하고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나라로 가는 길을 열 것입니다.
검사의 나라, 이젠 안녕!	미라빌리스	이전 윤석열 정권에서의 두 번의 보고서 제목이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 였고, 이젠 정치검찰의 영원한 종식을 고한다는 의미에서 제안함.
부고! 검찰사망	동해바다사랑	전국민께 검찰의 사망을 알림
사람에 충성한 검사들, 그들이 자초한 파국!	누운 풀	윤정부 3년의 검찰의 행태를 함축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검찰의 칼날, 민주주의를 겨누다	김민철	검찰권이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상징적 표현
파멸의 왕국: 윤석열 정부 3년, 검찰 잔혹사	김침지 선생	이 제목은 윤석열 정부 3년간 검찰의 행보가 대한민국 사회에 미친 부정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합니다. "파멸의 왕국"이라는 표현은 검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남용되어 국가 시스템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강렬하게 상징합니다. 이는 보고서의 주요 키워드인 '검사의 나라'와 '공권력 사유화'를 직관적으로 연상시키며, 검찰의 일방적인 권력 행사가 가져온 혼란과 파괴적인 결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아냅니다. 부제인 "윤석열 정부 3년, 검찰 잔혹사"는 보고서가 다룰 구체적인 내용, 즉 내란 사태 수사에 대한 기록과 평가, 주요 사건 수사에 대한 기록과 평가, 그리고 검찰 인사 등을 포괄합니다. '잔혹사'라는 단어는 검찰이 시민들의 삶과 민주주의에 얼마나 가혹하게 작용했는지를 암시하며, 단순한 비판을 넘어 비극적이고 어두운 역사의 한 단면을 기록하겠다는 보고서의 취지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이 제목은 독자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아 보고서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그 안에 담긴 심각한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만들 것입니다. 이는 참여연대가 17년간 시민과 함께 검찰의 문제를 고발해 온 노력과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제목이 될 것입니다.
정치검찰의 자업자득, 굿바이 검찰왕국	정형주	선택적 기소와 수사로 광란의 칼춤을 추었으나 분노한 깨시민의 빛의 혁명에 의해 와해될 운명의 검찰

선정된 제목들을 보면, 참여 시민들은 검찰보고서의 핵심 주제인 ‘검찰권의 오남용과 시민에 의한 통제’, ‘윤석열정부 3년의 평가’, ‘검찰개혁의 방향’을 각자의 언어로 풀어내며 검찰권력에 대한 깊은 인식과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공모작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출품된 모든 작품이 검찰의 그릇된 행보가 스스로를 자멸의 길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명확히 적시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있으며 시민에 의하여 굳건히 지켜지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라는 심사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검찰보고서 제작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시민주권에 기반한 형사사법 감시와 검찰개혁 실현에 힘쓸 것입니다. 이번 공모전에 제목을 제안해 주신 모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검찰개혁을 위한 기록이 보다 넓은 사회적 공감과 연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 검찰개혁 응원 메시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17년 동안 검찰보고서는 시민의 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정권은 변하지만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민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보내주신 소중한 응원으로 참여연대는 윤석열정부 3년간 검찰의 행적을 꼼꼼하게 담을 수 있었습니다.

63,206명

2009~2025년 검찰보고서 제작과 '그사건그검사' 사이트를 위한 모금함 참여 (중복 포함)

- 2009 검찰을 감시하는 눈이 되겠습니다 해피빈
- 2013 시민의 눈으로 검찰을 감시합니다 검찰보고서 제작후원모금 해피빈
- 2015 시민의 눈으로 기록한 2014검찰보고서제작후원 해피빈
- 2016 시민의 눈으로 기록한 검찰보고서 제작후원 해피빈
- 2017 대한민국 '새로고침', 검찰개혁부터! 카카오킷이가치
- 2018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 '검찰보고서'로 기록합니다 카카오킷이가치
- 2019 검찰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모두'가 할 수 있는 일 카카오킷이가치
- 2019 검찰, 수사 잘하고 있습니까? 해피빈
- 2020 끝나지 않는 검찰감시, '검찰보고서' 함께 만들어요 카카오킷이가치
- 2020 그사건그검사! 검찰이 잘못된 일을 한눈에! 카카오킷이가치
- 2021 기록과 감시의 힘, 검찰권 오남용 함께 막아요! 카카오킷이가치
- 2022 검찰감시 맛집 '검찰보고서' 만들어요! 카카오킷이가치
- 2023 검찰개혁에 진심인 우리, '검찰보고서' 함께 만들어요 카카오킷이가치
- 2024 될 때까지 '검찰개혁' ⚡ 검찰보고서로 함께 만들어요 카카오킷이가치
- 2025 기록이 바꿀 세상, '검찰보고서 종합판' 함께 만들어요 카카오킷이가치

2025년 2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된 카카오킷이가치 <기록이 바꿀 세상, '검찰보고서 종합판' 함께 만들어요> 모금에 총 4,727명의 시민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시민 490명이 직접 기부해 주신 9,523,100원과, 4,237명의 댓글·공감 등 참여로 모인 466,900원을 더해 총 9,990,000원이 모여 목표 금액 100%를 달성해, 예정보다 일찍 모금이 마감되었습니다.

큰 액수만큼이나 값진 응원과 검찰개혁을 바라는 메시지도 함께 담겼습니다. 모금 기간 중 남겨진 1,650개의 댓글 가운데 일부를 소개합니다.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 큰 울림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검사들에게 똑똑히 전하기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기억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응원의 메시지

2. 2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화이팅!	오스*
2. 26	와 매년 대단합니다! 화이팅!	hst**
2. 26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늘 응원합니다!	sw0**
2. 26	항상 잊지않고 응원합니다.	'인*****
2. 27	모두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응원합니다!	dse**
3. 2	제대로된 검찰개혁 진심으로 필요합니다 응원합니다 꼭 이루시길	sto**
3. 3	우리의 힘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김**
3. 6	정말 대단하셔요 다들 무서워서 아무말도 안할 때이런 일을 하시니까요. 응원할게요. 많이 기부 못해서 죄송해요	gra**
3. 6	올바른 법치주의를 위하여 작은 마음을 드립니다	ssy**
3. 6	대한민국의 정상화. 나라다운 모습으로 다시~	*****
3. 6	개혁과 혁신을 넘어 모두가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 날까지...	ju4**
3. 6	검찰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lob**
3. 6	참여연대의 활동 항상 응원합니다	윤**
3. 6	정의로운 세상이 되길 응원합니다.	yw0**
3. 7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된 자랑스런 우리나라 지킵시다.	hsy**
3. 7	검찰개혁으로 공정한 나라가 되길	sk0**
3. 7	검찰개혁, 언론개혁 꼭 이뤄냅시다♡	whi**
3. 7	세상을 바꾸는 힘 ♥	bin**
3. 7	검찰 개혁은 필수입니다 더불어 앞으로는 판사도 포함시켜야 해요 응원합니다	win**
3. 18	참여연대도 처음처럼~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변질된 권력이 더는 욕심을 내지 않도록 날카로운 눈과 연대의 힘으로 목소리를 내어주기 바라며 응원합니다.	liv**
3. 19	작지만 응원합니다	조용****
3. 20	세상을 바꾸는 힘에 작은 힘을 보탭니다.	김선아
3. 26	응원합니다!! 카카오 대신 기부 감사합니다. 꼭 잘 전달해주세요!	wlq**
4. 3	응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kma**
4. 19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존경합니다	+82**
5. 1	완성판을 기대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보고서가 없어도 되도록 개혁이 되면 좋겠네요.	htlee
5. 1	이렇게라도 보탬이 되게 되어 영광입니다.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chl**
5. 1	검찰을 넘어, 부정한 힘이 미치는 모든 곳으로!	kwa**
5. 1	언제나 무소의 뿔처럼 전진하기를.. 법은 자체가 무생물이죠. 사회 분위기나 정견에 따라 굽는 것은 칼이 아니라 도적의 흉기일 뿐입니다.	sor**
5. 1	참다운 세상을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qkr**
5. 1	진실을 위한, 숨기지 않는 정의의 힘을 응원합니다	tld**
5. 1	사법부, 검찰, 기재부등 어떤 기관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촘촘한 그물을 만들어야	이**

	합니다.	
5. 1	참여연대가 희망이면서도 그저 감사 할 뿐입니다	mod**
5. 1	검찰개혁없는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khy**
5. 1	정치 검찰 물렸거라.	yua**
5. 1	빠른 시일내에 검찰 개혁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idj**
5. 1	정의가 살아나는 그날까지 함께해요	non**
5. 2	참여연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감시단체의 노력이 조금 더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거라고 믿습니다.	여**
5. 2	세상을 바꾸는 참여, 무관심은 독재를 유혹한다.	몰래천사
5. 2	정의를 위해 상식을 위해	조**
5. 2	사법부의 개혁만이 진정 민주주의를 꽃 필 수 있을 듯~	kha**
5. 2	국민은 정치검찰을 원하지않는다..	mar**
5. 2	검찰과 사법은 선하고 약한 국민을 위한 작용이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형평성 있어야 합니다..	spr**
5. 2	참여연대의 지속적 검찰 법원 등의 권력기관 감시를 응원합니다	fre**
5. 2	참여하는 연대가 힘이다.	etv**
5. 3	항상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나마 깊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ama**
5. 3	검찰 개혁이 대한민국이 살길입니다.	gra**
5. 4	너무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둠속에 한줄기 빛이십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mat**
5. 4	힘내서 다시 한번 더 해봅시다. 검찰이 정의검찰이 될때까지 국민이 믿고 있습니다.	chy**
5. 9	수고많으시구요. 정의와 공평이 이 나라에 세워지기 까지 화이팅입니다.^^~	sun**
5. 13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되길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red**
5. 13	검찰개혁 반드시 성취하여 사법의 민주화를 이루자	*****
5. 13	검찰이 힘없는 소시민을 위한 검찰이될 수 있도록 화이팅	몰래천사
5. 13	남들과 함께 남들을 위해 정의로운 제도 아래 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몰래천사
5. 13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이**
5. 13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응원합니다~~♡	krs**
5. 13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몰래천사
5. 13	국민을 위한 검찰로 검찰개혁완수!!!	zer**
5. 13	끝까지 함께 사회대개혁 이루어냅시다	ros**
5. 13	사법부와 검찰 개혁의 그 날이 빨리 오기를...	따**
5. 13	검찰 개혁 안하면 나라 발전 없다	ydj**
5. 13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몰래천사
5. 13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실현합시다!!	몰래천사
5. 13	민주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	naa**
5. 13	이 시대의 소금 같은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bur**
5. 13	검찰 체증 보고서로 날리자	s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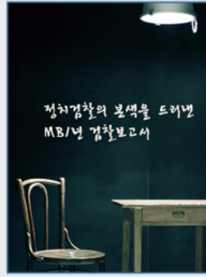
5. 13	진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내란세력의 철저한 조사는 꼭 이루어 저야하고 관련자들의 엄중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
5. 13	무도한 검찰의 행태를 낱알이 기록해주세요. 검찰보고서 제작에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세상은 올 것이라 믿습니다. 애써주시는 참여연대에 감사를 표합니다	ksl**
5. 13	사정상 나서지는 못하지만 소소하게나마 응원합니다.	dhl**
5. 13	기록하고 기억해서 검찰개혁을 이룩시다	몰래천사
5. 13	이 나라의 정의로운 미래 역사를 응원합니다	0 *****
5. 13	반드시 검찰 개혁하여 국민이 대우받는 사회 만들어요!	hyo**
5. 13	국민위에 군림하는 절대권력인양 하는 검찰을 국민의 총복으로 만드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hgj**
5. 13	검찰개혁은 이루어진다	몰래천사
5. 13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apo**
5. 13	검찰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자	rex**
5. 13	기똥차게 응원합니다. 화이팅!!	tdk**
5. 13	정말 힘든 일을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응원합니다 🍊	*****
5. 13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되도록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red**
5. 13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jae**
5. 13	힘들더라도 반드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이겠죠. 부디 수고해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5. 13	민주주의는 샘솟음에서부터 느리지만 끝끝내 바다에 도달하고 말 것입니다. 화팅~	ssp**
5. 13	세상을 꼭 바꾸시길 바랍니다.	ell**
5. 13	참여연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
5. 13	참여연대가 지향하는 가치에 같이하며 늘 응원합니다!	iem**
5. 13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주세요	jog**
5. 13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해 미안해요 하지만 마음은 늘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있어 든든하고 힘이나요 항상 응원합니다	wha**
5. 13	기득권에 빌붙어 법을 이용한 법꾸라지들의 행태를 낱알히 밝히고 합당한 응징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화이팅!!	ctw**
5. 13	저는 앞에 나서서 직접 행동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 앞장서는 분들이 계셔서 미안한 마음 갖고 진심으로 감사함 전합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
5. 13	끝까지 지켜보고 정의를 바로 세웁시다	ksj**
5. 13	응원합니다 청렴한 세상으로	hel**
5. 13	사법, 검찰개혁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정*
5. 13	응원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sub**
5. 13	항상 응원합니다~ 민주사회 건설의 완성은 검찰 개혁에서 시작됩니다. 반드시 완수합시다	jef**
5. 13	매달 1만원 기부하는데 참여연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응원합니다.	bud**
5. 13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검찰 개혁 완수!!	kmk**
5. 13	사법개혁 응원합니다	edu**

5. 13	항상 응원하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bkl**
5. 13	내란 종식을 위해 화이팅!	*****
5. 13	다른데 기부하는 곳이 좀 있어 고민했지만... 역시 작게나마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dun**
5. 13	열렬히 응원합니다..	edo**
5. 13	두번 다시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못하게	hok**
5. 13	작은 힘이지만 세상을 바꾸길 원합니다. 정말 검찰, 사법부도 모두 국민을 무서워 했으면 합니다.	ink**
5. 13	항상 응원합니다. 아리아리!	ycy**
5. 13	권력자를 위한 검찰이 아닌 검찰 스스로가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위한, 바른 세상을 위한 검찰로 ..	ekd**
5. 13	자성과 자정능력을 잃은 집단에게 시민의 뜻을 보여주세요	pre**
5. 13	지금부터 진짜 대한민국! 화이팅! 응원합니다. 참여연대~^^	짱*****
5. 13	내란 세력을 한 명도 빠트리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0 **
5. 13	특권없는 검찰을 바랍니다	yes**
5. 13	올바른 나라가 되길 기원합니다	doo**
5. 13	권력자를 위한 사법부는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ber**
5. 13	사법부에 잘못된 인식과 검찰은 독재권력에 주구가되어 도구로 사용되며 주어진 잘못된 권력구조를 당연시 여기며 현 시대까지 폐단으로 얼룩져 이젠 모든 불법적 사항에 대하여 단죄해야 합니다.	syp**
5. 13	용기없어 바라보기만한 세월 지공선사가 된 지금이라도 응원합니다	나**
5. 13	참여연대 믿습니다^^	lee**
5. 13	검찰개혁이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닐수도 있어요!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doy**
5. 13	검찰개혁!! 참여연대 응원합니다	fly**
5. 13	응원합니다!! 함께 정의로운 나라 만들어 갑시다!!	har**
5. 13	힘을 보탭니다	uzi**
5. 13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win**
5. 13	꼭 그런 날이 빨리오길 바랍니다	a01**
5. 13	슬픈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응원합니다!!!	kjh**
5. 13	씩 갈아엎어 깨끗한 수사와 기소가 될 있게 해 주세요.	yes**
5. 13	검찰과 사법부를 함께 완전히 개혁합니다.	*****
5. 13	참 좋은 작업입니다 반드시 검찰, 사법부 모조리 개혁합니다.	pds**
5. 13	참여연대 응원합니다 검찰개혁에 함께 합니다	ope**
5. 13	화이팅!! 입니다	pri**
5. 13	수고 많으세요. 꼭 검찰, 사법부 개혁합니다	syj**
5. 13	감시와 기록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부작사부작 꼼지락꼼지락 꾸준히꾸준히	jus**
5. 13	바른 판단으로 항상 검찰감시를 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현실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화이팅입니다 ^^	shs**
5. 13	사랑과 진실이 함께하는 나라를 만들어갑시다! ^♡^	don**
5. 13	그래도 살만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힘써 주심에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	s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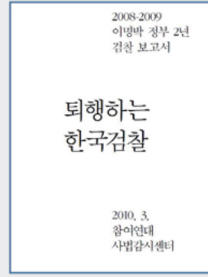
5. 13	공정한 사회를 만듭시다! 비리를 척결하라! 공정한 검찰경찰이 필요합니다! 잘합시다	+*****
5. 13	반드시 기록해야 할 역사!	sun**
5. 13	무도한 검찰의 행태를 낱알이 기록해주세요. 검찰보고서 제작에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세상은 올 것이라 믿습니다. 애써주시는 참여연대에 감사를 표합니다	ksl**
5. 13	검찰 개혁 꼭 해봅시다	*****
5. 13	아자아자!!화이팅입니다!!	alt**
5. 13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mar**
5. 13	꼭 검찰개혁 잘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살맛나는 자유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syn**
5. 13	검찰개혁 꼭 이루어요 화이팅	rla**
5. 13	검찰개혁 완수하고 사법카르텔 박살내자.	ori**
5. 13	검찰개혁 꼭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her**
5. 13	끝까지 응원 할게요~~~*^^*	cho**
5. 13	검찰개혁 꼭 이루어지도록 응원합니다	ymc**
5. 13	정의가 승리하는 밝은 세상을 향해 앞만 보고 나아가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lch**
5. 13	검찰개혁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gan**
5. 13	검찰개혁 응원합니다	구**
5. 13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검찰.. 반드시 개혁하자!	hyo**
5. 13	좋은세상 만들어주세요	gsr**
5. 14	나를 일깨우는 활동에 감사 드립니다.	bsl**
5. 14	제가 직접 뛰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세상이 밝아지는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심에 감사합니다.	san**
5. 14	검찰의 독재적인 수사,기소 철저히 밝혀 사법개혁의 기틀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간절히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기를~	net**
5. 14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필요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로 새로 태어나야	hie**
5. 14	응원합니다 포기하면 시간낭비 아무것도 없다	jph**
5. 14	국민이 생업에 바빠 일일이 관심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기소청과 공소청 등 2개 이상의 기소 및 공소 유지 기관을 만들어 서로 감시하고 처벌하여 견제하게 함으로써 기득권 계급을 해체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수사권은 당연히 분리해야 하고요	ide**
5. 14	살만한 세상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hn9**
5. 14	응원합니다. 법을 지멋대로 사용하는 공무원들은 모두 처벌받는 밝은 세상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dol**
5. 14	참여연대 열심히 응원합니다	bom**
5. 14	검찰 종합 보고서 제작 응원합니다	ybo**
5. 14	가슴 뜨거운 님들을 위해 응원합니다	lsk**
5. 14	잘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화이팅!	tls**
5. 14	무소불위,증거조작, 기소권남용...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든 검찰의 만행을 반드시 척결해야 민주주의가 회복된다.	gol**
5. 14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응원을 보냅니다~🤗😊	*****

5. 14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응원에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inh**
5. 14	검찰개혁 반드시 이뤄지길~응원합니다	hye**
5. 14	법앞에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ley**
5. 14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분석하여 확실하게 검찰개혁 이루어 봅시다	kim**
5. 14	끝까지 함께해요	ssh**
5. 14	거침없이 당당하게 응원합니다.	kbn**
5. 14	철저히 수사 재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min**
5. 14	철저한 수사와 재판으로 공정하고 올바른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응원합니다	twi**
5. 14	빠른 내란종식이 되서 올바른 세상에서 숨쉬고 싶습니다	rae**
5. 14	검찰해체!! 대개혁!! 정의사회구현!!	ama**
5. 14	철저한 규명으로 공정한 사법부를 세우는데 응원을 합니다.	nar**
5. 14	위대한 참여연대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kbs**
5. 15	화이팅, 작지만 관심의표현	fio**
5. 15	바꿀 세상을 꿈꾸며 응원합니다	몰래천사
5. 15	국민들 대신 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합니다	몰래천사
5. 15	차기정권 검찰개혁의 주춧돌이 되길 바랍니다	hns**
5. 15	검찰의 전횡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eco**
5. 15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yus**
5. 15	참여연대가 있어 참으로 힘이 됩니다	non**
5. 15	바른 세상을 지향하는 행동 참여연대가 자랑스럽습니다.	ils**
5. 15	대신 싸워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pen**
5. 16	이번 기회에 검찰뿐이 아니라 대법원 개혁도 함께~	na2**
5. 16	열일하시는 참여연대 화이팅입니다	alg**
5. 16	검찰을 바꾸자~	for**
5. 16	검찰개혁 꼭 이뤄내요!	ali**
5. 16	힘내세요. 시대가 바뀌는 위대한힘이에요	cnk**
5. 16	늘 앞장서주셔서 감사합니다.	yun**
5. 16	검찰개혁 완수로 뒤로 가는 대한민국을 돌려놓아요!	cre**
5. 16	힘내서 새나라를 만들어요	pib**
5. 16	우리의 이 작은 응원들이 모여 큰 조직의 힘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자아자!!	gam**
5. 16	새날이 올때까지	bin**
5. 16	오늘 하루도 포기하지말고 살아가기~!!!	nam**
5. 16	응원하고 사랑해요 부천삼정초6-1	g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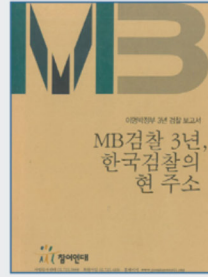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검찰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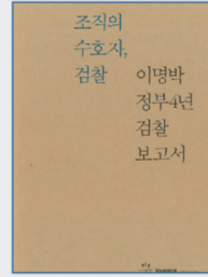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MB 1년 검찰
이명박정부 1년 검찰보고서
200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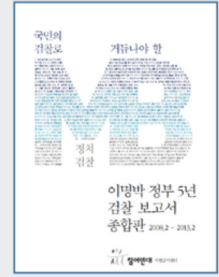
퇴행하는
한국검찰
2010. 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MB검찰 3년
한국검찰의 현주소
이명박정부 3년 검찰보고서
201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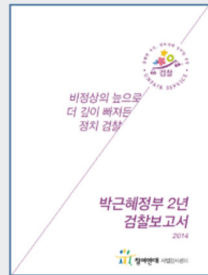
조직의 수호자,
검찰
이명박정부 4년 검찰보고서
2012. 10.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MB 정치검찰
이명박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013. 6.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2014. 4.



비정상적의 높으로
더 깊이 빠져든 정치 검찰
박근혜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15. 4.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2016. 3.



배앗긴 정의 침묵한 검찰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017. 4.



전걸을 적폐청산,
더딘걸을 검찰개혁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018. 5.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19. 5.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
2020. 5.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2021. 5.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022. 5.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윤석열정부 1년 검찰*보고서
2023. 5.



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
윤석열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 5.



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윤석열정부 3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2025. 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 9월 참여연대 창립과 함께 활동기구로 출범했습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검찰과 법원 견제, 제도적 대안 제시 등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합니다. 개혁에 역행하며 국가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 권한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안을 제시하고, 사법농단의 재발을 막고 사법행정의 투명화·민주화를 보장할 수 있는 법원개혁 운동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검찰보고서 발행** 검찰 수사와 인사, 제도개혁 현황 등을 세세히 기록합니다.
- **그사건그검사 DB** 검찰의 주요 수사 및 담당 검사를 기록하고 추적합니다.
- **월간 끄의세계 뉴스레터** 매달 검찰의 사건사고와 이면의 맥락을 전달합니다.
- **광장에 나온 판결** 문제적이거나 유의미한 판결을 선정해 시민의 시각으로 비평합니다.
- **변호사 징계정보찾기** 변호사의 징계 및 처벌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간사 김봄빛나래 김희순 오유진 이재근 최보민

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윤석열정부 3년 2022-2025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행일 2025. 7. 21.

발행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02-723-0666 jw@pspd.org

www.peoplepower21.org/Judiciary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ISBN 979-11-90297-71-4

₩25,000
ISBN 979-11-90297-71-4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의 힘**

